

분야별 통상환경

관세 수입규제 통관절차 세이프가드 반덤핑 및 상계관세 보조금 원산지규정
정부조달 기술장벽 지식재산권 서비스 금융서비스 투자 환경 경쟁정책

2

THE TRADE
ENVIRONMENT



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MOTIE



외교부
Ministry of Foreign Affairs

발간사

정부는 글로벌 통상환경과 대내 경제여건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난 6월 ‘신통상 로드맵’을 수립하고,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및 애로사항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적극적 통상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외교부와의 협업을 통해 주요국가의 통상환경을 정리한 “2013 외국의 통상환경”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료는 지난 1998년부터 정부가 발간한 자료를 확대 개편하여, “지역별 통상환경(4권)과” 분야별 통상환경(1권) 그리고 “무역장벽 보고서(1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역별 통상환경”에는 총 83개국의 경제동향, 우리와의 무역관계, 각종제도 등에 관한 자료를 △아시아·대양주 △아메리카 △유럽 △아프리카·중동의 4개 지역별로 정리하였습니다. “분야별 통상환경”에는 관세, 수입 규제, 통관절차, 세이프가드 등 15개 분야별 통상환경을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전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각국의 비관세장벽에 대한 조사보고서인 “무역장벽 보고서”를 처음으로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 자료는 비관세장벽으로 인해 해외 진출에 애로를 겪고 있는
우리기업에게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며, 국제통상 분야에 관
심이 있는 분들께는 귀중한 학습 자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이번에 책자 발간을 위해 힘써 주신 외교부 및 재외공관,
무역협회, KOTRA 및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
사의 마음 전합니다.

2013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 상 직

목차

1. 무역장벽 보고서

2. 분야별 통상환경 ●

3. 아시아·대양주

4. 아메리카

5. 유럽

6. 아프리카·중동

관세	2
수입규제 (수입금지, 수입허가, 수입쿼터)	23
통관절차	59
세이프가드	86
반덤핑 및 상계관세	94
보조금	126
원산지규정	135
정부조달	153
기술장벽 (표준 및 인증)	178
지식재산권	229
서비스	257
금융서비스	297
투자	326
환경	365
경쟁정책	401
요약문	421

분야별 통상환경

관세 수입규제 통관절차 세이프가드 반덤핑 및 상계관세 보조금 원산지규정
정부조달 기술장벽 지식재산권 서비스 금융서비스 투자 환경 경쟁정책

2



관세

개관

GATT/WTO 출범 이후 우루과이라운드(UR)까지 수차례에 걸친 다자협상을 통해 전세계적으로 관세율이 인하되었다. 국제 다자협상을 통해 관세율이 본격적으로 인하되기 이전, 관세는 수입을 억제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무역장벽이었다. 그러나 여덟 차례에 걸친 다자협상을 통해 세계적 차원에서 관세가 대폭 인하됨에 따라 관세의 수입억제 기능은 크게 쇠퇴하였다. 다자협상에서의 관세인하 합의는 모든 회원국에게 무차별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세계적인 시장개방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예컨대, 우루과이라운드(UR)를 통해 공산품 부문의 관세가 선진국의 경우 평균 40%, 개도국의 경우 평균 37% 인하되었다.

관세는 WTO체제에서 유일하게 허용되는 수입제한 수단으로 여전히 각국의 통상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이슈이다. 세계적인 관세인하 흐름에도 불구하고 일부 분야에서 높은 관세장벽이 여전히 남아 있다. 선진국들의 경우 특히 섬유, 의류 및 가죽제품 등 특정품목들에 대해 고관세(tariff peaks)를 적용하는 경향이 있으며 개도국들의 경우에는 관세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다.

DDA 협상은 2008년 이후 더디게 진행되고 있으나 다자협상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한 관세장벽 완화 노력은 지속될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2013.2월 콜롬비아와의 FTA에 정식서명하였으며, 5월에는 터키와의 FTA를 발효하였다. 또한 2013.9월 한중 FTA 1단계 협상을 마무리하고 11월 2단계 첫 협상을 개시하였으며, 그 외에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과의 협상을 진행 중인바 각국의 관세장벽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관세는 일반적으로 과세의 기회에 따라 수입세, 수출세, 통과세로 분류되고 과세의 목적에 따라 재정관세와 보호관세로 분류된다. 또한, 과세의 방법에 따라 종가세, 종량세, 혼합세로 분류되며 과세의 성격에 따라 국정관세, 협정관세 등의 일반관세와 특혜관세, 덤핑방지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등의 특수관세로 분류된다.

※ 관세의 종류

- 과세의 기회: 수입세, 수출세, 통과세
- 과세의 목적: 재정관세, 보호관세
- 과세의 방법: 종가세, 종량세, 혼합세
- 과세의 성격: 일반관세(국정관세, 협정관세)
특수관세(특혜관세, 덤핑방지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조정관세,
상계관세, 편익관세, 물가평형관세, 계절관세, 할당관세)

국제무역협상에서 주로 논의되는 관세는 수입관세로 이는 국회를 통과한 관세율표(tariff schedule)에 의하여 부과된다. 동 관세율표에는 국가 간 이동이 가능한 물품은 모두 망라하고 있으며 물품의 분류는 국제품목분류기준인 HS Code에 따르고 있다. 또한, 수입관세를 부과하는 주된 목적이 국고수입에 있으면 재정관세, 섬유산업과 같은 특정 산업을 보호하는데 있으면 보호관세로 볼 수 있는데 현재 나이지리아 등 일부 개도국을 제외하고는 재원조달수단으로서 관세의 의의는 축소된 상태이다.

한편,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에 따라 수입물품의 가격을 과세기준으로 삼는 종가세와 상품의 수량을 과세기준으로 하는 종량세로 구분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상품가격에 따라 균등·공평하게 과세되며 시장가격의 등락에 관계없이 과세부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종가세를 적용한다. 종량세는 일부 농림수산업 등에서 저가 수입품 급증에 대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 혼합세는 종가세와 종량세를 합한 관세로서 종량세와 종가세를 합쳐 과세하는 복합세와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과세하는 선택세가 있다.

또한, 자국의 법령에 의해 자주적으로 부과하는 관세를 국정관세(보통 기본관세(general tariff))라 하며 외국과의 통상조약 또는 관세조약에 의해 부



과하는 관세를 협정관세라고 하는데, 협정관세는 상호주의 원칙에 의하여 서로의 교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해 기존 국정관세율을 인하하거나 더 인상하지 않을 것을 양허하는 협정이다. WTO 회원국들은 WTO 협정 양허관세를 적용하고 있는데 일단 관세를 양허하면 그 이하로 낮출 수는 있어도 더 이상의 관세율 인상은 할 수 없으며 최혜국대우(MFN)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또한, 각국은 국내외의 경제적 또는 정치적 요건의 변화에 따라 관세율을 신축성 있게 운용하기 위해 덤핑방지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조정관세, 상계관세 등 다양한 탄력관세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국가 간 통상마찰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현황분석

세계적 차원에서 평균관세율은 지역에 관계없이 꾸준히 인하되는 추세인바 여기에는 다자체제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평가된다. 선진국의 경우 평균 실행관세율은 6% 이하이며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무세품목과 미소관세(2~3% 이하)를 부과하는 품목도 많다. 개도국 역시 관세율이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나 실행세율과 양허세율의 격차가 큰 경우(브라질, 인도)가 발견된다. 우리나라는 평균 실행세율 약 13.3%, 평균 양허세율은 약 16.6%로서 선진국과 개도국의 중간 수준에 위치하고 있다. 개도국에 비해서는 낮지만 선진국과 비교하면 높은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는 분야가 있다(아래 표 참고).

■ 2012년 주요국별 평균관세율

(단위: %)

	한국	미국	EU	일본	캐나다	인도	호주	브라질	중국*	러시아
평균양허세율	16.6	3.5	5.2	5.2	6.9	48.6	10.0	31.4	10.0	7.8
평균실행세율	13.3	3.4	5.5	4.6	4.3	13.7	2.7	13.5	9.6	10.0
양허비율	94.6	100	100	99.7	99.7	73.8	97.1	100	100	100

주: * 중국은 2011년 값임.

** 일부 국가들의 경우 자료 출처의 차이로 이후 국별로 서술된 부분의 데이터와 다소 차이가 있음.
자료: WTO, 2013. *World Tariff Profiles* 2013.

품목별로 보면 선진국은 섬유, 의류 등 일부 자국 내 사양산업에 대한 관세율이 비교적 높은 수준이다. 반면, 개도국은 운송장비, 전기기계 그리고 농산물 분야의 관세율이 높은 편이다(아래 표 참고).

■ 2012년 국가별 주요 품목별 평균관세율

(단위: %)

국가		농산물		운송장비		전기기계		섬유		의류	
		양허	실행	양허	실행	양허	실행	양허	실행	양허	실행
선진국	미국	4.7	4.7	3.1	3.1	1.7	1.7	7.9	7.9	11.4	11.6
	EU	13.7	13.2	4.1	4.3	2.4	2.8	6.5	6.6	11.5	11.5
	일본	22.1	16.6	0.0	0.0	0.2	0.1	5.6	5.4	9.2	9.1
	호주	3.5	1.2	12.6	3.3	10.4	2.9	18.6	4.3	41.2	8.9
개도국	중국*	15.8	15.6	11.5	11.5	8.8	8.3	9.7	9.5	16.2	16.0
	브라질	35.4	10.1	33.1	18.6	31.9	14.1	34.8	23.3	35.0	35.0
	인도	113.1	33.5	35.7	21.2	27.0	7.3	28.9	13.5	37.8	14.1
	러시아	11.2	13.3	8.9	10.6	6.2	7.3	7.8	10.9	11.8	19.6
한국		56.1	52.7	8.1	5.5	8.9	6.2	16.5	9.0	28.4	12.5

주: * 중국은 2011년 값임.

** 일부 국가들의 경우 자료 출처의 차이로 이후 국별로 서술된 부분의 데이터와 다소 차이가 있음.

자료: WTO, 2013. *World Tariff Profiles* 2013.

국별 자료를 토대로 하여 최근 각국의 관세율구조 및 운영의 변화 양상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각국의 관세율은 전반적으로 지속적인 하락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다자체제의 정착과 더불어 비롯된 일반적인 현상이다. WTO 가입국이 급증하면서 다자체제에 편입되지 않을 경우 무역상의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굳어졌다. 예컨대,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와 같이 2000년대 이후 WTO에 가입한 국가들은 자국의 관세율 체계를 신속하게 국제적 표준에 조화시켜 가고 있다. 또한, 인도와 같이 전통적으로 높은 관세율을 유지하는 국가들도 최근 관세율을 인하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와 같은 현상은 다자체제가 힘을 발휘하는 한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세계적인 무역자유화를 위하여 바람직한 현상으로 평가된다.

둘째, 지역주의의 확산이 새로운 변수로 등장하고 있다. 세계 각국은 1990년대 중반 이후 활발하게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2013.12월 현재



전세계 지역무역협정 발효 건수는 384건에 이른다. 이에 따라 국별로 특혜 관세율을 지역무역협정국에게 부여하면서 관세율 체계는 보다 복잡한 양상을 보이게 되었다. 또한, 특혜관세로 인한 역외국의 손실도 증가할 우려가 있다.

셋째, 각국은 관세율을 여전히 산업보호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취약산업 또는 전략산업에 대한 고관세는 물론, 관세율을 상황에 따라 임의적으로 적용하는 사례가 여전히 존재한다. 따라서 각국의 관세율 운영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보 수집이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으며 DDA 협상을 통한 추가적인 관세인하는 물론 관세율 운영체계를 투명화 하는 작업이 요청된다.

마지막으로 관세율만으로 각국의 개방도를 가늠하는 것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점이 더욱 분명해지고 있다. 예를 들면, 소위 보이지 않는 비관세장벽이 관세장벽보다 더욱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나라 업계가 인정하는 기정사실이 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우리의 관심의 초점은 외국 의 관세율뿐만 아니라 무역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각종 국내제도의 투명한 운영에 맞추어질 것으로 보인다.

먼저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국별 관세인하의 추세와 잔존하고 있는 고관세 품목, 그리고 관세운영 체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에 관한 WTO의 2012년 무역정책검토(TPR)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전체 상품(HS 8단위 기준 총 10,511개 품목)의 평균 실행관세율은 4.7%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전체 품목의 37%가 무관세로 기계, 전자, 화학, 철강제품 등이 이에 속한다. 다만, 평균 관세율의 3배가 넘는 품목이 7%에 달하며, 특히 섬유류, 의류 및 농산물 등에 고관세 품목이 집중되어 있다. 한편, 2012.3.15에 한·미 FTA가 발효됨에 따라 미국은 전 품목의 82.1%에 대한 관세를 즉시 철폐하였으며, 92.8%에 대한 관세를 5년 내 철폐하게 된다. 섬유류 분야에서도 미국은 품목수 기준 87%, 수입액 기준 61% 품목의 관세를 즉시 철폐하였다. 특히 우리 주력수출품목인 스웨터(32%), 양말(13.5%), 남성바지(28.2%) 등이 여기에 포함되어 우리 제품의 대미국 시장접근이 크게 개선되었다.

EU는 2013년도 기준 EU 전체 상품(HS 8단위 기준 총 9,376개 세번)의 단순평균관세율이 6.5% 수준이다. 이중 농산물의 관세는 14.8%, 비농산물의 경우는 4.4%이다. 전체 품목 중 24.7%가 무관세 품목이며 이들 무관세 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의 평균관세율은 8.7%이다. 2011.7.1 한·EU FTA의 잠정발효에 따라 EU측은 전 품목의 94.0%에 대해 관세를 즉시 철폐하였고 쌀을 제외한 나머지 99.6%에 해당하는 품목에 부과되는 관세를 5년 내 철폐한다. 승용차(관세10%)의 경우 중·대형(1,500CC 초과)은 협정 발효 후 3년 내, 소형(1,500CC 이하)은 5년 내 관세가 철폐되며 가솔린 자동차용 엔진, 기어박스 등 주요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는 발효 즉시 철폐되었다. 전기 전자제품의 경우 컬러TV(관세14%) 등 EU측의 고관세 품목 관세가 5년 내 철폐되며, 전기 전자부품의 관세는 발효 즉시 철폐되었다. 섬유의 경우 품목수 기준 99.4%가 발효일로부터 철폐되었고, 신발류 관세도 대부분 발효 즉시 철폐되었다.

일본은 비교적 낮은 세율을 적용(평균실행관세율 4.6%, 공산품의 평균관세율 2.6%)하고 있으나 농산물은 16.6%의 고관세를 부과하는 등 자국산업에 민감하거나 보호가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대일 수출 관심 품목인 농수산물이나 가축/고무, 섬유 등의 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높는데 육가공류 58.2%, 쇠고기(목, 어깨살) 38.5%, 쇠고기(머리살) 50%, 가공하지 않은 치즈 40%, 가축에 대하여 6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밖에 소주에 대한 고율관세(16%) 적용, 자동차용 카펫에 대한 관세부과(Roll 형태, 7.6%)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호주는 2012년 기준 평균관세율 2.7%, 농산품 관세율 1.2%, 비농산품 관세율 3.1% 등 대체적으로 낮은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으나, 경쟁력이 취약한 승용차와 직물, 의류 및 신발류(TCF: Textile, Clothing and Footwear)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자동차를 제외한 전자제품(3.2%), 일반 기계(3.1%), 기타 제조업(1.4%) 등 우리의 주요 수출 품목의 관세율은 다소 낮은 상황이다. 호주 정부는 대외 수출입 정책 차원에서



승용차 및 TCF 품목에 대해서는 장기적 관세 인하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승용차, 직물, 신발은 2010.1월부터 관세율을 종전 10%에서 5%로 인하하여 시행하고 있고, 의류는 종전 17.5%에서 10%로 인하하였으며 2015년부터는 5%로 추가 인하하여 시행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호주는 이러한 관세인하 조치와는 별도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들과 관세를 면제 또는 추가로 인하하고 있다. 그래서 한·호간 FTA가 발효되기 전까지 한국은 미국, 태국, 싱가포르, 칠레 등 호주와 이미 FTA를 체결한 국가들에 비해 관세 면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무역 환경에 처해있는 상황이다. 한편, 호주 관세청은 해외로부터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수입자에 대하여 해당 물품에 대한 수입 규정 및 세율에 대하여 정보와 조언을 제공하는 관세조언시스템(Tariff Advice System)을 운영하고 있다. 호주 정부가 관세율을 지속적으로 인하함에 따라 현재 관세율은 세계무역기구(WTO)의 관세율 평균보다 낮으며, 물품에 적용하고 있는 최고 관세율도 종전 17.5%에서 2010년부터는 10%로 인하되었다. 호주 정부는 1989년 이후 주류, 담배류를 제외한 물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지 않았으며, 주류 및 담배류에 대한 세율만이 연 2회에 걸쳐 경제 상황, 소비자물가지수, 소비량 등을 바탕으로 평가하여 조정된다. 호주 관세청은 탄력세 제도(Elastic Tariff)를 운영하고 있지는 않으나 단, 연간 일정량의 치즈에 대한 할당관세(Quota Tariff)제도는 시행하고 있다. 현재 11,500톤의 치즈에 대하여 할당관세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최대 11,500톤까지 인하된 세율(\$0.096/kg)이 적용되며, 그 이상에 대하여는 기본세율(\$1.220/kg)의 적용을 받는다. 호주 관세청은 연간 소비량을 바탕으로 하여 다음 회계연도(2013.7.1~2014.6.30)에 적용받을 치즈 할당량을 결정, 매년 7.1일에 발표하고 있다. 치즈에 대한 할당관세율은 최근 변동이 없으며, 관세청은 관세 조정에 있어 국회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캐나다는 2012년 기준 최혜국 평균관세율이 2.48%, 공산품의 평균관세율은 2.38%, 농산품의 경우 평균 3.11%의 관세율이 적용(WTO DB 통계)된다. 2000.5월 캐나다는 미국, EU, 일본과의 합의에 따라 최빈국에 대한 무관세 조치를 확대하였고 2003년부터 최빈국의 경우 사실상 전 품목에 무관세 적

용을 하는 등 관세율이 낮아지는 추세이다. 다만, 캐나다는 음식품, 섬유 및 의류, 신발, 조선분야의 관세율이 매우 높은 수준이며, 생산조정 대상품 목인 낙농제품, 가금류 및 조란에 대한 TRQ 초과물량관세율은 200% 이상에 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74년부터 일반특혜관세 적용혜택을 받아오고 있는데 그 공여기간을 1984년과 1994년에 10년 연장 받았으며 2004년에 다시 10년 연장되어 현재의 일반특혜관세는 2014년까지 적용되며 그 이후에는 폐지될 예정이다. 2012년 기준 일반특혜관세율은 단순평균 1.89%로 최혜국관세율의 단순평균인 2.48%보다 0.59%p 낮고 무관세가 적용되는 제품도 상당하다. 그러나 다자간협정, 지역협정 및 쌍무협정에 따라 최혜국 관세율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일반특혜관세의 혜택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공장도가격(ex-factory price)을 기준으로 60% 이상의 부가가치가 일반특혜관세 수혜국에서 발생하고, 직접 캐나다로 선적하였을 경우 원산지 증명서를 첨부하면 저율의 관세인 일반특혜관세의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일반특혜관세의 수혜대상품목이 아닌 제품은 최혜국 관세의 적용을 받는다.

개도국의 경우 전반적으로 높은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전자제품, 자동차 등 자국의 전략산업에 대해서는 더욱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이 시장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부 개도국의 경우에는 높은 관세율에 더하여 각종 수입부가금이 심각한 무역장벽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중국은 WTO 가입 이후 지속적으로 관세율을 인하하여 2012년 현재 평균 관세율은 9.6%이며 수출입세칙 품목분류항목은 8,194개이다. 특히 이번 품목분류항목에는 세계관세기구(WCO)가 2011년 개정한 국제무역 상품분류를 수용하고 있는바 동 개정항목에는 세계무역량의 40%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의 “공향용 기내 탑승 브릿지”와 중국 고유의 “백합꽃”, “보이차” 등을 추가하게 되었다. 중국은 최혜국세율 이외에도 ‘중국·ASEAN FTA’ 조기 정착을 위해 ASEAN으로부터 수입하는 모든 ‘조기 자유화(Early Harvest)’제품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홍콩 및 마카



오와 ‘경제무역관계긴밀화협정’(CEPA)을 체결하여 2013년의 경우 홍콩산 제품 1,760개 품목, 마카오산 제품 1,271개 품목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외에도 중국은 ITA 협정에 따라 2005.1.1일부터 모든 정보통신 제품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중국은 우리나라에 대해서 2013.1.1일부터 전자부품, 페인트 등 1,875개 품목(HS Code 8단위기준)에 대하여 방콕협정(2005.11월부로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으로 명칭 변경)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대만은 2002.1월부터 WTO에 가입하면서 제출한 양허 계획에 의거하여 관세 인하, 비관세 장벽 제거 등 시장 개방을 가속화하고 있다. HS코드 8자리 기준 8천여 품목 중 WTO 가입 후 관세 인하를 약속한 제품은 4,491개 품목이며, 2012년도 평균 관세는 5.89%로, 농산물과 공산품의 세율이 각각 13.88%, 4.23%이다.

한국에게 미국, 중국, 일본, EU와 더불어 5대 교역시장 중 하나인 **ASEAN** 시장은 2007.6월 한·ASEAN FTA가 발효됨에 따라 관세장벽이 많이 완화되었다. 한·ASEAN FTA의 상품무역협정에서는 2010년까지 관세가 철폐되는 일반품목군이 품목수 기준 90% 이상, 수입액 기준 90%이며 2012년까지 20%로, 2016년까지 0~5%로 관세가 인하되는 민감품목은 품목수 기준 6~7%, 수입액 기준 7%를 초과할 수 없고 초민감품목은 수입액 기준 3%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산품 분야에서는 한국의 수출 비중이 큰 자동차, 철강 등이 수입액 기준 상한선 때문에 초민감품목에 분류되지 않고 일반품목 또는 민감품목으로 분류되어 점진적 관세인하 및 철폐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특히, CKD(승용차 현지조립생산제품)의 경우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주요국은 2010년까지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였고 완성차도 국별로 2010년 관세철폐 또는 2016년 0~5%로 관세가 인하될 예정이다. 한국산 철강제품 역시 경쟁상대국인 중국, 일본제품에 비해 유리한 시장접근의 수준을 확보하였다.

동남아 국가 중 **말레이시아**는 전통적으로 저관세 정책을 견지해오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바, 기계류는 거의 무관세이고 기타 공산품도 저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국내 제조업계를 보호하기 위해 일부 품목에 대하여 고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수입관세율은 일반적으로 종가세를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1996.11월 APEC 정상회담에서 최고 수입관세율을 2000년까지 15%로 인하하고, 2020년까지 철폐하는데 합의한 바 있다.

싱가포르는 일부 품목(주류, 담배, 유류, 자동차)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관세와 특별소비세(excise duty)를 부과할 뿐, 거의 대부분의 제품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하여 자유무역을 장려해 오고 있다.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은 HS 8단위 기준 8,285개 품목 중 6개 품목(주류)에 국한되며, 우리나라의 경우 동 6개 품목에 대한 관세도 한·싱 FTA 특혜관세의 적용을 받아 완전히 면제되고 있다. 한편, 싱가포르 정부는 환경보호, 보건증진 등을 위한 국내소비 억제 차원에서 수입물품 중 주류(52개), 담배(28개), 유류(6개), 자동차(100개) 등 4개 품목군, 186개 품목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다.

베트남의 관세장벽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ASEAN 가입(1995), WTO 가입(2007), 한국·일본·중국·호주 등과의 지역무역협정 체결을 계기로 점차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베트남의 MFN 평균관세율을 보면 WTO 가입전인 2000년에는 16.2%였으나, WTO 가입 후인 2011년도에는 11.1%로 낮아졌다. 그리고 한국과의 양자간 FTA협상(2012.9월 개시), 미국 등과의 TPP협상, EU와의 FTA협상 등이 추가적으로 완료될 경우 베트남의 평균관세율은 더욱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ASEAN FTA의 상품분야협정이 2007.6월 발효됨에 따라 한·베트남간에 교역되는 상품들은 한·ASEAN FTA에서 정한 관세율을 적용받게 되었다. 베트남으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의 경우에는 협정 발효 즉시 전체품목의 63%에 해당하는 품목이 무관세 혜택을 받게 되었고 베트남에 수출되는 상품의 경우에는 전체품목의 45%에 해당하는 품목이 0~5%의 저율 관세율을 적용받게 되었다. 한·ASEAN FTA를 이용하여 베트남으로 수출하고자 할 경우, 원산지기준에 맞도록 생산하고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 첨부하여야만 현지에서 낮은 FTA 특혜관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이 민감 또는



초민감 품목으로 지정하는 경우, 베트남은 한·ASEAN FTA에 독특하게 허용되어 있는 상호대응세율(Reciprocal Tariff Rate) 제도를 이용하여 낮은 FTA 특혜관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높은 WTO MFN 관세율을 적용한다.

필리핀의 관세율 체계는 2012년 총 15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8,628개 품목의 61% 가량이 0~5%, 34%가 7~15% 그리고 나머지 5%의 품목에 대해 20% 이상의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필리핀의 2012년 평균 관세율은 6.51%이며 부문별로는 농업분야가 11.97%로 매우 높고 광업 1.76%, 제조업 5.79% 수준을 보이고 있다. 2008.1.1일부로 한·ASEAN FTA 상품협정이 발효되어 2012년에 한·필 양국 간 교역품목의 90%이상에서 관세가 철폐되었다. 필리핀 정부의 법안처리 지연 및 준비부족으로 우리측은 2009.7.9일부터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시작하였다. 우리 정부는 필리핀 정부와 이행지연에 대한 보상방안을 협의하여 2011.8월부터 1년의 기간 동안 미보상기간의 피해에 상응한 만큼 추가적으로 일부 품목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기로 합의하였다.

인도네시아는 한·ASEAN FTA 시행으로 일반품목군 308개 품목(HS 6단위)에 대해서 2012.1.1일부터 관세율을 20%까지 감축하였으며, 동 품목은 2016.1.1일까지 0~5%로 감축될 예정이다. 전체 품목수의 3%에 해당하는 상품(초민감품목, HS 6단위 156개)은 양허제외, 관세율 장기 소폭 인하, 저율관세수입물량(TRQ) 설정 등의 방식으로 보호된다. 2016.1.1일 이후에도 여전히 5% 관세가 적용되는 자동차 등 품목과 156개 초민감품목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인니 CEPA 협상의 주된 시장개방 대상이 되고 있다.

태국은 1999.1.1일 이후 현재까지 6단계 관세율 구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산업원료, 의료장비와 같은 필수품은 0%, 일부 원료와 전자부품 및 국제운송 차량 등은 1%, 1차 및 자본재의 경우는 5%, 중간제품은 10%, 미완성 제품 등은 20%, 특별보호가 필요한 물품의 경우는 30% 등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세율구조와는 별도로 차량(80%), 알콜음료(포도주: 60%) 등은 아직도 고관세율 체계를 유지한다. 다행히, 우리나라의 對태국 주요 수출 품목인 전자제품 제조용 부품 등의 관세율은 2001.12.28일을 기해 종전의 35~

60% 수준에서 0~20% 수준으로 대폭 인하됨으로써 양국 간 교역량 증가에 일조를 하였다. 최근 태국 등 아시아 10개국을 회원국으로 하는 ASEAN에서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EU 수준의 무역자유지대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15년까지 ASEAN 국가들은 ASEAN을 2AEC(ASEAN Economic Community)로 전환하여 역내교역 및 경제협력력을 보다 심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라오스의 수입 관세율은 5~40%이나 실질적으로 수입품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은 일반적인 수입품의 경우, 관세+부가가치세, 사치품의 경우, 관세+소비세+부가가치세와 같이 추가적인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실제 관세 장벽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부가가치세는 수입 상품 및 서비스 또는 라오스 국내에서 생산/소비되는 상품 및 서비스의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수출용 상품 및 서비스의 경우에는 0%의 세율이 적용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품목인 자동차에 부과되는 세금은 수입 관세 40%, 소비세 10~90%, 부가가치세 10% 등이다.

캄보디아의 관세율은 크게 0%, 7%, 15%, 20%, 35% 5단계로 구분되며 농업 소도구, 비료, 스포츠 용품, 의료 및 교육 원자재는 0%, 필수소비재와 기초 원재료는 7%, 중간재, 기계 및 시설, 현지에서 이용 가능한 원자재는 15%, 기타 소비재와 건축자재는 20%, 그리고 사치 소비재, 담배와 주류, 완제품, 석유제품, 차량, 귀금속 및 보석은 35%의 관세율이 부과된다. 수입 품목 중 CDC(캄보디아 개발위원회)가 사전 승인한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수입, 농약 등 농업에 필요한 투입물 및 농업 기계류, 대사관, 국제기구, 인도 주의를 지향하는 민간단체의 수입, 국가 간의 상호인가 및 원조를 통해 재원이 조달된 프로젝트의 수입에 대해서는 수입관세가 면제된다.

중아시아의 **몽골**은 대부분의 수입물품에 대해 일반적으로 5%의 관세를 부과하나 국내 채소채배자 보호 및 육성을 위해 일부 채소의 경우 1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맥주에 대해서도 몽골 맥주 생산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25%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서남아 국가들은 개도국 가운데서도 대체로 높은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국가들 역시 관세율을 지속적으로 인하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인도는 아직까지 외국기업과의 경쟁에서 국내기업을 보호하는 주요한 수단으로 관세를 활용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중요한 세원으로서 2011/2012 회계연도 세수의 18.5%를 차지하고 있다. 인도의 peak rate(농산물 및 자동차 등 특수품목을 제외한 일반 공산품(전체 품목의 2/3 이상)에 적용되는 MFN 관세율)는 2007년 10%로 인하되었다. 다만 10% 수준은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적정 관세수준으로 보고 2009년 8%로 인하되었다가, 2010년 다시 10%로 인상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파키스탄 정부는 경제개방 정책을 기본으로 한 성장 전략을 채택하여 수입 규제에 적극적인 모습은 보이지 않아왔다. 특히 정부의 산업화 정책 추진에 필수적인 기계/설비 제품의 수입에 대한 관세혜택 부여 등 수입자유화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2008년 들어 원유, 식량 등 국제원자재 양등 및 수입 증가에 따라 무역수지 적자가 급증하자, 파키스탄 정부는 2008.8월 주요 사치성 소비재 품목(397개)에 대한 관세를 15~50% 부과하였다. 2011.7월 파키스탄 정부는 이중 5개 품목(담배, 1800cc이상 자동차, 타일, 무기류 등)을 제외하고는 규제관세를 폐지하였다. 2012년 파키스탄은 일반관세를 35%에서 30%로 인하하고, 의약품 원료는 10%에서 5%로, 폐기고무 및 타이어는 20%에서 10%로 관세를 인하하였으며, 하이브리드 자동차 관세율은 25%까지 인하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중남미 국가들은 양허비율이 높은 국가들이 많고 관세율 역시 인하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관세 이외의 장벽도 많아 관세율 인하 자체만으로 무역장벽의 완화를 속단할 수 없다.

아르헨티나는 일반적인 수입대상국에 적용되는 일반관세 외에 라틴아메리카 통합연합(ALADI: Association Latinoamericana de Integration)회원국에 대한 특혜관세 및 남미공동시장(MERCOSUR) 회원국에 대한 특혜관세를 운용하고 있다. 2013년 8월 기준 MERCOSUR 개별 회원국들은 10,029개 품목에 대하여 대외공동관세(CET)를 적용하고 있으며, 그 중 민감한 100개 품목을 지정하여 별도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국별 면제품목

리스트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2015.12.31일까지). 2012.6월말 MERCOSUR 회원국들은 CET의 적용제외 품목을 현재의 100개에서 200개로 확대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아르헨티나의 경우 2012.9월 말까지 추가 제외품목 리스트는 발표하지 않은 상황이다. MERCOSUR 공동시장위원회는 아르헨티나가 역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자본재 및 신기술 제품 710개 품목에 대해 2012.12.31일까지 수입 관세 부과를 면제할 수 있도록 허용한바 있으나, 2012년 대통령령 1026을 통해 2012.6.1일자로 동 품목들에 대해 2~14%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변경하였으며, 2013.1.1일부로 10%와 14%의 관세가 일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현재 CET의 예외품목 리스트에는 우리의 對아르헨티나 주요 수출품목인 기계류도 포함되어 있으며, 가전제품의 CET는 20%이다.

브라질은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와 함께 1995년 발족한 MERCOSUR의 일원으로 CET를 채택하고 있으며 2012년 평균 수입관세율은 10.6%이다. MERCOSUR의 예외품목 리스트(2012.10.1 발효)에 따라 브라질의 해당 100개 품목 관세율이 13.5%에서 22.2%로 인상되었으며, 우리나라의 對 브라질 주력 수출품목인 굴삭기, 철강, 화학 등 품목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바 있다.

멕시코의 관세체계는 6가지 카테고리로 구성되어 있는데, 0%가 적용되는 것은 교육목적에 사용되는 물품, 기계류, 반제품 등 멕시코 노동력이 추가됨으로서 가치를 갖는 품목이다. 그 외 멕시코 내 생산여부, 자본재 및 부품인지 소비재인지 여부에 따라 3~5%, 10~13%, 15~18%, 23%이상, 35%이상으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와 같은 FTA 비체결국 제품에 대한 수입관세는 최저 0%에서 최고 40%까지 다양하며, 농산품에 대한 관세 수준은 0%에서 260%에 이른다.

콜롬비아는 원칙적으로 수입품을 용도별 5개 그룹으로 나누어 관세율을 적용하는데 그룹별로 0%, 5%, 10%, 15%, 2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상기 5개 그룹에 속하지 않는 자동차(35% 전후 관세율)와 농산물(15~20% 전후 관세율) 등 15개 품목에 대해서는 변동관세율을 적용하는 'price-



band' 수입관세를 시행한다.

우루과이의 2013년 평균관세율은 9.4%이다. MERCOSUR 회원국은 개별적으로 CET대상에서 제외되는 품목을 정할 수 있는 바, 우루과이에 해당하는 세부품목은 219개에 달한다. 우루과이는 섬유(18%), 의류(20%), 구리(0~2%), 설탕(평균 30%), 자동차(6~23%) 등에서 CET와 상이한 관세를 부과한다. 또한, 원자재 2~6%, 중간재 8~9%, 소비재 10~20% 등으로 CET보다 낮은 관세를 부과하며, 자동차, 농업 및 호텔 공급품, 수출품 재료에 대해서는 특혜관세가 적용된다.

코스타리카는 중미공동시장(CACM: Central America Common Market)의 일원으로 1963년 중미 5개국(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이 서명한 중미관세코드협정 및 중미관세분류체계(SAC)를 1994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중미공동시장 역내 생산품에 대해서는 무관세, 역외로부터의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최저 5%, 최고 20%의 역외공동관세를 부과한다. SAC는 HS 코드에 의거 총 21개의 관세품목을 설정하고 있으며, 코스타리카의 2013년 평균수입관세율은 6.9%이고 농산품(14.5%)은 비농산품(5.5%)에 비해 관세가 높은 편이다.

과테말라는 일부 민감품목을 제외하고 역내국 간에는 무관세를 실시하며 역외로부터의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최저 5%에서 최고 20%의 역외공동관세를 적용한다. 대외 관세율은 자본재 및 역내 비생산 원자재 0%, 역내생산 원자재 및 의약품 5%, 중간재 10%, 국내 비생산 소비재 15%, 국내생산 소비재 20% 선이나 자국 산업보호를 위해 세이프가드를 두고 있어 일부 소비재품목의 경우 관세율이 최고 40%까지 이르고 있다.

에콰도르는 WTO 규정과 안데스 공동체(CAN)의 무역규범의 적용을 받고 있다. CAN은 2006년부터 EU와의 FTA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CAN 회원국 간 정치, 이념 차이로 답보 상태에 빠졌으며, 이후 에콰도르는 EU와 독자적으로 협상을 추진하여 2014년 초 타결이 예상된다. 한편, 대미 무역에서 많은 특혜를 주었던 안데스 무역특혜 및 마약퇴치법(ATPDEA)이 2013.7월 종료되어 대미 무역에 다소 난향을 겪고 있다. ATPDEA 종료로

가장 큰 손실이 우려되는 분야는 꽃, 브로콜리, 망고, 섬유, 참치 등이며 분야별로 1~15%까지 관세를 지불해야 한다. 이에 따라 에콰도르 정부는 수출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세액공제 및 보조금 제도 등을 마련하였다.

동유럽 국가의 관세율은 전반적으로 선진국 수준에 근접해 있으나 각종 비관세장벽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러시아의 기초수입관세율(Basic import customs duty rates)은 평균 5~20% 수준이나 CIS국가들과 FTA를 체결하여 원산지가 CIS국가인 제품들에 대해서는 수입관세를 면제하고 있으며, 개도국(한국 포함)에는 기존 공동관세율의 75%만 적용하고 최빈국의 경우에는 0%를 적용한다. 한편 러시아는 2010.1.1일부터 유라시아 경제공동체(EurAsEC: Eurasian Economic Community) 회원국 중 벨라루스, 카자흐스탄과의 관세동맹으로 3국간 통합관세율을 적용하기 시작하였다.

터키는 자국과의 무역협정국, 일반특혜관세제도(GSP)대상 개도국, 상기 두 그룹에 속하지 않는 제3국으로 구분하여 관세를 차등부과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한·터키 FTA 발효 전에는 기타 제3국으로 분류되어 관세를 적용받아 왔으나, 2013.5.1일 양국간 FTA가 발효된 후부터는 양허스케줄에 따른 특혜관세를 적용받고 있다.

크로아티아는 2013.7.1일부터 우리나라 상품에 대해 한·EU FTA에 따른 특혜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대외무역에서 EU 공통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EU 회원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통관절차가 생략된다. 특별세(Special Tax)는 자동차, 이륜차, 선박, 비행기, 석유·가스 등 에너지류, 주류가 아닌 음료수, 커피 및 사치품에 부과되며 수입 시에는 세관에서 부과하고 국내 생산 시에는 제조업자가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품목별로 상이한 세율이 적용된다.

세르비아는 현재 총 만 여개 품목에서 0~30% 범위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평균관세율은 8.7%이다. 공산품의 평균관세율은 6.2%이나 농산물은 17%이며, 국내 농산물 보호자원에서 최고 수준인 30%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다. 우리 기업의 주요 수출품목은 자동차(관세율은 20%), 가전제품(5~10%), 폴리에틸렌(5%), 기계류(1%) 등이다.

중동 국가들은 전반적으로 관세율이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나 자국 산업의 보호를 위해 관세율을 활용하거나 제도운용의 투명성이 낮은 경우가 발견된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관세는 HS기준에 따른 종가세 제도로 통상 관세율은 무관세, 5%, 12%, 20%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쌀, 설탕 등 기본 생필품은 무관세, 일반상품에 대한 관세는 5%, 자국에서 생산되어 수입품과 경쟁이 예상되는 시멘트, 계란, 윤활유, 철망, 카펫, 플라스틱제품, 목공제품 등의 품목은 12~2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기타 대추야자는 40%, 담배는 100%의 고관세를 부과중이다. 사우디는 2008.4.1일부터 물가안정을 위하여 식료품, 생활용품, 건축자재 등에 대한 관세율을 종전 6~25%에서 0~5%로 3년간 한시적으로 인하하였다. 사우디정부는 2011.4월에 수입관세 재검토 후 관세를 조정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현재까지 관세율 변경 또는 인상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사우디의 평균 관세율은 10%로서 개도국 평균 관세율 15~20%와 비교할 때 낮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관세행정시스템의 미비 등으로 최저관세, 관세부과 가격산정, 관세 환급에서 불합리한 조치를 받는 경우가 있으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아랍에미리트는 개방적 시장경제정책을 취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수입품에 대해 5%의 관세를 부과하고 예외적으로 특정품목에 대해 무관세(원산지가 GCC회원국인 상품) 또는 고율(담배 100%, 주류 5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53종의 농산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고 있다. 그리고 재수출용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이스라엘의 MFN 관세 평균은 6.4% 수준이며, 제조업 제품에 대한 관세율(평균 4.6%)에 비해 농산품에 대한 관세율(평균 12.7%)이 높은 편이다. 농산품 중 낙농제품에 대해 관세율은 92%로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11년 설립된 「Kedmi 위원회」는 관세율을 더 낮추거나 영세율을 적용할

식품 리스트를 2012.4.2일 발표하였는데, 이스라엘 내 경쟁자가 없는 식품에 대해서는 수입관세를 40% 내지 100% 감면하고 현재 세율이 지나치게 높은 신선 소고기육과 같은 농산품 및 참치, 과일주스 같은 패키지 상품에 대해서 관세율을 감면토록 권고하였다. 한편 이스라엘 정부는 국내산업 보호를 위하여 TAMA(추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TAMA는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가격에 일정한 비율을 곱하여 가격을 의도적으로 올리는 것으로서, 구매세와 연동되어 있다. TAMA의 가산율은 수입업자의 평균수익율과 국내산 상품가격과의 차이를 반영하여 결정된다.

쿠웨이트 대부분의 수입상품은 CIF 가격 기준 5%의 단일 관세율이 부과되거나 GCC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은 무관세로 통관되고 있다. 농산물 및 기본생필품 등 417개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고 있는 반면, 담배에 대해서는 100%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쿠웨이트 업체가 생산하는 공산품과 경쟁이 되는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자국 상품의 보호를 위해 CIF 가격 기준 25%까지 보호관세가 부과되고, 쿠웨이트에서 수출되는 상품에 대하여는 관세가 없다.

이란은 양자 간 또는 회원국 간 적용되는 특혜 관세율 적용을 고려중에 있으나, 현재 관세율은 터키 등 9개 ECO 회원 국가(이란, 터키, 파키스탄)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이란 관세법에 따르면 수입품이 덤핑이나 부당한 혜택 하에 이란으로 반입되어 동종 산업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현재까지 이란 당국이 한국 상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사례는 없다. 관세 산정방식은 $CIF \text{ 가격}(US \$) \times \text{현지화 환율} \times \text{해당수입 관세율}$ 이다. 기본관세는 원자재, 부품 반제품 등에 대해 저율(통상 4%)이 적용되고 완제품 및 소비재는 고율의 관세가 부과된다.

예멘의 2010년 관세법은 관세면제 등과 관련된 규정의 유연성을 개선하였으며 밀수 및 사기 등 불법행위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였다. 산업투자자와 관련된 수입에 대해서는 최대 50%까지의 관세 인하를 규정하고 있으며 재수출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고 있다. 예멘의 2014년 WTO 가입이 예상



됨에 따라 관세의 안정성이 보다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모로코 수입관세는 CIF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공산품에 대해서 제품의 특성과 자국 산업 발달유무에 따라 0%부터 최고 25%까지 차등 적용되고 농산품의 경우 밀(73%), 설탕(60%) 등에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또한, 국내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주요 산업에 대해 가공단계가 높아질수록 관세율이 높아지는 경사관세 구조를 가지고 있다. 모로코는 2009~2012년 간 진행되어 온 자발적인 최혜국 실행관세 인하 프로그램에 따라 현행 공산품 수입에 부과되는 30%의 최고관세를 2012년 25%로 낮추고 관세부과 단계를 2008년 7단계에서 2012년 4단계로 단순화하였다. 모로코는 EU,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미국, 터키, 튀니지, 이집트, 요르단, UAE, 여타 아랍국가 등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다. 특히 모로코의 주요 교역대상국인 EU와는 2012년 관세철폐가 완료되었고, 미국 및 터키와는 2015년에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관세철폐가 완료될 예정으로 있어, 최혜국 관세 인하에도 불구하고 특혜 및 최혜국 관세 간 격차가 커져 자동차 등 한국산 주력 수출품의 가격경쟁력 약화가 우려되고 있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세계적인 추세에 맞추어 관세율을 점차 인하하고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WTO 가입 당시 전체 상품의 96.4%에 대해 시장을 개방하는 양허안을 제출하였고 1995년도에 15%에 달하던 비농산물(non-agricultural product) 평균 관세율은 2011년 7.5% 수준까지 인하되었다. 이와 함께 무관세 수입품목 비중도 꾸준히 확대하고 있는데 2011년 기준으로 전체 농산물 수입액의 45.3%, 비농산물 수입액의 63.7%가 무관세로 수입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남아공 최대 수출품목인 승용차는 수입관세가 지속적으로 인하되고 있는데 1999년 50.5%에서 2013년에는 20~25%까지 인하되었으며, 동일 수준의 관세율이 2020년까지 유지될 예정이다.

이집트는 시장개방정책에 따라 지속적으로 수입 개방 폭을 확대하면서 관세율 인하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2004.7월 출범한 Nazif 총리 내각은 경제개혁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였는데 2008.4월에는 급등하는 물가를 억제하기 위해 주요 생필품과 가정용 가전제품, 의료용품 및 중간재 111개 품목

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거나 2~30% 인하하였다. 이집트 정부의 지속적인 관세 인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동차(0~135%), 주류, 담배, 화장품(최고 3,000%) 등 일부 품목은 여전히 40% 이상의 높은 관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다. 특히 2013.3월 이집트 정부는 100개의 비필수품목과 선글라스, 시계, 비디오게임기, 새우, 선박 등 사치 품목에 대해 5~40%의 관세 인상을 취하였다.

나이지리아의 관세는 원유 수출 다음으로 나이지리아 정부의 주요 재정 수입원이라 할 수 있다. 수입관세는 Import Duty와 Sur Charge, VAT 및 특정품목에 대한 조합공제금 등 약 4가지로 구분된다. Import Duty는 CIF 가격에 관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며 Sur Charge는 Import Duty의 7%, VAT는 Import Duty, Sur Charge와 CIF 수입 물품 가격을 합한 금액의 5%를 부과한다. 또한 자동차 부품과 같은 품목은 자동차 부품 조합에 납부하는 Levy Charge(CIF 금액의 2%)를 별도로 지불한다. 한편, 빈번한 수입 정책 변화와 일관성 없는 관세 징수로 인해 나이지리아 내에서 수입 가격이 상승하고 종종 심각한 상업적 병목현상이 초래되고 있으며,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원자재나 완성품의 경우에는 상황이 더 심각하여 해외 수출 업체나 국내 생산업체들에게 많은 피해가 돌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가나는 WTO 및 서부아프리카 경제공동체(ECOWAS)의 회원국이다. 다른 ECOWAS 회원국과 마찬가지로 관세율은 0%(서적, 의약품 등 사회적 재화), 5%(원자재), 10%(중간재), 20%(완제품) 등 4개의 그룹으로 분류된다. 다만, 13개 석유 관련 제품의 수입관세율은 별도의 리터당 관세율이 적용된다. 가나는 ECOWAS 회원국에서 완전 생산되었거나 충분히 변형된 수입 상품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상품 수입 시 부가가치세, 건강보험세 등을 부과하고 있다.

세네갈의 평균 실행관세율은 11.9%로 여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보다 비교적 낮은 수준이다. 분야별로는 농산물 관세(14.6%)가 비농산물 관세(11.5%)보다 높아 취약한 국내 농업생산을 보호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예외조항을 두어 일부 비농산물 제조업 등에 대한 보호도 병행하고 있다. 서아



프리카 경제통화연합(WAEMU) 역외공동관세는 품목별로 0%(특정 기본재), 5%(생필품 및 기초재), 10%(중간재), 20%(완제품 및 기타 최종소비재), 30%(일부 민감품목)를 부과하는 5단계의 관세로 구성되어 있다.

DR콩고 관세는 CIF 가격 기준으로 5%(원자재, 농자재, 의약품, 수의(동물 관련)용품, 용기자재), 10%(중간재, 식료품, 병원 관련 품목) 및 20%(옷, 가구, 담배 및 완제품)로 분류되고 있다. 콩고 관세는 100%가 상한이며, 단순평균 최고관세율은 96.2%이다. 2010년 현재 평균 실행관세율은 11.3%로 점차 상승하고 있는 추세인 가운데 섬유류, 종이, 화학제품 등 공산품에 대한 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수입규제

(수입금지, 수입허가, 수입쿼터)

개관

수입규제는 수입금지, 수입허가, 수입쿼터, 기타 일방적 조치 등 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들을 총칭한다. 수입금지는 주로 국가안보, 공공안전, 보건 위생 및 환경보호 등을 목적으로 각 국별로 일부 관련품목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수입허가는 수입금지의 경우와 유사한 이유로 수입품에 대하여 부과되는 규제이나 수입금지보다는 저항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기 때문에 수입을 규제하는 수단으로 보다 광범위한 범위의 품목들에 대하여 적용되고 있다.

WTO는 수량제한에 의한 수입규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GATT 협정문 제XI조는 수출과 수입에 대해 관세나 세금, 과징금 이외의 수량제한, 수출입허가 등에 의한 규제를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매우 제한적인 조건에서 심각한 식량부족(제XI조 2항), 국제수지문제(제XVIII조 2의 b항) 등 정당화될 수 있는 정책적 근거 하에서만 예외적인 수량제한이 일시적으로 허용된다. 이와 관련하여 GATT 협정문 제XIII조는, 제I조에서 일반적인 최혜국대우(MFN treatment)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수량제한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그것이 비차별적으로 적용되어야 함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즉, 예외적으로 수량제한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수량제한이 없었을 경우에 각 체약국이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량에 가장 가깝게 수량배분이 이루어지도록 적용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수량제한 금지를 엄격히 규정한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수량제한이 관세와 비교할 때 자유무역을 왜곡할 가능성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 즉, 관세는 일



국이 수입을 제한하기 위해 수입물품에 부과되더라도 외국의 상품이 관세에 의한 장벽을 극복할 만큼 충분히(가격)경쟁력을 가지게 되면 수입이 증가할 가능성도 존재하나, 수량제한 조치를 취할 경우 외국제품의 경쟁력과 관계없이 제한된 수량 이상의 수입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매우 제한적인 조치이다.

WTO산하 수입허가위원회에서 수입허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WTO가 정한 규율위반여부를 2년에 한 번씩 조사하고 있다. 각 회원국은 수입허가와 관련된 국내규제의 변화가 있을 시에는 즉각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수입금지

수입금지는 일반적으로 국가안보, 위생 및 공중보건, 환경보전, 공중도덕, 지적재산권의 보호 등 GATT 협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일부 품목들에 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자국 산업의 보호를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수입금지의 대상품목은 멸종위기의 동식물 및 동식물 제품, 무기류, 마약류,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제조된 물품, 위조장표를 부착한 물품, 완성차, 중고자동차, 중고기계류, 음란물, 위조화폐 등이 대표적이다.¹

미국은 관세법(Tariff Act of 1930)』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미국의 국가안보 및 공중도덕을 저해하거나, 「식품, 의약품 및 화장품에 관한 법률(Federal Food, Drug & Cosmetic Act)』에 의거해 비위생적인 공정을 거쳐 제조된 불량식품과 불법표시의 수입을 금지한다. 「식물방역법(Plant Protection Act)과 동물위생방역법(Animal Health Protection Act)에 의거하

¹ 이와 관련하여 수출에 있어서도 수출금지 또는 수출세를 통한 규제가 드물게 존재하고 있다. 수출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는 품목은 주로 1차 산품(자연자원)이며 대표적인 품목은 원목으로 미국이 특정 조류(점박이 올빼미; spotted owl)의 보호를 이유로, 그리고 캐나다와 인도네시아 등이 국내 가공산업의 육성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여 동물의 질병 및 병충해 발생지역으로 지정된 국가로부터의 동식물 및 동식물 제품의 수입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연방육류검사법(Federal Meat Inspection Act)」 및 「연방가금육검사법(Federal Poultry Inspection Act)」에 따라 수출국가의 수의공중보건 위생통제 및 작업장 위생관리 상황이 미국의 제도와 실행사항에 있어 동등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동등성인정을 받지 않은 국가 및 작업장으로부터는 축산물의 수입이 금지된다. 또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 Flora: CITES)에 의하여 멸종위기의 동·식물 및 동·식물 제품의 수입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다. 또한 해양포유동물보호법(Marine Mammal Protection Act of 1994)의 돌고래 보호규정과 국제 돌고래 보존프로그램 규정에 의하여 돌고래의 안전을 저해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참치어획 관행 및 참치제품 수입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바다거북보호법(Section 609 of Public Law 101-162)에 의거하여 바다거북보호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상업적 어획 기술을 사용하여 어획된 새우와 새우제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2008년 개정된 Lacey Act는 불법적으로 수확한 식물 및 식물제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기 위해 특정 식물 및 식물로 제조된 제품의 수입 시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 위조화폐, 공격용 무기, 포르노사진, 죄수가 제조한 상품 등 캐나다의 관세율양허표(Tariff Schedule)에 열거된 품목은 수입이 금지되고 있으며, 「몬트리올 의정서」, 「바젤협약」,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무역에 관한 협약」등 캐나다가 가입하고 있는 국제협약에 의한 수입 규제 품목도 수입이 규제되고 있다. 캐나다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규정에 의해 미국, 멕시코에 대해서는 여타국과 상이한 특별대우를 하고 있으며, 이는 GATT 규정 XXIV에 따른 지역적 통합시 최혜국대우(MFN) 규정의 예외적용 규정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나 캐나다의 재생타이어 수입 금지 사례²⁾는 위반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 일반승용차용은 미국산을 제외하고는 전면 금지하고 트럭용 등 특수타이어는 허가



멕시코의 경우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무역업자로 등록만 하면 마리화나, 모르핀 등 일반적으로 모든 나라에서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품목 이외에는 수입금지 품목이 없다. 다만, 농산물, 의약품, 식품, 환경공해 관련 품목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의 사전 허가 또는 등록을 요구한다.

과테말라의 경우 수입금지 품목으로 농산물 일부, 살아있는 동식물, 종자, 마약류, 화약제조원료, 총기, 무기, 폭발물 등 HS CODE 6단위 기준 총 52개 품목이 책정되어 있다.

스페인의 경우, 농·수산물과 섬유제품, 철강제품 등은 유럽연합에서 EU 내 국가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히 규제하고 있는 품목으로 스페인에서는 동 품목에 한해서는 수입에 있어 규제를 받는다. 2013년 초, 무분별한 산림벌채 및 위법벌채를 막기 위해 EU 목제품 수입 규제법이 채택되었다.

우루과이의 수입금지 규정은 대부분 보건, 동식물위생, 안전, 국방 등 특별한 목적을 위해 시행되며, 해당 품목은 석면 포함물, 납 다량 함유 상자로 포장된 음식물, 특정 살충제, 특정 동물용 식품 및 약품, 조류독감 발생 지역에서 생산된 닭고기 및 계란, 선지, 군사용 무기, 마약 등이 있다. 이밖에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비위생적이라고 명시한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료로 만들어지는 음식물은 수입이 금지되어 있으며, 몬테비데오시 지방정부는 착색소 등 음식물 재료(composition of food articles)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벨라루스 정부는 2010.10월부터 수입규제정책을 경제계획 수립 시에 고려하는 주요 과제 중의 하나로 설정하였다. 수입규제조치는 주로 일반 생활용품의 수입 시 적용되며, 투자목적으로 수입되는 물품 및 외국자본, 자원절감 기술 등의 수입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코스타리카는 무기류, 탄약, 페타이어, 화약물질 및 마리화나, 모르핀 등 향정신성 약품과 같이 일반적으로 모든 나라에서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품목

를 필요로 하고 있다.

에서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튀니지의 수입금지 품목은 무기, 폭약, 마약, 모조품, 현옷, 야자수, 공격/위협건, 미풍양속/보건/공공안전에 유해한 제품, 국가안전을 해치는 제품 등이다.

파나마는 문화, 미풍양속 보존 및 국가 안보, 자국민 보건 위생을 위해 위조 화폐 및 화폐를 모방한 광고선전물, 화폐 및 동전제조기계, 주류, 포도주 및 맥주 중 실제와 다른 함량이 표시된 경우, 내용물과 다른 표시가 부착된 의약품, 기타 공공 위생 및 보건에 해가 되는 물품, 도검 및 무기류, 복권, 아편 등 마약류,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인쇄물(팸플릿, 서적, 신문, 엽서, 우편 등), 농축산개발부가 수입금지 품목으로 지정한 동식물 및 종자, 원주민의 전통의상, 악기, 공예품의 위조품 등과 같은 품목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보건, 공중도덕, 환경, 안보상의 이유로 아래와 같은 17개 제품군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주로 생물, 채소류, 과일류, 식품, 음료수, 가스, 위조지폐/동전, 해적판 동영상물·서적류, 무기, 폭발 물질, 마약 및 제조원료 등 사람의 생명, 보건, 공중도덕, 안보에 관련된 품목이 수입금지품목으로 지정되어 있다.

한편, **뉴질랜드**는 농산물, 남극대구 및 비막치어, 동물의 털을 이용한 브러시류, 화학무기, 씹는 담배, 인간 배아, 마약류, 애완동물용 추적기, 특정 개 품종, 멸종위기류, 폭발물, 허위과장광고상품, 위험물질, 위험폐기물, 해양포유류, 현금, 불법개조차량, 유해물, 오존파괴물질, 폴리염화비페닐(PCBs),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 처방약품, 무선전파방해 장비, 방사능물질, 송어류 등에 대해 수입금지 또는 수입제한조치를 취하고 있다.

대만은 공공 도덕, 생태계 보호 차원(GATT 1999 제24조), 국가안보 차원(GATT 제21조), WTO 규범에 의해 일부 소수의 품목에 대해 수입을 규제하고 있다. 일부 농·공원료에 대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을 제한/금지하고 있으며, 2013.9월말 기준 총 2,121개의 농·공산품(농산물 902개 품목, 공산품 1,219개 품목)의 수입이 제한, 금지되고 있다.



싱가포르는 보건, 공공안전 및 환경 등의 이유로 일부 품목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공공 안전·보건 목적으로 껌, 권총모양의 라이터, 폭죽, 금지 약물, 금지물질이 포함된 화장품, 중남미산/아프리카산 고무, 코코아, 코코넛, 890~915Mhz 주파수를 쓰는 무선전화기, 감시카메라 등을 수입 금지하고 있다. 환경보호를 위해 3년 이상 된 중고차, 석면, 석면으로 된 차량 브레이크 라이닝, 잔류성 대기오염물질, 할론 등 오존층 파괴물질, 로테르담 협약에 의해 통제되고 있는 유해화학물질 및 살충제 등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필리핀의 수입금지 품목은 중고 자동차, 중고 타이어, 중고 의류를 비롯해 공공위생, 안전·보건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폭발물, 불온서적, 비디오, 영화, 아편, 마약, 도박 관련물, 낙태관련 약품 및 기구 등으로 제반 국내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인도의 품목별 수입제한은 안보 등의 이유로 수입이 금지되는 수입금지품목(Prohibited Items), 지정된 자(국영기업 등)에 한하여 수입이 허용되는 수입전매품목(Canalized Items), 수입 시 인도 정부의 별도 사전허가가 요구되는 수입제한품목(Restricted Items) 등으로 나누어진다. 수입제한품목은 대체로 동물 및 동물성 생산품, 화공품, 중고제품 등에, 수입전매품목은 곡물, 석탄류 등에, 수입금지품목은 동식물성 유지, 무기류 등에 집중되어 있다. 또한 인도 정부는 2008.11월 세계경제위기로부터 국내 산업보호를 위해 연연강판, 탄성사, 철강관·파이프 등 12개 품목을 수입제한품목으로 지정하였다. 이후 국내 산업간 이해상충, 경제호전 등으로 인해 탄성사, 카본블랙, 철강관·파이프 등 5개 품목에 대한 수입제한 조치를 철회하였고 인도 경제개선에 따라 점차 철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광범위하게 유지되어 오던 일반적 수입수량규제는 호주, 캐나다, EU, 미국 등과의 협의의 결과로서 2000.12월, 714개 품목, 2002.2월, 715개 품목의 수량규제가 해제됨으로써 완전히 폐지되었다.

몽골의 수입제한품목은 우라늄과 그 부산물, 유해 화학물질, 지속적인 감독이 필요한 신체 부위, 장기, 기증 혈액, 무기 및 관련 부품,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있는 아이템(동물, 식물, 고생물, 광물, 인체, 건축, 인류학 등), 특정 품종의 가축(소, 말, 양, 염소, 낙타 등), 동물과 관련된 원료, 희귀동물의 신체부위, 자연식물 등이다. 수입금지품목은 마약류, 환각제 및 환각제 제조에 필요한 원료와 장비, 모든 종류의 주정 원료, 재활용 음료수 캔을 제외한 금속 및 비금속 광물, 잣, 잣나무 등이다.

방글라데시의 수입제한 및 금지 품목은 통상 3년을 단위로 공표, 시행되고 있는 수입관리정책(Import Policy Order)에 명시되어 있다. 동 품목은 연간 예산계획에 의해 일부 수정되는 경우도 있으며, 환경보호 등 특정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해 수시로 품목이 추가되는 경우도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2006~2009년 수입관리 정책상에 수입금지 품목으로 규정된 제품은 HS 4단위를 기준으로 60개 품목군(일부 또는 전부)에 이른다.

일부 개발도상국에서는 종교상 또는 정치적인 이유로 특정품목 또는 특정 국가로부터의 수입품이나 특정국가의 선박을 이용하여 운송되는 품목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종교, 윤리, 안보 및 환경보호라는 네 가지 기준에 따라 모조 화폐, 공서양속, 사회안녕을 해치는 휘장 또는 고안품, 외설적인 그림, 사진, 책자, 필름, 비디오테이프, 레이저디스크, 코란 문구를 인쇄한 직물, 단검 등과 필리핀, 인도네시아로부터 수입되는 cocoa 등 과일류, 독성 화학물, 방사능 성분을 함유한 투각섬석 피뢰기, 눈길용 고무타이어, 기상용을 제외한 전파 수신기(68~87MHz, 108~174MHz) 등 16개 품목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수입한 경우 세관은 수입금지품목을 압수하고, 최대 RM 5,000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방글라데시, 시리아에서는 이스라엘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과 이스라엘 국적선에 의해 운송되는 상품의 수입이 금지된다. **쿠웨이트** 역시 종교상의 이유로 돼지고기와 주류 등의 수입금지품목이 존재하며, 아랍국가 금지규정(Arab Boycott Rules)을 적용하여 이스라엘에서 생산된 물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레바논**은 이스라엘과의 직접 무역을 금지하고 있다. **이라에미리트, 알제리**도 이스라엘 보이콧 정책과 관련하여 이스라엘에서 제조된 물품 또는 이스라엘 부품이 포함된 상품에 대해 수입을 금지



하고 있다.

아랍에미리트의 경우 이스라엘 보이콧 규정에 따라 이스라엘 국가나 이스라엘이라는 문구가 들어간 제품도 수입이 금지되어 있다. 또한 보건위생상의 이유로 WTO 규정 등에 따른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있다. 미국 소의 광우병 발생 파동으로 당시 2009년에 30개월 이상의 미국산 소 관련 생산물의 수입을 금지한 바 있다. 2011년 유럽의 E. coli 박테리아 오염 파동으로 독일, 스페인, 덴마크, 네덜란드 등으로부터 오이 수입을 금지하였다.

시리아는 그동안 총 75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양의 수입금지 리스트를 갖고 있는 등 수입관련 규제가 가장 까다로운 국가 중 하나였으나, 지난 2008.4.30일부로 수입을 전면 자유화함으로써 시리아의 시장접근 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있다. 2008년 시리아 정부가 취하고 있는 수입 금지, 제한 혹은 수입권을 제한하고 있는 부분은 ①환경, 안보, 위생, 종교상의 이유로 한 수입 금지(총 174개 품목), ②시리아 국내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품목 및 이스라엘 보이콧 품목에 대한 수입 금지 및 제한(해당 품목 수시 변경) ③정부 수입독점품목 수입 금지 및 제한(석유 및 관련 제품, 알코올성 음료, 무기류, 일부 곡물 제품, 제약, 소금, 블랙 시멘트, 의류, 과일, 올리브 오일, 사료, 인광 등) 등이다.

오만은 기본적으로 국민 보건, 종교와 관련된 특정분야를 제외하고는 완전 수입자유화 시장으로 수입쿼터제 등 수량 제한, 수출 이행 의무 부과 등의 규제는 없다. 식료품, 비료, 서적 및 잡지, 영화, 비디오, 의약품, 자동차, 타이어, 전선류, 페인트, 무기류 등은 통관 전에 정부로부터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며 주류, 폭발물, 라디오 송수신기, 무선전신기, 춘화, 마약류 등은 수입이 금지 또는 제한되어 있다. 식료품의 경우 위생증명서 및 식품 검역증명서가 필요하며 통관시 까다로운 검역절차를 거쳐야 한다. 육류의 경우 추가적으로 이슬람 율법에 따라 도축되었음을 증명하는 인증서류 및 광우병 안전 증명서 제출이 필요하다.

요르단은 2000년 WTO 가입 이후 2001년 수출입 법령(Imports and

Exports Law No.21)을 WTO에 규정에 따라 재정비하고 원칙적으로 수입 자유화 정책을 실시하고 있어, 군수품, 마약류 및 정부 소유 공기업의 수입 독점 품목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품목에 대한 수입 제한이 없다.

이집트는 수출입관리법(Import and Export Law No.118/1975)이 명시하고 있는 수입규제 및 관리품목에 따라 이슬람 신념에 반하는 디자인이나 상표가 부착된 제품, 닭고기 내장 및 다리, 가금류 내장, Oil Injection 펌프를 장착하지 않은 Two stroke Motor-bike, 모든 종류의 석면, 석면으로 제작된 브레이크 패드, 유전자조작 오일을 함유하고 있는 참치, DDT 등 127개 종류의 화학제, 중고제품 등 9개 품목은 수입이 금지되며, 130개 품목은 품질검사가 필요하다.

가나는 국민의 위생 및 안전과 밀접히 관련되는 중고 손수건, 팬티, 매트리스, 중고 LPG통, 독극물, 타조 꼬리, 토양 등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몬트리올 협약, 위험폐기물 바젤협약 등 국제협약에 따른 위험 품목에 대해서도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수산업 성수기인 매년 5월에서 10월까지 가나 어부들을 보호하기 위해 캔류를 제외한 어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가나 연안의 참치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1년중 1~2월에 일 정조건에 따라 금어기를 설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나이지리아는 자국산업의 보호 및 육성을 위해 2005.4월 수입금지 품목을 발표하였다. 2013.10월 현재 산 또는 죽은 조류, 돼지고기, 소고기, 새의 알, 카사바, 정제된 식물성 기름 및 지방, 코코아, 스파게티, 라면, 과일주스, 물, 맥주, 포대시멘트, 의약품(아스피린 등 HS Code 3003, 3004 14개 품목), 폐 의약품, 비누 및 세제, 모기향, 플라스틱 위생용, 재생 및 중고 타이어, 전화기 충전카드 및 바우처, 신발 및 가방, 중고컴프레서, 중고에어컨, 중고냉장·냉동고, 중고차(제조년도 기준 10년 이상), 가구, 불펜 등 26개 수입금지품목 리스트가公示되어 있다. 나이지리아는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비누, 세제, 음료, 생수, 신발 등과 가금류, 축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을 주는 제품에 대해서도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지에서 제조되는 제품은 대부분 품질이 조악하여 고급품을 원하



는 소비자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여 인근 국가를 통해 밀수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나이지리아 정부는 관세수입 증대를 위해 수입금지 예외규정을 두어 수입을 허용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대나이지리아 최대 수출품목이었던 자수직물의 금지는 계속 유효하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국민건강, 환경보호, 안전 및 섬유, 자동차, 기계, 플라스틱 산업 등 주요 국내산업보호 등을 이유로 일부 제품을 수입금지 품목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이들 품목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국제무역위원회(ITCA)의 특별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수입이 허용된다.

리비아는 2002년 수입허가제를 철폐하면서 지정하였던 수입금지 품목 33가지를 2005년도에 17가지로 한 차례 축소하였고, 2008.3월에 다시 한 번 이를 축소하여 10가지로 조정하였다. 담배, 총기, 의약품 등은 리비아 정부가 지정한 기관에서만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비레인은 방사선조사식품, 무기류, 음란물, 야생동물, 무선조정 모형비행기, 염화메틸(methyl chloride)등과 같은 보건부에서 지정한 위험물질이 포함되어있는 장난감, 시클람산염(cyclamates)이 포함된 음식이나 과자 등과 같은 품목들은 수입이 금지된다.

콩고의 무역법 제13조에 따르면 무역경제부 장관은 건강에 위험하거나 도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특정 물품의 수입을 금지할 권한이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재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품목은 플라스틱 비닐(환경오염 방지), 원석상태의 광물(다이아몬드, 동, 코발트, 금) 및 총기류, 총탄, 부레옥잠, 성인용품 등이다.

한편 상당수의 개발도상국에서는 환경보호, 보건, 안전 등의 이유로 자동차와 중고자동차부품, 중고기계류, 중고의류 등의 수입을 금지 또는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주로 자국산업의 보호를 위한 것으로 특히, 중고차의 경우 아직 자동차공업이 발달하지 못한 나라들은 향후에도 국내산업보호를 위해 중고차에 대한 수입규제를 풀지 않을 전망이다. **과테말라**는 2012.3월 부터 일부 중고자동차에 대해서 연식규제를 시행 하고 있다(Decreto

10-2012). 수입을 금지하는 경우로는 1) 1000cc 이하 승용차는 15년을 초과하는 모델, 2) 1000cc 초과 승용차는 10년을 초과하는 모델이 이에 해당한다. 상용차(버스, 미니버스 등), 수송용 차량은 연식제한이 없다.

멕시코는 1994.2월에 제정된 「중고차 수입조건에 관한 법령」에 의거하여 중고차 수입이 제한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또한 일부 국경지대만을 제외하고는 멕시코시티 등 주요 도시에서는 중고 수입차 운행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NAFTA 협정 체결 시 자동차 시장에 대해 단계적으로 개방하기로 합의하여 미국과 캐나다산의 중고차 수입은 가능하다.

도미니카의 경우 「법률 제147-00」에 의거, 제조 후 5년 이상 된 중고차와 오토바이 수입, 이주 목적 이외의 중고 가전제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나, 시장에서는 5년 이상된 중고차들도 수입되어 판매되는 등 시장 현실은 규정과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브라질은 외국 혈액제제와 중고 기계, 중고 자동차, 중고 의료장비, 현운, 중고 타이어 등 중고 소비재의 수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다만, 고용창출, 수출증대와 생산비용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해외로부터의 플랜트 이전의 경우와 동종의 기계가 브라질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대체될 수 없음이 입증될 경우에는 관련 중고기계 및 설비의 수입이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모로코는 보건 및 안전상의 이유로 중고의류 및 재생상품에 대한 수입허가가 사실상 발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니카라과의 경우 국내산업 기반이 취약하여 국내소비에 필요한 공산품 대부분을 수입하는 만큼, 관세의 수입규제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농산물, 섬유 및 의류, 환경, 노동 등 특정분야 보호를 위해 일부 품목에 수입쿼터 할당, 단계적 양허 등 수입제한 내지 금지 조치를 시행하기도 한다. ‘육상 운송법’(2005/524)은 운행된 지 10년 이상의 차량은 수입을 금지한다. 하지만 소방청, 적십자사 및 종교단체에 기증할 목적으로 수입되는 차량과, 골동품 차량의 수입은 예외로 한다.



아르헨티나 역시 중고자동차, 중고모터사이클, 중고장비 및 부품, 중고의료 등의 중고품들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현행 수입금지 품목에는 중고 자동차(Decree 110/1999), 중고 모터사이클 및 세발자전거(경제부 Resolution 790/1992), 중고 장비 및 부품(Resolution 89/2003), 타이어, 의류 및 액세서리(MERCOSUR Tariff Codes 4012.20.00), 유해 잔여물(Law 24051), 위험물질(Resolution 750/2000, 845/2000, 182/1999 등), 1880-1900 Mhz 대역의 전화 단말기(Resolution SC 1994/1999), 유해 장난감, 재생타이어(MERCOSUR Tariff Codes 4012.10.00), 비가공 목화(Resolution 208/2003) 등이 포함되어 있다.

페루, 에콰도르, 볼리비아는 안데스공동체의 결정에 의해 중고 타이어 및 중고차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에콰도르는 야생 동·식물 교역에 관한 협정(CITES) 및 유해 폐기물에 관한 바젤 협정 등에 의거 멸종위기의 동·식물 및 유해 화학물품, 중고 타이어, 중고 의류 등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안데스공동체의 결정에 의해 중고차 수입 역시 금지되어 있다.

볼리비아는 보건부에 사전 등록되지 않은 의약품, 중고 의류제품, 3년 이상 경과된 중고차나 오토바이(단, 차량중량이나 적재량이 10톤 이상인 차량은 예외규정 적용)는 수입할 수 없다.

칠레, 온두라스의 경우 중고자동차 등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나 중고자동차 중 구급차, 장갑차, 소방차 등의 응급차량이나 재난구호차량 등은 수입이 가능하다.

칠레는 미풍양속 저해물(음란서적 및 비디오 등), 독성 산업폐기물, 중고자동차, 중고오토바이 등은 수입이 금지된다. 중고자동차 중 구급차, 소방차, 사다리차, 청소차 등 공공목적용 중고차량은 수입이 가능하다.

온두라스는 10년 이상 된 중고 승용차, 13년 이상 된 중고 버스, 트럭, 그리고 우측 운전석 배치 차량, 재생 자동차, 폐기 차량 등의 수입은 금지된다. 단, 온두라스 소방본부, 적십자본부, 긴급재난본부 및 구청에 기증용으로

수입되는 중고 응급차량, 재난구호차량 등의 반입은 허용된다. 또한 무기, 탄약, 유독화학물질, 포르노물, 마약류 등의 수입은 제한된다.

인도는 제조일로부터 3년 이내의 중고 자동차만 수입가능하며, 우측핸들 및 km 표시 속도계 장착 등 「인도자동차법(Motor Vehicles Act, 1988)」에 따른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 엄격한 수입규제가 적용된다. 또한 모든 중고 차는 뭄바이 항을 통해서만 통관이 가능하다.

라오스는 최근 차량 급증에 따라 환경오염 유발과 교통체증이 심화되면서, 2011.10월 총리령으로 중고차량수입 잠정중지를 발표하였다. 이러한 조치의 배경으로는 “자동차 수입 및 판매관리규정” 시행강화, 환경오염 방지, 수입 중고차량 안전관리 강화를 들 수 있다. 수입금지 조치에도 중고차량 반입이 지속되자 2012년 들어서 2차례에 걸쳐 추가로 총리령을 발표하고 건설중장비를 제외한 일체 중고차량 수입금지 조치를 강화하여 향후 중고차량업종의 전망이 불확실하다.

베트남은 중고생활용품(전자제품, 냉장제품, 가전제품, 의료장비, 실내장식, 가정용품, IT 제품), 중고운반구 및 부분품(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트랙터, 앰블런스 등의 중고운반구의 부품, 생산된 지 5년 이상 된 차량, 개조된 차량 등), 폐기물 등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중국은 안전문제, 환경오염 등을 중시하여 1998.1월부터 중고 기계전자설비 수입이 전면 금지되었다. 다만, 상무부 전자상품수출입국(機電產品進出口司)이 인정한 경우는 제외하며, 외국계 기업의 경우 소재지 전자상품관리국을 통해 신청·허가 필요하다.

사우디아라비아는 2009.6월부터 환경보호,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5년 이상 된 중고차 수입을 금지하였다. 세부 내역을 보면 5년 이상 지난 승용차, 버스 및 경트럭(Light truck) 수입이 전면 금지되며, 대형트럭(Heavy truck)의 경우 10년 이상 중고차의 수입을 금지했다. 아울러 모든 차량은 침수, 화재, 충돌, 전복 등의 사고 이력이 있는 경우 수입이 금지되며, 택시 혹은 경찰차로 사용되었던 차량도 수입이 금지된다. 또한 2010.8월 사우디



교통부는 학생보호차원에서 제조한지 10년 이상된 노후 스쿨버스의 사용을 금지시켰다. 한편 사우디 정부는 2011.6월 110~127V의 전압만을 사용하는 제품과 기기에 대한 수입 및 자국내 제조를 2012.5.22일부로 금지한다고 발표하였는데, 이는 사우디 정부가 향후 25년에 걸쳐 자국에서 공급하는 전압을 국제기준인 230V, 400V로 통일해 나간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또한 사우디는 이스라엘과의 직접무역을 금지하고 있다.

그 외에 **남아프리카공화국, 리비아, 알제리, 이집트**도 중고품 및 중고자동차에 대한 수입이 금지되고 있다. **케냐**는 표준청의 품질규정에 따라 생산된 지 8년 이상 된 차량은 수입할 수 없으며, **예멘** 역시 중고타이어, 7년 이상 중고차, 15년 이상 중고기계, 중고디젤승용차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나이지리아는 중고자동차의 경우 수입규제 초기에 8년 이상 된 자동차 수입을 금지하였으나, 10년, 15년으로 완화하였다가 현재는 10년 연한으로 규정하고 있다.

상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계 각국은 국가안보, 위생 및 공중보건, 환경보전, 공중도덕, 지적재산권의 보호 등의 공통적인 목적 외에도 자국의 산업보호 또는 문화적, 종교적, 역사적인 이유로 수입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수출업자는 예시한 국가들의 경제적 여건뿐만 아니라, 역사와 문화여건도 살펴보아 수출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수입허가

현실적으로 수입금지보다는 그와 유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입허가 조치를 통한 규제가 더욱 빈번히 그리고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일부 농축산물, 화학 및 화학제품, 일부 의약품, 무기, 폭발물 및 화약, 귀금속 등의 제품 수입 시 일정한 형식과 절차, 검사를 요구하며 수입허가를 받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는 자국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취약 산업이나 전략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동기가 크게 작용한다.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농·축산물은 농무부로부터 1년 단위로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며, 축산물의 경우에는 수출이 승인된 국가로부터의 수입만 허용되고 농무부의 식품안전검사국(FSIS)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및 방사선 분출 전자제품 등의 수입 시에는 미국 식품의약국 관련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정한 요건을 반드시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관련법규에 어긋나는 물품은 해당법규에 맞도록 시정, 파기 또는 재수출되어야 한다. 동물에 사용하는 생물학적 약품(가축치료용 바이러스, 혈청, 독소 및 이와 유사한 것, 유기체, 보균생물 등)의 수입에 있어 그 특정한 물품은 농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특별한 상표부착 요건을 적용받는다.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철강재는 상무부의 수입허가 발급제 대상이다. 동 제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상무부로부터 수입면허를 받아야 하며, 이 절차는 온라인을 통하여 진행된다. 동 제도는 철강수입에 관한 정확한 정보들을 신속하게 수집함으로써 수입피해 조사 등에 활용하기 위해서도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LNG를 포함한 천연가스를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부의 수입 승인을 받아야 한다(천연가스법). 장기 및 단기로 신청이 구분되어 있으며, 수입자는 원산지, 가격, 공급업체, 물량 등의 정보를 최초 신청시 제출해야 하며, 이후 월별로 각종 정보들을 보고해야 한다.

캐나다의 경우, 수출입 허가법의 수입통제 리스트 품목은 수출국의 수출허가 또는 캐나다 외교통상부의 수입 허가를 받아야만 통관이 허용되는데, 주로 낙농제품 및 닭고기 등이 이에 해당된다.

EU는 홍합과 조갯살 등을 포함한 식품류에 대해 수입허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사전에 수입허가를 받은 수출업체와 수입업체만이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업체는 통관시 위생증명서를 비롯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수입허가 대상국과 기업은 위생요건을 고려하여 계속 변경되며 EU 관보에 공고된다.

크로아티아는 수입이 제한되는 품목은 없으며, 수입 허가가 필요한 품목은 무기/탄약, 군대 및 경찰 장비, 무전기, 마약·향신료, 골동품, 귀금속, 폐기



물, 원자력 기술, 화학무기 제조용 성분, 오존층에 해로운 물질 등이다.

튀니지는 전문 음향기기, 위성전화, 동식물, 사냥총, 측량 및 측정기기 등의 수입을 위해서는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며, 검사 신청 시 pro forma와 같은 무역계약서를 공인증개자를 통해 통상관광부에 전달해야 한다. 수입 허가 결정기간은 최대 30일이 소요되며 허가는 12개월간 유효하다. 단, 민감 품목은 2~10개월간 유효하다.

파나마에서는 수입허가가 필요 없다. 다만, 일부 농산물에 대해서는 수입허가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 과거에는 형식적으로 신청만 하면 자동적으로 발부되었으나, 최근에는 수입허가 절차가 상당히 까다로워지고 거절당하는 예가 많아지고 있다. 기타 품목의 경우 회사로 등록만 하면 어느 업체든 상품 수입을 할 수 있다. 일부 농산물에 대한 수입허가는 관세할당(Tariff Quotas)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파나마의 WTO 가입 시인 '97.7월 제정된 Law 23에 의거, 관세할당허가위원회(농업개발부장관, 재정경제부장관 및 통상산업부장관으로 구성)가 설립되었고, 동 위원회 산하 기술사무국이 구체적인 이행을 담당하고 있다. 관세할당이 적용되는 농산물은 돼지고기(20개 품목), 가금류(2개 품목), 우유 및 낙농품(25개 품목), 감자(1개 품목), 콩(1개 품목), 쌀(4개 품목), 옥수수(3개 품목), 토마토 부산물(3개 품목)이다. 파나마정부는 주로 자국민 보건, 위생 및 안전을 위해서 일부 품목에 대한 수입제한조치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 품목들의 수입을 위해서는 관련 당국으로부터 사전에 수입승인을 받아야 한다. 의료용 아편, 모르핀, 헤로인, 코카인 및 기타 마약의 알칼로이드의 경우 보건부의 사전 수입 승인이 필요하며, 전투용이 아닌 경기용, 수렵용 및 호신용 도검류, 총기, 탄약류와 가스총, 스프레이, 전자봉 등 호신장비류 등에는 법무부의 사전수입승인 필요하다. 다이어마이트, 화약, 니트로글리세린 및 기타 폭발성 물질은 파나마 안전기구인 Oficina de Seguridad의 사전수입승인이 필요하다.

포르투갈은 우리 기업이 포르투갈에 화장품과 의약품 등을 수출할 경우, 포르투갈 식품의약청(INFARMED)으로부터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는바, 관련 규정상 반드시 포르투갈내 전문가(technician)의 소명서를 첨부해야 한

다. 한편 한-EU FTA 시행에 따라 수출 건별로 6천유로 이상을 수출하는 기업은 관세당국으로부터 인증수출자로 지정을 받아야 특혜관세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과테말라의 경우 유기화학품은 농수산부와 보건부의 사전허가가 필요하며, 분유 및 일부 농산물에 대해서는 수입쿼터제를 운영하고 있다. 산동물류는 검역대상 품목이며 육류, 수산생물, 낙농품, 수목 및 채소, 과일류는 위생검사 대상품목이다. 육류, 생선, 낙농제품 등은 농업부의 동물검역 검사를 받아야 하며, 식물, 채소, 식물성제품, 과일, 커피, 차, 곡물 등은 농업부의 식물 검역 검사를 받아야 한다. 설탕 수입 시에는 농업부의 사전 수입허가가 필요하고, 의약품 수입 시에는 품목 성분 검사 등 위생 검사를 마친 후에 보건부의 의약품관리청에 품목을 등록해야 한다. 또한 유기 및 무기화학품은 보건부의 마취성 여부에 대한 검역이 필요하며, 방사성 원소와 관련한 폐기물 등은 에너지광업부의 수입허가를 받아야 한다. 플라스틱, 고무 및 관련제품, 건전지, 배터리 등의 찌꺼기와 폐기물 등은 사전 수입허가가 필요하다. 중고 신발 및 의류 수입 시에는 수출국 보건당국의 방역증명 서류를 갖춰야 한다. 건축자재의 경우는 자재의 종류에 따라 수입허가 조건이 다르다.

브라질은 대부분의 상품이 자동수입허가 규정에 해당하지만 농산품, 의료 및 군수물자 등 일부 품목은 수입 시 사전에 해당 기관의 수입허가서를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무기류나 방사선 장비의 수입은 국방부, 의약품 및 화장품, 식품 등은 보건부, 일부 음료수는 농업부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수입 승인 대상 품목에 포함될 수 있다. 특히 보건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ANVISA)의 의약품 수입허가는 시간이 많이 걸려서, 새로운 제품이 등록을 마치는데 보통 6개월 이상이 걸린다. 특히 ANVISA 등록을 위해서는 브라질에 법인이 있어야 하고, 없는 경우에는 브라질 대행업체를 통해 등록해야 하는데 이 경우 브라질 내의 판권은 동 대행업체가 가지게 된다. ANVISA 등록은 까다롭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우리 의료기기업체 및 의약품 수출업체에 사실상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한다. 수입 자동허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품목은 수입쿼터 대상 품목, 마나우스 자유무역지대



생산제품 및 FTA 체결지역 상품으로 관세혜택을 받는 품목, 국가과학기술 위원회의 사전허가가 요구되는 품목, 국내에서 제조되지 않는다는 사실의 입증이 요구되는 품목(중고기계 및 장비), 모든 중고 상품, 관세감면 혜택 대상 품목, UN이 규제하는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 해당 관청에서 사전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 제품 등이다.

베네수엘라는 대부분의 품목이 수입 시 수입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으나, 농산물, 의약품, 무기류 등의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정부 관련부처의 사전 수입허가 또는 관련증명서(위생증명서, 원산지 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세르비아는 공공보호, 국민 및 동식물 보호, 환경 및 천연자원 보호, 그리고 금·은 거래 시 특별 규정 적용 등의 이유로 일부 제약물질, 귀금속, 무기 및 이중용도 품목 등에 대해 수입허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수입허가제 실시 품목은 관세 대상 품목 10,270개 중에서 2%에 해당하는 212개이다. 수입허가 여부는 신청일로부터 늦어도 15일 이내에 결정되며, 동 허가증은 발급일로부터 6개월간 유효하다.

아르헨티나, 칠레, 코스타리카, 도미니카, 볼리비아 역시 의약품 및 보건제품, 농·수산물, 식품, 화장품 및 무기류, 환경 공해 관련 품목 등을 수입할 경우 관련부처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아르헨티나는 2012.1.10일 조세청(AFIP) 결의 3252를 통해 신규 사전수입 신고제도를 도입(2012.2.1일부로 발효)함으로써, 기존의 수입규제제도를 한층 강화하였는바, 동 제도 하에서 수입업자는 아르헨티나에 수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 △수입주문을 수출업자에게 송부하기 이전에 수입품의 최종 목적을 기술하는 법적서약문서(Declaracion Jurada Anticipada de Importacion)를 조세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조세청은 동 서약서를 관계기관(경제부 대외무역차관실)에 회람, 의견을 수렴하여 수입허가를 결정하게 된다. 의약품 및 보건제품 수입 시는 수입업자 상품등록 및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의약품제품 수입 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나 승인취득에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 선진국 제품의 경우 1년 미만이지만, 한국 등 여타국가 제품은 최소 3년이 소요된다.

칠레는 무기, 탄약, 화약류, 알코올, 동식물, 비료, 살충제, 의약품, 화장품, 식품, 방사성 물질 등의 수입을 위해서는 관련기관의 사전허가 또는 인증절차가 필요하다.

코스타리카는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관련부처의 사전 수입 허가를 받도록 수입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는 주로 농산물, 의약품, 식품, 환경공해 관련품목 등으로 보건부, 농림수산부, 사회개발부 등의 사전허가 또는 등록을 요한다.

볼리비아는 곡물 또는 식료품, 동식물을 수입할 경우, 국립농식품 및 축산원 (SENASAG)에 인증서를 제출해야 하고, 햄, 소시지, 치즈 같은 변질되기 쉬운 제품의 경우는 농산물 및 가축위생, 무해식품 수입허가가 필요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농산물 위생관리 부분에서 볼리비아 보건인증 전문가들이 볼리비아로 수출하려는 식품의 제조공정을 검사하기 위한 수출국 탐방을 요구하고 있다. 수입을 위한 사전허가의 발급이 필요한 특정 품목으로는 총기와 탄약과 같은 무기류, 화학물질, 항공기, 헬리콥터, 진정제류의 마약 성분이 들어간 약품, 향정신제(정신안정제, 환각제 등), 일반적인 알칼로이드 품목과 그 파생 제약, 차량용 연료 및 윤활유 등이 대표적인 것들이다. 또한 라디오, 텔레비전과 같은 전송기기는 수입 시 통신국(Telecommunications Office)의 승인이 필요하며, 상표가 있는 모든 의약품과 OTC (Over-The-Counter, 처방전이 필요 없이 조제 가능한 의약품) 의약품은 보건체육부(Ministerio de Salud y Deporte)에 등록해야 되며, 제약팀 (Unidad de Medicamentos y Laboratorios)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제품 검사에 약 6~12개월 정도가 소요되고, 중요 제품 검사에 1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한편 **중국, 멕시코, 동남아시아 국가** 등 상당수의 개발도상국들은 자국 산업의 보호를 위해 농수산물, 식품, 의약품뿐 아니라 기초 금속 및 일부 원자재, 수송기기, 기계류, 전기기기, 석유제품, 섬유류, 화학제품 및 일반적인 제조업제품에 이르기까지 넓은 범위의 품목들에 대해 수입허가제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수입허가품목들은 대부분 특정 수입업자에 한하여 수입이 허가되거나 무역부 또는 주무부처의 특별 관리에 의해 규제되고 있다.



중국은 국내 산업보호 및 외화지출을 억제하기 위해 수입허가증 관리 및 쿼터제도, 수입입찰제도(Import Tender), 수입상품 검사제도 등 각종 수입 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수입허가증 관리제도의 일환으로 자국 산업의 보호와 무분별한 수입으로 인한 외화지출을 억제하고 대외교역의 거시적 관리를 통해 무역수지를 방어하기 위하여 「화물진구허가증관리판법(貨物進口許可證管理辦法)」을 발표하였으며, 1993년 이후 매년 수입허가 대상 품목을 축소하고 있다. 수입허가증 발급기관은 수입허가증 대상품목의 수입규제 강도에 따라 상무부, 각 성의 대외경제무역청, 각 항만에 설치된 상무부 특파원 판사처에서 구분해서 발급하고 있다. 수입허가증 신청 가능업체는 국가가 승인한 수출입 경영권을 가진 대외무역공사, 공업무역공사, 국제경제기술합작공사 및 그 소유의 생산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이다. 중국은 합리적인 외환관리 및 주요상품 및 주요 원자재 등의 수입관리를 위해 특정상품 수입 자동등록 관리제도를 <화물자동수입허가관리방법(貨物自動進口許可管理辦法)>(2005.1.1일 시행)에 근거하여 시행 중에 있다. 2007년 <자동수입허가화물관리목록>은 당초 1,098개였으나, 중국 상무부는 2007.4.1일부터 플라스틱원료(HS 3901100001 등 13개), 펌프, 버너, 인조섬유기계, 세척기, 표백기, 염색기, VCD/DVD, 의료용 기기(8413110000 등 140개), 강재(스테인레스 제외), 강괴(7208100000 등 176개) 등 329개 품목의 자동수입허가증 제도를 폐지하였으며, 이후 품목이 재조정되어 2012년 현재 789개 품목이 적용되고 있다. 이는 과도한 무역수지 흑자를 줄이고, 무역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그러나 자동수입허가증 관리제도는 중국이 주요 수입상품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정부의 심사허가 사항이 아닌 일종의 신고제도로써 해당기업이 허가증 발급을 신청하면 업무일 기준 10일 이내에 발급된다. 따라서 자동수입허가증 관리대상 품목의 축소가 수입 간소화 정책의 하나임에는 틀림없지만 이를 통해 수입이 늘어나는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중국은 자동수입허가 기계전기제품 리스트를 매년 발표하고 있으며, 세번에 따라 상무부 또는 각 지방, 부분별 기전산품 수출입 판공실이 자동수입허가증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페플라스

틱 수입은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원료로 사용가능한 페플라스틱 중간 원료의 경우에는 규정을 적용하는 조건하에서 HS 391510, 391520, 391530, 391590 네 가지 품목의 페플라스틱의 수입은 허가하고 있다. 페플라스틱을 수입, 이용하고자 하는 단위는 생산규모를 엄격히 제한하고 점차 폐기물에 대한 의존도를 축소해 나가도록 하고 있다. 모든 수입자는 국가환경보호관리국의 승인을 받아야 수입할 수 있으며, “폐기물수입신청서”, “원료용 폐기물수입 환경보고서” 및 수입량을 유관부문에 제출해야 한다. 수입되는 폐기물은 선적전 검사, 도착 후 검사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중국환경보호제한 표준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멕시코는 「자동차산업진흥 및 현대화 법령(DECRETO PARA EL FOMENTO Y MODERNIZACION DE LA INDUSTRIA AUTOMOTRIZ 1989)」에 의거, 멕시코에 진출하여 자동차를 현지에서 조립생산하고 있는 기업에게만 완성차의 수입을 허용해 왔다. 1994.1월에 발효된 NAFTA 협정상 ‘자동차부문의 교역 및 투자’ 규정에서 2003년말까지 동 특별법을 유지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2004.1.1일 동 수입제한을 폐지하였다. 그러나 멕시코 정부는 비 FTA 체결국산에 대해 40%라는 비현실적인 높은 수입관세를 적용해 사실상 멕시코에 대한 수출확대가 제한적인 상황이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위생, 안전, 환경보호 및 저작권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수입허가제도를 실행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수입허가제도는 필수 원자재의 적절한 공급물량 확보 및 자국 내 유치/전략산업 보호차원에서 시행 중이다. 쌀, 설탕, 자동차, 철강 등은 해당 기관으로부터 수입허가(Approved Permit)를 받아야 한다. 종종 수입허가가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는데, 예컨대 일부 철강품목의 경우 말레이시아 내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후에도 건별로 통상산업부의 수입허가가 필요한 바, 수입허가의 지연이나 불허시 영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보건, 위생, 지적재산권 및 자국내 산업보호를 위한 수입허가 품목, 국내 제조업체를 일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수입허가 품목, 특정 기준을 충족시킨 이후에만 수입 가능한 품목 등에 대해서는 수입



허가를 필요로 한다.

인도네시아는 최근 몇 년간 중·아세안 FTA, 한·아세안 FTA, 인나·일본 EPA 등 다수의 FTA로 인해 시장이 빠르게 개방되는 상황 속에서 국제경기 침체를 맞아 내수산업 보호를 위해 비관세장벽을 점점 높여가고 있다. 인도네시아 무역부에서 관리하는 장난감, 전자, 신발, 의류 및 직물관련 제품, 옥수수, 쌀·벼, 대두류, 사탕수수류 등의 품목을 수입하는 업체는 반드시 별도의 수입허가(NPIK)를 취득해야 한다. 수입허가(NPIK)제도 이외에도 화학제품, 중고기계, 섬유, 세라믹제품, 통신제품, 기타 유제품을 수입할 때 ‘선적전 검사(SGS 검사)’나 ‘형식 승인’ 등의 제한을 통해 수입/통관을 지연시키는 등의 여러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008.12월 발표된 무역부장관령(No.56/M-DAG/PER/12/2008)을 통해 2009년부터 전자제품, 의류, 아동용 완구, 신발 및 샌들, 식음료 등 5대 품목군에 대해, 무역부에서 기존 일반 수입허가 이외에 추가로 등록수입업자(IT: Listed/Registered Importers) 등록을 한 업체에 대해서만 수입을 허용하고, 5대 지정항 및 국제공항으로만 수입하되 인가 받은 검사기관의 선적전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2007.7.1일부터 인도네시아 국가품질표준제도인 SNI(Standard National Indonesia) 제도를 강화해 34개 품목군에 대해서는 사전에 SNI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통관을 제한해 오고 있다. 2008년 9개 품목을 추가하고 2009년에 다시 2개 철강재 품목군을 추가해 총 45개 품목에 대해 SNI인증 강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한편 핸드폰, 핸드헬드/테이블 PC의 수입업자는 무역부로부터 수입 라이선스 사전 취득 후, 산업부에 등록허가를 받아야 수입이 가능하다. 무역부는 2013.1.1일부터 2015.12.31일까지 총 97개 품목에 대한 수입라이선스 발급을 강화하였다. 해당 품목은 식품, 화장품, 신발, 전자제품, 장난감, 과자류, 건강보조식품 등 총 97개 품목이다.

필리핀은 쌀, 옥수수, 석유제품, 칼라복사기, 살충제 및 농약, 중고자동차 부품, 군함, 중고컴퓨터 및 주변기기, 가금류, 돼지 및 돼지고기, 어류 등은 품목별로 해당 정부기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며, 일부 농수산물 품목은 국내 농업보호차원에서 수입수량을 제한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축산물, 해산물, 과일, 영화, 음반, 비디오, 출판물, 제약품 등 일부 품목은 관계당국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만 수입이 가능하다.

브루나이는 동식물, 무기류, 폭발물, 출판물, 쌀, 설탕, 소금, 중고자동차(오토바이, 미니버스 등 포함), 라디오 무선전화기, 통화 및 통신장비, 고미술품, 문화재 등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의 수출입 인가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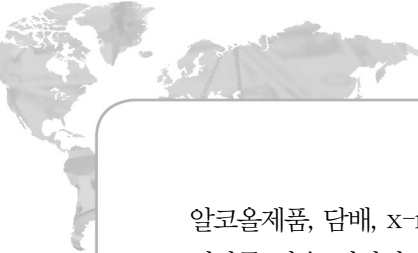
리오스는 대부분의 수입품목에 대해 수입 승인을 받아야 하는 허가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사업등록 허가증 관련 서류가 준비되어야 한다. 수입업자의 경우 사업 허가증에 명시된 품목만 수입할 수 있고 매년 산업통상부에 수입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차량, 석유, 사치품을 수입할 경우 반드시 산업통상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목재 및 관련 제품은 정부 당국의 승인이 있을 시 선택적으로 수입할 수 있고, 농산물의 경우 농업·임업부 보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스리랑카의 국가안보, 건강 및 환경보호 등을 위한 수입허가제는 ‘특별허가제(Special Licensing Scheme)’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데 곡물, 화학제품, 석유 및 자동차 등과 관련된 상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2004년 들어 중고 제품 수입의 사용연수 제한을 조정하여 중고 건설기계류는 10년에서 7년으로 축소하고, 중고 자동차는 3년에서 3년 6개월로 연장하였다.

폴란드는 우유 및 유제품, 당류 및 당밀, 육류, 바나나, 포도주 및 포도주스 등의 농산물과 중국산 신발 등을 수입허가 품목으로 선정하고 있다. 또한 EU와 동일하게 철강제품 및 섬유·의류 제품에 대해 수입쿼터를 제한하고 있으며 다이아몬드, 신발, 철강제품은 수입 감시(Import Monitoring) 대상 품목이다.

포르투갈의 경우 우리나라 기업이 화장품과 의약품 등을 수출할 경우, 포르투갈 식품의약청(INFARMED)으로부터 수입허가를 받아야 한다. 관련 규정상 반드시 포르투갈내 전문가(technician)의 소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터키는 농산물, 애프터서비스가 필요한 공산물, 정보통신장비, 화학물, 의약품, 석탄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관련 정부부처의 검사가 필요하다. 한편



알코올제품, 담배, x-ray film, 보석류 등은 정부기관이나 정부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은 기관만이 수입이 가능하며, 필요시 ‘검사위원회’가 수량제한 등의 잠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체코는 설탕, 석탄, 폭발물, 유류, 천연가스, 화염관련 제품, 스포츠용 총기류, 총탄류, 군장비 등의 품목을 수입할 경우, 수입업자는 산업통상부의 수입면허를 받아야 한다. 기타 수입 신용장 개설시 수입업체로 하여금 거래은행에 인보이스 금액의 11% 이상을 사전 예치토록 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조치가 요구되지 않는다.

네덜란드의 수입 관리는 국가별 관리와 품목별 관리로 구분된다. EU 회원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자유화돼 있어 수입허가가 필요 없다. 그러나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의약품, 동물 및 동물성 제품, 식물, 꽃, 과일 및 채소, 사료, 방사성 및 원자력 물질, 환경유해물질, 폐기물(Waste) 등의 제품들은 수입허가를 취득해야 하거나 수입이 제한되어 있다.

우크라이나의 경우 의료용품, 화장품 등 일부 품목에 대해 사전에 수입 라이선스를 받아야 하며, 곡물, 철강, 화학제품 등 일부 품목은 사전에 수출 라이선스를 받아야 한다. 수입(수출) 라이선스의 발급기관은 우크라이나정부(Cabinet of Ministers) 또는 이의 위임을 받은 기관이다. 매년 12월 말에 정부는 수입, 수출 라이선스 및 쿼터를 발표하며, 2009년 수입 라이선스 대상 품목은 정부법령 1123호(2008.12.27)로 발표하였다.

아랍에미리트는 식품 및 의약품에 대해서는 국민보건의 관점에서 엄격한 수입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모든 식품 및 의약품은 보건성 및 각 시청의 엄격한 검사(품질, 내용물, 포장 등)를 받아야 하며, 포장에는 반드시 제조연월일, 사용 유효기간, 내용물 설명서 등을 아랍어로 표기해야 한다. 식품 및 의약품 관련 규정 위반시 강한 제재를 받게 되므로 유념하여야 한다. 의약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회사는 생산국 및 제3국에서 취득한 의약품 등록증명서를 첨부하여 사전에 보건성의 의약품 수출국에 등록해야 한다. 모든 의약품은 반드시 보건성의 사전 품질검사를 받아야 하며, 의약품도 식품과 같이 포장에 반드시 제조연월일, 유효기간, 성분, 사용처 등을 아랍어로 표

기하여야 한다. 특히, 돼지고기 함유 여부 등 성분 검사가 까다롭고 제조업체에서 영문으로 명기된 성분 분석표를 첨부시켜 샘플테스트를 통과해야만 수입이 가능하다. 도축 식품, 할랄(Halal) 음식 수입에 대해서는 2007년부터 특별부과료가 있고 매년 갱신료도 있다. 환경보호, 국민보건 및 이슬람 교리와 관련하여 약간의 규제가 있다.

이란은 포지티브 시스템에 의해 지정된 수입금지 품목(무기류, 마약, 술, 도색출판물 등) 이외의 대부분의 품목이 조건부 승인 품목으로 상무부 수입신청 또는 광공업부 등 관계부처의 수입허가를 얻어야 수입이 가능하다. 관계부처가 수입허가를 결정할 때는 동종품목 국내 제조업체의 생산여부 및 생산량을 고려하게 된다.

오만은 의약품의 경우, 보건부에 사전 등록된 회사와 제품에 한해 수입통관이 허용된다. 사전 등록이 안된 제품은 비록 샘플일지라도 통관이 불가능하며, 보건부에 사전 등록을 위해서는 통상 6개월에서 1년 6개월의 기간이 소요된다.

이스라엘은 보건, 공중도덕, 환경, 안보와 관련된 17개 제품군의 수입이 금지되어 있으며 식용육, 약품류, 목재, 다이아몬드, 스크랩(scrap), 자동차, 비행기 등은 수입허가 취득이 의무화되어 있다. 농산물의 경우, WTO, FTA 또는 기타 조약에 따라 쿼터 없이 무관세를 약속한 품목을 제외하고는 복잡한 TRQ(Tariff-Rate Quota: 관세율할당)를 유지하고 있다. 수입허가는 품목에 따라 경제부, 농업부, 보건부, 환경부 등에서 발급된다. 일반적으로 수입허가 발급까지 약 10일이 소요된다.

가나는 특정물품의 수입에 대해 수량 제한(쿼터)을 두고 있지 않으나, 금화(gold coin), 비가공 다이아몬드, 통신장비, 영화 필름, 도박기계, 동·식물 등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의 허가, 면허 또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

콩고는 국경무역을 제외하고 모든 상품의 수입에는 허가가 필요하다. 자동수입허가는 통계목적만을 위해 사용되며, 비자동 수입허가는 관세규정에 따라 수입제한을 관리하기 위해 사용된다. 허가를 취득하는데 보증금이나 수



수료가 필요 없으며, 물품 수입 또는 특정국가로부터 수입에 관한 물량 한도가 없을 때에는 수입업자의 편의에 따라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인 또는 법인은 자동 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나 거부될 경우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고, 쿼터, 비자동적허가 신청절차, 예외 및 면제 등에 관한 정보는 관보에 게재된다.

르완다의 수입규제 품목은 통관 시 특정기준(certain condition)을 반드시 충족시켜야만 수입될 수 있다. 이를 위해 관련 부처의 수입허가가 필요하다. 주요 품목으로는 산(aic) 처리된 뼈, 가공이 되지 않은 동물의 뼈, 뼈, 이빨, 상아, 발톱, 부리, 산호류, 해면, 암석류, 금속류, 토종이 아닌 어종 혹은 어종의 알, 핵 원료, 몬트리올 의정서 및 비엔나 협정에 의거한 오존 고갈 물질, 화학류, 군함, 군수품, 역사적인 유물, 유전자조작 물품,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교역에 관한 국제조약 및 그 개정에 규제된 멸종위기종 등이 있다. 르완다는 수입허가절차를 적용하지 않고 있으며 수입허가절차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Import Licensing Procedures)과 관련된 법률이나 규정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특정 물품(certain products)에 대한 수입에는 관련 부서 및 기관의 허가가 필요하다. 약품 및 화학 물질 수입을 위해서는 르완다 환경 관리청의 허가가 필요하며, 가축 수입을 위해서는 르완다 농업부의 허가가 요구된다.

수입수량제한, 관세할당제

수입수량제한(Import Quota)은 WTO협정과 수출입국간 양자협상을 통하여 대부분 이미 폐지되었거나 점차 폐지될 예정이다. 선진국들은 주로 단순 노동 집약적인 소비재에 대해 자국의 산업보호를 위해 수량제한을 하고 있다. 수량제한의 대표적인 예였던 섬유류 수입 쿼터제가 2005년도에 폐지됨에 따라 중국으로부터의 섬유류 수입 급증에 따른 국내 산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미국, EU, 브라질, 남아공 등의 국가들은 각자 중국과 양자 협정을 맺어 일부 섬유 품목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수입쿼터를 적용하거나 규제하

기도 하였다.

미국의 경우 현행 미국법상 수입품에 대한 수량제한은 국가 안보에 위해가 되는 경우나 수입 급증에 따른 피해구제를 위한 긴급수입제한(Safeguard)의 일환으로 이루어진다. 미국 수량제한의 전형적인 예였던 섬유쿼터는 WTO 섬유 및 의류에 관한 협정에 의해 2005.1.1일부터 WTO 회원국에 대해서는 폐지되었다. 그러나 중국으로부터의 섬유류 급증에 따라 2005년에 주요 품목에 대한 대중국 섬유류 특별세이프가드가 한시적으로 발효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후 근본적인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해 2005.11월 미·중 섬유쿼터 협정을 체결하고 2006~2008년 동안 중국산 섬유류 수출품 34개 품목에 대한 수입쿼터를 운영한 바 있다.

캐나다는 섬유 및 의류제품에 대해서 WTO의 다자간 섬유협정에 의한 양자간 섬유쿼터 및 WTO 非회원국과의 양자간 섬유쿼터를 운용하여 왔으나, 다자간 섬유협정이 WTO로 이행됨에 따라 캐나다는 1995.1월 제1단계 조치로 1990년 총 수입량 기준으로 16.4%를, 1998.1월 제2단계 조치로 18.6%를 쿼터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2002.1월에는 제3단계 조치로 18%를 추가 개방하고, 2005.1월부터 쿼터제를 폐지하여 전면 개방하였다.

EU는 EU회원국이 유지해오던 수량제한을 철폐 또는 공동체 차원의 쿼터로 전용하고 동 공동체 차원의 규제도 WTO 협정(자동차, 섬유 등) 및 양자협상의 결과 대부분 폐지하였다. 섬유에 대한 수량제한과 관련하여, WTO의 「섬유 및 의류에 관한 협정(ATC)」에 따라 기존 양자협정에 의해 유지되어 온 모든 수량규제를 철폐함으로써 2005년부터 섬유무역의 자유화가 시행되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중국에 대해서는 EU-중국 간 별도 협의를 통해 2006년과 2007년 10개 카테고리에 대해 수입쿼터를 적용했으며, 2008년부터는 이 중 7개 카테고리(T-셔츠, 폴오버, 바지, 블라우스, 베드린넨, 드레스, 브래지어, 아마사(flax/ramie yarn))에 대해 수입감시제도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동 수입감시제도는 2009년에 폐지되었다.

브라질의 경우 자동차산업에 대한 한시적인 할당관세제도 외에 한국, 중국, 대만 등 아시아산 수입 직물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쿼터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최근 2~3년간 중국산 섬유제품이 대량 수입되자, 2006.2월 중국 정부는 브라질에 수입되는 중국산 섬유제품의 60%에 해당하는 70여 가지 품목에 대해 향후 3년간 자율적으로 규제하기로 브라질 정부와 합의한 바 있다.

스위스는 1995년 UR협정 이행을 위해 종전의 쿼터제를 관세할당제(Tariff Quota)로 전환하였다. 농산품 중 28개 품목에 대해 적용되는 관세할당제는 야채 및 과일 등 대부분의 경우 계절별로 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할당방식은 국산품 구입조건 할당, 경매, 선착순 등 다양한 방식이 사용되고 있었으나 점차 선착순 원칙으로 일원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터키 역시 2005.1월부터 섬유에 대한 쿼터제도가 전 세계적으로 폐지됨에 따라 중국산 제품 수입의 급증으로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을 것을 우려하여, 2004.5월 「중국산 제품의 수입 감시 및 보호조치 시행령」을 제정하였다.

코스타리카는 제조업 취약 문제로 인해 대부분의 공산품을 수입하고 있어, 사실상 수입에 대한 특별한 규제가 없으며, 특정 품목에 대한 수입쿼터제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다만 코스타리카와 양자·다자간 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 상품에 대해서는 수입관세와 긴급재정세가 면제되고 있는데, 코스타리카의 생산품목 보호를 위해 이들 수입국에 대해서는 간단한 수입쿼터제를 마련하고 있다. 2013년 수입쿼터제 대상 국가 및 쿼터량을 살펴보면, 캐나다의 경우, 밀/호밀가루 15,173.3 TM, 콩 7,516.6 TM, 해바라기/카놀라/겨자/옥수수유 1,556.6 TM, 설탕 4,000 TM이며, 파나마의 경우, 돼지고기 100 TM, 냉동멸균우유 633,817리터, 팜류 150TM, 토마토소스 452.5 TM, 미국의 경우, 감자 12,554 TM, 양파 10,785 TM, 돼지고기 7,292 TM, 분유 3,519 TM, 버터 13,323 TM, 치즈 1,639 TM, 아이스크림 13,852 TM, 기타유제품 15,243 TM, 도미니카공화국의 경우는 닭고기 665 TM, 가루우유 2,200 TM이다.

과테말라도 쌀, 사과, 옥수수, 밀, 닭고기 등의 일부 농축산물에 대해서는 쿼터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쿼터 범위 내에서는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나 쿼터를 상회하는 경우에는 고관세가 적용된다.

에콰도르는 휴대전화기 수입쿼터를 도입하여, 2012년 휴대전화 수입쿼터로 33개 수입업체에 대해 195만대, 1억 4300만 달러를 배정하였다. 각 기업은 배정받은 쿼터 중 하나의 쿼터가 차면 추가 수입을 불가하였고, 해외여행객의 휴대전화 허가개수를 개인당 1개로 제한하였다. 또한 자동차 수입쿼터를 축소하였는데, 2012년 총 수입쿼터로 38개 수입업체에 대해 4만 8179대, 5억 2834만 달러 쿼터를 배정, 각 기업은 배정받은 쿼터 중 하나로 쿼터가 차면 추가 수입을 불가하였다.

엘살바도르는 일부 농산물(쌀, 돼지고기 등)에 대해서는 할당관세(TRQ)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쿼터 범위 내에서는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며, 쿼터량을 상회하는 경우는 고율관세(최대 40%)가 적용된다.

베네수엘라의 경공업무역부는 2008.1월부터 국내 자동차 조립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외국산 차량에 대해 115,500대만 수입을 허가하는 한편, 3,000cc 이상 대형 고급차량 수입을 불허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일종의 수입 쿼터제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2008년 말 금융위기 여파로 유가하락이 심화되자, 국내 조립판매자동차 회사에 시행하던 완성차 수입쿼터를 전면 금지시켜 완성차 수입은 정부만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벨라루스는 생선류를 포함한 해산물, 가공해산물, 알콜제품, 담배, 설탕제조 원료 등에 대해 수입쿼터를 적용하고 있다.

일본은 총 17개 수산물 수입에 대해 수입물량을 직접 규율하는 IQ(Import Quota) 제도를 두고 강력한 수입규제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IQ제도는 일본 내 어업자와 가공업자의 시장독점권을 보장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수입물량이 제한된 17개 품목은 김, 방어, 고등어 전갱이, 꽂치, 정어리, 대구, 가리비, 패주, 건멸치, 오징어, 청어, 명태, 파래, 다시마, 대구알, 다시마조제품 등이다. 일본의 IQ 제도는 전체 수입 물량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수요자할당, 상사할당, 선착순할당, 어업자할당, 해외수산개발할당 등 세부 카테고리별로 물량을 제한함으로써 수산물의 대일 수출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IQ 제도는 WTO 체제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미국, EU, 한국 등이 일본의 IQ 제도 철폐를 요구하였으나, 일본은 제도 자체



는 유지하되, IQ 물량을 늘려주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중국은 WTO가입을 계기로 2005.1월 단계적으로 400여개의 수입제품 관련 비관세조치(쿼터, 허가증, 기전제품 특정입찰)를 폐지하였으며, 이중 일부 제품의 쿼터 및 허가증이 이미 폐지되었다. 중국은 이미 농산물 수입관리제도에 있어 소맥, 양식, 면화 등 대부분의 농산품에 대하여 과거 쿼터관리제도에서 관세쿼터관리제도로 변경, 실시하고 있다. 2010년 밀 등 8개류 45개 세목의 품목에 대한 관세쿼터관리제도를 실시하고, 쿼터외로 수입하는 일정수량의 변화에 대해서 할준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2011년의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중국은 쿼터 및 허가증 등 직접적인 관리제도 조치를 큰 폭으로 줄일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만은 국내 산업 보호차원에서 농산품과 소형차에 대해 수입할당제를 적용하고 있다. 농산품의 경우, 식용쌀 등 총 16종 품목에 대해 할당량을 제한하고 있는데, 바나나와 녹용을 제외한 나머지 14종 품목의 할당은 매년 규정 할당기간마다 입찰하는 방식으로 최저 및 최고 할당량을 규정하고 있다. 소형 자동차(9인승 이하 봉고차 및 총중량 3.5톤 이하의 트럭 포함)의 수입 할당제는 2010년까지 실시되었으며, 2011년부터 동일 관세 17.5%로 수입량 0제한이 완전히 해제되었다.

베트남은 2003년부터 특정품목에 대한 수입쿼터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관리대상품목은 무역부(MOT), 기획투자부(MPI) 등 관계부처와의 합의를 거쳐 정부의 최종 승인에 의해 결정되며, 수시로 변경될 수 있다. 수입쿼터는 주로 무역부가 통제하면서 국영기업을 중심으로 쿼터를 배정하고 이들 품목에 대한 수입을 엄격히 관리한다. 2010년 수입쿼터 관리대상품목으로 기타 가공류 알(HS 4070099), 미가공 담배, 담배부산물(HS 2401), 설탕(HS 1701), 소금(HS 2501) 등이 지정되었다.

태국은 일부 농산물과 같은 특정품목에 대한 자국 산업의 보호·육성의 목적으로 수입쿼터제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우유, 감자, 설탕, 마늘, 코코넛 등 23개 품목에 대해 수입쿼터를 실시하고 있는데, 특수한 경제상황 및 여건에 따라 특별히 국가에서 통제할 필요가 있는 품목들에 대해 수입량, 수입대상

국가, 수입업체·기관, 국내수요량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고 있다. 쿼터물량을 초과할 경우는 30~250%의 고관세를 부과한다.

말레이시아는 자국내 생산업체 보호 및 적정가격 유지를 위해 일부 설탕 및 밀가루에 대해 수량제한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쌀 수입시에는 국립쌀위원회(National Paddy and Rice Board)가 관여하여 자국내 쌀 가격을 고수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필리핀은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농업 및 축산업에 대해서는 고율관세, 수입쿼터 부과 등 강력한 보호주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쌀, 밀, 통조림 생선, 정어리, 오징어, 고등어, 청어, 연어, 통조림 우유, 소고기 통조림, 콘드비프, 냉동소고기, 교과서, 종이, 펄프 등의 제품은 공공법 650조(Republic Act No. 650)에 따라 수입쿼터가 지정되어 있어, 정부로부터 수입할당을 받은 특정업체만 수입면허를 받을 수 있다.

기타 수입규제

미국, EU 등 선진국들은 물론 개도국들도 수입금지, 수입허가제나 수량제한 이외에 다양한 형태의 수입 규제조치를 활용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시책 강화 차원의 일환으로 「수입제품의 안전에 대한 시행계획(Action Plan for Import Safety)」을 수립하고 2007.7.18일 관계부처로 구성된 수입제품안전작업반(Interagency Working Group on Import Safety)을 구성하였다. 동 계획은 수입식품의 증가로 인한 안전 문제, 편의성을 추구하는 소비자의 기호 및 형태의 변화는 물론 인구학적 변화까지 반영한 것으로, 특히 미국에서 수입하는 중국산 식품 등에 대한 안전 및 리콜 문제 등 아시아지역의 식품 안전성 문제가 시발점이 되었다. 동 계획은 사전예방, 사후 개입과 대응 등에 관한 내용을 골자로, ①식품의 생산에서 소비까지의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식품위해요인에 대한 예방 ②위험에 기초한 조사와 시험을 통한 개입 ③위해요인 또는 위해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또한 (i)고위험



식품(High Risk Foods)에 대한 추가적인 예방적 통제권(Additional Preventive Controls) 부여, (ii)고위험 식품(Designated High-risk Products) 수입 시 전자수입증명(Electronic Import Certificates) 요구, (iii)기 실시중인 식품공장등록제도 2년마다 갱신, (iv)우수제조수입품질관리기준(cGMPs)의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생산시설에 대한 재조사 비용 부과, (v)기업의 자발적 리콜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FDA의 강제 리콜 실시권 부여 등 각국의 식품 수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 계획실행과정에서 수입식품에 대한 보이지 않는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2007~2008년 중국산 식품에서의 공업용 제재 발견과 2008년 미국 내 살모넬라균 오염 땅콩버터 사건의 영향으로 미국내 식품안전에 대한 논란이 있어, 2010.12월 미 의회에서는 「식품안전현대화법안」이 통과되었으며, 2011.1월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되었다. 동 법은 미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려는 회사의 식품시설 매년 등록을 의무화하고 현지조사를 강화하여, 미 식약청(FDA) 수입검사를 대상으로 한 식품수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미얀마의 수입절차는 수입자가 외환계좌에 수입대금 100%를 선 예치시킨 상태에서, 외환잔고 증명서를 발급받아 정부에 수입허가(import license, I/L)를 신청하면, 정부는 이를 건별로 심사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승인이 떨어져야 신용장을 개설하여 수입이 가능한 시스템이다. 이러한 절차로 인해 수입신청에서 허가까지 시간이 지체되고 자금이 은행에 한동안 예치되어야 하므로 수입확대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미얀마의 독특한 수입규제인 Export Earning은 수출로 획득한 외화를 보유한 업체만이 동 수출실적의 범위 내에서 수입이 가능한 제도로, 수출실적이 없는 업체는 원칙적으로 수입을 할 수 없도록 제도화되어 있다. 따라서 전문 수입상의 경우, 자체 수출실적이 없으므로 수출상으로부터 Export Earning을 구입해서 수입활동을 하게 되는데, 통상 15%정도의 프리미엄을 주고 Export Earning을 시장에서 구입하게 된다. 미얀마 정부가 동 제도를 고수하는 이유는 무역수지를 개선하여 외환보유액(2009년 말 36억 달러)을 늘리는데 그 목적이 있다.

베네수엘라는 2003.2월 외환관리위원회(CADIVI)를 창설하여 모든 수입을 통제하면서 위원회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했을 경우에만 필요한 외환을 구입하여 물품을 수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CADIVI 제도에 따라 수입업자는 수출업자에게 선금 지급이 불가능하고, 수입대금은 CADIVI 신청절차 종료 시 수출업자 계좌로 자동 송금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2006.12월부터 수입자는 수입 전에 자동차, 자동차 부품, 주류, 화장품, 종이류 등 3,500여 개 품목에 대해 ‘국내 미생산 확인서’ 또는 ‘국내 생산 부족 증명서’를 반드시 발급 받도록 하는 수입억제 정책을 도입하였다. “국내 미제조 확인서” 및 “국내 생산 부족 증명서”의 유효기간이 각각 1년, 3개월에 불과하여 수입 때마다 갱신하여야 하고, 동 확인서 발급에 3~4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등 또 다른 수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수단 정부는 2009년 이후 국제 원유가 하락과 글로벌 금융 위기로 외환수급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자, 수입수요 억제를 통한 외환 보유고 방어를 위해 2010.9.16일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단행하였다. 이와 관련된 세부조치 내용은 밀, 설탕, 주재국 제조업체가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자본재, 의약품 등 84개의 필수 수입품을 제외한 기타 비필수적 수입품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관세가 인상되었으며, 특히 최근 급증하고 있는 중고차 수입과 관련하여 당해 연도(2010년) 이전에 생산된 중고차량의 수입이 전면 금지되었다. 또한 수입품에 부과되는 개발세(Development tax)의 세율이 현 5%에서 10%로 인상되었으며, 모든 수입에 대한 은행들의 신용장 개설 보증금(L/C 마진)도 100% 인상되었다.

콩고는 모든 수입품에 대해서는 관세외에도 영업세, 산업증진세 등 다수의 세금이 부과되며, 수입품에 대한 추가 부과금은 수입 경로에 따라 5~40% 수준에 달한다. 미화 2,500불 이상 가치의 모든 수입품은 DR콩고 정부의 위탁업체 BIVAC에 의한 선적전 검사(preshipment inspection)를 받아야 하며, 검사비용은 기본료 100불에 CIF 금액의 0.75%이다. 수입품 통관을 위해서는 수입허가증을 구입(수수료 12불)해야 하며, 물자의 항구 도착시 △관세청(DGDA)의 통관요금(CIF 금액의 1%), △수출입통제청(OCC)의



검사비용(CIF 2,500불 초과 금액의 2%, 2,500불 미만은 금액의 1%), 하역요금(1톤당 5불), △산업증진청(FPI)의 산업증진세(CIF 금액의 2%), △상선운영국(OGEFREM)의 커미션(CIF 금액의 0.595%) 및 수수료(0.59%), △국가항만국(ONATRA)의 하역수수료(톤당 20불) 및 항만사용료(톤당 32불), 지방세(20피트 기준 컨테이너 1개 당 135불) 등이 부과된다. 관세청은 DR공고 정부의 관세율에 따라 관세를 정하여 부과하고 있으며, 면세품목 수입자들은 통관비용으로 최종가격의 5%를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수입품, 자국 생산품에 관계없이 모든 물품에는 2012년 1월부터 기존의 소비세(ICA)를 대체하여 부가가치세 16%가 부과되고 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수입증가 억제제를 위해 2001.1월 도입한 수입최저가격제도의 적용 품목 및 대상 국가를 2007.8월 확대하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직후인 2008.10월에는 관세청 고시 90/2008 및 91/2008을 통해 최저수입가격제도의 적용 대상 품목에 140개 수입물품을 포함시키는 한편, 적용 품목 및 국가 목록을 확대 수정함으로써 수입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은 2010.4월 일부 의류 및 침구류, 전자제품 등 13개 수입완제품의 경우, 통관 후 주재국내에서 12개월 이내에만 판매토록 제한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시장에서 만연되고 있는 밀수, 저가 상품의 유통범람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12개월 이내 판매되지 않을시, 수입상(바이어) 등은 다시 수입관세를 지불하고 통관을 하거나, 헐값에 매각해야 하는 관계로 수입비용이 높아지게 되며, 수입상의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우크라이나는 사치성이 있다고 간주되거나 불요 불급품이라고 간주되는 품목, 그리고 국내산업 보호 필요성이 절실한 품목들에 대해 물품세를 부과하고 있다. 물품세 부과대상 품목은 커피, 캐비아, 바다가재, 초콜릿·코코아 함유 식품, 맥주 및 각종 주류, 담배, 차량용 휘발유, 디젤유, 경유, 타이어, 혈액의류, 모피 의류, 보석류, 오디오 및 비디오 기기, CD, TV, VTR, 차량, 모터사이클 등이 있다.

중국은 기타 다양한 수입규제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합리적인 외환관리, 주요 상품 및 주요 원자재 등의 수입관리를 위해 특정상품 수입 자동등록관리

제도를 시행중에 있다. 또한 중국은 수입상품을 성격에 따라 1, 2, 3류 상품으로 분류하여 수입업자를 제한하는 ‘수입상품분급(分級관리제도)’을 시행하고 있다. 1류 상품은 ‘進口國營貿易管理貨物(국영수입무역관리화물)’에 의한 양곡, 식용유, 설탕, 담배, 원유, 정제유, 화학비료, 면화 등 시급한 공급이 요구되는 다량의 공업용 원자재, 농업용 물자, 생필품 8개 품목이며, 지정된 국영무역전문공사(國營貿易專業公司)가 일괄적으로 수입하도록 되어 있다. 2류 상품은 ‘進口指定經營管理貨物(수입지정경영관리화물)’에 의한 총 5종 상품(천연고무, 합판, 양모, 아크릴섬유, 강재 등)은 국제시장에서 공급원이 제한되어 가격변동이 심하고 국내공급이 부족하여, 국제가격과 국내가격의 차이가 큰 품목으로 상무부 산하의 지정 무역업체들이 수입을 독점하고 있다. 3류 상품은 1류 및 2류 이외의 품목으로 수입권을 확보한 모든 무역기업이 수입하고 있다. 이밖에도 전시물품 수입관리 제도를 1997.4월부터 새로이 제정하여 전시용 수입물품의 국외반출 기간을 6개월로 연장, 전시회 개최중의 면세수입 물품, 물품의 성질, 용도, 규격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안전문제, 환경오염 등을 중시하여 1998.1월부터 중고기계 전자설비 수입이 전면 금지되었다. 다만, 상무부 전자상품수출입공사(機電產品進出口司)가 인정한 경우는 제외하며 외국계기업의 경우 소재지 전자상품관리사(機電產品管理司)를 통해 신청·허가가 필요하다. 자동차 및 부품의 수입은 대련항, 천진신항, 상해항, 황포항, 만주리항, 심천(深川皇崗)항, 阿拉出口 등 7개 지역으로 한정되어 있다. 자동차 부품은 상기 7개 지역 외에 산둥, 강문, 항주, 호화호특, 우루무치 및 천진 동향으로도 수입이 가능하다. 1999.1월부터 중국정부는 전자환경과 인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PC, 디스플레이, 프린터, 전원스위치, TV, 음향설비의 6개 품목에 대해 전자수용강제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수입최저가격제, 수입시 일정금액 이상의 예치금을 의무화하거나 높은 세율을 적용해 수입을 규제하기도 한다.

파라과이 정부는 국내 산업보호 및 언더밸류(under value) 통관 방지를 위해 수입산 의류 및 닭고기에 한하여 ‘특별수입자등록제도’를 도입하고, 이들 상품에 대해 부가가치세(10%) 및 남미공동시장(Mercosur) 공동관세



율(최고 20%)을 적용토록 하는 내용의 대통령령 제3,003호를 2009.10월 공표하였다.

파키스탄의 경우 1999.10월 군부 쿠데타 이후 수입산용장 개설시 일정액을 의무적으로 사전 예치하는 소위 L/C margin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동 제도는 2000.11.14일자로 전면 폐지되었다가 외환보유고 감소와 무역수지 적자 확대가 지속됨에 따라 2008년 부활하였다. 2008.8월에 주요 사치성 소비재에 대한 L/C margin이 기존의 10~30%에서 100%로 대폭 인상되었으나, IMF가 구제금융을 지원하면서 파키스탄 정부에 각종 규제철폐를 요구해 2009.7월부터 동 조치를 폐지하였다.

통관절차

개관

통관은 수입과 관련한 제반절차 전부를 의미하는 수입통관절차와 세관절차만을 포함하는 세관통관절차로 구분할 수 있다. 수입통관절차는 선박의 입항에서부터 부두배정, 하역, 보세장치장 운송 및 입고 각종 수입허가·추천서 구비, 세관 수입신고, 세관의 통관요건 심사, 세금납부 및 신고수리물품 반출 등 일련의 모든 과정으로서 수입과 관련한 모든 물류관련 민간업체와 수입관련 정부기관, 그리고 이의 위임을 받은 각종 협회와 단체, 세관이 관련되어 있다. 세관통관절차는 세관에 수입신고한 후 세관의 통관요건 심사, 세금납부 후 수입신고필증을 받아 세관의 통제를 벗어날 때까지의 과정으로 세관만 관련된다. 통관절차라고 하면 협의의 세관통관절차만을 생각하는 것이 보통이나, 국제적인 논의는 주로 넓은 의미의 수입통관절차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과도한 비용을 발생시킬 경우 통관절차는 보이지 않는 무역장벽으로 작용한다. 통관절차상 무역장벽의 일반적인 유형으로는 항만에서의 적체, 수입통관의 과도한 지연, 비과학적 검사 및 검역 시스템, 세관분류의 임의 변경, 상품이 국경을 통과하는데 따르는 방대하고 복잡한 서류절차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는 무역업자들에게 상당한 시간·금전적 교역 비용을 부담시키고 있다. 통관절차는 관세와는 달리 객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자의적인 운용이 빈번한 분야이며, 정해진 절차와 실제 운영이 큰 차이를 보이기 쉽다.

통관절차의 원활화를 통한 무역장벽 완화는 큰 경제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연구에 따르면 무역원활화를 통해 세계 국가 얻을 수 있는 후생상의 이익은 4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非OECD 국가의 후생 이익이 더욱 클 것으로 추정된다.³ 이에 따라 개도국



의 통관절차 선진화는 세계 교역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꼽혀 APEC, WTO 등 다양한 국제경제기구에서 논의되고 있다.

통관절차와 관련된 국제협약으로는 교토협약이 있다. 교토협약은 국제무역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세관절차를 간소화·조화시키려는 목적으로 위하여 1973년에 채택되었다. 정식명칭은 「세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으로 일명 「국제관세법」이라고 불리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EC(European Community), 중국, 일본 등이 동 조약에 가입하였다. 또한, GATT 1994 제8조(수출입 관련 수수료 및 절차)는 “수입 및 수출 절차의 복잡성을 최소화하고 수입 및 수출 문서작성요건을 간소화할 필요성을 인정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WTO에서는 통관절차를 포함한 무역원활화 이슈를 협상에 포함시키려는 지속적인 논의가 있었으며, 2001년 제4차 도하 WTO 각료회의는 통관절차를 포함한 무역원활화 이슈와 관련, 제5차 각료회의의 결정에 기초하여 이후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하였다. 2004.8.1일 WTO 일반이사회가 DDA 협상의 세부원칙에 대한 기본골격(July Package)에 합의하면서 무역원활화 이슈가 공식적인 의제로 채택되었다.

DDA협상 기본골격 합의문(July Package)의 부속서 D(Annex D)는 무역원활화 협상의 기본 지침으로 협상의 목표와 범위, 세관협력, 개도국 및 최빈국에 우대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DDA 무역원활화 협상은 GATT 5조(통과의 자유), 8조(수출입 관련 수수료 및 절차), 10조(무역규제의 공표와 시행)의 명확화와 개선, 세관 당국간의 국제협력, 개도국 및 최빈개도국에 대한 기술지원 및 능력배양을 목표로 한다. 특히, 개도국 우대조치와 관련하여 부속서 D는 선진국의 지원이 없거나 개도국의 이행능력이 부족할 경우 해당 개도국은 이행의무가 배제됨을 명시하고 있다. 현재 무역원활화 협상은 회원국이 제출한 제안서를 바탕으로 작성된 통합협정문안의 문안 정리를 위한 협상이 진행 중이다.⁴ 무역원활화는 선진국과 개도국이 모두 이익

3. OECD. 2009. Overcoming Border Bottlenecks: The Cost and Benefits of Trade Facilitation.

을 얻을 수 있는 분야로 DDA 협상 중 가장 활발히 논의가 이루어진 분야이다. 2013년 말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제9차 WTO 각료회의에서 협상 타결을 목표로 회원국 간의 집중적인 논의 끝에 협상이 타결되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였다. 협상의 의무화 수준, 기술적인 사안 외에 정치적으로 민감한 분야(영사공증제도의 금지, 세관중개인 사용의 의무화, 선적전 검사 폐지, 통과 일부 조항 등), 개도국 지원범위 및 이행 기간 등에서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첨예한 대립으로 협상 막판까지 난항을 겪었다.

WTO 무역원활화 통합협정문안에 기초하여 무역원활화 지수를 구축하고 경제적 효과를 추정한 OECD(2011)⁵와 OECD(2013)⁶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무역원활화 조치가 완전히 이행될 경우 선진국은 10%, 저소득국가는 14.5%, 중하위 소득국가는 15.5%, 중상위 소득국가는 13.2%의 잠재적 교역비용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IIE)는 무역원활화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1조 달러 이상의 수출 증대 효과와 2,000만개 이상의 고용 창출 효과가 유발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⁷

현황분석

가시적인 무역장벽이나 무역제한조치 외에 통관절차는 무역을 감소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 APEC 국가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 기업

4_ 통합협정문안은 GATT 5조, 8조, 10조의 명확화와 개선, 세관협력 등 과 관련된 무역원활화 조치에 대한 section I과 개도국 우대조치에 관한 조항인 Section II로 구분된다.

5_ Moïse Evdokia, Thomas Orliac and Peter Minor, 2011. "Trade Facilitation Indicators: The Impact on Trade Costs," OECD Trade Policy Papers 118, OECD Publish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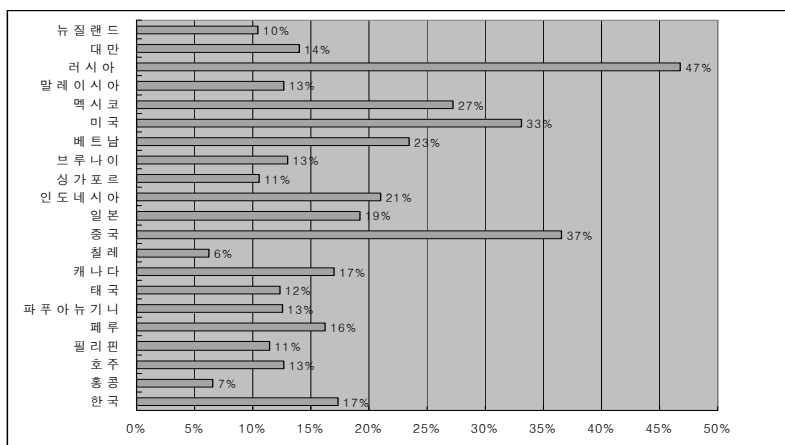
6_ Moïse Evdokia, Silvia Sorescu, David Hummels and Peter Minor, 2013. "Trade Facilitation Indicators: The Potential Impact of Trade Facilitation on Developing Countries' Trade", OECD Trade Policy Papers, No.144, OECD Publishing.

7_ Gary Hufbauer and Jeffrey Schott. 2013. Payoff form the world trade agenda 2013.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에 대한 설문조사⁸에 의하면, 중요한 무역 장애요인으로서 관세(응답자의 30%) 다음으로 복잡한 통관절차가 꼽혔다. 최근 연구결과에 의하면, 무역 원활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대체적으로 1~1.5%의 수출감소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⁹

개방경제 경험이 풍부한 선진국과 선발개도국들의 통관 절차는 전반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는 반면, 대외개방경제 운영의 경험이 적고 최근 들어 경제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중국, 러시아, 베트남 등은 무역 및 국가경제 규모와 관계없이 통관절차에서 많은 장벽을 유지하고 있다. 김상겸 외(2006)에 의하면, 중국, 미국, 멕시코, 베트남, 인도네시아 순으로 통관절차상의 장애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¹⁰ 한편 상대국이 비교적 자유롭게 수출 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국가는 홍콩, 싱가포르, 뉴질랜드, 대만, 칠레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국가별 통관절차상의 장애



자료: 김상겸 외, 2006, 『APEC 무역원활화의 정책과제 및 파급효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8_ 김상겸 외, 2006, 『APEC 무역원활화의 정책과제 및 파급효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9_ 최낙균·김정곤·박순찬, 2011, 『글로벌시대의 보호무역에 대한 경제적 비용분석과 정책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0_ 미국의 경우 통관절차의 장애가 상대적으로 높게 감지되는 것은 9·11 테러이후 엄격해진 보안체제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WTO는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후 각국의 무역장벽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 WTO의 발표를 종합하면, 각국은 통관절차를 원활화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평가된다.¹¹ APEC 국가들의 경우 Shanghai Accord 채택 이후 역내 무역비용 감축을 위해 통관절차를 비롯하여 표준 및 적합성, 기업인 이동, 원산지 규정 등의 분야에서 제도 간소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면서 성과를 거두고 있다. APEC 역내 국가들이 참여한 총 1,046건의 무역원활화 관련활동 가운데 2009년 65.5%의 활동이 이행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21.1%의 활동은 이행 중인 것으로 집계되어 상당한 거래비용 감축에 기여함을 시사한다. 특히, 통관절차 분야의 경우 통관자동화시스템 도입, AEO 활용, 통관단일창구시스템(single window system) 운용 등 절차간소화 및 투명성 제고에 힘입어 동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뚜렷이 이루어졌다.¹²

통관절차 운영에 따른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통관운영과 관련한 국가간 제도 및 절차적 상이성이 많이 해소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다. 둘째, 원산지규정, 위생검역 등과 관련된 통관절차의 복잡한 운영이 주요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도국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보편적인 현상이다. FTA의 확산으로 인해 원산지규정 적용상의 문제가 통관절차에서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위생검역은 각국의 국내정책과 관련되어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셋째, 개도국의 통관절차 운영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개도국의 경우 통관운영 자체에 대한 노하우가 부족한 것이 문제가 되므로 이에 대한 선진국의 지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넷째, 최근에는 교역화물의 안전성과 물류원활화를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이 다각도로 모색 중이다. 이러한 목적 하에서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제도가 주요국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도입되고 있다. 이 제도는 일정 수준의 안전성을

11_ WTO. 2012. "Report on G-20 Trade Measures".

12_ 김상겸·박인원·박순찬·임경수. 2010. 『보고르목표 이행평가와 APEC의 경제통합 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충족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는 한편, 그렇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집중 관리함으로써 세관당국이 효과적으로 국경 안전보장을 수행하도록 하는 민관협력 프로그램이다. 최근에는 각국에서 개별적으로 도입된 AEO 프로그램을 상호 인정하는 단계에 이르고 있다.¹³

주요 선진국의 통관절차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미국의 세관관련규정은 연방규정법 19장에 포함되어 있으며, 세관 및 국경보호국은 통관 관련 결정, 규정 및 규정안 등에 대해 매주 통관주보(Customs Bulletin)를 발행하고 있다. 통관 관련 결정의 사법적 심사는 미국 국제무역법원(CIT: U.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이 담당하고 있으며, 연방 상소법원 및 대법원이 담당하고 있다. 2006년 안전항구법(Security & Accountability for Every(SAFE) Port Act)에 따라 세관 및 국경보호국은 수출입 관련 표준 전자 정보를 수집하는 일원화된 창구를 도입하였으나, 아직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아 완벽한 이행은 되지 않고 있다.

미국의 수입통관에 걸리는 시간은 세계에서 가장 짧은 편이다. 수입제품의 반출은 관세 등의 납입을 포함한 수입관련 형식적 절차의 완료 여부에 달려 있지 않지만 수입자는 관련 서류(세관 및 국경보호국 서식 3161)를 해당 화물 도착 후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세관 및 국경보호국은 동 서류 접수 이후 근무일 기준 5일 이내에 반출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관세납부 추정치를 포함한 별도 서식(세관 및 국경보호국 서식 7501)을 반입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관세는 전자적으로 납부할 수 있으나, 관세담보를 제출해야 한다.

미국은 일선 세관별로 특성에 따라 일부 상이한 세부 절차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복잡성, 자의성이 지속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특정 세관에서 위조 및 유사상품 확인, 원산지 확인, 구성성분 확인 등의 이유로 통관을

13_ 정형곤·나승권·노유연, 2010. 『무역원활화를 위한 한중일 3국의 관세행정 협력방안: AEO 제도의 상호인정 추진방안을 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자연시켜 과다한 통관비용이 발생하거나 신선 냉장물품이 부패, 변질되는 사례가 발생한 경우가 있었다.

미국은 SFL, CSI, C-TPAT, Fast, CEAR 등 안보통관 절차를 강화하여 수입물품 검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해상화물에 대한 위협예방을 위해 수입자에 대해 제조 및 상품관련 정보 10종, 선사에 대해서는 화물탑재계획 등 2종의 정보를 선적·출항 전에 세관에 제출하도록 하는 ‘10+2 보안신고제도 (Security Filing)’를 도입하였다.

이러한 조치들로 인해 수입업자는 검사비용, 보관비용 등 추가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통관수속의 지연으로 인하여 수입품의 납기를 맞추지 못하여 계약을 파기당하는 등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세관 및 국경보호국은 동 제도의 이행으로 약 8억9천만 달러에서 70억 달러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추정한 바 있다. 미국 세관 및 국경보호국은 2012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던 미국행 컨테이너에 대한 외국항구에서의 100% 검사조치를 실효성 부족과 물류지연 우려 등을 이유로 2014년까지 연기한다고 밝혔다.

한편, 견본이 국제무역을 확대시키기 위하여 자유롭게 거래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 세관은 섬유류 및 의류제품의 상업용 견본통관 시 천공, 견본표시 등을 지나치게 요구하고 있어 견본의 가치를 손상시켜 사실상 견본으로서의 기능을 저해하고 있다.

한·미 FTA는 양국간 교역원활화를 위하여 효율적인 물품 반출에 관한 간소화된 통관절차를 채택토록 규정하고 있다(도착 후 최고 48시간 내 화물반출, 수입 전 사전신고, 부두 직통관 및 세액 결정전 화물반출 승인 등). 또한, 특급 탁송화물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통관서류 제출 후 4시간 이내에 국내 반출을 허용할 것을 규정하였으며,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화물 반출 절차 도입, 화물 위험도에 따른 차등검사제도 도입 등 통관절차를 개선하였다.

EU 회원국의 통관절차는 우리나라와 큰 차이가 없으며, 일반적으로 크게 문제되고 있지는 않다. 단, EU의 통관에 관한 전반적인 규정은 EU 집행위에서 제정하는 반면, 이를 현장에서 집행하는 통관사무의 처리는 각 회원국



의 통관당국이 맡고 있어, 원산지, 관세분류 등의 판단이나 업무처리 능력, 신속도, 고객봉사 정도는 국별로 차이가 있다. EU는 원산지 분류 원칙, 품목분류 방식, 관세평가 기준, 이의 구제방안 등 세관당국이 통관사무 처리 시 준수해야 할 각종 원칙과 기준을 명시하여 통관절차의 통합을 기하고 있다. 그러나 집행사무는 여전히 회원국의 세관당국 소관으로 되어 있어 품목분류에 대한 판단, 통관절차 소요시간, 애로사항 해소 태도, 집행위 규정의 이행정도 등이 회원국 세관별로 차이가 있다.

EU는 통관절차 간소화, 자료 제출 축소 등을 보장하는 AEO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AEO 지위는 EU 개별 회원국이 이해당사자에게 부여할 수 있다. AEO 제도는 EU 역외에서 설립된 자연인이나 법인에게까지 개방된 것은 아니나, EU와 AEO 상호인정 협정을 체결한 국가에서 설립된 자연인이나 법인의 경우에는 AEO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EU는 또한 역내 회원국 세관 당국간 전산정보 교환시스템을 구축하고 세관원 등 업무 담당자들의 직무교육 및 인력 교류를 통해 통관사무의 일관성 제고를 위한 Customs 2007 프로젝트를 추진한 데 이어, 2013년 완결을 목표로 Customs 2013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EU는 또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역내 회원국 세관당국간 전산정보 교환시스템을 구축하고, 세관직원들의 직무교육 및 인력 교류를 통해 EU 차원에서의 통관업무의 일관성 제고를 위한 Customs 2007 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 2008.1월부터는 2013년 완결을 목표로 Customs 2013 프로젝트를 추진 중으로 회원국 세관당국 간 일체성 제고, 역내의 통관 안전(security and safety)의 강화, 통관사기 방지노력 강화, 통관절차의 신속화 등을 목표로 한다.

한편, 2008.1월 ‘전자통관결정(Electronics Customs Decision)’이라고 불리는 “종이 없는 통관”에 대한 결정(70/2008/EC)과 2008.4월 ‘신통관규정[Modernized Customs Code: Regulation(EC) N 450/2008]’이 채택되었으며, 2008.4월, EU 집행위는 심화된 관세동맹으로의 발전을 위한 조치[COM(2008)169]를 채택한 바 있다. 이 결과 향후 EU 회원국의 세관당

국 간 전자통관이 더욱 효율화되어 위조상품 적발, 환경보호, 보건 등 통관 관련 새로운 이슈에 대한 범 EU 차원의 대처 능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EU 회원국 국가별 세관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 신청이나 제소는 1차적으로 해당 회원국에 하도록 되어 있으며, 회원국의 사법 결정에 대해 불만이 있을 경우에는 유럽사법재판소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EU는 관세행정의 간소화를 촉진하는 동시에 테러 및 조직범죄 대처 등 국경안보를 강화하는 조치(COM(2003) 452)를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다. 동 조치는 관세행정과 관련하여 공동체 안보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수출입화물 사전신고, 위험성 평가 등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상기한 바와 같이 EU 국가별로는 자국의 관심 품목에 대해서 보다 강화된 통관절차를 요구하기도 한다. **독일**은 소비자 보호 및 환경보호 차원에서 수입품에 대한 상품 포장 규정을 비교적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2007년 이후 소독처리마크가 표지되지 않은 목재 수출포장재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독일정부는 사용 후 포장재 수거를 위해 대량의 포장재 사용 공급자에게 포장재 사용신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농수산물과 식품도 원칙적으로 일반 제품과 동등한 관세, 통관, 검역 제도 및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나, 농수산물과 식품의 위생검역 제도 및 절차는 일반 제품에 비하여 다소 까다로운 편으로 부가적인 통관서류(수출허가서나 위생증명서 등)를 요구하고 있다.

한편, 우리 기업의 EU 통관 시 자의적인 품목분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있다. 예컨대 2008년 **네덜란드** 세관당국은 삼성전자의 프린터 토너 카트리지를 화학연료로 분류하는 BTI를 발급하고 6%의 관세를 부과하였다가 한국 정부의 항의를 받고 2009.11월 이를 철회한 바 있다. 또한, EU 회원국 세관당국이 2008.4월 우리 기업이 EU 회원국에 수출한 DMB폰을 TV로 분류하여 14% 관세를 부과한 사례가 있었다.

노르웨이의 통관절차는 여타 선진국에 비해서도 상당히 간소한 편이나 농



산물, 식품에 대해서는 상당히 엄격한 표본조사를 실시한다.

루마니아는 무역원활화를 위해 통관절차를 간소화하여 최근 통관시간이 많이 단축되었다. 루마니아는 유럽 가입국간의 자유로운 국경 이동을 허용하는 쉥겐 협약(26개국)에 아직 가입되어 있지 않으며, 쉥겐 가입을 위해 인적 물적 시스템 구축 등 일정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2011.9월 일부 회원국의 반대로 가입이 무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루마니아 정부 차원에서 인적, 물류 이동의 원활화를 위해 조속한 가입을 적극 추진 중에 있다.

터키는 통관세관을 사전에 확인해야 하는데, 자동차류, 섬유, 직물제품, 비료, 석유화학제품은 지정된 세관에서만 수입통관이 가능하다. 섬유류 수입의 경우 주로 대금 지불방식에 따라 다른데 바이어의 요청에 따라 수출국 주재 터키대사관의 인증서 및 원산지 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식료품·농산물 수입 시 해당 수입허가서, 위생인증서가 요구되며, 의약품의 경우 성분별 승인기관이 상이하므로 해당 담당기관을 파악하여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한편 터키-EU 간 관세동맹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관세 규정 대부분은 EU 규정을 따르고 있으며, 공산품의 경우 CE(EU 기준) 인증 및 TSE 인증을 사전 준비해야 한다).

일본은 우리나라 특수차량의 일본 내 도로운행을 금하여, 활어의 경우 일본 항만 구역에서 일본의 특수차량에 적재 후 통관하고 있다. 일본은 활어운반 특수차량에 대한 일본 내 등록절차 면제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며, 자동차 등록 관련 세금 면제, 차고증명 의무 면제, 운전자 무비자, 우리나라의 차량 배기가스 검사 결과 인정 등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면서(2010.8월) 우리나라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자국 항만 입출항 및 하역작업과 관련하여 항만 노동자의 고용·취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은 사전에 일본항운협회와 협의를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일본은 안건의 경중에 따라 입항 등 변경사항의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11~71일전에 사전협의를 신청토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선사가 경쟁력 있는 터미널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사실상 박탈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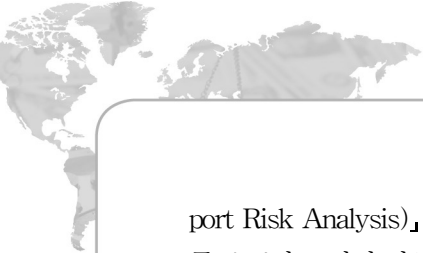
있으며 사전협의 기간이 지나치게 길다는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한편, 일본은 2006년부터 식품 중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MRL) 리스트를 설정하고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은 유해성분은 일률기준치(0.01ppm)를 적용하는 PLS(Positive List System)를 시행하고 있으며, 규제대상 물질 수도 대폭 늘려 2012년 824개로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수출농산물 중 PLS에 포함되지 않는 농약성분이 초과 검출되는 사례가 빈발하여 2006년 PLS 시행 이후 잔류농약 초과검출로 통관이 규제된 건수는 2013.10월까지 총 49건에 이른다. 이에 한국정부는 일본 PLS 시행에 대응하여 국내 등록농약 중 일본기준 미설정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위한 노력으로, 2005~2013.10월 현재까지 고추 Acequinocyl 등 총 15작물 60농약에 대한 의견을 일본정부에 제출하여 파프리카 Tetraconazole 등 12작물 34농약에 대한 일본 잔류기준을 반영시켜 우리농산물의 대일 수출확대 및 경쟁력 확보에 크게 기여하였다.

일본은 2008.3월부터 잔류농약 명령검사 적용대상을 10kg 초과 휴대물품까지 확대함에 따라 우리의 수출품은 보다 높은 단계의 검사를 적용받게 되었다. 현재 대일 수출 농산물 중 모니터링 강화검사(30%)를 받는 품목은 딸기, 들깨잎, 붉은 고추 및 그 가공품이며 그 중 들깨잎은 12KG 휴대물품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되었다. 또한 대일 수출 신선농산물 품목 중 전수검사로 남아 있는 품목은 파프리카, 미니토마토 2개 품목이며, ID 등록업체에게는 검사명령(전수검사)을 면제하고 있다.

일본 검역당국은 비검역 병해충('97년부터 총5속 189종)을 제외한 병해충에 대해 소독 등 검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한일 공통분포병해충으로 일본 내에 광범위하게 분포하는 병해충도 검역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특히, 신선농산물에서 병해충이 발견되면 훈증 조치로 인한 품질 저하 및 추가 비용 발생으로 수출에 상당한 애로가 발생하고 있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검역을 철저하게 시행하고 있어 일부 농축수산물 수입시 통관지연과 같은 사실상의 무역장벽이 존재한다. 호주는 1999.6월부터 수입 농축수산물에 대해 병해충 유입여부를 검토하는 「수입위험분석(Im-



port Risk Analysis)』 제도를 도입하여, 동 분석을 위한 과학적인 근거자료를 요구하고 관련 산업계 및 학계 등과의 협의절차를 거치게 하는 등 1~2년의 장기간 검토기간을 소요하고 있다. 한국산 배 수입허용(1999년)을 위한 검토도 10년의 기간이 소요된 바 있다.

싱가포르는 중계무역에 대한 높은 의존도로 인해 통관절차를 매우 신속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무역의 흐름을 저해한다고 지적되고 있는 통관장벽은 없다. 수출입과 환적 신고는 모두 무역자동화망(TradeNet)을 통해 서류 없이 전자적으로 처리되고 있으며, 관세, GST 등의 납부도 무역업자의 은행계좌와 자동으로 연계되어 처리되고 있다.

한편, **개도국** 통관절차의 문제점은 주로 통관관련 제도 및 규정의 복잡·불합리성, 구비해야 할 서류 과다, 일선세관의 임의적인 규정 해석·처리, 규정을 예고 없이 변경하는 등 투명성의 결여, 세관직원의 부정부패 등이다. 최근 각국의 노력으로 이러한 문제점은 완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중국은 수입자동차의 통관지를 지정하고 있다. 자동차 및 부품의 수입은 대련항, 천진신항, 상해항, 황포항, 만주리항, 심천(深圳皇崗)항, 신강 아라산구(阿拉山口)항 등 7개 지역으로 한정되어 있다. 단 자동차 부품은 상기 7개 지역 외에 산둥, 강문, 항주, 후허하오터, 우루무치 및 천진 동항으로도 수입이 가능하다.

수입약품은 반드시 CFDA가 발급하는 ‘수입의약품등록증’을 취득해야 하고, 수입 시마다 CFDA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수입항의약품검사소가 발급한 ‘수입약품통관증’ 및 기타 증명을 해당 수입항을 관할하는 세관에 제출하여야 통관할 수 있다. 수입신고 시 최초로 수입신고한 수입항을 통해서만 이후의 수입신고가 가능하다.

화장품은 중국으로 최초 수입되는 경우 위생·계획출산위원회가 공인한 위생검사기관에서 ‘위생안전성’ 검사를 받은 후 위생·계획출산위원회에 ‘수입 화장품위생 허가증’을 신청하여 위생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통관 및 중국 내 판매가 가능하다. 위생안전성검사에 높은 비용과 장시간이 소요되어 유행

에 민감한 화장품을 적시에 출시하기 곤란하여 대중 수출에 큰 장애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허가증을 취득하고 실제수입을 하는 경우에도 통관검사 시 부적합으로 판정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중점검사항목이 아니더라도 중국의 위생기준에 대한 기업의 연구와 대비가 필요하다.

중국은 한국으로부터 수입한 원단을 수입·가공하여 수출하는 경우 원단 소품목 하나하나에 생산국의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어 원산지 표시가 훼손되는 경우 통관이 어렵다.

대만의 통관제도에는 특별한 규제 사항은 없으나 일부 품목에 한해 관할기관의 수입검사를 필요로 한다. 예컨대, UV 기능이 있는 화장품의 경우 약용제품으로 분류되어 대만 행정원 위생서의 테스트를 거친 수입허가서를 첨부해야 한다. 해당품목의 현지 기관 검사필요여부는 수출입규정을 통해 명시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관세청(Royal Malaysia Customs)은 통관절차 원활화를 위해 통관검사 방식을 통관시검사(clearance-based controls)에서 통관후검사(post-clearance audit control)방식으로 전환·시행 중이다. 최근 말레이시아는 관세행정의 효율화와 간편성 제고를 위해 종이없는(paperless) 수출거래를 여러 항만과 공항에서 실행하고 있으며, 통관관련 정보의 인터넷 제공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수입품목에 대한 품목 분류가 끝나고 관련 서류들이 제출되어 수입 관세를 비롯한 각종 비용에 대한 금액이 확정되면 해당 금액을 납부하고 통관 절차가 마무리 된다. 그러나 정밀 검사가 필요한 경우(대부분 농산물) 브로커 또는 중개인은 관련 기관과의 검사 일정을 정해 정밀 검사를 실시하며, 수입 허가 또는 승인을 요하는 품목의 경우 선적 물품의 도착 이전에 해당 승인을 얻지 못하는 경우 통관 과정이 지연될 수도 있다.

베트남에는 63개 직할시 및 성 등 광역지방행정기관이 있으며, 이 가운데 31개 시·성에 관세국이 설치되어 있다. 관세국은 우리나라의 지방청에 해당한다. 그리고 각 도시 및 공단 등에 관세지국이 설치되어 있다. 베트남의 관세청은 “세관총국”이라고 하며, 베트남 재무부의 직접적인 지휘를 받는



다. 지방의 관세국은 각 시·성 인민위원회 소속이며, 지방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지방 관세공무원은 중앙 관세청의 지휘를 받는다.

통관절차는 종이서류에 의한 수출입 통관신고와 전자통관시스템(VNACS)에 의한 신고 방식이 있는데, 지금은 절반 이상의 많은 신고 건이 전자통관시스템에 의한 신고방식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통관신고는 신청일로부터 법률상 근무일 기준 5일 이내에 처리되도록 되어 있다. 통관신고 시에 세관에 함께 제출해야 하는 농산물, 화학물질 등에 대한 각종 검사 및 확인 증명서도 대개 신청 후 근무일 기준 5일 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어, 즉시 발급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넉넉하게 시간적 여유를 두고 신청해야만 한다.

세관검사 결과,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회피하려는 흔적이 있거나, 제품의 불법적인 위조복제가 있거나, 수입관리 정책을 위반하는 등 범법사실이 있는 경우 관세청의 위험관리시스템에 장기간 등록되어 매 수입마다 반복적으로 세관의 개장검사를 받아야 한다.

태국은 2000년부터 과세가격에 대한 평가방식으로 WTO/GATT의 평가기준을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태국관세청에서는 실거래가격 적용은 물론 특수 관계자 간 거래, 운임·보험료·커미션 등 수출입관련 제비용에 대한 과세가격 산정기준을 국제규범에 맞추어 운영하고 있다. 또한 저위험 업체에 대한 세관절차의 장벽을 낮추기 위해 2013.2월부터 수출입안전업체(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으며 AEO 업체에 대해서는 신속한 통관 및 환급 등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

그럼에도 통상적인 거래가격 이하로 신고 되는 물품에 대한 추가 자료 요구, 세관별, 직원별 해석 및 판단의 상이 등으로 일관성이 낮아 통관장애 요인으로 작용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태국 관세청은 수입자가 특정 물품의 주문 전 또는 세관도착 전 품목(세번)분류 및 과세가격산정방법 등에 대한 문의에 답변해주는 Customs Clinic을 개설(2009.9.7일)하여 운영하는 등 세관행정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의 관세환급 처리규정에 따르면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경우, 관세환급 신청 30일 이내에 환급금을 지급 결정토록 하고 있으나, 아직도 환급서류 작성이 복잡하고, 많은 부서를 거쳐야 하는 등 절차상의 어려움이 존재한다. 태국은 수입자별 우량 등급에 따른 차등관리를 위해 1999년도부터 Gold Card제도를 시행하고 환급 신청시 별도 관리하는 방식으로 각종 특혜를 부여하여 왔으나, 2013.10월부터는 Gold Card제도를 폐지하고, AEO 제도로 일원화하여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필리핀의 경우 최근 통관 과정에서 관련부처의 부정부패에 대한 보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필리핀 관세청은 노후화된 전산시스템의 교체 및 개보수를 통해 수출입 기업의 편의를 제공해야 함에도, 오히려 일부 세관 직원들이 빠른 통관진행을 대가로 비공식적인 통관 협의금을 요구하는 등 부당한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의도적인 통관 지연, 물품검사 과정에서의 뇌물 요구, 자의적인 과세 등 부패 행태는 다양하며, 이러한 세관당국의 행정처리 관행이 수출업체 입장에서는 상당한 통관 애로사항으로 부각되고 있다.

라오스 내 통관 절차는 아세안 관세코드(ASEAN Harmonized Tariff System)와 전자통관시스템(ASYCUDA)이 도입된 이래 일부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통관절차상 준비해야 하는 각종 구비서류와 단계별 허가절차로 인해 통관 지연 현상이 아직도 심각한 수준이다. 또한, 통관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뇌물수수 관행 소문도 많다.

캄보디아는 통관과 관련한 제도상의 장벽은 없으나, 통관화물 품질 및 수량 검사를 책임지고 있는 상무부 산하 수출입검사부(CAMCONTROL: Cambodia Import Export Inspection and Fraud Repression Department)는 불투명한 업무처리를 통해 통관 시 무수히 많은 서류를 요구함은 물론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비공식적인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8.9월 제4기 정부 출범 이래 2011.8.1일부로 반부패법 전면 발효 등 개혁정책을 추진 중이나 아직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남아있다. 전반적으로 현지진출 외국기업들이 애로사항 중 하나로 원부자재 수입시의



과도한 통관비용을 꼽고 있다. 예를 들면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섬유 원부자재의 경우 수입 원부자재 운송 및 통관 비용은 말레이시아와 비교하여 3배, 홍콩과 비교하여 5배 정도 더 많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인도에서의 통관 업무는 현지 통관사(Customs Clearing Agent)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사소한 서류기재 오류 등으로 통관이 장기간 지연되는 경우가 흔하다. 해상운송의 경우 통관에 약 10일, 항공운송의 경우 약 5~6일이 소요된다. 통관사와 세관의 유대관계가 처리 일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항만 시설 노후화로 인해 통관절차가 지연되기도 한다. 또한, 일선 세관의 행정 편의적이고 자의적인 제도 운용으로 통관이 지연되거나 불필요한 비용을 초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일례로 인도정부의 한국산 광섬유에 대한 반덤핑관세는 1999.12월 부과되었다가 2004.12월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5.10월 한 인도 지방세관은 연방 재무부의 지침이 없었다는 이유로 계속 반덤핑관세를 납부하도록 요구한 사례가 있었다.

우즈베키스탄은 통관절차가 특별히 복잡한 것은 아니지만, 행정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수입 통관 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관세를 책정할 때 인보이스 신고가격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시장에서 동일한 제품 또는 유사제품의 가격을 조사하여 만든 세관 내 기준표를 기준으로 과세를 부과하는 경향이 있어, 이 과정에서 세관 공무원들의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입상들의 애로가 발생한다. 우즈베키스탄은 2011.8월 통관절차 및 관세행정 개선조치를 시행하여, 2016.1월까지 모든 법인이 기술설비(technological equipment) 설치를 위한 부품 등의 수입 시 관세를 면제토록 하였으며, 2011.10.1일부터 조세, 관세 등의 체납 시 적용되는 과태료를 인하하였다. 또한 2013.1.1일부터 전자 세관 통관 전자 시행에 관한 법령에 따라 전자 세관 통관절차를 시행하기로 하였으며, 인터넷을 통해 세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카자흐스탄은 국경을 통과하는 모든 제품 또는 차량에 대한 검사가 필수적이다. 카자흐스탄에 등록되어 있고 관련 자격증을 갖고 있는 통관 중개사

또는 중개인은 수입 제품 또는 차량의 통관을 대리할 수 있다. 한편, 카자흐스탄 정부는 통관시스템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관세법에 의거해 수출입 안전우수인증업체(AEO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타지키스탄**은 관세행정의 제도화 수준이 낮고 관료들의 법 집행 관행이 자의적인 편으로 통관 절차상 어려움이 많은 편이다.

칠레에는 통관장벽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으나 다수의 중남미 국가들의 경우 통관절차가 복잡하거나 자의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발견되고 있으며 제도 역시 미비한 점이 있다.

과테말라는 서류검사 결과 적색신호가 떨어져 전량대사를 하는 경우에는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며, 상업송장과 포장명세서 등 각종 신고 서류의 하자를 이유로 벌금이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과테말라 관세청은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X-ray 투시기 검사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으나, 예산 등 문제로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는바 최종 시행까지는 시일이 더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각종 세금, 벌금 납부가 완료되면 바로 화물을 반출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운송회사에서 통관사를 지정하여 통관하고 화물을 반출하여 수입자의 소재지까지 운반하게 된다. 한편, 보세창고에 보관된 화물의 경우 일반적으로 5일까지는 창고료가 부과되지 않으나, 통관지연으로 5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운송회사에 창고료도 납부하여야 한다. 과테말라 세관은 검사가 매우 까다로운 편으로 2일 내 통관을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컨테이너 헤드 부족으로 실재는 이보다 더 오래 걸리는 것이 일반적이며 심사 및 물품검사 단계에서 여러 가지 선적서류상의 하자로 통관이 지연되거나 벌금을 물어야하는 경우도 많다. 최근 한국으로부터의 화물에 대해서 검사가 강화되는 추세로 송장에 기재되지 않은 물품이 발견될 경우 전체 통관이 상당 기간 지연되는 경우가 많으며 신고 금액도 재책정하여 과세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품목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통관 시 문제점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베네수엘라는 물품통관 시 반드시 통관사를 고용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물품검사는 무작위 선별(Random Sampling) 방법을 적용하나 이 방법에 따



른 검사에서 잘못이 발견된 경우 전수검사를 실시한다. 과거에는 세관관리에게 뇌물을 주고 세관신고를 낮게 하거나 아예 신고하지도 않고 물품을 통관하는 일이 잦았으나, 차베스 정부 들어 세관검사가 상당히 엄격해 지면서 송장가격을 제대로 작성했음에도 가격이 낮다는 이유로 통관이 지연되는 일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또한, 세관을 통과한 물품에 대해서도 국가수비대(Guardia Nacional)가 수입화물에 마약이나 무기류 등 불법 물품이 포함되어 있는지 검사한다는 명목으로 두 차례 재검사를 하고 있는데, 세관검사보다 더 엄격하여 수입상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국가수비대는 보세지역 입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곳곳에 위치하고 있어 화물의 최종도착지까지 여러 번 국가수비대의 검색을 당하기도 하는 불편이 있으며, 이 경우 사실상 뇌물을 주고 해결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통관수수료, 창고사용료 등이 비싸고 보세창고 내에서의 잦은 도난사고도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멕시코는 1993.8.4일부터 HS 8단위기준 72개 품목, 상품수로는 110개 품목에 대해 최저수입가격(Precio Estimado)을 고시하고 이 가격 이하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서는 수입가와 고시가의 차액에 대한 관세를 예치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이 고시가는 상품의 다양한 사양과 일반적인 수입가격을 고려하지 않아 불합리한 점이 많고, 부수적으로 실시하는 수출국 내 제조원가 증명 등으로 비용 및 시간 낭비를 야기한다. 더욱이 가전제품과 같이 기술개발로 인해 제품 생산가가 수시로 인하되는 품목에 대해 세관당국이 현실성이 없는 최저가격을 고집하고 있어 수출업체의 가격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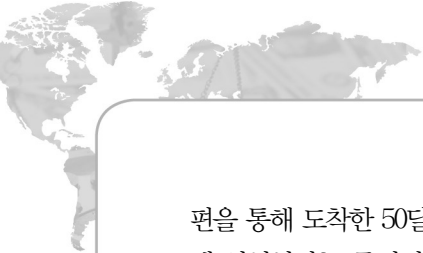
브라질의 경우 수입업자는 개발상공부 무역국(Secretaria de Comercio Exterior)에 등록을 해야 무역자동화시스템(SISCOMEX)을 이용할 수 있다. 2007년 SISCOMEX가 업그레이드됨으로써 무역등록 절차 이행에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 되었고, 관련비용들도 SISCOMEX을 통해 산정되도록 개선되었다. 대부분의 상품은 자동수입허가규정에 해당하지만, 농산물, 의료 및 군수물자 등 품목은 해당 기관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수입할 수 있다.

예컨대, 무기류나 방사선 장비의 수입은 국방부, 의약품 및 화장품, 식품 등은 보건부, 일부 음료수는 농업부의 사전허가를 얻어야 한다. 특히 보건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ANVISA)의 의약품 수입허가는 시간이 많이 걸려서 신제품 등록을 마치는데 6개월 이상 소요된다.

볼리비아의 경우 정부의 밀수단속 강화로 정식수입 비중이 높아지고 under value에 대한 가격조사가 엄격해져 이전에 비해 통관이 늦어지고 있다. 실제로 통관에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 1~2개월이 일반적이다. 연간 5천불 이하 수입은 수입업자 개인이 할 수 있으나, 연간 5천불 이상의 경우에는 통관사나 통관대리인을 이용해야 한다. 서류제출을 기초로 세관은 볼리비아 통관절차정보시스템(DUI: Declaracion Unica de Importacion)에 통관정보를 입력하게 되며 세관에서 설정한 프로그램(SIDUNEA)에 따라 심사하게 된다.

아르헨티나의 통관절차 시 적색 채널에는 예치금을 공탁하는 방식과 공탁하지 않는 방식이 있다. 예치금을 공탁하는 방식은 수입물품의 가격이 아르헨티나 세관이 설정한 최저수입가격보다 낮게 신고 되었을 때 적용되며, 허위가격 신고 방지를 위한 특별 심사를 거치게 된다. 예치금의 규모는 세관 당국이 설정한 최저수입가격과 신고가격간의 차액 만큼이며 현금 예치 또는 은행 보증서 공탁을 통해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입업자는 신고가격을 입증할 수 있는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우루과이의 경우 국세청(Direccion General Impositiva), 사회보장공단(Banco de Prevision Social), 우루과이보험공단(Banco de Seguros del Estado)에 등록되어 있는 수입업자에 한해서 우루과이로 물품을 수입할 수 있다. 보건, 환경, 국방 등 특별한 사유로 추가 검사가 필요하지 않을 경우 수입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은 최소 22일이며, 20피트 크기의 컨테이너 기준으로 관세를 제외한 소요 비용은 약 1,330 달러이다. 통관 시 석유, 식용유, 산업용 정제 설탕, MERCOSUR 비회원국산 섬유 제품, 신발은 반드시 적색 채널을 통과해야 하며, 위스키 및 담배에 대해서는 특별 문서 제출 및 예치금 공탁의 추가 절차가 적용된다. 방송용 음반 및 개인적 용도로 국제우



편을 통해 도착한 50달러 이하 음반을 제외한 음반에 대해서는 저작권 규정에 일치한다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휴대전화의 경우 세관신청서에 명시된 일련번호 코드가 필요하다.

파라과이는 수입상품의 검역, 검사 및 통관절차에 있어 WTO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국제관행에 배치되는 특별한 통관규정은 없다. 단, 파라과이 정부가 공인하는 통관사를 통해서만 통관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료주의적이고 낙후된 행정으로 인해 통관시일이 지체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한다.

동구권 **러시아**의 통관절차는 외국기업들이 자주 거론하는 애로사항의 하나로써, 절차가 복잡하고 느리며 담당자의 규정적용이 자의적이고 부패에 노출되어 있다. 러시아의 통관검사 비율은 약 44%로서 미국·독일의 3%이하, 영국 2%에 대비할 때 매우 높으며, 통관 시 평균 제출서류 건수는 수출 8건, 수입 10건으로 선진국의 약 2배 수준이다. 외국기업들과 관세당국의 상호 신뢰가 부족하여 외국기업의 0.5% 정도만 특별단순 통관절차를 이용하고 있고, 대부분은 법률에 규정된 모든 통관절차를 거친다. 러시아 연방 전략기획청에 따르면 통관 실소요 기간이 평균 36일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는 등 통관 지연이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러시아 전략기획청은 2012. 5. 3일 외국인 투자유치활성화를 위한 기업환경개선대책의 일환으로 관세행정 개선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동 로드맵은 통관서류 축소, 통관소요기간 단축, 통관비용절감을 목표로 삼고 있다. 먼저 통관서류 축소는 수입통관시 필요서류를 2012년 10개에서 2015년 6개, 2018년에는 4개로 줄이고, 수출 필요서류는 2012년 8개에서 2015년 4개로 축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수입통관에 소요되는 기간은 2012년 평균 36일에서 2018년 7일로 단축할 계획이다. 또한 2012년 기준 1컨테이너당 1,800달러가 소요되는 수입통관 비용은 2018년까지 1,000달러로 줄이고 수출통관시 소요되는 비용도 2018년 900달러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WorldBank의 'Doing Business 2013'을 보면 러시아는 조사대상 185개국가중 국경통관부문에서 162위를 차지하여 여전히

통관절차가 복잡하고 비효율적이며 비용도 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 측면을 보면 필요서류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1개 늘어났으며 통관에 소요되는 기간도 여전히 평균 36일로 조사되었다. 수출통관시 소요되는 평균기간이 36일에서 21일로 줄어든 것을 제외하고는 지난 1년간 큰 진전이 없는 상태로 수출입 통관에 있어서 여전히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러시아 일선세관에서는 관세수입 확보를 위해 수입상품 관세가격(customs value)을 가능한 한 높게 책정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또한 수입가격이 하락하거나, 동일물품이라도 대량구매 시 신고가격보다 낮게 구입이 가능하나 일선세관에서는 동일물품이나 유사물품에 관한 여러 수입업자들의 신고가격 중 가장 높은 가격을 적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일선 세관들은 국제가격이 하락한 품목들의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않고 불필요하고 복잡한 증빙서류를 요구하다가 결국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의 거래 및 판매가격 중 가장 높은 가격을 적용하는 사례도 있다. 그리고 일선세관에서 수입가격 결정시 사용하는 다른 회사의 동일제품에 대한 수입신고 가격을 공개하지 않아 세관 가격결정의 투명성이 낮다.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에 의한 통관은 일반적으로 어려우며, EDI 통관의 경우에도 일반 통관 시 필요한 서류를 함께 요구한다. 아울러, 신속한 통관을 위해 송장(invoice)과 물품명세서(packing list) 등은 러시아어와 영어를 병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동 및 아프리카 국가들의 통관절차는 개선되고 있는 추세이나, 문화적 특수성에 따른 품목 제한, 투명성 부족, 절차의 복잡성 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아프리카 국가의 경우 부족한 인력과 인프라 시설도 통관 지연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통관절차는 복잡하고 불투명하며, 요구되는 서식이 많다. 에이전트를 통하지 않은 경우에는 문제 발생 시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그밖에 이슬람이 금기시하는 디자인이 포함된 소비재 물품의 통관이 까다롭고, 주류 성분, 돼지고기 및 그 기름 성분이 포함되어 있거나 있다고 여겨지는 식품의 통관은 불가하다. 손목시계, 액세서리 등은 샘플이라도 과세 통관시키는 경우가 많다. 또한, 라벨 부착은 주의를 요하는 분야로서 식품



류, 개인 위생기류, 의약품 라벨은 사우디 표준청(SASO)의 요구 조건을 충족하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불공정 수출업자로 등록될 경우 1년 이상 수출입 절차가 까다롭게 적용된다.

이란의 경우 수입품은 검수관의 감정 및 평가 절차에 의해 철저히 검사되며 세관신고서에 의거하여 신고 되지 않은 품목은 밀수로 간주된다. 수입승인을 받지 않은 품목을 수입한 경우에는 세관장 동의하에 CIF 가격의 5~25%의 벌금을 지불하고 상품을 통관시킬 수 있다. 세관에서 Green Paper 발행 후에도 그 뒷면에 통관이 완전히 종료되었다는 사실을 명시한 특별 스탬프를 득해야 완전한 통관으로 간주된다. P/I 상의 금액과 상업송장 상의 금액에 차이가 나거나 중량 증명서상의 중량과 실제 중량 사이에 차이가 나는 경우, 그 차이를 보전할 때까지는 통관이 완료된 경우라도 Green Paper 뒷면에 최종확인 스탬프가 찍히지 않는다.

샘플통관은 소액, 소량인 경우라도 통관수수료 및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통관 소요기간도 1~2주 정도 걸린다. 수입 통관 시 실중량 측정의 경우, 철강, 종이, 파이프 등 제품은 제품 무게를 측정하여 인보이스에 명기된 중량과 비교하는데, 이란세관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중량 오차 범위(약 5% 내외)를 인정치 않고 있으며, 고중량 측정저울의 일반적인 오차 한계도 인정하지 않는다.

쿠웨이트에서는 통관서류에 하자가 없는 경우 선적서류 도착 후 통관에 약 2주가 소요된다. 컨테이너 등의 수입품에 대하여 무작위 추출방식을 통한 물품검사를 하며, 미국 및 유럽 통관기준을 적용하여 엄격하게 심사한다. 물품을 위장하였거나 서류를 위조하였을 경우에는 3년 내의 구류형과 벌금을 동시에 적용한다. 세관은 화물손상, 배달지연, 분실 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아랍에미리트(UAE)의 수입 통관절차는 비교적 간단하고 투명하지만, 수입업자는 반드시 관세청으로부터 유효한 수입업자 코드를 획득하여야 하며, UAE에 등록된 회사(UAE 국민이 최소한 51% 소유)만이 자격이 있다. 수입물품 통관 시 상업송장(Invoice) 및 원산지 증명서(C/O)에 해외주재

UAE 영사의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스라엘은 수입품의 가격 인하를 위해 도입한 수입절차 간소화 정책을 승인해 2013.9.1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스라엘에는 총 3,500개 표준이 있으며, 그중 550개가 이스라엘표준원의 인증이 있어야 수입할 수 있다. 그러나 수입 절차 변경이후 수입업자가 제출하는 문서만으로 수입이 가능하게 되어 경제부 소속 감독당국의 결정에 따라 표준원의 검증이 필요할 경우에만 표준원의 검사를 요구한다. 정부 승인 이후 표준원의 승인이 필요한 550개 중 100개 표준에 대한 수입 절차가 완화되었다. 인증절차가 철회된 품목에는 세탁세제, 수도꼭지, 싱크대, 세라믹 타일, 도어 잠금장치, 어린이용 식탁, 자전거, 세라믹타일 등이 있다. 이외에도 그 동안 수입장벽으로 지적되어 왔던 표준원의 높은 검사 비용에 대해서도 앞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집트 세관 당국은 관세가액 평가 시 송장에 기재된 CIF 가격을 기준으로 인정과세하고 있으나, 일부 품목에 대해 송장가격보다 10~30% 정도 높게 책정하는 경우가 있다. 이집트는 세계관세기구(WCO) 및 WTO 회원국임에도 불구하고, 관세과세가격 산출시 당해 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할 것을 규정하는 WTO 관세평가협정 제1조 및 제9조를 준수하지 않는다. 또한 통관 검사의 통일규정 미비로 일선 행정담당자의 자의적 해석이 빈번하고, 바이어 평가, 상담, 전시회 등으로 수입되는 견본품의 반입수량을 제한하거나 상당금액을 입금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수입업자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

알제리 세관당국은 통관자동관리시스템(SIGAD)을 도입하였으며, 알제항에 컨테이너 스캐너를 설치하는 등 통관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알제항의 접안시설 및 컨테이너 처리시설의 부족, 그리고 관료주의로 인해 통관에 애로를 초래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세관당국은 공공의 안녕질서, 사회관습, 공중보건,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국내규정에 의거하여 통관을 거부할 수 있으며, 검역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식물, 기타 물품은 재반출되거나 폐기된다. 일부품목에 대해서는 종교상, 안보상의 이유로 수입자체를 제한하고 있으며, ‘아랍 보이코트’로 불리는



이스라엘 생산품 수입금지가 계속되고 있다.

모로코는 세관과 금융기관 간 전자결재시스템을 구축하여, 수입업자가 거래은행을 통해 관세를 이체하면 세관이 납부증빙을 발부하여 통관 소요시간이 단축되었다. 또한 물품을 먼저 통관하고 추후에 관세를 지불하는 것을 허용하는 신용통관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 모로코 세관은 웹사이트(<http://badr.douane.gov.ma>)를 개설하여 수입업자가 온라인으로 통관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모로코 수입통관절차는 전체적으로 간소화되고 있지만, 세관당국의 관료주의로 인한 급행료 요구, 세관당국의 자의적인 과세 기준가격 결정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일부 농산품의 통관을 위해서는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의 종류가 많고 작성이 까다로워 수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유통기한이 짧은 식품의 경우 검역과 통관에 약 1개월이 소요되어 한국에서 모로코까지 해상운송에 소요되는 3개월을 더할 경우 총 4개월이 걸리는 실정이다.

튀니지는 통관 시 일상소비재 수입에 대한 엄격한 기술검사(control technique)를 시행한다. 이는 제품의 안정성, 소비자의 건강, 공정한 상거래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하며, 해당 제품은 총 관세품목의 약 30%(양탄자, 의류, 음료, 제분품 및 약간의 조리공정품 등)이다. 해당 수입품은 기술검사를 거치지 않을 경우 유통이 금지된다. 기술검사와 관련된 제품목록은 2005.9월 개정된 법령에 따른다. 튀니지는 자동관세시스템(SINDA) 도입에도 불구하고 엄격한 기술검사, 서류 및 제품 검토로 인해 통관절차의 지연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현재 통관 소요시간은 항구/공항 도착일로부터 유통까지 3일에서 7일정도로 과거에 비해 단축되었다.

나이지리아는 고질적인 부두 악습관행이 주요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어 장기간의 통관 절차로 인한 정박 및 하역비용이 매우 높으며, 통관 규정이 일관성 있게 적용되지 않는다. 나이지리아 관세청(NCS)은 수입품 밀수나 고의적인 저평가를 막는다는 목적으로 100% 직접 검사 프로그램의 시행을 강화하였으나 사실상 모든 반입 컨테이너에 대해 검사를 실시할 만한 시스템이나 역량은 부족한 상황이다. 라고스항의 경우 하역설비를 개량하여 하역은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통관까지 45일이 소요되는 상황이다. 나이지리아 정부는 48시간내 통관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항구 통관에 관여 하던 15개 기관 중 관세청 등 꼭 필요한 기관만 남기고 표준원(SON), 식약청(NAFDAC) 등 10여개 정부기관을 모두 철수하도록 하는 조치를 실시하였으며, 2013.4.9일에는 관세청에서 'Nigeria Trade Hub(www.nigeriatradehub.gov.ng)' 포털을 설치하여 수출입 관세, 수입금지 품목 리스트, 세금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세네갈 세관은 과거 전수검사를 시행하였던 것과는 달리 최근에는 약 10% 정도만을 검사하고 있는데, 이는 사전수입증명제도(DPI) 도입과 더불어 세관당국의 통관 분석 장비 현대화에 기인한 것이다. 사전수입증명은 category C(최종소비재) 및 S(suspensive regimes)의 경우 FOB 가격 100만 CFA 이상인 경우, 그리고 품목에 관계없이 3백만 CFA 이상의 수입 시에는 의무적으로 이행되어야 한다. 제도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세네갈의 통관 절차는 전 인력의 부족과 관계 당국의 부정부패로 인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다수의 수출입 업체들은 세네갈의 세관, 통관 단계뿐만 아니라, 운송·보관·하역·선적 등 수출입 관련 모든 과정이 불투명하고 예측 불가능하여, 뇌물 없이는 원활한 수출입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한다.

가나에서 모든 수입품은 도착지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비용은 CIF 금액의 1%다. 가나 정부의 위탁을 받은 4개 민간업체가 도착지검사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으나, 수입업체들은 검사업체들의 서비스 지연, 자의적 가격 산정 등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 몰트 음료, 물, 맥주, 담배 등의 상품에 대해서는 5~140%의 물품세(excise tax)가 부과되며, 수입 차량에 대해서는 1%의 검사비용이 부과되고, 10년 이상 중고차에 대해서는 연식, 배기량에 따라 CIF 금액의 5~50%의 over-age penalty가 부과된다. 가나 관세청은 세금 부과 목적으로 중고차량별 표준가치를 산정·관리하고 있으나, 외부에는 공개하지 않고 있어 투명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 중고차는 가나 수입업체가 가장 선호하는 품목 중의 하나이다.

케냐의 수입품 통관은 케냐 관세청에 등록된 대리인을 거쳐야 하며, 관세청



에서 발행하는 수입신고서(Import Declaration Form)를 작성해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최소 5,000 케냐 실링(미화 약 71달러 수준) 또는 CIF 가격의 2.75%이다. 통관절차는 케냐와의 무역 시 가장 커다란 애로 사항의 하나로서, 절차가 느리고 복잡할 뿐만 아니라 담당자의 규정 적용이 매우 자의적이며 부정부패에 노출되어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항구에서의 수입화물 적체로 인한 통관지연 사례가 많으며 세관신고 과정에서 인보이스 금액을 초과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여 비관세장벽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 외에 세관원들에 의한 절도행위, 까다로운 수입허가 절차, 과도한 규제 등으로 인해 통관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DR콩고의 수출입업무에 관해서는 규정상 다수의 기관이 관여하고 있는 관계로, 행정업무의 지연, 관련 기관 간의 정보공유 및 조율 부재 등으로 인해 통관 과정이 지연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마타디 항구에서 수입화물 적체로 인한 통관지연 사례가 많으며 세관신고 과정에서 인보이스 금액을 초과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외에도 세관원들에 의한 절도행위, 까다로운 수입허가 절차, 과도한 규제 등으로 인해 통관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DR콩고 정부는 2010.8월 발효된 관세법을 공포하였는데, 동 법은통관업무의 창구 일원화 및 전산화, 지적재산권의 보호, 관세지불 방법 개선 및 관세부과에 따른 이의제기 방법 개선 등을 규정으로 하고 있다.

앙골라는 항구설비 부족과 관료주의로 통관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통관 지연에 따른 벌금 부과도 있어 우리 기업 진출에 적지 않은 부담이 있었으나 앙골라 정부의 집중적인 노력으로 2010.10월 앙골라 최대 항인 루안다 항구의 통관 평균 시일이 약 2주로 감소되는 등 많은 개선이 있었다. 다만, 일부 품목(특히 식료품 등)에 대해서는 하역 후 13일이 초과되는 경우 공매 처분 하는 등 통관 물품의 집안 전부터 지속적인 관찰과 노력을 통해 신속한 통관이 이루어지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추가적인 비용 발생의 부

담을 피할 수 있다. 앙골라 정부는 선적전 검사(PSI: Pre-shipment Inspection) 제도가 상품 운송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판단, 선적전 검사 법령을 2013.6.11일 개정하여 동 제도의 적용을 완화 하였다. 이에 따라 선적전 의무 검사는 7.17일자로 폐지되었으며, 수입 수출에 관계 없이 자발적인 검증 절차의 경우 요청자에 한해 검사 관리부(ADV)에서 실시하며, 정부는 가격 조건, 수량, 기술, 상업, 위생분야만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적도기니의 실질적인 통관절차는 효율적인 시스템부재와 담당공무원들의 업무태도 등에 기인하는 장애들로 통관 소요기간이 길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정박 및 하역비용이 많아 소요되며, 관련 규정이 일관성 있게 적용되지 않는다. 보편적으로는 송장에 명시되어 있는 상품 가격과 운송비용을 포함한 총액을 세금 산정 기준 액으로 인정하나, 동 기준 금액 설정에 있어 적도기니 세관원과 소모적인 협상을 해야 할 경우가 잦으며, 하역 이후에도 군부 측 검열 등 규정된 절차 이외의 절차를 외국인에게 적용하기도 하여, 규정 외 비용 발생의 원인이 된다.

세이프가드

개관

세이프가드(safeguard)는 넓은 의미에서는 한 국가가 수입으로부터 발생하는 국제수지의 악화 및 국내 산업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무역 제도적 장치를 의미한다. 즉, 관세 및 비관세조치를 포함한 모든 무역장벽의 설치뿐만 아니라 산업구조조정 및 지원 등 산업정책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모든 무역정책을 일컫는다.

그러나 국제무역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좁은 의미의 세이프가드는 특정 상품의 수입 증가로 인하여 동종 상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그 상품에 대하여 GATT 1994 제19조 및 세이프가드 협정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WTO 회원국의 대응조치를 의미한다. 세이프가드는 수입되는 상품에 대하여 출처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GATT 1994 제19조의 핵심규정은 1항(a)로서 “예견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과 관세양허를 포함하여 이 협정 하에서 체약당사자가 지는 의무의 효과의 결과로 상품이 그 영토에서 동종(like) 또는 직접적으로 경쟁적인 상품의 그 영토 내에서의 국내생산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거나 그 우려가 있을 정도로 증가된 물량과 조건하에서 동 체약당사자의 영토 내로 수입되고 있는 경우 동 체약당사자는 동 상품에 관하여 그리고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도로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동 의무를 전부 또는 일부 정지하거나 양허를 철회하거나 수정할 자유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요약하면 WTO 회원국이 수입급증으로 인한 자국 내의 산업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일정한 발동요건과 절차에 의하여 수입수량을 제

한하거나 양허의 철회를 통한 관세인상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규정이 수입규제조치와 관련된 GATT 1994의 다른 예외조항과 특이하게 구별되는 점은 세이프가드가 공정무역관행으로 발생한 국내 산업 피해 구제조치이므로 다른 조항에 비해 그 적용규정이 매우 까다롭다는 것이다. 즉, 반덤핑관세나 상계관세의 부과와 같이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대응조치의 발동에는 국내 산업의 실질적 피해가 요구되지만, 세이프가드 조치의 부과에는 그보다 높은 수준인 심각한 피해가 요구된다는 점이다. 심각한 피해가 있었는지 혹은 있을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조사에 있어서 주무당국은 동 산업의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객관적이고 계량가능한 성격의 모든 관련 요소를 평가하며 특히 관련 상품의 절대적 및 상대적인 수입증가율 및 증가량, 증가된 수입품이 국내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 판매, 생산, 생산성, 가동률, 이윤 및 손실, 그리고 고용의 수준에 있어서의 변화를 평가한다.

세이프가드는 수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하여 피해를 입은 국내 경쟁 산업에게 적절한 조정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해당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자원의 효율적 이동을 촉진시키는 데에 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국제무역장벽이 낮아짐에 따라 상이한 체제 간에 무역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급격한 혼란을 방지하는 국경조치로 세이프가드를 사용함으로써 특정 산업과 노동자들을 불가피한 심각한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자유무역경쟁에 적응할 수 있는 적절한 시간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쿼터가 수출국들 간에 할당되는 경우, 과거 대표적 기간 중에 공급한 물량이 그 상품의 총수입 물량 또는 총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근거한 몫을 할당하며, 이러한 경우 그 상품의 무역에 영향을 미쳤거나 미칠 수 있는 특별한 요소를 적절히 고려해야 한다.

세이프가드 조치가 시행되는 경우 이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되는 수출국은 사전협의 개시 30일 이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세이프가드 조치 적용 90일 이내에 그리고 보복조치에 대해 상품무역이사회에 서면통고를 한 30일 이후 보복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보복조치는 세이프



가드 조치에 의해 받은 피해에 동등한 수준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세이프가드 조치가 수입의 절대적인 증가의 결과로 시행되는 경우, 세이프가드 협정에 합치하는 조치에 대해서는 처음 3년간 보복조치의 시행이 금지되어 있다.

현황분석

WTO 회원국들의 일반 세이프가드 조사 및 발동 건수는 2003~08년 동안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다가 2009~10년에 연간 20건 이상으로 증가하였으나, 2011년부터는 다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WTO 통계에 따르면 1995년 WTO 출범이후 2012.3월까지 총 255건의 세이프가드 조사가 개시되었으며 2012년부터 2013.3월까지 새로 조사 개시된 세이프가드는 총 26건으로 인도네시아 7건, 이집트 4건, 러시아 3건, 태국 2건, 브라질 1건, 칠레 1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한편, 1995년부터 2013.3월까지 총 123건의 세이프가드가 발동되었는데 세이프가드 조치의 발동국들을 보면 인도(14건), 인도네시아(15건), 인도네시아(14건), 터키(13건), 요르단(8건), 칠레(8건) 등으로 미국, EU를 제외한 개도국들의 세이프가드 발동이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반덤핑, 상계관세 등과 함께 무역구제조치(trade remedy measures)로 불리는 세이프가드는 반덤핑이나 상계관세에 비해 정치적인 요소의 이해 시행되는 경우가 많다. 세이프가드의 경우에는 수입의 급증 여부에 따라 정부가 개입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 정치적인 영향력이 많이 미칠 수 있다고 평가된다.

주요국별 세이프가드 조사 개시 건수

국명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총계
아르헨티나	1	0	0	1	0	1	0	0	0	0	0	0	0	6
호주	0	0	0	0	0	0	1	0	0	0	0	0	0	2
브라질	1	0	0	0	0	0	0	1	0	0	0	1	0	4

국명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총계
불가리아*	1	3	1	0	0	0	0	0	0	0	0	0	0	6
캐나다	0	1	0	0	2	0	0	0	0	0	0	0	0	3
칠레	2	2	0	1	0	1	0	0	1	0	0	1	0	13
중국	0	1	0	0	0	0	0	0	0	0	0	0	0	1
콜롬비아	0	0	0	2	0	0	0	0	0	0	0	0	0	3
체코*	1	5	0	0	0	0	0	0	0	0	0	0	0	9
에콰도르	0	1	4	0	0	0	0	0	0	1	0	0	0	8
이집트	0	0	0	0	0	0	0	1	0	0	1	4	0	9
EU*	0	1	1	1	1	0	0	0	0	1	0	0	0	5
헝가리*	0	1	2	0	0	0	0	0	0	0	0	0	0	3
인도	0	2	1	1	0	0	0	1	10	1	1	1	0	29
인도네시아	0	0	0	1	1	1	0	2	0	7	4	7	0	23
일본	0	0	0	0	0	0	0	0	0	0	0	0	0	1
요르단	0	8	0	0	1	1	1	2	0	1	0	1	0	16
한국	0	0	0	0	0	0	0	0	0	0	0	0	0	4
멕시코	0	0	1	1	0	0	0	0	0	0	0	0	0	2
몰도바	0	0	0	0	1	0	0	0	1	1	0	1	0	6
모로코	3	0	3	0	0	1	0	1	1	0	0	0	0	9
필리핀	0	4	0	0	0	0	0	0	0	0	0	0	0	5
폴란드*	0	0	0	0	0	0	0	0	0	0	0	3	0	3
러시아	0	1	0	0	0	0	0	0	0	0	0	0	0	3
슬로바키아*	0	0	0	0	0	0	0	0	0	0	0	0	0	1
슬로베니아*	0	0	0	0	0	0	0	0	0	1	0	2	0	3
태국	0	0	0	5	0	5	3	1	1	0	1	1	0	17
터키	0	0	0	0	0	0	2	1	2	3	2	0	0	10
우크라이나	1	0	0	0	0	0	0	0	0	0	0	0	0	10
미국	1	1	0	0	0	0	0	0	0	0	0	0	0	6
총계	12	34	15	14	7	13	8	10	25	20	11	25	1	255¹⁾

주 1) 1995.3.29일부터 2013.3.31일까지 WTO의 모든 회원국의 합계를 나타낸다.

2) EU는 2004.5.1일과 2007.1.1일에 회원국을 확대하였다. 신규 가입국들은 EU 가입 이전의 통계가 유효하므로 상기 표에서 개별 WTO 회원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EU 관련 통계는(a) 1995.1.1~2004.4.30 기간 동안에는 15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b) 2004.5.1~2006.12.31 기간 동안에는 25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c) 2007.1.1 이후의 기간에는 27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자료: WTO

주요국별 세이프가드 발동 건수

국명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총계
아르헨티나	2	0	0	0	0	0	1	0	0	0	0	0	0	4
브라질	0	1	0	0	0	0	0	0	0	0	0	0	0	2
불가리아*	0	2	0	0	0	0	0	0	0	0	0	0	0	2
칠레	1	2	0	0	1	1	0	0	0	0	0	1	0	8
중국	0	1	0	0	0	0	0	0	0	0	0	0	0	1
체코*	1	1	2	0	0	0	0	0	0	0	0	0	0	5
에콰도르	1	0	1	1	0	0	0	0	0	1	0	0	0	4
이집트	1	0	0	0	0	0	0	1	0	0	0	1	0	5
EU*	0	1	0	1	1	0	0	0	0	0	0	0	0	3
인도	0	2	0	0	1	0	0	0	3	0	1	2	0	15
인도네시아	0	0	0	0	0	1	0	0	2	0	7	3	1	14
요르단	1	1	2	0	1	0	1	0	0	1	0	0	1	8
한국	0	0	0	0	0	0	0	0	0	0	0	0	0	2
몰도바	0	0	0	1	0	0	0	0	0	0	0	0	0	1
모로코	1	0	0	0	0	1	0	0	0	0	0	0	0	2
필리핀	0	1	1	3	0	0	0	0	1	0	1	0	0	7
폴란드*	0	0	4	0	0	0	0	0	0	0	0	0	0	4
슬로바키아*	1	0	1	0	0	0	0	0	0	0	0	0	0	2
터키	0	0	0	0	2	4	1	4	1	0	1	0	0	13
미국	0	1	0	0	0	0	0	0	0	0	0	0	0	6
총계	9	14	15	6	6	7	5	6	10	4	11	7	2	123 ¹⁾

주 1) 총계는 1995.3.29일부터 2013.3.31일까지 WTO의 모든 회원국의 합계를 나타낸다.

2) * EU는 2004.5.1일과 2007.1.1일에 회원국을 확대하였다. 신규 가입국들은 EU 가입 이전의 통계가 유효하므로 상기 표에서 개별 WTO 회원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EC 관련 통계는(a) 1995.1.1~2004.4.30 기간 동안에는 15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b) 2004.5.1~2006.12.31 기간 동안에는 25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c) 2007.1.1 이후의 기간에는 27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자료: WTO

미국은 WTO 섬유 및 의류에 관한 협정에 의해 2005.1.1일 부터 WTO 회원국에 대해서 섬유류 수입쿼터를 폐지하였는데, 미국내 중국산 섬유류 수입이 급증함에 따라 주요 중국산 섬유 수입품에 대한 특별세이프가드조치를 2005년 중 한시적으로 시행한 바 있다. 한·미 FTA를 통해 다자세이프가드 발동시 우리 수출품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우리 수출품이

세이프가드 적용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이 중국산 제품으로 인한 산업피해를 이유로 다자세이프가드를 발동하는 경우, 우리 수출상품이 동시에 발동 대상이 되는 위험도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2002.3월 **캐나다**의 철강업계는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 발동에 따라 우회적으로 철강수입이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에 따른 철강 세이프가드 조사를 요청하였다. 국제무역심판소(CITT)는 업계의 요청을 수용, 9개 품목군의 수입 철강 제품에 대해 조사를 개시, 2002.7.5일 9개 품목 중 5개 품목에 대해 산업피해 판정을 내리고 8.20일 3년간 관세쿼터 조치 결정을 발표하였다. 조치 대상 품목은 냉연강판, 후판, 철근, 일반 강판 및 형강 일부이나 열연 강판 등 한국의 주력 수출제품이 제외되어 우리나라의 철강업계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 바 있다.

2003.10월 캐나다 내각은 세이프 가드 조치의 시행을 유보하기로 결정하였다. 세이프가드 유보는 미 NAFTA 상호주의에 의거 미국을 국제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WTO 규범 위배에 따른 국제사회로부터의 비난을 피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

2005.1월 캐나다 자전거 생산업계는 중국산 등 개도국으로부터의 자전거 수입이 급증하여 피해가 크다고 CITT에 제소하였으며, CITT는 2.19일자로 조사를 시작하여, 9.1일 수출가격(FOB) 225캐나다달러(소매가 400달러 상당) 이하이고 바퀴직경 38.1cm(15인치) 이상인 자전거(도색된 자전거 프레임 포함, 조립여부 불문, 접이식 자전거 등 예외품목 있음)를 대상으로 세이프 가드를 개시하였다. 이에 따라, 대상 자전거 수입품목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1차년도 30%, 2차년도 25%, 3차년도 20%의 관세를 부과키로 하였으나, NAFTA 지역 및 캐나다와 FTA를 체결한 국가, WTO 개도국 중 당해품목 수입점유율 3% 미만 국가는 대상에서 제외하여, 실질적인 규제대상국은 중국, 필리핀, 태국 및 베트남 등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당시 對캐나다 수출물량이 미미하여 동 조치의 적용대상국이 아니었다.

이후 중국산 수입품이 각 부문에서 급증함에 따라, 2005~06년중 중국산



야외 바비큐 그릴, 가구, 섬유유리제품 등에 대하여 세이프가드 발동 신청이 제기되었다. 이중 야외 바비큐 그릴에 대하여는 2006년부터 3년간 15%의 관세를 부과하는 세이프가드 조치가 결정되었으나, 가구의 경우는 제기대상 품목이 너무 광범위하다는 이유로, 섬유유리제품의 경우에는 제조업체가 캐나다기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각 기각되었다. 이후 중국산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신청이 계속될 것이라는 예상 하에, 국제무역재판소는 중국산 제품 수입 급증에 따른 시장교란, 또는 중국산 제품의 우회수입행위에 대해 표준신청절차를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관련 기업들이 참고토록 하였다.

한편, 온타리오주 담배원료판매위원회는 2005.10월 버지니아種 담배원료에 대해 일반세이프가드를 신청, 같은 해 12월 국제무역재판소의 조사개시결정을 얻었으나, 2006.2월 동 위원회가 신청을 사실상 철회함으로써 종결처리된 바 있다.

인도의 경우 WTO 통계에 따르면 1995년 이후 2013.3월말 까지 총 29건의 세이프가드 조사를 실시하고, 이중 15건에 대해서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하였다. 2013.8월말 세이프가드 조사 우리나라 관련 품목은 무수프탈란(PAN), 디옥틸프탈레이트(DoP)에 대한 세이프가드 관세가 부과되었으며, 고무노화방지제, 아질산나트륨, 무용접 강관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가 진행 중이다.

터키의 세이프가드 발동은 2013.10월 현재 13건(안경테, 가방, 유리제품, 전자제품 일부, 나일론사, 성냥, 거울, 신발, 오토바이, PET, 섬유/의류 등)에 달하고 있으나, 이는 전 세계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세이프가드 조치이며(단, 섬유/의류는 EU 및 터키와의 FTA 체결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함), 현재 한국만을 특정하여 발동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발동기간이 끝난 후에도 터키 정부는 이를 계속적으로 연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2013.5.1 발효된 한·터FTA 기본협정 및 상품협정에 따르면 양자 세이프가드, 반덤핑/상계조치 발동 관련 절차적, 실질적 요건을 강화하여 항

후 터키의 수입규제 조치들이 다소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필리핀 정부는 2008년부터 세라믹 바닥 벽타일에 kg 당 2페소의 세이프가드를 적용하고 있다. 또한 2008.8월에도 필리핀 정부는 철재 L형강(Steel Angle Bar)에 대한 자국업체의 세이프가드 제소를 받아들여 조사한 바 있으나 2009.7.27일 우리 제품에 대해서는 시장점유율이 3% 이하임을 들어 산업피해 무혐의 판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2012.3월 필리핀 통상산업부(DTI)가 발표한 최신 제외 국가 명단에는 한국이 포함되지 않고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는 상황이며, 한국의 봉강 수출은 2013.8월 기준 L 형강은 전년동기대비 40.1%, 기타형강은 92.4% 감소하여 세이프카드 규제에 의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0.5월 필리핀 정부는 판지(Testliner Board)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하였는데, 2009년 판지의 총 수입액 310만 볼 중 우리 기업의 수출액이 절반이 넘는 157만 볼에 달하는 것으로 발표되었다. 필리핀 정부는 조사 결과 판지 수입물량이 급증하여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는 인과관계가 입증되었다고 판정하여, 2010.9.16일부터 3년간 톤당 1,324 페소(약 30미불)의 세이프가드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2013.6.14일부로 동 세이프가드 조치는 만료되었으나, 통상산업부(DTI) 주도로 판지에 대한 새로운 세이프가드 관세율이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

개관

국제무역에서 의미하는 덤핑은 수출국의 생산자 혹은 수출업자가 국내에서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수출국내에서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특정물품의 정상가격이 무역상대국(수입국)으로의 수출가격보다 높을 때에 덤핑이 성립되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액을 덤핑마진이라 일컫는다. 한편, 상계관세의 적용대상이 되는 보조금은 정책당국이 특정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산업 및 기업에 제공하는 금융·조세상의 각종 지원을 의미한다. 보조금 지급은 국내생산 및 소비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수출입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와 같은 덤핑이나 보조금 지급은 수입국 내의 효율적인 자원분배를 저해하고 시장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점에서 국제무역에서는 불공정 무역으로 간주되고 있다. 따라서 수입국 정부는 외국(수출국)의 생산자가 덤핑(보조금 지급)을 했다는 증거를 확보하고 국내의 동종 산업이 덤핑수입(보조금 지급)으로 인하여 실질적 피해를 입었거나 또는 입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 공정한 경쟁관계를 확립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덤핑차액(보조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관세, 즉 반덤핑관세(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동 제도는 GATT 1994 제6조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구체적인 조사기준 및 절차는 WTO협정 부속서 1A의 반덤핑협정과 보조금·상계관세협정에 규정되어 있다.

반덤핑협정 제16조 제4항은 WTO 회원국들이 자국의 반덤핑 관련 법률 및 규정에 관한 사항들을 반덤핑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덤

핑제도 운영에 있어서 문제점은 반덤핑협정의 모호한 규정으로 인한 제도의 자의적인 해석과 남용을 들 수 있다. 예를 들면, 덤핑마진 산정시 수출가격과 정상가격을 비교해야 하는데 조사당국의 자의적인 운용으로 덤핑마진을 확대하거나 반덤핑협정의 재심제도를 남용하여 반덤핑조치를 장기간 연장함으로써 수출국의 수출을 감소 또는 중단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이다. 또한, 일부 국가는 반덤핑협정에 규정되지 않은 우회덤핑방지규정을 국내법에 규정하고 이를 자의적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이에 2001년 공식 출범한 DDA에서 반덤핑을 포함한 규범 분야가 의제로 채택되었고 각료선언문에서는 반덤핑협상의 목적을 협정의 기본개념, 원칙, 유효성, 수단 및 목적 등을 유지하면서 현재의 반덤핑협정을 명확히 하고 개선하는데 있다고 명시하였다. 이후 반덤핑협정 개정과 관련하여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여러 건의 제안서 및 논평이 제출되었고 반덤핑 프렌즈 그룹이 결성되어 협정의 개정을 위하여 한 목소리를 내기도 하였다. 현재 DDA 협상이 지연되고 있기는 하나 현재까지 DDA 규범협상에서 논의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향후 협상에서 프렌즈 그룹은 이미 제시한 이슈를 보다 구체화하여 반덤핑협정의 개정 내용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현황분석

전세계 반덤핑 조사개시 건수는 2001년 372건을 정점으로 감소추세를 보여 왔으나, 글로벌 금융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던 2008~09년에는 연간 200건 이상으로 증가한 후 감소 추이를 보이다가 2012년에 다시 208건을 기록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때의 수준을 회복하였다. 반면, 반덤핑 발동건수는 2003년에 224건으로 정점을 기록한 후 다소 감소 추세를 보여 왔으나 2008년에는 139건으로 전년대비 29%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이후 증감을 반복하다가 2012년에는 117건을 기록함으로써 글로벌 금융위기 때 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을 보였다.

■ 전세계 반덤핑 조사 개시 및 조치 건수

(1995-2013)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총계
조사 개시	157	226	246	266	358	298	372	315	234	220	201	204	165	213	209	172	166	208	4230
조치	199	92	127	181	190	237	171	218	224	154	138	142	108	139	141	123	98	117	2719

자료: WTO를 기초로 저자 편집

국별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개시 및 조치 건수를 살펴보면 반덤핑 및 상계관세 모두 미국과 EU의 조치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인도, 중국, 브라질 등 주요 개도국의 조치도 빈발하고 있다.

■ 주요국별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개시 및 조치 건수

(1995년 1월~2012년 12월)

반덤핑			상계관세		
국가	조사개시	조치	국가	조사개시	조치
미국	469	312	미국	119	75
EU	451	285	EU	67	30
한국	113	72	캐나다	33	21
중국	200	156	브라질	7	7
인도	677	508	멕시코	5	10
캐나다	166	106	뉴질랜드	6	4
브라질	279	133	남아공화국	13	5
전세계 합계	4,230	2,719	전세계 합계	302	177

자료: WTO를 기초로 저자 편집

2012.12월 기준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치 현황을 살펴보면, 반덤핑 181건, 상계관세 19건으로 반덤핑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국별로 보면, 인도(38건), 중국(26건), 남아공(16건), 미국(15건) 및 EU(12건) 등이 우리나라에 대해 반덤핑조치를 많이 시행하였고, 미국(10건), EU(7건), 일본(1건), 남아공(1건)이 우리나라에 대해 상계관세 조치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 외국의 對한국 수입규제 현황

(조치 기준, 1995.1~2011.12월)

국가	반덤핑	상계조치
미국	15	10
캐나다	7	-
멕시코	1	-
아르헨티나	10	-
EU	12	7
터키	7	-
러시아	-	-
이집트	4	-
남아공	16	1
일 본	1	1
중 국	26	-
대 만	3	-
태 국	3	-
인도네시아	4	-
말레이시아	5	-
인도	38	-
파키스탄	7	-
호주	14	-
뉴질랜드	3	-
총계(19개국)	181	19

자료: WTO를 기초로 저자 편집.

한편 2012년 현재 전 세계적으로 규제중인 사안을 산업 분야별로 살펴보면 철강과 화학이 전체 건수의 2/3를 차지할 정도로 그 비중이 높다. 나머지는 제지, 기계류 등의 순으로 다양하다.

반덤핑 관세에 비해 상계관세조치는 1990년대에 들어 그 활용 빈도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UR 협상의 결과로 WTO 보조금·상계관세 협정에서 보조금의 정의가 보다 명확하게 규정되고 수출보조금에 대한 규정이 대폭 강화된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국가별로 對한국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 현황 및 운영상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의 반덤핑·상계관세 제도는 미국의 무역구제조치 중 가장 강력한 수단
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바, 미국은 반덤핑·상계관세 제도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국가의 하나이다. 특히, 미국의 반덤핑·상계관세 제도는 덤
핑·보조금 판정이나 산업피해판정에 있어 조사당국의 재량여지가 커서, 불
공정한 무역에 대한 제재라는 반덤핑·상계관세제도의 본래의 취지에서 벗
어나 수입을 규제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불러일으
키는 경우가 있다.

아울러, 미국은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함에 있어 소급(Retrospective) 시
스템을 적용하고 있는 바, 미국으로의 수출업체 입장에서는 현재의 수출물
량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가 부과될 경우, 원심 예비판정, 원심 최종판정,
연례 재심 등을 거쳐 2~3년 후에야 정확한 부과액을 알 수 있는 등 그
절차가 매우 복잡하다.

또 하나 유의해야 할 이슈는 제로잉(Zeroing)인데, 제로잉이란 덤핑 마진율
을 계산할 때에 마이너스(-)의 마진율은 모두 0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서,
제로잉을 적용할 경우 덤핑 마진율이 높게 나오게 되고, 對美 수출기업에게
불리하다.

WTO는 그간 수차례 원심과 재심을 막론하고 제로잉의 사용은 WTO 규정
에 위배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국은 원심의 경우 평균거래가격
대 평균거래가격 비교방식(Average to Average)을 적용할 경우에만 제로
잉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고, 타깃덤핑 등의 경우에 사용하는 평균
거래가격 대 개별거래가격 비교방식(Average to Transaction)을 적용할
경우에는 제로잉을 사용할 여지를 남겨두었으며, 재심의 경우에는 그간 평
균거래가격 대 개별거래가격 비교방식(Average to Transaction)을 사용
하고 제로잉을 적용해 왔다. 다만, 2012.2월 재심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A to A를 적용하고, 이 경우에는 제로잉을 쓰지 않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러
나 이는 향후 발생하는 재심에만 적용되며, A to A 방식 외에 다른 방식을
사용할 경우에는 제로잉을 적용할 수 있는 여지를 여전히 남겨두고 있다.

2013.11월 현재,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상계관세 부과 조치는 총

14건(반덤핑 11건, 상계관세 3건)이며, 부문별로는 철강 9건, 전자 3건(가전 2건 포함), 화학 1건, 섬유 1건 등이다.

최근 미국 철강업체가 우리나라에 대한 견제를 확대함에 따라,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 제소가 증가하고 있다. 2013.7월 이후, 철강 분야에서 반덤핑 2건(유정용 강관, 방향성 전기강판) 반덤핑·상계관세 1건(무방향성 전기강판) 등 총 3건의 신규 제소가 있었으며 미국 상무부의 예비 덤핑마진 조사 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며 2014년 상반기 중 예비판정, 하반기 이후 본판정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정부는 한·미 FTA를 통해 우리 수출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를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반덤핑 조사 개시 전 사전 통지 및 협의 를 규정하였고 가격과 물량 합의에 의한 조사 중지 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계 규정을 마련하였다. 양국 간 무역구제위원회를 구성, 반덤핑 관련 규정의 이행 및 준수 여부를 감독, 논의하는 제도적 장치를 확보함으로써 우리 수출기업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대화 채널을 마련하였다. 특히, 이용 가능한 사실(facts available: 조사기관이 조사대상 기업이 제출한 답변이 미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사기관이 이용 가능한 사실 관계에 근거 해서 판정을 내리는 관행) 및 현장 실사(verification procedure: 조사기관 이 조사대상 기업이 제출한 답변의 사실성 확인을 위해 피조사 기업을 방문 조사하는 절차)와 관련한 조사 관행을 무역구제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명 시함으로써, 우리 수출자들이 미국의 반덤핑 조사에 대응하는데 겪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채널을 마련하였다. 또한, 다자세이프가드 발동 시, 우리 수출품은 적용대상에서 선택적으로 배제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함에 따라 미국이 중국산 제품으로 인한 산업피해를 이유로 다 자세이프가드를 발동 시, 우리 수출상품이 동시에 발동 대상이 되는 위험도 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U는 2013.8월말 기준 24개국에 대해 84건의 반덤핑 조치와 7개국에 대해 10건의 보조금 상계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총 37건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 시행 중인 반덤핑 조치 중 52건이 중국산으로 가장 많고 대만(7건), 태국(7건), 러시아(6건), 말레이시아(6건), 인도(5건) 등 순으로 무역구제 조치를 받고 있다. 또한 보조금 상계조치의 경우, 인도가 4건으로 가장 많고, 중국(2건) 순이다.

2009년부터 2013.8월말까지의 무역구제를 제품 분야별로 보면 철강과 화학 제품이 주요 대상이 되어 왔으며, 화학제품의 경우 2009년 이후 총 27건에 대해 신규 조사가 개시되어 동기간 중 총 신규 조사개시 건수의 30%를 넘어 수위를 차지했으며, 철강분야에 대한 신규 조사도 24건으로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3.8월말 현재 EU로부터 총 3건(철강제 관연결구류, 강철사, 실리콘)의 반덤핑 규제 조치를 받고 있으며, 이 중 강철사와 실리콘은 우회덤핑 규제대상 품목이다. 상계관세나 세이프가드조치를 적용받고 있는 대 EU 수출품은 없다.

EU는 2013년에는 8월말까지 신규로 3건의 반덤핑 조사와 1건의 상계관세 조사를 개시하였다. 신규 조사를 개시한 4건 모두 중국 원산지 제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지난 5년간 가장 많이 무역구제 신규 조사대상이 된 국가는 중국으로 총 36건의 조사를 받아, 동기간 EU 전체 총 조사 개시 건수의 약 43%를 차지하고 있다. 그 외에 EU로부터 무역구제 신규 조사대상으로 지정된 국가는 인도(10건), 인도네시아(4건), 태국(4건) 등이며, 우리나라는 동기간 1건(강철사 우회덤핑, 2009년)의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영국,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룩셈부르크, 폴란드,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체코, 헝가리 등은 EU 회원국으로서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단독으로 제 3국에 대해 수입규제 조치를 취할 수 없으며, 제3국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는 EU를 통해서만 취할 수 있다. 즉, 수입규제 조치는 EU 차원에서 결정되며, EU 집행위가 타당하다고 판단해 결정한 조치는 EU 전 회원국에서 동시에 이행된다. 역

외국 제품에 대한 수입관세율은 물론이고 반덤핑관세 조치, 상계관세 조치, 세이프가드 조치, 수입쿼터제도 등도 EU의 27개 회원국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캐나다는 ‘특별수입규제조치법(Special Import Measures Act)’에 의거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캐나다가 현재 규제 중인 반덤핑 조치의 절반 이상은 철강제품에 대한 조치이다. 캐나다는 NAFTA 지역 내에서는 상호간 반덤핑·상계관세의 적용을 배제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1997년에 체결된 캐나다-칠레 간 자유무역협정에서는 상호간 반덤핑·상계관세 조치의 적용배제 조항을 명문화하였다. 2000.3월 특별수입규제법이 개정되었는 바, 잠정덤핑 판정 시 종전에는 관세·국세부만이 관여하였으나 개정된 법에서는 캐나다 국제무역심판소(CITT)도 산업피해 여부를 조사토록 하였다. 또한, 재심 시에는 캐나다 국제무역심판소 이외에도 관세·국세부도 덤핑여부를 조사토록 하였다. 2004년 이후 정부조직개편으로 관세업무가 신설된 국경서비스청(Canadian Border Service Agency)으로 이관됨에 따라, 현재 덤핑판정업무는 국경서비스청에서 담당하고 있다.

2013.9월 기준 캐나다는 25개국, 23개 품목을 대상으로 수입규제 조치를 적용하고 있으며, 중국은 단일국가로서 총 20개 품목에 대해 반덤핑 및 상계관세가 적용되고 있는 최대의 수입 규제 대상국이다. 한편, NAFTA가 체결된 미국을 대상으로도 감자, 정제당, 동제관연결구 3개 품목에 대해 반덤핑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2013.9월 기준 반덤핑 규제를 받고 있는 한국의 제품은 총 5종으로서, 탄소강 용접관, 유입식 변압기, 구조용 강관, 동제 관 연결구, 동관이다. 어망용 로프, 방수고무화, 포켓식 앨범도 규제를 받아오다가 1997년 이후 해제되었으며, 앨범시트도 2000.8월 반덤핑규제가 해제되었다. 그러나 1998년에는 우리의 경제위기 여파로 對캐나다 철강수출이 급증함에 따라 스테인리스 봉강이 새로이 반덤핑 판정을 받았으며, 철근도 2000년 초부터 대상에 포함되었다. 또한, 1999년 후판 및 아연도 강판도 재심결과 반덤핑 조치가 연장되었다. 2001년 들어 열연코일 및 냉연강판에 대한 덤핑제소로 잠정관세가



부과되었으나, 열연코일은 8.17일 냉연강관은 10.9일 각각 산업피해 부정판정으로 규제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그밖에 15년간 장기규제를 받아오던 유정용 강관이 2001.7.4일 종료재심 결과 규제조치가 철회되었다. 2003년과 2004년에 구조용 강관과 스테인리스 강선에 대한 규제가 추가되었으나 1994년 이후 규제대상이었던 중후판과 아연도 강관은 규제조치가 종료되었다. 2005년 들어 1984년 규제시작 이후 21년 만에 탄소강관이 종료재심을 통해 규제가 해제 되었으며, 철근, 스텐레스 봉강 또한 규제가 해제되는 등 신규 제소된 사례 없이 모두 3건의 철강관련 규제가 해제되었다. 2009년에는 7.29일 스테인리스 강선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조치가 종료되었다.

2006.6월에는 한국산 및 미국, 중국산 동제 관 연결구류에 대한 덤핑여부 조사가 개시되어 덤핑긍정판정이 내려졌으나, 우리 수출기업 중 가장 큰 수출비중을 차지하는 기업의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1.9%의 낮은 덤핑관세율을 적용받았다(여타기업들은 37~242%). 한편 2012.9.26일에 캐나다 국경서비스청은 공시를 통해 동제 관 연결구류에 대한 덤핑 재조사를 실시할 것을 밝혔으며 2013.2.8일 경에 재조사 결과에서 현재의 반덤핑 규제를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2012.4월과 5월에 캐나다 국경서비스청은 한국산 유입식 변압기(Liquid Dielectric Transformers)와 탄소강 용접관(Carbon Steel Welded Pipe)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시행하였다. 2012.7월과 8월에 발표된 캐나다 국제 무역재판소의 예비판정에서 두 품목 모두 덤핑 혐의가 인정되었으며 2012년 10월과 11월에는 두 품목 모두 최종판정에서 덤핑 혐의가 인정되었다. 이에 따라 캐나다 국경서비스청은 두 품목에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유입식 변압기의 경우 2개의 업체에 대해서는 16.9~17.4%의 반덤핑관세가 부과되고 다른 한국 업체 제품에는 72.7%가 일괄적으로 부과된다. 더불어 탄소강 용접관의 경우 54.2%의 반덤핑관세율이 일괄적으로 부과되고 있다.

한편 2013.5월에는 동관에 대한 덤핑 조사가 시작되었으며 8월 예비판정에서 덤핑 혐의가 인정되어 한국 기업 N사의 제품(N사 제품에는 6.0%)을

제외한 모든 한국산 제품에는 109.8%의 잠정 반덤핑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한국산 동관에 대한 덤핑 최종판정은 2013.11.18일로 예정되어 있다.

■ 한국 상품에 대한 반덤핑 규제 현황

(2013.9월 기준)

	최초규제	현 규제기간
구조용강관	2003.12	2003.12~미정
동제관연결구류	2007.2	2007.2~미정
유입식 변압기	2012.7	2012.7~미정
탄소강 용접관	2012.8	2012.8~미정
동관	2013.8	2013.8~미정

※ 자료: 캐나다 국경서비스청(CBSA)

호주는 2011년, 2012년 관세법 개정 등을 통해 반덤핑 조사 신청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확대, 덤핑 및 피해 평가방법 개선, 조사기간의 단축, 이해 관계자의 범위 확대, 판결절차 개정(까다로워진 반덤핑 조치 만료, 조사당국의 재심사신청 재량권 확대) 등 수입규제 강화 조치를 취해오고 있다.

2012.12월 연방정부 총리가 산업부장관, 내무장관과 공동으로 호주의 제조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반덤핑 제도 개혁방안을 발표하면서, 15만 명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화학, 철강, 알루미늄, 제지 부문의 제조 산업이 덤핑제품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히고 덤핑제품으로부터 이들 산업과 고용을 보호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이 분야에 대한 반덤핑 조치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 7.1일 반덤핑, 상계관세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의 위상과 기능을 대폭 강화하여 ‘반덤핑위원회’를 신설하였다. 이와 함께 조사당국 인력증원 및 재정지원 확대, 반덤핑 제도 간소화, 우회덤핑에 대한 재제 강화 등을 추진 추진하고 있다.

호주의 반덤핑 제도의 특징은 덤핑 조사기간을 최소화(조사신청에서 덤핑 방지관세 부과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205일에 불과)하면서, 복잡하고 어려운 건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조사기간을 연장하여 대응토록 함으로써, 덤핑



으로부터 국내기업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있다는데 있다.

호주의 덤핑 방지 관세 계산은 Combination Duty 방식을 채택하여 통상적으로 계산되는 덤핑 마진(Fixed Amount=정상가격-확인수출가격)에 덧붙여, 이후 실제수출가격이 덤핑 조사 대상기간중의 확인수출가격보다 낮을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Variable Amount)을 추가하여 덤핑방지 관세로 부과하고 있다.

Combination Duty 방식에 대한 국내 수출기업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며, 조사대응 시 덤핑 마진을 줄이는 노력뿐만 아니라, Variable Amount를 낮추기 위한 노력도 함께 병행해 나가야 한다.

■ 호주의 반덤핑 조치 현황(2013.10.1 기준)

Commodity	Country	HS code
2,4-Dichlorophenoxyacetic acid	China	2918.99.00/3808.93.00
Aluminium extrusions	China	7604.10.00/7604.21.00/7604.29.00 7608.10.00/7608.20.00/7610.10.00 7610.90.00
Aluminium Road Wheels	China	8708.70.91/8708.70.99/8716.90.00
Ammonium nitrate	Russian Federation	3102.30.00
Aluminium Zinc Coated Steel	China, Korea and Taiwan	7210.61.00
Biodiesel	USA	2710.20.00/3826.00.10
Cartonboard, greyback	Korea	4810.13.90/4810.19.90/4810.29.90 4810.99.00
Clear float glass	China, Indonesia and Thailand	7005.29.00
Currants, processed dried	Greece	0806.20.00
Galvanised Steel	China, Korea and Taiwan	7210.49.00/7212.30.00
Geosynthetic clay liners	Germany	6815.99.00
Hollow structural sections	China, Korea, Malaysia and Taiwan	7306.30.00/7306.61.00/7306.69.00
Hot rolled plate steel	China, Indonesia, Japan, Korea and Taiwan	7208.40.00/7208.51.00/7208.52.00 7225.40.00

Hot rolled coil steel	Japan, Korea, Malaysia and Taiwan	7208.25.00/7208.26.00/7208.27.00 7208.36.00/7208.37.00/7208.38.00 7208.39.00/7208.53.00/7208.54.00 7208.90.00/7211.14.00/7211.19.00
Mushrooms, preserved	China	2003.10.00
Pineapple fruit - Consumer & FSI	Philippines and Thailand	2008.20.00
Polyethylene, linear low density	Thailand	3901.10.00/3901.90.00
Polyvinyl chloride resin(PVC)	Korea, USA and Japan	3904.10.00
Rims, tubeless, demountable	China	8708.70.99
Silicone emulsion concrete admixtures	USA	3824.40.00
Sodium Hydrogen Carbonate	China	2836.30.00

최근 광산개발 붐에 따른 호주화 강세, 인건비 상승이 지속되어 호주의 제조업 경쟁력이 전반적으로 약화됨에 따라, 주요 업종별 단체 및 노조들이 반덤핑 제도의 활용을 적극 주장하고 있어 호주 기업의 수출 및 내수시장 점유율이 급격히 축소되고 있는 품목을 중심으로 반덤핑 조치 신청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는 2006년 이후 규제대상품목이 지속 감소해 왔으나 최근 호주 제조업 경쟁력이 크게 약화됨에 따라, 국내산업과 고용을 보호하기 위해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반덤핑 대상품목: 10개(2006.6)→9개(2006.12)→8개(2007.5)→6개(2008.4)→5개(2008.8)→4개(2008.12)→3개(2008.12)→2개(2009.4)→1개(2010.3)→3개(2012.9)→7개(2013.10)

2013.10.1일 기준 호주정부는 한국, 중국, 미국, 일본 등 14개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21개 품목에 대하여 반덤핑 및 상계 관세 규제조치를 시행 중이다.

국가별로는 중국 11개 품목, 한국 7개 품목, 대만 4개 품목, 태국 3개 품목, 일본 3개 품목, 미국 3개 품목, 말레이시아 2개 품목이고 러시아, 독일, 그리스,



캐나다, 인도네시아, 대만 및 필리핀 등은 각각 1개 품목이 규제 대상이다.

한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백판지의 경우, 당초 2010.7.27일 종료 예정이었으나 호주 관세청은 호주 내 관련 산업체의 신청에 의거 반덤핑 관세 부과기간의 연장 필요성 조사 결과 부과 기간을 2015.7.27일까지 연장하였다.

한국산 PVC는 2000.3.24일 시작되었던 반덤핑 관세 부과가 2010.3.23일 종료되었으나, 이후 수출이 급증하여 호주의 전체 수입물량의 약 25%를 점유하게 됨에 따라, 2012.6.28일부터 반덤핑 관세가 다시 부과되고 있다.

나머지 5건은 열연코일, 열연강판, 아연 도금강판, 알루미늄 아연 도금강판, 철강파이프(HSS) 등 철강제품에 집중되어 있다. 호주의 철강기업들이 (One Steel, BlueScope Steel) 신제품 개발보다는 손쉽게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광산개발에 에너지를 집중해오면서 철강제품의 품질과 가격 경쟁력이 크게 약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수출시장을 포기하고 국내시장을 필사적으로 지켜내기 위하여 반덤핑 제도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데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호주시장 수출량이 적은 일부 품목의 경우 반덤핑 조사 대응 비용이 과다하고 원가 정보의 누출 우려도 있어 덤핑 조사에 대한 대응을 포기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덤핑 조사에 대응하지 않을 경우 비협조기업으로 분류되어 고율의 덤핑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호주 기업들이 이러한 점을 활용하여 반덤핑 제소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미래의 수출 확대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지 않도록 가급적 우리 기업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호주의 반덤핑 조사는 매우 신속하게 진행(조사 신청 시부터 덤핑 방지관세 부과 시까지 소요기간: 205일에 불과)되고 있어서 사전에 충분히 대비하지 않을 경우 효과적인 대응이 곤란하다. 각 수출기업들은 전담팀(또는 전담자)를 지정하여, 시장상황과 반덤핑 제소 동향을 파악하고 덤핑 마진율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필요할 경우, 회계문서 등 관련 자료들을 사전에 준비해 둘 필요가 있다.

한편, 호주 정부는 2005.5월 중국과의 FTA협상 개시와 함께 중국을 반덤핑 조사에서 시장경제국가(Market Economy) 지위를 인정하였다. 이에 따라 중국산 수출제품들이 보다 공정한 반덤핑 조사기회를 부여받게 되어 과거 보다 반덤핑 규제 가능성이 낮아지게 되었다.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에 근거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반덤핑 법」, 「중화인민공화국 반보조금 조례」 및 「중화인민공화국 세이프가드 조례」(2002.1.1 시행)를 제정 발표하였다.

2003.3월 중국정부조직 개편으로 과거 국가경제무역위원회가 해체되면서 산업피해 조사 및 판정, 산업피해 예보제도 운영, 산업안전 관련 홍보와 자문 등을 주요업무로 하는 산업피해조사국이 상무부로 이관되어 과거 대외 무역경제합작부와 국가경제무역위원회로 이원화되었던 무역구제기관이 상무부로 단일 통합되었다.

2013.9월말 현재 중국은 한국산 제품에 대해 총 16건의 반덤핑 규제를 시행(이외에 2012.7월부터 폴리실리콘에 대한 반덤핑 조사가 진행 중)하고 있다. 폴리실리콘에 대한 반덤핑 조사는 2009.2월 TPA(테레프탈산) 반덤핑 조사 개시 이후 3년여 만에 있는 신규 조사로서, 한-중간 교역규모의 급성장에 비해 최근 중국의 한국산 제품에 대한 신규 반덤핑 제소 건은 감소 추세에 있는 등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 연도별 중국의 對韓 반덤핑규제 발동 건수

'06	'07	'08	'09	'10	'11	'12
1	1	2	1	0	0	1

그러나 13건으로 수입규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석유화학 분야에서 양국 간 무역마찰 가능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중국 상무부는 2010.8월 한국산 TPA(테레프탈산)에 대한 반덤핑 조사 원심 최종판정을 내렸으며, 2~3%의 낮은 마진율을 도출하였다. 동 케이스는 중국의 대한민국 반덤핑 조치 중 가장 큰 규모(2011년 수출액 37억 달러)였으나, 양국 정부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성공적으로 대응한 사례로 볼 수 있다.

이외에도 황산 및 PE/PP 등 주로 석유화학 분야에서 중국기업들이 반덤핑 조치를 요구하고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12.7월에 반덤핑 조사가 새롭게 시작된 폴리실리콘은 2013.7월(연장시 2014.1월)까지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태양광제품의 주요 원료로서 2011년 대중 수출액이 12억 달러에 달하는 중요한 통상 현안이다. 2013.7월 예비 판정 결과 한국산은 대부분 2.4~2.8%의 낮은 덤핑율을 부과 받았으나, 미국산은 53.3~57%의 높은 덤핑률이 부과되었다.

브라질은 1994년 이후 GATT 및 WTO의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의 수입규제 조치를 국내법에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브라질은 1988년부터 2012년까지 총 229건의 수입규제 조치를 발동하였다. 이중 91.2%인 209건이 반덤핑, 4.4%인 10건이 상계관세, 2.6%인 6건이 세이프가드와 관련된 조치였다.

최근 5년간 수입규제 조치 신규 건수를 보면, 2008년 16건, 2009년 19건, 2010년 12건, 2011년 15건, 2012년 18건으로 최근 3년 사이에 급증한 것을 알 수 있다. 주요 국가별로 보면, 중국이 59건으로 제일 많고, 미국 25건, 인도 15건, 멕시코 9건, 러시아 8건, 남아공 6건, EU 5건 등이다.

브라질은 수입규제 조치 중 반덤핑관세의 적용이 두드러지는데, 2012.1월~9월간 47건의 신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함으로써 종전 최다 기록인 2010년 40건을 넘어선바 있다. 대표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산업은 1) 철(25%), 2) 플라스틱 및 고무(16.7%), 3) 의류(16.7%) 순이다. 브라질 반덤핑관세 적용 국별 순위를 보면 1995-2012간 중국 79건(1위), 미국 52건(2위)을 차지하고 있으며, 2012년만 볼 경우 우리나라도 브라질이 진행한 반덤핑 조사 총 28건 중 6건에 해당하여 중국 다음으로 많은 건수를 기록한바 있다.

반덤핑 관련 브라질 정부조직 체계를 살펴보면, 덤핑 및 산업피해 조사 실무는 무역구제국(DECOM), 반덤핑관세 부과 결정은 대외통상위원회(CA-

MEX), 반덤핑관세 징수는 관세청(SRF)에서 담당한다.

대외통상위원회는 7개 부처 장관으로 구성(개발상공부장관이 의장)되어 있으며, 반덤핑 관세 부과 여부를 확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다. 대외통상위원회 밑에 공공이익을 검토하기 위한 기술그룹으로서 2012년에 설립된 GTIP가 있으며, 무역구제국이 제출한 기술보고서를 정리하여 1-2 페이지 내외의 최종보고서를 대외통상위원회에 제출한다.

2013.10월 기준, 우리나라는 5개 품목에 대해 반덤핑 조치가 적용되고 있고, 현재 총 5개 품목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받고 있는 등 우리나라 제품의 대브라질 수출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수입규제 조치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반덤핑 조치가 적용되고 있는 5건은 PVC-S(염화비닐수지), 철강 3개 품목(실리콘강판, 후판, 냉연강판), 부타디엔 고무이며, PVC-S 제품의 경우 2008.9월부터 2013.8월까지 조치가 적용된 이후 일몰재심이 확정(2013.8.29일)되었다.

최근 도금강판에 대한 조사는 중단이 결정 되었고(2012.9.27일) 폴리카보네이트 수지 제품은 무혐의 판정(2013.6.20일)을 받았다.

브라질정부는 2012년 상반기 수입이 대폭 증가한 한국산 타이어 및 나일론사 제품에 대해 덤핑 혐의를 제기하고 7월에 사실 여부 조사를 시작하는 등 현재 나일론사, 승용차용 타이어, 액상 에폭시수지, 폴리프로필렌수지, 상업용 타이어 총 5개 품목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2012년 한국산 타이어 수입액은 7,412만 미불로 전년 동기대비 39.6% 증가하였으며, 나일론사의 경우 2012년 HS Code 5402.31 제품이 전년 대비 56.47% 증가하였다.

■ 우리나라에 대한 덤핑 혐의 조사 현황

구분	구분	업종	품 목	조사 착수	결 과
2009년 까지	1	섬유	인조합성사	1993.11	1994.12, 무혐의 판정
	2	섬유	나일론6번사	2000.1	2001.6, 덤핑판정(5.2%), 2006.6 종료
	3	철강	스테인리스강관	2000.6	2001.5, 무혐의 판정



구분	구분	업종	품 목	조사 착수	결 과
	4	화학	PVC	2001.11	2002.11, 무혐의 판정
	5	섬유	폴리에스테렐레진	2004.3	2004.7, 무혐의 판정
	6	화학	PVC	2007.9	2008.8, 덤핑판정(2.7%), 일몰재심 개시(2013.8.29)
2010년	7	화학	SBR(부타디엔)고무	2010.6	2011.6 덤핑 판정(8.9%, 3.4%)
	8	철강	도금강판	2010.8	2012.9 무혐의 판정
	9	화학	NBR합성고무	2010.10	2012.3 무혐의 판정
2011년	10	철강	도금강판	2011.4	2012.9 조사 중단
	11	화학	폴리카보네이트수지	2011.12	2013.6, 무혐의 판정
2012년	12	철강	실리콘 강판	2012.4	2013.6, 덤핑 판정
	13	철강	냉연 강판	2012.4	2013.10 덤핑 판정
	14	철강	후판	2012.5	2013.10 덤핑 판정
	15	섬유	나일론사	2012.7	조사 중
	16	화학	승용차용 타이어	2012.7	조사 중
2013년	17	화학	액상애폭시수지	2013.1	조사 중
	18	화학	폴리프로필렌수지	2013.3	조사 중
	19	화학	상업용 타이어	2013.6	조사 중

멕시코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제도는 1993.7.28일 개정된 대외무역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국내생산의 25% 이상을 점하는 업체 또는 단체에 의한 제소에 따라 조사가 가능하며 경제부 무역구제본부(UPCI: Unidad de Practicas Comerciales Internacionales)의 직권조사도 가능하다. 제소 접수 후 30일 이내에 조사여부를 결정하고, 조사 개시일로부터 130일 이내에 예비판정을 내려야 하며 260일 이내에 최종판정을 내려야 한다. 최종판정의 효력은 5년간 지속되며 당사자의 요청으로 매년 재심이 가능하다.

1992년 이후 반덤핑 제소가 증가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수입증가에 따른 국내산업 피해와 무역적자 확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2013.8월 부과 중인 반덤핑 건수는 14개국 35품목 44건이다. 반덤핑관세를 국가별로 보면 중국 14건, 미국 7건, 러시아 4건, 우크라이나 4건, 브라질 4건, 한국 2건, 인도 2건, 그 외 칠레, 프랑스, 일본, 카자흐스탄, 영국, 루마니아, 베네수엘라가 각 1건이다.

우리나라 상품에 대해서는 1992년부터 2013년까지 9개 품목에 대해 반덤핑 제소가 이루어져 조사가 진행되었다. 2000년 LG를 비롯한 한국산 중소형 냉장고가 반덤핑으로 제소된 이후 2001.6월 예비판정(35.3%의 잠정관세)이 내려졌으나 그 이후 2002.3.8일 최종적으로 무혐의 판정이 난 바 있다. 2001.6.22일 한국산 폴리에스터 필라멘트사에 대해서는 16.3%의 반덤핑관정으로 반덤핑관세가 부과되어 오다가 2007.5.5일 종료되었다.

1993.8.19일에는 한국산 폴리에스테르 단섬유사(PFC, Poliester Fibra Corta)에 대해 최초로 반덤핑 관세 부과 후, 일몰 심사를 통해 1998.8.20일 및 2003.8.20일, 2008.8.20일 등 매 5년마다 동 조치를 연장하였다. 2008.8.19일 세 번째 일몰 심사에서 UPCI는 멕시코 이해관계사(Akra Polyester, 마길라도라 지역 생산업체와 계약에 의해 동 품목을 멕시코 국내에 공급함)의 요청에 따라 동 조치의 연장 여부를 재조사기로 결정하고 2008.8.23일 한국의 생산회사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였다. 이에 한국 생산기업(웅진(구제일), 휴비스(구삼양))은 2008.9월 및 2008.11월에 생산가격, 수출가격, 생산시설 규모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2009.5.25일에는 사전설명회에 이어 2009.6.2일 공청회(원고 측: Akra Polyester, 피고 측: 대사관 및 KOTRA)가 열렸다(한국 생산기업 및 수출기업들이 참석하지도 않고 대리인도 지명하지 않음에 따라 정부 측에서 참석). 공청회에서 Akra Polyester측은 과거 동 품목수입에 의해 멕시코 국내산업이 피해를 받으며, 한국의 동 품목 생산 능력과 재고는 많은데 비해 수출할 곳이 많지 않아 반덤핑 규제가 풀릴 경우 멕시코 산업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 측은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15년이라는 기간은 멕시코 국내산업이 입었던 피해를 회복하는데 충분한 시간이며, 추가적인 반덤핑 조치의 연장은 피해를 초래하는 덤핑을 상쇄하는데 필요한 기간과 수준을 초과한다는 점을 들어 동 조치를 즉각 철폐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최종판결 결과 2013.8.19까지 반덤핑 관세 부과 연장이 결정되었다. 멕시코 경제부 UPCI는 또 다시 2013.8.7일 관보를 통해 동 반덤핑 부과에 대해 5년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일몰 심사 절차를 발표하였다.



한편, 2012.10.1일 UPCI는 멕시코 철강회사인 Ternium사의 신청(7.6)을 받아 들여 한국산 냉연강판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한다고 관보를 통해 발표하였다. 조사대상 품목은 도금 코팅을 하지 않은 너비 600mm이상, 두께 3mm 미만의 한국산 냉연강판(미소둔 강포)이며, 제소기준으로 멕시코 냉연강판 수입량은 2011년 881,879톤이며 이중 한국산이 425,181톤을 차지하고 있다. UPCI는 양 당사자의 자료를 토대로 검토한 결과, 2013.6.3일 한국산 포스코 냉연강판에 60.4%, 현대 하이스코 제품에 6.45%라는 고율의 덤핑 예비판정을 내린 바 있으며, 공고 후 30일 이내 이해당사자의 이의 신청을 받은 후 공청회를 거쳐 최종판정을 내릴 예정이다.

터키의 반덤핑 관세조치는 2013.10월 기준으로 22개 국가 120개 품목에 이르며, 세이프가드 발동은 전 세계 국가들 및 특정 국가들을 대상으로 13건(HS 코드별 품목 수 아님) 발동하는 등 수입규제가 심한 편이다.

터키의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 동향을 보면, 우선 반덤핑의 경우 2013.10월 현재 3개 품목에 대하여(HS 코드 기준) 부과되고 있으며 섬유품목에 집중되어 있다.

한편, 세이프가드 발동은 2013.10월 현재 13건(안경테, 가방, 유리제품, 전자제품 일부, 나일론사, 성냥, 거울, 신발, 오토바이, PET, 섬유·의류 등)에 달하고 있으나, 이는 전 세계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세이프가드 조치이며(단, 섬유·의류는 EU 및 터키와의 FTA 체결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함), 현재 한국만을 특정하여 발동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발동기간이 끝난 후에도 터키 정부는 이를 계속적으로 연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2013.5.1 발효된 한-터 FTA 기본협정 및 상품협정에 따르면 양자 세이프가드, 반덤핑·상계조치 발동 관련 절차적, 실질적 요건을 강화하여 향후 터키의 수입규제 조치들이 다소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터키의 반덤핑조사와 관련, 대사관에서는 조사대상 업체들과의 협의 및 경제부 관계자와의 면담 등 기회를 통하여 조사협력업체에 대해 반덤핑 관세

가 철폐되거나 저율의 관세가 부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다만, 효과적인 교섭을 위해서는 예비조사 전 혹은 예비조사 중이라도 가급적 이른 시기에 담당기관과의 양자협의를 하는 것이 효과적인 바, 반덤핑 예비조사 공개 단계에서부터 해당기업들과 긴밀히 협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대사관은 터키 업체들의 수입규제 움직임을 사전에 파악하여 가급적 수입규제 제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업체와 터키 관련 업체 사이의 사전 협의를 갖도록 권유하고 있다.

한편 터키의 반덤핑 관행이 WTO협정에 따르고 있기는 하나, 집행과정에서 주요 결정문에 대한 공고를 시기적으로 촉박하게 알려주거나, 공청회 개최, 해당기업의 반박서 제출시한 등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지 않는 등의 관행이 지속되고 있어 대사관에서는 이에 대한 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자국 산업에 피해를 야기할 것으로 우려되는 수입 제품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수시로 하고 있으며, 국내산업의 보호를 위해 뚜렷한 덤핑 혐의가 없는 경우에도 단기간에 수입물량이 증대된 경우 일단 조사에 착수하여 수입을 규제시키는 경우가 많다. WTO에 따르면 아르헨티나는 2008. 10월 이후 30개 이상의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였는바, 대부분은 주요 교역 상대국인 브라질 및 중국으로부터의 섬유류, 신발, 금속 제품 등이 해당되며, 몇몇 조사 건에 있어서는 잠정관세를 부과하였다.

2004년도에 개시된 한국산 폴리에스테르 직물과 PET chip에 대한 조사의 경우, 우리 정부와 관련 업체가 적극적으로 공동대처한 결과, 가격인상 및 무혐의 판정이라는 성과를 거둔바 있다. 2009.11월 냉연강판(규제기간: 2008.1.10~2012.1.10)과 아연철판(2008.5.25일 재심 개시, 재심기간 종료 시까지 규제 유효)에 대해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고 있고 폴리에스테르 섬유에 대한 규제는 2008.8.22일에 종료되었다. 2010.2.16일에는 국산 에어컨에 대한 반덤핑 조사가 개시되었으며, 반덤핑관세 부과 없이 2011.7.18일 조사가 종료되었다. 2010.12.15일에는 한국산 코팅지에 대한 조사가 개시되었고, 2011.12.1일 한국산 코팅지는 수입물량이 미소하다는 이유로 조사대상



에서 제외되었다. 2012.4.25일 한국산 PET 제품 원료(폴리에틸렌 테레프탈 라테)에 대해 조사가 개시되어 2012.8.21일 예비 판정(덤핑 마진 14.26%) 후 2013.10월 최종 판정이 예정되어 있다. 2013.1.4일 한국산 유압식 변압기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여 2013.10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반덤핑 판결 사례

- 1994.8.11 한국산 컬러 TV(14인치, 20인치) 반덤핑 판정, 관세 부과
- 1996.9.3 한국 가전 3사의 전자레인지에 대해 반덤핑 판정
- 1998.1.20 한국산 가정용 세탁기에 반덤핑 조사 실시
- 2000.6.22 폴리에스터, 나일론에 대해 향후 3년간(2000.6.23 ~ 2003.6.22) FOB 기준으로 kg당 최저가격을 9.5달러로 정하고 이하인 경우 그 차액에 대해 덤핑세율(나일론: 97.78%, 폴리에스터: 46.075%) 적용
- 2001.5.31 재생식물에 대한 반덤핑 조치를 결정하고 향후 5년간 8.73달러/kg의 최저 수입가격 적용
- 2001.6.2 아세테이트 필라멘트 직물에 향후 5년간 최저가격 kg당 8.73미 달러 판정
- 2001.6.21 1,000cc 소형오토바이 및 스쿠터에 대한 세이프가드 결정, 향후 3년간 최저 수입 관세 부과기로 최종 결정
- 2002.12.5 일회용 주사기 덤핑 무혐의 판정
- 2003.1.11 냉연강판제품 반덤핑 관세 결정(CIF가격 기준 60.46%의 고율 반덤핑 관세 5년간 부과, 현재 적용 중)
- 2003.5.28 아연철판제품 반덤핑 관세 결정(CIF가격 기준 49.67%의 고율 반덤핑 관세 5년간 부과, 현재 적용 중)
- 2002.11.15 폴리에스터 화이버에 대한 반덤핑 판정(3년간 U\$1.85/kg의 최저수입가격 부과)
- 2005.8.22 한국산 폴리에스테르 섬유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기로 판정하였으나, 한국의 주요 5개 업체와는 예외적으로 자발적인 가격인상에 합의함으로써, 가격인상에 참여한 우리 주요 기업들에게 특혜 부여
- 2005.9.28 한국산 PET chip에 대한 무혐의 판정
- 2008.1.10 냉연강판제품에 대한 규제기간 종료

- 2008.1.10 냉연강판제품에 대한 규제기간 연장(2012.1.12일까지)
- 2008.4.2 한국철강협회로부터 냉연강판제품에 대한 아르헨티나 측의 반덤핑 조치 관련 대응 불요 입장 접수
- 2008.5.29 아연철판제품에 대한 규제기간 종료(2008.5.25일 재심 개시, 재심기간 종료 시까지 규제 유효)
- 2008.8.22 폴리에스테르 섬유에 대한 규제기간 종료
- 2010.2.16 에어컨에 대한 반덤핑 조사 개시
- 2010.12.15 코팅지에 대한 반덤핑 조사 개시
- 2011.7.18 에어컨에 대한 무혐의 판정
- 2012.12.1 한국산 코팅지에 대한 반덤핑 조사 대상 제외
- 2012.4.25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라테에 대한 반덤핑 조사 개시
- 2013.1.4 삼상(유약) 변압기(단락 용량 1만 KVA~60만 KVA)에 대한 반덤핑 조사 개시

말레이시아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관련 법령은 ‘Countervailing and Anti-Dumping Duties Act 1993’ 및 ‘Countervailing and Anti-Dumping Duties Regulations 1994’가 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2008.9.22일자로 한국, 미국, 캐나다,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5개국産 신문용지(roll판)에 대한 반덤핑관세 재심을 개시한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최근 2009.3.21일부터 2014.3.18일까지 관세를 아래 기업에 대해 연장해서 부과하기로 결정한 바 있으나 최초 반덤핑관세 부과 이후 한국기업의 당해 품목 對말레이시아 수출물량은 미미한 수준이다.

2011년 말레이시아 정부는 말레이시아 국내기업(Megasteel사)의 청원으로 수입산 열연강판(Hot Rolled Coils)에 대한 세이프가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으나, 국내 산업에 대한 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 우려가 없다고 결정하고 조사를 종료하였다.

한편 2012년에는 말레이시아 철강업체 Amsteel Mills에서 한국, 중국, 터키 등에서 수입되는 와이어로드 제품에 대해 덤핑 혐의가 있다고 말레이시아 통상산업부에 제소하여 6.25일부터 조사를 개시하였다. 이어서, 10.22일



말레이시아 정부는 와이어로드 제품에 대해 잠정 반덤핑관세를 부과했다. 우리나라 와이어로드 제품은 26.47%의 잠정 반덤핑관세를 부과 받았으나, 업계의 적극적 대응으로 최종 반덤핑 관정에서 우리의 주요 수출품인 고탄소강(탄소성분 0.6%이상)은 관세부과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저탄소강의 경우 관세율은 P사 제품 3.03%, 여타 회사 25.20%로 결정되어 전반적으로 크게 낮아졌다.

한편, 2013.2월에는 말레이시아의 유일한 주석도금강판 생산업체인 Perstima 사가 한국, 중국산 주석도금강판에 대한 반덤핑 제소를 하였고, 7.20일부로 한국산 수입에 대해 3.31%~25%의 잠정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현재 한국제품이 반덤핑 관세 적용을 받고 있는 현황은 아래표와 같다.

품목	HS코드	사건유형	조사개시 일자	관세부과 일자	부과 관세
인쇄용지	4801.00	반덤핑	2003.1.16	확정판정일: 2003.9.26 반덤핑 조치 종료일: 2009.3.20 2014.3.18로 연장	43.24%
스틸 와이어로드 (저탄소강)	7213.10 7213.20 7213.91 7213.99	반덤핑	2012.6.25	확정판정일: 2013.2.20 반덤핑 조치 종료일: 2018.2.19	P사 3.03%, 기타 25.20%
주석도 금강판	7210.12.20 (H.S.2012)	반덤핑 (잠정)	2013.2.20	예비판정일: 2013.7.20	D사 3.03%, S사 3.31% T사 4.46% 기타 25%

태국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제도는 수출입법 제5조 및 제6조에 근거하여 1991년 상무부에서 관련규정을 제정하였으며 실제 제소는 1996년부터 있었다. 1999년에는 반덤핑 및 보조금법을 제정하여 관련규정을 명료화하였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에 대한 제소 및 조사는 상무부 국제무역국에서 담당하며 이의 결정은 상무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의 사무차관으로 구성된 “반덤핑 및 반보조금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의

부과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세이프가드는 상무부 국제무역국에서 조사를 담당하며 상무부 사무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호조치 검토 위원회”에서 보호조치를 결정한다.

한국에 대한 반덤핑 조치와 관련된 것은 4건으로 모두 철강재에 대한 것이다. 우선, 냉연강(Flat Cold-Rolled Stainless Steel)에 대해 50.99%의 반덤핑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며, 2011.2월 5년간 추가 연장되었다. 열연강(Flat Hot-Rolled Steel in Coils and not in Coils)에 대해서는 13.96%의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나, POSCO의 경우 '08년부터 재심을 통한 무혐의 판정으로 일반관세율(5%)을 적용받고 있다. 그러나 2012.8월 이에 대한 재심요구가 청구되어 재조사를 진행한 결과 2013.8월 POSCO 13.58%, 현대제철 13.96%, 동부제철 58.85%의 반덤핑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한편, 도색 및 비도색 냉연강(Painted hot Dip Galvanized of Cold Rolled Steel와 Certain Hot Dip Plated or Coated with Aluminium Zinc Alloys of Cold Rolled Steel)은 2011.7월 재소되어 2012.7월 조사에 착수, 2013.1월 도색강판에 대해 2.51~10.25%, 비도색 강판에 대해 13.82~22.55%의 반덤핑 세율을 5년간 적용받게 되었다.

■ 반덤핑 조치 사례(2013.10)

Product	Country/customs territory	Date of imposition	Definitive duty in force(c.i.f.)
H-shape Steel	China	10/10/12	13.905%
Paving blocks, Glass blocks	China	16/08/07	5.10~82.78%
	Czech Republic	15/01/09	54.33 %
Cold-rolled carbon steel, sheet and strip in coils and cut-to length	Kazakhstan	25/01/03	26.36%
	Russian Federation	25/01/03	35.80~64.70%
Flat hot-rolled steel in coils and not in coils (단, 조선/철골조공사용으로 로서 투자청(BOI) 승인을 받은 경우는 0%)	Algeria	01/07/10	33.26%
	Argentina	01/07/10	37.94~53.09%
	China*	12/08/11	30.91%
	Chinese Taipei	01/07/10	3.45~25.15%
	India	01/07/10	20.02~31.92%
	Indonesia	01/07/10	24.48%
	Japan	01/07/10	0~36.25%
	Kazakhstan	01/07/10	68.11~109.25%



Product	Country/customs territory	Date of imposition	Definitive duty in force(c.i.f.)
	Malaysia*	12/08/11	23.57~42.5%
	Republic of Korea	01/07/10	0~58.85%
	Romania	01/07/10	27.95%
	Russian Federation	01/07/10	24.20~35.17%
	Slovak Republic	01/07/10	51.95%
	South Africa	01/07/10	128.11%
	Ukraine	01/07/10	30.45~67.69%
	Venezuela	01/07/10	78.44%
Citric acid	China	23/01/11	38.10%
Woven Fabrics of Cotton and polyester	China	18/06/09	7.76~10.01%
Sodium Tripolyphosphate	China	18/01/10	6.95~31.42%

* 연간 1천 톤 이내의 조선산입용은 0%, 연간 1천 톤 이내의 JIS G 4501 grade S45 C 또는 HS code 7208.5100.033, 7208.5100.053, 721490.90은 0%임

출처: 태국 상무부 대외무역국

필리핀의 반덤핑법은 1999.8월에 WTO 협정에 맞지 않는 조항을 삭제하고,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향으로 개정되었는데, 실사착수에서 반덤핑·상계관세 부과에 이르는 일련의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개정 전에는 반덤핑 조사기간이 길어(평균 2.2년, 최장 4.7년), 필리핀 정부는 관세율 인상 또는 관세부과 대상가격의 불합리한 적용 등 비교적 용이한 방법을 통해 수입을 규제하려 하였으나, WTO 협정에 위배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여 WTO 협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입을 규제할 수 있도록 동 법을 개정하였다.

개정 반덤핑법(Anti-Dumping Act of 1999: Republic Act No. 8752)의 주요 내용을 보면, 덤핑제소 요건강화, 공시의무조항 신설, 관세위원회 반덤핑 관세 부과 의무조항 폐지로 WTO 협정과의 조화를 도모하였다. 한편 조사기간의 확대, 정부기관에 덤핑제소권 부여, 공무원 벌칙조항 신설 등으로 일부 규정이 강화되어 향후 수입규제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증가된 것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국제무역행정위원회(ITAC) 검토를 거쳐 통상산업부

(DTI) 승인을 통해 반덤핑 등 무역구제조치를 취한다. 2013.10월 기준, 우리나라는 남아공으로부터 총 3건의 무역구제 조치를 받고 있다. 품목별로는 철강(1), 화학(1), 종이(1) 제품이며, 3건 모두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었다.

■ 남아공의 對韓 수입규제 현황

품목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품목	비고
폴리에틸렌 수지용기(PET)	반덤핑	'00.4 (조사개시)	'11.3.4 (일몰재심)	화학	-반덤핑관세율: 19.7% -5년간 관세부과
연선, 로프, 케이블	반덤핑	'00.10 (조사개시) '07.8 (일몰재심)	'09.2.19 (일몰재심 판정)	철강 및 금속	-강연선: 79.76% -로프: 50.33%
코팅지	반덤핑	'13.1 (조사개시)	'13.9.27 (예비판정)	종이	-반덤핑관세율: 17.25% -'14.3.14까지 부과

자료원: 남아공 국제무역행정위원회(ITAC)

중국, 한국, 인도, 대만 등이 남아공의 반덤핑 조치 대상 주요 국가로 기록되며, 특히 남아공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산 철강 및 금속, 유리제품, 담요 등 섬유 및 전선 등 다양한 제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남아공의 높은 실업률을 해소하기 위해 철강, 섬유산업과 같이 고용 규모가 큰 산업에 대한 보호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모로코의 반덤핑제도는 생산자, 수입업자, 산업협회, 관련 당국 및 소비자가 원산지 국가의 덤핑, 보조금 지급 등으로 인하여 동 제품 수입이 자국 산업에 피해를 가져온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대외 무역부에 반덤핑 또는 상계 관세 부과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대외무역부는 이를 관할부처에 통보하여 30일 이내에 검토 의견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관할부처가 덤핑, 보조금 지급,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를 인정하는 경우, 재무부령으로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 조치가 취해지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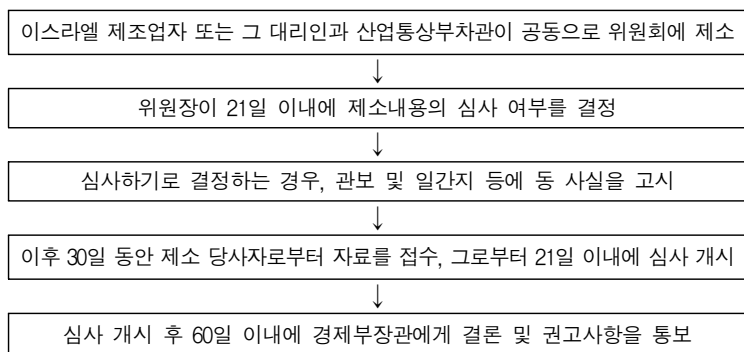
중국산 수입에 대해 수량제한 조치가 취해진 것 외에 반덤핑 등 무역구제 조치가 실제 취해진 적은 없었으나 최근(2012.08) 중국산 베니어합판에 대



해 25%의 반덤핑관세가 부과되었다. 더불어 미국산 PVC, 유럽, 터키산 철강합판에 대해 대외무역부가 반덤핑조사에 착수하는 등 실제적인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모로코 산업계에서 자유무역협정 확대와 실행관세 인하에 따라 국내산업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감이 팽배해지면서 모로코 대외무역부는 무역구제수단 적용 요건과 절차를 구체화하고 엄격한 적용을 천명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스라엘은 1991년 제정된 무역과세법에 따라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동 제도는 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인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자문위원회가 운영하며, 위원회 심사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 반덤핑 · 상계관세 부과절차



이집트는 WTO 무역 체제하에서 외국의 불공정한 수출 관행으로부터 국내 시장을 보호하고, 선진국의 반덤핑 제재 조치 등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반덤핑 제재조치법(1998.6.11일 발효)을 시행 중이다. 동 법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국내 시장의 경쟁력을 저해시킬 목적으로 불법적으로 수입되는 저가의 덤핑 상품 및 외국 정부의 불공정한 수출 보조금을 받아 유입되는 상품에 대해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집트 정부는 동 법 집행기관으로서 산업통상부(Ministry of Industry and Foreign Trade) 산하에 반덤핑, 보조금 및 세이프가드국을 두고 있다. 이집트 기업이 신고하면 우선 조사 개시 여부를 판정하고,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피제소업체에게 해당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며 조사결과 불공정 경쟁으로 평가될 경우, 해당 위원회의 심의 의결과 장관의 재가를 거쳐 제재 여부가 결정된다.

동 반덤핑 제재법은 주로 식물, 설탕, 제지, 철강산업 등 분야에서 국내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며, 주요 대상국은 EU, 중국, 브라질(설탕 수입), 인도, 사우디, 리비아, 우크라이나(철강 수입) 등이다. 동 반덤핑제재법의 시행에 따라 금호, 우성, 한국타이어 등 우리나라 타이어 수출업체 제품이 제소를 당해 1999.10월 업체별로 덤핑판정을 받은 바 있다. 또한, 일본산 및 EU산 타이어도 우리나라 타이어와 마찬가지로 1999.10월부터 현재까지 규제품목으로 분류된데 이어 2008.3.6일 인도 및 중국산 버스 및 트럭 타이어 대해서서도 반덤핑 부과가 결정되었다. 2007년에는 한국산 DOP 제품이 반덤핑 판정을 받은 바 있다

2007년부터 무차별적인 중국 상품의 유입을 겨냥하여 이에 대한 규제 움직임과 함께 동유럽, 터키, 우크라이나 등의 저가 철근, 전구 등의 품목에 대해서도 반덤핑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중국산의 경우 소비자 보호와 자국 제조업체 보호를 위해 보다 강력한 수입 규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998.6월부터 2011년까지 이집트의 반덤핑 총 발동 건수는 총 35건으로 철강, 타이어, 램프, 문구, 섬유류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이중 우리나라와 관련된 사례는 타이어와 DOP(Diethyl Phthalate) 등 2건이었으나, 2010.10월 한국타이어 및 우성 타이어(현 넥센)에 대한 반덤핑 조치가 종결되었고 2012.7.3일(화)부로 DOP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도 종결되어, 2012.11월 현재 반덤핑 건은 없는 상황이다.

인도는 그동안 각종 수입개방조치에 대응하여 국내산업을 보호하고 매년 누적되고 있는 무역수지 적자를 완화하기 위하여 반덤핑관세 부과 등 WTO 체제하에서 허용되는 수입규제조치를 적극 활용하여 왔다.

WTO 통계에 따르면 인도는 1995년 이후 2012년 말까지 총 677건의 반덤핑조사를 실시하고, 이중 508건에 대해서는 반덤핑 조치를 취하였다. 우리



나라 제품에 대하여는 1995~2012년간 총 50건의 반덤핑조사가 개시되어 38건에 대해서는 반덤핑관세가 부과되었다. 그간 SBR, 나일론필라멘트사, 프로필렌글리콜, 폴리에스터사, PS Plates, PVC, 페놀, 아세톤, 과산화수소, 고무노화방지제(PX-133, 6PPD), CD-R, CRT, NBR고무, 아크릴단섬유, 시안화나트륨, 가성소다, 수황화나트륨, 탄산칼륨, 고분자판재폴리올, 무수프탈산 등 품목에 반덤핑관세가 부과되고 있고, 2013.8월말 현재 고무노화방지제(PX-13, 6PPD), PVC Suspension Grade Resin, 염화메탄, 아질산나트륨, USB 플래시 드라이브 등 품목은 조사 중이다.

WTO 통계에 따르면 인도는 1995년 이후 2013.3월말까지 총 29건의 세이프가드조사를 실시하고, 이중 15건에 대해서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하였다. 2013.8월말 세이프가드 조사 우리나라 관련 품목은 무수프탈산(PAN), 디옥틸프탈레이트(DoP)에 대한 세이프가드 관세가 부과되었으며, 고무노화방지제, 아질산나트륨, 무용접 강관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 진행중이다. 한국(50건)은 중국(154건)에 이어 인도의 두 번째 반덤핑 피해소국이다. EU(50)와 대만(49)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한국제품에 대해서 반덤핑관세와 세이프가드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반덤핑관세의 경우에는 2013.6월 현재, 열연코일, 냉연코일, Tinplate Coil/Sheet 등 총 6건에 반덤핑관세가 부과되었거나 조사 중에 있다.

■ 인도네시아의 반덤핑 규제 현황

품목	개시	판정	기간	진행상황
열연코일 (Hot Rolled Coil)	09.4.8	11.2.7	11.2.7~ 16.2.7	일부 기업을 제외한 모든기업->3.8%
냉연코일 (Cold Rolled Coil)	11.6.24	13.3.19	13.3.19~ 16.3.16	(대상국) 한국, 일본, 대만, 중국, 베트남 (관세율) 대상기업별 11% ~10.1%로 상이
Tin Plate Coil /Sheet	12.6.24	-	-	(대상국) 한국, 중국, 대만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	12.6.29	-	-	(대상국) 한국, 중국, 대만, 싱가포르
Spin Draw Yarn	13.7.1			(대상국) 한국, 말레이, 대만
Partially Oriented Yarn	13.8.2			(대상국) 한국, 말레이, 대만, 중국

말레이시아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관련 법령은 ‘Countervailing and Anti-Dumping Duties Act 1993’ 및 ‘Countervailing and Anti-Dumping Duties Regulations 1994’가 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2008.9.22일자로 한국, 미국, 캐나다,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5개국産 신문용지(roll판)에 대한 반덤핑관세 재심을 개시한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최근 2009.3.21일부터 2014.3.18일까지 관세를 아래 기업에 대해 연장해서 부과하기로 결정한 바 있으나 최초 반덤핑관세 부과 이후 한국기업의 당해 품목 對말레이시아 수출물량은 미미한 수준이다.

2011년 말레이시아 정부는 말레이시아 국내기업(Megasteel사)의 청원으로 수입산 열연강판(Hot Rolled Coils)에 대한 세이프가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으나, 국내 산업에 대한 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 우려가 없다고 결정하고 조사를 종료하였다.

한편 2012년에는 말레이시아 철강업체 Amsteel Mills에서 한국, 중국, 터키 등에서 수입되는 와이어로드 제품에 대해 덤핑 혐의가 있다고 말레이시아 통상산업부에 제소하여 6.25일부터 조사를 개시하였다. 이어서, 10.22일 말레이시아 정부는 와이어로드 제품에 대해 잠정 반덤핑관세를 부과했다. 우리나라 와이어로드 제품은 26.47%의 잠정 반덤핑관세를 부과 받았으나, 업계의 적극적 대응으로 최종 반덤핑 판정시 우리의 주요 수출품인 고탄소강(탄소성분 0.6%이상)은 관세부과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저탄소강의 경우 관세율은 P사 제품 3.03%, 여타 회사 25.20%로 결정되어 전반적으로 크게 낮아졌다.

한편, 2013.2월에는 말레이시아의 유일한 주석도금강판 생산업체인 Perstima사가 한국, 중국산 주석도금강판에 대한 반덤핑 제소를 하였고, 7.20일부로 한국산 수입에 대해 3.31%~25%의 잠정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현재 한국제품이 반덤핑 관세 적용을 받고 있는 현황은 아래의 표와 같다.



■ 말레이시아의 반덤핑 규제 현황

품목	HS코드	사건유형	조사개시 일자	관세부과 일자	부과 관세
인쇄용지	4801.00	반덤핑	2003.1.16	확정판정일: 2003.9.26 반덤핑 조치 종료일: 2009.3.20 2014.3.18로 연장	43.24%
스틸 와이어로드 (저탄소강)	7213.10 7213.20 7213.91 7213.99	반덤핑	2012.6.25	확정판정일: 2013.2.20 반덤핑 조치 종료일: 2018.2.19	P사 3.03%, 기타 25.20%
주석도금강판	7210.12.20 (H.S.2012)	반덤핑 (잠정)	2013.2.20	예비판정일: 2013.7.20	D사 3.03%, S사 3.31% T사 4.46% 기타 25%

뉴질랜드는 자국 산업보호와 고용유지를 위해 수입품목 중 국내에서 생산 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덤핑 및 상계관세법(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ies Act)에 의거하여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13.9월 현재 11개 품목(대부분 중국산)에 대해 상계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업혁신고용부 홈페이지(www.med.govt.nz)에서 찾아볼 수 있다.

뉴질랜드 기업혁신고용부(MBIE)는 지난 6월 뉴질랜드 Croxley Stationery Ltd.의 한국산 다이어리에 대해 반덤핑 조사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고 한국산 다이어리에 대한 덤핑조사를 진행 중이다(13.12월 조사종료예정). 이번 조사는 2007년에 이어 외국산 다이어리에 대한 두 번째 조사이며 당시 조사에서 한국산 다이어리는 WTO 반덤핑 협약 제5.8항(미소물량 수입에 대한 조사 종료)에 따라 조사에서 제외된 바 있다.

베네수엘라는 1992년부터 반덤핑법을 시행하고 있다. 1997년 한국산 주사기에 대한 제소가 있었으나 1999년 무혐의 최종 판결을 받았다. 베네수엘라 철강업체 SIDOR사는 일본, 카자흐스탄,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에서 수입되는 철강제품을 제소하여, 2000.1월 철강 바, 튜브 및 스위트 등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최대 70%까지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대만은 2013.8월 우리나라 포스코, 대우인터네셔널, GS글로벌, 효성 등 4개 업체 및 중국 스테인리스강 제품에 대한 덤핑조사 예비판정 결과를 내린바 있고, 현재 최종판정을 위한 조사 중이다.

칠레는 덤핑 또는 수출국의 보조금으로 인해 자국 산업 및 고용에 피해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수입상품가격왜곡조사위원회의 조사 및 결정에 따라 중앙은행이 최고 24%의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1년 단위로 부과하며 1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

노르웨이는 반덤핑 및 상계관세와 관련하여 불공정 사례는 없다. 노르웨이는 1985년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이래 현재까지 반덤핑이나 상계관세 조사를 실시한 바 없다.

볼리비아는 반덤핑 관련 법령(Dercreto Supremo N 23.308)은 존재하나 이를 운용할 조직이 없고 동 법령이 적용된 사례가 없다.

싱가포르는 현재까지 타국 수입제품에 대하여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를 부과한 사례가 없다.

우즈베키스탄은 제도는 있으나 실제로 적용된 사례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몽골은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 관련 법률은 없으며, 몽골내 생산자 보호를 목적으로 관세 이외에 특별세, 부가세 등의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보조금

개관

보조금은 정책당국이 특정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산업 및 기업 활동에 제공하는 각종 지원을 의미한다. GATT협정에서 “회원국이 직간접적으로 자국의 영역으로부터 상품 수출을 증가시키거나 또는 자국 영역으로의 상품수입을 감소시키는 형태의 소득 또는 가격지원을 포함한 보조금”이라는 간접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며 보조금 자체에 대한 정의 규정은 없다. 보조금의 사용은 원칙적으로 각국 정부의 고유권한이지만 일부 보조금의 경우에는 재화나 용역의 생산을 촉진시켜 균형가격을 낮추거나 소비를 증가시키고 특정산업이나 기업 경쟁력을 인위적으로 변화시킨다. 이러한 특정 산업의 경쟁력에 영향을 주는 보조금은 수출과 수입에 상당한 영향을 주며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무역왜곡을 초래한다. 따라서 보조금은 타국의 경쟁 산업이나 기업에게 피해를 준다는 인식 아래 국제적인 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다.

1995.1.1일 발효된 WTO 보조금·상계조치협정은 과거 GATT 협정과는 달리 보조금의 정의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분류함으로써 무역왜곡을 초래하는 보조금에 대한 규율을 보다 강화하였다. 동 협정은 제조업부문의 보조금만을 다루고 있으며 보조금을 정부의 직·간접적인 자금지원으로 정의하고 이에 따른 혜택이 발생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또한 무역왜곡 정도에 따라 보조금을 금지보조금(prohibited subsidies), 상계가능보조금(actionable subsidies), 허용보조금(non-actionable subsidies)으로 분류하고 있다.

수출보조금 및 수입대체보조금은 무역왜곡 정도가 가장 큰 금지보조금에

해당되며 원천적으로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상계가능보조금은 특정한 산업, 기업 또는 지역에 공여됨으로써 타 회원국의 이익에 부정적 효과를 미치는 보조금이다. 이 경우 상대국은 WTO 분쟁해결절차 또는 자국법에 따라 대응조치(counter measures)를 취할 수 있다. 허용보조금은 일정한 객관적 기준에 따라 일반적으로 공여되어 특정성(specificity)이 없는 보조금이다.

■ WTO 보조금협정 중 관련 조항

조 항	내 용	비 고	조 항
보조금 정의	정부의 직접적 자금지원	무상지원, 조세감면, 대부, 채무보증, 출자, 재화·용역의 제공 및 구매	(1.1)
	정부의 간접적 자금지원	상기사항 민간 기구에 위임 또는 지도	
	혜택 발생	가격 및 요율결정시 통상적인 시장원리와 차이가 있을 경우	(1.1)
특정성	특정산업, 기업, 지역에 공여	객관적 요건 하에 자동적으로 공여되지 않고 자의적으로 결정되는 경우 및 사후적 개념도 포함	(1.2)
부정적 효과	피해, 무효화 및 손상, 또는 이익의 침해	상대국시장, 시장점유율 변화에 따른 잠재적 이익 포함	(5)
	피해 및 이익침해의 형태	가격인하, 시장점유율 변화에 따른 잠재적 이익 포함	(6.3)
	심각한 이익침해의 간주	보조금규모 5% 초과운영손실의 보전 직접적 채무변제	(6.1)
분쟁해결 절차에 따른 대응조치 적용	금지보조금	보조금 공여가 인정되는 경우	(4)
	상계가능보조금	부정적 효과가 인정되는 경우	(7)

현황분석

보조금과 상계관세의 적용은 덤핑과 더불어 불공정무역행위와 관련하여 가장 대표적으로 논의되는 제도이다. 보조금 문제는 반덤핑 문제와 같이 빈번하게 발생하지는 않으나 개별 기업간이 아닌 국가간의 문제라는 점에서 보다 심각한 사안이다.

보조금 문제는 WTO체제하에서 다루기 어려운 문제 중 하나이다. 정부의



시장개입의 부당성 증명, 보조금 정의의 명확화 등의 원본적인 문제와 더불어 세계통상환경의 변화에 따라 정부역할과 국제통상규범간의 괴리가 점점 커지고 있고 이에 대한 각 국의 입장 차이가 달라 보조금에 대한 논의 또한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선진국은 보조금 규제 필요성을 주장하는 입장이고 개도국은 개도국의 경제개발 목적 보조금 허용, 수출선용과 관련한 개도국에 대한 특별 고려를 주장하는 입장이나 이해관계의 명확한 대답이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입장을 개진하는 국가들도 없다.

보조금 제도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각국은 경쟁력이 약화되는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또는 수출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상계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특히, 선진국의 경우에는 개도국과의 경쟁으로부터 자국의 산업을 보호한다는 명목 하에 조선, 철강, 섬유 등 사양 산업에 대한 운영 보조금, 구조조정보조금, 생산보조금 및 상계조치 등을 취하고 있다. 이에 반해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을 택한 개도국의 경우에는 보조금이 수출산업에 대한 지원정책으로 인식되며 수출을 장려하기 위한 수출금융, 조세감면, 수출원자재 관세인하 등을 사용하고 있다.

EU는 역내 시장에서 회원국 간 공정한 경쟁여건(level playing field)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각 회원국들은 자국의 산업정책 수단의 하나인 국가 보조금(state-aid)을 스스로 통제하려고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EU 차원의 국가보조금 규제정책과 관련하여 집행위와 갈등을 노출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산업정책의 필요성에 관해 기업총국과 경쟁총국 등 집행위 각 총국(Directorate General)간 이견이 존재하고, 집행위 내부의 갈등도 상당 부분 존재하는 상황이어서, 여타 경쟁정책 분야와 달리 국가보조금 규제에 있어서 집행위의 권한은 아직까지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집행위가 회원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특히, EU는 중소기업·R&D·직업훈련·고용지원·낙후지역개발·일부 수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회원국의 집행위에 대한 사전 통보의무를 면제하여 주고 있다.

집행위는 회원국별 국가보조금 지급현황 분석을 위해 2001.7월부터 매년

2회 스코어보드(EU Scoreboard on State-aid)를 작성·공개하고 있다. 2011.12월에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의 EU 회원국의 국가보조금(non-crisis aid)은 737억 유로로 전체 GDP의 0.6%로 2009년에 비해 비중이 0.2% 감소하였다. 610억 유로는 산업 및 서비스 분야에 보조되었고, 이중 85%는 특정 분야 지원이 아닌 지역 개발, 연구, 환경보호 등 수평적 목적(horizontal objective)을 위해 지원되었다. 나머지 127억 유로는 농업, 수산업 및 교통 분야에 지원되었다.

EU는 세계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2008.10월부터 2010.10월까지 22개 회원국들의 금융 분야에 대한 지원 조치를 승인해 왔으며, 그 최대 규모는 4조 5천억 유로, EU GDP의 40%에 달한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지급보증(guarantee umbrellas)에 약 2조 7천억 유로, 자본확충(recapitalisation scheme)에 약 3천억 유로가 지원되었다.

호주는 자동차 산업에 대하여 수출촉진제도를 실시하여 왔으나 2001.1.1일부터 ACIS Administration Act 1999에 의해 「자동차산업지원제도(Auto-motive Competitiveness & Investment Scheme)」로 대체되었다.

ACIS 제도는 호주 국내자동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 자동차업체에 생산 투자액의 일부에 상응하는 수입관세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 2001~2005년간 약 28억 호주 달러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호주정부는 2002.12월 ACIS 제도를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으나, 2008.10.10일 호주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0년까지 총 62억 호주달러를 지원하는 'A New Car Plan for a Greener Future'를 발표하고 기존의 ACIS 제도를 대체하여 시행하고 있다.

상기 호주 정부의 자동차 지원정책에 대해서는 한국 기업 등과 같이 현지 생산투자가 없는 기업의 경우 지원을 받지 못함으로써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으며 특정산업에 대해 지나친 지원으로 보호무역적 소지가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 태국과의 FTA가 발효됨에 따라, 태국에서 생산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2005년부터, 미국에서 생산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2010년부터 관세가 철폐되었다. 한·호주 FTA가 타결됨에 따라 한국자동차 업계의 가격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호주정부는 2005년부터 이루어지는 직물·의류·신발(Textile, Clothing, Footwear)에 대한 관세 인하에 대비하여 동 직물·의류·신발 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SIP(Strategic Investment Program) 보조금 지원제도를 운영 중이며 5년간(2000.7월~2005.6월) 약 6.8억 호주달러가 지원되었다. 2003.11.27일 SIP를 10년간(2005~2015) 연장하고 약 7.5억 호주달러의 자금을 추가 지원하기로 결정한 바 있으나, 2009-10회계연도부터 의류 직물 혁신능력 프로그램(Clothing and Household Textile Building Innovative Capability Program)으로 대체되어 운영 중에 있다.

캐나다 정부는 자국 주요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우주항공 및 방위산업과 관련하여 2008년 캐나다 연방정부 및 퀘벡 주정부는 비즈니스 제트기를 생산하는 캐나다 Bombardier사에 신형 제트기 모델인 C Series 개발 지원 명목으로 350백만 캐나다달러와 118백만 캐나다달러를 각각 지원하였다. 2009년 미국 통상환경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캐나다 연방정부가 민간 항공사에 개발 지원 명목으로 금융 지원을 하는 것이 시장을 왜곡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시정해 줄 것을 캐나다 연방정부에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자국 자동차 산업 보호를 위해 2009.3월, 캐나다 정부는 GM 캐나다와 크라이슬러 캐나다에 각각 30억과 10억 캐나다달러의 브리지론을 제공하였으며 양사의 지분 일부를 획득하였다. 참고로, C사는 2011년 5월 캐나다 정부의 브리지론을 모두 갚았다. 2009.4월, 캐나다 연방정부는 GM 캐나다와 크라이슬러 캐나다에 대해 자동차 수리 A/S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보증하기 위한 1억8천5백만 캐나다달러 규모의 Canadian Warranty Commitment 프로그램을 시행하였으며 자동차부품 공급업체를 위해 미결제 대금을 보호해주는 Accounts Receivable Insurance(ARI) 프로그램도 확대하였다. 2009.5월, 캐나다 정부는 자동차 및 관련 장치의 할부와 리스 관련

자산유동화증권(ABS)을 구매하기 위해 Canadian Secured Credit Facility (CSCF)에 100억 캐나다달러(91억 달러)를 배정하였다. 아울러 2009.6월 캐나다 정부는 펄프 및 제지 산업 보호를 위해 10억 캐나다달러(9.1억 달러)를 지원하였다.

독일의 경우 농업 등 국내 유치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각종 수입제한 조치와 보조금 정책은 모두 EU 기준과 부합하며 그밖에 환경 관련 규제나 각종 표준·검사 및 인증제도는 사실상 모두 EU 기준으로 대체되었다. 독일 정부는 세계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신차 구입 보조금(9년 이상 차량 폐차 후 신차 구입 시 2,500유로 지원) 제도를 도입, 시행한 바 있으나 동 보조금은 독일 자동차 업체 뿐 아니라 외국 자동차 업체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노르웨이는 농산물 중 노르웨이가 자급자족을 목표로 하는 품목에 대해서 수입쿼터나 수입금지를 통해 보호하고 있으며 유제품 등 일부품목의 경우 정부보조로 인해 국제수준보다 높은 원가로 생산됨에 불구하고 생산량이 국내 수요를 초과하는 현상을 보이기도 한다. 높은 관세(평균 38.7%)를 통해 농업을 특별히 보호하는 동시에 곡물, 기름용 씨앗, 과일, 야채, 우유 및 유제품, 소, 양, 돼지, 닭, 계란, 양모에 대해 목표가격 책정(국내가격이 목표가격을 초과할 경우 2~4일 단기간 고시하여 수입 관세를 일시 인하, 가격을 조정하고 있으나, 원거리에 위치한 우리나라의 경우 인근 유럽국가에 비해 관세인하 혜택을 받기가 어려운 실정) 등 행정적 조치와 보조금 지원을 통해 보호하고 있다. 최근 지속적인 농업분야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농업에 대한 보조금 등 지원은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어업에 대한 정부 지원은 최근 크게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크로아티아는 만성적자를 안고 있는 국영기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해오던 관행이 있었으나 2013. 7.1일 EU에 가입함에 따라 보조금 지급률을 낮추고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관련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도미니카공화국의 경우 2001년 WTO가 자유무역지대(FTZs) 지원정책이 수출보조금에 해당된다는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도미니카정부는 지원정책



의 불가피성을 보고하고 투자유치 및 수출진흥을 위해 지원제도의 연장시행 승인을 요청하여 2007년까지 연장이 승인되었으며 2007년 재연장을 요청하여 최장 2015년까지 연장이 승인되었다. 2006년부터 시행된 「재정개혁법(Reforma Fiscal)」초안에는 자유무역지대에 대한 지원혜택을 줄이고 세금징수를 시작할 계획이었으나 반대여론이 높아 아직은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재정확보 차원에서 자유무역지대에 대한 세금 징수 방안을 지속 강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7.3월 발효된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DR-CAFTA)에서는 농산품에 대한 수출보조금을 폐지하되 보조금을 받은 제3국 농산품이 자국시장에 들어올 경우에는 보조금을 용인하기로 하였다. 또한, 보조금 폐지를 위하여 다자간 차원에서 협력하기로 하였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농업부문을 장려하기 위해 농산품에 대해 정부보조금을 지급하여 왔으나 WTO 가입과 함께 2016년부터는 정부보조금을 폐지할 계획이다. 2006년도 농업보조금 규모는 977백만 달러 규모였으나 2015년까지 10년간 매년 규모를 축소하여 2015년에 858백만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한 이후 2016년부터는 폐지할 계획이다. 한편, 식량가격 급등을 완화하기 위하여 2007.12월부터 잠정 시행해오던 수입쌀에 대한 정부보조금 지급을 최근 쌀값 안정을 감안하여 2009.12월부터 지급을 중단하였다.

라오스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건설용 철강과 시멘트에 대해 최고 가격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해외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한 인위적인 가격조정은 실시하지 않고 있다. 또한, 2001년부터 2003년간 수출 농산물에 대해 국가보조금(subsidy)을 지급하는 관행이 있었으나 현재 보조금 지급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필리핀은 수출 보조금을 우루과이라운드를 계기로 완전 철폐하였다. 국내 보조금 관련, 필리핀은 개도국에 허용되는 생산가 10% 미만 범위 내에서 국내보조를 할 수 있으나 현재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고 있는 것은 없다. 다만, 인프라시설(농장-시장간 도로, 정미소 시설 등) 및 농업관련 연구개발 형태로 보조가 있으나 무시할 정도로 미미하다(현재 정부예산 중 약 2%만 농업부분에 할당).

파키스탄 정부는 수출산업 장려를 위해 섬유, 가죽, 스포츠용품 수출산업에 대한 다양한 보조금 및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급격한 정부재정 악화 및 이에 대한 국제기구의 권고에 따라 이러한 보조금은 점차 축소되는 경향에 있다.

모로코는 수출 증진을 위해 수출기업에 대해 법인세 감면 등을 통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수출기업에 대해서 처음 5년간은 법인세 100%, 이 후 5년간은 50%를 감면하고 있으며, 수출 품목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환급하고 있다. 모로코 대외무역부는 2011.7월 수출산업육성을 위한 정책보고서를 작성하고, 민간부문과 공동으로 제조업, 농업, 공예품, 수산업 등 경쟁력 있는 산업의 수출증대를 위한 지원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국영 수출진흥공사(Maroc Export)의 조직과 기능을 강화하여 무역사절단 파견, 해외전시회 참가, 해외시장 조사 등을 수행하여 자국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고 있으며, 교역자문위원회(CNCE)는 수출입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과 대책마련 활동을 하고 있다.

베네수엘라는 국내 자동차 조립산업 육성 및 저소득층의 소형 차량 구입을 지원하기 위해 2005.6월부터 VeneMovil이라는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2008.6월까지 1,600cc 이하 1만 달러 미만의 소형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에 부가 가치세를 면제해 주었다. 또한, 정보통신부는 IT 제품 수입에 따른 외화 낭비를 방지하고 국내 IT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위성 안테나, 셋톱 박스, 휴대폰, 광케이블 등의 제품 신규 생산 및 공장 증설을 추진하는 기업에 대해 거치기간 1~3년, 연 2~4%의 저리 융자를 시행하고 있다. 정부의 자금 지원에 힘입어 정보통신부 구상대로 향후 5~7년 내 주요 IT제품의 국내 자급자족이 실현되면 한국산 IT제품의 수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베네수엘라는 커피, 카카오, 바나나 및 기타 과일류의 수출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수출 물량이 소규모에 불과해 큰 의미는 없으며 차베스 정부의 사회주의 정책 추진에 따라 에너지 및 광물자원을 제외하고는 수출보다는 국내 소비 충족을 위한 제조업 육성에 치중하고 있어 수출 보조금은 큰 문



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파라과이는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보조금 정책을 운영하고 있지 않으나, 수출지향형 업체에 대해서는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각종 면세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외국 투자업체들에 대해서도 국내업체와 동등한 혜택을 보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주무부처인 산업통상부(Ministerio de Industria y Comercio)를 통해 투자계획서를 승인받으면 파라과이 정부가 투자사업 형태에 따라, 60/90호 수출진흥법, 마길라 보세가공무역법(Ley de Maquila), 자유무역지대(Zona Franca) 제도 등을 통해 부여하는 각종 면세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에콰도르 정부는 공공운수업자, 가정용가스 및 전기 요금에 일정한 정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이는 사회복지차원의 정부 보조금의 성격을 띠고 있다. 단 2011.7월부터 사용량이 500kw이상이 넘는 가정용 전기 요금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해제하였으며 2013년부터는 가정용 가스에 대해서도 일정 이상 사용시 보조금 지원을 해제하는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에콰도르 정부는 수출촉진을 위하여 수출업자에 대한 세금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 특히 수입원자재를 사용한 완제품의 재수출시 이에 대한 세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해 주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은 대외교역 규모가 2008년 190억 달러 규모로 아직은 적은 수준이며 주요산업인 면화, 과일 등 일부 농업분야 및 가스 분야 등은 국제 경쟁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보조금 지급 등 수출정책상 불공정 무역정책으로 간주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다만, 우즈베크 정부는 세계 금융 위기에 따른 수출 감소 대처 방안의 일환으로 2009년부터 임시적으로 수출기업에 대해 우대 대출(preferential loans) 제공, 부가가치세 면제 절차 간소화 등 수출 진흥 시책을 시행하고 있다.

원산지규정

개관

원산지규정이란 국제무역에서 거래되는 물품의 생산·제조국을 판정하기 위한 제반 법률 및 규정 또는 관례, 관련 행정적 절차를 통틀어 지칭한다. 일반적으로 원산지 규정은 특정국가가 특정제품의 원산지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요건과 통관과정 등에서 상기요건의 충족여부를 증명하는 원산지 확인절차 및 여타 부대조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그 자체로서는 국제교역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질 수 없는 중립적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러나 원산지규정은 각 국별로 상이하며 그 자체의 불명료성, 복잡성 및 차별성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는 무역장벽으로 기능하고 있다. 즉, 지역경제 통합의 경우 원산지규정은 수출국의 보다 엄격한 식별을 통하여 경제적 통합이 가져오는 경제적 효과를 공고히 하고자 하는데 사용되고 있으며, 반덤핑관세나 상계관세의 부과, 쿼터적용 등 원산지의 식별이 수반되는 제반 무역관련 조치에 부속되어 간접적인 수입제한 조치로서의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원산지규정은 적용 목적에 따라 ‘비특혜원산지규정’과 ‘특혜원산지규정’으로 구분된다. 현재 WTO의 원산지규정협정(Agreement on Rules of Origin)에는 비특혜원산지에 관한 일반적 규정만이 제정되어 있는데 그 적용범위는 GATT 제1조 1항의 최혜국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특혜관세제도를 제외한 일반적인 교역에 있어서 상품의 원산지국가를 결정하는 것으로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 즉, GATT 제1, 2, 3, 11, 13조의 MFN원칙, 제6조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제9조의 원산지표시요건, 제19조의 세이프가드, 여타 모든 차별적인 수량규제나 할당관세 등의 적용과 같은 비특혜적인 통상정



책 수단이나 정부조달 및 무역통계 작성 등에 적용된다. 특혜원산지규정은 GATT 1994조 제1조 1항에 기술된 최혜국대우 원칙의 적용을 받지 않고 일반적 혹은 쌍무적으로 관세상의 특혜원산지를 부여하는데 적용이 되는 원산지 규정을 말한다. 즉, 특정국가간의 관세 특혜를 부여하는 자유무역 지대 혹은 경제구역의 운영이나 일반특혜관세제도(GSP: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등 특정 국가군을 대상으로 특혜관세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원산지 결정기준으로는 완전생산기준(Goods Wholly Obtained Test)¹⁴과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 Test) 기준¹⁵이 있으며 실질적변형의 발생여부를 판단하는 주된 기준은 세번변경기준,¹⁶ 부가가치기준,¹⁷ 주요공정기준¹⁸이 사용되고 있다.

한편, 비특혜원산지에 관한 세계적인 통일규정을 만들기 위한 작업이 세계 관세기구(WCO)와 WTO의 공동작업으로 1995년도부터 진행되어 오고 있으나 각국의 참여한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인하여 아직까지 타결되지 못하고 있다.¹⁹ 이에 2013.9.26일 WTO 원산지규정위원회에서 반덤핑 조치 등 적용영역에 대한 견해 차이 등으로 2007년 이후 진전이 없는 통일원산지규정 제정 작업의 향후 방향이 논의되었다.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은 작업 시작

14_ 한 국가 내에 당해 물품의 모든 생산·가공 또는 제조 과정이 이루어지는 국가를 원산지 국가로 인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5_ 당해 물품의 생산·가공 또는 제조 과정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변형이 최종적으로 수행된 국가에 원산지를 부여하는 기준을 말한다.

16_ 세번변경기준이란 수입되는 원료(Input)의 세번과 완제품(Output)의 세번을 비교하여 세번이 일정단위 이상으로 변하는 경우 실질적 변형으로 인정하여 원산지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세번변경기준은 국제통상코드인 HS 품목번호(세번)에 근거하므로 객관적인 판정이 가능하다.

17_ 부가가치기준이란 완제품의 전체가치 중에서 최종공정을 수행한 국가에서 일정수준의 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경우 그 국가를 원산지 국가로 인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8_ 각 제품에 대해 아주 중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당해 제품의 주요한 특성을 발행시켜 주는 기술적인 제조·가공 작업을 기술한 일반적인 명세표를 사용하여 지정된 가공공정이 일어난 국가를 원산지 국가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19_ WTO 원산지규정 협정은 원산지규정 통일화 작업을 WTO 협정 발효 후 조속히 개시하고 3년 내에 종료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초기와 다른 상황변화로 통일원산지규정이 무역 촉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기술적 사항이외는 총회의 방침이 결정될 때 까지 작업 중단의 입장을 표명한 반면 EU, 인도, 중국, 스위스 등은 생산 활동의 글로벌화로 통일원산지규정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각국의 자의적 규정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크므로 작업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²⁰

아직까지 특혜원산지규정에 관한 일반적인 국제규범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각 국은 자국의 특유한 원산지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며 주요 지역 공동체별 원산지규정은 다음 표와 같다. 이처럼 지역별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원산지규정이 상이나 대체로 미주지역의 NAFTA 모델과 EU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PANEURO 모델로 양분될 수 있으며, 그 외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지역은 NAFTA모델과 PANEURO 모델을 병용하여 사용하거나 대체로 이들 모델보다 비교적 단순하고 용이하게 적용하고 있다.²¹

■ 지역공동체별 원산지규정

지역공동체명	원산지관련 주요규정
NAFTA	세번변경기준을 원칙으로 하고 50%~65%의 부가가치기준과 주요공정기준을 보조적으로 사용함
AFTA	역내누적을 인정함과 동시에 40% 부가가치기준을 사용함
CER	50%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하지만 최종 제조공정이 회원국내에서 수행되어야 함
EU	세번변경기준을 원칙으로 하고 주요공정기준이나 부가가치기준을 사안에 따라 적용함
EFTA	세번 변경이 일어난 주요공정이 행하여진 나라에 원산지를 인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50% 부가가치기준을 보조적으로 사용함
MERCOSUR	세번변경기준을 원칙으로 하고 50% 부가가치기준과 주요공정기준을 부수적으로 사용함

20_ 김영환. 2013. 원산지제도 발전을 위한 과제. 한국무역협회 FTA무역종합지원센터.

21_ 최홍석, 이영달. 2011. FTA 시대 원산지 이론과 실무. 한국관세무역개발원.

현황분석

원산지규정이 통상장벽으로서 기능하는 가장 보편적인 형태는 일반적인 경우보다 엄격하게 원산지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러한 현상은 쿼터폼목이나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 대상품목의 경우 우회수출 방지를 위해 적용된다. 실제로 많은 나라에서 물리적 구성변화, 소요시간, 과정의 복잡도, 기술수준, 부가가치 등을 감안하여 쿼터폼목의 가공 및 조립과정이 제조과정인지를 엄격히 판정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는 “원산지규정이 연계되는 무역상의 조치 또는 수단에도 불구하고 원산지규정은 무역상의 목적을 직·간접적으로 추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지 아니 한다”는 「WTO 원산지규정에 관한 협정」 제2조 나항과 “원산지규정은 자체로서 국제무역을 제한하거나 왜곡 또는 교란시키는 효과를 초래하지 아니한다. 원산지규정은 원산지국 판정을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지나치게 엄격한 요건을 부과하거나 제조 또는 가공과 관련이 없는 특정조건의 충족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가호와 합치하는 종가비율기준의 적용을 위하여 제조 또는 가공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비용은 포함될 수 있다”는 「WTO 원산지규정에 관한 협정」 제 2조 다항에 위배되기는 하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판정할 기준이 없는 상태이다.

또한, 정부조달 품목의 경우에 있어서도 원산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보다 엄격한 기준이 사용되고 있다. 즉, 전체 부품 및 제조비용에서 자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보통의 원산지 판정의 기준보다 높게 책정하여 수입가공품의 정부조달 입찰가능성을 원천봉쇄하고 있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경우는 「WTO 원산지규정에 관한 협정」 제2조 라항의 각주에 의해²² WTO 규정에 어긋나지는 않으나 원산지규정이 무역장벽적인 기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22. 정부조달의 목적을 위하여 적용되는 원산지규정과 관련하여, 이 규정은 1994년도 GATT에서 회원국이 이미 부담하고 있는 의무이외에 추가적인 의무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이와 더불어 원산지 표시에 있어서 특정한 표시방법을 사용하도록 강제하여 원산지규정이 무역장벽으로도 기능하고 있는데, 예컨대 상품의 부품에도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거나 특정위치에 표시하도록 강제하는 경우 등이 빈발하고 있다.

또한, 「WTO 원산지규정에 관한 협정」 제2조 f항²³에 어긋나는 네거티브 리스트(Negative List)를 사용하는 국가도 일부 있다.

이와 같이 원산지규정은 통상정책 실현수단으로서 자의적으로 해석·운용되어 무역제한적 요소로 기능하고 있으며 가장 많이 나타나는 분야는 섬유류이다. 그 이유는 섬유류의 경우 국제 분업이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아직도 각국에서 보호수준이 높은 품목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원산지 판정기준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 국별 원산지규정 논란 사항

국가	품목	내용
멕시코	신발, 섬유, 의류, 가전, 유리, 잡화 등	우리나라 등 아시아 13개국 및 WTO비회원국에 대하여 통상적인 증명서 외에 별도의 원산지증명서 요구하였으나 2008.3.3일 폐지
중국	섬유 등	전반적인 원산지규정 미완. 섬유원산지규정 미비로 인하여 현지 수출업체 애로
EU	반도체	회원국별 이해관계 대립으로 관련 규정 논의 중
스리랑카	직물 등	원산지증명 사증의 기간제한으로 인한 애로
태국	-	자유무역협정 체결국에 대한 원산지적격 판정이 까다로움.

자유무역협정 등特惠무역의 증가와 국제 분업의 확산으로 국가별로 다양한 품목에 걸쳐 원산지규정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섬유분야 외에 반도체 분야에서도 원산지규정과 관련된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위의 표 참조). 따라서 원산지규정에 따른 잠재적인 문제에 대하여 품목별 대비가 충

23_ 원산지규정은 적극적인 기준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 원산지가 부여되지 않은 것을 기술하는 원산지규정(소극적인 기준)은 적극적인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일환으로 또는 원산지의 적극적인 판정이 필요하지 아니하는 개별적인 경우에 허용된다.



실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EU, 중국 등 주요 국가와 대륙별 국가들의 원산지 규정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미국의 원산지 판정의 일반적인 기준은 특정품목이 해당국가에서 가장 최근에 실질적으로 변형되었는지의 여부에 기초를 두고 있다. 실질적인 변형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명칭의 변화보다는 성격 또는 용도의 변화가 주요 판정기준이 되며 실질적인 변형원칙은 공정의 형태(가공 또는 조립)에 따라 그 적용을 달리한다.

쿼터품목, 반덤핑 관세 및 상계관세 대상품목, 정부조달품목 등은 실질적인 변형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고 보다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 쿼터품목의 경우 우회수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리적 구성(형태)변화, 소요시간, 과정의 복잡도, 기술수준, 부가가치 등을 감안하여 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 대상품목 역시 제 3국을 통한 우회수출 방지를 위해 부가가치가 적고 가공품 또는 조립품이 문제의 특별관세대상이 되는 상품군에 속하면 수입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밖에 정부조달품목에 대하여는 정부조달법상 미국으로 원산지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제조되어야 하고 전체 부품 또는 제조비용 중 미국에서 제조된 부품 또는 재료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초과해야 한다.

미국은 1995년에 주요 섬유수출국들이 쿼터규제 회피수단으로 미국의 원산지 결정기준인 재단기준을 이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섬유류 원산지 규정」을 개정하였다(1996.7.1일 발효, §102.21 of CBP Regulations Implementing §334 of Uruguay Round Agreement Act). 이는 쿼터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주요 수출국들이 재단가공만 하고 중국 등 저임금 노동국을 통해 봉제조립하여 수출함으로써 과잉보유 쿼터를 소진하는 한편, 쿼터량이 적은 후발국도 이를 통해 쿼터 부족분을 충당하고 있는 관행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와 관련, EU는 동 신원산지규정 내용에 대해 WTO 원산지 협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WTO에 제소(일본, 홍콩, 온두라스, 도미니카 등 참여)하였으며 1999.8월에 미국과 EU는 일부 직물에 대해 종전의 기준(염색과 날염

을 한 후 2개 이상의 사후 공정을 거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을 다시 적용키로 합의하였다. 미국정부는 동 합의의 이행을 위해 『Trade and Development Act of 2000』의 405조를 통해 식물 일부 품목에 대해 종전기준으로 환원키로 결정하였으며 관련 하위규정 정비를 통해 2000.5.18일부터 동 법안을 시행하고 있다.

미 세관 및 국경보호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은 WTO 섬유 및 의류 협정에 따라 2005.1.1일 WTO 회원국에 대한 섬유류 쿼터가 폐지되자 섬유 및 의류에 대한 원산지 규정을 2005.10월에 개정하였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섬유 및 의류 수입 시 제출되던 섬유신고서(textile declaration)가 폐지되고 대신 수입업자는 원산지 및 제조 업체명, 주소 등이 기록된 ‘제조업체 증명 코드(manufacturer identification code)’를 표기토록 하고 있다.

■ 미국의 산구 섬유 원산지규정 비교

	개 정 전	개 정 후	재개정후(2000.5.18)
식물	직조한 국가를 원산지로 하되, 직물을 수입하여 2개 이상의 염색 및 프린팅 공정을 거쳐 가공한 국가도 원산지로 인정	직조한 국가만을 원산지로 인정	직조한 국가를 원산지로 하되, 직물을 수입하여 염색 및 프린팅하고 2개 이상의 사후처리공정을 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
의류	재단국가 기준	봉제조립국가 기준	봉제조립국가 기준

한편, 한·미 FTA를 통해 한미 양국은 특혜 원산지 기준 중 완전 생산기준, 실질 변형기준 등에 관해 합의하고 이를 명문화하였다. 실질적 변형기준에 대해서 양국은 미국과 한국 내에서 최종 생산과정을 거친 물품에 대해 원산지를 인정하되 구체적인 판정기준은 품목별 특성에 따라 세번변경기준, 부가차치 기준 또는 주요 공정 기준 등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또한, 부속서에 규정된 품목별 원산지 기준에는 약 5,000여개(HS6 단위 기준)에 달하는 각 품목별 생산과정, 교역패턴과 글로벌 아웃소싱 환경을 반영한 정교한 원산지 판정기준을 마련하였다.



캐나다에서 수입상품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영어 또는 프랑스어로 원산지 표시(Country of Origin)를 해야 한다. 「상품 원산지 표시법」이 2009.1.1일부터 발효되어 소비자가 물건의 재료가 어디에서 생산되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본법에서는 생산비용의 51%가 국내에서 발생한 경우 ‘캐나다 상품(Product of Canada)’ 표시를 허용하고 있으나 새 원산지 표시법에 따르면, 모든 재료와 노동이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은 상품은 ‘캐나다 상품’ 상표를 붙일 수 없게 된다. 새 법에 명시된 상표 종류는 두 가지로 구분된다. 모든 재료와 노동이 100% 국내산인 상품일 경우는 ‘Product of Canada’로 표기해야 한다. ‘Made in Canada’는 두 가지 표기법으로 국내산 재료와 수입용이 섞여 있을 경우 ‘Made in Canada from domestic and imported ingredients’로, 수입용으로만 만들 경우 ‘Made in Canada from imported ingredients’로 표시해야 한다.

멕시코는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13개국 및 WTO 비회원국의 신발, 섬유류, 의류, 가전제품, 유리제품, 잡화 등에 대해서 통상적인 원산지증명서 이외에 멕시코 정부가 정한 방식 및 양식에 의한 원산지증명서(Anexo III) 제출을 의무화하였다. 이는 중국산 신발, 섬유 등의 원산지가 홍콩, 대만, 인도네시아 등 주변 아시아국 제품으로 위조되어 반입되는 사례가 발생하자 이를 막기 위한 조치로 1995.1.1일부터 적용하였다. 동 조치를 한국 등 WTO 회원국에게 적용하고 있는 것은 통관차별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서 WTO의 기본원칙인 최혜국대우(MFN)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비판받아 왔다. 이에 멕시코 정부는 2008.3.31일 ‘통관 및 무역 관련 행정절차 간소화조치(DECRETO por el que se otorgan facilidades administrativas en materia Aduanera y de Comercio Exterior)’를 대통령령으로 공포하고 동 조치를 해제하였다.

과테말라와 **코스타리카**는 중미공동시장 역내의 원산지 인정 기준으로 중미 원산지규정을 도입하고 있으며 역외로부터 반입한 원자재로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는 역내 생산 부가가치가 35%이상일 경우에 중미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도미니카의 경우 원산지 규정상의 일반적인 제약은 없다. CARICOM과 중미공동시장(CACM), 미국(DR-CAFTA) 및 EU(CARIFORUM-EU EPA)와 특혜원산지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CARIFORUM-EU EPA를 통해 원산지 규정상 특혜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HS의 실질적인 변화가 없어야 하며, 비원산지 제품 가격이 전체 가격의 7%를 넘지 않아야 한다. DUA(단일통관신고) 제도상 나타난 도미니카공화국 특혜관세체계는 DR-CAFTA, SGP(GSP), Cotonou(아프리카, 카리브, 태평양국들과 더불어 EU로부터 받는 특혜관세), TLCentroamerica(CACM), TLCaricom, AAPP(파나마), CBTPA(CBI) 등 7가지로 분류되어 있다.

베네수엘라 정부가 통관 시 원산지증명을 요구하는 경우는 세 가지로 관세법상 특별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나 안데안 국가간 교역 시 관세 면세를 위해 원산지 증명을 요구하는 경우이다. 또한, 원산지를 속여 반덤핑 관세를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과 유사한 상품을 수입하는 수입상은 원산지국에서 발행한 원산지증명서에 원산지국 주재 베네수엘라 대사관의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한다.

볼리비아는 수년 전까지 수입 물품의 실제 가격에 대한 정보 수집을 위해 모든 수입 물품의 통관 시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현재는 동·식물 및 중고 의류 등 일부 수입 규제 품목과 안데스공동체의 수입 품목에 대한 특혜 관세 대우의 적용 시에만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하고 있다.

아르헨티나의 관세법은 모든 수입물품의 원산지 명기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원산지는 1개국이어야 하며 2~3개국 개입으로 변형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다. 원산지증명서는 필수 구비서류는 아니지만 수입상이 요구할 경우, L/C상에 첨부조건이 명시된 경우, 섬유제품, 신발류 등 아르헨티나 정부가 요구하는 특정 품목에 대해서는 필요하며 이 경우 원산지국 주재 아르헨티나 대사관의 영사 확인을 받아야 한다.

우루과이는 라틴아메리카 통합연합(ALADI) 및 남미공동시장(MERCOSUR)에서 시행되고 있는 회원국간 특별 원산지 규정 이외에는 관련 국제법규에 위반되거나 차별적인 원산지 규정을 별도로 요구하지 않고 있다. ALADI



규정에 의해 원자재 가치가 완성품 가치의 50%를 초과할 경우에 한해 ALADI 원산지 규정을 인정받을 수 있다.

에콰도르는 안데스 공동체(CAN) 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품목에 대해 무관세를 부과하며, 남미공동시장(MERCOSUR), 라틴아메리카 통합연합(ALADI) 등의 회원국 수출 품목은 0-20%까지의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남미 공동시장(MERCOSUR) 회원국들 간에 거래되는 자동차, 버스, 트럭, 트랙터, 트레일러, 농기계, 자동차 부품 등 이 역내제품으로 간주되어 관세를 면제 받기 위해서는 60% 이상이 역내산 부품으로 충당되었다는 원산지 규정 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엘살바도르와 온두라스는 중미 5개국간 체결한 중미통합관세코드(CAUCA) 및 중미통합관세코드규정(RECAUCA)에 의거한 원산지규정을 도입하고 있다.

그밖에 **칠레, 파라과이**의 경우 우리 기업에게만 차별적으로 원산지증서를 요구하거나 국제 관행과 다른 규정을 적용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EU는 FTA 등 특혜무역협정, GSP 등 관세혜택이 주어지는 특정 국가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특혜원산지규정(Preferential Rules of Origin)과 반덤핑조치, 수량 제한 등 통상정책조치를 위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비특혜원산지규정(Non-Preferential Rules of Origin)을 운영하고 있다. EU의 원산지 관련 이사회 규정에 의하면 원산지 판정에 있어서 제품의 최종적, 실질적, 경제적으로 정당화되는 공정 또는 작업(Last, Substantial, Economically Justified Processing or Working) 및 중요한 제조 공정이 어느 단계에서 이루어졌느냐가 핵심적인 판단기준이 된다.

지난 2005년 섬유·의류 쿼터제가 폐지됨에 따라 EU 시장에서 중국산 제품의 급속한 유입을 막아 섬유·의류산업 의존도가 높은 SAARC(남아시아국가연합: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부탄, 네팔, 몰디브, 스리랑카) 등을 보호하기 위해 원산지 기준을 수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즉, 지금까지 누적원

산지기준이 인정되는 ASEAN이나 SAARC의 경우 동 지역공동체에 속하는 국가 간에만 누적원산지기준이 인정되었으나, 새로운 제도에서는 만일 이해당사국이 요청하면 다른 지역공동체 소속의 회원국과도 교차 누적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예컨대 방글라데시 의류 제조업체가 인도네시아산 직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방글라데시를 원산지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지중해 연안 국가(Euro-Mediterranean)에 대해서도 이해당사국이 요청하면 교차 누적을 인정해주고 있으며 인정국가와 인정시기는 관보를 통해 공표하고 있다.

한편, EU는 개도국 및 최빈국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위해 GSP 원산지 규정을 개정하고 2011.1.1일부터 보다 간소화되고 완화된 새로운 규정이 발효되었다. 개정된 GSP 원산지규정에서는 품목별 원산지 규정이 채택되었으며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특정가공공정이 주요 원산지 결정 기준으로 사용되었다. 원산지 결정 기준은 품목에 따라 단일의 원산지 결정 기준을 적용하거나, 복수의 원산지 결정 기준을 사용할 경우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하거나 하나의 기준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부가가치기준 적용 시에는 역외산 원산지 재료 비중이 개도국은 최대 50%, 최빈국은 70%까지 허용하였다. 또한 누적조항 적용 대상 국가가 확장되었으며 원산지 증명 역시 정부기관에 의해 인증을 받았던 기존의 원산지증명서 GSP Form A 대신에 2017.1월부터 등록수출자제도(Registered Exporter System)가 실시될 예정이다.²⁴

스위스로 수입된 원료 및 부품으로 제조된 제품은 스위스에서 생성된 제품의 부가가치가 최종 판매가격의 60~80% 이내일 경우 스위스산 원산지 지위를 갖고 유럽시장에서 자유로이 유통·판매될 수 있다. 스위스의 원산지 규정은 일반 원산지 규정과 EU/EFTA, GSP, FTA 등 특혜원산지 규정으로 구분되며 우리나라의 경우 2006.9월 이후 한·EFTA FTA 발효됨에 따

²⁴ Ernst & Young. 2011. Spotlight on: the European Union's new preferential rules of origin under the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TradeWatch March 2011, Volume 10. Issue 1 pp.2~5.



라 특혜원산지 규정을 적용 받게 되었다. 원산지 가격 결정은 공장도 가격 기준으로 당사국 내에서 완전 획득된 제품, 충분한 작업 또는 공정을 거친 제품, 특별히 지정된 재료로 획득한 상품에 대해 당사국을 원산지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역외가공 인정을 받아 개성공단 제품이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노르웨이에는 원산지 표시에 관한 규정이 없으나, EEA협정에 따라 EU시장에 판매되는 일부 제품에 대해 EU의 CE(Conformité Européenne) 라벨을 채택하고 있다. CE라벨은 제품이 EU의 표준이나 지침(directives)에 부합된다는 증명으로 EEA 각국 검사기관의 인증서를 추가로 받지 않고도 EEA 역내에서 자유롭게 거래하게 하는 기능을 한다. 또한, WTO의 비특혜 원산지규정(non-preferential rules of origin) 사용하는 등 국제관행을 준수하고 있다.

세르비아 상공회의소와 세관은 「대외무역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EU, FTA 체결국인 러시아 등에 적용되는 특혜 지위와 일반 제3국에 적용되는 비특혜 지위를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다. 세르비아 정부는 원산지 관련 법령과 규정을 EU 기준에 부합하도록 하는 개정작업을 추진 중에 있다. 특혜지위 대상국가인 EU 회원국과 FTA 체결 국가는 “EUR 1”로, 러시아,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뉴질랜드, 스위스, 노르웨이, 우크라이나 등은 “Form A”로 분류하고 있다.

터키는 상품의 수출 국가별로 상이한 관세가 적용되므로 원칙적으로 터키에 수입되는 모든 상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이 요구되며 우리 업체에만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우리 업체에만 차별적으로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하는 사례는 없다. 우즈베키스탄은 원산지 판단을 위해 세 가지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HS 4단위 변형 유발 여부, 원산지를 인정할 수 있는 특별 생산 공정 및 기술의 적용 여부, 부가가치의 현저한 증가 여부 등이다.

카자흐스탄은 상품의 원산지가 무관세 대상 국가인 경우, 수입상품이 국제

협약에 의해 관세 혜택을 받은 경우, 카자흐스탄 정부가 서명 동의한 국제협약에 명시된 경우 등에는 원산지증명서 제출을 요구한다.

중국의 경우에는 섬유·직물 분야에서 경직적인 원산지 규정을 운영하고 있다. 예컨대 중국은 한국으로부터 수입한 원단을 수입·가공하여 수출하는 경우 동 원단 소품목 하나하나에 생산국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어 원산지 표시가 훼손되는 경우 통관이 어렵게 되는 애로 사항을 겪고 있다. 국제적으로 원산지 표시는 가능한 한 원단이 아닌 제품에 직접 표시하도록 하는 것이 관례이며 우리나라도 원산지 표시가 불가능하거나 원산지 표시로 인해 제품이 크게 훼손되는 경우 외에는 개별품목에 직접 원산지 표시를 하고 국내에서 사용 또는 판매되지 않는 가공수출용 원재료의 경우에는 원산지 표시가 통상적으로 면제된다. 따라서 원자재의 경우 원산지 표시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

뉴질랜드는 현행 WTO 원산지 협약을 준수하고 있으며 우리업체에만 원산지증명서를 차별적으로 요구하거나 국제 관행에 배치되는 제약을 부과하고 있지 않다. 부가가치 기준에 의한 원산지규정을 채택하고 있으며 뉴질랜드로부터 GSP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제품의 최종 생산 공정이 해당국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원자재나 부품 등을 타국에서 수입, 생산한 경우에는 수혜대상국의 원자재 비용과 제조 및 노동비용 등이 당해 제품 공장도 가격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원산지증명서는 원래 해당국에서 발급 받아야 하나 뉴질랜드에서는 신고만으로 GSP 수혜가 가능하다.

몽골, 대만, 아제르바이잔은 특별한 제약이 없으며 WTO 원산지 협정을 따르고 있다.

싱가포르의 경우 한·싱가포르 FTA에 따라 특혜관세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서를 세관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한·싱가포르 FTA 원산지 규칙은 완전획득기준과 실질적 변형 기준의 경우 세번변경기준을 기본원칙으로 하되 품목에 따라 부가가치기준(45~55% 이상의 역내가치 포함) 또는 특정공정기준을 보완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원산지 기준의 보충원칙으로 미소기준(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치가



관세가격의 10%를 초과하지 않으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 누적규정(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재료가 국내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경우 국내산으로 간주)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개성공단 제품이 한국 영토를 거쳐 싱가포르에 수출될 경우 우리나라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된다.

말레이시아, 태국은 ASEAN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회원국에서 수출한 물품에 대해 특혜(협정)관세를 부여하기 위해 CEPT 원산지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당해 물품이 ASEAN 국가 내에서 완전 생산된 경우 또는 FOB 가격의 40%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경우에는 특혜 관세를 부여하고 40% 산출 시 원재료, 노임 및 간접비용 등이 고려된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비특혜 원산지규정과 관련된 수입물품의 원산지 규정을 규율하는 국내 법규를 갖고 있지는 않다.

브루나이의 원산지 증명은 산업자원부 국제관계국 및 무역개발국(IRTĐ: International Relations and Trade Development Division)에서 주관하며 수출업자가 구비서류를 갖추고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IRTĐ에 신청하면, IRTĐ 관계관은 늦어도 제품이 완성 또는 포장되기 60~70% 전에 제품을 검사, 확인 후 증명서를 발급한다. 원산지증명서는 최소한 수출일자 이틀 전까지 발급 제출되어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제출되지 않을 경우 선적 지연 등의 불편이 따른다.

캄보디아와 미얀마의 경우 한국업체에 대해서만 차별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원산지 규정은 없다.

인도는 별도의 일반 원산지 규정을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수출국의 관련기관이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 상의 원산지를 그대로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인도 CEPA가 2010.1.1일 발효되었으며 원산지 분야에 있어서도 양국간 합의된 대로 원산지 기준 이 적용되고 있다.

방글라데시, 파키스탄에서 우리업체에만 차별적으로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하는 사례나 국제관행과 다른 독특한 규정을 적용하는 사례는 없다. 다만, 파키스탄은 이스라엘산 및 이스라엘로부터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인도

가 정치 및 안보적인 이유로 파키스탄으로부터의 수입 품목을 크게 제한하였으나 2012년도 양국경제관계 정상화 조치의 일환으로 수입허가방식을 포지티브 시스템에서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하였다. 이에 따라 네거티브 리스트에 1,209개 품목을 지정하고 파키스탄이 인도 측에 요구한 비관세장벽이 철폐되는 대로 2012년 말까지 동 네거티브 리스트 전 품목을 없애기로 하였다.

레바논은 의약품이나 농산물 수입의 경우 제품의 제조일이나 유효기간, 원산지 등을 표기하도록 되어 있으며 반드시 라벨규정을 지키도록 되어있다. 라벨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통관이 거부되며 현지에 이미 들어와 있는 유사품이나 이미 보호 중인 라벨과 혼동을 일으켜서도 안 된다.

오만은 영사인증 제도를 실시, 상업송장 및 원산지증명서에 원산지국 주재 오만대사관의 영사인증 취득이 반드시 필요하며 미취득시 통관이 불가능하다. 오만은 원산지에 대한 인정 기준으로 완전 생산기준과 실질적 변형이 일어난 경우에 적용하는 부가가치 기준(40% of Local Value-Added)이 있으며 우리 업체에만 차별적으로 원산지 증명을 요구한 사례는 없다.

요르단 정부는 모든 수입 물품에 대해 원산지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한국 내에서 수출하는 경우 상공회의소, 주한요르단 명예영사관 또는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등 국내 주재 걸프국가 대사관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아 첨부해야 한다.

시리아 역시 모든 수입 품목에 대해 원산지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원산지 규정과 관계되는 영사인증, 아랍 보이콧, 시리아 제재법 등에 따른 조치는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로 충족할 필요가 있다.

바레인은 상공회의소에서 발행하고 아랍대사관에서 인증된 아랍어 혹은 영어로 된 원산지증명서가 요구된다. **아랍에미리트(UAE)** 역시 원산지증명서(C/O)에 해외주재 UAE 영사의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쿠웨이트로 수출을 하기 위해서 상업 송장, 선하 증권이나 항공화물 수령증



의 복사본 3장, 원산지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모든 수입물품에 대해 원산지 증명서 부착을 요구하며 한국 업체에만 차별적으로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하는 사례는 없지만 원산지 증명에 대한 독특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즉, 제3국의 자재를 수입할 경우 해당 송장 및 원산지증명서를 수출당사국에 소재하고 있는 쿠웨이트 상공회의소나 대사관에서 공인을 받아 송부하여야만 현지에서 통관이 가능하다(당사국에 관련 기관이 없을 경우는 GCC 국가 대사관 내지 Arab 대사관에서 인증을 요구).송장과 기타 서류들은 상품이 쿠웨이트에 도착하기 전까지 반드시 쿠웨이트에 있는 수입업자에게 보내져야 하며 서류가 미리 도착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해당 상품이 세관을 통과하지 못한다.

예멘은 수입되는 모든 상품은 개인물품, 기증품 등을 제외하고 수출국 상공회의소가 확인한 원산지증명서(또는 원산지 적시 상업송장)가 첨부되어야 한다. 사우디 및 이라크와 맺은特惠무역협정에서는 제품의 원산지 판정 시 실질 변형기준을 적용하며 생산품 가격의 40% 이상이 투입된 지역을 원산지국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중동지방의 영사인증제도는 관세 포탈이나 외화도피 등 무역거래를 이용한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으로 중동지역의 여러 국가들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 수출업자에게 시간소요 및 인증비용 부담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반면, **이란**은 최근 선적서류 영사인증 의무를 선택사항으로 변경하여 수입자가 영사인증을 요구하지 않으면 원산지국 주재 이란대사관로부터 영사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 수출업체가 L/C 개설 이전에 수입자에게 영사인증조항의 삭제를 요구하면 영사인증에 따른 불필요한 시간과 경비를 절감할 수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수입상품에 대해서는 수입통관 시 수출국 공인기관에서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사우디를 포함한 GCC국가들은 현재까지 자체 원산지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WTO 협정과 같이 국제적인 경제협약에 의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참고로 무역거래를 이용

한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 원산지증명서에 수출국 주재 사우디 대사관에서 발급했던 공증제도는 2006.5월 폐지되었다.

카타르 세관은 2011.4월부터 수입통관 시 제출서류로 원본 인보이스와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 수출업체는 상공회의소의 웹 인증 시스템을 이용하여 원산지증명서(C/O)를 신청, 승인 받은 후 자체 프린터로 출력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카타르 세관 측은 이를 원본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더불어, 2013.4월, 카타르는 통관 규정을 강화하여 원산지표시가 제품에서 제거가 가능한 방법(스티커 부착 등)을 이용하여 표기할 경우 통관이 원칙적으로 거절된다.

이집트는 원산지 규정의 변화는 없으나 2009.6월경부터 관련 규정을 엄격히 적용함에 따라 수출업체들의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다. 규정집행이 엄격해진 분야는 Double Origin의 경우 수입 불가, 원산지증명서 원본 제출 및 원산지국 주재 이집트 대사관 인증 등이며 중국에서 선적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2009.2월 이집트-중국간 체결된 협정에 따라 중국내에서 선적전 검사(Pre-shipment Inspection) 및 관련 증명서의 제출이 필요하다.

특히, Double Origin 문제는 원산지 규정상의 또 다른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이집트 원산지 관련 규정을 따르면 제품 표면, 서류선적, 원산지증명서의 원산지가 모두 동일해야 통관이 가능하고 이중 불일치하는 사례가 있으면 Double Origin을 사유로 원칙적으로 통관이 불가능하다. 예컨대 한국에서 선적된 제품의 일부 부품에 타국 원산지가 표기되어 있으면 원칙적으로 해당 부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를 해당국에서 추가로 발급받아야 통관이 가능한 것으로 중계무역이나 부품 중 일부를 주변국에서 아웃소싱하는 경우 Double Origin에 해당되니 유의하여야 한다.

알제리는 모든 국가에 대하여 원산지 증명 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며 2009년 추가재정법 시행 이후 원산지 증명과 더불어 수입품에 아랍어로 된 원산지 표기를 의무화 하였다. 자동차 부품의 경우 복제품 퇴치 목적의 일환으로 원산지 국가로 부터 직수입되거나 원산지 국가의 라이선스를 취득한 이후 제3국에서 제조되어 알제리로 수입되어야 한다.



가나는 ECOWAS 협약에 따라 동 기구 회원 국가에서 완전 생산되었거나 충분히 변형된 상품(30% 이상)에 대해서는 해당 회원국을 원산지로 간주하고 있다.

세네갈은 독자적인 원산지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대신 WAEMU 공동 원산지 규정을 채택함으로써 역내 회원국 제품에 대한 특혜관세 부여 기준으로 삼고 있다. WAEMU 원산지 기준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및 30% 이상 부가가치 기준을 병행하고 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은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나 원산지에 따른 차별대우는 없다. 남아공 정부는 중국산 섬유제품의 국내시장 장악으로 인해 붕괴상태에 있는 국내 섬유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섬유제품에 한해 원산지 표시의무를 강화한 새로운 라벨링 규정을 시행하고 있어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할 소지가 크다. 새로운 라벨링 규정에 따르면 모든 섬유제품의 라벨에는 수입된 직물 원재료를 남아공에서 가공해서 만든 제품은 'Made in South Africa from imported material'이라고 라벨에 표기되어야 한다. 이 외에도 섬유제품 라벨에 표시되어 있는 원산지 표시(예: Made in South Africa)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기되어야 한다.

DR콩고는 원산지 규정상의 제약은 없으나 귀금속(다이아몬드, 에메랄드, 루비, 사파이어, 황옥 등) 및 반귀금속(금, 은, 이리듐, 팔라듐, 라듐, 백금, 바나듐 등)의 특정 광산물 수출의 경우 광물성분 분석기관인 귀금속·반귀금속 감정평가센터(CEEC)의 원산지 확인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콩고는 중부아프리카국가경제공동체(ECCAS), 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SADC), 동남부아프리카공동시장(COMESA), 지역협정에 따라 특혜적 원산지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WTO에 통보하였으나 아직 협정에서 규정한 특혜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정부조달

개관

정부조달(government procurement)이란 “정부가 고유의 업무수행을 위해 소비 및 투자 등 경제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물품과 서비스를 구입하는 구매행위”로 정의된다. 세계 각국의 중앙정부가 정부조달로 지출하는 비용은 자국 GDP의 10%에 달하며 공기업 및 지방정부까지 포함하면 그 비중은 약 15%가까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세계경제에서 정부조달이 큰 비중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부조달 시장은 정치·국방·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정부조달 시장을 폐쇄적으로 유지할 경우 국내경제의 효율성이 하락함은 물론 조달과정의 불투명성으로 인해 부정부패를 초래할 가능성도 크다. 따라서 국제사회에서는 효율성 제고 및 부정부패 방지를 위해 정부조달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따라서 세계 다자무역 환경에서도 정부조달의 중요성이 점점 강조되고 있다.

정부조달의 조달 대상은 상품, 서비스, 건설서비스이고 조달 주체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기관으로 분류된다. 한 국가의 경제에서 정부는 가계와 기업, 외국과 더불어 기본 경제주체 중 하나이며 정부조달을 포함한 정부의 지출은 소비, 투자, 수입과 함께 총수요의 한 요소이지만, 정부는 여타 경제주체와 다른 점이 존재한다. 첫째, 여타 경제주체는 여러 작은 주체의 결합인 반면, 정부는 하나 또는 극히 소수(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등)로 구성되어 그 규모가 개별 기업이나 일반 소비자에 비교하면 절대적으로 큰 점이 특징이다. 또한,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수요독점(monopsony) 형태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정부의 시장영향력은 여타 경제주체들보다 훨씬 강력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여타 경제주체는 법이나 규제 등 주어진 환경과 상황 하에서 경제활동을 수행해야 하지만 정부는 법이나 규제 등 활동 환경을 비교적 쉽게 변경할 수 있어 일반 기업과는 달리 시장경제의 제한이나 규율의 영향을 적게 받을 수 있다. 셋째, 기업이나 소비자는 본인의 수익이나 신용에 따라 지출 수준이 결정되는데 반해, 정부는 이러한 제약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정부 지출의 증가는 소비자와 기업에 부과되는 세율상승을 통해 가능하며 원칙적으로 정부조달과 이에 따른 이득은 정부가 아닌 일반 국민들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출 담당자와 수혜자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조달분야에서는 정부와 국민간의 정보 비대칭성(asymmetry of information)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투명성과 지출에 대한 강력한 책임의무가 요구되며 투명성이나 책임의무가 미비한 경우 정부조달은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 넷째, 정부조달은 정책의 일환으로 사용될 수 있는바 지역개발, 중소기업의 발전 등 국내소득격차의 해소 및 일부 산업 개발을 위한 산업정책의 수단 또는 경기침체를 막기 위한 거시경제정책의 일환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특징으로 각국의 정부는 자국의 경제 및 환경에 부합하는 조달형태를 갖게 되며 이는 국가별로 상이하다.

국제적으로 정부조달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됨에 따라 국제기구들과 국제경제협력체들은 정부조달 시장개방을 위한 지속적인 논의를 수행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 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을 제정하였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정부조달 시장개방에 대하여 각 회원국들이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정부조달에 대한 연구 작업도 진행함으로써 정부조달 시장개방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에서는 정부조달 체제를 더욱 효율적이고 개방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비구속적 정부조달 원칙을 발표한 바 있다. 최근 체결되는 지역무역협정에서도 정부조달에 대한 합의가 협정에 포함되고 있는 추세이다.

정부조달과 관련된 무역장벽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첫째, 외국기업의

국내 조달시장 참여가 완전히 금지되는 경우로 특히 국방관련 조달에서 외국기업의 참여를 금지하거나 제한시키는 경우가 많다. 둘째, 국내기업에게 특허마진을 제공하거나 평가과정에서 외국기업에게 일정한 불이익을 부여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는 개발정책 차원에서 국내기업에게 혜택을 줌으로써 개별기업의 발전은 물론, 국내 경제개발이나 국내 고용향상을 유도하는 측면이 크나 때로는 사회정책에까지도 연계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미국이나 말레이시아는 자국 내 소수민족에게 정부조달 관련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 셋째로는 외국기업이 자국 정부조달과정에 참여하기 위해 불공정한 특정조건을 충족시키도록 요구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국내기업과의 합작을 요구하거나 공동입찰을 해야만 입찰 자격이 주어지는 경우, 국산품이나 서비스의 의무적 사용, 또는 의무적 기술이전 요건 등이 이러한 예라고 할 수 있다. 넷째로는 비록 구체적인 특혜를 부여하지는 않으나 비공식적으로 국내기업을 선호하는 경우가 있다. 즉, 문화적인 이유, 또는 국내기업과 정부관리간 맺어온 인맥관계 등으로 국내기업을 선호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하나의 조달주체가 대부분의 정부조달을 담당하지 않는 국가에서는 각 부처가 독자적으로 조달체제 및 관행을 유지하여 여러 절차가 공존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 각 부처가 서로 다른 관행과 절차를 사용함으로써 이러한 복잡한 조달체제가 외국기업에게는 시장진출의 애로사항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다.

WTO에서 정부조달에 관련되는 협정으로는 GATT, GATS와 GPA가 있다. 그러나 GATT와 GATS에서는 정부조달 관련 무역에 대해서 비차별원칙의 의무를 강요하지 않고 있다. GATT 제3조 8a항에서는 정부조달 물품 수입과 관련하여 국내세제와 규제에 대한 내국민대우 조건을 제외시켜 주고 있으며 GATS 제13조 1항에서는 서비스의 정부조달에 대해서 MFN 부여 의무(제2조), 내국민대우 의무(제17조), 시장접근 의무(제16조) 등을 제외시켜 주고 있다. 따라서 양 조약에 따르면 물품 또는 서비스의 정부조달에 대하여는 MFN, 내국민대우나 시장접근의 의무가 부여되지 않는다.²⁵

25_ 단, 정부가 수익을 바라며 물품을 재판매하기 위해 구입하는 경우, 이는 MFN과



이에 따라 대부분의 WTO 회원국은 정부조달에 있어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국내기업에 혜택을 부여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WTO에서는 복수국간 GPA가 체결되었다. 동 협정은 정보의 투명성과 시장개방, 입찰 및 낙찰절차의 공정성과 개방성, 항의절차 등 정부조달에 관련된 포괄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GPA는 다른 WTO 협정과는 달리 다자간(multilateral)협정이 아닌 복수국간(plurilateral)협정으로 협정에 가입한 WTO 회원국만이 준수 의무가 있다.²⁶ 따라서 WTO GPA에 가입한 WTO 회원국은 GPA의 부록에서 양허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MFN, 내국민대우, 시장접근의무를 이행해야 하나 GPA에 가입하지 않은 회원국은 동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

상술한 바와 같이 GATT와 GATS에서는 정부조달을 MFN, 내국민대우 등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WTO GPA는 정부조달에 다자무역의 원칙을 적용시키고 시장을 개방시키려는 노력의 결과였으나 일부 GATT/WTO 회원국의 강력한 반대로 GPA는 다자협정이 아닌 복수국간협정으로 남게 되었다.²⁷ 많은 국가들이 GPA의 다자화를 반대하고 있는 이유는 우선 정치적 민감성을 들 수 있으며 이밖에도 일부 국가들이 정부조달과 정부지출을 국내 경제발전 수단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발도상국은 물론 호주와 같은 선진국도 GPA 가입을 기피하고 있으며 미국과 호주 등은 국내기업에

내국민대우 등의 원칙을 적용받게 된다.

26_ 현재 정부조달협정에 서명한 국가는 한국,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미국, 스위스, 싱가포르, 이스라엘, 일본, 캐나다, 아이슬란드, 홍콩, 대만과 EU 27개 회원국이다. 또한, 아르헨티나, 칠레, 콜롬비아, 터키, 파나마, 호주, 중국, 인도 등 총 23개 국가와 4개의 국제기구(IMF, OECD, UNCTAD, ITC)가 옵저버로서 WTO GPA에 관련되는 논의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옵저버 국가들은 협정내용을 준수할 의무가 없다.

27_ GPA는 비록 복수국간협정이지만 일부 양자협정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GPA의 부록에서 각 서명국가는 특정 서명국가에 대해 차별대우를 양허할 수 있다. 이는 주로 상호 공평성 및 형평성을 이유로 하며 미국의 경우, 한국 지방정부의 높은 건설서비스 양허최소액에 대해 미국의 지방정부도 한국에만 차별적으로 동일하게 높은 건설서비스 양허최소액을 적용하고 있다.

게 혜택을 주는 조달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칠레 등 일부 국가는 GPA가 규정하는 투명성, 입찰과정, 낙찰기준에 관련된 조건 및 이행사항이 지나치게 경직적이므로 정부의 융통성 있는 운영을 방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비교적 개방적인 정부조달 시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GPA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또한, GPA에 가입한 국가들마저도 자국의 정치적 환경에 따라 양허안에서 일부 부처나 품목을 제외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 현재 GPA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들에 대해서 GPA에 가입하라고 설득시키는 것은 어려운 상태이다.

WTO GPA의 개정을 위한 협상은 2006.12월 협정문 협상이 타결된 데 이어 지난해인 2011.12월 양허안 협상까지 타결되어 정부조달 개정 협정안이 마련되었다. 정부조달 개정안은 제9차 WTO 각료회의 이후 발효될 예정이다. 정부조달협정 개정과 더불어 향후 중국 등 신규 가입국들의 정부조달협정 가입이 증가할 경우, 정부조달시장 개방은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황분석

미국의 연방정부 조달시장 규모는 2010년 기준 약 5천 170억 달러로 연방정부 총 지출액의 16%를 차지한다. 미국의 연방 구매를 총괄하는 법령은 「연방구매규정(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이며 동 법의 테두리 내에서 각 분야별 법규와 정책을 채택하여 운영하고 있다. 「연방구매규정」에는 외국 상품의 구매에 관한 규정들도 포함되어 있는데 미국산우선구매정책(Buy American) 관련 규정이 중추를 이루고 있으며 국제수지 운용을 위한 외국산 구매제한 규정이 보완적으로 도입되어 있다. 미국산우선구매정책은 미국 내에서 사용될 목적으로 구매되는 외국 물품에 대한 규정인데 비해, 국제수지운용정책관련 구매제한은 미국 외에서 사용될 목적으로 구매되는 외국물품에 대해서 적용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미국산우선구매정책 규정은 미 연방정부 기관들이 공공목적으로 물품을 구매할 때 미국 내에서 생산되고, 미국산 재료가 50% 이상 사용된 물품을 구매하도록 하는 것이



다. 미국은 자국산 우선 구매정책에 의해 외국물품의 구매를 제한하고 있지만 상호간에 정부조달시장을 개방하기로 합의한 WTO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한 국가의 기업에 대해서는 국내기업과 차별을 두지 않는다. 다만, 동협약은 정부조달협정을 적용하기로 양허한 기관이 일정 규모 이상의 물품이나 서비스를 조달할 때 적용된다는 점에서 제한요소는 여전히 존재한다. 더욱이, 「WTO 정부조달협정」을 적용받는 州는 총 50개州 중 37개州에 불과하므로 나머지 13개州의 조달시장에 대한 접근은 여전히 제한되고 있다.

한편, Buy American 조항은 2009.2월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경기부양법에 포함되었다. 공공사업 프로젝트의 미국제품 구매 의무화 대상에 철강과 함께 공산품을 포함하고 동 조항을 국제협정에 따른 미국의 의무에 합치되는 방식으로 실시할 것을 규정하였다. 따라서 GPA 가입국 기업들은 형식상의 차별은 받지 않고 있으나 이는 공식적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이지 미국 내 납품실적 요구, 특정 규격 요청 등 보이지 않는 장벽은 존재한다. 특히 미 연방조달시장의 70%를 차지하는 미 국방부 조달의 경우 미국과 상호 국방조달 MOU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기업에 대해서는 WTO 정부조달 비양허 품목의 입찰가격에 50%의 가격상향조정을 의무화함으로써 참여 기회가 사실상 차단되고 있다.

한·미 FTA를 통해 중앙정부의 상품·서비스 정부조달시장 개방 하한 금액은 미국측이 현행 약 20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우리측이 약 2억 원에서 1억 원으로 인하되었다.

중국의 중앙예산에 속하는 집중조달목록은 국무원이 결정·공포하며 지방예산에 속하는 집중조달목록은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또는 그가 위임한 기구가 결정하여 공포 한다. 중국 조달시장이 우리나라 조달시장과 다른 점은 바로 입찰 대리업체의 존재이다. 중앙정부와 각 지방정부에서 운영하는 입찰센터(招標中心)가 존재하지만, 입찰대리업체(招標代理公司)가 있어 정부를 대신하여 대부분 입찰 과정을 진행 한다. 입찰 조달방식은 공개 입찰방식과 초청 입찰방식²⁸과 경쟁성 담판, 단일 공급,²⁹ 가격 조희,³⁰ 국무원 정부조달 감독 관리부서가 인정한 기타 조달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공개입찰방식으로 조달을 할 경우, 반드시 정부조달정보매체에 입찰공고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자 입찰이 보편화가 되어가고 있지만, 지역 간의 관리 정책 및 전자조달제도의 통일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에 2012.2월 “통일된 규칙, 분급 구축, 기본 데이터 공유”를 모토로 업무 요점을 발표한 중국 재정부와 전자입찰투찰 실시조례를 발표한 국가발전개혁위원회를 중심으로 중국의 지방정부별로 각기 다른 전자 조달 시스템과 데이터를 통일화 구축하기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중국은 작년 말 일부 지방정부와 공기업도 포함시키는 것으로 GPA 개방 기준안을 수정 제출하였지만 아직까지 기타 회원국의 개방수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2013년 말 추가 양허안을 제출할 것이며, 이를 위한 중국 조달법 개정 의사를 표명하는 등 GPA 가입의지를 밝혔다.

대만은 1999.5.27일부터 시행된 「정부조달법」에 의거하여 GPA의 공고금액인 100만 대만달러 이상인 공사, 재무, 노동 서비스 조달 사업을 대외적으로 공개하여 조달하고 있다. 대만은 2008.12월 WTO로부터 GPA 가입을 승인 받았으며 2009.7.15일부터 GPA가 발효중이다. 그러나 대만의 GPA 기관은 총통부와 행정원 및 산하 소속기관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기타 지방

-
- 28_ 물품·서비스의 경우 상응한 자격과 조건에 부합되는 공급자 중 무작위 방식으로 3개 이상 공급자를 선택하고 응찰 초청장을 송부하고, 특수성을 가진 제한된 범위의 공급자로부터 조달해야 할 경우 및 공개입찰 비용이 총 구매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 경우 진행
- 29_ 무응찰 또는 합격된 입찰제안서가 없는 경우 또는 재입찰이 불가능한 경우, 기술이 복잡하거나 성적이 특수하여 세부규격 또는 구체요구를 확정할 수 없을 경우, 긴급한 수요인 경우, 사전에 가격총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총 4개의 경우에 해당되면 담판소조가 상응한 자격과 조건에 부합되는 공급자 명단 중 3개 이상의 공급자를 확정하고, 개별 공급자와 담판을 진행하여, 조달수요, 품질·서비스에 부합하고 최저가격 제안자를 거래 공급자로 확정하는 방식
- 30_ 조달물품의 규격과 기준이 통일되고 현물 공급지가 충족하며 가격변화 폭이 적은 정부조달의 경우, 가격조회소조가 상응한 자격과 조건에 부합되는 공급자 명단 중 3개 이상의 공급자를 확정하고, 가격조회 통지서 송부하며, 가격 조회 후 조달수요, 품질·서비스에 부합하고 최저가격 제안자를 거래 공급자로 확정하는 방식



정부 정부조달 입찰 참여시 현지 기업에게 우선권이 부여될 소지가 크다. 건설업 면허 발급, 건설공사 인력에 대한 비자발급 등이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관급공사의 경우 현지 업체들 간의 담합이 존재하여 우리나라 업체들은 현지 유력업체와 협작을 통해야만 수주가 가능한 실정이다.

대만이 2009.7.15일 GPA 가입 후 2012년에 입찰 종료된 GPA 정부 조달은 총 2,514건(표결 금액 기준 3,109억 대만 달러)으로 외국 기업은 대개 구매 입찰을 위주로 낙찰되고 있다. 외국 기업의 낙찰 건수는 총 419건(16% 비중)이며 낙찰 금액은 총 1,020억 대만 달러(32.8% 비중)에 불과하다. 이는 외국 기업이 대만 정부 조달 시장에 참여하는 데 있어 언어 장벽(입찰 제반 서류는 반드시 중국어로 작성, 구비서류가 외국어일 경우 중국어 번역본을 구비), 제반 비용 부담 및 시간 소요 등의 장애가 따르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 1994년 WTO 정부조달협정에 의한 일반경쟁입찰을 도입하여 내외 무차별의 원칙을 적용(외국기업의 해외실적을 평가대상에 추가, 외국 기업의 일본시장 진출기회 확대)하고 있다. 일본 입찰제도의 특징은 각 수요기관별로 자체 조달하는 분산조달제도를 채택하여 시행해 오고 있다는 점이며 일본이 지금까지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로부터 정부조달관행 시정요구를 받아온 이유도 이러한 분산조달제도 및 자국의 독특한 조달관행이 여타 국가들에게는 시장접근을 제한하는 주요 수단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일본의 중앙정부 조달규모는 2010년 기준으로 약 1조 5,630억 엔으로 전년 대비 약 15.7% 감소(조달 건수도 13,249건으로 전년대비 약 8.4% 감소)하였다. 한편, 일본의 건설사업의 규모는 2010년도 약 40조6,415억 엔으로서 그 중 정부부분의 공공사업분야가 약16조5,772억 엔이고 민간분야가 약 24조643억 엔으로 파악되고 있다

일본은 WTO GPA 회원국으로 정부조달시장의 개방정책과 정부조달제도 및 절차 등은 우리나라와 거의 유사하지만 실질적인 제도 운영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일본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그리고 공공단체별로 각각 조달 업무를 수행하는 분산조달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분산조달방식의 특징은

입찰 참가자격의 관리, 조달정보의 제공, 입찰집행 등이 각각의 기관에서 이루어지고 별도로 관리되기 때문에 정부조달 입찰에 참가하기 위한 자격 획득 단계에서부터 어려움을 겪게 된다. 또한, 정부조달시장에 참여하는 일본기업들은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분산조달방식의 영향으로 기업과 발주기관 간에 형성된 단골거래처라는 의식이 있으며, 기업 간에도 영업권역을 서로 인정하고 침범하지 않으려는 관행이 있는 등 신규 참여자에 대해 상당히 배타적인 경향이 있다. 이러한 폐쇄적 관행은 중앙정부 조달에 있어서 개방대상 조달안전에 대한 외국기업의 조달비율이 2010년 기준으로 금액대비 3.5%, 건수대비 2.7%로 극히 저조하다는 점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EU의 집행위 통계에 따르면 2011년 기준 27개 회원국의 연간 공공조달시장 규모는 약2조 4천억 유로이며 이 중 TED(Tenders Electronic Daily database)를 통해 EU 관보(OJ)에 게재된 조달시장 규모는 EU 전체 GDP 대비 약 3.4% 수준인 약 4,254억 유로 규모이다. 한편, EU에 가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규회원국의 정부조달 중 EU 정부조달지침을 적용받는 이들 규모는 GDP 대비 약 2~12% 수준이나 EU의 지역개발정책(regional policy)으로 신규 가입국들에게 제공될 개발자금이 사회간접자본 확충사업에 투자될 전망이다. 만큼 EU 전체 공공시장조달규모는 지속적으로 증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EU 확대와 동시에 WTO 정부조달협정(GPA)이 신규 가입국에도 자동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WTO GPA 회원국인 우리나라는 동 협정에 의거, 신규 가입국 공공조달 시장에서 동 협정의 허용 한도 내에서 내국민대우를 향유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로써 우리 기업들도 신규 가입국을 중심으로 EU의 공공조달시장 참여를 적극 도모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한-EU FTA 가 발효되어 기존 WTO 정부조달협정상 양허 이외에 1,500만 SDR(222억 원) 이상의 민자사업을 개방하였고 과거 낙찰실적 요구 금지 등을 명문화 하면서 우리 기업의 진출기회가 확대되었다.

EU의 정부조달관련 정책은 그간의 상황 변화에 맞게 개정되어 왔으며, 동 정책에는 입찰 관련 행정비용 절감 및 계약 당사자 간 대화 촉진 등을 위해



전자조달(electronic procurement) 방식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한다. 정부조달의 범위는 사업(works) 계약, 물품 공급(supplies) 계약, 용역 공급(services) 계약으로 3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EU는 2009.11월부터 기존 최저 정부조달 사업 규모를 하향 조정하여 사업(works) 계약의 경우 4,845,000유로 이상, 물품 공급(supplies) 계약과 용역 공급(services) 계약의 경우는 중앙정부 조달은 125,000유로 이상, 지방정부 조달은 193,000유로 이상의 입찰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확대된 전자조달 방식에 따라 응찰자들이 기술명세서를 작성할 때 2003.12월부터 적용 중인 새로운 EU의 공동조달코드(Common Procurement Vocabulary Codes)를 활용하도록 하고 일정한 조건 하에 계약자와 응찰자 간 및 응찰자 간 대화를 허용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입찰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여러 개의 조달사업을 하나로 묶어서 대규모 조달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보다 저렴하고 좋은 조건에 조달할 수 있는 점을 감안, 그간 일부 회원국들이 중앙조달기관을 설치하여 대규모 입찰을 시행해 오던 관행을 공식 인정하였는데, 각 회원국들은 이와 관련하여 자신들의 중앙조달기관 리스트를 사전에 EU 집행위에 신고해야 한다. 한편, EU는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과 유럽의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가급적 사회나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낙찰자를 선정하도록 하는 정부조달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최저가 또는 경제적으로 가장 유리한(most economically advantageous) 조건을 제시한 입찰자를 선정하도록 하되, 최종 낙찰자 선정 시 고용 및 환경에 대한 영향 등 사회 환경적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EU는 수도, 운송, 에너지, 우편서비스도 정부조달시장 대상에 포함시켰으나, EU 역내규정이나 GPA 등 다자 및 양자협정에 의해 개방되지 않은 정부조달시장 규모가 아직도 약 50%에 달하고 있다. 한편, 국방 조달에 대한 가이드라인, 친환경조달 가이드라인, 소액 조달에 대한 가이드라인 등도 시행되고 있는데, ‘국방 조달 가이드라인’은 연 1,700억 유로 상당의 EU 회원국 국방 조달에 대해, ‘친환경조달 가이드라인’은 조달기관의 친환경제품과 서비스 조달에 대한 기준을, ‘소액조달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앞의 두 EU 법령에서 정한 하한선 이하의 소액 조달에 대해 적용되고 있다.

호주는 선진국 중 유일한 WTO 정부조달협정 미가입 국가로서 정부조달 관련 외국기업 참여를 제한하는 다양한 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2005.1.1일 미국과의 FTA발효 등을 계기로 연방정부 차원의 정부조달정책을 대폭 수정, 비차별원칙을 도입하면서 외국기업의 연방정부조달시장에 대한 진입장벽을 철폐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호주연방정부조달시장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ESA(Endorsed Supplier Arrangement)」에 따라 사전요건(건전한 재무상태, 산업표준요건 충족, 정부정책과 일치 등)을 충족시켜야 하며 주정부 차원에서는 아직도 국내기업 우대제도 등이 존속되고 있다.

호주는 정부조달 전담기구를 두지 않고 있으며 각 부처 및 정부기관들이 자체적으로 입찰 등을 통하여 조달하고 있다. 연방정부차원에서 현존하는 진입장벽은 IT 등 정보통신분야에서 2천만 호주달러 이상의 정부구매에 참여하는 기업은 하드웨어의 경우 구매액의 10%, 소프트웨어의 경우 20%를 호주 중소기업으로부터 구매해야 한다. 주정부 차원에서는 여전히 국내기업 우대(Domestic Preference)제도가 남아있는 상황으로, 각 주마다 국내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수입제품에 비해 가격상 10~20%의 우대 마진을 적용하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외국 업체의 주정부 조달 입찰시, 국내업체 우대 마진 때문에 가격 경쟁력 확보가 어렵고 입찰 결과를 공개하지 않아 입찰과정에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다. 또한, 정부조달품목에 대한 규격기준이 자국 업체에 유리하도록 국제기준과는 달리 까다롭게 되어 있어 외국기업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러시아의 정부조달은 2006.1월부터 발효된 러시아연방 조달법률 「N94-F3」이 근간이 되고 있다. 이 법은 1999년에 제정된 구법을 대체한 것으로 연방정부, 주정부, 시 등이 6만 루블(또는 1,800유로)을 초과하는 정부물품 구매시에는 동 법률을 따르도록 한다. 매년 정부조달 금액은 연간 예산액(2010년은 약 3,300억 달러)의 30% 수준이다. 현행법에서는 외국기업들의 응찰(참여)에 조건을 두지 않고 전면 허용하고 있는 바, 내국기업이든 외국기업이든 조직형태, 소유형태 등에 관계없이 응찰 가능하나 청산·파산과정에 있거나 러시아 연방법률에 의거 영업이 정지되거나, 세금·관세 미납·체납



액이 일정한도에 이를 경우에는 응찰할 수 없다. 정부조달 방식에는 Tenders (경쟁), Auctions(경매), Open requests for quotations(공개견적요청) 방식이 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정부조달을 부미푸트라(bumiputeras: indigenous Malays)의 발전이라는 부의 균배정책 일환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현재 WTO 정부조달 투명성 작업반에는 참여하고 있지만, 협정 가입국은 아니다. 정부조달 관련 법령에는 ‘Government Contract Act 1949’ 및 ‘Financial Procedure Act 1957’이 있으며 이외에 재무부 관련 규정 및 지침이 있다. 모든 정부기관들은 20만 링깃 이상의 물품 및 용역 구입, 공사의 경우 공개입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5천만 링깃을 초과하는 공사는 재무부에 위임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국제입찰은 국내조달이 가능치 않은 경우에 행해지며 입찰공고의 경우 말레이시아 기업만으로 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브루나이의 정부조달 관련 법령에는 「83 금융규정(Finance Regulation of 1983)」과 「재무부 고시(Financial Circular) 10/1992 및 17/1993」이 있다. 구체적으로 정부조달은 재무부 산하 국가조달위원회(State Tenders Board) 및 12개 부처(총리실, 국방부, 재무부, 외무부, 내무부, 교육부, 산자부, 종교부, 개발부, 문화청소년체육부, 보건부, 통신부)별 조달소위원회(Mini Tender Board) 등 총 13개 조달위원회에서 발주한다. 국가조달위원회는 계약 규모가 150,000브불 이상인 조달사업을, 부처별 조달소위원회는 150,000브불 이하인 조달사업을 수행한다.

인도 중앙정부의 구매는 인도 재무부가 발표한 「General Financial Rules」를 따라야 한다.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정부 구매는 상공부 산하 인도조달청(Directorate General of Suppliers and Disposals)을 통해 이루어지며 그 동안 정부조달에 있어 중앙정부 공기업(Central Public Sector Undertaking)에 대한 차별적 조치로 간주되었던 구매우선제도(Purchasing Preference Policy)는 2008.4월부터 폐지되었다. 인도에서는 공사 입찰시 공사금액의 1%, 공사 수주시 공사금액의 10%를 보증채권 형식으로 발주처에 제공하여야 하는데 많은 인도 공기업들이 인도에서 운영되는 주요 은행에

서 발급한 보증채권의 유효성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건설업체들은 한국의 주거래은행에서 일차적으로 채권을 발급받고 다시 인도 내에서 이 채권을 재보증(Counter Guarantee)해야 한다. 이에 따라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수수료를 이중으로 지불하게 되어 우리 건설업체의 가격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파키스탄은 WTO 정부조달협정 가입국이 아니며 정부의 조달은 공개입찰이나 등록된 공급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2002.5월 공공조달관리청(Public Procurement Regulatory Authority)을 설립하여 조달절차를 관리하고 있으며 2004년부터는 투명한 공공 조달 실무를 위한 규정(Frame-work)을 제정하여 국제 입찰정보는 신문광고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개한다. 정부조달 참여시 특별한 제약은 없으나, 외국 업체의 경우 등록된 현지지사 또는 에이전트를 통해서만 참여가 가능하다.

필리핀 정부예산으로 조달하는 물품의 입찰에 순수한 외국업체(제조업자, 공급업체, 중개업체 등)의 참여는 불가능하며 필리핀인의 투자비율이 60% 이상인 합작법인을 설립하여야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다. 한편, ADB, IBRD 등으로부터 외자를 지원 받아 물품을 조달하는 경우 동 국제금융기관의 회원국업체는 합작법인을 설립하지 않고도 입찰참여가 가능하다.

과테말라의 「정부계약법(Ley de Contrataciones del Estado, Decreto 57-92)」에 따르면 중앙정부의 각 조직단위와 분권기관, 지방자치단체(Municipalidad)들이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 또는 매각할 경우에 동 법의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다. 동 법 제38조에 따르면 물품, 서비스, 공사 등의 구매금액이 100만 께찰(1달러=7.75께찰, 2011.10.24 현재)을 초과할 경우에는 동 정부계약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일반적으로 입찰 참여자격은 국내에 합법적으로 설치된 법인 또는 자연인에게 주어지며 외국인의 경우에는 현지에 Legal Representative를 두어야 한다. 국가베이스의 원조나 차관 등으로 시행되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을 국내 및 중미 내 법인 또는 특정국으로 한정하는 경우도 있다.

멕시코는 WTO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정부조달계약에서 자



국 산업이 보다 많이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멕시코의 정부조달에 관한 기본정책이다. 따라서 국내입찰의 경우 오직 국내공급자와 국내상품(국내부품 사용비율이 50%를 초과해야 함)만이 참여가 가능하다.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일정한 제약요건 하에서 외국인 입찰자의 참여가 가능하다. 즉, 외국인의 입찰참여가 가능한 경우는 ①국제조약(FTA 등)에서 입찰이 의무화되어 있거나 계약이 특정적으로 국제조약의 대상이 될 때, ②적절한 국내공급자가 없을 때, ③응찰자가 없을 때, ④국제금융기구(IMF 등) 차관 자금에 의해 국제입찰이 규정된 경우 ⑤입찰 참가자가 금융과 함께 들어오는 경우 등이다. 그러나 단지 몇 개의 국내 회사만이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정부기관에 의한 검토과정에서 국내입찰자의 제시가격이 국제수준과 비교하여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고 판단될 때 외국인에게도 입찰참가를 공개하여 시행하고 있다. 재화 및 서비스 가격 심사 시, 내수시장 최저가와 제출가를 비교, 동일 조건의 경우 15% 범위 내에서 국내산에 가산점을 부여한다. 한편, 최근 멕시코는 PEMEX(멕시코국영석유회사)를 중심으로 대형 건설프로젝트에 대해 FTA 회원국 기업에게만 참여자격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

베네수엘라는 WTO 정부조달협정 미가입국으로서 중앙정부 차원의 조달 전담기구는 두고 있지 않다. 다만, 조달업자 공급업체 등록 및 정부조달업무의 기획 및 조정을 위해 조달청(SNC)을 두고 있으나 실제적인 물품 조달업무는 중앙정부부처 및 지방정부, 정부기관들이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베네수엘라는 정부조직이 비대하고 석유 산업, 알루미늄 산업, 철강 산업 등 각종 기간산업이 국영화되어 있어 입찰에 의한 정부 및 국영기업의 구매가 많다. 입찰절차법에 의하면, 정부조달 상품의 구매에 있어 국산품 가격이 경쟁 수입품보다 5%이상 비싸지 않은 경우 국산품 구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제품의 국내 부가가치가 20% 이상이거나 중소기업 제품일 경우에는 추가로 각각 5%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자국 내 생산제품은 외국산 제품 대비 최대 15%의 가격 경쟁력을 갖도록 하고 있다. 베네수엘라의 정부조달은 대부분 공개입찰의 형태이지만 차베스 정부에서는 정부간 협정 또는 계약을 통해 프로젝트 수행 및 입찰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추진하는 대부분의 대형 공개입찰은 매우 제한된 형식적인 절차로

전략하였으며 실제로는 인맥 및 자금을 통한 대정부 사전 로비활동이 업체 선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되었다. 공개입찰의 경우에 공고 기간이 통상 2주일 이내로 짧아 외국 업체가 참가하는 데 불리할 뿐만 아니라 모든 서류를 스페인어로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외국기업의 진출에 장애가 되고 있다.

아르헨티나의 정부조달은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규모가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 대부분 미주개발은행(IDB)의 회원국 기업에게만 입찰 참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한국기업은 원천적으로 입찰 참여가 봉쇄되어 있었다. 그러나 2005년 우리나라의 IDB가입으로 이러한 진입장벽이 없어져 우리기업들의 진출이 가능하게 되었다. 2002년에는 긴급경제조치법 제정을 통해 정부조달 시 공개입찰 대신 수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행정부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였으며, 아르헨티나 의회는 긴급경제조치법의 시효를 매년 연장해 왔고 현 시효는 2013.12.31일에 만료될 예정이나 재연장될 가능성이 높다.

엘살바도르는 WTO 정부조달협정의 회원국은 아니다. 정부조달은 「공공부처 조달 및 계약법」(2000.4월 제정)에 의해 규제되고 있으며 재무부의 「공공부처 조달 및 계약 규제 위원회」(UNAC)가 조달관련 정책을 수립하나 조달 자체는 각 정부기관에서 담당한다. 동 법규는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자체에도 적용된다. 동법상 131,800달러 이상의 정부조달은 대외발표하고 공개입찰하도록 되어 있으며 16,600달러 이상의 조달은 대외 발표하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엘살바도르의 관련 법규는 상품·서비스·건설서비스 모두에 적용되며 일반적으로 외국기업의 입찰을 허용하고 있으나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의 입찰조건이 동일한 경우 국내기업을 우선하도록 하고 있다.

캐나다는 연방정부의 공공사업 및 정부 서비스부(Public Works and Government Services Canada)가 약 100여개의 연방정부 및 기관, 주요 정부투자기관을 대신하여 물품 및 용역조달을 담당하고 있다. 「WTO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은 연방정부차원에서만 적용되고 있으며 지방차원에서



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캐나다 정부는 WTO 정부조달협정에 자국의 모든
주정부 및 정부투자기관도 포함시키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주정부들이 주의
관심분야에 대한 미국의 정부조달협정 편입조치가 있기 전까지는 이에 응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여 현재까지 주정부로부터의 동의를 받지 못하
고 있는 상태이다.

코스타리카는 미국과의 CAFTA 협상을 통해 정부조달시장 개방을 합의함
에 따라 코스타리카 정부조달시장에 대한 외국기업의 참여가 매우 유리해
졌다. 이에 따라 입찰기관의 경우, 입찰공고기간을 충분하게(최소 40일 이
상 공고) 설정해야 하며 상거래에 불필요한 장벽을 부과하기 위한 목적의
특정한 규격 설정도 할 수 없다. 이처럼 CAFTA의 국제입찰 관련규정을
적용받는 입찰 건의 최소금액은 상품서비스의 경우 58,000달러(공기업의
경우, 25만달러 이상), 건설의 경우에는 672만달러이다. 한편, 코스타리카
정부는 조달행정의 고질적 문제였던 장기 소요 시간 문제와 투명성 불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기반을 둔 전
자조달시스템(MER-LINK, www.mer-link.co.cr)을 2010.8월 오픈했다.

콜롬비아 정부는 2003.6월 「Law816호」를 공포하면서 정부조달과정에서
자국 업체와 자국산 물자 및 서비스에 대한 우대 규정을 명문화하였다. 상기
법령은 정부조달과정에서 콜롬비아업체에 콜롬비아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10~20%의 가산점을 외국산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하여는 5~15%의 가산점
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콜롬비아는 WTO 정부 조달 협정 옵서버 국가이나 당사국은 아니다. 콜롬
비아는 정부 조달에 관한 내국민대우를 멕시코와 안테안 공동체(페루, 에콰
도르, 볼리비아), 칠레 등에 상호주의에 의거하여 부여하고 있다. 향후 한-콜
롬비아 FTA가 발효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정부조달사업에 대해서는 내국
민 대우가 부여될 것이다.

그리스는 EU 회원국으로 EU 역내 정부조달 지침에 따라 관련 정부조달
규정을 입법 시행하고 있다. 정부조달 주무부처인 경제·경쟁·해운부에서
연간 통합 정부조달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각 부처 및 지자체에서 해당분야

의 정부조달을 시행하고 있다. 그리스 정부 발주 국제입찰의 경우 그리스 국내 협력업체와 제휴하지 않는 경우 사실상 낙찰이 어렵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리스 내 사무소 설치 등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대부분의 외국기업은 그리스 현지 업체와 협력관계를 맺고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하고 있다. 2009.9월 아테네 지하철 공사에서 발주한 '제3기 아테네 지하철 전동차 사업'에서 우리 현대로템 및 한화 컨소시엄은 그리스와 지역연고가 강한 스페인 CAF사, 이태리 ANSALDO사를 물리치고 동 사업(전동차 3대 17편승, 1억 52백만 유로)을 수주함으로써 지난 2004년 제2기 사업에 이어 연속수주에 성공하였다.

노르웨이의 정부조달 시장은 GDP의 10%에 육박하고 있으며 WTO의 정부조달 협정(GPA) 당사국으로서 국내입법을 통해 GPA 규정을 이행하고 있다. 공개입찰의 경우 어느 기업이나 참여 가능하나 EEA나 WTO의 GPA 당사국에 등록된 기업이 아닌 경우에 입찰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 불허된다. 노르웨이는 정부부처 및 기관, 국영기업 및 지방정부 등 약 5,500여 기관이 직접 입찰을 기획, 시행하고 있으며 다만 국가 전체적인 입찰기준 및 대외교섭 업무만을 통상산업부가 책임지고 있다. 연간 공공부문 조달규모는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중 국제입찰에 의한 조달은 약 42% 수준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조달규모 중 노르웨이란 제품과 외국산 제품 비율은 대략 4:6 정도로 외국산 제품의 비율이 높다. 노르웨이의 공공부문 입찰관련 정보는 Norsk Lysingsblad라는 주 2회 발간되는 입찰정보 전문지를 통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데 노르웨이어로만 발간된다. 그러나 주요 입찰의 경우 각 정부부처나 발주기관들의 홈페이지에도 게재되고 영문으로도 열람이 가능하다.

독일의 정부조달시장은 외국기업의 입찰참가 및 낙찰을 제한하는 차별이 없고, WTO 정부조달규정 및 EU 기준이 준수되고 있다. 독일정부는 2006. 11월에 정부조달규정(VO: Vergabeverordnung)을 개정하여 EU 역내 조달지침(Directives: Richtlinie)의 국내이행 절차를 완료하였다. 정부조달규정(VO)은 상품조달규정(VOL), 서비스조달규정(VOF) 및 건설서비스조달



규정(VOB)으로 구분하여 운용되고 있다.

독일의 정부조달 시장규모는 총 30,000여 공공기관에서 연간 1백만 건의 조달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계약 규모는 2011년 기준 약 3,500억 유로이다. 독일의 정부조달 입찰공고는 EU지침에 의하여 EU 전자조달시스템에 영문으로 게시되고 있고 독일 내 관보 및 각종 일간지 및 전문지에 발주내용이 공시된다.

독일 경쟁제한방지법 제97조에서는 조달계약 기본원칙의 하나로 ‘중소기업에 대한 배려’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낙찰자 결정시 중소기업에 대한 가점 부여 등 구체적인 우대조항은 없으나, 입찰공고가 실질적으로 대기업에 유리하게 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루마니아는 EU 가입에 따라 2007.1.1일부터 WTO/GPA 회원국이 되었다. 루마니아 정부는 공공입찰제도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EU 가입절차의 일환으로 2005년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 공공입찰규제감독기관(NARMPP, National Authority for Regulating and Monitoring Public Procurement)을 설치하였다. 공공입찰을 규제하는 기본법제로 2006.6월 발효하고 2010.6월 일부 개정된 정부령 제34/2006호가 EU의 공공입찰을 규제하는 제반 법규를 반영하고 있다.

루마니아의 정부조달 규모는 연간 GDP의 10% 이상에 이르며, EU 가입이후 루마니아에 할당된 대규모의 EU 구조개선기금(2008-2013)을 활용, 루마니아의 인프라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은 EU 자금의 흡수율(10% 이내)이 낮아 당초 기대된 효과를 나타내고 있지는 못하지만, 중장기적으로 공공입찰 분야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2011.9월 공공입찰 관련 법령 일부 개정을 통해 민관합작(Private-Public Partnership)사업도 공공입찰 규정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있고, 1만 5천유로 이상에 상당하는 계약(상품, 서비스 및 공사)에 대해서는 공공입찰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고 있으며, 계약 규모가 상품, 서비스의 경우 12만 5천 유로, 공사 계약의 경우 484만 5천유로 이상인 경우 반드시 공개경쟁, 제한

적 공개경쟁입찰을 적용하도록 개정하였다.

스위스는 WTO 정부조달협정 당사국으로 연방정부의 34개 기관과 26개 칸톤 州정부의 조달은 WTO GPA 양허 하한선에 한하여 외국인의 입찰참여를 허용하고 있다. 한·EFTA FTA는 정부조달 분야에 관하여 WTO 정부조달협정을 원용하고 있다. 양허 하한선은 정기적으로 조정되고 있는 바, 2010.1월부터 2011.12월까지 적용되는 상품 및 서비스의 하한선은 23만 프랑, 빌딩은 870만 프랑, 물·에너지 및 교통회사가 구입한 상품 및 서비스는 70만 프랑이다. 한편, 주정부가 계약 당사자일 경우는 2001년 개정된 주정부간 공공조달협약(AIMP)에 의하면, 건설은 960만 프랑, 상품 및 서비스는 38만3천 프랑이 하한선이다.

영국의 공공조달 규모는 2,380억 파운드(2010/11 회계연도)로 정부지출 6,617억 파운드의 약 36%에 이른다. 2010년 발표한 중소기업의 정부조달시장 참여 확대(최대 25%까지)를 위해 계약 분할, 정보제공 확대, 하도급 기회 제공, 제품혁신 지원, 새로운 조달방법 개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1년초 조달공고 통합조회 웹사이트(Contracts Finder)를 구축한 데 이어 2011년말에는 10만 파운드 미만 소액 조달건의 통합적으로 처리하는 전자조달시스템(Dynamic Marketplace)을 도입하였다.

영국이 유럽연합의 회원국이기 때문에 정부조달 또한 EU 정부조달지침과 WTO 정부조달협정에 따르므로 일정 한도액 이상의 조달 건에 대하여 한국 기업에 대한 차별은 없으나 문화적 특성 등으로 인해 한국기업의 진출은 매우 부진한 상황이다. 계약담당자들이 한번 검증된 공급자와의 관계 유지를 선호하기 때문에 새로운 공급자들이 들어갈 틈이 작고 아직까지 한국산 제품에 대한 인식이 낮아 영국 조달시장 진출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영국 조달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품질력을 인정받을 필요가 있으며 조달과정 및 절차가 통상적으로 우리 보다 복잡하고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처할 필요가 있다. 군수 및 시설·건축, 플랜트, 저탄소 관련 산업 등이 상대적으로 한국기업들의 진출 가능성이 높다. 가장 큰 수요기관이라 할 수 있는 NHS의 경우 영국 정부의 재정감축



정책에 따라 조달금액 축소가 불가피하나, 국제적인 품질력을 확보한다면 상대적인 가격경쟁력을 활용하여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다.

카자흐스탄은 WTO GPA 회원국이 아니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2012.5월 Local Clause(국산화 비율) 강화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달법(the Law on Government Procurement)을 재개정하였으며, 국산화율을 상품 10%, 서비스 및 건설 5%로 규정함으로써 상품, 서비스 및 노동력 구매에 제한을 두고 있다. 동 국산화 비율은 국내 및 외국 기업에게 공히 적용되며, 비율측정은 외국투자자위원회(foreign investors council)에서 인정하는 specific formula에 의해 계산된다. 즉, 국내 생산 상품 및 서비스 사용 비율이 높을수록 수주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으며, 입찰참여자는 입찰전에 동 국산화 비율을 산업신기술부로부터 증명서를 발부받아 제출할 수 있다.

회사 주식을 50%이상 보유한 외국인 투자사는 외국인 회사로 규정되어 정부조달에 참여할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다만, △ 카자흐스탄에 위치하고, △ 카자흐스탄에서 최종상품을 생산하며, △ 현지 노동자 고용률이 85%를 초과할 경우 'National Producer'로 인정되어 입찰회사가 부여된다. 이와 같은 법적 조건에도 불구하고 실질 참여가 용이치 않으므로 외국인 투자기업들은 주로 현지에서 LTD 형태의 자회사를 설립하여 입찰에 참여하고 있다.

한편, 카자흐스탄 정부는 2010.1월 지하자원이용에 관한 법(law on sub-surface use and to public procurement)을 포함한 관련법류 개정을 통하여 에너지자원 개발 분야에서의 정부조달 규정을 더욱 강화하였다. 만약 외국기업이 동 규정을 위반할 경우, 개발권 연장불허, 계약파기와 같은 강력한 처벌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

크로아티아 공공조달은 EU정부조달지침에 부합하는 새로운 「Public Procurement Act(Narodne novine(크로아티아 관보) 110/2007, 125/2008)」에 의해 실행되고 있다. 정부조달법에는 정부조달에 있어 국가나 지역적 선호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면서도 수도·에너지·운송·우편서비스

부문은 예외가 허용되는 부문으로 하고 있다. 7만 Kuna(약 9,650 유로) 이상의 모든 공공계약에는 정부조달법이 적용되며 일반적으로 조달(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는 금액으로 동 법은 건설공사 계약, 물품조달 계약, 서비스 계약 모두에 적용된다. 입찰을 실시하는 주체(정부부처, 정부기관 및 지자체 등)는 조달절차를 명확히 정하고 입찰 초청서를 크로아티아어로 준비해야 한다. 또한, 외국기업체 및 개인 무역상이 지속적인 상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크로아티아에 지사를 설립해야 하므로 이러한 점은 외국기업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정부조달법은 입찰 참가기업의 대표자나 임원 등이 범죄조직 가담, 부패, 뇌물수수, 돈 세탁 등의 각종 범죄행위에 관해 유죄판결을 받거나, 사회보장세나 각종 조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참가 배제사유가 됨을 명시하고 있다.

나이지리아는 1999.5.29일 출범한 민선 정부가 모든 공공 기관의 구매는 공개경쟁입찰로 구매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실제로 전력공사, 석유공사, 전화공사 등의 입찰이 신문에 공고되고 있다. 그러나 입찰 공고 후 마감까지의 기간이 약 2주일 이내로 매우 짧아 발주처에서 기존에 거래하던 Contractor들에게 정보를 미리 제공하고 형식적인 공개 입찰을 하고 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또한,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 발주의 프로젝트는 자국 산업의 보호 육성 측면에서 현지인과의 합작투자가 필수사항이 되고 있고 석유 및 가스 생산시설 건설과 관련하여 나이지리아 정부 및 국영석유회사는 현지화정책(Nigerian/Local Contents Development)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어 입찰시 주의가 요망된다. 나이지리아 국회는 2009.10월 “Local Content Bill”을 통과시키고 석유 및 가스산업 분야에서 현지화를 강제하는 법안을 만들었으며 2010.4월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법률로 발효되었다. 동 법은 인력, 구매, 조달, 건설, 설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를 망라하고 있다.

모로코는 WTO 정부조달협정(GPA)에 가입하지 않고 있으나, 정부조달과 관련된 법령을 정비하고 전자조달을 점진적으로 도입하는 등 투명하고 효율적인 정부조달 제도의 정착을 도모하고 있다.

모로코는 정부조달 관련 법규를 개정하여 2007.10.19일 발효된 「정부조달



에 관한 Decree No.2-06-388」에서 정부조달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모로코는 정부조달 관련 중앙행정기구가 없고 각 부처, 국영기업, 지방행정기관 등이 각각 조달업무를 이행하며 경제재정부 및 회계감사원은 정부조달 계약의 감시와 통제를 담당한다. 모로코는 정부조달 제도개선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과거 거래 경력과 인맥이 낙찰자 선정과정에서 여전히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또한, 정부조달 입찰 공고와 제출서류가 프랑스어만으로 진행되고 있어 영어권 서류작성에 익숙한 기업에게는 보이지 않는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대규모 인프라사업의 경우, 공고 후 입찰까지 준비기간이 3개월 정도로 촉박하다는 점도 외국기업들에게 불리한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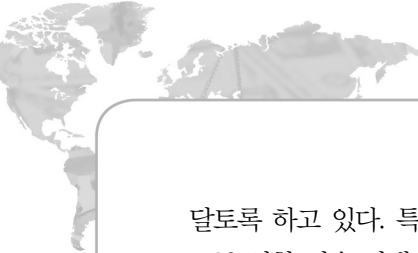
사우디아라비아는 2007.12월 GPA위원회 옵저버가 되었으나 동위원회 가입을 위한 협의는 아직 개시되지 않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왕령에 따라 정부조달을 실시하나 대부분의 국방 분야 계약은 이 법령의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사안별로 협상을 한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방위산업, 통신, 항공 및 전력 등 주요 조달 계약(약 USD1.3억 이상)에 참여하는 외국기업에 대해 보상투자(Off-set) 프로그램 의무이행을 부과하고 있다. 보상투자 규모는 계약금액 중 Technical value의 25~35%(방산물자 및 관련 서비스는 통상 35%)이며 이때 건설비, 인건비 및 사우디산 구매분은 제외하고 산정한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자국산 우선 구매정책에 따라 정부조달 물품의 경우 자국산 구입 가격을 동일 외국산에 비해 10% 비싸게 구매하는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재무부가 승인하는 플랜트 설비 등 기술을 요하는 공사는 원청자가 공사의 30%를 의무적으로 현지기업에 하청을 주도록 하고 있다. 공사용 자재, 장비의 직수입을 금지하고 수송, 보험, 금융, 토지 및 건물임대와 Catering에 대해서 현지 용역업체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항목별 세부예산내역 등 정부조달관련 정보공개가 미흡하여 외국 업체는 정부가 발주하는 공사 계획을 사전에 파악할 수 없으며 입찰 공고 기간이 짧아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어렵다. 2010.2월 사우디 국방부는 자국 군수산업의 육성을 도모하고자 자국기업에게 무기를 제외한 기초 군수물자 입찰에 대한 참여를 허용하기로 하였다. 이는 그동안 외국기업만

참여하던 것을 자국기업에게도 입찰참여를 개방하는 조치로서 입찰참여대상 품목은 플라스틱, 파이프 등 약 15,000개에 이른다.

이란은 100만 달러 이상의 구매 및 공사의 경우 원칙상 국제 입찰에 의해 발주하고 있으며 공사 입찰의 경우 발주처에서 입찰 공고 이전에 적정업체와 상담을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미리 주요 발주처 관계자와 협의 채널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업체가 공사 총액의 51%이상 지분을 갖는 consortium을 구성하도록 권유하고 있다. 정부조달 시 발주하는 입찰에는 공개입찰(open tender)과 제한입찰(pre-qualified)이 있어 단순 아이템이면서 기술, 사양이 복잡하지 않고 또한 신속성을 요하는 구매의 경우 제한입찰로 발주하고 있다. 현재 정부 구매의 약 80%는 Inquiry Invitation Tender(제한입찰의 일종)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WTO 정부조달협정 서명국이나 국방부의 조달에 관해서는 예외를 두고 있다. 정부조달협정은 절충교역(offset) 계약체결의 반대급부로서 현지조달, 기술이전, 투자, 구상무역 등을 요구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이스라엘은 WTO 가입 교섭과정에서 예외적으로 절충교역이 인정되었다. 그 결과 정부조달협정 적용대상 조달의 경우, 이스라엘은 계약금액의 20%(전선, 전기자동차 등 특별예외품목은 35%)에 상당하는 절충교역을 계약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스라엘 국회는 1995년 정부의 이스라엘 제품 우대규정을 승인한 바, 동 규정에 따라 정부조달 입찰에서 이스라엘 정부는 ①WTO 정부조달협정 적용대상이 아닐 것 ②이스라엘산 부품 사용비율이 최소 35%일 것 ③가격이 355,000SDR(2009.11월 약 56.9만 달러) 이하일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스라엘 제품이 외국산 제품보다 응찰가격이 15% 이내 범위에서 높더라도 이스라엘 제품을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수의 정부조달 입찰사업에서 이스라엘 발주처가 무한책임조항(unlimited liability clause)을 삽입하고 있으므로 주의가 요망된다.

쿠웨이트는 중앙입찰위원회(CTC: Central Tenders Committee)라는 특별한 기관을 통해 정부부처 및 국영기업 등에 소요되는 물품 및 용역을 조



달토록 하고 있다. 특히 일정금액(KD5,000, USD17,000상당)을 상회하는 모든 입찰 건은 거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CTC에서 관장하고 있다(국방부, 보안대를 포함한 내무부 등은 CTC관할에서 제외됨). 낙찰방법은 최저가 낙찰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외국회사는 입찰 참여를 위해 반드시 쿠웨이트인 국적의 에이전트를 통해 사전 등록을 해야 한다. KOC(Kuwait Oil Company), KNPC(Kuwait National Petroleum Company)등 국영 기업 발주처는 벤더등록업무를 전담하는 별도의 기구(Vendor Evaluation Committee)를 운영하고 있으나 MEW(Ministry of Electricity & Water) 등 정부 부처는 별도의 전담부서 없이 해당분야 차관보(Asst.Under-Secretary)가 관장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등록분야는 국방·보안·안전·위생·식품·화학 등이며 등록대상 업체는 해당 품목 제조업체에 국한하고 있다(단순 무역 업체 등록 불가). 벤더등록 희망업체는 주재국 내 적격업체를 발굴,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한 후 동 에이전트를 통해 해당 발주처에 벤더로서 등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KOC의 경우에는 등록 희망업체가 직접 할 수도 있으나 절차가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현지 에이전트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등록 신청은 필요할 때마다 할 수 있으나 KOC의 경우에는 1년에 2회(1월, 6월)로 국한하고 있으며 기간은 통상 6개월~1년이 소요된다. 한편, 건설업 허가는 쿠웨이트업체만 받을 수 있는바 외국 건설업체는 쿠웨이트 파트너, 에이전트, 스폰서를 통해 쿠웨이트 당국에 등록가능하며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CTC를 통해 소관 정부부처 혹은 공공기관의 사전자격심사(PQ)를 통과해야 한다.

이집트에는 정부조달을 위한 입찰전담기관이 없으며 각 정부부처 및 기관 별로 입찰전담부서를 두고 사안발생시 입찰 및 구매를 통해 조달하고 있다. 현재 제조업 부문에 관여하고 있는 국영기업은 117개사(제조업 총생산의 70~80%)로서 동 국영기업에서 대부분의 산업용 기계류와 장비를 수입하고 있으며 법령에 따라 입찰을 통한 공공구매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건설 중장비, 공공의료기관의 의료기기 입찰에서는 미국, 유럽 등 일부 국가가 제품으로 제한하거나 원산지에 차등을 크게 두는 경우가 있어 우리업체로부터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이집트 정부는 지난 1992년부터 국제입찰

에 참가하는 외국기업은 현지 회사와의 합작 또는 컨소시엄의 형태로 입찰 참여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평상시 실력 및 신뢰성 있는 현지 업체를 면밀히 파악한 후, 이들 업체의 주요인사와의 공적 및 개인적 친분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입찰 공고 전부터 입찰내용을 사전 입수하여 응찰준비를 할 수 있도록 입찰기관의 주요인사와도 평상시 개인적인 유대관계를 돈독히 해야 한다. 국방부 입찰과 관련하여 2001년 이후 2007년까지 한국 업체들은 중구경탄 생산기술 이전 플랜트 사업, 이집트 공군의 활주로 조명 시스템, 활주로 청소차, 항공기 급유차, 굴삭기 등 1억 3천만 달러 이상을 수주하였다. 국방부 입찰 추진 절차는 방산국으로부터 의향서를 접수→주 이집트 한국대사관 무관부 경유 제안서 제출→1차 기술 평가(3~4개월 소요)→입찰 초청서 접수 후 개별 협상(통상 10회 이상 개별 가격 협상, 조건 합의)→입찰 참가→낙찰 후 가격 재협상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무역관 및 무관부와 긴밀한 정보교환이 필수적이다.

기술장벽³¹

(표준 및 인증)

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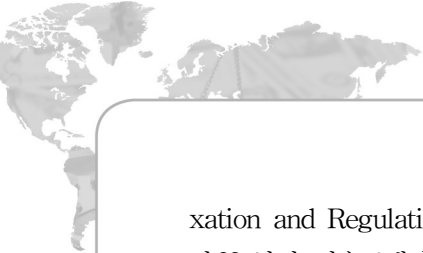
무역상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은 기술규정(technical regulations), 표준(standards) 및 적합성평가절차(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s) 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상품에 대한 기술규정 및 표준 관련 제도는 과거 각국이 관련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할 때 주로 자국상품 및 국내시장을 중심으로 제정한 결과 일반적으로 국가마다 서로 다르게 설정되었다. 이후 국제표준화를 통하여 국가간 표준의 조화를 추구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표준 및 관련제도의 차이가 무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와 같이 국가간 상품의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평가절차 등의 차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국가간 상품이동에 대한 장애를 무역상기술장벽이라고 한다. 기술규정 또는 표준은 주로 정부 정책당국, 민간표준화 기구 또는 단체가 상품에 대한 기술규격(technical specification)이나 기술요건을 설정한 것이며 적합성평가절차는 특정 제품이 이미 설정된 기술규격이나 기술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평가함으로써 상품의 생산 및 유통상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상기술장벽에관한협정(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은 기술규격이나 기술요건을 법적인 강제성 여부에 따라 기술규정과 표준으로 구분하고 있다. 기술규정 및 표준관련 제도는 복잡한 기술체계의 조화

31_ 1995년 WTO 출범 이후 무역상기술장벽 분야에 대한 WTO 차원의 논의 및 현황은 남상열, 2005. 『무역상기술장벽 분야의 WTO 논의동향과 대응』. 정책연구 05-0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참조.

및 공동사용, 투명성의 제고, 정보비용의 절감, 기만적 행위의 방지 및 보건과 환경관련 위험의 억제 등을 보장하기 위해 설정된다. 각국 정부는 인간과 동·식물의 생명과 보건, 안전, 환경보호, 국가안보 등 다자무역규범상 정당한 목적으로 인정되는 특정한 공공정책 목표의 달성을 위해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가지는 기술규정을 별도로 제정하여 이에 대한 이행의무를 부여하고 관련 국경조치를 취하고 있다.

기술장벽은 다자무역체제를 기반으로 전통적인 무역장벽으로서 관세가 크게 인하됨에 따라 그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더욱 부각되고 있으며 일반적인 유형은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평가절차 등 기술규제의 주요 요소들에 대하여 각각 구분된다. 기술규정과 관련된 대표적인 기술장벽은 차별적인 기준의 적용,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이상의 지나친 기술요건, 국제표준과의 불일치, 투명성이 결여된 규제와 절차, 기술규정의 부재 등이 있다. 표준의 경우에는 준수자체가 자발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표준화기구나 단체 등에서 설정한 표준을 준수하도록 법제화하거나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차별적인 선택에 의해 실질적인 강제성이 부여됨으로써 기술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적합성평가절차와 관련하여서는 양국 간 기술규정, 표준 또는 시험, 인증절차에 있어서 특별한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입국에서 중복적인 검사를 요구하는 경우와 검사지연, 관련비용 과다, 불투명한 절차 등이 흔히 기술장벽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외에도 상품표시부착(labeling)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것과 상이하거나 지나치게 까다로운 표시요건 등이 기술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기술장벽은 모든 상품에 대해 정당화되기 어려운 과도한 기술적 규제조치를 포함하며 WTO협정상 그 조치의 내용에 따라 무역상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 또는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sanitary and phytosanitary(SPS) measures)로 구분된다. 그리고 기술규정과 관련하여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들은 GATT 1947 제I조의 일반적 최혜국대우(General Most Favoured Nation Treatment) 조항 및 제III조의 국내과세 및 규제에 관한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 on Internal Ta-



xation and Regulation) 조항 등 일반적인 GATT 원칙이 적용되어 왔다.³² 한편, 기술규제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중요한 것으로 인식됨에 따라 도쿄라운드(Tokyo Round, 1973~1979년)에서 「무역상기술장벽에 관한협정(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또는 통상적으로 「표준규약(Standards Code)」으로 불리는 관련 다자무역규범이 설정되었다.³³ 이후 우루과이라운드(Uruguay Round, 1986~1993년)에서는 도쿄라운드에서의 표준규약의 규정들이 구체화되고 강화된 새로운 「무역상기술장벽에관한협정」이 채택되었다. 또한, 우루과이라운드에서는 농업협상과 정에서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위생및식물위생조치의적용에관한협정(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이 규범화되었으며 식품안전 및 동·식물 검역과 관련된 기술요건들에 대한 다자간의 원칙을 별도로 설정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복수국가간 협정으로서 체약국들에게만 적용되던 이전의 표준규약과는 달리 TBT 협정과 SPS 협정은 WTO 설립에 관한 협정의 부속협정으로서 모든 WTO 회원국들의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규율하게 되어 다자무역 규범으로서 입지를 강화하게 되었다.

TBT 협정은 SPS 협정에서 정의하고 있는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를 제외한 모든 기술규정, 자발적 표준 및 적합성평가절차를 포괄하고 있다. SPS 협정은 ①식품에서 유래되는 위험으로부터 인간 또는 동물의 건강, ②동물과 식물에 의해 운반되는 병해충으로부터 인간의 건강, ③병해충으로부터 동물과 식물 등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두고 있는 조치들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다. 특히, SPS 협정은 TBT 협정과 달리 과학적인 원리와 증거에 기반을 둔 규제조치만을 인정하고 있다.

32_ 또한, GATT 1947은 각국들이 인간, 동물 및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이 동일한 조건을 지니고 있는 국가들간 불공정하게 차별을 하지 않는 동시에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수단으로 작용하지 않는 한 취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제XX조(b)항)을 포함하고 있다.

33_ 1979년 도쿄라운드 결과 설정된 TBT 협정은 통상적으로 「표준규약(Standards Code)」으로 지칭된다.

❏ WTO TBT 협정 및 SPS 협정의 주요요소 및 정의

무역상기술장벽(TBT)에 관한 협정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SPS)에 관한 협정
<input type="checkbox"/> 기술규정: 적용 가능한 행정규정 등을 포함하여 법률 또는 법규에 의해 강제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기술규격, 관련 공정 및 생산방법 <input type="checkbox"/> 표준: 준수가 강제적이지 않는 기술규격, 관련 공정 및 생산방법 <input type="checkbox"/> 적합성평가: 기술규정 또는 표준의 관련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절차	<input type="checkbox"/> 위생 및 검역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의 첨가제, 오염물질, 독소 및 병균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으로부터 인간 및 동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적용되는 규제조치 - 동물 또는 식물에 의해 전염되는 병균으로부터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적용되는 규제조치 - 해충 및 병균으로부터 동물 및 식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적용되는 규제조치 - 해충의 유입, 정착 및 전파로 인한 국가 내의 기타 손실을 방지 또는 제한하기 위해 적용되는 규제조치

주: WTO의 TBT 협정 및 SPS 협정의 관련조항 참조

TBT 조치들은 식품포장에서 자동차안전에 이르기까지 실제 교역이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품목과 관련되어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인간의 건강과 관련한 의약품규제 또는 담배의 상품표시부착 의무 등이 TBT 조치로 포함될 수 있다. 즉, 식품의 경우에도 상품표시부착 요건면 영양성분 관련사항, 품질 및 포장 등에 관한 규정들은 일반적으로 TBT 협정의 대상이 된다. 이에 반해 식품의 미생물학적 오염, 살충제 허용수준, 수의약품 잔류량 등을 대상으로 하는 규정 또는 허용 식품첨가물에 관한 규정들은 SPS 조치에 해당된다. 또한, 식품의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포장 및 표시요건들도 SPS 조치의 대상이 된다.

TBT 협정과 SPS 협정은 회원국들의 비차별에 관한 기본적인 의무와 제안 및 고려되고 있는 규제조치의 사전통보 및 질의처(enquiry points)의 설립 등과 같은 투명성에 관한 공통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다수의 규정들은 서로 상이하다. 예를 들어 TBT 협정과 SPS 협정 모두 국제표준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으나, SPS 협정중 식품안전 및 동물과 식물의 건강보호에서 국제표준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사유는 보건 상



잠재적인 위험평가에 따른 과학적인 근거에 기초해야 한다. 이에 반해 TBT 협정은 각국 정부가 근본적인 기술상의 문제 또는 자국의 특성 등을 이유로 국제표준이 부적합하다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SPS 조치들은 과학적 근거에 기초하여 인간, 동물 및 식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만큼만 취할 수 있다. 그러나 각국 정부는 국가안보 또는 소비자에 대한 기만적 행위의 방지 등과 같은 포괄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TBT 관련 조치를 도입할 수 있다. 즉, 기본적으로 TBT 협정과 SPS 협정 하에서 WTO 회원국의 의무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특정 조치가 SPS 조치 혹은 TBT 협정 대상의 조치인지를 구분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와 관련하여 TBT 및 SPS 두 협정에 모두 해당할 수 있는 조치들은 엄밀한 과학적인 근거를 요구하는 SPS 협정보다는 관련 규제조치의 도입근거가 상대적으로 더욱 포괄적인 TBT 협정에 근거하는 소위 SPS 조치의 TBT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GATT 체제하의 표준규약으로부터 WTO 체제 하의 TBT 협정과 SPS 협정으로의 변화는 전체적으로 규정의 내용들이 더욱 구체화되고 강화된 것 이외에 다음과 같은 중요한 진화를 포함하고 있다. 첫째, 표준규약이 GATT 체약국들의 선택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한데 비해 새로운 TBT 협정과 SPS 협정은 WTO 설립에 관한 협정의 부속협정으로서 일괄채택방식(single undertaking)을 통하여 모든 WTO 회원국들로 참여범위가 확대됨으로써 다자규범으로서 그 기반을 더욱 확고하게 만들었다는데 무엇보다 큰 의미가 있다. 둘째, 표준규약은 중앙정부의 강제적 기술규정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으나, WTO의 TBT 협정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민간표준화기구와 임의규정인 표준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였다.³⁴ 셋째, WTO의 TBT 협정은 기술규정과 표준의 적용범위를 제품의 성능으로부터 그와 관련된 공정과 생산방법에까지 확대하였다.

34_ WTO의 TBT 협정에서는 “표준의 준비, 채택 및 적용에 관한 공정관행규약”을 부속서로 신설하여 회원국들의 채택을 권고하고 있다.

현황분석

기술장벽의 보편적 유형 및 주요 관련품목

WTO 회원국들은 TBT 협정에 따라 자국의 기술규정을 준비, 적용 및 채택하는데 있어 ①관련 국제표준이 존재하지 않거나 제안된 기술규정의 기술적인 내용이 관련 국제표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고, ②동 기술규정이 다른 회원국의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이를 WTO 사무국에 통보할 의무가 있다. 1995~2012년까지 WTO에 통보된 통보문은 총 15,754건으로 이중 미국이 972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중국이 938건, EU가 697건, 일본이 644건으로 뒤를 이었으며 우리나라는 521건의 통보문을 제출하였다.³⁵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는 2012년도 기준 225건의 가장 높은 TBT 통보문 건수를 기록한 바 있다. 이와 같은 기술규제 관련 WTO에 제출된 통보문은 잠재적인 무역상기술장벽으로서 관련 동향의 파악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분석 결과 다른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주요 특징들이 파악되었다.³⁶ 첫째, TBT가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고 무역에 대한 장벽을 형성하는데 오용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 전 세계적으로 경기불황을 경험하였던 1997년, 2003년, 2009년, 2012년의 경우 모두 전년 대비 기술규제 통보건수가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이는 각국의 기술규제 도입 배경에 세계 경기침체가 어떠한 연관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하겠다. 둘째, TBT 통보건수가 개도국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실제, 1995년 WTO 출범 직후에는 네덜란드, 일본, 미국, 캐나다, 유럽연합 등 선진국의 통보건수 비중이 컸으나 최근 들어 중국, 브라질, 우간다, 케냐, 바레인,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등 개도국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

35_ Number of specific trade concerns raised since 1995, found in “Eighteenth Annual Review of the Implementation and Operation of the TBT Agreement” G/BT/33, Committee on Technical Barrier to Trade

36_ 이하의 특징은 장용준 외(2011). 『무역상 기술장벽(TBT)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대응방안』. 연구보고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인용하였으며 2011년 통계를 업데이트 하였다.



다. 이러한 이유로 전체 통보문에서 개도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 13.4%에서 2012년 80%로 크게 증가하였다.³⁷ 셋째, 기술집약적인 산업에서 통보건수가 높다. 즉, 전기기계, 고무/화학, 일반기계에서의 통보건수가 다른 산업에서보다 많다. 이는 이들 산업이 기술집약적인 산업으로 복잡하고 다양한 기술이 존재함에 따라 이에 대한 규격화 및 표준화 작업이 보다 활발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 WTO 출범 이후 기술규제 관련 통보문 건수 추이

연도	1995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계
계	365	611	771	875	1,030	1,251	1,490	1,420	1,217	1,560	15,754
선진국	316 (86.6)	391 (64.0)	341 (44.2)	351 (40.1)	416 (40.4)	468 (37.4)	478 (32.1)	440 (31.0)	393 (32.3)	310 (20)	6,832 (43.4)
개도국	49 (13.4)	220 (36.0)	430 (55.8)	524 (59.9)	614 (59.6)	783 (62.6)	1,012 (67.9)	980 (69.0)	824 (67.7)	1,250 (80)	8,922 (56.6)

주 1: 선진국은 IMF 기준 및 EU

2: ()의 숫자는 각 연도의 전체 통보문 건수에서 해당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냄.
자료: WTO, 각 연도별, "Annual Review of the Implementation and Operation of the TBT Agreement."

우리 상품이 외국에서 직면하고 있는 기술장벽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인증 및 적합성평가 과정에 있어서 관련인력의 부족으로 검사가 지연되거나 인증마크의 획득에 과다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 등이다. 또한, 높은 검사비용, 과다한 표본조사 등으로 인해 상당수준의 초과비용이 드는 것도 우리 기업들이 외국시장에서 겪는 기술장벽의 전형적인 사례이다. 한편, 상품표시부착과 관련하여 자국어 표기의 요구와 표기형태 및 방식 등의 까다로운 요건도 해외에서 우리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 외에도 인증제도의 이원화 및 국내 또는 국제적인 인증을 획득하였음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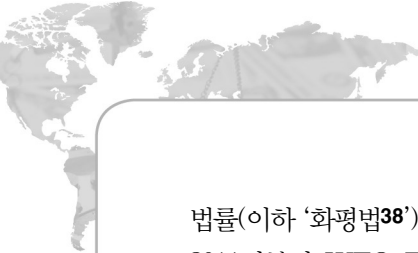
37_ WTO 회원국들의 WTO TBT 협정상 의무사항의 하나로 되어 있는 기술규제와 관련한 통보문의 제출은 기본적으로 기술규제 및 그 도입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TBT 관련 통보문의 증가는 일차적으로 투명성 증가라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파악될 수 있는 반면, 대부분의 통보문들이 그 내용면에서 기술규제의 신규도입 또는 기존규제의 강화를 의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잠재적으로 무역상기기술장벽의 강화로 볼 수 있다.

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음에 따른 중복검사, 국제표준과 상이한 기술요건, 까다로운 규격 및 인증마크 취득절차와 다른 국가보다 엄격한 기준의 적용 등 과도한 기술요건, 동일 국가 또는 지역 내에서 서로 다른 표준의 적용과 같은 문제도 우리 기업이 해외진출시 흔히 직면하는 기술장벽이다. 또한, 우리 상품에 대한 외국의 기술장벽은 특정한 품목에 집중 또는 한정되어 있지 않고 육류, 수산물, 농산물 등 식품에서부터 자동차, 건설자재, 타이어, 보일러 및 압력용기 등에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다.

■ 기술장벽의 일반적인 유형

기술장벽의 유형		기술장벽의 내용
기술 규정	차별적 기준 적용	- 조달비율의 계산에 국내외 업체간 산정방식 차별 적용
	상이한 표준 적용	- 국가, 지자체, 공동체 회원국간 독자적인 표준제도 운영 - 동일 국가내 동일제품에 대해 일부 지방에서 특정 산업의 보호를 위한 수입금지조치
	국제표준과의 불일치	- 제품표준이나 인증절차가 국제표준과 불일치
	과도한 기술요건	- 다른 국가들보다 엄격한 기술요건 설정 - 까다로운 규격 및 인증마크 취득절차
	투명성 결여	- 빈번한 기술규정의 개정 및 불충분한 사전공시기간
임 의 표 준		- 민간표준화기구 및 단체에 의해 설정된 자발적인 임의표준과 국내시장에서 판매를 위한 인증취득에 실질적인 강제성 부여
적 합 성 평 가	중복검사	- 이미 인증을 획득하였으나 인정하지 않고 중복검사 요구 - 인증제도의 이원화
	과다시간 소요	- 인증마크 획득에 과다시간 소요 - 담당인력의 부족으로 검사지연
	과다비용 소요	- 높은 검사비용 - 과다한 표본조사 등으로 인한 비용증가 - 중복검사로 인한 비용 발생
	투명성 결여	- 판정 기준이 불분명하여 검사원의 자의성에 따른 판정 - 경쟁관계에 있는 자국의 민간업체에 의한 검사
상품표시부착		- 국내조달비율의 표시를 요구하여 자국산 구매의욕 고취 - 자국어로 표기 의무 - 표기를 상품자체에 하도록 요구

특히 2013.5월 우리나라에서 제정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³⁸⁾’)에 대하여 미국, EU, 스위스, 일본 및 중국 등은 지난 2011년부터 WTO TBT 위원회에 표명한 바 있다. 우리나라 총 교역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국가인 미국, EU, 일본, 중국 등은 지난 2008년 이후 자국 내 기존 화학물질 등록 제도를 제·개정하였으며, 이와 같은 세계 주요 국가들은 화학물질관리법을 제·개정하여 산업계에 위해성평가 정보생산 및 제출 의무화를 시행함으로써 산업계 경쟁력을 강화하는 추세를 이어왔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위해성에 대한 자료가 불충분하여 매년 화학물질 수입량 증가에 따른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감안하여, 국제 화학물질관리제도 대응 및 화학물질 전 과정 관리체계를 구축하기위해 화평법을 제정했다. 우리나라 화평법의 적용범위는 EU REACH 규정,³⁹ 일본 화심법⁴⁰과 중국 SEPA 신규화학물질 환경관리제도와 유사하며, 모든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기존 화학물질을 대상으로 한다. 하지만 세계 주요 국가들은 한국의 화평법으로 인해 연구개발(R&D)과 제품개발이 늦어지고 지적재산권이 침해될 가능성을 우려하여 2011년 이후로 3차례에 걸쳐 특정무역현안(STC)⁴¹을 제기하였다. 특히 고무/화학이 대한국 수출비중의 15% 이상인 미국은 지난 6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TBT 제 2차 정례회의에서 화평법에 대한 우려의 뜻을 표명하였으며, 2006년 이후 20% 이상을 점하며 제 1의 대한국 수출산업으로 자리 잡은 일본의 경우 화학공업일보⁴² 등을 통해 화평법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일본 현지 외신에

38_ 국제 화학물질관리제도 강화에 대응하여 산업계 경쟁력을 강화하고, 화학물질 심사 및 평가를 통한 관리체계 구축으로 국민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2015.1.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법률 제11789호, 2013.5.22. 제정)

39_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의 약자로, 화학물질의 양과 위해성에 따라 등록, 평가, 신고, 허가, 제한하는 EU의 새로운 화학물질관리규정

40_ 화학물질의 심사 및 제조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로 2011년도 개정되었음.

41_ TBT 통보문, G/TBT/N/KOR/305

42_ 일본의 화학공업일보(‘13.10.7일자)는 최근 사설에서 “화평법은 유럽의 비슷한 제도인 ‘REACH’와 달리 1톤 미만의 신규화학물질도 등록을 요구하며, 이는 일본 기업들의 수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 이라고 언급함(<http://www.kagakukogyonippo.com/headline/2013/10/07-13100.html>, ‘13.11.29 접속)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2013년 제 3차 WTO TBT 위원회에서 우리나라 화평법에 관한 안전을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⁴³ 이는 우리나라에 진출한 일본 현지 기업들이 한국의 화평법 규제로 인한 피해를 우려하여 경제산업성에 문제제기를 하는 등 산업계의 여론이 악화되었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주요 국가별 현황

기술장벽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내고 있으며 그 대상품목도 광범위하다.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은 선진국의 경우 기술장벽이 과다한 기술요건, 상이한 기준의 적용, 상품표시부착 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개도국의 기술장벽 형태는 검사지연 등으로 인한 과다한 비용과 시간의 소요, 불투명한 인증절차, 국제표준과의 불일치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중동국가 및 일부 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종교적인 이유로 상품표시부착과 검사에 대해 여타 국가들과는 다른 요건을 부가하는 사례가 흔히 있다. 품목별로는 음료 및 가공식품, 화학물질 및 위험물질, 수송장비, 소비재공산품 등의 비중이 높고 상대적으로 다양한 품목에 분산되어 있다. 이중 음료 및 가공식품에서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비중이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선진국들은 상대적으로 화학물질 및 위험물질, 수송장비, 전자 및 통신기기 등의 분야에서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반면에 개발도상국들은 소비재공산품, 전기 및 가전제품 등에서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하에서 주요 국가별로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절차 등의 제도와 함께 우리상품의 수출과 관련된 주요 무역상기술장벽에 대해 살펴본다.

과테말라에서는 특별한 표준 인증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는 않으나 일부 품목의 경우에는 수입업체들이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나 미국, 유럽 등의 인증서를 요구하는 경우도

43_ 일본의 화학공업일보('13.10.1일자), <http://www.kagakukogyonippo.com/headline/2013/10/01-13042.html>, '13.11.29 접속)



있다. 그러나 이 경우도 수입유통 허가를 위한 필수요건은 아니며 다만 자사 고객에 대한 홍보차원에서 이루어진다. 과테말라법에 의하면 내수시장에서 판매되는 모든 제품은 사전에 시험 및 등록되어야 하며 스페인어로 ①제품명, ②원료 및 첨가제 리스트, ③등록번호 ④과테말라 유통업체명 및 주소, ④유통기한 및 취급상 주의사항 등이 기재된 라벨이 부착되어야 한다. 국가 표준 및 검사의 관할기관은 경제부 표준 규격 위원회⁴⁴이며 표준규격 인증서를 얻기 위해서는 소정의 검사료를 지불해야 하고 소요기간은 약 3개월이다.

중미 5개국 바코드 등의 상업코드 관리는 중미 상업코드기구(ICCC)⁴⁵에서 담당한다. 과테말라에서 주로 사용되는 인증제도는 식료품 인증제도로 모든 수입 식료품은 보건부의 위생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한다. 이외에 자동차 배터리의 배터리 액과 같은 화학제품은 필히 위험품목 수입 허가를 받아야한다. 전자전기제품은 자체 인증제도는 없으나 거래 시 국제 인증제품을 선호한다.

그리고 동식물, 식품, 의약품 등은 사전 동식물 검역, 위생검사 또는 소정의 검사를 거쳐야 한다. 의약품의 경우 보건부에 사전 등록되어야 하는데 등록 서류는 스페인어로 작성하여 공증을 받으며 공급자의 ‘자유판매증명(Certificate of Free Sale)’을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 시까지 소요시간은 대략 3~4개월 정도이다.

멕시코의 표준규격제도(Norma Oficial Mexicana: NOM)는 대부분 소비자보호의 차원에서 도입되었으나 묵시적인 수입규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NOM규정은 개정이 빈번할 뿐만 아니라 규정을 개정할 때 충분한 준비시간을 주지 않고 갑작스런 관보 공고를 통해 공고 다음날부터 시행하는 등의 사례가 있어 업계의 애로가 크다. 그러나 2009.10월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은 멕시코 국가인증기관인 멕시코표준인증협회(ANCE)와 상호

44_ Comision Guatemalca de Normas

45_ Central American Institute of Commercial Coding, Instituto Centroamericano de Codificacion Comercial

시험성적서 인증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특정 전기·전자제품의 수출을 원하는 기업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시험성적서 만으로 NOM마크 취득이 가능하게 되었다. 멕시코는 내국산품의 경우 공장출고 이전, 수입품의 경우 멕시코 도착 이전에 이미 NOM마크를 부착한 제품만이 멕시코 시장 내에 유통될 수 있다. 한편, 1998.10월 신발류 라벨링(브랜드, 원산지 기재)을 고장·부착식만 가능하도록 기준을 강화하였다. 2011.9월부터는 186개 에너지 사용제품에 대해 단위시간당 소비전력과 필요한 경우 대기전력을 표시하는 라벨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신고 불이행 또는 라벨링 표시의무 위반 시 매장에서 관련 제품의 판매가 제한된다.

미국은 연방정부 뿐만 아니라 주정부, 시정부 등 지방정부에서도 독자적인 표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세부 기술표준에 있어서도 WTO TBT 협정의 요건인 국제규격과 부합되지 않는 것이 흔히 있어서 우리 제품의 미국시장접근에 중대한 장애가 되고 있다. 그리고 최근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 전체의 표준 및 인증관련 정보를 일관되게 파악할 수 있는 기관이 없어서 특히 미국시장 진출을 원하는 중소기업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미국의 주요 기술장벽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조공장 설비 및 부품의 현지규격을 의무화 하고 있다. 실제 캘리포니아 주정부 및 관할 시정부는 최초 기계설비 및 시공시 UL마크⁴⁶ 획득 의무 및 현지 업체에 의한 시공 등을 제약조건으로 부과하고 있어 시간적·금전적 비용부담을 가중시켜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둘째, 「자동차에 관한 정보 및 비용 절감법」(1992.10월) 제201조 및 「미국 자동차 라벨링법(American Automobile Labelling Act)」(1992.10월)에 근거하여 미국에서 판매되는 승용차 및 경트럭의 국산화율(미국과 캐나다에서의 부가가치 비율)과 연비, 안전도에 관한 정보가 표기된 라벨(Maloney label)을 첨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46_ UL마크는 미국내에 판매되는 모든 전기·전자제품에 부과하는 품질인증 마크중 하나이며 Underwriter's Laboratories Inc.가 시행하는 소정의 시험절차를 통과하면 부여 받는다(참고로 소형 냉장고의 경우 USD6,000~USD10,000의 비용 소요).



셋째, 소비재 안전 개선법(Consumer Product Safety Improvement Act: CPSIA)이 있다. 2008년 도입된 소비재 안전 개선법은 만 12세 미만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소비재에 대해서 라벨링 요건, 시험인증요건, 중금속 함유상한 요건 등의 강화를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2009.2월 이후 새로이 정해진 납 성분 상한이 도입되었으며 어린이 용품에는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영구 표기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최근 미국 각 주들도 어린이용품에 포함된 유해 물질을 법적으로 규제하는 제도들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한미 FTA 협상에서는 기술규정 등 정보제공에 대한 지방정부의 의무사항을 명시하도록 하여 사실상 TBT 협정문의 범위에 미국 주정부를 포함시켰으며 한미 TBT 위원회를 설치토록 규정함으로써 양국간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관련 현안에 대해 직접적 논의와 해결이 가능하도록 공식적인 창구를 마련하였다.

베네수엘라는 「표준규격 및 품질인증에 관한 법령(Ley Sobre Normas Técnicas y Control De Calidad, 1979. 12)」에 의해 300여 개 공산품에 대해 표준규격을 정해놓고 해당 상품을 수입하는 경우 품질보증기관(SE-NORCA)에서 확인서를 받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공업용 기계부품 등은 수입 전에 사전 검사 및 인증 확인이 필요하며 자동차부품의 경우 새로운 부품에 대해서는 공업규격위원회(COVENIN)의 인증 확인이 필요하다. 그리고 자국내 생산품과 유사한 수입상품에 대해서는 수출국에서 품질증명서를 같이 첨부하도록 하여 이를 근거로 확인서를 발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공업시험검사소 등의 검사내용을 상공회의소 확인을 받아 제출하거나 미국 등 선진국 규격 합격 증명서를 제출하면 확인서를 받는 데 유리하다. 문제는 동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1개월에서 1년 정도로 자의적으로 발급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제품의 생산과 운송에 3개월 이상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확인서를 받은 후 주문할 경우 통관시점에서는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지나 재발급을 받아야하는데 재발급이 안 될 경우 통관을 못하고 세관에 방치되는 일이 발생하는 등 외국 기업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다.

볼리비아의 표준, 검사 기관으로는 표준 및 계량원(IBMETRO)과 품질표

준원(IBNORCA)이 있다. 석유·가스 저장을 위한 금속용기 및 장비, 에어컨, 냉장고, 소화기 등을 수입할 경우, 수출국 품질인증기관의 검사서 등을 IMBETRO에 제출하여야 하고, 담배류는 IBNORCA에 원산지증명서, 품질검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가공된 수입식품류에는 제조날짜, 유효기간, 성분, 원산지, 제조사 주소를 스페인어로 표기한 라벨을 부착하여야 하고, 수입자 및 배포사와 동사의 주소, 납세자등록번호, 수입식품 등록 (SENASAC)번호가 기재된 별도 라벨도 붙여야 한다.

브라질에 있어서 인증은 일반적으로 자발적이다. 그러나 건강, 안전 및 환경에 영향을 주는 제품과 서비스의 경우에는 강제인증을 받아야 한다. 2010년 현재 강제인증 요구 품목은 총 81개이다. 강제인증은 국립계량품질원 (INMETRO)과 INMETRO로부터 허가를 취득한 국내외 전문인증기관으로부터 취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브라질과 상호인증협정(Mutual Recognition Agreement: MRA)을 체결한 외국인인증기관을 통해 취득한 인증서의 내용도 인정한다. 현재 우리나라 인증기관과 MRA를 체결한 것은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브라질은 1998년부터 특정 수입 허가 품목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위생관리청(ANVISA) 검역을 받도록 하고 있다. 즉, 동식물, 육류, 어류, 낙농품, 가공식품 및 음료수 등에 대해서는 동식물 검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정용도 밀, 토마토 씨앗 등 일부 식물류에 대하여는 수입 자체를 금지시키고 있다.

아르헨티나의 표준화 담당기관은 IRAM(Instituto Argentino de Normalizacion)이고 인증기관은 OOA(Organismo Argentino de Acreditacion)이다. 표준규격 관련 모든 제품은 IRAM 표준규격에 적합해야 하며 각 제품별 규격 인증번호를 사용해야 한다. 전통적으로 아르헨티나는 표준 및 규격을 비강제적인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1990년대 후반부터는 안전, 인증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승인된 연구기관에서 규격과 안전 검사를 받아야 하는 품목을 증가시키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행정지침이 수시로 변화됨에 따라 규격과 안전검사 대상 품목도 수시로 변하는 경우가 많다. 라벨링에는 원산지, 수량, 질, 혼합물(필요시), 규격 및 중량(미터법) 등이



명시되어야 하며 상품에 따라 특별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소비자보호와 관련해서는 1993년 제정된 소비자보호법(Ley 24240)에 근거하여 섬유, 가전 제품에 대해 라벨링, 품질 및 안전보증서 등의 첨부을 요구하고 있으나 자국 내 소비자 보호정책은 아직 미미한 실정이다. 한편, MERCOSUR 회원국(아르헨티나, 브라질, 우루과이, 파라과이)들의 표준 담당 기관들로 구성된 MERCOSUR 표준협회 AMN에서는 회원국간 표준 및 관련 규제의 조화 및 개발을 추진해 오고 있다.

에콰도르에서는 기술표준원(INEN)이 관련 상품에 대한 표시 및 기술 표준 등을 관장하고 있다. 기술표준과 관련하여 국내표준, ISO 표준, 기타 일반적으로 수용되는(reputable) 표준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나 기타 표준의 경우 자의적으로 운용될 소지가 있다. 그리고 식·의약품의 경우에는 식약청 소속 연구소(Instituto Izquieta Perez)에서 분석 후 유통허가(Registro Sanitario)를 받아야 하는데 발급기간은 품목에 따라 짧게는 3개월, 길게는 3년까지 지연되기도 한다.

엘살바도르 관련법에 의하면 내수시장에서 판매되는 모든 제품은 사전에 테스트되고 등록되어야 하며 제품명, 원료 및 첨가제 리스트, 유통업체명 및 주소, 유통기한 및 취급상 주의사항 등이 스페인어로 기재된 라벨이 부착되어야 한다. 그리고 동·식물, 식품, 의약품 등은 농업부, 보건부 등 관련부처의 허가를 얻어야 국내 반입이 가능하다.

온두라스는 관련법에 따라 모든 가공 식품은 스페인어로 된 라벨이 부착되어야 하며 보건부의 위생등록청에 사전 등록되어야 한다. 모든 식품과 의약품은 사전에 위생 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하나, 중미관세동맹(CACU)회원 국가끼리는 중미기술규정(RTCA 67.01.31.06)에 근거하여 이미 한 국가에서 위생등록을 받은 식품에 대하여는 다른 회원국가에서 재등록의 의무가 면제된다.

우루과이의 표준 설정은 일반적으로 ISO 표준 등 국제적 기준에 합치하고 있으며 해당 기준은 국산품과 수입품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리고 우루과이 기술표준협회(Instituto Uruguayo de Normas Tecnicas), 국가품질관

리위원회(Instituto Nacional de Calidad), 우루과이기술연구소(Laboratorio Tecnico del Uruguay)에서 공공 보건, 안전, 소비자 권리, 환경, 수출 품질 보증 등에 관해 업무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 라벨링 인증에 관해서는 일반적으로 물품의 재료, 원산지, 유효기간, 총 무게, 우루과이 수입업자의 이름 및 주소를 스페인어로 명시하도록 되어 있다. 수입품의 경우 원산지 라벨링을 부착할 수 있으나 우루과이 정부가 요구하는 정보를 포함한 라벨 또는 스티커를 추가로 부착해야 한다.

칠레의 경우 전자제품에 대한 에너지효율등급을 제외하고는 이외 제품에 대한 별도의 표준은 없다. 그리고 라벨링의 경우 일반 소비자용 수입품에는 원산지를 명기해야 하며 포장물품에는 품질, 순도, 성분, 정량 및 규격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또한, 캔 또는 포장음식물은 스페인어 라벨로 첨가물 등 주성분, 제조일, 유통기한, 생산자 또는 수입자명 등을 명기하고 크기, 중량 등은 미터법으로 환산한 수치를 표기하여야 한다. 한편, 인증의 경우 전기제품, 난방제품, 의약품, 화장품, 살충제 등은 전기연료감독원(SEC), 식약청(ISP) 등 관련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하며 이 외의 제품은 별도의 표준 또는 인증기준이 없다. 그러나 SEC의 전기안전인증 및 판매처분 검사 인증은 우리나라 인증취득과 달라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반드시 세부 확인이 필요하다.

캐나다에서 수입상품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영어 또는 프랑스어로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이중 비식료품의 경우 수입업체 또는 해외 제조업체명의 표시 방법이 별도로 정해져 있다. 다만, 시제품(test market product)에 대해서는 최대 1년까지 라벨링이 면제되고 있다. 퀘벡 주는 불어가 공용어이므로 모든 라벨링, 보증서, 사용방법 등은 반드시 프랑스어로 씌어져야 하며 다른 언어 사용 시 프랑스어도 함께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소비자용인지 또는 중간도매상용인지에 따라 상이한 포장기준을 가지고 있다. 치약, 스킨 및 크림, 샴푸 등에 대해서는 표준 포장규격을 법으로 정하고 있다. 포장지는 가능한 한 재생 가능한 원료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소비자 포장 및 라벨링법(Consumer Packaging and Labelling Act)」은



상품별 중량, 부피 표기를 요구하며 비스킷, 과자, 포도주 등에 대해서는 포장지 규격을 정하고 있다. 「캐나다 농산물 및 식품법(Canadian Agricultural Products and Food Act)」은 통조림용 등 가공 과일 및 야채에 대한 포장규격을 정하고 있다. 그밖에 「식품 및 의약품법(Food and Drugs Act)」은 내용성분의 표시를 규정하고 있다. 포장식품에 대한 라벨링은 매우 엄격하여 상품명, 순중량, 배포처 주소, 성분리스트가 표시되어야 하며 90일 이내 사용되어야 할 경우 유효기간을 표시해야 한다. 신선한 과일 및 야채는 담는 상자(carton)에 상품명, 무게, 원산지, 포장업체의 상호 및 주소를 표시해야 한다. 또한, 캐나다법이 요구하는 살충·살균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육류의 경우 육류 수출국의 기준을 캐나다 농업부에서 인정받은 경우에만 수입이 가능하다. 캐나다에서 재가공하기 위해 수입되는 육류의 컨테이너는 캐나다 「육류 검사법(Meat Inspection Act)」의 규정에 따라 라벨링을 하여야 한다. 육류에 대한 라벨링은 「육류 검사법」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동물 질병 및 보호법(Animal Disease and Protection Act)」에 따른 원산지 증명 및 「육류 검사법」의 규정에 따른 검사증이 있어야 한다. 해산물(Sea Food and Fish)의 경우 캐나다 해양수산부와 해산물 수출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한 국가의 해산물 통관은 쉬우나 그렇지 않은 국가의 수출업자는 엄격한 검역을 받아야 한다. 육류, 육류제품, 해산물, 식물 및 종자, 신선한 야채 및 과일 등에도 위생기준(Health Standard), 등급 등 별도의 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며 통관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한편, 캐나다 보건부는 2008.7월 식품 알레르기로 고생하는 캐나다인의 건강보호와 복지 향상을 위한 적극적 조치로 제조업자에게 식품 알레르겐인 글루텐(gluten)과 아황산염(sulphites)이 첨가될 경우 포장제품에 이를 표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도입하여 식품 알레르기 표시를 강화했다. 그리고 캐나다 연방보건부는 캐나다에서 판매되는 모든 식품에 대해 함유 영양소 표시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을 입법예고 중이다. 이에 따라 전 식품포장에 칼로리량 명기와 더불어 비타민, 칼슘, 철분 등 13개 항목의 영양성분을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따라서 라면, 과자류, 포장김치 등의 지속적인 수출을 위해서는 국내식품 수출업체들이 영양표시제의 내용과 진행상황에 관

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목재포장은 단순열처리 증명서가 아닌 International Plant Protection Convention (IPPC) 마크를 꼭 부착해야 한다. 중국산 목재포장과 관련해서 캐나다 규정을 빈번히 불이행함에 따라 2009.9월부터 중국 패키징 회사에서 자체 발급된 열처리 위생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s)가 인정받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목재포장은 단순열처리 증명서가 아닌 International Plant Protection Convention(IPPC) 마크를 반드시 부착해야 한다.

코스타리카의 경우 휴대폰, 농산물, 의약품, 식품, 환경공해 관련품목 등을 수입시 전력통신공사, 보건부, 농림수산부, 사회개발부 등의 사전허가 또는 등록을 요한다. 2013.5월 기준 코스타리카에는 중미 기술규정(RTCA)을 포함하여 184개의 기술규정이 시행 중이다. 코스타리카의 기술규정은 내외국인 차별 없이 적용된다. 하지만 미국의 FDA, FCC 및 유럽 공동체 EC 인증이 있는 경우 사전 허가 및 등록이 수월하며 판매시 광고효과도 얻을 수 있다. 또한 코스타리카는 SPS협정을 준수하는 국가이며, 위생 및 식물위생 관리는 식물위생관리법(법령 7664), 동물보건일반법(법령 8495), 보건법(법령 5395)에 의해 관리된다. 식품수입의 경우 선적 시마다 보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수입되는 모든 식품이 보건부 식품위생등록부에 등록되어야 한다. 일부수출품(커피, 어류, 연체동물, 갑각류)은 공공위생 목적으로 인해 수출 전 허가가 필요하다. 그리고 소비자 보호법령 제 7472조에 따라 통조림류, 식품, 일부 공산품에 대해 수입자가 제품의 성분, 중량 등을 스페인어로 라벨을 작성하여 부착해야 한다.

콜롬비아는 민간단체인 ICONTEC으로 하여금 콜롬비아의 규격을 정하게 하고 동 규격에 대한 적합성을 가진 외국상품만을 수입허가하고 있으며 우리 상품규격과의 마찰은 없다. 동식물검역, 건강문제, 식품, 의약품 안전 및 공중보건업무 등과 관련해서는 2006년 법령 2833에 의해 식품동식물검역 규제위원회(Comisión Intersectorial de Medidas Sanitarias y Fitosanitarias)가 설립되어 SPS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한편, 콜롬비아는 유탄토지 활용, 고용창출, 대체에너지개발, 환경보호 등을 목적으로 2000년대 초부터 바이오에너지 산업 발전을 위해 관련 제정 및 기술을 개발하였다. 2011.12월에 발효된 시행령 4892에 의해 동 시행령이 발효되는 시점부터 에탄올 연료를 8~10% 혼합하여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2013.1월부터는 광물에너지부에서 고시하는 바이오에탄올 및 바이오디젤 혼합 비율을 준수해야 한다.

파나마는 라벨링 및 인증 등과 관련하여 특별한 규제가 없다. 라벨링에는 생산자의 성명 및 주소, 유통기한, 주성분, 함량 등 기본적인 정보만 명시하면 영어로 표기하여도 무방하나 의약품 및 가정용품 및 식품류는 사용법을 반드시 스페인어로 명기하여야 한다. 또한, 재수출을 위해 파나마를 경유만 하는 제품들은 'Panama in Transit'이라는 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

그리고 상품포장 방법 및 포장상의 명기 사항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없으며 일반적으로 ①Shipping Mark, 목적항, 상품명, 수량, 중량, 원산지국 등, ②화학약품 및 의약품의 경우 함유성분 등, ③품목에 따라 필요한 경고문구(깨지기 쉬움, 위험, 유독물질 등) 등은 포장에 명기되어야 한다.

파라과이는 기술표준과 관련, 국내 표준 및 ISO 표준을 인정하고 있으며 국립기술표준원(Instituto Nacional de Tecnología y Normalización)이 관련 상품에 대한 표기 및 기술표준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그리고 국내의 상품에 모두 원산지를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의약품, 식품 등의 경우 내용물, 성분, 중량, 유효기간 등의 상품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이때 상품정보 표기는 반드시 스페인어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페루의 표준 및 적합성평가 관할기관은 INDECOPI 및 정부 각 부처 등이다. INDECOPI에서는 석유 및 관련 제품, 폭발물 등 일부 품목에 한해 품질 규격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시장유통을 위한 강제적인 의무사항은 아니며 기타 안전·위험 표지판 등 각종 표지판의 문양, 색상, 규격, 위치 등에 대한 사항도 명시하고 있다. 여타 품목의 경우는 모든 규격에 대해 수입 및 판매가 자유로운 편이며 대체로 소비자가 요구하는 규격(미국 등 선진국에서 일반화된 규격)이 자연스럽게 표준으로 정착되고 있다. 이와 관련,

2004.2월 INDECOPI 산하 ICONTEC 연구소는 모든 수출입 제품의 품질 측정 기준을 2000년 ISO 9001 인증서 기준으로 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Callao 항구와 Jorge Chavez 국제공항 또한 상기 인증서에 준하는 수출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U의 규제관행,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는 EU 시장접근에 중요한 결정요소가 되고 있으며, 때로는 교역 장애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선 EU의 완전 조화입법(fully harmonizing legislation)의 적용 대상이 아닌 제품은 각 회원국의 기술규정과 적합성 평가 절차가 적용되며, 조화입법은 유럽의회와 이사회의 공동결정절차(co-decision procedure)에 따라 채택된다. 이때 EU 집행위는 관련 규정(No. 764/2008)에 따라 공동체의 조화입법에 적용을 받지 않은 제품의 목록을 발간하며, 관련 규정(Directive 98/34/EC)에 따라 회원국들은 집행위와 다른 회원국에게 기술규정 초안을 도입 필요성과 함께 고지한다. 도입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집행위는 투명성 및 법적 안정성 차원에서 회원국에게 기술 규정에 상호 인정 조항(mutual recognition clause)을 포함하도록 요구한다.

그리고 EU 차원의 기술규정과 적합성 평가절차는 유럽의회와 이사회가 공동으로 채택하는 법규에 따르거나, 집행위가 해당 법규의 위임을 받아 채택한다. 법규안과 채택된 법규는 EU 관보(EU Official Journal)에 게재되며, 제안된 기술규정과 적합성 평가절차 중에 사회적, 경제적 효과가 큰 사안에 대해서는 영향 평가(impact assessment)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규범의 공포와 실제 적용 사이의 기간은 규범의 성격에 따라 다양하며, 회원국 입법의 조화가 필요한 경우 최소 18~24개월의 기간이 소요되고 있다.

EU는 기술규정과 적합성 평가절차에 대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EU는 영향 평가의 범위에 중소기업에 대한 효과 평가(SME test)를 포함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대상으로 관련 절차 및 비용을 간소화하는 노력을 전개 중이다. 기술규정과 적합성 평가절차의 요건들은 집행위의 Export Helpdesk(<http://exporthelp.europa.eu>)에서 찾아 볼 수 있다. 2012.6월 우리 정부는 EU 집행위와 무역관련 정보를 상호 교환하는데 합의하였고,



2013년부터는 TBT 관련 요건들을 포함하여 EU와의 교역에 관한 전반적인 정보를 우리의 통합무역정보서비스 웹사이트(www.tradenavi.or.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EU는 1980년대 중반 기술조화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채택하여 EU 차원의 기술규정에는 performance에 기반 한 지표(indicator)나 목표만을 필수 요건규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은 제조업자가 자유로이 채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새로운 접근법은 전기·전자제품, 가스기구, 의료기구, 통신기기, 장난감, 기계류 등에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으나 자동차는 구체적인 기술요건을 해당 규범에 상세하게 규정한다. 의약품, 화학물질 및 화장품 등의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접근법이 개발되어 왔다. 실제 자동차의 경우 CARS 21⁴⁷의 제안에 따라 2007년 새로운 자동차의 형식승인에 관한 기본 지침(2007/46/EC)을 채택하여 UN ECE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1.7월 발효된 한-EU FTA 협상 결과, 우리 주요 안전기준중 32개에 대해서는 해당 UN ECE 기준과의 동등성을 인정하는 동시에 29개 안전기준에 대해서는 발효 후 5년 내에 해당 UN ECE 기준과 조화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우리 자동차 안전기준과 UN ECE 기준과의 조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2012.11월에 발표된 CARS 2020 계획에 따라 자동차 형식승인 제도에 대한 광범위한 평가가 실시되어 2013년도에는 이에 대한 규제완화가 추진될 전망이다. 한편 2012.11월에 발표된 CARS 2020 계획에 따라 자동차 형식승인 제도에 대한 광범위한 평가 및 개선 등을 포함하여 자동차 관련 다양한 이슈를 다루는 전문가 작업반 회의가 진행 중이다.

새로운 접근법이 적용되는 낮거나 중간 수준의 위험도에 상응하는 상당수 제품군에 대해 EU는 “공급자 적합성 선언(supplier's declaration of conformity)”을 채택하고 있다. 전기·전자제품, 장난감, 통신장비, 기계류, 개인보호장비, 냉장장치, 의료기기 등이 공급자적합성 선언의 대상이 되며, 섬유

47- EU의 고위자동차위원회로 EU 자문기관으로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과 고용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류, 유아제품과 일부 소비재 등 특정 안전규범이 없는 제품에 대해서도 공급자 적합성 선언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기 등 고위험 제품에 대해서는 독립 인증기관(notified bodies)에 의한 적합성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인증기관은 개별회원국이 일정한 기술평가를 거쳐 지정하게 되며 인증기관의 목록은 집행위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식품의 안전과 관련하여 1990년대 유럽에서 발생한 광우병 확산, 돼지고기 다이옥신 오염 파동 등 일련의 식품안전 사고에 따라 EU는 2000년에 식품 안전 강화를 위한 종합계획서인 식품안전백서(White Paper on Food Safety)를 발표하였다. 동 백서는 각종 식품위생법류를 보다 투명화하고 일관성 있게 현대화하고, 농장에서 밥상까지의 식품위생관리를 보다 강화하며, 식품위생에 대한 과학적인 자문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 백서의 핵심 사항을 담고 있는 EU 차원의 식품안전에 관한 기본법(EU Regulation 178/2002)을 제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기준에 산재되어 있는 각종 식품위생 법규를 통합하여 단순화한 새로운 식품위생규정(New Hygiene Package)을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또한 동 법에서는 식품안전 문제에 대한 독립적이고 과학적인 평가와 자문을 해줄 수 있는 새로운 전문 기관인 유럽식품안전청(EFSA)의 설립과 회원국간 정보교환 네트워크 도구인 식품 및 사료에 관한 신속경보시스템(RASFF)의 기능 확대를 명문화하였다.

이밖에도 EU는 소비자에게 식품의 성분과 내용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식품표기(labelling)제도 관련 법령을 시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식품의 성분과 내용을 대한 종합적인 표시 기준에 관한 기본법령인 EU지침 Directive 2000/13과 식품의 영양소에 관한 라벨링 지침 Directive 90/496을 통합하여 간소화는 동시에 기존의 내용도 보다 강화하는 내용으로 법령을 개정(Regulation 1169/2011)하였다. 상기 새롭게 시행될 규정에 의하면 가공식품 포장에 지방, 포화지방 등 6개 성분의 함유량과 열량을 포장 위에 표시해야 하며, 알레르기 성분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를 미리 포장되지 않은 식품에 까지 확대되고, 최소 글자크기를 의무화하며, 원산지 표시 대상 식품



을 돼지, 양, 염소, 조류로 확대되는 등 소비자 중심의 식품안전정책으로 평가되고 있다. 동 규정은 2014~2016년부터 적용된다.

또한 EU집행위원회는 식품업체 등록시스템을 단순화하기 위하여 2004.4월 새로운 규정(Regulation 854/2004)을 제정하여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EU회원국이 아닌 국가의 식품업체가 EU로 식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개정된 등록시스템의 절차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한다.

수산물과 관련하여 세계에서 제일 많은 수산물을 수입하는 EU로 수산물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수산물 생산 과정의 위생을 감독할 수 있는 정부당국(competent authority)이 EU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동 정부기관에서 확인하여 EU에 등록한 수출작업장(establishment)에서만 수출이 가능하며, 수입 통관 시 동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위생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한국은 2011.10월 현재 수산물 수출 가능 제3국으로 EU에 등록되어 있다. 한편, EU는 수입되는 수산물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EU집행위 식품수의국(Food and Veterinary Office)에서 수시로 수출국의 현장을 점검해오고 있다.

그리고 EU는 고갈되어 가는 해양수산 자원의 보존을 위하여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IUU fishing)에 대한 법적 규제를 강화해오고 있다. 2008년에 이를 위한 EU 법규(1005/2008)를 제정하였으며, 동법규는 2010.1.1 부로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서 EU로 수입되는 수산물에는 상기한 위생증명서와 함께 적법한 어획행위를 증명하는 어획증명서도 첨부되어야 하며, 우리나라에서는 두 증명서의 발급 업무를 농림수산식품부의 검역검사본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노르웨이는 EEA의 인가를 받은 제3국 검사기관의 모든 인증서를 인정해준다. 원칙적으로 수입업자가 수입품에 책임을 지고 관계기관에 규격 준수를 입증해야 하며 특히, 가공식품의 수입시 상세한 원료내역을 제시해야 한다. EEA 국가간에 인정되는 CE라벨은 제조회사명과 주소, 제품번호, CE표시를 포함하며 일부제품에 대해서는 유럽기준 표준("European Norm" standard)에 따라 상형표기(pictograms)나 위험표시를 포함토록 되어 있

다. 노르웨이는 EEA 협정을 통해 EU의 단일시장에 통합, 기술규제 등에 관한 국내 법령을 적용하고 있으나 위험물질과 같은 일부 분야의 경우 노르웨이의 규제가 EU보다 더욱 엄격하다. 예를 들면, 수은 및 카드뮴 함유 건전지, 석면의 사용, 위험물질 특히 발암물질의 분류 및 라벨링에 있어서 그 규제가 상대적으로 매우 엄격하다.

독일에 공산품, 식품, 의약품 등을 수출하고자 하는 우리 기업들이 독일에서 필요한 검사 및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관련 행정절차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공산품에 VDE 또는 GS 표시가 있으면 독일 소비자의 신뢰가 높아질 수 있다. 독일 특유의 인증제도인 VDE 및 GS 표시는 EU의 제품규격기준 및 국제적 인증기준과 완전히 조화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식품 및 의약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해당 제품이 소비자의 건강을 위협롭게 하지 않는다는 독일 관련 당국의 검사 및 확인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독일로 식품 또는 건강보조식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감독권한을 가진 각 주정부 및 해당 상공회의소와 접촉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러시아는 유럽의 CE와 같은 러시아 국가표준규격 GOST-R 인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GOST-R은 강제 여부에 따라 강제인증과 자율인증(적합성선언)으로 구분되어 거의 모든 품목에 적용된다. 러시아 시장에서 유통되는 제품의 50% 이상이 GOST-R 강제인증 대상 품목인 바, 금속, 기계, 화학제품, 전기기기 등 대부분의 물품에 대하여 의무적인 인증이 요구되고 상품이 소비자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시험, 검사, 규격 표준을 규정하고 있다. 최근에는 3국 관세 동맹간의 공통인증제도인 CU(Custom Union)인증이 도입되고 있으며, CU 인증이란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3국 관세동맹의 공통인증제도로써 CU인증서를 발급받으면 3국 내에서 공통으로 사용 가능한 인증이다. 이는 2013.2.14일부터 도입되었으며 2015.3.15일부터 기존 인증(GOST-R, 기술규제)을 일률적으로 대체키로 관련 법령이 공포되었다.



벨라루스는 국민의 생명·건강·인간의 유전자·재산·환경 등을 보호하기 위해 「기술규범과 표준시스템의 발전 및 에너지 절약 요구사항에의 부합 여부 검증 프로그램」을 통해 국가표준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상품의 품질보증 또는 안전 인증은 벨라루스, 러시아, 카자흐스탄 3국 중 한 곳에서만 인증 받아도 다른 관세동맹 회원국에서 별도의 재발급 또는 재등록 절차 없이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품질·안전 인증은 관세동맹 회원국 내에서 제조된 상품에 대해서는 제한 없이 공유되는 반면 관세동맹 역외의 제3국에서 수입된 품목의 품질·안전 인증은 3국간 공유에 일부 예외가 있다.

스위스는 전 품목에 걸친 규격인증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으며 품목별로 별도의 법령에 따라 임의 또는 의무적 시험과 인증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기술규격에 있어서 EU 규격과의 일치를 추진하여 현재까지 스위스 전체 기술규격의 90%가 EU 규격과 일치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EU의 유럽공동체 인증마크 관련지침 가운데 완구의 안전성, 가스기기, 기계류, 개인보호장비, 이식용 의료기기, 의료장비 등 6개 지침에 있어서는 완전히 동일규격을 채택하고 있다. 그리고 2002.6월에 발효된 스위스-EU 간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스위스와 EU는 기술표준규정이 상호 인정되는 분야에서 자국 규정에 의한 인증으로 인증절차가 완료되도록 하였다.

우리의 수출 관심품목인 전기전자제품에 대해서는 스위스 전자전기기술협회(SEV)에서 운영하는 SEV 인증이 있다. 이 규격은 CE마크의 규격과 매우 유사하다. SEV 규격 이외에도 식품, 자동차, 화학제품, 살충제, 비료 등에도 엄격한 기술규격을 적용하고 있으며 자동차에 대하여는 1995년에 EU의 표준을 모델로 하여 표준을 채택했다. 의약품의 경우에는 의약품관리국(IKS)의 검사 및 등록을 받아야 한다.

위생관련 검사제도로는 식품 검사제도가 있다. 연방식품규정에 따르면 우유, 치즈, 버터를 비롯한 식품 분류에 따른 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며 이는 국내 제품과 수입 제품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또한, 건강, 안전 및 이와 유사한 목적상 상품 라벨링 및 포장에 강제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특히 식품류와 기술장비의 경우에는 이러한 요건이 상당히 까다롭고 복잡하다. 최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유전자변형물질(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GMO)에 대해서는 GMO 성분이 1% 이상인 모든 GMO 상품(단, 종자의 경우 0.35% 이상, 가축용 사료의 경우 2~3% 이상)은 유전자변형표시(comprehensive mandatory labelling)를 하도록 하고 있다.

스페인 역시 EU 회원국으로 CE 마크 지침(93/68/EEC)에 의거해 23개 카테고리 품목에 대해 CE마크를 획득·부착해야 한다. 또한 스페인은 친환경적 제품에 부여하는 자율적인 라벨인 에코 라벨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1993년부터 시행되어온 에코라벨은 현재 24개 품목에 대해 기준이 제정되어 있다. 그리고 에너지 소비율에 따라 A~G까지 에너지 효율 등급을 표시해야 한다. 에너지라벨 대상 품목은 냉장고, 냉동고, 냉장·냉동고 콤비, 세탁기, 건조기(electric tumble dryers), 세탁·건조기 콤비, 식기세척기, 램프, 전기 오븐, 에어컨 등이다.

슬로바키아는 특정상품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인증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이에 해당되는 상품목록은 가변적이며 슬로바키아 표준과 일치함을 확인하기 위해 때로는 상품이 도입되기 전에 상품인증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상품이 슬로바키아 기준에 부합하는 외국인증서를 가진 경우에는 상품에 대한 검사 없이 부합인증서만 발행하면 된다. 한편, 2011.7월 한-EU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동 협정내 통관절차 및 인증 관련 규정 등이 적용되어 슬로바키아 내 수입정책상의 장벽이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영국은 EU 회원국으로 CE 마크 부착을 의무화 하고 있으며 에코 라벨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외에도 영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안전성 관련 인증제도인 KITE 마크 제도가 있다. KITE 마크 제도는 영국 기준원(British Standard Institution)에 의해 고안 발급 되었으며 안전성, 내구성 등이 중요시되는 자동차, 기차, 창문, 소화기, 맨홀 등 다양한 제품군에 적용



된다. 영국인의 88%가 이 제도를 인지하고 있으며, 기업의 93%가 KITE 마크를 최고의 안전성 관련 인증으로 간주하고 있다.

오스트리아의 표준은 오스트리아 표준협회에서 관장하며 표준은 약 18,000개로 이중 3/4 이상이 유럽 공통 표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때 표준에 적합한 품질을 인정받는 경우 ÖNORM이 표기된다. 그리고 라벨의 경우 EU 차원의 강제적·자발적 기준이외에 오스트리아 차원의 자발적 라벨링 기준이 추가로 부과되고 있으며 예로 가전제품 등의 수입시 독일어로 된 사용자 매뉴얼과 서비스 요건 등을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식료품의 경우 정확한 내용물 분석표(독일어)가 있어야 한다. 또한, 환경 마크의 경우 오스트리아 자체적인 환경인증마크(Umweltzeichen, 농림환경수자원부에서 수여)가 있으며 환경과 관련된 보다 상세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획득 가능한 동 인증마크는 자발적인 인증제도이나 부착시 상품에 대한 공신력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

또한 CE 마킹 제도는 공산품에 대해 EU 회원국 전체에 적용되는 강제 기술 규격 인증 제도로 27개 EU 회원국과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의 EFTA 국가에 수출하려면 22개 카테고리의 품목에 CE 마킹 지침(93/68/EEC)에 의거 CE 마크를 획득·부착해야 한다. 이외 1993년 이후 친환경적 제품에 부여하는 에코라벨이 있으며 이는 자율적 라벨로 2012.7월 기준 57개 품목군에 대해 기준이 제정되어 있다.

우즈베키스탄은 공산품 수입시에 규격인증, 안전증명 등이 필요하며 식품 수입시에도 안전 검사 등이 필요하다. 공산품 규격 인증 및 식품 안전 확인 등은 The Agency for Standardization, Metrology and Certification of Uzbekistan(UZ Standard Agency)에서 시행하며 특별히 인위적인 장벽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표준인증과 관련하여 2011.5월부터 Uzstandard Agency에 납부하던 표준인증마크 사용료 납부방법을 판매수량 기준에서 인증시 한 번의 수수료 납부방식으로 바꾸었으며, 기술력 제고를 위한 장비나 부품 수입시에는 한국을 비롯한 50개국의 외국의 공인 인증 기관에서 발행한 인증서(certificate of conformance)로 대체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또한 2003.1월부터 소비재 상품의 경우 우즈베크어 라벨링이 의무화되었다.

체코의 상표 및 제품 설명서 부착요건은 제품에 따라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체코어로 되어야 하며 제품명, 생산업체명, 원산지국가, 그리고 필요한 경우 사용법 등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식품, 음료, 식품 첨가물 및 직물 등의 경우 내용물 성분 비율에 대해서도 표시하여야 하며 일반 소비재에 대해서는 경고문 부착에 관한 국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최근에는 바이오 테크 관련 제품에 대해서는 특별 라벨링 규정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체코 내 부가가치가 60%가 넘는 제품에 대해서는 'Czech Made' 마크 부착 허용을 신청할 수 있다.

카자흐스탄은 제품이나 서비스의 원산지에 상관없이 강제인증을 받아야 할 제품 및 서비스 목록을 준비해 오고 있다. 그리고 CIS 지역 국가와는 인증서(certificate of conformity)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하고 있어 다른 국가로부터 제품이나 서비스를 수입할 경우 인증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동 인증서는 카자흐스탄 국립 표준연구소 산하 연구소로부터 받을 수 있으며 카자흐스탄 내에 인증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CIS 지역 국가의 유사 연구소에서 수행한 시험 성적서로 국제협약이 허락하는 내에서 인증을 대체 받을 수 있다. 또한, 카자흐스탄 정부에서는 인증 선언에 의거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할 품목을 확인해오고 있으며 국민의 안전과 필수적으로 관계되는 제품이 동 목록에 포함되어 있다. 중소기업지원위원회 연구소에서는 인증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다. 라벨링의 경우 카자스탄어 및 러시아어로 반드시 번역 표기하도록 하고 상기 2개 언어로 표기가 불가능한 내용은 라틴어 또는 영어로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상품의 조성분 검사서 첨부 등 까다로운 절차를 운용하고 있다.

크로아티아는 EU 지침(Directives)과 자국의 기술 표준을 조화시키기 위해 생산품의 기술 규격과 품질 적격 평가법(The Law on technical requirements for products and conformity assessment(OG 20/10))을 2010년에 제정하였다. 이에 따르면 수입업자가 생산품이 기술 표준에 부합



하고 생산자에 의한 품질 적격 평가가 수행되었음을 입증해야 하고 시장에 출하되기 전 크로아티아어로 된 라벨이 부착되어야 한다. 품질 적격 평가를 위한 서류로는 검사 보고서(examination reports) 품질 적격 인증서(conformity certificate), 리뷰 보고서(review reports), 품질 적격 설명서(declaration of conformity), 기술 서류(technical documents) 등이 있다. 크로아티아는 기술표준 및 품질 적격 평가에 있어 EU 차원에서 실행되고 있는 새로운 접근 방식을 도입하였으며 식품, 화학제품, 의약품, 화장품, 자동차 등 일부 품목에는 예전 방식(old approach)을 적용하고 있다.

한편, 라벨에는 생산자명, 생산자 주소 및 원산지, 순수량/무게/부피, 성분, 보관 방법, 소비자 정보(GMO 성분 포함 여부) 등의 정보가 담겨있어야 한다.

인증의 경우 2007년 이후부터 CE인증으로 크로아티아 인증인 C 마크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실제적으로 광범위하게 적용되지는 않아 왔다. 그러나 크로아티아의 EU 가입으로 “CE”인증은 자동적으로 크로아티아에서 인정되게 되었다. 또한 일반적인 전기 및 전자제품의 경우 EMC(Electro Magnetical Compatibility) 및 전기안전인증을 획득해야 한다.

터키의 경우 수출입품의 품질검사는 「외국무역을 위한 기술규정과 표준화 체제에 대한 공표(Ministerial Decree on the Regime of Technical Regulation and Standardization for foreign Trade)」와 그 부속 법령에 따르는데, 터키는 EU 회원국은 아니지만 수입되는 대부분의 공산품에 대해 CE 인증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EU 가입 과정에서 모든 무역 시스템을 EU 기준으로 맞추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2004년 이래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그리고 터키는 EU와의 관세동맹에 따라 EU상품에 대한 기술장벽을 점차 제거해나가고 있으며 2004.4월부터 20개의 상품에 대해 CE마크를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상품을 터키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EU의 인증기관이 작성한 CE마크 적합성 판정 증명서 또는 상기 지침에서 허용되는 경우에 한해 수출업체가 직접 발행한 적합성 판정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 외에

터키 표준협회에서 실행하고 있는 TSE 인증이 있다. CE 인증이 있을 경우 별도로 TSE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으므로 수출 시 인증획득을 위한 시간과 비용이 더 많이 소요되는 TSE 인증보다 CE 인증을 먼저 받는 것이 좋다.

위생 관련 법규는 동/식물, 농작물, 육류 및 관련 식품들, 음식물과 접촉하는 제품들에 한하여 시행되고 있으며 제품에 따라 보건부와 농림부 산하 안전 검사청에서 테스트를 거친 후 결과에 따라 허가를 받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공산품, 식품, 의약품 등에 대한 표준 및 인증은 프랑스 표준 협회인 AFNOR(Association Francaise de Normalisation)에서 총괄 담당하나 인증업무는 AFNOR 뿐만 아니라 동 기관이 위임한 기관에서도 수행하고 있다. 인증 절차는 당해 인증 신청자가 인증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AFNOR 또는 산업별 수탁기관에 제출하면, 동 기관은 인증 위원회(Commission de normalisation)에 심사를 요청하고, 최종 결과는 AFNOR가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가전제품, 의료기기 등 전기전자제품의 경우 CE 마크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에 대해서는 에너지 소비율에 따른 에너지 효율성 등급도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친환경 제품에 대해서는 제조자가 자사 제품이 친환경 제품임을 알리기 위해 에코(ECO) 라벨 부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소비재, 식품 및 섬유 제품 등의 상표 표기의 프랑스어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참고로 상업상 사용되는 계약서, 송장, 영수증 등 제반 서류, 채용 공고 및 근로 계약 등 노동 관련 서류에 대해서도 프랑스어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뉴질랜드는 모든 공산품의 표준취득여부에 대해 일괄적으로 규정하는 법규나 규정은 없으며, 품목에 따라 관련 기관, 법규 및 규정이 산재해 있어 품목을 일괄적으로 정리하기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식품, 의약품, 기계류, 전기 및 가스용품 등의 품목군은 인체나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많기 때문에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뉴질랜드는 전기제품의



인증과 관련하여 호주의 제도를 도입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호주방송통신 규제기구는 전기통신, 무선통신, EMC 및 EME 기술에 대한 기존의 인증을 RCM(Regulatory compliance Mark)으로 통합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뉴질랜드 환경인증제도인 Environmental Choice New Zealand는 우리나라 환경인증제도와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Environmental Choice New Zealand가 요구하는 제품시험평가 및 현장실사를 대행하고 있다.

대만은 국제기구의 참여가 자유롭지 못해 국제인증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현지검사 또는 검역 인증 규정에 의거하여 해당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다.

미얀마는 아직까지 국가표준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아 표준, 검사, 라벨링 인증관련 장벽은 존재하지 않는다.

키르기즈스탄에서 판매되는 모든 물품은 러시아어 또는 키르기즈어로 라벨링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2개어(러시아어 및 키르기즈어)로 함께 라벨링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재무부 산하 SIRIM(Standard and Industrial Research Institute of Malaysia)이라는 정부 소유 회사에서 제품 표준 및 품질관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SIRIM CERTIFICATION은 말레이시아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대한 필수적 인증으로 1965년 회사법(Companies Act 1965) 하에 설립된 SIRIM QAS International Sdn Bhd에서 발행 받을 수 있는 바, 인증 발급은 자발적이나 ①오토바이 안전 헬멧, ②안전벨트, ③전기제품, ④가스기구, ⑤화재안전물품, ⑥시멘트, 세라믹 타일 등, ⑦통신장비, ⑧차세대 디젤 엔진에 대해서는 강제적으로 SIRIM 마크를 획득하여야 한다.

그리고 말레이시아는 Halal 식품의 허브로 발전하기 위해 Halal 관련 인증제도의 발전을 추구해 왔다. 따라서 모든 육류, 가공육류제품, 돼지고기, 계란 및 계란 제품은 Department of Islamic Development Malaysia (JAKIM)로부터 Halal 인증을 받아야 한다.

베트남은 약 5,000여개 이상의 표준규정을 갖고 있으며 이 가운데 약 1,000여개는 국제표준을 베트남 국내표준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베트남은 일부 국제표준화기구의 회원국임에도 불구하고 표준규격에 관한 제도가 복잡하고 공정하지 않아서 일부 제품에 대한 표준규격은 국제표준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더러 있고 제품에 따라서는 항목 분류가 전혀 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 따라서 제품별 표준규격에 관한 정보는 무역거래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중요한 사안 중 하나이며 표준규격에 맞추어 제품설명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베트남은 기술적인 계량 요소를 비관세 장벽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예외적으로 몇 가지 중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정부 부처 또는 그와 동등한 기관으로부터의 품질에 관한 검사를 받도록 강제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SPRING Singapore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안전관리가 요망되는 전기제품, 가스용품, 가전제품 중 47개 품목을 통제물품(Controlled Goods)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통제물품을 광고, 전시 또는 판매하고자 하는 수입업자, 제조업자, 소매업자 등은 안전검사 당국인 SPRING Singapore에서 지정한 적합성 평가기관(Conformity Assessment Bodies: CAB)에서 안전검사 증명서(Certificate of Conformity: COC)를 발급받아 SPRING Singapore에 등록해야만 싱가포르 내에서 광고, 전시, 판매 등을 할 수 있다. 또한, 싱가포르에 수입되는 육류 및 조류는 수출국에서 나고 자라야 하며 수출국의 검사를 필했다는 표시를 해야 한다.

인도는 90개 수입품목에 대해 인도품질표준(Indian Quality Standard)을 의무적(Mandatory Certification)으로 따르도록 하고 수입품에 대해서는 통관에 앞서 인도표준청(Bureau of Indian Standard)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제조업자와 수출업체가 제조설비를 사전에 인도표준청의 검사/승인을 받게 되면 자동통관이 가능하나 까다로운 조건 등으로 인해 이 규정이 실질적으로 수입을 제한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규제 해당품목의 HS 번호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세관 당국이 제품을 인증대상으로 포함할지 여부에 대해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



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그리고 거의 모든 가축, 농산물, 식품의 수입 시에는 농업부가 발급하는 위생 및 검역-식물검역 수입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이 분야의 위생관련 규정이 국내업체에게는 관대하고 통관절차 등에서 외국제품에게 까다롭게 적용됨에 따라 실질적으로 수입을 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라벨링은 「Prevention of Food Adulteration Act, 1955」와 「Prevention of Food Adulteration Rules, 1995」의 적용을 받는다. 이외에 중고 소비재, 자동차 등 중고품에 대한 규제는 안전을 이유로 시행되고 있지만 이 역시 국내 산업보호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중고자동차의 수입에 대하여는 자동차의 성능, 경과년수, 사전검사 등에 대한 까다로운 규정을 통해 실질적으로 수입이 불가능할 정도로 규제하고 있는데 자동차산업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방글라데시, 스리랑카에서는 중고자동차의 수입규모가 막대함을 감안할 때 유치산업 단계에 있는 인도 자동차산업의 보호를 위한 조치의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의 국가 규격/표준은 SNI(Standard National Indonesia)이며 국가 표준화 담당 기관인 BSN(National Standardization Agency)에서 관장한다. 이는 인도네시아 전역에 적용되며 국민의 안전 및 건강, 환경보전 그리고 경제적 고려의 이유 등으로 일부 품목에서는 강제적으로 요구되는 경우가 있다. 그 외에는 의무사항은 아니다. 그러나 표준규격 품목은 계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수출시 유의해야한다.

국가 표준/규격 취득이 의무화 된 SNI Mandatory(통관강제인증)제품의 경우, 수입 시 SNI인증서를 첨부해야 통관이 가능하다. 해당 기관으로부터 규격/표준 인증서를 발급 받은 수입업자는 물건을 유통하기 전, 물품에 반드시 표준/규격 인증서 번호, 검사 인증서 번호/수입업자명을 기록해야 한다.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는 표준제도를 강화하려는 추세이므로 향후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SNI 표준 획득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일본은 2006.5월부터 식품 중 농약 등 잔류기준 적용을 포지티브 리스트제도(PLS)로 전환하였다. 이에 따라 사람의 건강을 해칠 염려가 없는 양

(0.01ppm)을 설정하여 잔류농약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농약이 잔류하는 식품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의 식품검역당국은 수입검사 과정에서 병해충이 발견되면 소독조치 등 검역처분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부터 양국에 공통으로 분포하는 병해충 중 53종에 대해서는 소독을 하지 않아도 되는 비검역 병해충으로 지정해 줄 것을 양국간 식물검역회의를 비롯한 다양한 외교경로를 통해 일본에 요구하여 왔다. 이에 일본정부는 2008.9월 9종을 비검역 병해충으로 마지막으로 지정한 후 추가 지정이 없는 상황이다.

중국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수출입하는 품목과 임가공무역, 보상무역 방식에 의해 수출입 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수출입검사와 관련하여 각종 우대조치를 부여하고 있다. 이와 반해 수입상품에 대해서는 품질검사, 수량·중량검사, 포장상태 검사 등 수입상품 검사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기계, 전자제품의 수입에 대해서는 품질안전허가증제도를 시행하여 엄격하고 까다로운 수입심사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2001.4월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AQSIQ)을 설치하고 동 중국 산하에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CNCA)를 설치하여 단일강제인증제도인 CCC(China Compulsory Certificate) 인증제도를 포함하는 중국의 적합성평가업무를 총괄하도록 하였다. CCC 제도와 관련하여서는 중국내 10개 국가지정인증기관과 지역별 157개 국가지정 검사기관이 있다. 이로 인해 중국내 생산 또는 중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중 중국정부가 지정한 CCC 인증 대상품목은 반드시 CCC 인증을 획득하여 CCC 인증마크를 부착하여야만 중국 내 수입·유통·판매가 가능하며 만약 CCC 인증마크를 부착하지 않거나 위조·도용·변조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마크를 부착한 제품을 판매 또는 수입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벌 및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인증 대상품목으로는 자동차, 전기제품, 용제형 목기도료, 자기질 타일, 시멘트 동결방지제 등 22개 분야 159개에 달한다.

중국의 주요 품목별 기술장벽으로는 다음 사항들이 지적되고 있다. 첫째, 가전제품의 경우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은 2002.7월부터 「검사필 수입



상품 리스트(총 62종(188개 HS품목))」를 발표하여 민용상품 수입관련 안전품질검사를 실행하고 있으며 CCC 검사대상품목은 CCC 인증서만 심사하고 기타품목은 수출검사를 진행한다.

둘째, 합판에 대해 중국은 천진, 청도, 대련 등 일부지역에서 식물 검역증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셋째, 특수영양식품과 보건(기능)식품의 경우 의약품처럼 매 품목마다 국가 식품약품감독관리국(SFDA)에 위생허가를 받아야 한다. 보건식품의 경우 국가가 정하여 고시한 27가지 효능(한 제품에 최대 2가지 효능 신청 가능)을 가진 제품에 한하여 위생허가증을 발급해 주고 있다. 그리고 중국내 건강식품 등록을 위해서는 수입건강보조식품 등록신청표, 제품 처방 및 증거, 효능 성분, 함량 및 효능성분의 검증방법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넷째, 우리의 식품 및 첨가물 공전에 해당하는 중국 위생표준의 경우, 우리 기준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존재하며 이로 인하여 수출입 식품 모두에서 부적합 처리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첨가물의 경우, 각국마다 사용기준이 달라 해당제품의 유형에 따른 첨가물 기준을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해조류의 경우 비소 등 중금속 기준이 정하여져 있으므로 국내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수출용인 경우 수출회사에서 별도 검사를 통한 품질관리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국제적으로 중국산 식품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는 것과 비례하여 수입되는 외국의 식품에 대하여도 상응하는 정도의 검사강화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수출입 식품 모두 안전성에 대한 강화가 요청되고 있다.

다섯째, 중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은 수입되는 식품의 표시사항 관련 규정인 「進口食品標籤管理辦法」을 개정하여 2000.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동 규정에 따르면 수입제품의 포장에 표기된 제조국의 모든 외국어 표기를 중문으로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2005.4월부터 「수출입 식품 및 화장품 제품 라벨 심사제도 조정에 관한 공고(關於調整進出口食品、化粧品標籤審核制度的公告)」를

시행해 수출입 식품에 대한 라벨 심사와 제품검역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식품 수출입 업체는 심사 접수기관에 사전심사를 신청하지 않고 직접 수출입 검역기관을 통해 제품검역과 동시에 라벨심사를 받을 수 있으며 수출입 검역기관들은 수출입 식품에 대해 품질관련 검사와 검역 등을 시행한 후, 검역 증명서에 ‘라벨심사합격(標籤經審核合格)’ 표시를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2005.10월 발표된 「중화인민공화국 정량포장식품 제품라벨 통칙(中華人民共和國預包裝食品標籤通則)(GB7718-2004)」과 「중화인민공화국 정량포장 특수식품 제품표시 통칙(中華人民共和國預包裝特殊膳食食品標籤通則)(GB13432-2004)」 등에 따라 신규 증서로 교체해야 할 경우, 2005.12월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이 발표한 「수입 식품 제품라벨 심사 증서 교체 심사에 대한 통고(關於對進口食品標籤審核證書進行審核換證的通告)」에 따라 증서를 교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공고에 따라 라벨 사전신청비용의 단독 부과가 폐지되는 대신, 이 신청비용이 제품검사비용의 일부항목으로 포함되고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식품 및 화장품 라벨심사판공실이 관장하던 수출입 식품 및 화장품의 라벨링 검사 권한이 지역별 해관의 수출입검역기관으로 이양됐다.

여섯째, 중국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Stat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SFDA)은 자국의 의약품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약품제조품질관리기준(Good Manufacturing Practice: GMP)의 강제 적용, 임상시험 기준, 판매유통 관리 강화 등 시장진입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각종 규정을 제·개정 공포하고 있다. 중국 수입약품 심사·허가업무의 주요 관리 규정으로는 「수입약품관리방법(進口藥品管理方法)」을 들 수 있는데 동 규정에 따르면 수입약품은 반드시 SFDA가 발급하는 ‘수입의약품등록증’을 취득해야 하고 수입시마다 SFDA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수입항의 약품검사가 발급한 수입약품통관증 및 기타 증명을 해당 수입항을 관할하는 해관에 제출하여야 통관할 수 있다. 수입신고시 최초로 수입신고한 수입항을 통해서만 이후의 수입신고가 가능하여 수입자는 수입항 선택에 신중을 가하여야 한다. SFDA는 국내 유사한 종류 약품의 포화정도에 근거하여 수입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수입 관련규정에 적합한 약품도 일부는



수입허가를 취득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의약품 등록시 요구하는 규격은 중국약전(CP)이 아니면 인정하지 않는데 수입허가 심사시 타 국가의 공정서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문서화된 규정은 없으나 관행적으로 중국 자체규격 CP를 적용하고 있다. 또한, 의약품 등록 신청시 수입약품은 반드시 중국에서 실시한 임상시험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수입약품등록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5년으로 등록증 기한만료일 6개월 전에 국가약품감독관리국에 재신청하여야 하며 재등록신청 유효기간을 초과한 품목은 새로운 등록절차를 거쳐야 한다. 등록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갱신할 경우, 동 제품을 자국에서 생산하게 되면 허가 연장을 불허하고 있다.

일곱째, 중국에 최초로 수입되는 화장품은 우선 위생부가 공인한 위생검사기관에서 위생안전성 검사를 받은 후 위생부에 수입화장품위생 허가증을 신청하여 위생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통관 및 중국 내 판매가 가능하다. 동 위생허가증은 매 품목별로 발급되는 것으로 동일한 생산기업에서 생산되는 동일계열의 제품이라도 제품별로 개개의 허가번호를 획득하여야 한다. 상기 위생안전성 검사의 검사기간은 일반화장품은 2개월, 특수용도화장품은 약 3~6개월이 소요되고 위생허가증 발급에는 8개월의 기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유행에 매우 민감한 화장품을 적시에 출시하기 곤란하여 대중 수출에 상당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위생부는 2007년도판 화장품 위생기준을 새로이 제정하여 발표하였는바, 관련 기준의 변화에 대한 꾸준한 관찰을 통하여 수출시 부적합되는 사례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캄보디아는 모든 출입 화물에 대해서는 수출입검사부(CAMCONTROL)에서 품질과 수량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수출입검사부(CAMCONTROL)는 소비자용 물품, 수산물, 석유화학, 농산품의 품질과 수량 일치여부에 대한 검사는 물론 수량 차이에 대한 검사 역할도 대신하고 있으나, 무역업계는 불투명한 업무처리에 대해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있다. 의약품 등 소비자보건과 관련된 물품의 수입 시에는 별도로 보건부로부터 해당물품이 위생 및 보건 상 문제가 없다는 제반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은 후 수입할 수 있다.

태국의 경우 소비자 보호, 안전, 품질제고 등을 목적으로 12.9일 기준 109개 품목에 대해 태국산업표준원(Thai Industrial Standards Institute)에서 인증하는 강제인증을 받도록 규제하고 있다. 동 품목에 해당되는 경우 최소 소정의 양식과 현장 실사를 거쳐 표준인증을 받아야 하며 매년 갱신해야 한다. 물품 통관시에도 화물고관해제허가서를 세관에 제출해야하고 제품 실사 및 태국산업표준인증표식을 부착해야 판매다 가능하다. 최근에는 한국산 철강재에 대해 신규/갱신 심사를 진행하지 않는 등 절차 지연을 통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조치로 활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파키스탄은 2010.10월 말까지 15,000개의 ISO 및 6,000개의 IEC 표준을 포함하여 총 26,764개의 품질 기준을 마련한 바 있으며 국제규격과 상이한 규격 인증제도는 실시하지 않고 있다. 다만 품질에 대한 표준이 명확치 않으며 농산물에 대한 검사시설이 낙후하여 일관성 있는 심사가 어렵고 외국산 농산물에 대한 차별을 초래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2005.4월에는 바이오 안전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현재 유전자 변형 콩이 수입되고 있다. 또한, 법적규제는 아니나 일반적으로 육류제품의 경우 이슬람 교리에 따라 도살되었음을 표시하는 ‘Halal Food’라고 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외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공산품의 경우 국내기관의 인증을 그대로 인정해 주지 않고 파키스탄 내 기관 또는 정부가 인정하는 국제기관의 인증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수출시 확인이 필요하다.

필리핀의 표준화 및 인증은 통상산업부(DTI) 산하 제품규격국(BPS)이 담당하고 있으며, 주요 인증으로는 ICC(Import Commodity Clearance Mark)와 PS(PS Quality %& Safety Certification Mark)가 있으며, 대상품목은 주로 소비자의 건강, 생명 및 안전에 관련된 제품이다. 식품 및 의약품의 수입 시 식품의약품국의 성분 및 효능 테스트 통과가 필요하다. 섬유직물, 기성복, 의류, 액세서리 등에 대해서는 라벨링이 의무화되어 있다. 최근 들어 인체에 유해하거나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제품에 대한 기술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2013.5월 가정용 살충제의 제조·수입 판매



에 대한 안전수칙과 라이선스 취득 요건이 엄격히 강화되었고, 2013.9월에는 ‘완구류안전표시법’이 의회를 통과하여 제품에 포함된 중금속 등 위험물질 표시가 의무화됨에 따라 실질적으로 2014.9월부터 필리핀 수출하는 모든 완구류에는 라벨링이 의무화 되었다.

호주의 전기 안전과 관련된 규제 전략 및 정책 등에 관한 전체적인 조율은 ERAC(Electrical Regulatory Authorities Council-www.erac.gov.au)에서 담당하고 있다. 특정 유형으로 지정된 전기용품은 판매 전에 승인 인증서를 취득해야 하며 지정 품목 목록에 없는 전기용품은 승인 인정을 받을 필요가 없으나 호주의 각 주 정부가 명시한 최소한 안전 규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정보통신 분야에 있어서도 일정한 기술 규정을 두고 있으며 해당 제품의 수입업자, 제조업자, 중개상, 장비 운영자들에게 명시된 강제 표준에의 부합을 요구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 요건은 각 라벨링 문서에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자동차 역시 Motor Vehicle Standards Act 1989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동 법에서는 차량 안전 및 배기 요건과 관련한 국가 표준인 ADR(Australia Design Rules)을 따라야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외 소비자 제품 보호를 위한 관련 규제인 Trade Practices Act 1974(TPA)이 시행되고 있다.

가나에서는 가나기술표준원(Ghana Standard Board: GSB)이 표준의 제정,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GSB는 약 2,000개의 국내 표준을 제정하였으며 44,500개 국제표준을 채택하고 있다. 국제표준이 없는 경우 전통적으로 영국 표준을 따라왔으나, 최근에는 유럽연합, 남아공 표준을 선호하고 있다. 그리고 2005년부터 고위험 품목(high risk goods)을 수입하려면 공인기관의 적합성 인증서를 GSB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식품, 의약품, 화장품, 화학제품 등의 제조, 판매 등은 식약청(Food and Drugs Board: FDB)이 규제한다. 모든 식품은 시장에 판매하기 전에 FDB에 등록되어야 하며 수입제품의 경우 GHC 300, 가나내 생산품인 경우 GHC 100의 등록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등록은 제품 단위로 해야 하며 3년간 유효하다. 또한 1992년 제정된 GSB Labelling 규정에 따라 모든 식약품은 영문으로

제품의 종류, 원산지, 원료, 무게, 용도, 유효기간 등을 알아보기 쉽도록 표기하여야 한다. 마찬가지로 텔레비전, 에어컨, 배터리, 램프, 페인트, 사료, 화장품 등도 영문으로 라벨링되어야 한다. 라벨링이 잘못된 제품에 대해서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판매 28일 전까지 수정·보완되어야 한다.

나이지리아는 SPS 기준/시험/라벨링 관련 규정은 잘 정비되어 있으나 절차의 복잡함으로 인해 수입승인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첫째, 원산지에 상관없이, 모든 음식물, 약품, 화장품 및 살충제 수입품은 제조업체와 적절한 국가기관으로부터 발행된 분석확인증(certificate of analysis)이 구비되어야 하며 둘째, 특정 동물제품이나 식물, 씨앗, 토양 등은 반드시 적절한 검사 확인증을 수반해야 하고 셋째, 나이지리아로 반입되는 모든 물품은 미터법으로 표기된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그리고 높은 관세와 일관성 없는 수입 및 라벨링 규제의 적용으로 인하여 고부가가치의 시한성 제품(perishable products) 수입에 막대한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부처간 규정의 해석에 관한 빈번한 분쟁 및 통관 가이드라인의 변경은 나이지리아에 입항하는 물류의 지연원인이 되고 있다. 2006년부터 나이지리아로 수입되는 개인사물, 중고자동차, 병아리, 백신, 이스트 등 상하기 쉬운 품목과 잡지류를 제외한 모든 품목은 도착지에서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나이지리아 표준국(Standard Organization of Nigeria: SON)은 2005년부터 필수 검사 제도의 하나로 품질 표준검사(SONCAP 증명서)제도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는데 중요 공산품 및 기계류 제품들은 출발지에서 나이지리아 표준국이 지정하는 검사기관(나이지리아 표준국 해외사무소)으로부터 SONCAP 증명서를 발부 받아 도착지 세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표준청(SABS)은 국내물품이 표준·검사관련 규제를 받는 경우 동종 수입품에 대해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농축산물, 농수산물가공품, 주류 등은 위생·검역 규제의 대상으로 농축산물 수입의 경우 까다로운 규제를 하고 있으며 방사선 처리를 받은 육류는 수입이 금지되고 있다. 사과, 체리, 배 등의 과일류를 남아공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검역절차를 밟아야 한다. 또한, 남아공은 모든 제품의 라벨링 및 포장 시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한 규제를 규정하고 있다. 수입품의 원산지가 표시되어야 하며 함유물의 중량표기는 남아공의 계측시스템에 맞추어야 한다. GM 재료가 함유된 제품은 반드시 그 내용이 표시되어야 한다.

르완다는 2002년에 설립된 르완다표준국(RBA: Rwanda Bureau of Standards)은 표준장려, 품질관리 및 계측활동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것이 적절히 적용을 감시한다. 또한 르완다표준국은 르완다의 표준을 동아프리카공동체(EAC) 및 동남아프리카공동시장(COMESA)과 조화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최근 동아프리카공동체 및 동남아프리카 공동시장과 각각 528개 및 304개 분야에서 표준 일치가 이루어졌다. 르완다의 표준은 민관의 대표로 구성된 르완다표준국의 기술위원회(TCs)를 통해 개발되고 있으며, 2008년에는 국제적 최적관행(international best practices)을 반영하기 위한 표준개발 절차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르완다표준국은 수입 및 수출품이 르완다의 표준 및 기술규정에 부합하는지를 검사한다. 또한 국경에서의 수입품 검사, 르완다 내 산업 조사 및 시장 감시를 통하여 생산, 홍보, 소비 전 단계에서의 품질 관리를 수행하고 있으며, 표준을 준수하는 상품 및 시스템에 품질 마크를 표시하는 인증시스템 또한 운영하고 있다. 예컨대 농업부 하의 국가농업수출개발위원회와 같은 기관들은 차, 커피 및 타 수출품에 대한 인증서를 발급하고 있다.

르완다의 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물품은 르완다표준국의 감시 하에 재수출 또는 폐기된다.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수입업자는 경고, 르완다에서의 상품 판매 금지, 물품의 압류 및 폐기, 물품 가치의 두 배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기업의 일시적인 폐쇄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레바논은 의약품이나 식료품 수입시 반드시 라벨규정을 지키도록 되어있으며 제품의 제조일 및 유효기간, 원산지를 표기하도록 되어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통관이 거부되며 현지에서 이미 들어와 있는 유사품이나 이미 보호중인 라벨과 혼동을 일으켜서도 안 된다. 의료기기 수입업자는 공중보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가정용 전자제품, 배터리, 완구, 세라믹 대리석,

화장품 등의 수입을 위해서는 선적 전 검사가 필요하다.

르완다 표준국은 표준 및 인증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그러나 정부의 역량 부족으로 인해 르완다의 표준, 검사, 인증 및 표시는 대체로 ISO, IEC, Codex, EAC, TBT를 포함한 국제 미 지역 표준을 따르고 있다. 르완다 표준국은 국민 보건과 안전에 관련된 식품, 의약품, 건축자재, 전제 제품 등의 표준을 우선적으로 개발하였으며, 표준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수입제품에 대해 제조업체의 분석증명서를 요구하고 있다.

모로코의 기술표준은 ISO, 프랑스 표준협회(AFNOR) 등 유럽표준에, 식품의 경우 Codex 등의 국제표준에 근거를 두고 있다. 모로코 국가 기구인 산업표준청(SNMIA)와 국립검사청(LPEE)이 자체적인 표준 및 검사 기준과 절차를 제도화하고 있다. 이중 산업표준청(SNMIA)는 모든 공산품에 대해 표준과 규격을 부여하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립검사청(LPEE)은 ISP/IEC에 의거하여 제품 검사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모로코는 WTO TBT의 당사자로서 이를 준수하고 있으며, 표준, 기술, 규격 등에 관련된 규정을 마련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가의 자문을 받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이동통신제품과 식품에 대해서는 각각 모로코 통신감독위원회(ANRT) 및 수입관리청(EACCE)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검사와 인증을 거쳐야만 수출이 가능하다. 이외 종교적 문장이나 표시가 되어 있는 물품 수입이 금지되어 있다.

라벨링은 일반적으로 붙어 또는 아랍어로 표기되어야 하며 원산지국이 표기되어야 한다. 이중 식품의 경우 반드시 아랍어로 표기되어야 하며 가공식품의 경우 품목명, 내용물, 생산자 또는 포장자의 회사명 및 주소, 원산지국명, 내용물 중량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그리고 의약품의 경우 제조일, 유효기간, 약품명, 성분(%)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이외 모로코는 할랄(Halal)을 의무화 하고 있는 검사 또는 인증 규정이 없었으나 최근 모로코 할랄 인증을 공식발표 하였다. 이슬람 율법에 따라 도축한 육류를 소비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나, Halal 처리되지 않은 식품, 화장품, 의약품, 의류 제품의 수입도 허용되고 있다.



바레인은 다른 GCC 국가들과 함께 걸프국가 표준화 기구에 참여하고 있으며 ISO의 멤버이다. 바레인의 대부분의 표준은 걸프 표준화나 국제적 표준화를 따르고 있으며 걸프 표준화로서 바레인이 따르는 표준은 1,020개로 이중 520개는 강제적이고 500개는 자율적이다. 2010.3월에 GCC 재정부장관들이 모여 걸프 표준을 통합하려는 위원회를 결정하였고 2011.11월 통합 걸프 표준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바레인은 GCC 라벨링 기준을 따르고 있으며 식품의 경우 품목, 브랜드 이름, 제조일자, 유효기간, 생산지, 제조자 이름 및 주소, 용량, 원료 등을 표시해야 한다. 라벨링은 아랍어로만 표기하거나 아랍어와 영어를 같이 표기해야 한다. 특히 돼지고기가 포함된 식품에는 반드시 라벨에 이를 표시해야 하는데, 소량의 돼지고기가 함유되어 있더라도 이를 표기하지 않을 시에는 압수되며 일정기간 수입이 금지된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국민 건강, 국가 안전보장, 공중도덕 유지, 환경보호 및 비정상적 거래 방지를 위하여 국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상품에 대해 최소한으로 요구되는 일정한 품질 기준을 수립하고 국내 및 외국 상품 여부에 관계없이 동 표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유통을 허용하고 있다. 사우디 상공부는 반입 전에 수입상품의 사우디 표준에 대한 적합성 평가, 검사 및 인증과 관련된 국제인증제도(International Conformity Certification Program: ICCP)제도를 실시하였는데, 동 제도는 외국 수출업체들에게 비용, 절차 측면에서 부담을 주고 국가 간 교역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동 인증제도는 사우디의 WTO 가입이후 2006년에 적합성 인증 프로그램(Conformity Certification Program: COCP)으로 개선되었다. 한편, 우리나라의 기술표준원은 사우디아라비아 표준청과 시험인증 결과의 상호인정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공인기관인 KOLAS(한국인정기구)을 통해 사우디 수출용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사우디 정부는 전자제품에 대한 에너지 효율의 향상을 위하여 2010.4월부터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에 대하여 당해 제품의 에너지 효율 등급을 표시하는 라벨을 사전에 사우디 표준청(SASO)의 확인을 받아 의무적으

로 전자제품에 부착하도록 하는 에너지효율표시제(Energy Efficiency Label: EEL)를 실시하고 있다.

EEL 제도 실시 이후 2013.7월 사우디표준청(SASO)은 에어컨을 대상으로 최소 에너지 성능 요건을 규정한 신규 EEL 제도 SASO 2663/2012를 공시했다. 신규 개정안 발표 이후 사우디아라비아 세관은 구 기준안인 SASO 2663/2007에 따른 라벨링 인지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며 2013.9.7일부로 개정안 1단계 위반제품, 2015.1.1일부로 개정 2단계 위반 에어컨 제품에 대해서 수입을 금지할 방침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개정안 발효 이후 우리나라, 미국, EU, 일본 제품 및 현지 생산제품 대부분은 규정에 맞게 개조되어 생산되고 있으며, 중국산 제품은 동 개정안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세네갈의 포장 및 의무표시 제도는 Codex 기준에 따른 식품포장을 위주로 규정되어 있다. 모든 신선 과일, 야채 및 식품의 포장에는 품명, 생산일, 유통기한, 성분, 중량, 생산자 정보 등이 붙어 표시되어야 한다. 그리고 성냥, 담배, 20도 이상의 주류, 설탕, 배터리, 가정용 양초, T셔츠 등 특정 수입품의 경우, 밀수 또는 신고된 용도이외의 전용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Vente au Senegal' 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

시리아는 ISO에 가입하고 동 국제 규정을 국내 제도화 하는 등 표준화와 관련한 제도정비는 비교적 잘 되어 있는 편이다. 하지만 이 같은 제도 구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표준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만 17개(정부 7개, 유관기관 10개)에 이르고 있고 또한 서로간의 정보교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집행은 효율적이지 못하다. 그리고 국내에서 제조된 제품은 국내산 제품 표준을 따라야 하고 수입 제품은 정부에서 정한 시험 혹은 인증과정을 거쳐야한다. 또한, 현지에서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은 반드시 ①생산/수출자의 이름, ②내용성분, ③크기와 용량, ④제조일자 및 소멸시효, ⑤원산지 등을 아랍어로 라벨링 해야 하며 의약품에는 1회 복용량도 함께 명기되어 있어야 한다. 이외 국민들의 건강보건과 관련된 제품은 사전 검사 및 인증을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제약과 화장품(피부



용)은 보건부 제약국에의 사전 등록 및 인증이 요구되며 식품류의 경우 수입 시 전문 연구소에서 샘플검사를 거치도록 되어있다. 유무선 전화기와 수신기, 안테나 등 정보통신 관련 제품은 수입 전에 정보통신부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편, 2010.9월부터 일부 품목에 대해 국제인증업체(SGS 또는 Bureau Veritas)로부터 발급받은 적합 인증서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수출하고자 하는 품목이 이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아랍에미리트(UAE)의 인증제도는 잘 발달되어 있지 않아 선진국이 발급하는 인증서가 통용된다. 단, 자동차, 에어컨 등은 GCC 사양을 충족시켜야 하며 식료품 및 의약품은 해당기관으로부터 유통승인을 받아야 한다. UAE를 포함한 중동 이슬람국가는 식품류에 적용되는 ‘할랄(Halal)’ 인증제도가 있다. 할랄 인증은 공인된 이슬람협회에서 발행되며 해당 증명서는 세계 각국의 UAE 대사관, GCC 또는 무슬림 국가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효력이 생긴다.

알제리의 경우 현재 표준, 검사, 라벨링 등과 관련하여 우리제품에 심각한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만한 제도는 없으며 품목별로 유럽 각국에서 통용되는 검사 및 인증을 요구하는 사례(예: 자동차 검사 및 규격 등)가 있다. 알제리 정부는 최근 ‘국가 표준검사센터’를 설립, 각종 표준제품 인증제도를 국제규격에 부합하는 체제로 정비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알제리로 수입되는 국민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일부 제품들에 대해서는 관련당국의 기술규격 사전인증과 세관통과시 사후 검사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각종 의약품은 수입전에 안전성에 관한 사전 인증제도인 비자(le visa technique)를 획득해야 하여 그 외의 가축용 의약품도 농업개발부의 인증의 받아야 유통될 수 있다. 식품류 수입에도 위생법에 의한 위생검사를 거쳐야 유통될 수 있다. 이외에 위험물, 일부 화학제품이나 산업용 가스제품들도 산업투자촉진부의 사전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앙골라에 수출하고자 하는 품목 중 ①동물, 식물, 채소, 과일, 의약품 및 각종 음식류, ②중고장비 및 부품, ③기타 앙골라 관세청에서 지정한 품목은 반드시 수출지에서 앙골라 정부가 지정한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했을 때는 벌금과 함께 컨테이너 도착 시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에티오피아는 품질표준 관리청(The Quality and Standard Authority of Ethiopia, QSAE)을 설립하여 수입품 안정성 테스트(Testing) 및 적합성 평가(Conformity Assessment)를 담당하고 있다. 에티오피아는 몇몇 제품(의약품 등)을 제외하고는 품질 인증서를 요구하지 않는다. 하지만 식의약품, 건축자재, 화학약품, 식물 등은 품질인증서가 필수이다. 또한 모든 수입 상품에는 분명하고 서류와 대조 가능하도록 라벨 및 마킹이 되어 있어야 한다. 라벨 및 마킹과 관련한 규정은 에티오피아 품질표준관리청(Quality and Standards Authority of Ethiopia, QSAE, <http://www.qsae.org>)에서 담당하고 있다.

예멘에 수입되는 상품에 대한 기술적합성 여부는, IFIA 인증 BIVAC 및 Cotecna 사가 예멘 정부와의 계약 하에 검사 및 인증서 발급을 대행한다. 수입업자들은 대체로 ISO, IEC, ISO/IEC,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OIE 및 Yemen 정부의 환경, 보건, 소비자 안전 관련 기준 및 표준을 따를 것이 요구된다. 적합성검사 대상품목은 표준계량 기구(Yemen Standardization and Metrology Organization: YSMO)의 웹사이트에 개시된다. 그리고 위생검역 조치 관련 예멘 내 주요부서는 농업관계부, 보건인구부, YSMO로 농업관계부는 식물 및 동물 검역 업무를 담당하며, YSMO는 동물 및 식품 관련 기술표준 적합성 여부를 검사한다.

오만은 국제 표준화 기구 회원국으로, 일부 기준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걸프 지역 표준화 기구(GSO, Gulf Standards Organization)에서 마련한 기준을 사용하고 있으며, 동 기준을 자국 생산 제품과 수입 상품간 차별적으로 적용하지는 않고 있다. 특히, 식료품이 아닌 일반 상품의 경우에는 상호인정 협정(MRA)이 체결된 국가로 부터의 물품 반입시 적합성평가인정서(conformity assessment certificate)의 신고만으로 자동반입이 가능하며, MRA가 체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샘플 테스트를 시행하고 있다. 오만은 소수의 물품을 제외하고는 라벨에 반드시 아랍어 표기가 포함되어야 하며, 특히, 육류나 가금류의 라벨에는 아랍어를 포함한 2개 국어 표기, 원산



지, 유통기한 등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요르단은 수입되는 모든 수입품은 2007.8월에 발효된 The Directorate of Testing의 규정에 의거 검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동 검사는 요르단 자체, 국제 표준규정, 라벨링 규정에 일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부적합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을 제한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이란의 이란표준산업규격연구소(Iranian standards & Industrial Research of Iran)는 각 제품의 표준규격을 결정하는데 결정된 규격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하며 필수 표준규격 적용대상 품목은 반드시 송장(Invoice)에 관련 규격이 명시되어야 한다. 수입상은 반드시 수출상에 표준 규격을 통보해야 하며 만일 규격이 준수되지 않은 경우 통관 시 지장을 초래한다. 그리고 위생, 의료 및 의약 관련 품목은 보건부 내의 표준규격심사에 합격해야 하며 선적 전 전본이나 샘플을 보건부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스라엘은 매우 엄격한 표시제도(라벨링, 마킹, 포장 등)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스라엘에 제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현지 수입업자와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수입품을 세관으로부터 인도받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표준원(Standards Institution of Israel: SII)의 검사가 필수적인데 이는 2005.6월 이후 4개의 항목으로 분류되어 검사를 받게 되었다. 동 개정에 의하여 규격에 부합할 것이 요구되는 약 400개 품목의 절반 정도의 품목에 관한 절차가 간소화되었다. 이스라엘은 기본적으로 유럽의 안전규격을 자국의 안전규격으로 수용하고 있으며 이스라엘 표준원은 최근에 유럽 표준화 위원회(CEN)와 유럽 전기기술 표준화 위원회(CENELEC)에 회원으로 가입하였다. 또한, 농산물 및 식품의 경우 수입품이 유대교 율법의 음식물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코셔(kosher) 인증서를 유대교 랍비(율법학자)로부터 받아야 하는데 해외에 있는 외국기업이 이를 취득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이집트는 많은 수입품들에 대하여 품질검사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의 검사 대상은 130개 품목으로 식료품, 부품, 건설용품, 전자기기 및 많은 소비재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이집트와의 무역에 있어서 표준 및 기타 기술

요건은 상당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 ①수입 배터리 및 타이어에 대한 수입검사제도는 자의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②Sample 통관 시 가액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며, ③수입품 검사 시 샘플검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로 세관 당국에서 전량 검사를 실시하여 이로 인한 통관경비 과다 발생, 물품의 도난 및 파손 등의 장애요인이 있다. 라벨링과 관련하여 식료품, 의약품, 섬유류 및 화장품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을 적용하나 그 밖의 상품에 대해서는 수입상의 요구에 따른다. 2006년부터는 모든 수입품에 수입상의 주소와 전화번호, 제조일자, 수출업자 등을 아랍어와 영어로 병기하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을 도입하였다.

적도기니의 라벨링과 패키징 필요조건은 적도기니 무역규정으로부터 삭제되었으나 서반아어와 불어로 라벨링 할 것을 권장한다. 적도기니는 CEMAC의 회원국으로서 CEMAC의 세관 법에 의거하여 다른 회원국들과 동일한 관세를 부과하고 회원국들 간의 무역은 무관세이지만 “Vente en la CEMAC”이라는 식별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카메룬의 품질 표준 및 규제에 대한 사항은 2009년에 설립된 ANOR(Cameroon Standards and Quality Agency)가 관할을 하고 있으며, 다만 식품에 대한 것은 FAO(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에서 관할하고 있다. 특히 카메룬에 수입되는 통조림 제품의 상표 붙이기와 표시 요건은 제조일자와 만료 일자를 깡통 위쪽에 새겨 넣거나 도장을 찍어야 하고 명료하게 읽을 수 있는 지워지지 않는 잉크로 포장하여야 한다. 또한 카메룬에서 판매되는 담배는 의무적으로 미리 라벨을 붙여야 한다. 수입인지와 같은 형태의 이 라벨비용은 담배 선적이 이루어지기 훨씬 전에 수입업자가 미리 지불해야 한다. 카메룬에서 판매되는 어떠한 유전자조작식품(GMO)이라도 전부 그런 사실을 밝히는 방식으로 포장하고 라벨을 붙여야 한다. 그러나 관련 법률이 제정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 엄격하게 시행되지는 않고 있다.

카타르의 라벨링은 국제기준을 따르고 있으며 카타르 세관은 원산지 라벨링을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케냐는 2005.11월 수입품에 대한 선적 전 사전검사(Pre-shipment Inspection)를 폐지하고 ISO 12075를 취득한 검증기관에서 발행하는 수출적합증명서(Certificate of Conformity: CoC)를 제시하도록 수출입법을 개정, 적용해 오고 있다. 하지만, 선적 전 검사를 폐지하는 대신 케냐 표준청의 권한을 대폭 강화함에 따라 수출입자들은 국제표준을 철저히 지켜야 할 뿐만 아니라 케냐 표준청(Kenya Bureau of Standard: KEBS)의 기준도 사전에 파악하여 통관시 문제가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ebs.org>)를 참조하면 케냐내의 품질인증 관련 기본 정보를 사전에 알아볼 수 있다.

코트디부아르의 표준 제도는 대체적으로 프랑스식 또는 유럽식 기준을 따르고 있으며 모든 수입업자는 관세통과를 위한 적절한 요건에 부합하는 인증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모든 수입업자는 관세통과를 위한 적절한 요건에 부합하는 인증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특히 통신 관련 또는 통신망에 접속하는 모든 전자기기는 코트디부아르통신규제국(ARTCI; Autorite de Regulation des Telecommunication/TIC de Cote d'Ivoire; www.artci.ci)에서, 그리고 기타 전기·전자 제품은 코트디부아르표준원(CODINORM; Cote d'Ivoire Normalisation; www.codinorm.org)에서 형식 승인 또는 안전 기준 등에 관한 인증서를 받아야 하며, 이 두 기관은 현재까지 제도상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2013년 말까지 규제 체계를 공고히 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반면 코트디부아르 내의 자체적인 기술 시험소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대체적으로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기관의 시험 결과들을 인정하는 편이다.

코트디부아르 정부는 그 동안 2개의 유럽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이 회사들로 하여금 수입품에 대한 모든 검사 등을 담당토록 하고 있었으나 동 계약을 만료하고 새롭게 Webb Fontaine사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수출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코트디부아르 정부는 단일창구를 만들어 업무를 일원화함으로써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하며 관련 정보는 www.guce.ci에 게시되어 있다.

모든 상품에는 원산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가공 식품의 라벨은 반드시 프랑스어로 표기되어야 하며, 만료일자가 명시되어야 한다.

콩고공화국은 수입품에 대해 자체적으로 마련한 표준 관련 법령이 없으며, 콩고가 가입되어 있는 국제기구(WTO, ISO) 및 지역기구(COMESA, SADC, ARSO) 회원국에 적용되는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표준 규제 및 상품 평가에 관한 주무부처는 산업부(Ministere de l'Industrie)이며 표준 규정의 집행은 산업부 산하기관인 수출입통제국(Office congolais de controle: OCC)에서 관할하고 있다. OCC는 콩고에서 매매되는 모든 상품 및 수출입품에 대한 표준을 마련하고 상품의 표준 기준 부합 여부에 관한 상품인증서 발급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OCC는 콩고에서 활동하는 기업에게 적용되는 기술규제집(Manuel Qualite: System de Management de la qualite de l'OCC)을 판매하고 있으며 수출 및 수입을 희망하는 기업은 동 규제집을 참고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쿠웨이트는 미국, 유럽의 품질검사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며 특히 식료품의 경우 내용물, 제조일자 및 폐기일자 등에 관하여 엄격한 규정이 있다. 최초 수입되는 식료품의 경우 보건당국 실험실의 사전검사를 요구한다. 의약품의 경우 보건부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①가전제품, ②자동차(중고 포함), ③모터오일과 페인트를 포함한 화학제품, ④벽돌, 시멘트 등 건축기 자재, ⑤종이 및 플라스틱 제품 등 5개 품목 그룹에 대해 수입통관시 국제적 합성인증프로그램(International Conformity Certification Program: ICCP)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가전제품 및 전력 기자재는 TER(Technical Evaluation Report), TIR(Technical Inspection Report)를 요구하기도 한다.

튀니지의 표준 및 기술규정 관련 법규는 1983년에 제정되었으나 2004년 세계은행의 지원으로 수입품의 기술검증 효과 증진 및 통관 소요시간 단축을 위한 프로그램 구상에 착수하였다. 표준 담당 기관은 1982년 설립된 산업기술부 산하기관 INNORPI(Institut National de la Normalisation et de la Propriété Industrielle)로 유일하며 튀니지표준(Normes Tunisiennes: NT)의 등록 및 공표한다. 현재 INNORPI에 등록된 표준은 10,430개



에 달한다. 그리고 양탄자, 의류, 음료, 제분품 및 약간의 조리 공정품 등 총 관세품목의 약 30%가 수입 시 기술 검증이 필요하다. 동·식물성 제품은 위생검사를 필요로 하며 수입 시에는 특별허가서가 요구된다.

지식재산권⁴⁸

개관

국제무역에서 무형자산의 하나인 지식재산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 지식재산권의 보호는 혁신에 대한 유인제공을 통해 직접적으로 무역과 성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식재산권 관련 제도는 무역과 성장 관계에서 추가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요소이다. 특히, 한국은 독자적인 기술개발 능력을 점차 확보함에 따라 이러한 기술이나 상표들이 해외에서 침해당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선진국의 압력에 의해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해오던 정책에서 자발적으로 국내·외 무형자산 보호에 보다 적극적인 정책으로 전환하여야 할 기로에 서게 되었다.

지식재산권의 국제적 보호는 기존의 여러 국제협약에 의해 규율되고 있었다. 그러나 무역과 관련하여서는 1986년 UR출범과 더불어 위조 상품을 포함한 무역관련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논의가 개시되면서 GATT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1995년 WTO출범과 함께 무역관련 지적재산권(TRIPs: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협정이 타결되었다. TRIPs협정은 위조 상표의 교역 등 무역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문제뿐만 아니라 기존의 주요 국제협약을 모두 흡수하여 저작권, 상표권, 지리적표시권, 산업디자인, 특허, 반도체설계, 영업비밀 등 모든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그 보호의 최소기준, 실행절차 및 분쟁해결 절차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설정하는 강력한 협정으로 탄생하였다.

⁴⁸ 기존에 사용하던 용어인 지적재산권을 특허청에서 권장하는 지식재산권으로 대체함. 단, 국제조약의 명칭에서 지적재산권으로 표기된 부분은 기존의 명칭을 변경하지 않고 사용함.



WIPO⁴⁹ 주관하의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협약

협정명	체결연도	가입국수	주요내용
지적재산권보호 관련 조약			
파리협약	1883	160	산업재산권 보호
베른협약	1886	147	저작권 보호
로마협약	1961	67	저작인접권 보호
제네바 협약	1971	63	음반복제 방지
마드리드(원산지관련)협정	1891	32	상품의 출처 허위표시 방지
나이로비조약	1981	40	올림픽 상징물의 상업적 사용 통제
상표 조약	1994	26	상표권의 국제화
브뤼셀 협약	1974	15	위성통신 신호 보호
등록관련 조약			
특허협력조약(위싱턴조약)	1970	109	특허의 국제화를 위한 협력
마드리드협정 및 의정서	1891	67	상표의 국제등록
헤이그 협정	1925	29	의장의 국제기탁
부다페스트 조약	1977	48	특허절차상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
리스본 협정	1958	19	원산지명칭 보호 및 국제적 등록
분류관련 조약			
로카르노 협정	1968	39	의장분류
니스협정	1957	63	상표등록을 위한 국제상품, 서비스분류
스트라스부르 협정(IPC협정)	1971	47	특허의 국제분류
비엔나 협정	1973	17	포장의 도형요소에 대한 국제분류
WIPO 저작권 조약	1996	72	저작권의 배타적 전송, 방송권리
WIPO 저작인접권 조약	1996	68	저작인접권의 배타적 전송, 방송권리
특허법 조약	2000	47	특허출원 절차의 간소화 및 특허비용 절감에 대한 특허법 국제조화

자료: 윤미경(2002), 『지적재산권』; 최낙균 외(2000), 『WTO뉴라운드 규범분야의 논의동향과 한국의 협상전략』,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147.

TRIPs협정의 협상 초기 단계에서 선진국들은 강경한 입장을 취하지 않았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기술집약적 상품의 국제무역이 크게 증가하면서 비기술집약적 상품분야에서 가격경쟁력을 상실한 선진국들이 지식재산권의 세계적 강화를 통하여 자국 상품의 경쟁력 유지를 꾀하기 시작했다. 특히 1980년 미국의 무역적자가 큰 문제로 대두되면서 미국은 위조상품의 교역이 국제무역의 흐름을 왜곡시킨다는 명분하에 지식재산권보호 분야의 제재수단으로 확실한 분쟁해결절차의 필요성을 강요하였다. 세계 최대시장이자

49_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동시에 기술 최강 선진국인 미국은 이미 1980년대 초반 바이-돌법(Bayh-Dole Act) 제정을 계기로 특허에 대한 소극적인 보호에서 적극적인 보호(pro-patent) 정책으로 전환하였다. 그리고 1988년에는 종합무역법 제정을 통해 해외에서 미국의 재산권에 대한 보호에 적극 나서기 시작했다. 즉, 미국은 강력한 기술력에서 기인하는 이득을 전유할 목적으로 각국 간의 지식재산권분야의 통일에 주력하고 있으며 현재에는 지역 또는 양자 자유무역협정을 통하여 TRIPs협정이 요구하는 이상의 강도 높은 지식재산권 보호의 국제적 조율을 도모하고 있다. 유럽 역시 1993년의 공동시장 설립의 일환으로서 각국의 지식재산권제도를 통일화하는 시도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추세에서 지역무역협정에서도 지식재산권분야가 핵심적인 영역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 TRIPs규정과 지역무역협정

TRIPs 규정	지역무역협정
저작권과 인접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른협약 • 로마협약 • 최소 50년의 보호 • 어문저작물로 컴퓨터프로그램 보호 • 데이터베이스 저작권보호 허여 • 음반제작자, 실연자에 대한 인접권리 보호·임대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IPO 저작권조약(1996)(EFTA, EU-멕시코, 미-요르단, FTAA 초안) • WIPO 실연 및 음반조약(1996)(EFTA, EU-멕시코, 미-요르단, FTAA 초안) • 음반제작보호를 위한 제네바협정(1971)(NAFTA, FTAA-초안)
상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리협약 • 강제실시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표등록목적의 재화 및 용역의 국제적 분류에 대한 Nice협정(1979)(EU-모로코, EU-멕시코) • 국제적상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과 의정서(1989)(EU-모로코, 미-요르단) • 유명상표보호조항에 관한 합동제안(1999)(US-요르단, APEC, FTAA-요르단)
지리적 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공정경쟁이나 오도가능한 사용 금지 • 와인과 주류에 대한 높은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와인과 주류 이외의 제품에 대한 높은 보호(EFTA)
산업의장	



TRIPs 규정	지역무역협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소 10년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적인 산업의장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의 제네바법(1999)(EFTA)
특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리협약 • 모든 기술영역에서의 물질(products)과 제법(processes)을 포괄 • 동식물에 허용된 예외를 제외한 생명공학 • 제작, 사용, 판매위탁, 판매 및 수입의 배타적인 권리 • 출원일로부터 최소 20년의 보호 • 제법특허에서 입증책임의 역전 • 특허 또는 효과적인 독자적 제도 또는 양자의 혼합을 통한 식물변종의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허절차를 위한 미생물기탁에 대한 국제적인지에 대한 부다페스트조약(1980)(EU-모로코, EU-멕시코, 미-요르단) • 특허협력조약(1984 개정)(EU-모로코, EU-멕시코, 미-요르단) • 신식물변종보호를 위한 국제협약(1991)(EU-모로코, EU-멕시코, 미-요르단, NAFTA)
집적회로의 배치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적회로의 지적재산에 관한 워싱턴조약(1989) • 침해된 설계를 포함하는 품목으로의 보호 연장 • 최소 10년의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다 구체적(NAFTA)
미공개정보의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침해된 설계를 포함하는 품목으로의 보호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다 구체적(NAFTA)
지적재산권의 남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쟁적인 남용을 통제하기 위한 경쟁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으로 거론(NAFTA)
시행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사 및 형사조치와 국경에서의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으로 거론(NAFTA)

자료: Lippoldt(2003),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Regionalism and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OECD.; 이근(2003), 『지적재산권』; 강문성 외(2003), 『한·중·일 무역규범의 비교분석과 FTA에 대한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208 재인용.

경제적인 측면에서 지식재산권보호제도는 두 가지 목적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체계를 제공하고 있다. 첫째, 특허 및 저작권법은 개발자에게 특정의 배타적(독점적)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지식창조활동을 장려하고 새로운 기술발전과 새로운 지식발견에 자원의 효과적인 활용을 촉진하는 동시에 기술이나 아이디어의 공개를 통하여 지식확산을 장려한다. 즉, 궁극적으로 경제발전을 위한 지식기반 구조를 확충하고 제고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둘째, 상표와 지리적 표시와 같은 상품 및 서비스의 표시를 통하여 상행위(business)가 공공의 신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경쟁을 촉진하는 것이다.

국제무역과 관련된 불충분하고 부적절한 지식재산권보호는 국제무역에 상당한 왜곡을 초래할 것이다. 각국의 지식재산권보호제도가 외국의 이익을 차별하거나 또는 국제적·일반적으로 합의된 원칙과 절차에서 크게 벗어나는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지식재산권에 대한 부적절한 보호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상품의 제조와 유통을 초래하게 된다. 그리고 이는 새로운 상품의 개발 유인과 그러한 활동에 자원배분을 위축시키는 등 지식재산보유자의 권리의 획득과 강화에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자유무역과 정상적인 경제 활동에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편, 지식재산권은 새로운 기술과 지식의 독점적 이용을 어느 정도 허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3자에 의한 활용과 경쟁을 억제하며 따라서 선진국들에 의해 창출된 지식재산을 활용해오던 개발도상국들로부터 선진국으로의 국제적인 소득재분배가 예상된다는 측면에서 개발도상국들은 자신들이 새로운 지식재산권제도의 부담을 지게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상충되는 이해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지식재산권보호제도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제도화되어야 할 것이다.

2011.11.14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는 「혁신의 변화하는 측면(The Changing Face of Innovation)」보고서를 발표하여 지식재산권 소유가 전 세계 혁신기업의 전략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타내었다. 1980년대 초, 80만 건의 출원에서 2009년에는 180만 건으로 출원이 증가된 사실에서 보듯이 특허에 대한 전 세계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혁신에 대한 투자증가 및 경제 활동의 글로벌화가 이러한 증가의 주요 원동력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지식재산정책이 혁신정책의 선봉장에 서게 되었다. WIPO의 프란시스 거리(Francis Gurry) 사무총장은 혁신 성장이 단순히 고소득 국가만의 전유물이 아니고, 부유국과 빈국 간의 기술차이가 점차 좁아지고 있으며, 지역적 특성의 혁신은 전 세계적 기술혁신과 동등하게 경제 및 사회발전



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식재산권 기반의 지식시장이 증가되고 있고, 기업들은 이전보다 더 빈번히 지식재산권을 교류하고 라이선스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로열티 수입이 1970년 28억 달러에서 1990년 270억 달러, 2009년 1,800억 달러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전 세계 GDP 성장세를 추월한다. 지식시장의 등장으로 기업들의 전문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기업들은 혁신과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

복잡한 기술에 대한 특허 증가는 곧 기술 변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지난 수십 년간 빠른 발전을 보인 정보통신기술과 전기통신, 소프트웨어, 시청각기술, 광학,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와 같은 복잡한 기술산업에서는 기업들이 대형 특허포트폴리오를 전략적으로 수립하고 있다. 그 결과 특허권 중복으로 인해 누적 혁신 프로세스가 둔화되는 우려가 존재한다. 특허들과 같은 협력적 접근법은 어느 정도 위와 같은 우려사항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복잡한 특허환경이 혁신과 기업가정신을 저해하지 않도록 정책 입안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특허청은 성공적인 혁신 시스템의 초석이 되고 있으며 등록 특허의 품질을 보장하고 균형 잡힌 분쟁조정을 제공하는 등 본질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허의 유례없는 증가로 대다수의 특허청에서 특허 심사적체현상이 증가하고 있다. 2010년 전 세계적으로 미심사 특허출원은 5,107,000건으로 조사된다. 특허청이 내리는 결정은 혁신 인센티브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많은 국가들은 혁신을 위해 공공연구를 활용하는 정책을 갖추고 있으며, 이들 정책은 대학과 공공연구기관 특허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이런 발명품들이 상품화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공공연구기관 및 대학의 특허출원 건수가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특허협력조약(PCT)에 따른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의 출원신청 건수는 1980년대 거의 0에 가까운 수치에서 2010년 15,000건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프랑스, 독일, 일본, 영국, 미국과 같은 고소득 국가들이 대부분 이러한 성장을 이끌어 왔고, 많은 중소득 국가

들 역시 뛰어난 성장세를 기록하였다. 대학 특허출원에 있어 중국은 1980년에서 2010년까지 2,348건의 PCT 출원을 기록하여 선두를 차지하였으며, 그 뒤를 브라질,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차지하고 있다. 공공연구기관에서는 중국과 인도가 중소득 국가 전체 출원건수의 78%를 차지하였다. 특허 기반의 대학 기술이전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개혁들은 연구기관, 기업, 과학 시스템 및 경제에 다면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고소득 국가들이 여전히 전 세계 R&D 지출 부문을 선도하고 있지만 혁신의 지형에서는 변동이 발생한다. 전 세계 R&D 지출액은 1993년부터 2009년까지 실질 지출액기준으로 거의 2배가량 증가하였다. 대부분의 R&D 지출은 여전히 고소득 국가에서 이루어졌으며 70%를 차지한다. 고소득 국가들은 R&D에 있어 국내총생산의 약 2.5%를 지출하였으며 이는 중소득 국가보다 2배 더 많이 지출한다. 1993년부터 2009년까지 전 세계 R&D 지출에서 저소득과 중소득 국가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13% 증가하였다. 13% 증가 중 10% 이상을 중국이 차지하고 있으며, 2009년 중국은 전 세계 R&D 지출에서 2위를 차지하였다.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 관련 자료는 소수의 고소득 국가에서만 이용 가능하다. 데이터에 따르면, 무형자산 투자는 빠르게 성장하였으며 기업들은 이제 유형자산보다 무형자산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스웨덴 및 영국 등 유럽에서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는 국내총생산의 9.1%에 달하고 있다.

국제 공동저자들의 동료 평가 과학 및 공학 논문(peer-reviewed science and engineering articles)이 증가하고 있고, 또한 1개국 이상의 발명가들로 구성된 특허가 증가하면서 혁신이 점차적으로 국제화되고 있다. 또한 글로벌기업들은 더욱 자신들의 R&D 시설을 다양한 국가로 이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특정 중소득 국가들은 빠른 경제성장을 보이고 있다. 혁신은 점차 협력적이고 개방된 성격을 띠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새로운 접근법에 대한 실질 규모 및 중요성을 평가하는 것은 아직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혁신 과정에서의 협력은 기업과 사회 모두에게 이득을 가져다주고 있다. 공동 지식재산 형성은 특히 계약적 파트너십



및 자본 기반의 공동벤처와 같은 연구개발 동맹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동맹에 대한 데이터는 제한되어 있고 해석하기 어려우나 정보통신기술, 바이오기술, 화학기술 기업들이 점점 더 많이 동맹을 하고 있다. 이러한 협력은 혁신과정에서의 효율성 및 효과를 강화시킴으로써 사회에 이득을 가져온다.

현황분석

개도국에서의 지재권 분야 통상장벽은 주로 지재권 관련 법제도가 미비하거나 법적 집행능력의 부재를 들 수 있으며 특히 불법복제 시에도 이를 처벌할 관련 규정이 미비하거나 엄격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지재권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개도국에서도 지재권 관련 법안이 마련되는 등 이전보다 상황이 개선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

2011.11.15일 방글라데시 등 최빈국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WTO 협정준수를 위한 기한 연장을 TRIPs 위원회의 비공식 협의에서 제안하였다. 제안서는 TRIPs 위원회가 기한 연장과 관련하여 우호적인 결정을 내리도록 촉구하고 있는데, 최빈국 회원들의 국내 법체계가 TRIPs협정을 준수할 경우 심각한 경제적·재정적·행정적 제한 요소에 직면하게 된다고 밝히고 있다. 최빈국은 TRIPs에 따른 의무를 2005년까지 준수해야 했으나, 2013년 상반기 TRIPs 이사회를 거쳐 2021.7.1일까지 연장되었다. TRIPs와 공중보건에 대한 2001 도하 선언에 의해 의약품의 경우는 2016년까지 연장되었다. TRIPs협정 가입 의무 대상이 아닌 국가들의 경우 무역협상, 논의, 기술 원조 및 전문가, 선진국, 지역 및 국제기구의 지침서와 같이 다른 수단을 통해 자국의 지식재산법을 개정하고 있다. 최빈국은 전 세계 지식재산권에서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시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대다수의 지식재산권자들은 최빈국에서 지식재산권을 등록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2012.10.1일부터 9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50차 WIPO 총회(General Assembly)가 개최되었다. 총회에 참석한 주요국 정상과 WIPO 프란시스 거리 사무총장은 향후 특허분쟁과 지식재산 격차 해소를 WIPO의 주요 의

제로 논의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최근 특허분쟁은 전 세계에서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은 기업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따라서 특허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공동으로 대처해야 하며, 특히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에 있어 중재조정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WIPO가 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국제 특허분쟁 해결에 소요되는 비용 감소를 위해 국제적 공조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아울러 세계 지식재산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개도국의 지식재산 격차 해소를 위한 WIPO와 선진국의 노력도 촉구되었다. 지식재산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WIPO 및 선진국은 지식재산권으로 인한 혜택을 개도국들도 누릴 수 있다는 인식 확산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동의하였다. 더불어 유전자원(genetic resources), 전통지식(traditional knowledge), 민간전승물(traditional cultural expressions/expressions of folklore) 관련 지식재산권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협상과 디자인 등록 절차 관소화를 위한 디자인법조약도 논의할 것에 합의하였다.

2013.9.23일부터 10.2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51차 WIPO 총회가 개최되어 2013년 가장 눈에 띄는 성과로 지재산 관련 조약의 눈부신 성장과 활용을 들었다. 하나의 국제 출원으로 조약 참가국 모두에게 출원한 것과 같도록 출원 절차를 통일화 한 특허협력조약(PCT)이 대표적인 조약으로 WIPO가 국제특허출원에 대한 사무총괄을 담당하고 있다. 더불어 시각장애자의 출판물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다자간 조약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것도 큰 성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대다수의 개도국들은 유전자원, 전통지식, 민간전승물 관련 이슈가 긴급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주의 깊은 접근이 필요하며 심도 있는 협상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디자인 보호를 위한 조약과 전통지식 및 민간전승물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조약 마련을 위한 방향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과테말라는 2000.9월 불법위조 및 복제상품을 실질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산업재산권보호법을 제정하여 지재산 보호분야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 저작권은 대리인을 통한 등록도 가능하며 저작권자 사후 75년까지 보호



된다. 그리고 등록된 상표권은 10년간 보호를 받으며 중남미 국가 중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및 코스타리카의 어느 나라에서 등록 하여도 역내에서는 동일한 등록혜택을 받도록 협정이 체결되어 있다. 또한, 특허권 보호기간은 식품, 음료, 의약 및 농화학제품에 대해서는 10년, 기타에 대해서는 15년이다. 그러나 위조 상품 및 불법 소프트웨어 제작 등이 지속됨에 따라 미국은 DR-CAFTA 기준에 부합하도록 지식재산권 보호의 강화를 요구하였고 이에 과테말라 국회는 2005년 기존 산업재산권법의 개정 법안 및 2000년 지식재산권 법의 수정 법안을 통과시켰다.

2000년 WTO에 가입한 **도미니카공**의 경우 상표 및 상호법(법률 1450), 발명특허법(법률 4994), 외국인 투자법(법률 16)등으로 산업재산권이, 법률 4994호에 의해 발명특허권이, 상표 및 상호명 등록에 관한 법률 1450호에 의해 상표 등이, 저작권보호에 관한 법률 32-86호에 의해 저작권이 보호되고 있다. 또한, DR-CAFTA 협정을 통하여 저작권의 보호기간은 50년에서 70년으로 확대되었고 무단 전송 및 복제 해적행위를 규제키로 하였다. 도미니카공화국 내에서 5년 이상 사용하지 않거나 3년 연속 사용이 중단된 경우와 특허권자가 발명품과 유사한 제품을 해외에서 수입한 경우는 특허권이 상실된다. 외국에서 특허권을 가진 외국인이 도미니카공화국 내에서 발명 특허권을 신청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은 해외에서의 보호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인식이 낮고 단속이 철저하지 않아 전반적으로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가 낮은 상황이다.

멕시코는 미국과의 FTA를 통하여 지재권이 강화되었다. 그러나 지식재산권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낮고 단속도 철저하지 않아 불법복제 및 복사물품의 시장유통이 많은 편이다.

브라질은 특허와 상표권을 포괄하는 산업재산권보호법이 1997년에 발효되었고 1998년에 법률 9610호 및 소프트웨어법이 공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저작권조약을 맺고 있지 않으며 저작권보호도 낮은 수준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2009년과 2012년 사이에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시행할 23개 프로젝트를 2009.5월에 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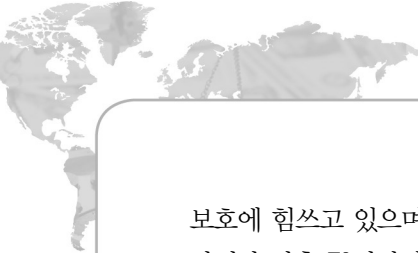
표한 바 있으며 특허청인 INPI(National Institute of Industrial Property)는 심사관 수를 증원하고 전산화도 추진하여 연간 특허등록 건수를 늘리는 등 최근 지식재산권 보호 노력은 강화되고 있다. 브라질 특허청이 세계지적재산권기구와의 계약을 통해 신규 특허시스템을 도입한 결과, 주별로 3년~5년, 대법원의 경우 8년까지 소요되던 특허분쟁을 120일 내에 해결 가능토록 하는 장치를 마련한바, 특허등록 기간이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르헨티나의 경우 저작권 및 특허권 보호가 미흡한 실정이며 특히 특허권 및 제조공정권에 대한 보호관련 법적 보호가 미약하다. 저작권의 경우는 1999년에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저작권 협약과 WIPO 공연 및 음반 협약을 비준함으로써 적절한 수준의 관련 법규를 구비하였으나 집행이 미약한 실정이다.

우루과이는 베른협약 및 파리협약에 가입되어 있어 회원국의 지식재산권 및 산업재산권 소유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있다. 개인 저작권은 생존기간은 물론 사후 40년까지 보장되며, 법인이 취득한 저작권은 40년 동안 유효하다. 상표의 경우에는 산업에너지광물부 산하 국립특허국(Direccion Nacional de la Propiedad Industrial)의 허가를 받아 10년까지 독점적인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으며, 10년 단위로 무제한 재등록할 수 있다.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인 파리 협약에 가입해 있다. 우루과이 국립특허국으로부터 취득한 산업 특허는 20년간 독점적 권리를 부여받으며, 이후 공공 소유로 전환된다. 사용 모델에 한한 소규모 혁신 및 상품에 적용할 경우 외형을 변경시키는 산업 디자인은 10년간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며, 1회에 한해 5년간 연장이 가능하다.

칠레는 2010.5월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법률 제20435호를 제정하고 지재권 침해에 대해 강력히 단속하였음에도 2007년 이후 미국 정부가 지정한 지식재산권 우선감시대상국가(Priority Watch List)로 분류되고 있다.

코스타리카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및 파리협약, 베른협약, WIPO 저작권조약(WCT) 및 WIPO 실연·음반조약(WPPT)에 가입해 지식재산권



보호에 힘쓰고 있으며 등록된 지식재산권은 일반 선진국들과 동일하게 저작권자 사후 70년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저작권 보호 대상에는 문학, 과학, 법률, 음악, 건축 작품뿐만 아니라 컴퓨터프로그램 등도 포함되고 있다. 하지만 컴퓨터소프트웨어의 경우, 불법 복사 사용률이 2010년 50%로 집계되어 실질적인 단속이 어려운 상황이다. CAFTA 협상에 있어 미국은 지식재산권 보호강화기준을 코스타리카에 제시했으며 이에 코스타리카는 지식재산권 위반 시 최대 형량을 5년, 과태료를 기본임금의 500배로 인상했다(법령 제8039호). 코스타리카 의회는 2012.6월 법령 제8039호의 개혁을 기반으로 하는 교육권한법(Expendiente 제17.342번)을 통과시켰지만 친치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교육계를 중심으로 학습권 침해를 둘러싸고 현재 논란이 거센 상황이다. 특허와 관련하여 1998년 특허협력조약(PTCT)에 가입하였으며, 상표는 10년간 등록될 수 있으며 무한정 10년씩 연장될 수 있으나, 등록 후 최소 3년 이내 등록된 상표를 실제로 사용했다는 증빙을 경제부에 제출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등록 자체를 재검토하게 된다. 또한, 특별히 비디오 및 오디오, 책 및 기타 지적 또는 예술적인 재산 및 제품, 소프트웨어프로그램 소유자 또는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코스타리카 국립등록원에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한다.

콜롬비아는 국내법 및 WTO 규범, 양자협정 등을 통해 지식재산권보호에 노력하고 있다. 영업비밀(trade secrets)과 변종식물에 대한 보호제도를 강화함으로써 WTO TRIPs 체제에 근접하고 있으며, 베른 협정과 UCC(Universal Copyrights Convention)협정에 가입하고 있다. 2001년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현대적 체계를 갖추었고, 저작권자는 생존기간 및 사후 80년의 보호기간을 향유할 수 있다.

페루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저작권조약(WCT), 실연·음반조약(WPPT) 등의 회원국이나 연간 3000만 개의 공 CD를 대만(68%), 중국(7.9%)에서 수입하는 등 불법복제 문제가 심각하다. 2006.4월 미국과의 FTA를 체결함에 따라, 저작권, 상표 및 특허의 효과적 보호와 함께 불법 복제 및 위조에 대한 법집행 강화를 추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파나마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제네바음반보호협약, 브뤼셀위성관련 협약, 국제만국저작권협약, 베른저작권협약, 공업소유권 보호를 위한 파리 협약, 식물다양성국제협약에 가입하고 있다. 파나마의 지식재산권 보호는 최근 몇 년간에 걸쳐 크게 개선되었으나 아직까지 지식재산권 보호가 완전하지 못한 상황이지만 2012년 미국과의 FTA 발효·이행을 위한 국내법 제·개정 과정에서 크게 확대 및 강화되었다. 저작권 등 보호되는 지재권의 범위를 확대하고, 법집행당국(통상산업부)의 처벌 및 단속권한을 크게 강화하였으며, 지재권 침해 시 부과되는 벌금도 인상하였다.

벨라루스의 관세동맹 회원국 세관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식재산권 보호대상 품목을 규정하는 단일관세목록을 구비하고 있으며 통관절차 진행 중 지식재산권 보호대상 품목에 대한 권리침해의 징후가 발견되는 경우, 해당 상품을 통관시키지 않고 최장 10일간 위반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또한, 관세동맹 세관은 관세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지식재산권 관련 상품의 반출을 중단시킬 수 있다.

세르비아는 지식권리청이 지적재산권 이슈를 담당하고 있으며, 특허, 의장, 상표, 지리적 원산지 표시, 집적회로 배치, 저작권 및 관련 권리 등의 지식재산권은 규제되고 보호된다. 관세법에 의해, 관세청은 지식재산권 소유자의 요청 또는 직권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물품의 통관 절차를 중지시킬 수 있다. 세르비아의 지식재산권 관련법은 EU법과 합치되도록 개정되고 있으나, 2009년 집적회로 배치 보호법은 추가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아제르바이잔은 1996~1997년도에 대대적인 지식재산권 등록 및 보호 법규를 정비하고 실행하였고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유라시안 특허청(EAPO:Eurasian Patent Office) 등의 국제회의에 가입을 통해 2005년까지 미국 국무성의 수퍼 301조 Watch-list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2006년 이후 동 리스트에서 삭제되었다. 그러나 아직 현실적인 지식재산권 보호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허, 상표, 산업디자인은 한국과 같이 선출원주의(first-to-file)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불법제작 DVD, CD 등이 시중에 대량으로 유통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표권 침해 사례 등이 발생하



기도 한다.

우즈베키스탄은 2005.4월 베른협약 가입국이 되었으나 지재권 침해 사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될 전망이나 실제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전에는 저작권법에 소프트웨어 저작권법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나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 생산업체를 중심으로 새로운 저작권법안 제정을 추진하여 2006.6월 입법화되었다.

우크라이나는 비교적 잘 정비된 지재권 보호에 관한 법규와 제도를 갖추고 있으며 국제재산권보호협약과 특허협력협약 등 각종 국제 협약에 가입하였으나 선진국들로부터 특허법원 설치를 권유받고 있다.

카자흐스탄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제위원회의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산업재산권협약 국제선언(1993.2.5), WIPO(1967), 산업재산권 보호 파리협약(1967), 상표권 보호 마드리드협약(1967), 특허협약 등에 가입하여 국제적인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09년 개정된 print 및 digital media 관련 지식재산권법 및 특허권을 비롯해 상표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법률들이 존재하나 지식재산권의 개념자체가 새롭고 강행규정, 형사적 처벌규정 또한 미흡하여 보호조치의 실행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말레이시아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회원국이며 파리협약, 베른협약, TRIPs에 가입되어 있으며 특허권, 등록상표, 의장, 저작권, 집적회로 설계, 지리적표시 등의 보호를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2007년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을 다루는 지식재산권 법원(Intellectual Property Courts)을 21개 설립하였으며, 2012.3월 발효된 저작권 개정법에서는 저작권 위반물의 유통 배포와 관련하여 ISP(Internet Service Provider)의 면책요건 규정, 영화 상영 중 캠코딩 행위에 대한 금지 및 처벌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등록부(Register of Copyright) 및 자발적 등록제도(voluntary notification of copyright)를 도입하는 등 지재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3년 등록상표 관련 국제상표출원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Madrid Protocol에 가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몽골은 지식재산권법이 있어 동일한 회사이름이나 상표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미얀마는 WTO/TRIPs에 가입되어 있기는 하지만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미얀마를 포함한 최빈국의 경우 당초보다 7년 6개월 연장된 2013.7월부터 적용하도록 유예하였는바, 미얀마 정부가 관련제도를 정비하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얀마에서 지식재산권은 거의 보호되고 있지 않으며 모든 지식재산권 관련 복제품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고 단속활동 또한 거의 없다. 미얀마는 특허 및 상표에 관한 법률이 있으나 관련 전담 정부조직이 없어 미얀마 농업관계부 산하의 정착 및 토지 기록부서의 특허 및 상표권 등록사무소에서 등록을 하는 등 지식재산보호 제도가 열악하다.

방글라데시의 경우 지재권 법이 잘 정비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어 2007년 일일 4~5만 장의 불법 CD/DVD가 복제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베트남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회원국이며 파리협약과 마드리드협정, 베른조약의 가입국이다. 2006.7월부터 지식재산권 보호법을 발효시키는 등 저작권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가 상당한 진보를 이루었다. 그러나 불법복제 등 지식재산권 보호를 집행하는 부분은 여전히 취약하다. 관련 집행기관과 문제제기에 대한 권한부여가 이루어졌으나 이들 간의 업무상 범위와 역할이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아 책임 있는 단속활동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 문제다. 또한 지식재산권 관련 세부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법원 자체가 지식재산권 소송에 관한 절차, 지식, 경험이 모두 부족한 실정이어서 소송을 통한 제재조치가 여전히 제한적이다. 그럼에도 행정집행 명령은 초기 대처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꼽히고 있다.

인도는 TRIPs에 따라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의 지재권 보호를 위한 법규는 강력하지만 실제로 지재권 침해율이 높고 보호 메커니즘이 허술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특히 소프트웨어, 의약품, 화공제품 분야에서 선진국 기업들의 불만이 높다.



인도네시아는 특허권(14년), 상표권(10년), 저작권(50년), 산업디자인특허(10년) 등이 관련법령에 의해 일정기간 보호되고 있으나 위반 시 벌칙조항이 유명무실하여 지적 소유권 침해 사례가 빈번히 발견되고 있다.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연합(BSA)와 경찰청이 협력해서 지속적인 단속을 벌임으로써 2005년에 87%에 달했던 사업장의 불법 소프트웨어 비율이 2007년까지 84%로(세계 불법복제순위 12위) 떨어졌으나 현재까지도 인지도 있는 쇼핑몰 구석구석에 불법 CD나 DVD를 파는 잡상인들이 넘쳐나고 있고, PS3나 Wii 등 오락기용 게임CD의 불법복제품 판매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이에 미국은 인도네시아를 미 통상법 제301조(지식재산권침해)상의 우선감시 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인도네시아 정부의 강력한 대책을 촉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 인도네시아 법무인권부의 지식재산권국은 지식재산권보호를 담당하는 팀을 2005년 하반기부터 격상시키는 등 표면적인 감시감독 시스템을 강화해 왔으나 실질적인 억제효과는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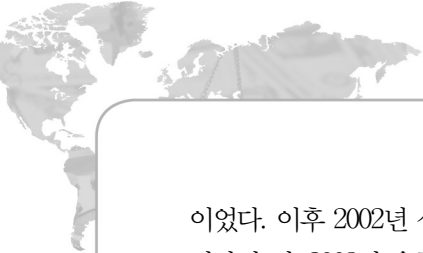
중국은 WTO 가입 이후, 선진국의 문제제기로 인하여 지식재산권 보호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로 인해 2006.3월 ‘국가지식재산권 보호작업반’ 주도하에 상무부 등 11개 부처 합동으로 상표, 특허, 저작권, 수출입 등 4개 분야에 대한 9대 행동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2006.7월에는 지재권 침해 제보전화와 인터넷 고발시스템을 개통하였으며 2007.4월에는 10개 분야⁵⁰에 대한 274개 구제조치를 발표하였다. 또한, 2008년에는 국가지식재산권 전략요강을 수립, 공표하였으며, 2011.10월에는 중국 국가지식재산권, 국가공상행정관리국, 상무부 등 10개 부처 및 위원회가 ‘국가 지식재산권 사업 발전 12차 5개년 계획’을 발표하였는바, 중국 지식재산권 사업의 국제영향을 제고시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EU, 일본 등의 선진국들은 지재권 침해 형사기소 요건의 추가완화, 영업비밀의 보호강화, 소프트웨어 사용금지 등 아직 개선해야 할 사항이 많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AmCham, EuroCham, JETRO 등은 기업 실태조사 및 對정부 정책

50_ 입법, 법률집행, 재판, 지재권보호 메커니즘 구축, 홍보, 교육, 국제협력, 기업 지재권보호, 지재권 소유자에 대한 각종 서비스제공, 연구강화 등임.

건의 채널을 활성화하고 있으며, 정부차원에서도 양자회담에서 지식재산권 보호를 주요 해결과제로 요구하고, 중국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정부와도 문제해결을 위한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한편, 한·중 양국간 교역증대, 우리나라 상품에 대한 지명도 제고 등에 따라 중국기업에 의한 우리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침해문제와 기술유출은 우리기업의 중요한 투자 장애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기업의 지재권 침해 방지를 위하여 2011.10월에는 특허청과 중국인민대학교간 지재권 관련 국제 관학 협력 MOU를 체결한 바 있으며, 2012.5월에도 특허청과 중국 지방정부인 강소성과 지재권 협력 MOU를 체결하는 등 학계 및 지방정부와의 협력채널을 다양화해 나가고 있다. 2013.1월 “2013년도 중국 특허사업 발전전략”을 통해 특허·상표 등의 심사기간 단축과 심사적체 해소를 지재권 정책의 최상위 목표로 설정하고, 지재권 분야에 대한 관리감독을 엄격히 실시하는 등 집행조치도 지속 강화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으나 지재권 침해사건에 있어 외국인과 관련된 사건의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주목도 높아지고 있다. 2013년은 한중수교 20주년을 지나 FTA 체결 등 복합적인 요소가 작용하여 상호투자과 교역액이 더욱 증가할 것이기에 한중 기업 간의 지재권 문제도 더욱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정부와 기업 모두 중국의 지재권 관련 최근 정책동향 및 판례, 지역별 특성 등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토대로 종전과는 판이하게 전개될 지재권 환경변화에 대처해야 할 것이다.

파키스탄은 시장에 만연한 해적판으로 인해 국내산업(특히 IT산업)의 발전이 저해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지난 수년간 특허, 저작권, 상표 등과 관련한 국내법규를 마련하였으나 오래된 관행으로 인해 아직까지 지식재산권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2009년 이후 미국무역대표부가 매년 발표하고 있는 special 301조 보고서의 우선감시대상국에 포함되어 있는 등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대외적인 평가도 낮다.

캄보디아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1995) 회원국이며 파리협약(1998) 가입국이나 전반적으로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법 규정이 매우 취약한 실정



이었다. 이후 2002년 상표법, 2003년 저작권법과 특허법, 실용신안 및 산업 디자인 법, 2008년 육종관리 및 식물품종보호법 등이 제정됨에 따라 제도가 강화되고 있다. 상표에 대한 배타적 권리는 등록에 의해 취득되며 상표등록을 함에 있어 등록신청자가 파리협정 가입국내에서 본인의 이름으로 발행된 출원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허는 출원일로부터 20년간 유효하다. 또한, 향후 사업비밀 및 비공개정보 보호법, 집적회로 설계 보호법, 지리표기 보호법 등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어 지재권 보호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정부활동의 미흡하고 실질적인 처벌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 유통 중인 지재권 관련제품 대부분이 불법 복제되고 있는 실정이다.

태국의 지식재산권은 특허법, 상표법, 저작권법, 반도체 직접회로 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받고 있다. 그리고 WTO TRIPs의 의무충족을 위해 1999년에 특허법을 개정하였고 여타의 노력을 통해 2008.8월에는 파리협약에도 가입하였다. 또한, 1997.12월에 ‘지식재산권 및 국제무역 법원’이 개설되었고, 2000년에는 상표법을 개정하였으며, 2005부터 매년 단속 공무원에 대한 보상과 소매업자간 MOU를 체결하는 등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대외 이미지 개선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적으로는 정비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가 많다. 불법복제 사용 비율이 80%를 넘어서고 있으며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대중의 범죄의식이 희박하여 불법복제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단속은 이루어지나 미흡하며 처벌도 가볍다.

필리핀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내법 개정 및 단속이 미비하고 사법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미국은 2006년 필리핀을 우선 감시대상국으로 지정하였다. 지식재산권 소유자가 지식재산권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에 조사 및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위반자에 대한 처벌은 미약하다. 특히, 인터넷 환경이 개선됨에 따라 불법복제 소프트웨어의 사용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필리핀 정부는 이에 대한 대처가 미비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가나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아프리카지역산업재산권기구(ARIPO)의 회원국이다.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산업재산권 등록업무는 등록청(Registrar General)에서, 저작권은 저작권청(Copyright Office)에서 담당하고 있다.

나이지리아는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각종 국제기구 및 조약에 가입하고 있고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제도는 외형상으로 잘 갖추어져 있으나 이를 실행할 행정역량이 부족하여 실질적으로는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불법행위가 만연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나이지리아 방송법은 국내 방송사가 외국 방송사와 제휴 관계를 맺지 않아도 외국 프로그램을 방송할 수 있으며, 나이지리아 방송강령(Nigerian Broadcasting Code)은 나이지리아 정부 정책에 반하지 않는다면 외국 프로그램을 방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레바논은 지식재산권 침해가 빈번하고 빈약한 시설과 근무인력으로 인해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를 찾아내거나 시정할 능력이 뒤떨어지는 실정이다. 더욱이 법적인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판결에 이르기까지는 수년이 걸려 실효를 거두기 어려우며, 법의 적용이 엄격하지 않아 앞으로도 침해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2012년 미국의 국제지식재산권 연맹(IIPA: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Alliance)은 레바논 정부가 계속적으로 국제저작권법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레바논을 「301 감시 대상국명단」 계속 남겨둘 것을 권고했다. 또한 레바논 정부가 온라인을 비롯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법적제도 장치 마련과 해적판매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시행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세네갈은 프랑스를 모델로 한 지식재산권 보호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및 아프리카지역지식재산권기구(OAPI) 회원국이자 베른협약 당사국이고 2008년 TRIPs와의 조화를 위해 국내입법을 마련함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불법복제물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알제리에서는 산업발명(industrial inventions), 산업설계, 디자인과 상호(trademarks and service marks or appellations of origin) 및 문학작품, 컴퓨터 프로그램, 영화, 음반 등의 문학·예술적 재산권이 보호된다.



앙골라는 최빈국으로서 2013년까지 TRIPs협정의 완전 이행에 대한 시한 연장권을 가지고 있으며, 의약품 특허 적용에 대해서는 2016년까지 추가 연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아프리카지역지식재산권기구(ARIPO)에서 옵서버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파리산업지식재산권보호협정과 특허협력조약에 서명했으나 아직 비준하지는 않았다. 지식재산권은 ‘산업재산권법’(3/93)에 의해, 저작권은 “저작자 권리에 관한 법(Law No.4/90 of March 10, 1990 on Author’s Right)”에 의해 보호된다.

예멘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회원국으로 현재 지식재산권 관련 국내 규정을 WIPO 지침에 따라 보완, 정비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나 법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처벌규정이 미약해 지재권 침해 사례가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

우간다는 현재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조약에는 비준하지 않고 있으나 2006년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법 규정의 강력한 집행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법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법률에도 불구하고 단속 및 집행과 관련해 여전히 격차가 크다.

이집트는 특허, 상표, 저작권관련 국제협약(TRIPs)에 가입해 있는 상태이나, 국내 법규 및 규정이 미비하고 법원의 최종판결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등 실제적인 보호 정도는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미국은 이집트를 지식재산권 우선 감시 대상국(Watch list)으로 지정하면서 지식재산권 준수를 요구하고 있지만 보호장치가 미흡하고 적절한 피해구제장치가 없어 아직까지 보호수준은 매우 열악한 편이다.

모로코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회원국으로 자국 법규를 국제의무에 부합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과 지식재산권 위반 시 처벌 규정 강화 등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현재 관련업무는 모로코 특허청(OMPI: L’Office Marocain de la Propriete Industrielle)에서 주관하고 있다. 특허의 경우 개인 혹은 법인체는 독일 뮌헨에 있는 유럽 특허청 및 모로코 내의 모로코 특허청(ONPI)에 특허 신청을 낼 수 있다. 단일종류의 유럽식 특허는 20년 동안 유효하다. 그러나 비교적 잘 정비된 지재권

보호 법령에도 불구하고 당국의 지재권 위반 단속 및 법집행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모로코 특허청은 특허권에 대한 자료, 상표권에 관한 국가 색인표, 상표권 및 의장등록에 관한 등록 장부, 재산권에 관한 연례 통계, 특허권에 관한 분기별 통계, 연구자료, CD-ROM에 수록된 외국특허(ACCESS, WORLD), CD-ROM에 수록된 국제적 상표(ROMARIN) 자료를 비치하는 노력과 더불어 법률 개정을 통해 모방제품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였다.

케냐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회원국으로 2001년도에 제정된 지식재산권보호 관련법은 상표권, 특허권, 실용신안, 산업디자인, 합리화모델, 저작권, 식물육종가권 등 7가지 지식재산권을 인정하고 있다. 각종 지식재산권은 기술연구훈련성(Ministry of Research, Technical Training and Technology) 산하 케냐산업재산권 사무소(Kenya Industrial Property Office)가 관리하고 있으며, 케냐 경찰국 산하 범죄수사국(Criminal Investigation Department)과 관세청에서도 상기 지재권 위반에 대한 법적 제재의 처벌 권한을 수행하고 있다.

개도국의 이와 같은 지식재산보호제도 강화에도 불구하고 **남아공, 니카라과, 라오스, 러시아, 르완다, 볼리비아, 스리랑카, 에콰도르, 에티오피아,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요르단, 적도 기니, 카메룬, 코트디부아르, 터키, 튀니지, 파라과이, 파키스탄** 등에서는 아직도 불법복제물의 유통 등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지식재산권 제도가 보다 잘 정비되어 있는 중진국의 경우에도 외국인 지식재산권에 대하여는 보호가 미흡한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미용용품을 **대만**에 수출하는 한국의 중소기업이 모방상품을 판매하는 대만인 19명을 2004.12월 대만 지검에 고발하였으나 다수의 혐의자 조사에 시간이 걸린다는 등의 사유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임에 따라 동 한국 기업이 피해를 본 바 있다. 또한, 대만에서는 특허 강제 라이선스 사용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 기업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베네수엘라는 제반법령은 잘 정비되어 있는 편이나 국민들의 지식재산권 침해 인식이 매우 희박하고, 규제나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2007년 중 지식재산권 관련 규정 개선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아 2008년도에도 미국으로부터 우선감시대상국으로 계속 지정되었다.

브루나이의 경우 저작권, 상표, 특허권 등이 법령에 의해 보호되고 있으나 단속의 소홀로 인해 저작권의 보호는 약한 상황이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최근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표법, 특허법, 저작권법등 관계법령을 제정, 시행하는 등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0.2월 미국 통상대표부(USTR)는 사우디의 지식재산권 보호노력을 감안하여 미국의 수표 301조에 의한 지식재산권 관찰대상국에서 제외하였다. 그러나 국제지적재산권연맹(IIPA)은 2012.2월 높은 저작권 침해율, 정부의 복제 소프트웨어 사용, 낮은 제재율 등을 이유로 사우디를 관찰대상국에 재등재하기 USTR에 권고했으나 2012.10월 현재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오만은 2008년 지재권 보호 강화를 위해 상표권법, 특허법, 산업디자인법 등을 산업재산권법(Royal Decree 67/2008: Industrial Property Right Law)으로 통합하였으며 저작권법(Royal Decree 65/2008)을 개정하는 등 비교적 정부차원의 노력이 잘 이행되고 있다.

쿠웨이트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가입국으로서 지재권 보호 강화를 위해 2004.4월 세관에 지재권보호과를 신설하였으며 2004년 저작권법안(copyright law)과 지재권 위반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한 개정안을 의회에 상정하였으나 아직 통과되지 않고 있다. 현재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은 대부분 10년 단위로 등록되고 있다.

크로아티아는 EU 가입을 위해 지식재산권 법률을 EU 법률과 부합하도록 개정해 왔다. 현재 특허권(20년), 상표권(10년), 산업디자인권(5년), 저작권(사후 70년), 반도체 제작기술(10년) 등이 보호된다.

선진국인 **미국**의 경우 선발명주의(first-to-invent system) 및 선사용주의

(first-to-use system)를 채택하고 있어 다른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선출원주의(first-to-file system)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미국 특허법은 2011.9.16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전면 개정되어 선출원주의로 전환, 제3자가 출원에 관한 선행기술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범위 확대, 등록 후 심판제도(Post Grant/Inter Parties Review)를 도입하는 등의 큰 변화가 있게 되었다. 특히 근본적인 변화인 선출원주의는 2013.3월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우선심사제도(Prioritized Examination)의 도입, 출원료 및 등록료 등 수수료 인상(15%), 중소기업과 영세발명가에 대한 수수료 감면(50%) 등은 미국 특허 출원을 검토하고 있는 국내기업들이 참고해야 할 사항들이다. 미국이 선출원주의를 도입함으로써 한국 특허법과 비슷하게 변경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선 사용자 권한(prior user rights)과 같이 선출원주의와 선발명주의 요소가 혼재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미국은 지재권 침해 물품에 대해 ‘337조 조사(Section 337 investigation)’를 활용하여 수입규제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 제도는 지재권 분쟁에 따르는 소요기간이 1년 내외로 신속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충분한 숙지가 필요하다. Patent Assertion Entities(PAEs)가 제기한 소송은 2010년 731건에서 2012년 2,500건으로 2012년 한 해 동안 10만 개의 기업들이 PAEs로부터 특허침해 소송의 위협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2013.5월 오바마대통령은 PAEs 규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legislative recommendation과 executive actions을 발표한 바 있다. 한국의 경우 특허심사하이웨이⁵¹를 활용할 수 있다. 미국 특허청에서 출원일로부터 최초 심사의견서를 받아보기까지는 2013.10월 현재 평균 18.2개월이 소요되는데, 특허심사하이웨이 제도를 활용할 경우 하이웨이이용신청을 승인받는 날로부터 1~3개월 정도면 최초 심사의견서를 받아 볼 수 있어 심사기간이 크게 단축된다. 이와 동시에 한국 특허청의 우선심사제도를 활용한다면 양

51_ 양국 특허청은 2009.1.29일부터 한국과 미국 두 나라에 공통으로 신청한 특허출원 건에 대해 제1출원국인 우리나라에서 특허가능하다는 심사결과를 받으면 제2출원국인 미국에서는 해당 출원건을 우선적으로 심사해주는 ‘한미 특허심사 하이웨이’를 실시하고 있다.



국 특허를 모두 확보하는 시간을 더욱 줄일 수 있다. 더불어 2012.3월 발효된 한·미 FTA를 통해 특허 분야에서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공지예외의 적용기간의 연장제도 등을 도입하여 특허권자들의 편익을 증대시키는 한편, 상표 분야에서는 증명표장제도 도입과 소리·냄새 상표를 인정함으로써 상표에 대한 품질보증기능의 강화와 다양한 브랜드의 개발 및 활용을 통한 기업의 자산 가치와 경쟁력을 제고 하였다. 아울러 상표침해에 대한 법정손해배상제도 도입, 상표침해 관련 물품의 압류명령, 지재권 관련 민사소송에서 정보제출명령 및 비밀유지명령 등의 제도 도입으로 지식재산권 보호 제도의 선진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다.

싱가포르는 혁신주도형, 지식기반형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지식재산권 보호제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 호주, 뉴질랜드와의 FTA를 통해 저작권 등이 한층 강화되었다. 한국과의 FTA를 통해 한국 특허청에서 부여한 특허권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사 없이 특허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파리협약, 베른협약, 부다페스트조약, 마드리드프로토콜 등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협약에 가입되어 있으며 2005.6월에는 아시아 최초로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지부가 싱가포르에 설치되었다.

EU 집행위와 회원국들은 지식재산권의 강력한 보호를 지지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EU의 지식재산권이 EU 이외의 지역에서도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특허의 경우, 각 국가 혹은 유럽특허청(EPO:European Patent Office)에 특허를 출원 및 등록하거나 세계지식재산기구의 국제특허조약(PCT)에 의해 국제특허를 신청해 보호받을 수 있다. 그러나 EU 회원국마다 언어와 특허제도가 상이해 특허 등록을 위해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단일특허제도 설치를 논의 중에 있다. 상표는 공동체상표청(OHIM)에서 EU 전체회원국에 대한 유효한 공동체상표를 등록받거나, 일개 회원국 내 상표를 등록하여 개별 국가 내에서만 상표를 보호받는 방법이 있다. EU의 지리적 표시 관련 규정은 와인에 관한 규정(Nos. 1234/2007) 주류에 관한 규정(110/2008) 및 농수산물품류 관련 규정(510/2006)이 있으며, 한-EU FTA에서는 양측의 지

리적 표시를 상호 보호하기로 합의하여, 한-EU FTA 발효 시 한국은 64개 EU는 162개 지리적 표시에 대해 WTO TRIPs 협정 제23조의 포도주 증류주 보호수준으로 강화되었다. 디자인은 디자인 보호를 위한 단일의 공동체 체계가 존재하며 저작권은 정보사회의 저작권 및 인접저작권에 관한 EU지침이 존재한다. EU는 2007년 개시된 위조방지무역협정(ACTA: Anti-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의 논의에 참여하여 2008년부터 공식 협상을 진행하여 왔으며, 2010.10월 최종 협정문에 합의하였다. 순탄하게 진행되어 오던 EU의 ACTA 가입과정은 2012. 1. 26. EU 22개 회원국이 일본에서 ACTA 조약안에 서명한 이후, 인터넷을 중심으로 시작된 EU 시민들의 ACTA 반대운동이 독일, 폴란드, 슬로베니아 등 일부 동·중유럽 국가에서 반정부 시위로 확산되었다. 유럽의회에서 ACTA 비준안이 최종 부결되어 ACTA의 EU 내 발효는 불가능하게 되었다. 국가별 특이사항은 우선 **네덜란드** 특허법은 장기 보호(20년)와 단기 보호(6년)로 나누어지는데, 참신성(novelty)에 관한 요건을 충족해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파리협약(1975), 유럽특허협약(1973), 특허협력협정(1970), 스트라스부르크협정(1963)에 가입되어 있으며, 유럽공동체 특허 협약(1989)에도 참가하였다. 저작권의 경우 베른협약(1886) 및 국제저작권협약(1952)에 가입되어 있다. 상표권의 경우 마드리드 협약 회원국에 일괄 상표등록을 할 수 있으므로 이 시스템에 따라 상표 등록을 하는 것이 유리하나 특정 1개국에 받아들여지지 못할 경우 전체에 대해서 무효의 효력을 가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특별한 사유 없이 등록 상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상표 등록권의 상실을 초래할 수 있다. 1993년 저작권접근법을 제정하여 별도 등록없이 공연 등이 이루어진 다음 해부터 50년간 보호한다. 또한, EU회원국들은 역내 전역에서 보호될 수 있는 공동체 디자인제도를 운영하여 디자인 출원일로부터 5년 단위로 연장하여 최장 25년까지 보호한다. **영국**의 특허신청 및 지식재산권 관련 업무는 기업혁신기술부(BIS: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 Skills)의 산하기관인 영국 지식재산권 관리청(The UK Intellectual Property Office)이 관장하고 있다. 영국의 특허법은 특허권을 최장 20년 동안 인정하고 있으며, 특허 신청에 대해서는 혁신성이 부족하거



나 이미 사용 중에 있다는 이유 등으로 거부할 수 있다. 상표 등록은 제조업체 및 서비스업 모두에 해당되며, 특정한 명사의 사용이나 관련 상품에 대한 서술식의 표현은 허용되지 않는다. 저작권은 문학이나 음악, 드라마 등의 원작의 경우에는 신고나 등록이 없이도 권리가 발생하며, 기타 예술작품이나 녹음, 영화 필름, 텔레비전, 라디오 방송 등에도 적용된다. 영국에서 특허 등록된 디자인은 최장 25년 동안 보호되며, 5년마다 갱신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프랑스**는 지적재산권법(Code de la Propriete Intellectuelle)을 통해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있으며 산업재산권청인 INPI(Institut National de la Propriete Industrielle)를 두어 등록, 출원 업무를 담당케 하고 있다. 지식재산권자는 INPI에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또한 세관당국에 대해서도 권리 침해 의심 물품의 통관을 일시적으로 중단(최대 10일, 훼손될 염려가 있는 물품의 경우 3일)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프랑스 정부는 2009년 HADOPI(Haute Autorite pour la diffusion des oeuvres et la protection des droits sur interent)를 설립하여 인터넷상에서 저작물 등 문화예술 관련 창작물들에 대한 침해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아울러 2013년 중소기업의 성장 및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우수기술 보유 중소기업에 대한 지적재산권 보호 프로그램을 발표하였다. **독일**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EPA의 국제규범 내에서 보호하고 있으나, 최근 중국 등 제3국의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독일기업 및 국민경제의 피해규모가 막대하다는 독일 내 여론이 고조됨에 따라 독일 당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사범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 **오스트리아**는 EU의 지적재산권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EU는 회원국 정부, EU 집행위,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설치되어있는 제3기관인 유럽특허청 세 가지 주체를 통해 지적재산권 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지재권보호를 위한 법령을 모두 구비하고 있으며 국제협약에도 가입되어 있어 국내·외 기업이 동일한 수준으로 지재권을 보호받는다. 그러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 집행 조치는 다소 느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와 이탈리아는 2010.3월 지식재산권 분야의 포괄적 협력에 관한 특허기관 간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그리고 EU의 신규회원국인 **불가**

리아는 WTO와 EU 기준에 합치시키기 위해 2004년 자국의 조달관련 법령을 개선한 바 있으나, 조달 절차가 불투명하고 부패한 관행이 지속되고 있으며 소송절차 또한 길고 복잡하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지식재산권 보호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법 음반 및 CD, 유명 브랜드 위조품 등이 널리 유통되고 있다. 최근 불가리아 정부는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및 불법 복제품 근절을 위해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있으며 지식재산권 침해 사범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고 있다. **체코**의 지식재산권 관련법은 EU관련 규정에 부합하고 있으나 완벽하지는 않은 실정으로 지재권 보호를 위해 계속적인 노력을 강구중이다.

일본은 지재권침해물품에 대한 국경조치가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2011년 일본 세관의 지식재산 침해물품 수입금지 건수는 23,280건으로 전년 대비 0.2% 증가한 수준으로 2007년 이후 5년 연속 2만건을 넘겼다. 증가 원인은 중국으로부터의 모방품 백, 신발, 전자제품이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중국으로부터의 수입금지 건수는 91.2%로 2006년 48.2%에서 계속적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로부터의 수입금지는 1.9%로 2006년 44.5%에서 계속적으로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노르웨이는 주요 국제협정의 당사국으로 지식재산권을 엄격히 보호하고 있다(통상 20년간 특허권 보호/사후 70년 저작권 보호). 우리나라와 노르웨이는 한-EFTA FTA를 통하여 TRIPs 규정의무에 따라 상호간 광범위한 지식재산권 보호 의무를 지고 있다.

스위스는 국제규범을 상회하는 지식재산권 보호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등록상표의 존속기간은 10년으로 추가 10년 연장 가능하며, 등록상표권자가 상표를 5년 이상 사용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법원의 심판에 의해 취소될 수 있다. 의장권은 최대 15년간 보호되고 특허권은 20년간 보호될 수 있으며 연장은 불가하다.

이스라엘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유효하고 적절한 보호와 남용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며, **카타르**에서는 1997년 발효된 지적재산권



법에 따라 저작권이 보호되며 이외 특허권은 등록 후 10년 동안 보호되고 5년간 연장 등록할 수 있다. 상표권은 카타르에서 가장 널리 이용되는 형태로 최초 10년 등록에 추가 10년 갱신이 가능하다. 하지만 5년간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제3자가 법원에 취소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

개관

WTO 서비스협상 동향

GATT체제하에서의 제8차 다자무역협상인 UR 협상 결과 서비스무역에 대한 최초의 다자간 규범인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GATS)」이 제정되어 1995년 WTO 출범과 동시에 발효되었다. UR 협상 당시 서비스무역에 대한 다자간 협상이 기설정의제(built-in agenda)⁵²로 채택되었으며, 이에 따라 2000.2월부터 GATS 하에서의 다자간 서비스협상이 재개되었다. WTO 출범 이후 UR 협상에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문제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됨에 따라, 2001년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 제9차 다자무역협상인 DDA의 출범이 공식적으로 선언되었으며 서비스분야를 포함한 9개 주요 협상 의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이다.⁵³

DDA가 출범하면서 DDA 선언문에 서비스협상의 일정 및 최종협상시한이 명시됨에 따라 동 분야의 협상이 보다 활발하게 전개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따라 각국은 2002.6월말에 서비스 분야별 1차 양허요청안을 제출하였고 2003.3월말에 양허요청안에 대한 양허안을 제출하였으며 분야별 양자간·

52_ 기설정의제란 UR 협상을 통해 체결된 WTO 협정에서 지시하고 있는 추가적인 무역자유화를 위한 작업과제를 의미한다. 외교부, 외교용어사전(http://www.mofa.go.kr/trade/data/dictionary/index.jsp?mofat=001&menu=m_30_210_10) 참고

53_ 9개 주요 협상 의제로는 농업, 비농산물 시장접근, 서비스, 규범, 분쟁해결양해, 싱가포르 이슈, 무역과 환경, 지식재산권, 개도국 개발문제 등이며 이중 농업, 비농산물 시장접근, 서비스 등이 가장 핵심적인 분야이며 규범, 무역원활화, 무역과 개방 등도 중요한 의제이다.



다자간 협상과 서비스 국내규제 및 규범 분야의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DDA 출범 이후 활발하게 진행되던 다자무역협상은 중간점검회의의 성격을 가진 칸쿤각료회의(2003.9월)가 결렬되면서 향후 전망이 불투명해짐과 동시에 최종협상시한의 연기가 불가피해졌으며 이에 서비스협상도 영향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WTO 회원국들은 다자무역협상의 필요성에 공감하여 2004년부터 DDA 협상을 재개하는 것에 합의하였으며 2004.8.1일에 'July Package((WT/GC/W/535)'가 채택되면서 DDA 협상이 본격적으로 재개되었다. 동 합의문에서는 최종협상시한을 넘어 제6차 각료회의까지 DDA 협상을 지속하고 제6차 각료회의를 2005.12월에 홍콩에서 개최하는 것을 명시함에 따라 DDA 협상의 모멘텀이 회복되는 계기가 되었다. 서비스협상의 경우 July Package에서 1차 양허안을 미제출 국가의 조속한 제출을 독려하고 1차 양허안(initial offer) 기재출 국가의 수정 양허안(revised offer) 제출 시한(2005.5월)을 명시함에 따라 협상이 보다 활발하게 전개되는 전환점이 되었다. 이에 따라 이후의 서비스협상은 서비스분야의 세부원칙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2005.5월에는 수정 양허안이 제출되었다.

2005.12월 홍콩에서 개최된 제6차 WTO 각료회의에서는 당초 회의가 결렬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선언문이 채택됨에 따라 향후 협상의 토대를 구축하는 데 있어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다만, 선언문의 내용에 있어서 괄목할 만한 진전을 보이지 못하였다. 서비스협상의 경우 각료 선언문 본문에서는 서비스협상의 목표, 개도국 유연성 원칙 등이 합의되었으며 부속서 C에서는 모드별 협상목표, 이해당사국가간 복수적 협상 개시에 있어 개도국에 대한 고려 등을 합의하였다. 또한, 이후의 서비스협상은 2006.2월까지 복수적 양허요청서를 제출하고 2006.7월까지 2차 수정 양허안을 제출하며 2006.10월까지 최종 양허안 등을 제출하는데 합의되었다.

제6차 WTO 각료회의 이후 교착상태에 빠져 있던 DDA 협상은 2011년에 들어 DDA 출범 10년째를 맞이하여 연내 협상을 타결하자는 분위기가 조성되었고, 이에 따라 WTO에서는 1/4분기 동안 복수간·양자간 협상이 집중적으로 전개되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농업과 NAMA를

중심으로 주요국간의 대립은 지속되었고, 그 결과 2011.4.29일 비공식 무역 협상위원회(Trade Negotiation Committee: TNC) 회의에서 구속력을 가진 의장 텍스트 채택이 무산되고 분야별 경과보고서(progress report)만 채택됨으로써 DDA 협상의 연내 타결이 어렵게 되었다. 이후 WTO 회원국들은 DDA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제8차 WTO 각료회의에서 소규모 패키지의 조기 타결을 계획하고 협의를 했으나 이 또한 각국의 입장이 대립되어 2011.7월에 무산되었다. 2011.4.29일 발표된 분야별 경과보고서에 따르면 서비스협상은 그동안 일부 부분적인 진전이 있기는 하나 전반적으로 2008년의 Signaling Conference 이후 별다른 진전이 없었던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이와 같은 서비스 협상의 부진은 여타 분야의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것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DDA 서비스 협상이 2005.5월 주요국들의 수정 양허안 제출 이후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자 2011년 하반기부터 호주 및 미국 정부가 주축이 되어 DDA 서비스협상을 주도하는 공조(RGF)국⁵⁴간에 복수국간 협정을 추진하자는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복수국간 서비스 협정(Trade in Services Agreement: TiSA)의 협상 추진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준비회의가 2012.2월부터 2013년 초까지 개최되었으며, 2013.3월부터 구체적인 문안협의를 시작하였다. 2013.6월 제네바에서 개최된 TiSA 회의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22개 TiSA 협상 참여국들이 협상에 필요한 국내절차 등을 완료함에 따라 본격적인 협상을 진행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⁵⁵

RTAs 서비스협정 체결 동향

다자간 자유무역을 저해하지 않는 지역주의를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GATT 제24조 및 GATS 제5조에 따라 WTO 회원국들의 지역무역협정(Regional

54_ RGF 국가는 미국, EC,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위스, 멕시코, 칠레, 콜롬비아, 싱가포르, 홍콩, 한국, 대만, 파키스탄 등 16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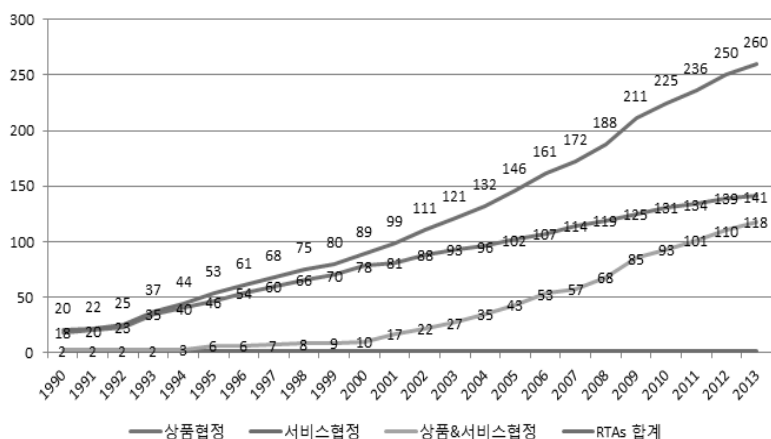
55_ 2012.6월 기준 TiSA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22개국은 우리나라, 일본, 호주, 뉴질랜드, 미국, 캐나다, EU,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대만, 홍콩, 파키스탄, 멕시코, 코스타리카, 파나마, 콜롬비아, 페루, 칠레, 파라과이, 터키, 이스라엘이다.



trade agreements: RTAs)의 체결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GATT 체제하에서 체결된 첫 RTAs는 로마조약으로 칭해지는 EC Treaty(European Economic Community: EEC)로 1958.1.1일부터 발효되었다. 1990년대 초까지 RTAs의 체결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1994년 NAFTA가 발효된 이후부터 전 세계적으로 RTAs 체결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WTO에 따르면 2013.11월 말 기준 WTO에 통보된 발효 중인 RTAs가 총 260건이며, 이 중 180건이 2000년대 들어 발효된 것이다.

1990년대까지는 주로 상품협정만을 포함하는 RTAs가 많이 체결되었지만, 2000년대에 들어서는 상품협정만을 포함하는 RTAs 체결은 둔화되고 상품협정과 함께 서비스협정을 포함하는 RTAs의 체결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2013.11월 말 기준 상품협정과 서비스협정을 모두 포함하는 RTAs는 총 118건으로 전체 RTAs의 45.4%를 차지하고 있다.

■ WTO에 통보된 발효 중인 RTAs 현황(발효일 기준, 건)



- 주: 1) WTO의 경우 상품협정과 서비스협정이 모두 체결된 경우 각각의 지역무역협정으로 간주하고 2건의 지역무역협정으로 집계하고 있으나, 여기에서는 하나의 지역무역협정으로 간주함.
 2) 상품협정과 서비스협정을 모두 포함하는 지역무역협정(그림에서 상품&서비스협정)은 두 가지 협정이 동시에 체결·발효되기도 하지만 상품협정이 먼저 체결·발효된 후 서비스협정이 체결·발효되는 사례도 많음. 여기에서는 모든 협정이 발효된 시점을 기준으로 협정의 건수를 집계함.

자료: WTO RTA-IS(<http://rtais.wto.org>)

RTAs 서비스협정은 GATS 조문을 대부분 그대로 준용하면서 서비스 양허표를 통해 서비스 시장 개방 일정을 제시하는 ‘GATS 형태’와 GATS 조문을 활용한 NAFTA 서비스협정 조문을 준용하면서 유지하는 비합치조치를 현재유보(부속서 I) 및 미래유보(부속서 II)에 기재하는 ‘NAFTA 형태’, 그리고 이와 같은 두 가지 형태를 따르지 않는 기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는데, Latrille, P. and J. Lee(2012)에 따르면 2010.11월까지 WTO에 통보된 발효 중인 RTAs 서비스협정 80건 중 NAFTA 형태의 협정이 32건(40%)으로 가장 많고 GATS 형태의 협정은 29건(36%), 기타 형태의 협정은 19건(24%)인 것으로 나타났다.⁵⁶

용어의 정의

GATS는 국제적인 서비스 무역의 형태를 다음의 네 가지로 정의하고 있다.

- 국경간 공급(cross-border supply):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공급되는 서비스(예: 국제전화)
- 해외소비(consumption abroad): 소비자나 기업이 다른 국가에서 이용하는 서비스(예: 관광)
- 상업적 주재(commercial presence): 외국회사가 다른 국가에 자회사나 지사를 설립하여 공급하는 서비스(예: 외국은행 영업)
- 자연인의 이동(presence of natural persons): 개인이 다른 국가로 이동하여 공급하는 서비스(예: 패션모델, 컨설턴트)

최혜국(most-favoured-nation: MFN) 대우란 모든 교역 상대국을 공평하게 대우하는 것으로서 한 회원국에게 혜택을 줄 경우 모든 다른 회원국에도 똑같은 혜택을 주어야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GATS에 따라 WTO 회원국들은 MFN 대우 면제 목록에 명시된 특정 분야에 대해서는 MFN 대우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허용된다.

⁵⁶ Latrille, P. and J. Lee(2012), “Services rules in regional trade agreements: How diverse and how creative as compared to the GATS multilateral rules?”, Staff Working Paper ERS-2012-19, pp.7-9, WTO.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 NT)란 외국인과 내국인을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을 가리킨다. 즉, 일단 외국회사로 하여금 국내에서 서비스를 공급하도록 허용하면 외국회사와 국내회사 간에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되는 것을 의미한다.

서비스 교역장벽의 일반적 유형

서비스 교역장벽은 일반적으로 전술한 네 가지 공급형태에 대해 시장접근(market access: MA) 및 NT, 그리고 MFN 대우를 보장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 구체적인 형태는 국내 사업체 설립 시 지분제한, 외국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시장접근 불허, 자격요건, 인허가, 기타 외국서비스 공급자의 서비스공급을 제한하는 국내규제 등이다.

서비스협정의 주요 내용

GATS는 서비스 분야의 국제교역을 다루는 최초의 구속적 다자간 규범이다. UR 협상결과 타결된 GATS는 상품분야의 협정(GATT)과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요소를 지니고 있다.

- 일반적 원칙과 의무를 담은 본문
- 특정분야의 규범을 다루는 부속서
- 개별 회원국의 분야별 시장개방 양허
- MFN 대우를 일시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목록

이들 네 가지 요소 중 시장개방 양허와 MFN 대우의 일시적 유보 목록은 GATT에서의 관세양허계획과 같이 GATS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GATS 본문에서는 NT, MFN 대우, 투명성, 국내규제, 상호인정, 국제지불 및 송금 등에 관련된 원칙을 수록하고 있다. 여기서 GATS의 NT 원칙은 상품분야와는 달리 회원국이 외국 서비스공급자에게 시장접근을 양허한 경우에만 적용되고 있다. 또한, 양허를 한 경우에도 어느 정도 NT에 대한

제한은 허용되고 있다. 부속서는 서비스 분야의 다양성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최혜국대우의 면제, 자연인의 이동, 항공, 금융, 통신 등의 분야에서 특정한 규범을 규정하고 있다.


개별 회원국의 분야별 시장개방 양허 목록(서비스 양허표)은 회원국들이 자유화할 것을 양허하는 서비스 분야와 분야별 활동에 관해 MA 및 NT 상 제한사항을 정리한 것이다. 서비스 양허표는 W/120⁵⁷ 기준 총 155개 서비스 업종이 포함되며 각각의 업종별로 MA 및 NT와 관련된 네 가지 공급형태⁵⁸상의 양허 여부 또는 제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다. 서비스 양허표에서는 MA 및 NT상의 네 가지 공급형태에 대해 양허를 하지 않는 경우 ‘unbound’로, 아무런 제한 없이 양허를 하는 경우 ‘none’으로 명시하며 GATS에서 규정하고 있는 MA 및 NT상의 제한이 있는 경우 그 제한사항을 기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RTAs 서비스협정에서도 GATS 형태의 서비스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WTO 서비스협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 양허표를 도입하여 서비스시장 개방 약속을 기재한다. 반면, NAFTA 형태의 RTAs 서비스협정은 부속서 I(현재유보)과 부속서 II(미래유보)에 NT, MA, MFN 대우, 현지주재(Local Presence: LP) 조항의 의무에 합치하지 않는 제한을 둘 수 있고, 부속서 I과 부속서 II에 기재되어있는 제한 외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⁵⁹

57_ WTO(1991), MTN.GNS/W/120 참고.

58_ 앞서 언급한 국경간 공급, 해외소비, 상업적 주재, 자연인의 이동을 의미한다.

59_ NAFTA 형태의 RTAs는 서비스 무역 형태 중 국경간 공급과 해외소비, 자연인의 이동은 국경간 서비스무역(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chapter에서 다루고 상업적 주재는 투자(Investment) chapter에서 다룬다. NAFTA 형태의 RTAs 서비스 협정을 체결하는 당사국은 서비스분야의 상업적 주재에 대해 투자 chapter의 NT, MFN 대우, 이행요건(Performance Requirements),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Senior Management and Boards of Directors) 조항의 의무에 합치하지 않는 제한을 두는 경우 부속서 I 및 부속서 II에 기재해야 한다.



현황분석

UR 당시 WTO 회원국들은 전분야에 해당되는 수평적 조치(Horizontal Commitments)뿐만 아니라 서비스분야별로 시장접근 및 내국민대우에 대한 네 가지 공급형태상의 양허 여부 또는 제한 내용⁶⁰을 명시하여 양허표를 제출한 바 있다.⁶¹ DDA 출범 이후 각국이 서비스분야에 대한 1차 양허안(initial offer)과 수정 양허안(revised offer)을 제출한 상태이나, 아직 일괄 타결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DDA 협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양허의 확대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 서비스분야의 자발적 자유화는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서비스부문에서 나타나는 보편적인 통상장벽은 내국민대우 제한 및 규제조치로서 구체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해운업에 있어서는 각국의 해운법에 따라 외국 해운사의 연안항해 및 화물수송이 제한되어 있다. 통신업의 경우는 외국인의 투자지분 제한, 시장접근 제한 등의 장벽이 있다. 금융업에 있어서는 금융기관의 지점 및 사무소 설치에 대한 허가지연, 엄격한 지점 승격요건 등이 장벽으로 존재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보편적으로 국적선 요건을 포함하여 운송 및 통신 분야에서 시장접근이나 내국민대우 제한과 건설기술자의 이동 등 인력이동상의 제한을 두고 있다. 개도국의 경우는 운송·통신 분야의 진입제한 이외에도 유통·건설 등에 있어 합작요건 등 지분제한이 있고 은행·보험회사 등 금융기관 설립요건상 시장접근 및 내국민대우 제한이 많다. 중국의 서비스시장은 아직까지 많은 제한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WTO 가입 당시 제출한 서비스 양허표에 단계적인 개방 계획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점진적인 규제 완화·철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각국의 서비스시장 세부 양허 내용은 UR 양허표를 참고

60_ 이를 Sector-Specific Commitments라고 한다.

61_ 국별 서비스시장 양허내용은 WTO(1999), Services Database에 세부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하여야 하며 다음의 내용은 현지 공관을 통해 파악된 서비스분야의 주요 교역장벽이다.

미국은 서비스분야의 개방도가 높은 국가 중 하나로 대부분의 업종이 개방되어 있거나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제한을 두고 있다. 다만, 일부 업종에서는 아직까지 높은 수준의 제한을 두고 있는데 대표적인 분야가 해운서비스이다. 미국은 여러 가지 관련법에서 국적선 요건을 규정하여 해운서비스 시장에서 미국사업자를 보호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 「1961년 공법 제 664호(Public Law 664, 1961)」에는 ‘미국 국적선이 적정한 운임을 제공할 경우 적어도 정부관련 화물의 50%는 미국 국적선에 의해 수송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1920년 미상선법(Merchant Marine Act of 1920)」에도 ‘모든 미국내(속령(屬領), 자치령 포함) 화물은 미국에서 건조되고 미국 시민이 승선한 미국 국적선박에 의해서 수송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국적선 요건을 명시한 그 밖의 법률로는 「Merchant Marine Act of 1936」의 Section 901을 개정한 「1954년 화물우선적취법(Cargo Preference Act of 1954)」, 「1985년 식품안전법(Food Security Act of 1985)」, 「1995년 알래스카 산 석유 금수해제법」 등이 있다.

캐나다는 문화산업, 금융서비스, 운송서비스, 통신서비스 등 일부 분야에 대해 제한을 두고 있다. 문화산업(서적 출판 및 배포, 정기간행물, TV 및 라디오 방송, 영상물 배급 등)의 경우 상업적 주제에 대해 지분제한, 이사진의 국적요건 부과 등 각종 제한요건을 두거나 업종에 따라 외국인 투자 자체를 금지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캐나다도 여타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TV 및 라디오 방송 분야에서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 비율(모든 방송사 연간 방송시간의 60% 이상, 오후 6시~자정까지 국영 CBC는 60% 이상, 상업방송은 50% 이상의 캐나다 프로그램을 방송)을 두고 있다. 금융서비스의 경우 캐나다는 금융서비스 개정법안(Bill C-8)에 따라 중형은행(자본금 C\$10억~50억)과 대형은행(자본금 C\$50억 이상)에 대해서는 지분 취득상의 제한(각각 65%, 20%까지만 허용)을 하며 소형은행(자본금 C\$10억~50억)에 대해서는 지분 취득 제한을 하지 않고 있다. 운송서비스에서는 캐나



다 국적선에 대한 외국인 투자(지분)가 25%로 제한되고 외국 선박의 캐나다 연안 운송을 불허하고 있다. 통신의 경우 1종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지분제한(직접투자 20% 이내)과 이사 수 제한(외국인 20%이내), 그리고 실질적 경영자에 대한 국적요건을 두고 있다.

멕시코는 해운, 유통, 건설 등의 분야에서 외국기업이 활동하는데 특별한 제약을 두지 않고 있다. 다만, 건설의 경우 멕시코 인프라구축 등을 위한 국제입찰에는 일반적으로 FTA 체결국가라는 조건이 붙는다.

금융서비스의 경우 외국인투자관련 법령에 의해 외국정부 또는 외국의 국영기업은 멕시코의 금융부문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없다. 그리고 상업은행에 대해서는 최소자본금요건(2010.10월 기준, 모든 금융관련 기능 수행 상업은행은 90백만 UDIS(약 USD20백만), 일부 기능만을 수행하는 상업은행(Niche Bank)은 36백만 UDIS(약 USD8백만))이 부여되며 상업은행의 외국인 투자지분 상한은 Financial Service Treatment를 체결한 국가에 소속된 은행에 대해서는 100%, 그렇지 않은 국가에 소속된 은행에 대해서는 49%까지 허용하고 있다. 금융기관의 연락사무소 설립은 은행증권위원회(CNBV)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일반법인 설립조건에 더해 금융기관에 대한 경제부와 재무부의 요구조건을 충족해야하고 최소 자본금 요건은 없다.

2012.12월에 출범한 멕시코 신정부(엔리케 페냐 니에토 대통령)는 멕시코 개혁정책의 하나로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와 공기업의 민영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멕시코 정부는 통신분야와 방송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각각 100% 및 49%까지 허용하는 개혁 조치를 시행하였으며, 2013.8월에는 석유 탐사·개발분야에 대해 이익분배계약방식으로 민간의 참여를 허용하는 개혁안이 의회에 제출된 상태이며, 석유 판매 및 전력 송배전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의 허가를 받아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헌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EU의 경우, 문화의 다양성(cultural diversity) 보호를 목적으로 시청각서비스 개방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고 그 외에도 공공, 의료, 교육 등의 분야도 개방을 하지 않고 있다. 또한, 일부 서비스분야에서는 EU회원

국별로 외국인투자제한 조치, 국적요건, 자격요건 등을 유지하고 있다. 서비스 공급형태에 있어서는 ‘상업적 주재’와 ‘자연인의 이동’ 형태에 대해 다소간의 제한을 두고 있다. 상업적 주재의 경우, 각 EU회원국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에 의해 공익사업으로 인정된 서비스는 개방 대상에서 제외하고 정부독점 또는 인가받은 민간업자에게만 허용하고 있는데 과학기술 자문업, 인문과학 R&D, 기술조사분석, 환경, 건강, 운송, 운송보조서비스 등이 이에 해당된다. 또한, 어느 한 EU국가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제3국 자회사에 대한 조치는 그 국가에 한하여 적용되며 EU역내에 사무소만 등록하고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불리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자연인의 이동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으나 서비스 공급업체가 파견하는 자연인의 주재와 서비스 판매협상·계약체결을 위한 입국은 허용된다. 전문직 자격의 상호인증(MRA) 문제는 개별국가의 소관사항으로 각 EU회원국과 제3국간의 협정 등에 따라 결정된다.

한편, 2004.1월 EU 집행위는 역내 서비스시장의 획기적인 통합을 내용으로 하는 단일 시장 서비스 지침(Directive on Services in the Internal Market)⁶²을 발표하였다. 동 지침은 서비스시장 개방 폭에 대한 회원국 간의 이견으로 입법절차 과정에서 진통을 겪었으나 보건, 사회보장 등의 공익서비스와 라디오·TV 방송 등의 시청각서비스를 적용 대상에서 배제⁶³하고 원산지국 개념을 삭제하는 등 부분 수정을 거쳐 2006.12월에 발효(각 회원국들은 2009.12.28일까지 이행)되었다.

그리고 2010.10월에 서명된 한·EU FTA에서 EU는 총 155개 서비스 분야 중 139개 분야를 양허하였으며 이중 수의서비스를 포함한 전문직 서비스, 장비 임대·유지·보수서비스, 자문·조사·회의진행 등 기타 사업지원 서비

62_ 동 지침의 주요 내용은 ①서비스 제공업자의 영업개시자유(freedom of establishment)에 대한 제한 폐지, ②서비스업에 대한 각종 행정법규의 대폭 간소화, ③회원국 정부간 협력 의무 대폭 확대, ④서비스 제공업자에 대한 각종 자격조건(requirements)의 폐지, ⑤국적국의 영업허가 전회원 국내 적용 등이다.

63_ 단, 공익서비스 중 우편, 전기, 가스 등 상업적 성격의 공익서비스는 동 지침이 적용된다.



스, 위성방송 등 통신서비스, 건설 및 건설 엔지니어링 서비스, 환경서비스, 금융서비스, 내수운송 등 운송서비스, 운송보조 서비스 등 9개 분야의 경우 DDA보다 높은 수준으로 우리나라에 양허를 하였다.

EU의 서비스 분야별 교역 장벽은 다음과 같다. 통신서비스의 경우, EU는 WTO 기본통신협정에 따라 전화, 데이터 서비스 분야에 대한 내국민 대우를 보장하고 있다. 또한, 2000.12월 가입자 선로망개방(local loop unbundling)에 대한 규칙을 채택하고 2001.12월 전자통신 네트워크와 관련된 5개 지침을 채택하여 역외국가에 대한 통신시장 접근을 보장하고 있다. 동 규범들은 초고속통신망 등 전자통신분야 전반에 적용된다. 한편, EU 집행위는 2009년에 소비자 권리 및 규제 독립성 강화 등을 포함시킨 통신서비스 개혁안을 도입하였으며, 2010년에는 EU 통신서비스 시장 통합을 저해하는 국가별 상이한 규제와 도소매 가격 차이를 해소하여 EU 통신서비스 시장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Europe 2020 Strategy 내에서 Digital Agenda를 채택하고 디지털 경제발달, 고속통신망 구축 가속화, single online market 강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회원국별 통신서비스 제한 사항으로 **영국**의 경우 통신서비스에 투자할 때 정부로부터 사업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EU 집행위는 1997년부터 우편서비스의 단계적인 개방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경쟁 도입, 규제당국과 사업자 분리를 통한 시장의 건전성 규제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우편서비스 지침을 세 차례 도입·개정하였다. 동 지침에 따라 2006.1월 50g 이상 우편물에 대한 민간 사업자의 참여가 허용되었으며, 정부 독점인 50g 미만의 우편물도 2009년까지 민간에 완전 개방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EU 집행위의 우편서비스 시장 자유화 방안은 이탈리아 등 다수 국가의 반대에 직면하게 되었고, 그 결과 2008년에 EU는 우편서비스 자유화 일정을 2011년까지로 연기(단, 신규회원국과 소규모 회원국의 경우 2013년까지 자유화 유예)하였다.

EU는 문화의 다양성 보호를 목적으로 시청각서비스 분야에 다양한 제한을 하고 있다. 방송서비스의 경우 프로그램 편성상의 제한을 두고 있고 영화상

영서비스에 대해서도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으나 국별로 다소간의 차이가 있다. EU 방송지침(Broadcast Directive, 1989년)에서는 TV 송출시간의 절반이상을 EU에서 제작된 프로그램에 할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각 EU 회원국은 동 지침을 이행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독일**은 영화산업을 여타 WTO 회원국들에게 개방하지 않았고 최혜국대우(MFN) 적용도 배제되고 있다. 또한 독일은 영화의 제작과 보급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리고 문화 콘텐츠 분야에서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 기업들이 콘텐츠를 배급·유통하기 전에 관련 심의 기관으로부터 심의를 거쳐 연령 등급을 부여받도록 하고 있다. 비디오게임·온라인게임은 USK(Unterhaltungs-software Selbstkontrolle)에서, 영화·비디오·DVD와 같은 시청각물은 FSK(Freiwillige Selbstkontrolle der Filmwirtschaft)에서 심의를 한다. **영국**에서 외국인이 TV방송분야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정부로부터 사업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불가리아**는 「라디오 및 텔레비전 법」에 따라 공중파 방송에서 많은 부분(predominant portion)을 유럽산 프로그램으로 편성하며, 불가리아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쿼터를 유지하고 있다. **체코**는 외국인이 방송과 미디어 분야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취득할 것을 요구하며, 케이블과 위성방송은 등록절차도 필요하다. **이탈리아**는 정부가 지급하는 영화산업 보조금에 대해 내국민대우 예외로 하고 있다.

노르웨이의 경우 원칙적으로 EEA 협정 당사국의 법에 따라 설립되고 EEA국가에 등록사무소, 행정본부나 주요사업지를 두고 있는 기업의 자회사에 대해서만 내국민대우를 부여, 기업설립에 대해서는 회사대표자와 이사의 반 이상이 노르웨이 영주권자이어야 하며 최근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다. 비EEA 기반 금융기관이 노르웨이에서 은행, 증권사 등을 설립하고자 할 때 노르웨이 은행보험증권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외국 금융기관이 노르웨이 은행을 설립하는 경우, 총 자본의 50%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그리고 보험서비스에 있어서 비EEA 보험회사는 항공보험, 해운운송보험 등 국경을 초월하는 보험의 경우 노르웨이의 승인을 받은 보험중계업자를 통해 간접적으로만 제공할 수 있고 노르웨이법에서 규정한 강제 자동차보험 등은 제공할 수 없다. 통신서비스의



경우, WTO 양허에 따라 1998.1월에 국영전화회사인 Telenor의 독점권이 전면 폐지되었고 통신서비스 전 분야에 걸쳐 자유경쟁이 허용되었으며 외국인 100% 지분 보유가 가능하게 되었다. 해운분야에서는 EU 지침이 차용되고 있다. 비EEA 외국해운회사는 영업활동상의 제약을 받는데 노르웨이 국제선박 등록처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각종 요건(노르웨이에 본부 설립, 대표자와 이사진의 1/2 이상 영주권자)이 있으며 이들 회사는 노르웨이 항구 간 승객 및 화물운송, 노르웨이 항구와 외국항구간의 정기 여객선 운행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스위스는 외국인이 은행업에 투자할 때 스위스 은행감독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보험업, 취업용역회사, 증권거래업, 카지노영업 등에 외국인이 투자할 때에는 주(칸톤)에 따라 주정부의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스위스는 국적 선박운행과 국내 항공사 운행 등의 분야에 외국인투자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러시아는 서비스 분야에 있어 그동안 상대적으로 높은 장벽을 두고 있었으나, 2012.8월 WTO에 가입하면서 총 155개 서비스 업종 중 116개 업종을 양허⁶⁴하는 등 서비스 시장 개방이 확대되었다. 통신서비스의 경우 15개 업종 중 텔렉스, 텔레그래프, 팩시밀리 등 3개 업종은 제한 없이 양허하고 그 외의 기간통신서비스와 부가통신서비스 12개 업종은 제한(국경간 공급에 대해서는 라디오통신서비스와 위성통신서비스(일부 제외 또는 3년간 철폐 약속)는 미양허하고, 상업적 주재에 대해서는 법인 요건, 외국인의 의결권 지분참여 제한(WTO 가입 후 4년 동안 49%로 제한)을 두고 양허하였다. 건설서비스의 경우 내국민대우상 일부 분야(국가정책성, 문화유산 관련 분야)에 대한 차별적인 보조금·정부지원이 존재하나, 시장접근에 있어서는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양허하였다. 유통서비스의 경우 도소매업에서는 일부 취급품목 제한(의약품, 의료기기(도소매), 알콜류(도매) 불허), 설립형

64_ 러시아의 WTO 가입 서비스 양허표에 따르면 러시아는 총 155개 업종 중에서 26개 업종은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았으며, 90개 업종은 일정한 제한을 두고 양허를 하였고, 39개 업종은 미양허하였다.

태 제한(법인만 허용), 허가요건(소매업) 등 제한을 두고 있고, 소매업에서는 식품 및 비식품 취급, 자동차(부품, 액세서리 포함), 모터사이클, 주유소 등에 대해 양허하였다. 러시아는 WTO에 가입하면서 보험서비스와 은행서비스 전분야(기타금융서비스 제외)를 양허하였으나, 국경간 공급에 있어서는 특정 분야·거래형태 등을 제한하고 상업적 주재에 있어서는 설립형태 및 외국인지분율을 제한하고 허가요건을 두는 등 다양한 제한이 있다.

일본은 금융 분야에서 장벽을 가지고 있다. 일본 내 외국계 은행들은 고객에게 일본보다 금리가 높은 본점의 예금상품을 소개할 수 있는 금융중개 및 알선업무가 금지되어 있으며 여러 기관으로부터 중복된 감사(금융청 검사, 일본은행 고사(考査), 재무성의 외환업무관련 감사, 세무서의 수시감사 등)를 받고 있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외국계 은행은 일본의 금융결제망에 가입하기 어려워 마케팅채널의 구축과 고객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한편, 일본은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를 면제해주는 제도를 운용하는데 있어서 국내은행과 외국은행을 차별하고 있다. 즉, 소득세법 제180조 제1항에 의거, 일본 국내은행은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원천징수 면제증명서를 최초 거래시에만 거래처에게 교부하면 되지만 외국계은행은 매 5년마다 원천징수 면제증명서를 발급받아 모든 거래처에 교부해야 한다. 이와 같은 규제는 대출금이자, 콜론이자 등의 거래에도 적용되고 있어 외국계은행의 업무상 부담이 되고 있다. 한편, 대부분의 외국계은행은 본국의 본점 결산일에 맞추어 매년 12월말에 결산을 실시하고 이를 기초로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으나 일본에서는 모든 은행의 영업 연도를 일본 회계연도에 맞추고 있어 외국계은행이 결산을 두 번 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중국의 서비스시장은 많은 부문에 있어 서비스 장벽이 존재하고 있으나 WTO 가입 당시의 개방 일정을 이행하면서 교역 장벽이 점차 완화 또는 철폐되었다. 해운서비스의 경우, 중국은 2001.9월 중국항만 조출료(dispatch money)와 근해항로 20% 할증료를 폐지하는 대신 항만하역비용과 예산료 등 항만이용료를 약 15% 인상하였다.⁶⁵ 한편 2002.1월에는 보다

65. 「대외무역항 수수료비용 규정 및 표준조정에 관한 통지」



개방적인 국제해상운송활동을 규범화하고 해상운송시장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국제해운조례」를 시행하여 WTO 관련 규정에 부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동 조례에도 지분제한 등 부분적인 제한이 존재한다. 2004.2월 중국은 「외국인의 국제해운업 투자에 관한 관리방법(外商投資國際海運業管理規定)」을 발표해 2004.6.1일부터 외국인의 합자, 합작, 혹은 독자형태로 해상운송 및 화물저장업무에 대한 투자를 허용하였다. 2005.12.11일부터 국제화물 운송대리업의 독자형태 법인설립이 허용되었고 기 설립된 국제화물 운송대리기업의 지분인수를 통한 설립도 허용하였다. 동 업종에서 외국투자자에 대한 별도의 자격요건은 없으나 최소 USD100만 이상의 납입자본금을 요구하고 있다.

항공운송서비스의 경우, WTO 가입 후 항공사에 대한 외국인투자 한도가 기존 35%에서 49%로 높아졌다. 또한, 2002.8월에는 중국 측이 지배권을 보유(공공항공운수업은 외국인지분 한도가 25%)하는 범위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은 중국 측과 합자 및 합작 등의 방식으로 공항건설·항공운수·유관사업 등에 투자(합영기간은 30년 이내로 제한)하는 것을 허용하는 「외국인투자 민용항공업 규정」이 시행되었다.

유통업의 경우, 중국은 과거에는 외국인 투자를 중의 합자 또는 합작의 형태만 허용하고 매출규모, 자산, 자본금 등에 대해 높은 자격요건과 지역 제한요건을 두었으나, WTO 양허를 이행하면서 2004.12월부터 외국기업의 단독투자를 허용하고 외국투자자의 자격요건 중 연간매출액과 자산규모 요건을 철폐하고 자본금 규모도 대폭 낮추었다(도매업 50만 위안, 소매업 30만 위안).⁶⁶ 또한, 지역 제한도 도매업은 2004.6월 1일부터, 소매업은 2004.2.11일부터 철폐되었다. 또한, 2006.12.12일부터는 화학비료 및 원유, 정제유 판매 등 일부 품목에 대한 도소매업 제한이 완전히 폐지되었다. 중국 상무부는 「지방정부로의 외자상업(도소매)기업 설립심사 위탁에 관한 통지(商資函[2005] 94)」에 따라 외자상업(도소매)기업의 설립에 관한 인가권한의 상당부분을 지방정부 상무부문(성급 및 국가급경제기술개발구)으로 이관하

66_ 「외상투자 상업영역 관리방법(外商投資商業領域管理辦法)」

였으나 여전히 유통업의 일부 업종과 품목에 대해서는 중앙 상무부의 인가를 요구하고 있다.⁶⁷ 외자유통기업의 법인 설립시 2006년 개정 「회사법」에 따라 최저자본금요건(3만 위안 이상)이 적용되며, 외자유통기업의 존속기간은 30년(중서부지역은 40년)이고 동 기업의 출자비율은 기본적으로 49% 이하로 제한된다. TV 홈쇼핑이나 전자상거래 분야에 투자하는 경우 중국의 광전총국으로부터 사업인허가를 받아야 하며 상무부로부터는 외자기업 설립에 관한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상무부로부터 최종 인허가를 받은 외자기업(TV 홈쇼핑 또는 전자상거래 기업)은 「외자온라인기업관리방법」을 준수해야 하며, 동 기업에 대한 관리는 광전총국이 한다. 직접판매의 경우 중국 정부는 일정한 설립조건을 갖춘 기업에 직접판매를 허용하나 다단계 판매는 금지하고 있다. 직접판매활동에 대한 관리감독은 「직접판매산업서비스망설립관리방법」(2006.10월부터 시행)에 따르고 있다. 프랜차이즈의 경우 2004.12월에 공포된 「프랜차이즈관리방법」에 따라 외자기업이 프랜차이즈 형태의 유통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특히 동 방법에 의해 타 업종으로 등록한 외자기업도 프랜차이즈 경영으로 사업 범위를 확장할 수 있게 되었으며, 외자 독자 프랜차이즈 기업의 설립 신청도 가능하게 되었다.

법률서비스의 경우, 외국 법률사무소는 대표처 형태로만 주재가 가능하며 업무범위는 중국법률사무(변호사의 신분으로 중국 내륙에서 소송에 참여하는 활동 등)를 포함하지 않는 활동으로 제한되어 있다. 외국 법률사무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이미 본국에서 합법적으로 개업해 있어야 하며 변호사 직업윤리나 업계규율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경력이 없어야 한다. 그리고 대표처의 대표는 직업변호사로 제한되며 각종 요건(자격 취득 국가의 변호사협회 회원,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2년 이상 변호사직에 종사, 형사처벌 경력과 변호사직업윤리, 업계규율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경력이 없을 것)을

67. 민감한 경영범위에 속하는 업종(TV, 전화, 통신판매, 인터넷, 자동차판매 등)에 종사하는 경우와 국가관리가 필요한 중요 품목으로서 「外商投資商業領域管理辦法」 17, 18조에 규정된 제한 제품(강재, 귀금속, 철광석, 연료유, 천연고무, 화학비료, 제품유, 원료, 소금, 담배, 도서, 신문, 잡지, 자동차, 약품, 농약, 식량, 식물유, 사탕, 면화 등)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중앙 상무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두고 있다. 또한, 수석대표에 대해서는 중국이외의 지역에서 3년 이상 변호사 경력이 있어야 하며 당해 외국 법률사무소의 동업자 또는 동등한 직위의 인원이어야 한다는 요건도 두고 있다.

건설서비스의 경우, 외국 업체는 합자와 합작을 통해 현지 외국인투자 건설기업을 설립하거나(1급 시공기업 등록자본금 USD1,000만 이상, 2급은 USD5,000만 이상, 1급 실내장식은 자본금 USD200만 이상) 사전에 외국인 투자공사 등을 수주한 다음 본국에서 발급받는 사업자 등록증, 과거공사실적 등을 토대로 5년 기한의 '외국기업도급자질증명서(外國企業承包工程資質證)'를 취득하여야 한다. 후자의 경우 외국기업이 공사를 도급 받을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되고 있다. 중국정부는 2002.12.1일 「외상투자건축업기업 관리규정」을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외국 건설기업은 2005.7.1일부터는 반드시 중국 내에 현지법인(독자, 합자 또는 합작형태)을 설립하여야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되었다.

부동산서비스의 경우, 현재 홍콩, 마카오, 대만, 싱가포르, 독일, 미국 등의 기업이 호텔, 오피스빌딩, 주택 등 다양한 분야의 부동산 개발에 참여하고 있으며 정부의 세제감면 및 융자지원, 과실송금 관련 우대정책 등이 있다. 그러나 2007년 발표된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에 따르면 중국은 고급 호텔, 별장, 고급 오피스빌딩의 건설과 경영 등을 외국인 투자제한업종으로 편입시켜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06.7월 외국인의 중국 부동산시장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부동산시장 외국자본 진입 및 관리에 관한 의견(關於規範房地產市場外資進入和管理的意見)」을 발표해 외국인의 부동산 구입, 외상투자기업의 부동산 기업 설립, 외국인 투자자간의 중국 부동산시장 투자 등을 제한하고 있다. 2012.1월 개정 시행중인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에서는 고급 호텔, 고급 오피스빌딩, 국제전시장의 건설과 경영 및 토지개발·분양(합자, 합작의 경우만 가능) 등 부동산업을 외국인 투자 제한업종으로 분류하여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고 있다.

금융서비스의 경우, 은행은 지점영업을 허가받기 위해서는 지점 설치 전 2년 이상 사무소를 설치해야 하며 은행지점은 신청 1년 전의 연말 총 자산

이 USD200억 이상이어야 하며 BIS비율이 8%를 넘어야 한다. 보험회사의 영업지점은 상해, 광주, 심천, 대련, 불산 등 5개 도시에만 설치가 가능하고 지사 설치 전 2년 이상 사무소를 설치해야 하며 본사의 자산이 USD50억 이상이어야 한다. 이와 같이 금융기관 진출·영업과 관련하여 사무소 설치신청에 대한 허가, 엄격한 지점 승격요건, 인민폐 업무 제한 등 많은 제한을 하고 있다.

통신서비스의 경우 2001년 WTO 가입 시 양허한 통신서비스 시장개방을 위해 「외국인투자통신기업관리규정」을 2002.1.1일부터 발효시켰으며 이에 따라 중국 내 통신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허용되었다(기본통신서비스는 49%까지, 부가서비스는 50%까지 외국인투자를 허용). 2012.1월 개정 시행 중인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에서도 통신서비스분야의 외국인투자 한도가 기본통신 49%, 부가통신 50%로 제한되어 있다. 2008.5.23일 중국은 유무선 사업자를 포괄하는 종합사업자 육성 및 제3세대 이동통신 분야의 발전을 위해 통신사업자 구조개편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기존의 4대 사업자와 차이나티에통을 합하여 3개의 종합사업자를 설립하였다.⁶⁸ 중국은 2008.9.10일 「외국인투자정보통신기업관리규정 개정」에 관한 국무원의 결정」을 공포·시행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중국 통신서비스에 대한 외국인투자 지분 비율은 기존의 「외국인투자정보통신기업관리규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중국은 온라인 게임 또는 이동부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부가통신서비스 경영허가증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으며, 외국인투자 지분을 50%까지 허용(단, 최저자본금요건은 하향 조정)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통신시장 개방, 공정경쟁여건 조성 및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전신조례를 대체할 수 있는 「전신법」의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고 동 법은 2007년에 전인대상 무위원회 입법계획에 예비 입법항목으로 포함되었으나 아직까지 제정·시

68_ 동 계획에 따라 차이나모바일과 차이나티에통이 통합되어 신 차이나모바일(TD-SCDMA 기반 서비스 제공)이 설립되었으며 차이나텔레콤이 차이나유니콤의 CDMA부문을 인수하여 신 차이나텔레콤(CDMA2000 기반 서비스 제공)이 설립되었고 차이나유니콤(GSM부문)과 차이나넷콤이 통합되어 신 차이나유니콤(WCDMA 기반 서비스 제공)이 설립되었다.



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싱가포르는 방송서비스, 법률서비스, 회계서비스, 엔지니어링 및 건축서비스, 금융서비스 등에서 제한을 두고 있다. 방송서비스의 경우 싱가포르 방송법은 국내 방송사에 대한 외국인지분을 49%까지, 개인 소유지분을 5%까지 허용하고 있으나 싱가포르 공기업의 모회사인 테마섹이 방송, 신문, 케이블 관련기업의 지분 대부분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법률서비스의 경우 외국 법률회사와 싱가포르 국내 법률회사와의 합작, 싱가포르 국내 변호사 고용은 허용되나 싱가포르 법률이 아닌 국제법과 자국 국내법 또는 제3국 법률과 관련된 자문 서비스만 제공할 수 있으며 합작의 형태에 따라 외국 법률회사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범위가 다르다.

엔지니어링 및 건축서비스의 경우 외국인이 엔지니어링 회사를 100% 소유할 수 있으나 대표, 임원 등에 대해 국적요건과 각종 자격요건이 요구된다.

회계서비스의 경우 공인회계사로 개업하거나 회계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싱가포르 회계기업청(Accounting and Corporate Regulatory Authority)에 등록해야 하며 설립 가능한 회계법인의 형태는 회계사무소(개인기업, accounting firms), 회계합자회사(accounting LLP), 회계기업(accounting corporation) 등 세 가지이며 회계법인의 형태별로 파트너 또는 이사회 구성원에 대한 일정 요건이 요구된다.

은행 및 증권업의 경우 역외금융시장과 국내금융시장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으며 역외금융시장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나 국내금융을 취급하는 은행업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고 있다.

한편, 2006.3월 한·싱 FTA가 발효됨에 따라 양자간 서비스무역은 동 협정문에 따르게 되었다. 동 협정문의 제9장 ‘국경간 서비스 무역’에 의거, 서비스 공급자에게 내국민 대우를 보장하고 현지주재를 요구하지 않으며 시장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다만, 내국민대우, 현지주재, 시장접근 등이 적용되지 않는 조치들은 부속서에 명기되어 있다. 싱가포르

포르는 현지인고용, 건축사 자격, 토지감정, 의약품 도소매, 회계, 약사 제공 서비스 관련 등 34건에 대해서는 현재유보를 하고 있고 법률, 방송, 도박, 신문간행, 초·중등 교육, 우편, 신용평가, 부동산, 운송지원 관련 서비스 등 30건에 대해서는 미래유보를 하고 있다.

대만의 경우 WTO 가입으로 대부분의 서비스산업을 개방하였다. WTO 가입 이후 수출입 해운컨테이너운수업이 개방되고 건설업에 있어서도 외국 건설업체의 외국 경영실적을 인정하며 건설업 등급제를 폐지하였다. 그 외에 대만 내 외국변호사의 업무를 허용하고 항공·육상 종합배달 서비스업체는 항공화물운송 도급자 신분을 갖고 자체 차량으로 대만에서 화물 배달 업무를 하는 것을 허용하며 수입영화의 카피 수 및 외국영화 상영 극장 수 제한이 철폐되었다.

2013.6.17일 개정된 「화교 및 외국인 투자 통제 조례(僑外投資負面表列-禁止及限制僑外人投資業別項目, Negative List for Investment by Overseas Chinese and Foreign Nationals)」에 따르면, 시내버스 및 고속버스, 택시업, 관광버스 운수업, 우편업, 우편·저축, 환어음, 민간 공중 서비스(법률), 공중파 라디오 방송, 공중파 TV 방송, 유선 및 기타 유료 방송업, 특수 오락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금지되어 있다. 또한 동 조례에서 송전·배전업(전력공급업), 가스배송관, 수도사업, 자동차 화물, 자동차 컨테이너, 선박 운송·대여, 항공운수업, 공항 서비스업자 및 항공 케이터링업자, 제1분류 전신사업, 토지등기 전문 대리서비스, 케이블 라디오·TV시스템 운영, 위성 라디오·TV 방송 사업이 외국인 투자 제한 업종으로 분류되어 있다.

말레이시아는 통신, 유통(직접 판매), 사업서비스(법률, 건축, 엔지니어링), 금융, 광고, 방송 등의 분야에 대한 장벽이 있다. 기본통신분야 및 부가통신 서비스분야에 대한 외국인 지분은 30%미만으로 제한하는 등 WTO의 기본 정보통신협정의 제한된 부분만을 수용하고 있다(단, 기본통신서비스는 기존 통신운영자의 지분 취득에 국한됨).

금융서비스의 경우, 말레이시아에서 은행업을 하기 위해서는 현지법인 설립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신규 은행업에 대한 인가는 사안별로 검토되어 결정



되며 이슬람 금융에 대한 인가를 우선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2009.4월에 발표된 ‘금융산업 분야에 대한 자유화 조치’에 따라 은행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제한은 상업은행 30%, 이슬람은행과 투자은행은 70%가 적용된다. 또한, 말레이시아 정부는 동 조치에 따라 2009~2012년 중 대형 금융회사에 대해 신규 영업허가(최대 2개의 이슬람은행과 5개 상업은행 및 2개 이슬람 보험회사)를 부여하기로 하였으며 2010년부터 주재국 내 외국계상업은행에 대해 최대 4개의 지점개설을 허용하고 2009년부터 10개의 마이크로 파이낸싱 지점개설을 허용하였다. 그리고 2009.6월부터 Labuan 소재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쿠알라룸푸르 사무소 설립 제한을 완화하고 2010~2011년 중 Labuan 소재 Offshore 은행 및 보험회사 중 요건 충족 금융회사에 대해 실질적인 Onshore 영업을 허용하기로 하였으며 금융산업분야 전문직 외국인 고용 제한을 대폭 완화하였다.

한편, 말레이시아는 2009.4월에 발표된 ‘서비스산업 부문 규제완화’에 따라 관광, 운송, 레저, 임대, 보건 등 27개 분야에 대한 말레이계 투자자본 참여 의무비율(종전 최소 30%) 제한을 완전히 철폐함으로써 동 분야의 중국계 및 인도계 내국인 투자는 물론 외국인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태국의 경우도 금융, 통신, 건설 등의 분야에서 장벽을 갖고 있다. 「외국인 사업법(Foreign Business Act)」에 따르면 서비스업은 그룹 III에 포함되어 외국인지분 50% 미만은 승인 없이 외국인 투자가 가능하며 50% 이상의 소유는 Alien Business Board의 허가가 필요하며 최소한의 투자요건이 요구된다. 이 경우에도 투자에 따른 경영참여에 한하고 직업으로서의 서비스 제공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태국인에게 요구되는 각종 요건(자격증 취득 등)의 충족과 태국거주, 노동허가 취득 등이 필요하다. 태국에서 외국인 지분소유 상한이 49% 이하인 분야에 있어서 외국인이 100%를 투자하고도 51%의 지분을 태국인의 명의를 빌어 등록하고 영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로 인해 소유권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금융서비스분야에 있어서 외국은행지점(Full Branch) 인가기준으로 30억 바트의 채권구입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과실송금에 대해 10%의 세금을 부

과한다. 보험업의 경우 외국인투자지분을 25%로 제한하며 신규회사 설립 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통신분야는 IMF와의 합의에서 민영화를 약속했지만, 기존 업체외 제3사업자를 허용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는 중이다. 이 방식에 있어서도 시설을 확보하고 서비스하는 것은 허용하지만 전매는 금지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시장접근, 내국민대우, 경쟁)은 2006년에 시행할 예정으로 2001.11월에 통신서비스법을 개정하여 통신분야 외국인 지분허용 한도를 49%에서 25%로 축소시켰으나 기존 업체의 반발로 다시 49%로 환원되었다.

한편 건설분야에서 외국 건설회사는 등록을 해야 하고 태국 내에서 사업설적이 있어야 한다. 또한, 태국 내에서 건축사나 엔지니어로 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국적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태국은 외국의 건축, 엔지니어링, 건설회사가 입찰에 참가할 때 等級分類(billing rate)에 의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 외에 관광안내원 직종은 외국인에게 미개방되어 있으며, 컴퓨터관련서비스, 음반제작 등 시청각서비스, 외항화물수송, 화물운송 대리 등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지분을 49%로 제한하고 있다.

필리핀은 「외국인 투자법」(1991년)에 따라 방송매체, 엔지니어, 의료업, 회계업, 설계업, 화학관련분야, 통관중개업, 법률용역 등 전문 서비스 분야와 소매업(자본금 USD250만 미만) 등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업종에 따라 외국인 지분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다. 외국인 지분 한도는 국내 및 해외인력 수급업, 건설 및 건설관련 보수계약(공공사업 분야) 분야, 방위 관련 건설업이 25%까지 허용되며 광고업은 30%, 부동산 소유, 공공시설 운영관리, 관급공사, 국영 및 공공기업에 관한 물자조달업, 국내 및 해외건설업·공공시설 건설업(민간 발주공사), 납입자본금 USD20만 미만의 국내 영업행위 등은 40%까지 허용된다.

인도네시아에서는 2007.4월 개정 투자법이 발효되었으며 동 법과 관련 시행 세칙 및 대통령령에 외국인투자가 가능한 분야와 외국인 지분 상한 등 각종 제한사항이 명시되어 있다. 외국인투자가 허용된 서비스 분야(외국인



지분 상한 등 제한사항)는 건설업(최대 67%), 스튜디오·필름가공처리·더빙·프린팅·복사 등 영화 관련 서비스 산업(최대 49%), 병원 및 병원서비스(최대 67%, 인도네시아 전지역), 우편서비스(별도 허가 필요, 최대 49%), 호텔·게스트하우스(최대 51%), 기타 숙박업(최대 49%), Talam 레스토랑(최대 51%), Non-Talam 레스토랑(chleo 49%), 오락·엔터테인먼트 사업(최대 49%), 운송서비스(화물·컨테이너운송, 최대 49%), CRS(최대 53%), 유선전화(최대 49%), 이동통신 및 위성 전화(최대 65%), 멀티미디어서비스·인터넷서비스 제공자(49%), 생명보험, 손해보험, 재보험(최대 80%) 등이 있다.

베트남은 국제간 또는 지역 내 통신망의 건설 및 운영, 신문·라디오·TV사업, 컨설팅 서비스업(기술 컨설팅 제외), 관광업, 문화 관련업(기술적 자료 인쇄, 포장 인쇄, 상표 인쇄, 섬유·의류·가죽·신발 인쇄, 애니메이션 영화에 대한 컴퓨터 그래픽 인쇄, 오락 및 스포츠 분야는 제외) 등에 대해서 외국인 투자가 제한되고 있어 정부부처의 엄격한 심사와 정책적인 판단을 거쳐야만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투자가 허가된다고 하더라도 합작투자나 경영협력계약의 형태만 가능하다(업종에 따라 설립 형태 상이). 한편, 무역업, 도소매업, 유흥음식업 등은 외국인 투자가 제한되며 결혼소개업, 직업소개소 등은 외국인 투자가 금지되어 있다.

라오스는 공공의료 및 문화유산 등과 관련된 분야의 외국인투자는 금지되거나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가능하다. 관광업에서는 호텔(3성급 이상) 및 레스토랑의 경우 100% 외국인투자를 허용하는 반면, 3성급 미만의 호텔과 게스트하우스는 외국인투자를 불허하고 있고, 관광안내업의 경우 합작투자만 허용한다. 라오스는 외국인 투자법에 의거 인적자원개발 사업(교육사업, 교육 장비생산산업, 학교 설립), 직업 훈련, 보건과 같은 교육 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장려하고 있다. 법률서비스의 경우 외국 국적 변호사가 라오스 법정에서 의뢰인을 변호할 수 없고 라오스인이라도 외국에서 취득한 변호사 자격은 라오스에서 효력이 없다. 통신서비스의 경우 외국인 투자자나 외국 법인은 라오스 국영기업 또는 정부와 합작을 해야 한다.

미얀마는 우편·통신, 항공, 철도, 은행·보험, 방송·TV, 전력생산 등의 분야

에 대해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며, 동 분야에 외국인이 투자하기 위해서는 해당분야의 국영기업과 합작투자를 하거나 정부의 특별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 외에도 해운은 미얀마 국영기업(Myanmar Five Star Line)이 독점하고 있다.

인도는 외국인투자 정책상 제조업은 대부분 100% 외국인투자가 허용되나 서비스업은 지분 제한, 영업범위 제한 등 다양한 제한이 있다. 복권, 도박, Business of Chit Fund(우리나라의 계(契)와 유사한 금융), Nidhi Company(신용조합의 일종), 그 외 민간투자 금지업종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가 금지되며, 방송(세부분야별 지분제한 있음), 공항(기존공항에 대한 투자로 외국인지분율이 74% 이상인 경우), 택배서비스, 신용정보제공(지분제한 74%까지), 출판매체(뉴스·시사분야는 지분제한 26%, 과학, 전문잡지는 100%까지 가능), 유무선통신사업(외국인지분율 100%인 경우), 소기업 생산품 거래, 위성설치 및 운영(지분제한 74%)의 경우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외에도 보험(26%), 국내 정기선항공(49%), 전세기, 화물기, 비정기선항공(74%), 유무선통신사업(외국인지분율 49% 이내)은 자동승인대상이나 외국인지분상의 제한이 있다.

유통업의 경우 현재 소매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이 최대 51% 까지 허용되고 단일 브랜드만 판매할 수 있어 백화점·쇼핑센터 분야에 외국기업이 진출할 수 없다.

은행의 경우, 최초 투자시에 USD 25백만의 최소투자자본 제약이 있으며 민영은행에 대해서는 74%, 국영은행에 대해서는 20%의 외국인 투자지분 한도가 존재한다. 또 합작투자시 이사회에서 의결권은 10%까지만 인정된다. 영업상 규제로는 순여신의 32%를 인도 정부가 정한 우선지원부문에 대출하거나 그렇지 못한 경우 해당 금액을 인도 중소기업은행(SIDBI)에 예치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자기자본 20% 이내의 동일인 여신 한도가 있으며, 예수금과 차입금의 25% 해당 금액을 인도 국채에 투자해야 하는 의무 규정이 있으며, 루피화 대출만 허용(외화대출 불가)되며 모든 은행은 유동 부채의 5%를 중앙은행 지불준비금 구좌에 예치해야 한다. 인도 정부



는 2005.2월 외국은행 진출에 관한 로드맵을 발표하였으며, 향후 인도 은행 분야의 개방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보험의 경우 외국기업의 지점설치가 허용되지 않고 합작사만 영업을 할 수 있다. 보험회사 설립시 최소자본금 요건(10억 루피)이 요구되며, 인도 보험회사에 대한 외국인투자지분 한도는 26%이며, 2013.9월 현재 보험업에 대한 외국인지분율 한도를 49%까지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보험법안(Insurance Bill)이 의회에 계류중이다.

해운분야에서는 인도 정부화물 운송에 대하여 인도 국적선사의 우선 적취권으로 인해 외국선사는 정부화물 운송권 획득에 불리하다.

뉴질랜드는 건설, 교육(초·중·고등), 환경, 금융, 의료, 관광, 해운 등의 분야에 있어 특별한 장벽이 없으나 통신, 항공 등 일부 분야에 대해서는 지분제한요건을 두고 있다. 통신서비스의 경우 뉴질랜드 통신회사에 대해 내국인 및 외국인이 10% 이상 투자하는 경우 정부 및 통신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외국인 및 외국단일기업이 49.9%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승인을 필요로 하며 통신회사 이사회의 절반 이상이 뉴질랜드 국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두고 있다. 전문가서비스의 경우, 의사, 변호사 및 회계사 등에 대한 자격요건이 있으나 국적에 따른 차별은 없다. 항공서비스의 경우 국제선 운항 항공사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49%로 제한된다.

호주는 서비스 분야 중 부동산, 금융, 항공, 해운, 통신, 언론 및 방송 등의 분야에 있어 외국인투자 제한사항이 있다. 해운의 경우, 선박을 호주에 등록하려면 호주인이 소유주거나, 호주 운영권자에 의해 임차된 선박이어야 한다. 통신서비스의 경우 Telstra에 대한 외국인 투자 한도(전체 35%, 개인 5%)가 있다. 시청각서비스의 경우 외국인이 TV 및 라디오 방송의 지분 중 5% 이상을 투자하거나 신규 설립하는 경우 정부의 개별심사를 받아야 하며, 그 외에도 지분제한요건(사업용 TV 20%(개인 15%) 이하, 유선 TV 35%(개인 20%) 이하, 라디오방송은 지분제한이 없음)과 기타 제한사항(사업용 TV 이사회 구성 제한(외국인 20%까지 허용))을 두고 있다. 신문사의 경우 외국인 투자 건별로 타당성을 심사하는 등 규제가 매우 심하며, 외국인

투자 한도(주요 도시 30%(개인 25%), 그 외의 소규모 도시 50% 미만)도 있다. 항공운송서비스의 경우 국내선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100% 허용(기존 및 신규 항공사 포함)하나, 국제선은 49%까지 외국인 투자지분을 허용하고 있다(Qantas 항공의 경우 외국인 투자 한도는 49%, 외국 항공사의 지분 소유 한도는 35%, 1인당 지분 소유 한도는 25%). 공항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49%까지 허용하나 개별 항공사는 5%까지만 공항 지분을 보유할 수 있다.

영화산업의 경우, 호주내 영화 제작을 유도하기 위해 세 가지의 지원을 해주고 있다. 첫째, 호주기업이 영화제작자이거나 또는 외국 제작자가 호주에 영화제작사를 설립하여 호주와 관련된 영화를 촬영할 경우 Screen Australian Administrators에서 판단하여 제작비의 40% 또는 총비용의 20%를 환급해주며 둘째, 영화 제작 규모가 총 A\$1,500만 이상이면서 영화제작비 중 지출비용의 70%가 호주에서 사용된 경우 제작비의 15%를 돌려주며 셋째, 영화의 특수효과(Post, Digital, and Visual Effects, PDV)를 A\$500만 이상 호주에서 사용한 경우 비용의 15%를 환급해 준다.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정부기관별로 특별허가를 받아야 투자가 가능한 업종이 있다. 석유 및 천연가스의 판매, 파이프라인·교량·터널 등의 설계, 시공, 운영. 보수는 각료회의의 특별허가를 받아야 하며, 하수처리시설, 관개시설의 시공, 운영, 수리 등은 내무부의 특별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의약품, 농산품의 판매는 보건부로부터 은행, 증권업, 보험업은 중앙은행으로부터 특별허가를 받아야 한다.

우크라이나의 경우, 외국인이 전문직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인가는 해주고 있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는 등 문제점이 있다. 통신서비스의 경우, 인터넷이 통제되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서 인터넷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통신법(2003.11.19 제정)에 의거, 인터넷 교신의 추적에 필요한 장비를 구비해야만 한다. 금융서비스의 경우, 보험업의 경우 우크라이나에 등록된 보험회사만이 보험업에 종사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는 그동안 외국 은행 및 외국 보험사의 지사 설립을 금지하였으나



2006년 WTO에 가입하면서 이를 허용하고 있다. 그 외에도 출판, 방송 등의 분야에 외국인 투자가 금지되어 있다. 방송의 경우 외국인은 TV방송국을 설립할 수 없고 기존방송국에 투자할 경우 외국인 지분은 30%미만으로 제한되며 외국인의 방송투자는 국가 방송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카자흐스탄의 경우, 운송서비스는 특별한 규제가 없으며 양국 기업간에 체결한 계약조건이 우선시된다. 건설의 경우, 카자흐스탄의 건설 표준 및 규칙에 부합하는 라이선스를 취득해야만 현지 건설 시장에 참여가 가능한데 이때 정부의 허가과 함께 시 당국으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모두 받아야 한다. 카자흐스탄은 은행법에 따라 외국은행의 지점 설립을 금지하고 대표사무소만 허용하고 있으나, 정부의 규제 완화로 현재 현지법인을 설립과 카자흐스탄 은행의 지분 인수가 가능하다. 또한 카자흐스탄은 외국 은행과 보험회사가 카자흐스탄에서 영업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합작기업을 설립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엔지니어링, 건축설계 등의 분야에서는 현지법인을 설립해야 하는 요건이 있다. 그 외에도 카자흐스탄 보안에 관한 법(the law on national security)에 따라 통신서비스의 외국인지분을 상한이 49%, TV, 라디오 등 대중매체의 외국인지분을 상한이 20%로 제한된다.

몽골은 건축업 분야에 일부 제한을 두고 있다. 몽골 정부는 2009년부터 외국인이 건축업 분야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투자자가 본국에서 건축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증서(건설업 면허)를 제출해야 신규 건설업체 설립 허가를 발급하고 있고, 기존의 건설업체에 대해서도 동일한 조건으로 매년 연장허가를 해주고 있다. 또한 외국인투자기업은 현지인을 우선 채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나, 높은 기술력 또는 특별한 자격요건을 요구하는 직무에 있어 외국인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 노동부 산하 고용서비스센터에서 고용허가를 받아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다. 2012.5.17.일 전략분야외국인투자조정법이 몽골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외국인이 언론, 금융, 통신 분야에 종사하는 몽골기업의 지분을 49%를 매입할 때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외국인 투자지분율이 49%를 초과하거나 투자금액이 1천억 투그릭 이상일 경우 의회의 의결을 통과해야 한다. 2013.9월 몽골 정부는 전략분야외국인투자조정법이

외국인투자환경을 악화시킨다고 판단하여 동 법을 폐지하였으며, 현재 신 투자법 제정이 추진중이다.

아제르바이잔은 대부분의 서비스 분야에 있어 상업적 주재에 의한 서비스 공급(mode 3)을 허용하는 경우가 많으나 법률, 통역 등의 분야에서 자연인의 이동(mode 4)에 의한 서비스 제공은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통신서비스는 인터넷, 위성통신 등을 제외하고는 개방되어 있지 않으며, 건설업의 경우 외국인 엔지니어 수에 대한 제한(외국인 엔지니어 수가 내국인 엔지니어 수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이 있으며, 은행, 병원, 학교를 설립하는 경우 일정 비율 내국민 이사 또는 경영진이 포함되도록 요구한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서비스분야의 개방 수준이 낮았으나 2005.12월 WTO 가입과 함께 다수의 부문에서 상당한 개방을 약속하였다. 이에 따라 그동안 외국인투자 지분 상한이 50% 미만으로 제한되었던 보험, 금융, 통신 등의 분야에서 지분제한 완화가 이루어졌다. 2010.9월 기준 주요 업종의 외국인 투자 지분 제한은 보험업이 60%, 금융업이 70%, 통신서비스업이 70%, 도소매업이 75%이다. 보험업의 경우 외국인 지분제한요건과 함께 최소자본금요건(보험회사 1억 리알, 재보험회사 2억 리알, 두 가지를 모두 취급하는 경우 3억 리알)도 충족해야 한다. 그 외에도 2007.3월에는 그동안 외국인투자를 불허하던 영화·비디오테이프 유통, 도소매 유통서비스(의약소매업 및 개인 약국 포함), 상업 대리점, 도시간 열차 여객운송, 항공운송 등에 대해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였다.

파키스탄은 2004년 외국인투자에 대한 자본금 적립 요건, 과실송금 제한 등을 철폐하였으며 최소투자금(비금융 서비스분야 USD15만, 교육·의료 등 사회서비스 분야 USD30만) 요건을 충족하면 100% 지분 소유가 가능하다. 통신서비스 민영화 정책에 의해 파키스탄통신회사(PTCL)가 2005년 이후 민영화되었으며, 현재 유무선 통신서비스 모두 100%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고 있다. 금융서비스의 경우 파키스탄 정부의 민영화정책에 따라 현재 81% 이상의 상업은행이 민영화되었다. 외국은행은 USD50억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거나 파키스탄이 회원국으로 참여하는 지역기구(SAARC, ECO



등)의 가맹국에 본점을 둔 경우 파키스탄 내에 100% 지분을 보유한 지사 설립 및 영업이 가능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 외국은행은 파키스탄 국내은행과 합작(지분 상한은 최대 49%)을 해야만 영업을 할 수 있고, 최소 지불준비금 100억 루피(약 USD1.16억)를 보유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보험업의 경우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 최소 투자자본 요건(USD200만 이상)이 있으며 외국인 투자지분 상한은 51%이다.

이란은 화물운송에 있어 이란 국적 기업 우대제도가 있다. 해운의 경우, 500mt 이상의 화물을 수입할 때 외국 선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고 화물주가 화물가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무부에 납부하도록 하는 등 국적선을 우대하고 있다. 다소간의 차이는 있지만 육상 및 항공 화물운송에도 자국기업 우대제도가 있으며 정부(국영기업 포함)화물, 민간화물간 구별 없이 적용된다. 그러나 동 제도의 문제점으로 인해 향후 폐지될 것이 예상되고 있다.

카타르는 2010년에 개정된 「외국인자본투자법」에 따라 외국인이 상무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으며 보건, 교육, 관광, 건설·기술·IT·문화·스포츠·여가·유통 분야에 단독투자(100% 지분보유)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금융·보험 분야는 내각의 승인을 받아야 투자할 수 있으며, 법 No.8(2002)에 따라 외국인은 상업대리점업에 종사할 수 없다.

UAE에서 회사를 설립할 때 경제개발부(DED), 관광청, 산업단지관리청 등 으로부터 관련 사업면허(Business Licensing)를 발급받아야 한다. 사업면허는 4가지가 있는데, 서비스업에서 유통업, 은행·보험업, 호텔업, 운송업 등은 상업면허(Commercial License)를, 회계·법률 등 전문직서비스와 예능서비스 기업은 전문면허(Professional License)를 받아야 하며, 호텔업, 숙박업, 여행업에 종사하는 기업은 관광면허(Tourism License)를 받아야 한다. 그 외 제조업 기업은 산업면허(Industrial License)를 받아야 한다. 다만, 프리존 안에서는 사업 활동의 성격에 따라 별도의 사업면허(Service License, Trading License, Industrial License)를 받아야 한다. UAE는 기업의 형태에 따라 소유권, 경영진·이사회, 최소자본금 등에 대한 제한이

있다. UAE에서 사업 면허를 받은 후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관련 인허가 정부기관으로부터 각종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쿠웨이트의 경우 외국 건설회사는 현지 대리인을 통해서만 영업(P/Q, 입찰, 시공 등)할 수 있으며 공사에 필요한 인력수입·송출 및 장비·자재 수출입도 반드시 대리인을 통해야 한다. 소요되는 자재의 경우 쿠웨이트 제조업체의 독과점이 허용되어 쿠웨이트 현지나 GCC 국가에서 생산 가능한 제품의 가격이 수입제품보다 10~20% 더 비싼 경우에만 수입이 허용된다. 인력취업문제가 대두되어 일정수의 현지 인력고용을 강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불이익을 주는 제도가 2003.10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금융업의 경우 그동안 외국인은 쿠웨이트 은행의 지분을 49%까지 취득할 수 있도록 제한(50% 이상 취득시 쿠웨이트 중앙은행의 승인 필요)하였으나, 2004년 동 제한이 철폐되어 외국인이 쿠웨이트 은행의 지분 100%를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

예멘은 외국인이 이동통신서비스(국제위성개인이동통신서비스 포함) 및 인터넷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고 있으며,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입법규제는 없다. 법률서비스의 경우 극히 제한적으로만 외국 변호사의 활동을 허용하고 있고, 회계감사서비스는 외국인이 제반 요건(예멘인 회계사 1인 이상과 공동설립, 예멘 당국에 모든 파트너 등록, 임원 중 예멘인 1명 이상 포함, 기타 직원의 2/3 이상 예멘인으로 구성)을 충족하는 경우 회계·감사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예멘은 경영 컨설팅 서비스를 위한 외국 회사의 지점 설립은 허용하나 소매업의 외국인투자는 허용하지 않으며, 상업은행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45%까지만 허용하고 있다.

오만은 WTO 회원국에 대해 컴퓨터서비스, 통신서비스, 은행 및 기타금융 서비스에 대한 외국인 단독투자를 허용하였다. 이에 따라 외국인은 상공부의 승인을 받으면 동 분야에 100% 단독 출자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다만, 오만에서는 동일 국적의 은행은 2개 까지만 설립이 가능하며, 은행 설립시 최소자본금은 USD1,300만 이상으로 제한된다.

요르단은 IT, 리스, 은행 및 보험, 병원, 호텔, 통신, 환경, 케이터링, 선박소유, 비행기 보수유지 분야 등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를 100% 허용하고



있으며, 건설, 도소매, 운송, 폐기물 처리, 수출입서비스, 환전, 식당, 광고 등은 외국인 투자를 50%까지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보안 및 사설탐정, 통관 서비스, 택시·트럭·버스 등 도로운송서비스(여객 및 화물)의 경우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고 있다.

바레인은 제1종 우편이 정부 독점이며, 부동산 서비스업과 부지·건물의 임대·관리, 언론사와 출판사, TV·라디오·영화의 제작·관리·배급, 운수, 해양 크루즈, 운전연수, 오토바이 대여, 렌터카, 콜택시, 석유제품판매(주유소 등), 공공기관 행정지원서비스, 이슬람 성지순례 서비스, 외국인 노동력 공급, 상업신흥소 등은 바레인 국민과 바레인 기업에게만 허용을 하며 외국인 투자는 금지된다. 부기·회계 서비스, 경주용차량 연료 판매, 화물 통관은 GCC 국민·기업에게만 영업을 허가한다. 한편, 무역업은 외국인 지분율을 최대 49%로 제한하며, 관광 및 여행사무소는 바레인 파트너가 있어야 하고, 의료클리닉 및 의료센터는 의사자격을 갖춘 바레인 인이나 바레인 거주 GCC 국민에게만 의료사업 라이선스를 발급하고, 약국 또한 바레인인 약사가 자본의 50% 이상을 소유해야만 영업할 수 있다.

레바논은 여타 중동국가와 다르게 내·외국인 투자를 차별하지 않고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정책(인센티브 제도 운영, 투자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레바논은 자국의 정치적 불안정 요인을 고려하여 ‘전쟁·내란·몰수’의 위협으로부터 외국인투자를 보호해주는 NIIG (National Institute for Investment Guarantee)를 설립하였으며, ‘외화송금 및 전쟁 리스크’로부터 외국인투자를 보호해주는 MIGA(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에 가입(건당 최고 5,000만 달러까지 보상)되어 있다.

터키에서는 국제입찰의 경우 터키 은행에서 발급하는 입찰보증서를 제출해야 되며 낙찰 후에도 선수금 환급보증서, 계약이행 보증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된다. 보증서 발급시 은행이 정부에 납부하는 Stamp duty가 보증서 금액의 0.5%이며 동일 보증서의 간단한 기간 연장 및 내용 변경에도 동일 요율의 Stamp duty를 부과함으로써 과도한 비용 부담을 주고 있다. 서비스분야의 외국인투자는 금융 등 일부 분야의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하지

만 대부분의 분야에서는 개방이 되어 있다.

이스라엘은 원칙적으로 외국인투자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통신서비스 분야에 있어 외국인 지분 상한(국제전화 74%, 휴대전화 80%, 케이블TV 74%)을 두고 있다. 그리고 은행업의 경우 지점 설립시 이스라엘 중앙은행으로부터 허가를 취득해야 하며 이스라엘 정부가 정하는 일정한 기준과 임원의 국적요건(이사의 2/3가 이스라엘 영주권자) 및 CEO의 거주요건(항구적인 이스라엘 거주자) 등을 충족해야 하며 그 외에 자본비율에 관한 규제 및 국제거래에 관한 규제는 없다. 관광업의 경우 호텔, 여행사에 대한 등록요건이 있으며 여행사는 이스라엘 정부가 공인한 여행에 관한 전문가를 최소한 1명 고용해야 한다.

가나는 노점상, 시장소매상 등에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것 외에는 유통업에 있어 별다른 제한사항이 없다. 이미용업, 도박·복권업 등과 같은 업종과 회계, 세무, 법무 등 고급 지식서비스 부문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가 제한되고 있으며 택시업의 경우 택시 10대 이상을 소유할 경우 외국인 투자가 가능하다. 가나에서 호텔,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이나 여행업체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관광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남아공은 대부분의 서비스 시장을 자유화하고 있으나 WTO/GATS에 의한 양허에는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통신서비스의 경우 국영전화회사(Telkom)가 독점을 하고 있어 외국 기업의 진출이 거의 불가능하며 위성통신사업의 경우 외국계 위성통신 사업자에게 매우 높은 사업면허 취득비용을 부과하는 등 규제가 불투명하다. 유통서비스의 경우 주요 국내 및 유럽계 외국기업(Makro, SPAR, Woolworth 등)의 과점 구조가 형성되어 있고 이들이 구축하고 있는 유통망 외에 새로 유통망을 구축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사업 진출이 쉽지 않다.

케냐는 보험과 정보통신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지분을 각각 66.7%와 70%로 제한하고 있으며, 그 외에 언론 분야에도 지분 제한요건을 두고 있다. 케냐는 나이로비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 지분을 75%까지 허용하고 있다. 한편, 케냐 정부는 관광업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



를 장려하고 있다.

에티오피아는 우편, 송전, 항공 등은 정부 독점이며, 통신서비스의 경우 에티오피아 정부와 합작투자를 요구한다. 그리고 은행·보험 등 금융, 방송, 법률, 재래 의학, 광고, 운송 등은 에티오피아 국민만이 투자할 수 있다.

리비아는 건설시장에 많은 제한이 있다. 리비아 정부는 국내 고용 확대를 위해 2006.11월부터 토목건축분야에 진출하는 외국 기업에 대해 자국기업과 합작법인(최소자본금 100만LD 이상)을 설립하도록 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외국기업에 대해 최대 65%까지 지분을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⁶⁹ 토목건축 공사에 대한 자국기업 우대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외국 기업이 리비아 발주처와 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 1개월 이내에 공사계약금액의 2.01%를 등록세로 납부해야 한다. 리비아에서 건설공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록(공사종류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산업경제통상부, 지방자치단체, 상공회의소 및 국영석유회사(NOC) 등에 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의 유효기간은 참여대상 공사의 종류, 업체의 실적 등에 따라 1년, 3년, 5년 등의 제한이 있다. 그리고 외국 건설인력은 비자와 함께 공사별로 업체에 부여되는 외국 건설인력의 사용 허가증인 'Form B'를 발급받아야 한다. 비자와 Form B의 유효기간이 통상 1년이기 때문에 매년 갱신이 필요하다.

이집트는 여타 국가와 달리 통합투자촉진법에 외국인투자가 허용되는 분야를 한정하여 발표하는 포지티브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동 법에서 외국인투자가 허용되는 분야는 총 24개이며 이중 서비스분야는 호텔, 국제해운, 항공 운송, 금융리스 등 다양하다.

모로코는 통신, 운송, 금융 등의 서비스 분야에 외국기업의 참여를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다. 금융서비스의 경우 외국 금융기관이 지점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해당국가 금융당국의 의견서를 모로코 중앙은행(BAM)에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통신서비스의 경우 기간통신, ISDN 서비스에 대해

69_ 특별한 경우 발주처가 총인민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외국기업이 단독으로 지사를 설립하여 시공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서는 외국인의 참여가 제한되며 모로코 통신(Maroc Télécom)의 유무선망 사용 의무가 있으며 국제 휴대전화 서비스 사업자는 모로코 내에 법인을 설립해야 한다. 관광서비스의 경우 호텔 등에 대한 투자와 여행업계 등에 많은 인센티브가 제공되지만 외국 여행사의 지사 설립시 사업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광 가이드업은 모로코인에게만 허용되고 있다.

코트디부아르는 보건, 여행업, 법률, 회계 등의 분야에 외국인이 투자하는 경우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외국인의 지분이 과반수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리고 외국 회계사의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코트디부아르 국적의 회계법인에서 근무해야만 코트디부아르 회계사협회에 가입할 수 있으며 법률서비스 분야에서 근무하는 데에는 국적요건이 부여되지 않으나 변호사로 등록하거나 법정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코트디부아르 국적이 있어야 한다.

과테말라는 통신서비스 분야에서 외국인 대주주를 허용하고 있으며 법률가, 의사, 회계사 등 모든 전문직종의 경우 국내에서 시험을 통해 합법적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활동에 제한이 없다. 운송서비스의 경우 육상운송회사는 40%, 항공운송회사는 49%의 외국인 투자지분 제한이 있었으나 2004. 1.1일 동 제한이 철폐되었다. 그 외에도 과테말라는 보험, 미디어 등 일부 분야에서 제한을 두고 있으며, 카지노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금지하고 있다.

도미니카공화국은 금융서비스 및 통신에 관한 GATS 의정서에 가입을 하고 있다. 회계, 법률, 건축, 엔지니어링 등의 분야는 개방을 하지 않고 있으며 관광가이드 및 카지노딜러는 국적요건이 부과된다. 그 외에 공공서비스, 매스미디어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특별법에 따라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금융업과 보험업의 외국인 지분은 49%로 제한되어 있다.

브라질은 WTO 통신서비스협정, 금융서비스협정 등을 아직 비준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제한적 투자진출법, 행정절차의 투명성 결여, 법규의 자의적 적용, 특정분야에 있어서 외국자본 참여제한 등의 제한사항이 존재하고 있다.



통신서비스의 경우 외국인 참여지분제한은 존재하지만 최근 여러 가지 자유화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다. 1996년 외국인에 대한 이동전화 서비스시장 개방이 이루어졌고(외국인 절대다수 지분보유는 불허), 1997년에는 국영전화회사인 Telebras가 외국인 지분참여허용과 함께 민영화되었다. 고정회선 분야 등에 있어 접속료를 포함하여 불리한 사항들이 있어 신규기업의 관련 시장 진출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휴대전화를 비롯한 통신기기를 브라질 시장에 유통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국(ANATEL)의 품질 검사를 거친 후 강제인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시청각서비스에 있어서 브라질은 모든 영화, TV제작물은 국내에서 인쇄되어야 하고 영화, TV의 컬러인쇄물은 직접수입이 금지되어 있다. 영화산업의 경우 스크린쿼터제도(1개 상영관 최소 35일, 연간 2개 이상 국산영화 상영)가 시행되고 있다. 또한, 국내영화산업진흥을 위해 2002년에 영화산업진흥법을 제정, 영화진흥위원회(Acine)를 설립하였으며 외국영화, 외국연예 제작물 및 방송프로그램물에 일정세금을 부과하여 기금을 조성, 동 기금을 국내영화진흥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지상파 TV분야에서는 그동안 외국인투자를 금지해 왔으나 2002년부터 외국인투자지분 제한(30%까지 허용)과 프로그램 편성 비율 제한(국내제작 프로그램 80% 이상)을 두고 허용을 하였다. 외국인이 브라질의 유선사업에 참여할 경우 지분제한은 49%이며 브라질 내에 본부를 가지고 있고 10년간의 영업 경험이 있어야 한다.

보험서비스의 경우, 1999년 브라질 정부는 이 분야의 국내외 지분참여 제한을 철폐함에 따라 외국 보험회사들, 특히 미국 보험회사들은 기존 브라질 내에 설립되어 있던 보험회사와 합작형태로 브라질 보험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재보험은 브라질 정부소유 재보험공사(IRB)가 독점해 왔으나 보완법률(Complementary Law 126, 2007.1월)에 의해 재보험에 대한 정부 독점이 해제되었으며 관련 행정 규제 사항은 국가사보험협의회(National Private Insurance Council)가 담당하고 있다. 비보험 금융서비스 산업에 대해 브라질 정부는 1997년 WTO 서비스협정에 서명을 하였지만 의회의 비준을 얻지 못하고 있다. 비보험 금융시장에 대한 외국자본의 참여는 개개사

안별로 브라질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브라질 정부는 2007.3.25일부로 영화 비디오테이프 유통서비스, 의약소매 및 개인약국업을 포함한 도소매유통서비스, 상업대리업, 통신서비스, 위성 송수신서비스, 도시간열차승객수송서비스 및 항공운송서비스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였다.

아르헨티나는 도로건설사업에 있어 20~30년간 통행료 징수권 입찰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BOT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리고 금융서비스의 경우 외국인 비보험 금융서비스 업체에게 내국인 대우 및 완전한 시장접근을 허용하기로 WTO에 양허하였으나 외국인 소유 은행지점에 대해서는 대출한도에 제약을 두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특별법에 따라 TV 방송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에콰도르는 외국기업이 원유 해상수송을 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하며 라디오, TV 방송서비스의 외국인 투자 한도는 25% 이내로 제한된다.

파나마는 대부분의 서비스 분야를 완전개방하고 있고 현재 전기, 통신, 항만, 도로 등의 국영기업 중 대부분을 외국기업에게 민영화한 상태이다. 다만, 도박, 공공서비스(수도·전기·전화·방송), 금융서비스(은행·보험·재보험, 주식·증권거래, 리스, 신탁) 등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 규제가 있으며, 소매업(농업, 공업 분야 기업의 자사 제품 판매 제외)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지 않는다. 한편,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교육부 장관(초·중·고등학교) 또는 파나마 국립대총장(대학교)의 승인을 받으면 파나마에 관련 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온두라스는 관광업, 호텔업, 금융업에 외국인이 투자하는 경우 정부의 특별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외국인 변호사, 의사, 엔지니어, 회계사 등의 활동은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또한 기초 보건서비스, 통신, 전기 송전·판매, 항공운송, 보험·금융업, 사교육업 등도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파라과이는 서비스시장이 대부분 개방되어 외국 기업의 진출에 특별한 장벽이 없으나 일부 분야에 제한이 있다. 해운서비스의 경우 파라과이(내륙국



가)강을 운항하는 바지선은 파라과이 국적선(내국인 참여지분 50%)으로 제한되며 통신서비스의 경우 유선전화 및 인터넷 해외연결망 사업은 파라과이 국영통신공사(COPACO)가 독점하며 무선통신분야는 외국인 지분제한 50%로 개방되어 있다. 금융서비스의 경우 외국계 금융회사가 지점을 개설하거나 기존 금융기관을 인수하는데 특별한 제약이나 차별대우가 없다. 전문직서비스의 경우 아순시온 국립대학에서 취득학위에 대한 자격심사 및 인증을 받아 해당 협회 등록과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교육서비스의 경우 학교장에 대한 국적요건(파라과이 인으로 제한) 외에는 외국인이 학교를 설립하는 것에 제한이 없다. 그 외에 송전망 운영에 대해 파라과이전력공사(ANDE)가 독점을 하는 등 제한사항이 있다.

우루과이는 보험 및 은행업, 정보통신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으며, 국가 독점인 유선전화, 전기·수도·가스 등도 외국인투자를 금지하고 있다.

칠레는 서비스 무역에 있어 WTO GATS 상의 양허사항 보다 더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이행한 국가이다. 고용창출, local inputs 사용도 등에 따라 규제할 수 있는 수평적 제한(horizontal limitation)을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다. 다만, 외국인이 대중매체에 대한 투자를 할 때에는 외국인투자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외에도 연안운송업(900톤 이상의 화물운송업만 허용), 항공업(대표 국적요건, 칠레 내 본사 설치 요건), 방송사업(대표 국적요건) 등에 외국인투자 제한 조치가 있다.

콜롬비아는 법률서비스의 경우, 콜롬비아 법에 따라 허가된 내국 또는 외국 법무법인만 허용되기 때문에 외국 법무법인은 현지 업체와 합작법인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콜롬비아 법에 따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만이 변호사로서 활동이 가능하다. 회계·감사분야에서는 현지법인 설립이 허용되고 있으며 정보처리사업의 경우 상업적 주재만을 허용하고 있으며 국경간 공급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사업서비스의 경우, 외국인이 콜롬비아에서 서비스업을 하기 위해서는 ENT를 거쳐야 하며 회계, bookkeeping, 건축사, 엔지니어링, 도시계획, 의료 및 치과진료서비스는 거주자에 한하여 상업적 영업

활동을 허용하고 있다. 10인 이상을 고용하는 외국인업체는 외국인이 일반 직의 10%, 전문직의 20%를 넘을 수 없다. 광고분야는 내·외국 광고방영 비율에 있어서의 제한이 없으며 광고 방송요금도 동일하다.

금융 분야의 경우 외국인 인력 고용을 법적대표, 관리 및 전문기술분야 인력에 제한하고 있다. 보험분야는 외국인이 100% 지분을 보유한 현지법인 설립을 허용하고 있으나 콜롬비아 내에서의 지점설립은 금지되어 있다.

방송분야에서는 외국 방송물 방송제한 규정이 있다(외국 방송물은 프라임 타임에는 30%이내, 기타 시간대에는 50~100% 이내에서 허용). 영화 및 방송의 경우 프로그램쿼터를 두고 있고 모든 제작과정이 콜롬비아 내에서 이루어지고 출연배우의 90%이상이 콜롬비아 국적인일 경우 국내에서 제작된 영상물로 인정한다. 외국영화에 대해서는 일정액의 특별세가 부과되며 이는 콜롬비아의 국산영화진흥기금으로 사용된다.

기간통신서비스의 경우, WTO 협상과정에서 상당한 개방을 약속하였으나 아직까지 callback service를 금지하고 있고 license fee가 높으며 보조금 지급, fixed and mobile satellite system 서비스를 양허범위에서 제외하였으며 전기통신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에 있어 ENT가 있다. 기간통신서비스 중 carrier, national and long distance, cellular mobile telephony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 상한이 70%이며 PCS 시장은 2003년 통신시장 개방으로 경쟁체제가 도입되었다.

석유탐사 및 개발분야에 대한 투자는 외국인의 독자적 사업을 허용하지 않고 주재국 국영석유공사인 Ecopetrol과의 합작사업형태만을 허용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많은 제한을 두고 있다.

페루는 방송매체의 경우 페루인이 과반의 지분을 보유하도록 하고 있으며, 용역 및 경비, 관광 숙박업, 유흥업소, 도박 관련업, 운송업, 은행업 등에 외국인이 투자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처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베네수엘라는 해운서비스의 경우 선박의 자국 내 등록을 장려하기 위해 각종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연안 무역이나 운송은 자국 내 등록 선박



에 의해서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항공운송의 경우 베네수엘라 국적기 등록을 위해, 그리고 해운의 경우 베네수엘라 국적선 등록을 위해서는 외국인 지분이 1/3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그리고 통신서비스의 경우 1996년 베네수엘라 국영통신회사 CANTV의 독점이 폐지된 이후 국내외 유선전화, 휴대폰, 인터넷 공급회사가 크게 증가하였다. 베네수엘라는 메스미디어(TV 방송, 라디오 방송, 현지어 신문)와 국가자격이 요구되는 전문 직종(변호사, 회계사, 경제전문가, 엔지니어, 의사, 수의사, 치과의사, 기자 등)에는 외국인 투자를 20%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엘살바도르는 TV 방송과 라디오 방송에 대한 외국인 지분을 49%로 제한하고 있으나 케이블 TV의 경우 지분 제한이 없다. 그리고 항만, 철도, 운하 및 기타 공공사업의 경우 엘살바도르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투자를 할 수 있다. 2013.5월 민관파트너쉽법이 제정됨에 따라 외국인·외국기업이 공공서비스(단, 보건, 치안, 교육 등 일부 분야는 제외), 국가인프라 건설 투자에 합작투자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코스타리카는 과거 통신서비스와 보험서비스가 국가의 독점사업이었으나 CAFTA 관련 이행법안이 통과되면서 통신서비스 분야에서는 인터넷서비스와 무선통신서비스 등이 부분적으로 개방되었고, 보험서비스업은 2011년에 완전히 개방되었다. 현재 코스타리카 서비스 시장에는 외국인에 대한 특별한 진입장벽이 없고 현지에 법인등록을 하고 적법한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모든 서비스업종에 종사할 수 있다. 그러나 관광의 경우, 해안선에서 200미터 이내 지역에서 외국인이 호텔 등 관광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지분 제한(49%까지만 허용)이 있다. 국내선 항공사의 외국인지분율은 49%까지만 허용된다. 또한 택시, 버스 등 대중교통사업 면허는 외국인투자기업보다 자국민 또는 자국법인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외국인은 해운운송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 한편, 미국과의 CAFTA협정에 따르면 미국에 소재지를 둔 기업도 코스타리카 기업과 마찬가지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나 항공사와 은행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반드시 코스타리카에 소재지를 두어야 영업이 가능하다.

금융서비스

개관

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에서는 국제적으로 서비스가 공급되는 형태를 국경 간 공급, 해외소비, 상업적 주재, 자연인의 이동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금융서비스 역시 서비스교역의 대상이 되므로 상기한 공급형태를 따르게 되는데 금융서비스에 있어 교역장벽이란 이러한 공급형태에 대해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시장접근 등을 보장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그 예로써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시장진입 또는 서비스공급, 외국자본이 국내에서 금융기관 설립 또는 국내 금융기관 인수 등을 제한하는 것을 들 수 있다.

WTO에서의 논의 동향⁷⁰

1994년 종결된 UR에서 GATS가 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서비스는 1996.7월 1차 추가협상에서도 합의에 실패하여 잠정 협정형태로 남아 있었다. 그러나 1997년 2차 협상에서 최종 타결됨에 따라 각국의 금융서비스는 개방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GATS의 금융서비스는 크게 보험과 은행 및 기타 금융서비스로 나누어진다. 이중 보험은 생명보험, 손해보험, 재보험·재해보험, 보험 중개서비스, 기타 부수서비스로, 은행 및 기타 금융서비스는 예금, 대출, 리스, 지불·송금, 보증, 머니마켓, 외환, 파생상품, 증권, 자산운용, 자문 등으로 분류되어 있다.

70_ 홍영만. 2003. 「금융서비스 협상과 우리의 대응」, 『나라경제』, 6월호. KDI 경제정보센터.



이후 WTO 서비스협상은 DDA(제4차 WTO 각료회의)가 정식 출범함으로써 2002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어 일부 부분적으로 진전이 있기는 하나 금융서비스의 경우 미국·EU 등 주요 금융 선진국들은 금융산업의 효율성·투명성 증진을 위해 각국에 대해 강도 높은 자유화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개도국들은 각 회원국의 금융시장 발전정도를 감안하여 자유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 현재까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특히 미국발 금융위기이후 금융서비스 시장에 대한 개방에 회의적인 개도국의 입장이 크게 반영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금융서비스 개방효과

금융서비스 시장개방은 일반적으로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모두 양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긍정적 효과로는 1) 자원조달 다양화에 따른 유동성 위험 감소, 2) 금융시장의 기능 및 자원배분의 효율성 증진, 3) 선진 투자기법의 학습 및 합리적 가격 형성, 4) 국내기업의 경영투명성, 재무건전성 강화에 기여하여 산업 구조조정을 가속화, 5) 금융소비자의 만족도 개선, 6) 예금자 및 투자자에게 위험분산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금융산업의 건전성 및 안정성 제고 등을 들 수 있다. 반면, 부정적 효과로는 1) 국내 금융기관의 수익성 저하에 따른 금융안정성 저해, 2) 해외 금융환경 변화에 대한 민감도 증가에 따른 금융시스템 위험의 전이 가능성 증대, 3) 서민금융 위축 등 부작용 가능성, 4) 국제자본시장을 움직이는 단기성 투기자금의 유입에 대한 우려, 5) 해외자본의 적대적 M&A를 통한 국내기업 지배권 장악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개별 국가가 금융서비스 시장의 개방을 고려할 때는 이들 효과를 잘 비교해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한다.

다자간 무역자유화협정 및 FTA와 같은 양자간 무역자유화협정에 있어서 금융서비스 개방의 가장 중요한 의의는 외국의 금융서비스 공급자에 대해 시장접근과 내국민대우의 원칙을 보다 넓게 적용하도록 국내규제가 개혁되는 것이다. 따라서 금융서비스 시장개방의 효과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금융중개기능의 강화’, ‘자원배분의 효율성 제고’ 및 ‘금융시스템 안정성 제고’는 물론 ‘금융규제 합리화’ 등의 효과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현황분석

우선 선진국 중 **싱가포르**는 은행업의 경우 역외금융시장과 국내금융시장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으며 역외금융시장에 대해서는 투자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나 국내금융을 취급하는 은행업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고 있다. 은행의 종류로 모든 은행업을 영위할 수 있는 Full bank, S\$25만 이하의 비은행고객 예금 수취가 제한된 Wholesale bank, 싱가포르달러 업무에 제한이 있는 Offshore bank로 구분하고 있다. 한편 싱가포르는 아시아의 금융허브로서 다수의 외국금융기관의 아시아·태평양지역 본부가 소재하고 있다. 2013년 10월말 현재 싱가포르 내에서 영업 중인 은행은 국내은행 5개, 외국은행 118개로 총 123개에 이르며, 이밖에도 상업은행 41개, 보험회사 163개, 보험브로커 71개, 증권회사 115개, 선물회사 56개, 펀드메니지먼트사 247개 등이 영업 중에 있다.

일본의 경우 한국계 은행(지점)에 지급 불능 등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동 은행의 예금자는 법상 보호대상기관이 아니어서 일본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한국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보호받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의 경우 2008.11월 예금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외지점이 유치한 예금 등은 한국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고 있다. 그 결과 한국계 은행(지점)의 일본 예금자는 1인당 원리금 5천만 원 범위(약 3.4백만 엔) 내에서 보호(원화 환산 금액)받게 되어 현저히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다. 참고로 일본 예금보험기구의 보호한도는 원금 1천만 엔(약 1.5억 원)과 이자이며 결제성 예금에 대해서는 전액 보호해 준다.

캐나다의 경우 금융산업은 「연방은행법(Bank Act)」에 의해 규제되며, 은행이 국내인가은행(Schedule I), 외국계은행 현지법인(Schedule II), 외국계은행 지점(Schedule III)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중 국내인가은행은 자본금을 기준으로 소형은행(10억 캐나다달러 이하), 중형은행(10~50억 캐나다달러), 대형은행(50억 캐나다달러 이상)으로 구분되며, 「금융서비스 개정 법안(Bill C-8)」이 2001.6월 의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외국인에 의한 자본소



유가 대형은행의 경우 20%, 중형은행의 경우 65%까지 가능하게 되었으며 소형은행에 대해서는 지분 취득제한이 없다. 그리고 은행합병 심사절차를 규정하여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캐나다 은행 간 합병에 대비토록 했다.

외국계은행 지점(Schedule III)은 1999.6월 은행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출업무만 취급하는 lending branch 혹은 예금업무도 취급할 수 있는 full service branch를 설립할 수 있게 되었으나, 예금업무 취급지점도 15만 캐나다달러 미만의 소매예금(retail deposit) 수취는 금지되고 있다.

현재 캐나다 금융기관에 대한 설립인가 및 관리감독은 금융기관관리원(Office of Superintendent of Financial Institutions Canada, www.osfi-bsif.gc.ca)이 담당하고 있으며, 2011년 기준 23개 국내은행, 26개 외국계은행 현지법인(foreign bank subsidiaries), 23개 외국은행 지점(full-service foreign bank branches), 5개 외국대출은행 지점(foreign bank lending branches) 등 총 77개의 은행이 영업 중이다. 이중 RBC 등 국내은행 상위 6개사가 은행자산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 외환은행과 신한은행이 캐나다에 진출해 있다.

■ 캐나다 단계별 주요은행 현황

구분		개수	주요 은행
국내인가은행 (Schedule I)		23	BMO Financial Group, CIBC, National Bank of Canada, Royal Bank of Canada, The Bank of Nova Scotia, TD Bank Group 등
외국계은행 현지법인 (Schedule II)		26	Korea Exchange Bank of Canada(한), Shinhan Bank Canada(한), Amex Bank of Canada(미) 등
외국계 은행 지점 (Schedule III)	Full Service	23	Bank of America, N.A.(미), The Bank of New York Mellon(미), Barclays Bank PLC(영), Capital One Bank(미), Citibank, N.A.(미) 등
	Lending Service	5	Credit Suisse First Boston, Union Bank of California 등

호주의 금융서비스산업은 시드니를 중심으로 발전하였으며, 특히 자산운용 분야에서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외국은행들이 호주에서 은행서비스

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은행법(Banking Act 1954)에 따라 Australian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APRA)로부터 라이선스를 받아야 하며, 호주은행을 인수합병 할 경우에도 APRA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외국투자자들이 4대 메이저은행(ANZ, Commonwealth Bank, NAB, West-pack)을 인수합병 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승인이 나지 않는다.

호주 국내 금융분야에 15% 이상의 지분을 외국인이 보유하기 위해서는 재무부장관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호주정부는 96/97 회계연도 예산안의 과소자본규제(Thin Capitalization) 규정에 따라 97/98 회계연도부터 차입금/자본금 비율은 비금융기관인 경우 2:1로 감소하였다. 차입금의 범위에 는 외국지주회사(본사)가 지급 보증한 외국 차입금(offshore borrowings)도 포함된다.

특히 호주 내 현지법인이 본사로부터 차입하는 금액이 순자본금의 2배를 넘을 경우 동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한편 외국계은행의 경우에도 본지점간 차입한도가 자기자본의 6배 범위 내에서 제한되고 있으며, 동 한도를 초과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는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본사로부터 차입이나 본사의 지급 보증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한국계 기업 및 은행들의 금융부담이 크게 증가 하게 된다. 특히 본점으로부터 차입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한국계 은행 들로서는 자금조달이 제약됨으로써 현지 영업활동 확대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 이외 호주는 금융 투자자들이 호주와 미국 금융시장 및 금융시스템에 접근을 촉진하고, 원활하게 하도록 미국과 증권규정상호인정협약(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을 2008.8월에 체결한 바 있다.

EU는 자본의 효율적 배분, 경쟁촉진, 규모의 경제 등을 통한 경제성장 기여를 목적으로 금융시장 통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1999년부터 2005년까지 시행된 금융서비스실행계획(FSAP: Financial Service Action Plan)은 회원국간 금융시장 통합의 기본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며 2005년에서 2010년까지는 금융서비스 백서(white paper on Financial Service, 2005-2010)에 근거하여 일관성 있는 정책추진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U의 금융서비스는 은행들이 주도하고 있으며 보험회사와 증권회사들이 그 뒤를 따르는데 은행이 보험업무를 취급하고 보험회사나 증권회사가 은행업무를 하는 등 대부분의 금융기관들이 점점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은행시스템에 대한 규제는 감독의 주책임을 본국 감독기관에게 부여하는 ‘모국 통제 원칙(home country control principle)’과 한 회원국에서 인가를 얻은 경우 공동체 전체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단일 면허(single passport) 원칙’, 회원국 금융법규에 대한 ‘상호인정원칙’에 기초한다. 외국 은행들은 지점을 설립하거나 다른 나라의 은행과 합병을 통해 EU 내에서 영업할 수 있으며, 회원국들은 공동체내에 본점을 두고 있는 은행의 지점에 적용되는 것보다 더 유리한 규정을 외국은행 지점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 보험 및 재보험 분야는 여전히 EU 회원국의 감독을 받는다. 역외국 보험사업자가 EU 회원국에 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그 자회사는 단일 면허 원칙에 따라 다른 회원국 고객에게 보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그러나 EU 역외지역에서 본점을 가지고 있는 역외국 보험사업자가 상업적 주제를 통하여 사업을 할 경우 EU 회원국에서 직접 사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지점설치가 요구된다. 또한, 보험과 재보험의 직접적인 국경 간 공급은 해당 EU 회원국의 WTO 의무에 따라 결정된다.

EU는 2008년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전 유럽 차원의 금융위기 방지 및 대응 강화를 위해 전례 없는 금융감독시스템 개혁 방안을 마련하여 2011.1월부터 시행하였다. 동 개혁 방안의 핵심은 전체 유럽 금융시장에 대한 거시건전성 감독을 담당하는 유럽시스템리스크위원회(Europe System Risk Board)를 설치하여 금융시장 상황에 대한 조기경보, 시스템리스크에 대한 대처방안 권고 등의 기능을 하도록 하고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 분야 별 금융회사에 대한 미시건전성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3개 부문별 유럽감독청을 신설하여 EU 차원의 단일 감독법규 및 관행 마련 및 회원국들의 일관된 적용 확보, 다국적 금융회사 감독을 위한 중재, 위기 시 특정 금융거래행위의 일시적 금지 또는 제한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하였다. 3개 유럽감독청은 은행감독청(European Banking Authority), 보험연금감독청(European Insurance and Occupational Pensions Authority) 및 증

권감독청(European Securities and Markets Authority)으로 불리며 EU는 이들 기관을 런던, 프랑크푸르트 및 파리에 각각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다.

또한 EU는 글로벌 금융위기 및 2010년 상반기 이후 지속되고 있는 유로존 재정위기를 겪으면서 감독시스템 개혁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금융회사 및 상품·거래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바젤 III 도입을 위한 은행자본규제법 개정, 금융회사의 보수체계 개선, 헤지펀드 규제, 예금보장한도 상향조정, 공매도 및 CDS 규제강화,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규제강화, 증시 불공정행위에 대한 규제 등은 이미 시행되고 있거나 구체적 개선방안에 대해 EU 차원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외 일부 국가에 한해 금융거래세(Financial Transaction Tax)도입 방안을 모색하는 등 많은 개선방안이 다양한 추진단계에서 논의되고 있다. 한편 2012.6월 EU 정상회의에서 EU의 통합을 보다 심화하고 재정위기와 금융위기 간 악순환 고리를 차단하기 위한 방안중의 하나로 금융연합(banking union)을 제시하고, 그 구체적인 실천 방안의 첫 단계로써 유럽중앙은행(ECB)에 은행감독권한을 부여하는 단일금융감독기구(single supervisory mechanism) 설립을 추진(2013.10월경부터 가동예정) 중에 있다. 이외 EU 공동의 은행정리기구와 예금보장기구 역시 이후에 도입해 나갈 계획이다.

EU 회원국 중 **네덜란드**의 금융·은행 시스템은 경쟁이 치열하고 성숙한 시장으로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역할을 수행하는 유니버설은행이 개인 및 기업 금융은 물론 파이낸싱, 보증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모두 제공하고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독일의 은행산업 및 보험시장의 총자산 규모는 영국과 함께 유럽 내 최대 수준으로, 증권거래소와 파생상품거래소는 세계 최대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금융시장은 견고한 실물경제 및 우수한 지리적 여건에도 불구하고 은행업의 수익성이 낮고 금융관련 규정이 신축적으로 운영되지 못하여 자산운용시장과 더불어 경쟁력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는 은행업의 경우 소규모 및 고밀도의 지점망을 가지고 있으며, 공영은행이 높은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어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수익성이 낮기 때문이다.

그리고 독일의 경우 금융시장 및 금융기관 전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절차 및 규제 외에 외국금융기관의 진출 및 사업 활동을 제한하는 특별한 장벽은 없으나 독일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대주주로 되어 있는 저축은행에 대해 민간은행의 인수합병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또한 상업은행이 투자은행 업무도 겸업할 수 있는 유니버설 बैं킹 시스템(universal banking system)을 취하고 있으며, 부동산 리츠(REITs) 운용대상 자산에서 주거용 건물을 제외하고 헤지펀드에 대해 엄격한 등록절차를 요구하는 등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가 상대적으로 강하다. 이외 독일은 지난 2010년 유럽 금융시장 불안에 대한 대응과정에서 2010.5월 공매도 금지조치도 유럽국가 중 우선적으로 취한 바 있다.

영국의 런던은 뉴욕, 도쿄와 더불어 국제금융 중심지로, 자금조달과 전 세계의 프로젝트 동향을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다. 런던에는 유럽에서 가장 규모가 큰 증권거래소, 외환사업체, 국제채권업체들이 소재하고 있으며, 런던은 유로화 거래, 유로 은행 거래, 보험업, 선물매매, 선택매매, 펀드운용 등의 중심지이다. 이외 금융서비스 단체들이 브리스톨, 에든버러, 리즈, 맨체스터를 포함한 영국의 여러 도시에 산재해 있다.

이탈리아 금융시장에서 자본의 흐름은 자유로운 편이며 외국인의 금융시장 진출에 대한 제한은 없다. 포트폴리오 투자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제한이 없으나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이탈리아 기업의 주식을 2% 이상 구입할 경우 내외국인 구분 없이 증권 감독당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은행의 주식을 5% 이상 구입할 경우에는 중앙은행(Bank of Italy)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비은행 기업은 이탈리아 은행의 주식을 15% 이상 보유할 수 없다. 한편, 단기자본의 급격한 이동을 제한하기 위해 토빈세를 도입하기로 하였으며 구체적인 이행 내용은 곧 확정될 예정이다.

헝가리는 2013.10.1일부로 금융기관 관리 효율성, 보다 빠른 위험 예방, 개

별적 혹은 전체 금융체계 수준에서의 위험 및 위기 상황 관리의 수월성 제고를 위해 중앙은행이 금융감독원을 흡수·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긴축정책과 세수확대를 위해 은행거래세 및 금융거래세 등을 인상할 수 있음을 발표한 바 있다.

이의 유럽 선진국 중 **노르웨이**는 EEA(European Economic Area)국가에 기반을 두지 않은 외국 금융기관이 노르웨이 내에 은행, 증권사, 조합투자기금의 지점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은행보험증권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단, 본국에서도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해서 허가를 하고 있다. 그리고 외국 금융기관이 노르웨이 은행을 설립하는 경우 총지분의 50% 이상을 은행이 가지도록 하고 있다. 또한 WTO 금융서비스 서약에 관한 양해에 따라 비EEA 보험회사의 경우 국경을 초월하는(cross-border)보험(예: 해운·운송보험, 항공보험, 연안탐사 활동관련 보험, 신용보험 등)에 대해서 노르웨이의 승인을 받은 보험중개업자를 통해 간접적으로만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편 노르웨이 법에서 규정한 자동차보험 등은 제공할 수 없다.

스위스 은행시스템은 각 은행들이 거의 모든 유형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universal banking’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은행에서 제공하는 금융서비스는 예금, 대출, 대금 지불, 주식거래, 채권 거래 및 자산관리 등 대부분의 금융거래를 제공한다. 그리고 스위스는 지방정부가 고도의 자치를 누리는 전형적인 연방국가로, 총 24개의 칸톤 은행(Cantonal Banks)들이 있다. 칸톤 은행은 국가의 지급보증 기반 위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반관반민적(semi-governmental)기관으로 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상업적 원리를 바탕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

또한 스위스 금융산업은 전통적으로 은행을 중심으로 자율적 규율(self-regulation)을 가지고 있어 은행들은 정부의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청(FINMA: Swiss Financial Market Supervisory Authority)과의 긴밀한 협력과 자발적인 내부 규율 원칙 아래 영업을 하고 있다. 이러한 자율적 규율은 궁극적으로 도덕적이고 적법한 금융활동 수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여기에



는 일종의 은행의 행동준칙이자 가이드라인인 CDB(Agreement on Due Diligence)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스라엘에서 외국은행이 지점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으로부터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은행법 5741-1981에 따르면 국내외 은행을 불문하고 은행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불입자본(paid-up capital)이 최소 1천만 NIS (약 270만 달러)이어야 한다. 이스라엘 중앙은행 총재와 은행허가 위원회는 일반적으로 허가신청자의 사업계획, 주주와 이사회적 적절성, 이스라엘 정부의 경제정책, 공익 등을 검토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한다. 외국은행이 이스라엘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아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외국은행의 이스라엘 진출을 위하여 충족시켜야 하는 기준〉

- 母銀行이 설립할 은행의 업무 및 경영을 감시할 수 있는 고도의 능력 및 시스템을 갖출 것
- 母銀行이 거래액, 안정도, 경영, 평가 등의 측면에서 우수한 실적을 올리고 있을 것
- 母銀行이 있는 국가가 자국 내에 이스라엘 은행의 지점 설립을 인정하고 있을 것

한편 이스라엘 정부는 은행 소유자의 국적은 불문하나, 경영 현지화에 관한 기준이 있다. 그 주요내용은 이사의 2/3가 이스라엘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을 것, CEO는 항구적인 이스라엘 거주자일 것 등이다.

보험업의 경우 1981년에 제정한 보험법(Insurance Law)에 외국기업의 보험회사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스라엘인이 소유하고 있는 기업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 보험회사를 설립한 외국기업은 자본을 해외가 아니라 이스라엘 국내에 투자해야 한다. 1998년에 제정된 보험거래규제(Insurance Transaction Regulation)는 보험회사의 최저자본액을 생명보험 3,500만 셰켈, 일반보험(손해보험) 4,000만 셰켈, 생명·손해보험 6,000만 셰켈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개발도상국가 중 **가나**의 경우 은행부문은 중앙은행(Bank of Ghana)에 의해 규제되고 있으며 은행설립을 위한 초기 자본금은 60백만 GHC이다. 외국은행이 지점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본사가 50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최근 5년간의 실적 등이 지점설립 허가 시 고려된다.

보험산업에 대한 규제는 보험위원회(National Insurance Commission)에서 담당한다. 모든 보험회사와 보험브로커는 법인격을 갖춰야 하고 NIC에 등록해야 한다. 보험회사에 대한 외국인소유제한은 2006년 폐지되었으나, 모든 보험사는 다른 업종 진출이 제한되어 있으며 동일회사가 생명보험과 비생명보험을 겸업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외 자동차, 상업용 건물(건설 중인 건물 포함)에 대해서는 보험가입이 의무화되어 있다.

과테말라는 1980년대 말부터 금융부문 자유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외형적으로는 금융업이 급성장하였으나 취약한 자본구조 및 높은 대출이자율로 인해 외국기업들은 주로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그리고 1993년 외환거래 자유화 조치로 과실송금 등 외환거래에 대한 규제가 없었으나 금융통화위원회가 불법자금 세탁방지를 위한 외환거래규정을 2010.10월 개정하여 자연인, 법인을 불문하고 경제활동에 대한 승인이 없는 경우 외화현금의 은행예치는 1개월 내 3천 달러로 제한하고 있다.

나이지리아의 경우 외국 금융기관이 진출하는데 있어 특이할 만한 장벽은 없다. 다만, 금융기관 진출을 위해서는 나이지리아 중앙은행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최소 자본금 및 부채비율을 유지하여야 한다.

한편 중앙은행(Central Bank of Nigeria)은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05년에 84개의 시중은행을 24개로 통폐합하여 건전성을 강화하였으며, 2009년에는 강도 높은 감사를 실시한 바 있다. 그리고 비록 현재까지도 블랙마켓이 사라지지 않고 있으나 외환시장에 블랙마켓을 없애고 외환시장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은행 구조개혁을 단행하기도 하였다. 이외 글로벌 금융 위기에 따른 금융시장의 신용경색을 방지하고 유동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제 조치로 2009.9월 기준 이자율을 10.25%에서 9.75%로 인하하였고, 최소 유동성 비율과 현금 보유율도 각각 40%에서 30%, 4%에서 2%로 낮추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니카라과는 WTO 금융서비스협정의 당사국이나, 모든 자산과 증권 of 관리를 동 협정의 양허대상에 포함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금융자본시장이 아직 초기 발전단계에 있다는 점, 금융사기 및 배임횡령 등 금융부정행위에 대한



체계적인 감시와 제재가 미약하다는 점, 정치권 등 비금융부문으로부터 외압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금융분야에 개선사항이 많다고 할 수 있다.

대만에서는 외국은행 지점·연락사무소 설립 및 관리법(外國銀行分行代表人辦事處設立及管理辦法; 2001.9.4일 제정, 2009.12.11일 개정)에 따라 외국은행의 지점설립 시 최저 운영자금투자액은 2억 5천만 대만달러 이상이어야 하며, 향후 매 차례 신규 지점설립 시에도 최저 운영자금 투자액은 2억 5천만 대만달러 이상이어야 한다. 이외에도 지점설립 신청 당해 연도로부터 1년 전 은행 자본 및 자산규모 기준 세계랭킹이 500위권 이내이거나 설립신청 전 3년 동안 대만 은행 및 기업과의 금융거래 총액이 10억 달러 이상이어야 하는 등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도미니카공화국은 금융서비스 및 통신에 관한 GATS 의정서에 가입한 상태이다. 금융시스템은 중앙은행, 시중은행, 환전소 등 3개 시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현행법상 외국보험사는 도미니카공화국에 지점을 설립할 수 있다.

라오스에서는 국영은행이 통화와 환율 정책을 총괄하며 정부의 재정정책을 집행하고 있다. 현재 라오스에는 국영은행 외 3개의 국영 상업은행(BCEL, 라오스 개발은행, 라오스 농업진흥은행)과 다수의 일반 상업은행이 있다. 일반적으로 상업은행은 예금과 대출 이자율을 정부에서 정한 최소 이자율 이상으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현재 상업은행은 단기 대출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국영 상업은행은 장기 투자자에 대한 적절한 장기 예금, 대출 금리 설정 등 민간분야의 경쟁력 향상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러시아의 경우 주식시장을 포함한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 및 감독은 2013.9월부터 중앙은행이 담당하고 있다. 은행업의 경우 외국은행의 지점설치는 불허하고 현지법인(자회사) 설립만 허용하고 있으며, 현지법인 설립 시 개별은행에 대한 지분참여 비율에는 제한이 없다. 다만 외국인이 러시아 은행이나 비은행 금융기관의 지분을 20% 이상 취득하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의 사전승인이 필요하다. 그리고 외국은행의 러시아내 대표사무소는 중앙은행

에 등록해야하며, 등록기간은 3년이고 등록은 무기한 갱신될 수 있다.

보험업의 경우 외국보험회사는 현재 현지법인(자회사)형태로만 진출할 수 있다. 러시아 국내법에 따르면 외국인투자자가 49%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보험회사나 외국보험회사의 러시아내 자회사에 대해서는 재산과 연관된 개인보험, 의무 국가보험 등과 관련된 보험영업에 대해서는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다. 그리고 외국자본 진출에 대한 또 다른 제한은 외국자본이 러시아 보험산업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대한 제한이 있다. 즉, 러시아 전체 보험회사의 자본 중 외국인지분이 49% 이상인 기업들의 자본이 50% 이상이 될 경우 외국 보험회사에 대한 영업허가발급을 중단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EU회원국내 모기업이 있는 러시아내 자보험회사들은 양국간 협약에 따라 동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고 있다. 한편 러시아의 WTO가입에 따라 외국회사의 러시아내 지점설립이 가능해질 전망이나 그 시점은 러시아가 WTO에 가입한지 9년이 경과되는 2021년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 재보험과 관련해서는 러시아 보험회사들은 외국의 재보험회사들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으며, 외국에 관련회사를 설립하는 방법을 통해 국제보험시장으로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시장은 MICEX(Moscow Interbank Currency Exchange)와 RTS(Russian Trading System)이 있으며, 상기 두 거래소는 2011.6월 합병을 결정하고 Moscow-Exchange로 거듭나고 있다.

레바논은 1975년까지만 하더라도 중동 최대의 금융센터로 자리를 잡았었다. 그러나 수년간에 걸쳐 계속된 내전으로 인해 그 위상이 실추되었으나 1990년 내전이 종식된 이후 금융시장에 대한 집중적인 복구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머지않아 지역금융센터로 다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의 경우 인구수에 비해 보험회사가 지나치게 많아 경쟁이 치열하며 규모가 영세하여 최근 감소추세에 있다. 이는 보험업이 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부의 통제가 느슨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공식적으로 경제무역부 보험부서의 지도 및 감독을 받게 되어 있지만 내전 중에 정부기능이 거의 유명무실해져 보험업계 자율에 의존하고 있다.



루마니아의 경우 외국계 기업의 진출에 대한 특별한 규제는 없으며, 2006년 금융시장 감독체제를 강화하여, Basel II 기준에 의거한 EU 법령에 일치시키는 New Capital Accord를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외국 금융기관은 금융시장에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으며 은행 이외에도 보험, leasing 등 다양한 영역에서 외국 금융기관의 진출·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2009.4월에 금융산업분야에 대한 자유화 조치를 발표하였고 이에 따라 2009년부터 상업은행 분야를 제외(상업은행에 대해서는 현행 30% 투자지분 상한규정을 유지)한 이슬람은행과 투자은행 및 보험사에 대한 외국인투자자의 투자지분 상한을 종전의 49%에서 70%로 확대하였다. 또한, 2009~2012년 중 대형 금융회사에 대해 최대 2개의 이슬람은행과 5개 상업은행 및 2개 이슬람보험회사에 대한 신규 영업허가를 부여하고 2010년부터 주재국내 외국계 상업은행에 대해 최대 4개의 지점개설을 허용하며 2009년부터 10개의 마이크로 파이낸싱 지점개설을 허용하였다. 아울러 2009.6월부터 Labuan 소재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쿠알라룸푸르 사무소 설립제한을 완화하고 2010~2011년 중 Labuan 소재 Offshore 은행 및 보험회사 중 요건을 충족하는 금융회사에 대해 실질적인 Onshore 영업을 허용하기로 하였으며 금융산업분야 전문직 외국인 고용제한을 대폭 완화하여 금융부문 전문 인력풀을 확충하여 금융산업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멕시코는 외국인투자관련 법령에서 외국정부 또는 국영기업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금융부분에 투자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국영은행의 현지 투자 진출은 불가능하다. 모든 금융관련 기능을 수행하는 상업은행의 경우 2010.10월 기준 최소자본금 9천만 UDIS(약 20백만 달러), 일부 기능만 수행하는 상업은행(niche bank)은 최소자본금 36백만 UDIS(약 8백만 달러)가 필요하다. 상업은행의 외국인지분에 있어 Financial Service Treatment(FST)를 체결한 국가의 은행은 외국인지분 100% 참여가 가능하며(대부분의 FTA 체결 국가), FST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 소속 은행에 대해서는 외국인지분을 49%까지 허용하고 있다.

모로코는 지난 2006년 법률 개정을 통해 금융산업의 발전과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고 있다. 현행 법률은 모든 금융기관의 설립과 운영에 대해서 중앙은행(Bank Al-Maghrib)에 허가권을 부여하고 있다. 즉, 외국 금융기관이 모로코에 지점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해당국가 금융당국의 의견서를 중앙은행에 제출해야 하며, 중앙은행은 해당국가 준거법에 따른 해당 금융기관의 성격에 대한 적합성을 판단해 허가여부를 결정한다. 보험시장의 경우 모로코 재정부에서 새로운 보험상품의 출시를 심의할 때, 다른 경쟁사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로부터 해당 상품이 모로코 금융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검토한다. 이런 관행이 기존 금융회사들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몽골의 금융산업은 전체 금융자산의 95% 이상을 상업은행(Commercial Bank)이 차지하고 있는 은행중심의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정부는 은행의 대형화를 위해 자본금 규모를 점차 늘리고자 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따라서 은행 간 합병과 외국자본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바레인은 고급 금융 전문인력과 걸프에서 가장 발달된 금융관리 및 조정 제도, 사우디아와의 인접성 등으로 인해 걸프 금융의 중심지로서의 입지를 지키고 있다. 중앙은행은 금융분야를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2006년에는 통화기구가 중앙은행으로 바뀌면서 걸프지역의 주요 금융센터의 입지를 이어가기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국내외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중앙은행은 특별히 이슬람금융 분야의 규제와 감독시스템 개발에 적극적이며 바레인을 이슬람 금융의 중심지로 만드는데 주요 역할을 담당했다. 그 외에도 중앙은행은 종속 보험회사(captive insurance), 지불능력(solvency), 리스크 매니지먼트, 금융범죄(financial crime), 이슬람보험 등에 대한 개혁을 논의 중이다.

한편 바레인은 세계에서 이슬람은행의 밀집도가 가장 높은 나라로, 총 52개의 이슬람 금융기관과 27개의 이슬람은행이 있다. 특히 샤리아에 부합하는 이슬람금융의 기준을 제시하는 Accounting and Auditing Organization



for Islamic Financial Institutions(AAIOIFI)와 같은 세계적인 이슬람금융 관리·감독기관이 바레인에 자리 잡고 있어, 바레인은 샤리아 기준과 점점 복잡해지는 금융상품을 어떻게 조합시킬지에 대한 국제적 논의에서 주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증권거래소의 경우 과거 100% 정부소유였으며 중앙은행에 의해 감독을 받다가, 국제적 지역적 투자를 향상시키기 위해 2010년 민영화되었으며, 2011년 Bahrain Bourse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출발 했다. 바레인 증권거래소는 등록된 기업들을 증가시키려는 계획을 가지고 새로운 국내 및 해외 투자자들을 유치하고 있다.

베네수엘라의 금융시장에 대한 통제권은 은행금융기구감독원(SUDEBAN)이 갖고 있으며 민간은행에 대해서는 수수료 규제와 함께 전체 대출금의 40%를 농업 등 특정 분야에 대해 저리로 대출하도록 하고 있고, 총 예금의 30%를 중앙은행에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08.7월 차베스 대통령이 자국내 3위 민간은행인 스페인계 Banco de Venezuela에 대한 국유화 방침을 천명하였으며 이를 두고 금융계 일각에서는 2007년 하반기 민간은행에 예치된 공공자금의 국영은행으로의 이관 조치와 더불어 금융권에 대한 지배와 통제를 강화하려는 정부의 의도가 표면화된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후 2009.5월에 10억 5천만 달러를 스페인계 Santander 그룹에 지불하고 Banco de Venezuela를 국유화하는 조치를 단행하였다. 또한 2009.11월에 민간계 은행인 Banpro, Confederado, Canarias, Bolívar Banco가 관련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출처분명의 자금을 활용했다는 명분으로 국유화를 단행하였으며 2010.6월에는 Banco Federal을 국유화 조치하였다.

베트남에서는 저축예금(Savings A/C: 베트남 민간의 여유자금을 금융권으로 유도하기 위해 우대금리를 보장하는 저축유인예금의 일종) 취급이 외국계 은행에는 허용되지 않았으나 2003.10월부터 총자본금의 50% 한도 내에서 저축예금 취급을 허용하였다(No.1084/2003/QD-NHNN). 여신담보와 관련해서도 그동안 외국계 은행의 경우 차주의 자산을 담보로 여신을

취급할 수 없었으나 2001.7월부터 외국계 은행도 현지법인의 자산을 담보로 여신을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정확한 담보가 감정이나 담보 처분상의 어려움 등 담보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해 대다수의 외국계 은행들이 현지자산 담보대출을 취급하지 않고 있다. 또한 미화구좌의 기업정기예금 및 요구불예금 금리는 규제(ceiling rate)되고 있다.

브라질 보험시장은 최근 남미의 가장 큰 보험시장으로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1996년에 정부는 이 분야의 국내외 지분참여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였다. 이후 미국의 보험회사들이 기존에 설립된 보험회사들과의 합작형태로 브라질 보험시장에 대거 진출하였다. 그리고 재보험은 1939년 이래 정부소유의 재보험공사(IRB)가 독점해왔으나 2007.1월 보완법률(Complementary Law 126)에 의해 재보험에 대한 정부독점을 해제하였다. 이와 같이 재보험에 대한 정부독점이 해제됨에 따라, IRB는 국내사업자의 하나로서 남게 되었으며, 관련 행정규제사항은 국가사보험협의회(National Private Insurance Council)가 담당하게 되었다.

은행 및 증권서비스를 비롯한 비보험 금융서비스산업을 대상으로 1997년에 WTO 서비스협정에 서명하였으나 헌법은 새로운 법이 제정, 시행될 때까지 외국소유은행의 확장을 억제하고 있으며 신금융법은 아직까지 제정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비보험 금융시장에 대한 외국자본참여는 사안별로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외 1999년에 8개 지방정부 소유은행의 민영화가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외국자본의 금융시장 참여는 기존은행의 확장이나 지분매입을 통해서만 허용될 방침이라고 발표한 후 외국자본의 금융시장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금융, 보험 서비스는 2005년 WTO 가입과 함께 개방을 약속하였다. 보험의 경우 2003.10월 보험업조정통제법을 제정하여 외국 보험회사의 진출 및 직접 영업을 허용하고 상업적인 국내 보험회사(주식회사, 조합, 법인 또는 외국합작)의 설립을 허용하였다(외국인지분은 60%까지 허용). 금융의 경우 은행법은 은행업에 대한 외국인참여를 제한하지 않았지만 상업은행의 외국인소유를 허용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WTO 가입을 계기로



중앙은행(SAMA)은 10개 외국계 은행에게 면허를 발급하였다.

한편 2004.2월 제정된 자본시장법은 외국인의 사우디 내 투자은행 및 중개 회사의 설립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합작기업의 외국인 자산보유한도를 60%까지로 제한하였다. 중개회사의 최소자본은 13.3백만 달러로 규정하는 동시에 잘못된 정보의 배포 및 내부거래에 대한 벌칙도 규정하였다. 2008.8월에는 주식시장에서의 사우디 내 비거주자(GCC국가 국민 제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였다. 즉 비거주 외국인투자자는 사우디의 주식을 스왑 방식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한적인 주식투자가 가능해졌다.

슬로바키아에서는 금융부문에 대한 투자의 경우 영업허가가 필요하다. 슬로바키아 내 은행 설립 또는 EU 국가 이외 지역외국은행의 지점을 개설할 때, 은행법(Banking Act)에 의거하여 중앙은행의 허가가 필요하다. 또한, 슬로바키아 내 보험회사 설립 및 EU 국가 이외 지역의 외국 보험회사가 지점을 개설할 때, 보험법(Act on Insurance)에 의거하여 금융감독위원회(Financial Market Authority)의 허가가 필요하다.

아르헨티나는 1990년대 경제개혁을 통해 서비스 시장장벽을 대부분 해소하였다. 이와 더불어 외국인 비보험 금융서비스 업체에게 내국인대우 및 완전한 시장접근을 허용하기로 WTO에 공약하였다. 단, 외국인소유 은행 지점에 대해서는 대출한도에 제약을 두고 있다.

한편 고금리를 노린 해외자본의 초단기 일회성투기를 막고 금융시장의 불안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아르헨티나로 유입되는 해외펀드는 180일간의 최소 투자기간 후에 해외반출이 가능하다. 그리고 2011.10월말 이래 아르헨티나 정부는 국제수지 방어 및 외환보유고 확보를 목적으로 외환거래 규제조치를 대폭 강화해오고 있다. 연방세입청(AFIP) 결의에 따르면 외환매도 시 목적 및 규모를 불문하고 사전에 연방세입청에 온라인상으로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후 연방세입청은 대부분의 미화거래 신청을 불허함으로써 중앙은행이 외환시장에서 사실상 독점적인 미화 수요자인 상황이다.

예멘에서는 상업은행에 대한 외국인지분이 45%까지로 제한되어 있다. 그리고 외국은행이 지점 및 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임시허가를 받아 설치하고, 60억 리얄을 지점 및 사무소에 송금한 이후 중기 운영계획을 중앙은행에 제출하면 중앙은행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다.

오만은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외국기업이 단독투자한 자회사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부문은 정부의 정책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외국계 은행이 신규로 자회사 설립허가를 받기는 쉽지 않은 실정이다. 오만에서는 동일 국적의 은행은 2개까지만 설립이 가능하며 외국은행을 설립할 경우 최소 자본금 규모를 미화 1,300만 달러(500만 오만리알)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다. 증권시장은 1998년에 설립된 자본시장감독청(Capital Market Authority)이 관리하고 있다. 무스카트 증권시장은 1989년 개장하였으며 주식에 유입되는 자금의 흐름을 감독하고 국내 금융시장을 발전시키고 있다. 한편 오만에 등록된 상업은행, 공동주식투자 회사 및 중개회사들은 공동투자계정(joint investment accounts)이라 불리는 투자펀드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계좌는 무스카트 주식시장에 상장되며 외국인은 지분의 49%까지 보유할 수 있다. 이 기금은 과세가 면제된다.

온두라스에서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특별허가를 받아야 하는 반면 **요르단**에서는 은행, 보험 등의 서비스는 외국인투자가 100% 허용되는 업종으로 분류되어 있다. 특히 2001년 국내 자본시장 육성법이 마련된 이래 mutual fund 등 다양한 금융상품들이 판매되고 있다. 그러나 경직된 금리정책과 2차 금융시장 미발달로 회사채 시장의 발달정도는 미미한 수준이다.

우루과이의 은행은 일반적으로 자본, 지불 능력, 유동자산 보유율 등 측면에서 우수한 장점을 지니고 있으나, 낮은 국제금리 및 자본에 대한 수요 부족으로 이익이 낮은 단점이 있다. 2002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중앙은행(Banco Central Uruguay)은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 기능을 강화하였다. 그러나 우루과이는 2009.4월 OECD의 국제 금융거래 관련 OECD와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지만 OECD가 규정한 기준을 이행하지 않는 국가에 해당하는 Grey List에 분류된 바 있다. 이후 정부는 동 리스트에서 빠져나가기 위해 필요한 조세 및 금융에 관한 양자협정 체결 등의 노력을 기울인 끝에 2012.5월 동 기관 리포트에서 화이트 리스트 국가로 분류되었다.

우즈베키스탄의 금융산업은 구소련시절의 금융관행과 정부의 통제 등으로 효율적인 금융자원 조달 및 배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은행업을 제외한 직접 금융시장의 발달은 취약한 상태이다. 은행은 업무형태에 있어 정부의 개발전략을 지원하는 역할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기업과 경제 각 부문에 금융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은행제도 구축이 시급한 실정이다. 은행산업은 중앙은행과 상업은행의 2단계 체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업은행은 모든 업무분야에서 중앙은행의 직접적이고 강력한 통제를 받고 있다. 중앙은행의 주요 기능은 화폐발행, 국고금 및 통화관리, 상업은행에 대한 허가·감독, 대외경제협력 촉진, 상업은행에 대한 유동성 규제 등이다.

금융시장은 현재 제도나 법적인 면에서는 정상적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육성하기 위한 정책 등도 마련되어 있으나, 실제 운영 면에서는 정부의 지나친 통제와 외환규제 등으로 영업 활동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다. 소매금융의 경우 일반 개인의 낮은 소득수준과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저축률은 저조한 편이며, 출금시의 수수료 징수와 인출에 대한 규제, 현금부족사태, 세금 등으로 인해 개인들은 은행 이용보다는 현금거래 및 보유를 선호하고 있다. 기업금융의 경우 일부 대기업이나 외국인회사를 제외하고는 기업의 투명성이 낮은 편이다. 이는 복잡한 행정절차와 높은 세금 등에 기인하고 있으며, 기업의 회계 불투명성은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외 기업들은 환전의 어려움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2010년에 대통령령으로 금융부문 선진화 5개년(2011~2015년)계획을 발효하였다. 여기에서는 은행의 자본증대와 민간자본 유치, 자산건전성 제고 등을 통해 바젤(Basel) 위원회에서 설정한 국제표준에 부합하도록

금융환경 개선 및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에 대한 투자 활성화, 금융부문 우수인력 양성, 증권시장 현대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란의 경우 외국계 은행은 현재까지 지점설치가 허용되지 않고 있어 유럽계 은행 등 주요 외국은행들은 사무소 형태로 진출해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자유무역지대의 경우 외국은행의 지점설치가 허용되어 Kish 자유무역지대에 3개의 외국계 지점이 영업 중이다.

한편 이란의 핵개발 의혹과 관련하여 유엔 안보리 결의(1929호)에 따라 우리 정부는 금융부문에 대한 구제조치를 취하고 있다. 즉 이미 제재대상자로 지정된 단체(40개) 및 개인(1명) 이외에, 이란혁명수비대(IRGC), 이란국영 해운회사(IRISL) 및 Mellat 은행을 포함한 102개 단체(이중은행은 15개), 그리고 24명의 개인을 금융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고 한국은행의 허가 없이는 이들 기관과의 외국환 지급 영수를 금지하였다. 한편 한국 정부는 제재 대상이 아닌 이란기관과의 거래에 있어서, 4만 유로 이상의 모든 금융거래에 대해 사전허가제 및 1만 유로 이상의 거래에 대한 사전신고제를 도입하였으며, 이란 은행의 한국 내 신규 지점, 자회사, 사무소 개설 및 국내은행의 이란 내 신규 지점, 자회사, 사무소 개설을 불허하였다.

이집트의 통합 금융법안에 따르면 이집트계 은행은 최소 자본금을 5억 이집트 파운드(8,700만 달러), 외국계 은행은 5천만 달러로 법정 자본금을 대폭 증가시켰다. 아울러 중앙은행은 이 규정에 따라 각 은행들에 2년간의 유예기간을 제시하고 2005.7.14일까지 최소 자본금 이상으로 증자하지 않는 경우 강제합병이나 폐업 등 강경 조치함으로써 67개에 달하던 은행이 2012.11월 현재 39개로 대폭 축소되었다.

그리고 은행개혁과 국영은행의 민영화를 통하여 금융개혁을 꾀하고 있으나 은행의 소형화, 비효율적인 은행 운영시스템, 간섭과 규제를 일삼는 금융행정, 고객이나 수익성을 무시한 은행영업 태도 등으로 금융산업의 경쟁력은 글로벌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중앙은행은 금융산업의 구조조정과 개혁을 추진하면서 신규 금융기관설립 허가를 해주지 않고 있다. 따라서 외국계 은행이 주재국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주재국 은행기관의 민



영화에 따른 매각지분을 인수하거나 주재국 은행을 합병하는 수밖에 없다.

한편 이집트에는 Banque Misr을 통해 이슬람 금융상품이 처음 소개됐으며 Faisal Islamic Bank와 Egyptian Saudi Finance Bank 2개 금융기관이 이슬람 금융을 지배하고 있고 기타 은행들도 이슬람 금융을 취급하고 있다. 3개 국영 은행의 이슬람 금융비중은 약 10% 정도로 타 이슬람권에 비해 덜 활발한 편이다.

인도 정부는 2005.2월 외국은행 진출에 관한 로드맵을 발표하였는데 외국계 은행은 지점이나 자회사 중 택일하여 운영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 로드맵에는 2009.3월 이후 외국계 은행에 대한 규제 및 제한을 완화하여 외국계 은행의 인도 진출을 점진적으로 허용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앙은행(RBI: Reserve Bank of India)은 금융산업을 글로벌 리스크로부터 보호하고자 외국계 은행에 대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정부에 제출하였다. 새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외국계 은행은 인도 내 자회사를 설립하여 진출하여야만 하는데, 이를 통해 외국계 은행은 인도 은행과 같은 법적 대우를 받게 되어 인도 내 지점 설립 및 운용이 더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새 가이드라인은 외국계 은행들의 농민 및 빈민에 대한 대출 확대 그리고 정부가 정한 15개 우선지원분야 의무 대출을 요구하고 있으며, 현재 진출해 있는 은행들의 자회사 설립을 위한 자본 및 경영 구조 재편성에 따른 비용과 시간 또한 만만치 않아 현재 진출해 있는 외국계 은행들은 한동안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인도 CEPA 규정 중 CEPA 발효 후 4년에 걸쳐 한국계 은행의 인도지점 10개 설치를 고려하기로 함에 따라 한국계 은행들은 적극적으로 인도 진출에 나서고 있다.

보험업의 경우 크게 생명보험, 비생명보험 및 재보험 등 3개로 나누어진다. 이들 보험업을 규제하기 위하여 2000년 Insurance Regulatory and Development Authority(IRDA)가 설립되었다. 한편 인도 보험산업은 연간 15~20%의 성장률을 자랑하며 은행산업과 함께 인도 GDP의 7%를 차지하는 등 투자 매력도가 높게 평가되나, 보험회사 설립 최소자본금이 일반

및 생명 보험의 경우 10억 루피(약 2천만 달러), 재보험의 경우 20억 루피로 높아 시장진입장벽으로 작용하여 보험업계의 경쟁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2013.7월 민간 보험사의 투자 유치 촉진 및 보험 산업 확대를 위해 인도 보험회사에 대한 외국인투자지분 한도를 26%에서 49%까지 상향조정하였다.

중국은 외국의 금융기관 진출 및 영업과 관련하여 사무소 설치 신청에 대한 허가, 엄격한 지점 및 현지법인 승격조건, 위안화 업무 제한 등 많은 부분에서 강력한 제한을 두고 있다. 구체적인 제한사항을 살펴보면, 지점 또는 현지법인 영업을 허가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2년 이상 사무소를 설치해야한다. 그리고 은행 지점은 신청 1년 전의 연말 총 자산이 200억 달러 이상, 현지법인의 경우는 대주주가 총자산 100억 달러 이상이 되어야 하며 BIS 비율은 8% 이상이어야 한다. 한편 중국은 관행적으로 1년에 분행 1개씩을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내륙개발 및 동서북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외국계 은행의 점포 개설시 연해지방에 대한 점포인가를 제한하고 외국계 은행 미진출 지역과 동북, 중부, 서부지역 진출에 대해 우대조건을 취하고 있다. 이로 인한 점포확장 속도 둔화로 외국계 은행의 중국내 영업확장과 현지화 추진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은행의 경우 WTO 가입 이후 2006년에 발표한 <외국계 은행 관리조례>와 <외국계 은행 관리조례 실시세칙>에 의해 외국계 은행은 은행업 감독관리기구의 허가를 받은 후 외국계 은행 법인 또는 분지행을 설립할 수 있다. 이때 법인설립 납입자본은 10억 위안 혹은 해당 자유환전 화폐이며, 분지행 설립 시 총행은 1억 위안 혹은 해당 자유환전 화폐 운영자금을 제공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안화 업무를 수행하려면 ① 신청 전 중화에서의 영업기간이 3년 이상, ② 신청 전 2년간 연속적으로 이익 실현, ③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구가 규정한 기타 심사조건이 부합하여야 한다. 또한 2011년 말부터 외국계 은행에 대해서도 예대비율이 75% 이하로 규제됨에 따라 대출이 축소되어 은행 수익성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외 중국은 외국은행의 중국내 은행의 지분 소유를 20% 미만(합작법인인 경우 25% 미만)으로 하고 있어



한국계 은행이 중소형은행의 경영권 획득이 가능할 정도의 지분을 인수할 수 없는 상황이다.

증권업의 경우 QFII제도 도입(2002.11월), 비유통주 개혁(2005.4월) 등 점진적으로 주식시장을 개방하고 있으나 '외자지분참여 증권회사 설립규칙'에 따라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의 외국계 지분은 최대 49%로 제한되어 있다.

보험회사의 경우 현지법인 설립 전 2년 이상 사무소를 설치해야 하며, 본사의 자산이 50억 달러 이상이어야 한다. 그리고 WTO가입 양허안에 따라 보험시장 전면 개방(2004.12월)으로 영업범위 및 영업지역 제한이 철폐되었으나 생명보험회사의 현지법인은 합자형태만 가능하고, 지분취득률 50% 상한은 유지되고 있다. 손해보험회사의 경우 2012년 이후 자동차 강제책임보험이 외국사에게도 허용되었으나 감독당국의 별도 인가절차를 거쳐야한다.

카자흐스탄의 금융제도 관련 법률은 1995.8월 발효된 '은행 및 은행활동에 관한 법(Act on Banks and Banking)'이다. 동 법은 은행의 영업활동 조건과 법적 지위, 활동중지 조건, 지점과 은행대표부 개설 조건 등과 더불어 외국은행의 현지은행 설립 및 참여에 대한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은행업의 경우 외국은행이 지점을 설립하는 것은 아직 금지되어 있으므로 현지법인을 설립하거나 현지인과 공동투자 등의 방법으로 은행운영이 가능하다. 설립자본금은 상업은행 300만 달러, 투자은행 500만 달러이고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8% 유지의무가 있다. 1993년 은행 감사기준 도입, 설립자본금 증액, 신규허가기준 강화, 은행 간 결제제도 도입 등 금융제도 안정을 위한 조치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국제금융위기 이후 정부는 은행이 자기자본 비율을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금융권 구조조정에 따라 은행의 수가 줄어들 가능성도 큰 상황이다. 그리고 외국계 은행은 외화부채에 대한 8% 준비금 적립 등 국내은행에 비하여 조달여건이 불리하며 15% 특별법인세를 부담해야 하고, 외국계 은행의 경쟁 제한 및 M&A로부터 보호시스템으로 인해 진출이 어려웠다. 그러나 WTO 가입을 위하여 외국계 자본참여에 대한 대부분의 규제가 제거되고 있어 향후 소비자금융 시장을 대상으로 활발한 진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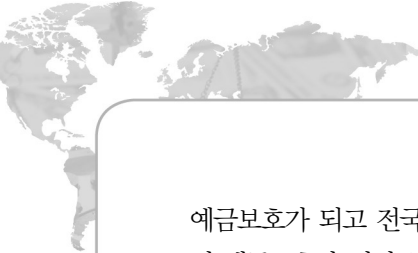
증권산업의 경우 1993년 증권거래소가 개설됨으로써 발전의 기틀이 마련되었으며 2003년 주식회사법과 증권시장법이 제정되면서 실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증권업은 은행업이나 보험업보다 월등히 높은 증가세를 보일 뿐 아니라, 연기금과 뮤추얼 펀드의 자금력이 확대되어감에 따라 이들의 투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여러 상품과 금융기법들이 개발되고 있고 지역 금융센터의 개발 등 대외개방 정책 또한 적극적으로 실시되고 있어서 향후 성장 잠재력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카타르 중앙은행(QCB)은 통화정책을 담당하고 상업 금융시스템을 감시하는 정부 기관이다. 그리고 국제금융기관을 상대하며 정부의 은행으로서 화폐를 인쇄·발행하는 한편 개별 금융기관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준수 여부의 감독 등 카타르의 국내외 은행활동을 감독한다. 이외 카타르에서 영업 중인 모든 은행들은 QCB가 공포한 회계기준에 따라서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 준칙들은 국제재무보고기준(IFRS)과 일치한다.

카타르의 이슬람 금융시스템은 잘 정비되어 있어 여러 전통 상업은행들은 독자적 이슬람 지사를 설치하여 이슬람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은행 및 보험회사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법상 특별제한이 있으며, 동 부문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내각의 승인이 필요하다. 또한 증권시장의 경우 1997.5월에 개장한 도하증권시장에는 카타르의 공공 지주회사들의 주식이 상장되어 있으며, 외국인투자자들은 상장기업 발행 주식 자본금의 최고 25%까지 투자할 수 있다.

한편 2005.2.16일 법 No.7에 따라 설립된 금융센터(QFC)는 외국계 금융기관 및 다국적 기업이 국제금융, 금융서비스, 보험 및 본사기능 등의 분야에서 최고의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QFC는 각각 독립적 활동을 하는 QFC 금융청과 QFC 규제청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부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 QFC의 허가를 받은 기업 및 기관들에게는 ① 국유화, 몰수, 또는 개인 소유제한으로 부터의 보호, ② 이윤 본국송금 자유, ③ 자유로운 직원 고용, ④ 100% 외국인소유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코스타리카는 금융업과 관련된 투자제한 조항은 없다. 그리고 국영은행은



예금보호가 되고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반면, 민간은행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예금보호가 되지 않고 산호세 및 수도권에 점포가 집중되어 있다. 인터넷 뱅킹이 도입된 것은 2006년 이후로 계좌 조회, 은행 간 송금, 공과금납부 등이 가능하다. 그리고 외국인은 2012.10월부터 이민청이 발급한 신분증명서가 있어야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한편 2006~2007년 사이에 금융업분야에 대한 외국기업의 투자가 크게 증가하였다.

콜롬비아는 100% 외국인출자 보험업의 설립을 허용하고 있으나 외국인 보험업체의 국내지점 설치와 외국인의 해상보험시장 진입은 불허하고 있다. 그리고 외국인 금융기관의 경우 지사 또는 지점 형태를 통하여 금융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허용되나, 외국금융기관 지사는 자본 또는 기타 금융기관의 건전성 유지와 관련하여 금융당국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 한편 2004.9월부터 정부는 국제상업금융기관이 콜롬비아 거주자를 상대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콜롬비아 내에 상업적 주재(commercial presence)를 먼저 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Decree 2951).

콩고의 금융시스템은 중앙은행(BCC)과 21개 상업은행, 저축·신용협동조합, 소액금융기관, 금융이체서비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편예금과 신용협동조합이 있으나 제대로 기능을 하지 않고 있다. 콩고 내 대부분 상업은행들의 활동은 극히 제한된 숫자의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단기대출, 외환시장 활동과 수출입 서비스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금융감독은 거의 없는 편이고, 특히 채권회수 및 담보 문제에 있어서 법적체계도 불충분하다.

쿠웨이트의 금융시장은 1970년대 및 80년대에 걸쳐서 걸프지역의 금융허브의 역할을 하여 비교적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고, 최근 유가가 급증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정부재정의 안정, 효율적인 금융감독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비교적 안정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Kuwait Finance House같은 전통적인 이슬람계 은행이 우위를 선점해 왔으나 점차 일반은행과의 경쟁 체제로 돌입하고 있으며, 기존은행들도 기존업무 이외에 투자, 자산관리 등 업무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중앙은행은 주재국 은행이 외국계 은행과의 경쟁에서 불리하지 않도록 외국은행의 진입을 매우 까다롭게 제한하

고 있다. 한편 외국은행의 설립관련 제한은 최소자본금 1,500만 디나르 (5,150만 달러)가 있어야 하고 50% 이상 인력을 쿠웨이트인으로 고용해야 하며 단 1개 지점만이 허용된다.

크로아티아의 금융시장은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프랑스, 헝가리 등의 외국계 은행이 기존 국영은행 또는 민영은행을 인수하여 영업활동을 하고 있어 외국 금융기관의 시장진입에 별도의 진입장벽은 없으나, 이미 대형 외국계 은행들이 강한 시장지배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우리 금융기관이 주재국 진출을 검토할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터키의 금융시장은 2001년 은행위기를 겪은 후 대대적인 개혁을 통해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규제환경이 조성되어 왔으나, 은행 자금원 중·단기(초단기)자금의 비중이 커서 변동성이 큰 편이다. 은행 관리·규제 업무는 은행감독청(BRSA: Bank Regulation and Supervision Agency)이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금융산업은 소매금융보다는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 차입문제가 더 시급하기 때문에 변동성이 큰 외국자본 유입을 피하기 위해 그간 연금제도를 개혁하고 민간 금보유의 은행체제 내 흡수 등 저축률을 제고하기 위한 장기 정책(금표시 계좌 신설 등)이 취해진바 있다.

튀니지의 보험분야는 관련 법규가 매우 엄격하고 시장개방을 기피하는 성향으로 인해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이 매우 약한 편이었으나 2008년 보험법 개정으로 외국자본참여율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정부의 새로운 보험법으로 49%로 제한되어 있던 외국자본참여율제도가 폐지되었고 튀니지 보험위원회(Conseil des Assurances)에 재정적 독립권이 부여되어 중재권리가 강화되는 한편, 국제통화기금에 의한 금융평가가 실시될 예정이다.

그리고 튀니지의 외환관리법에 의하면 튀니지 내의 상주기업(개인 및 법인)에게 외환송금, 입금 및 해외금융서비스 구매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비상주기업의 금융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8개의 비상주은행에는 특별법이 적용된다. 동 특별법에 의하면 튀니지 법에서 정의하는 주식회사와 해외에 본사를 두고 거래영역이 비상주기업에 국한되는 기업의 경우 비상주 은행과의 금융거래가 가능하다. 다만 위의 조건이 충족되는 기업이라는 것을



중앙은행과 재무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편 비상주 은행과 상주 기업 간의 거래가 허용되는 경우는 기업의 지분 참여, 중·장기적 재정지원(외환자본, 수입·수출 거래, 현지화(디나) 자본, 튀니지 내에서의 수익, 무역 거래)이며 해외차용 자본으로 상주기업의 상거래 금융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외국자본의 튀니지 금융시장에 대한 투자는 중앙은행과 재무부의 승인기준(외국투자자의 기술·재정적 능력 및 활동계획)에 따라 허용되며 외국자본의 유가증권 중개업 투자는 금융시장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이외 증권중개상(개인 및 법인)은 법적으로 협상자 신분 및 유가증권 등록 권한을 취득한 튀니지 국적 소유자에 한해서 허용된다.

파나마의 금융시장은 1971년부터 완전 개방되었으며 중남미 제1의 금융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과실 송금 및 대외 거래 등에 외환 통제가 전혀 없어 자본투자 및 외환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며, 미국 달러를 공식 화폐로 사용하고 있어 환율상의 문제도 없다.

파라과이는 외국계 금융회사가 지점을 개설하거나 기존 금융기관을 인수하는데도 특별한 제약이 없으며 외국계 업체를 차별대우하는 경우는 없다.

파키스탄의 금융시장은 1989년 파키스탄 정부의 금융시장 개혁에 따라 금융분야의 민영화와 개방화가 진행되어 왔다. 외국은행이 파키스탄 내에서 영업을 하려면, 50억 달러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거나 파키스탄이 멤버로 참여하고 있는 지역기구(SAARC, ECO 등)의 가맹국에 본점을 두어야 하며, 이 경우 파키스탄에서 100% 지분을 소유한 지사를 설치할 수 있다. 이러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외국은행은 파키스탄 내 은행과의 합작을 통해서만 파키스탄에서 영업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외국회사는 최대 49%까지 지분을 소유할 수 있다. 또한 파키스탄 내 영업을 위해서는 최소 지불준비금 100억 루피(약 1.16억 달러)를 보유해야 한다.

그리고 파키스탄에서는 보험시장도 개방되어 외국인투자자는 보험업종에서 최대 49%의 지분을 보유할 수 있다. 다만 생명보험의 경우 정부가 소유한 State Life Insurance Company가 실질적으로 독점적 지위(점유율

68%)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일반보험(대물, 사고, 건강)은 민간회사(점유율 86%)들이 시장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파키스탄에서는 금융업종에서 과실송금의 제한은 없고 중앙은행의 허가를 얻어 본국으로 송금할 수 있다. 이런 외국 금융기관의 진출과 관련하여 상기의 최소자본 요건을 제외하고 특별한 제약은 없다.

이외 **브루나이**에는 6개의 외국계은행이 있으며, **적도기니**는 금융분야에 대해 외국인투자가 개방되어 있고 내외국인 기업 간 동등한 대우를 보장받고 있다. 그리고 **체코**의 경우 금융 및 보험 부문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취득해야 하며, **에티오피아**의 경우 은행, 보험 등 금융산업에 대한 투자는 에티오피아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만 허용된다.

투자

개관

투자장벽은 한 국가의 국민 또는 기업이 타국에 투자할 때 겪을 수 있는 각종 장애요인들의 집합체이다. 투자장벽은 크게 설립 전(pre-establishment) 단계와 설립 후(post-establishment) 단계의 장벽으로 구분된다.

설립 전 단계의 장벽은 일반적으로 외국인투자자가 국내투자자와 동등하게 국내시장에 접근하고 주재(access and presence)하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제약하는 사항들을 말한다. 장벽의 대표적인 형태는 진출대상국이 특정 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제도를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국가안보를 이유로 특정 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전면적으로 금지할 수도 있으며 유치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외국인투자를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실제 중국의 법률, 관광, 유통, 정보통신,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등의 산업에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제한이 존재한다. 그리고 외국인투자를 허용 하더라도 합작투자의 제한을 두거나 외국인투자자의 지분율을 제한하는 방식이 채택되기도 한다. 또한 설립 전 단계에서 법인의 설치뿐만 아니라 법률적 독립성을 갖지 못하는 지점이나 사무소의 설치에 대한 제한을 두기도 한다. 한편 설립 전 단계의 실질적인 장벽으로 외국인투자에 대해서 특별한 이행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외국인투자기업에게 현지 부품 사용의무, 기술이전 의무, 수출의무, 외환수지의무, 현지인 고용 및 교육훈련 의무 등을 부과하는 것이다. 이외 투자에 필수적인 토지의 취득에 대한 제한을 통해서 사실상 투자를 제한할 수도 있다.

설립 후 단계의 장벽은 기투자된 외국인투자기업이 현지에서 사업을 영위 하는데 있어서 국내투자기업과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하는 것을 어렵게 하

는 요인들이라고 볼 수 있다. 외국인투자기업에만 적용되는 조세 및 자본조달 관련제도도 장벽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외국인투자기업에만 나타날 수 있는 경영상 문제점들도 장벽으로 생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지 사업체의 운영을 위해서 파견되는 인력에 대한 체류 및 노동허가와 관련된 제한이 여기에 해당한다. 한편 국내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 간에 동등하게 적용되는 규제 중에서도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사실상 불리한 경쟁여건을 조성하는 규제들이 있다면 이것도 설립 후 단계의 장벽으로 볼 수 있다.

원천적으로 모든 투자장벽은 외국인투자가와 투자유치국 정부 간의 이해상충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외국인투자가 및 투자유치국 정부의 권리와 의무는 기본적으로 투자유치국의 국내법에 의해 규정된다. 한 국가가 자국의 영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외국인투자에 대해 규율하는 것은 그 국가의 주권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인투자를 투자유치국의 주권사항으로만 인정하여 이에 대한 모든 조치를 투자유치국 정부의 자의적인 결정에 맡기는 경우 외국인투자가와 투자유치국 정부 간 이해상충과 갈등이 야기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국제투자가 활성화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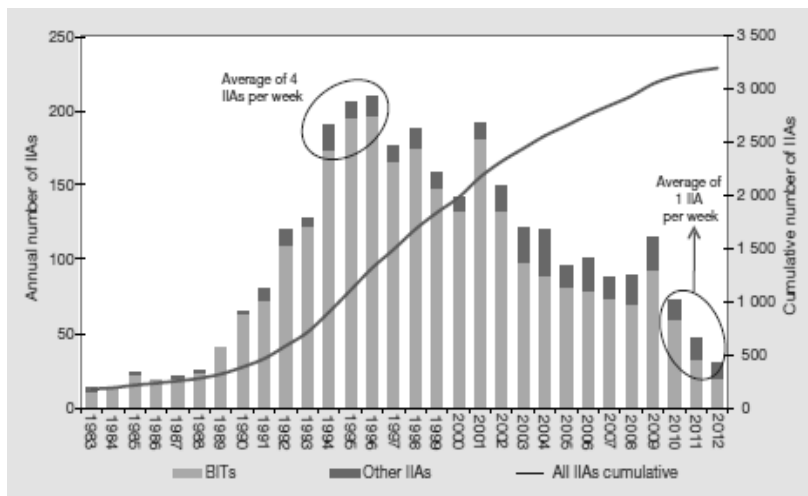
이러한 관점에서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투자자와 투자국 및 투자유치국 정부 간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국제투자규범이 필요하다. 국제투자규범이란 한마디로 국제투자와 관련된 주체들, 즉 투자유치국 및 투자국 정부, 그리고 투자기업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투자유치국 정부가 외국인투자기업의 부당한 행위⁷¹를 규제할 수 있는 권리, 이들 기업을 적절한 이유 없이 차별적으로 대우해서는 안 되며 이들의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 그리고 투자기업이 자국과 투자유치국의 법규를 준수해야 하는 의무, 투자유치국 정부에 정당한 대우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규정하고 있는 국제규범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권리와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국제투자규범은 이들 주체간의 이해상충을 정리하고 투명한 투자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국제투자를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71. 예를 들면, 이전가격의 설정, 반경쟁, 반고용, 환경침해 등이 있다.



이미 세계에는 국제투자규범이라 불릴 수 있는 규범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 2국간 상호투자의 증진과 보호를 목적으로 체결되는 양자간투자협정(BIT)은 현재 가장 기본적인 국제투자규범의 한 유형으로 World Investment Report(2013, p. 101)에 따르면 2012년 현재 그 수는 2,857개이며, 지역무역협정에 포함된 투자협정까지 포함한 국제투자협정(IIA)은 3,196개에 달한다. 그리고 거의 전 세계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는 WTO 역시 국제투자자와 관련된 규범(TRIMs와 GATS)을 가지고 있다. 이외 OECD, APEC, NAFTA, ASEAN 등의 경제협력체들도 회원국에 적용되는 투자준칙이 있다.

❏ 전 세계 국제투자협정 현황



자료: World Investment Report, 2013, p.102.

그러나 이러한 기존의 국제투자규범들은 투자자에게 안정되고 투명한 투자 환경을 제공한다는 목적을 부분적으로밖에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세계 투자환경의 급속한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도 못하다. 즉 외국인투자를 포괄적으로 관장하는 국제투자규범은 아직 제대로 정립되지 못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투자규범의 포괄성과 구속성을 기반으로 하는 다자간 투자협정(MAI)이 OECD에서 추진되었지만 1998년 말 협상이 결렬되면서 현재 국제투자규범의 불완전 상태는 계속되고 있다. MAI협상의 결렬이후 WTO에서 무역투자 작업반을 중심으로 다자간투자규범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었다. 그 동안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EU, 일본 등이 WTO에서 다자간투자규범의 제정을 위한 협상의 개시를 주장하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였었다. 지난 1997년 WTO에 무역투자 작업반이 설치된 이후 7년 동안 WTO 차원에서 투자협정의 제정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지만 1999년 시애틀 각료회의, 2001년 도하 각료회의 그리고 2003년 칸쿤 각료회의에서 WTO 투자협정의 제정을 위한 협상개시가 합의되지 못했다. 또한, 향후 WTO 투자협정의 제정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각국의 투자장벽을 설립 전 단계를 중심으로 요약하여 살펴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업종선택은 물론 외국인의 지분과 부동산 취득 등에 있어서 광범위한 투자장벽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 투자장벽의 해소는 투자유치국 정부의 자발적인 투자자유화와 기존의 국제투자규범을 통해서만 제한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해외에 진출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직면할 투자장벽들에 대한 이해와 그에 대한 극복노력도 이러한 틀 속에서 가능할 것이다. 아래에서는 국별 주요 투자장벽의 현황을 설립 전 단계와 설립 후 단계로 나누어서 보다 상세하게 살펴본다.

■ 주요국별 투자장벽(설립 전 단계)

국가	투자장벽
미국	국가안보를 위한 규제
EU	제3국 투자자는 EU서비스공급자에게 반드시 내국민대우 부여
중국	투자금지와 제한규정 자의적/외국기업 사무소 설치 허가제
베트남	국가의 안보, 국방 및 공익을 현저히 침해하는 프로젝트 등 네 가지 범주에 대해 투자제한 국가 안보, 국방, 사회 전체 질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분야 등 다수의 분야에서 조건부 투자허용
인도	소매업, 부동산업, 농업, 원자력산업 등 금지/외국기업의 부동산 사용은 실질적으로 장기임대만 가능
캐나다	투자제한 분야에 대한 투자 및 일정규모 이상의 기존기업 인수 시 사전 통지 및 심사/문화산업 및 금융 외국인지분을 제한
말레이시아	서비스업종의 경우 최고 30%까지 외국인투자가 가능하나 최근 지분제한을 지속적으로 완화

현황분석

설립 전 단계에서의 투자장벽

가) 투자업종에 대한 제한

세계 각국은 외국인투자가 자국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인식

을 바탕으로 외국인투자 자유화 정책을 시행해 왔다. 그 결과 각국의 투자제한업종은 많이 축소되어 왔다. 특히 OECD 회원국은 자본이동자유화규약에 따라 직접투자에 대한 자유화를 추진해오고 있다. 하지만 MAI와 같이 포괄적으로 설립 전 단계의 투자자유화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투자규범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투자제한업종의 철폐는 전적으로 투자유치국의 정책에 달려 있으며 투자유치국의 주권이 인정되는 만큼 각 국가별로 투자업종에 대한 제한이 존재한다.

투자업종에 대한 제한의 특징은 선진국과 개도국간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선진국의 경우 국가안보 등에 관련된 일부 분야에 대해서만 외국인투자를 제한하고 있는 반면, 개도국의 경우 각국의 정책 목적에 따라 광범위한 산업에 걸쳐서 외국인투자를 제한하고 있다.

노르웨이의 경우 수력발전, 우편, 철도, 양조업, 금융 분야에 대한 외국인소유권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지역의 자산취득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다. 산림, 광산, 경작지, 휴양지, 수력발전용 폭포 등을 10년 이상 임대하거나 취득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허가가 필요하다. 또한, 부동산을 소유한 노르웨이 기업의 주식을 구입 시 일정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특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뉴질랜드의 외국인투자는 사업투자(Business Investment)와 토지투자(Land Investment)로 구분되며 각각 규정을 달리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①총 지분의 25% 이상을 취득, ②지분매입 총액이 1억 뉴불 초과, ③주식감정가 총액이 1억 뉴불 초과, ④투자대상회사 주식발행인의 자산규모가 1억 뉴불 초과하는 사업투자의 경우 토지정보국 산하 해외투자청(www.linz.govt.nz/overseas-investment)의 승인이 요구된다. 그리고 ①토지의 총 면적이 5ha(5000m²) 초과, ②토지가 이름이 있는 섬의 일부이며, 총 면적이 4,000m² 초과, ③토지가 이름이 없는 섬의 일부, ④자연보존 목적의 토지로 총 면적이 4,000m² 초과, ⑤공공위락 목적의 토지로 문화유산이나 역사보존 지역, ⑥해안선을 포함 또는 인접토지의 총 면적이 2,000m² 초과하는 토지투자 역시 토지정보국 산하 해외투자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미국의 경우 원칙적으로 외국인투자를 자유화하고 있으나, 통신, 에너지, 운송 및 국가안전보장 관련 분야 등 일부분야에서는 예외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다. 미국 투자 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국가안보를 목적으로 시행되는 규제이며, 이는 1988년 종합무역법 제5021조(Exon-Florio Amendment)를 따르고 있다. 이 규정은 외국인이 관여하는 인수합병이 미국의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대통령은 외국인이 관여하는 거래가 미국의 국가안보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면 인수합병을 연기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07년 미국은 자국의 안보 및 기간산업 보호 강화를 위해 재무부 산하 외국인투자위원회의 기간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의 심사 및 집행절차를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였다. 또한, 2008.11월에는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운영절차를 규정하는 Regulation이 발표되었다.

스위스는 국적 선박운행 및 국내 항공상의 운행 등에는 외국인의 진출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그리고 은행업은 은행감독원의 허가를, 보험업, 취업 용역회사, 증권거래업, 카지노영업, 무기 및 폭약관련 업종은 주정부(칸톤)의 영업허가를 얻어야 한다.

EU 회원국 중 **독일**의 대외경제법은 국가안보, 외교정책, 외환관리 기타 필요한 경우 외국인투자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제한된 사례는 없다. 그리고 EU 및 EFTA 이외 외국투자자가 군수무기, 특정전략물자, 암호생산 관련 기업, 화학, 반도체, 통신, 에너지 등 분야에 대한 독일기업을 매수하거나 지분의 25%를 취득한 경우 정부가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저해한다고 판단되면 동 거래를 무효화 할 수 있다. **스페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외국인투자 금지업종을 두지 않고 있으나 공권력 행사 및 공공질서, 안보, 보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종은 예외가 적용된다. 그리고 국가안보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무기, 군수품, 폭발성 물질, 전쟁 물자 등의 제조 및 거래에의 투자와 EU 비회원국의 부동산 투자의 경우에는 국무회의에 의한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영국**은 외국인이 금융 서비스, 의약품, 우편, 주류판매, 유전개발, 전력, 가스, 통신, TV방송, 항공,

폐기물 처리, 食肉(가공, 소매) 등에 투자하는 경우 사업 인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일부 업종(의료기기, 의료·복지 서비스, 도박장, 폐기물 수송·브로커, 식품판매, 양계장, 낙농업 등)에 대해서는 사업등록을 필요로 한다. **오스트리아**는 환경오염산업, 국가 독점사업에 대해서만 외국인투자를 금지하며, 그 외에 TV 무선방송을 포함한 대부분의 산업(약 99.7%)은 외국인이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다. **이탈리아**는 EU 규정에 근거하여 정부의 영화산업 보조금, EU 역외국 은행에 대한 차등적인 자본금 요구, EU 역외국 항공사의 국내노선 취항 등 분야에서 내국민대우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며 조선분야에 있어서도 제한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가 일부의 경우에 한해 외국인투자를 제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국방 및 항공 산업에 대한 투자의 경우 정부의 승인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 **체코**의 모든 산업분야는 외국인투자가 개방되어 있으나 군수업, 금융·재정분야, 보험, 방송, 미디어부문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포르투갈**도 거의 모든 산업에 대해 외국인투자가 개방되어 있으나 수도, 우편, 철도, 항만에 대해서는 양여계약의 조건으로 제한하여 투자를 허용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 원칙적으로 외국인투자가 자유화되어 있지만, 외국인투자관련 기본법인 「Investment Canada Act」에 근거하여 외국인이 투자제한 분야에 대한 투자 및 일정규모 이상의 기존기업 인수 시 캐나다 산업부 및 문화유산부에 신고하거나 허가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문화, 금융, 에너지, 운송, 통신, 어업 등의 분야에 대해서 투자제한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제한은 주로 투자지분율과 관련된 제한이다. 특히 서적 출판 및 배포와 정기간행물의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외국인의 직접인수가 금지되어 있으며, 간접인수 역시 캐나다에 순이익이 돌아갈 경우에만 허용된다.

호주의 경우 부동산(특히, 도시권), 금융, 항공, 해운, 통신, 언론 및 방송 분야를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외국인의 자유로운 투자가 허용되고 있으나 AU\$ 248백만 이상 사업 또는 기업취득, 일정 금액 이상의 호주 부동산취득, 외국 정부 및 산하기관의 직접투자, 매스미디어에 대한 투자(단, portfolio 투자의 경우 5% 이상 지분투자 시)의 경우 정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정부는 외국인투자가 국익에 반한다고 평가되는 경우 투자를 허가하지 않는다.

개도국도 외국인투자의 자국경제발전에 대한 기여를 높게 평가하여 투자자유화 등 경쟁적으로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투자업종을 제한하고 있다.

가나는 상품 판매업·서비스업, 노점상, 택시 운수업, 렌트카 영업(25대 이하), 핸드폰 충전카드 인쇄업은 가나의 전속사업으로 투자 또는 영업이 불가하다. 수산업의 경우는 외국인소유가 불가능하나 물고기 양식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참치잡이 어선은 50%까지 소유할 수 있다.

과테말라는 공공시설, 보험, 광산업, 임업, 미디어 등 일부 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며, 카지노의 경우 외국인투자를 금지하고 있다.

나이지리아는 Negative List에서 석유가스와 무기, 마약 등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제한하며 그 외의 모든 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를 허용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와 현지투자자가 합작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내국인 파트너의 소유지분은 납입자본금의 5% 이상이어야 한다.

니카라과는 공공질서, 공중보건, 환경보호 등 정책적 이유로 외국인투자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분야가 있으며 관련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율한다.

대만은 외국인에 대한 투자금지 또는 제한 분야를 두고 있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Negative List 방식으로 된 「화교 및 외국인 투자 통제 조례(僑外投資負面表列-禁止及限制僑外人投資業別項目, Negative List for Investment by Overseas Chinese and Foreign Nationals)」(2013.6.17일 개정)에 명시되어 있다.

도미니카공화국은 「외국인투자법」에 따라 위험물, 독극물, 방사선 등의 처리, 공공의 건강과 안녕을 해치는 활동, 국가안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물질이나 장비의 생산 등에 대해 외국인투자를 금지하고 있으며 공공서비

스, 광산, 매스컴, 산림개발 등은 특별법에 의해 외국인투자를 사전에 승인 받도록 하여 일부 제한하고 있다.

라오스는 거의 모든 분야에 대해서 외국인에게 시장을 개방하였으나 광산업의 경우 실제 개발을 하지 않는 사례가 증가하여 2012.6월 총리령으로 모라토리움을 선언하고 2015년까지 광산개발권 신규허가 부여를 중단한 상태이다. 그리고 3성급 미만의 호텔과 게스트하우스 등 소규모 숙박업소는 내국인 보호를 위하여 외국인투자를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관광안내사업은 내국인과 합작투자를 하여야 한다.

멕시코는 「외국인투자법」(1993년 도입, 1996년 개정)에 따라 금지분야(석유채굴 및 정유, 국가안보관련 산업 등)로 분류되어 있지 않는 한 모든 분야에 대하여 외국인투자가 허용된다. 동 법에 따르면 총 704개 분야 중 606개 분야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를 제한하지 않으며, 26개 분야는 외국인투자를 금지(16개 분야는 멕시코 국민에게만 투자가 허용, 10개는 국가에 유보)하며 37개 분야는 외국인투자위원회(Foreign Investment Commission)로부터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며 35개의 분야는 외국인출자지분을 제한하고 있다.

모로코는 에너지, 수자원, 철도, 운송, 광업, 통신 등 국가 기간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를 제한하고 있어 정부의 승인을 얻어야만 해당 사업진출이 가능하다.

몽골은 유해물질 또는 무기생산 분야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 대해 외국인투자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2012.5월 전략분야 외국인투자조정법이 통과됨에 따라 광업, 언론, 금융, 통신 분야의 경우 외국인이 49%의 지분을 매입할 경우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외국인지분이 49%를 초과하거나 투자금액이 1천억 투크릭 이상일 경우 의회의 의결을 통해 투자여부가 결정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바레인은 우선 ①도박, 주류제조, 담배제조, 담배 자동판매기 수입, 마약제조, 무기제조, ②모든 종류의 폐기물 수입, 방사선 물질 저장·투기, 유독성



물질 수입, 석면(asbestos)과 석면부산물의 수입·제조, 제한된 화학약품 수입과 산업용도로의 사용, ③진주양식, ④제1종 우편(letter post)에 대한 투자가 내외국인 모두에게 금지 되어있다. 그리고 ①부동산 서비스업과 부지와 건물 임대 및 관리, ②언론사와 출판사, TV, 영화, 라디오 연극제작과 관리, 배포관련 업종, ③운수업, 해양 크루즈, 운전 연수, 오토바이 대여, 렌트카, 콜택시, ④석유관련 제품 공급(주유소 등), 가스분배, ⑤공공기관 행정지원 서비스, ⑥하지와 움라(이슬람 성지순례) 서비스, ⑦외국인 노동력 공급, ⑧상업홍신소(commercial agency)는 내국인만 투자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①부기(book-keeping)와 회계서비스, ②레이스카 연료 수입, 수출, 판매, ③화물 통관, ④어업은 GCC 국민만 투자가 가능하다.

베네수엘라는 「외국인투자법」상 기본적으로 국내투자와 외국인투자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투자자는 현지투자자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금융조달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차베스 정부에서 2006년 이후 석유산업 국유화에 이어 시멘트, 철강 등 주요 기간산업에 대한 국유화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어 이들 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제한될 수 있다.

베트남은 국가의 안보, 국방 및 공익을 현저히 침해하는 프로젝트, 베트남의 교육, 문화, 도덕, 미풍약속을 현저히 저해하는 프로젝트, 국민의 건강을 저해하거나 천연자원의 고갈, 환경의 심각한 파괴를 초래하는 프로젝트, 외부에서 베트남으로 유독성 폐기물을 반입하여 국제조약에서 금지하고 있는 유독성 화학물질 혹은 독극물을 생산하는 프로젝트 등 네 가지 범주에 대해서는 투자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국가 안보, 국방, 사회 전체 질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분야, 금융 및 은행 분야, 공공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분야, 문화, 정보, 신문, 출판 분야, 엔터테인먼트 관련 서비스 분야, 부동산 사업, 천연자원, 생태환경의 고갈, 조사, 탐사, 개발 분야, 공적 교육 개발 분야, 법률에 규정된 일부 기타 분야 등에 대해서는 조건부로 투자가 허용된다.

벨라루스는 대통령이 특별히 허용하지 않은 국방 및 안보, 보건부가 규정한 약물류, 독극물류의 생산과 판매, 정부가 독점권을 부여한 법인에 대한 경제

부의 동의 없는 외국인투자는 금지되어 있다.

브라질은 통신, 석유채굴, 정유 등 전략 산업분야와 교통, 우편업무, 국내선 항공, 우주공학, 언론 등에 다양한 투자규제가 존재하고 있다. 특히 보건분야, 항공·우주산업, 핵에너지개발 등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헌법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그밖에 외국 건설회사는 브라질 회사가 행할 수 있는 건설기술 용역을 제공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새로운 외국인투자법에 따라 다음의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금지하고 있다. 제조업의 경우 석유탐사 및 생산, 군사장비·기기·유니폼 제조, 민간 폭발물 제조가 금지되며 서비스분야의 경우 군사부문 Catering, Security 및 탐정 서비스, 메카 및 메디나지역 부동산 투자, 성지 순례(Hajj and Umrah) 관련 관광 안내 및 가이드 서비스, 국내 고용사무소를 포함한 신규모집 및 고용서비스, 부동산 브로커, 시청각 및 미디어 서비스, 인쇄 및 출판(단, 일부 허용), 육로수송 서비스(단, 도시간 철도여행객서비스 제외), 조산원·간호원·물리치료사·진료보조원 서비스, 어업이 금지된다.

싱가포르는 외국인투자를 적극 장려하고 있으며 일부 분야에 대해서만 외국인투자를 제한하고 있다. 우선 맥주, 시가담배, 일반담배, 압연철, 껌, 성냥 등 6개 제조업은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며 방송, 법률, 엔지니어링 및 건축서비스, 회계 서비스, 은행 및 증권업에 일부 제한이 존재한다. 그리고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일부 공기업에 대해 지분제한이 있다.

아랍에미리트는 오랜 기간 동안 외국인투자를 장려하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으며 타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간편한 관세제도, 세금제도 및 무역장벽의 최소화 등의 측면에서도 매력 있는 투자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투자환경 하에서 UAE는 중동지역의 비즈니스 허브로 주목 받고 있으며 많은 투자를 유치하고 있다. 특히 면허, 외국인소유조건, 스폰서 지정, 자국민 고용조건 등 여러 가지 규제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는 프리존이 매우 발달해 있다.

아르헨티나는 특별법에 따라 핵에너지 개발, 우주산업, 방위산업, TV방송



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금지 또는 제한되어 있고 그 외의 분야는 외국인투자 등록소에 등록만 하면 투자가 가능하다.

알제리는 석유 탐사 및 개발(정유 및 송유관을 통한 수송 포함)에 국영석유 회사인 Sonatrach의 참여를 체계화·의무화하고 있다. 동 분야에 외국회사가 투자할 경우 Sonatrach의 지분이 최소 51% 이상 확보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에콰도르는 국가안보분야에 대한 외국인 경제활동을 헌법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전기 및 정보통신 분야에서는 지분제한 등 일정부분의 제한이 따른다. 그리고 관련분야로의 외국자본참여는 일반적으로 정부주관 하에 공개입찰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에티오피아는 우편, 송전, 항공 등에 대해서는 정부가 독점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군수 및 통신 등에 대해서는 정부와 Joint Venture를 허용하고 있다. 그리고 은행, 보험 등 금융, 방송, 법률, 재래의학, 광고, 운송 등에 대해서는 에티오피아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만 투자가 허용된다.

엘살바도르는 소규모 기업(고용원 10인 이하, 연간 판매액 68,571달러 이하) 및 전통 어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제한하고 있다. 그리고 항만, 철도, 운하 및 기타 공공사업의 경우 정부의 양허를 받아야 한다.

온두라스는 국가안보, 공중보건, 환경보호와 관련된 투자는 관계당국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며 특히, 기초 보건서비스, 통신, 전기발전, 송전 및 판매, 항공운송, 수산업, 수렵, 양식업, 임산자원 개발, 광산개발, 일정면적 이상의 농업활동, 보험 및 금융업, 사교육 등은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요르단은 보안 및 사설탐정, 건축용 석재 및 골재 채취, 통관 서비스, 택시·트럭·버스 등 도로운송서비스(여객 및 화물)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를 금지하고 있으나 최근 외국인투자유치 확대를 경제개혁의 핵심과제로 추진해 오고 있고, 걸프지역 국가들로부터 중동의 안전지대로 특히 각광받고 있다.

우루과이는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 공공 양허 사업(public

concessions), 보험 및 은행업, 광산업, 정보통신산업 등에 있어 외국인투자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안보 관련 산업 및 직접적인 외국 자본의 참여가 법적으로 금지된 국가 독점산업(유선 전화, 전기, 수도, 가스 및 석유 등)이 존재한다.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방위산업과 내무부 및 국가보안위원회 산하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금지된다.

이란은 전 사업 분야에서 외국인투자를 환영하고 있으며 특히 수입대체 사업, 석유화학, 석유, 가스개발, 사회간접 자본시설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장려하고 있다. 석유·가스 분야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가 금지되었으나 1996년 이후 Buy-Back방식의 외국인투자를 허용하고 있고, 다양한 Project를 국제 입찰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집트의 경우 24개 투자허용분야를 명시하고 있어 이를 제외하고는 외국인투자가 제한된다. 그리고 ①에너지집약 프로젝트, ②알루미늄 원료, ③메탈합금 프로젝트, ④담배산업, ⑤군수부문(국영 및 관련기업과의 합작은 가능), ⑥시나이반도 내 석유 및 천연가스 탐사 시추를 제외한 프로젝트의 경우 투자청 승인 전 해당부처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투자가 가능하다.

인도의 대부분 산업은 외국인투자가 개방되어 있으나 원자력, 복권, 도박, 전통소매금융 등 일부 분야에 대한 투자는 여전히 금지되어 있다.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승인은 중앙은행인 RBI(Reserve Bank of India)에 신고만 하면 되는 자동승인과 FIPB(Foreign Investment Promotion Board)에 의한 정부승인의 두 종류가 있다. 일반 제조업에 대한 투자는 자동승인 대상이나 ①주류, 담배, 전자우주항공·방위산업·설비, 산업용 화약, 유해화학물질 등 강제허가업종, ②소기업 고유 업종, ③도시계획에 따른 제한지역에 공장 설치를 희망하는 경우는 정부승인을 요한다. 이외에 외국인투자자가 이미 기술·금융·상표 분야 협력선을 가지고 있는 경우, 거주자로부터 비거주자로의 주식이전을 수반하는 경우와 산업정책상 별도 제한이 있는 경우에도 정부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와 함께 일반 제조업 외에는 각 산업별로 투자지분 제한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정부는 2013.4월부터 통합 FDI 정책을



발표하였으며 투자에 대한 최신 정책내용을 상공부 DIPP(<http://dipp.nic.in>)에 공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2007년에 발효된 신투자법에 의거 외국인투자는 무기, 탄약, 폭약, 군장비 및 법에 의해 금지된 분야의 투자가 금지되며, 내·외국인 투자자도 투자가 금지되는 분야는 대통령령으로 결정한다.

중국의 경우 외국인이 중국내에 기업설립을 포함한 투자를 함에 있어서 진출하고자 하는 분야가 외국자본에 개방되는지, 개방정도는 어떠한지를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법령을 통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 법령은 외국인투자 분야를 장려, 제한 및 금지 등 세 가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금지는 외국인투자가 전혀 허용되지 않는 것이고, 제한은 지분율제한 등의 일정한 제한이 있는 것이며 장려는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하여 일정한 혜택을 주는 분야를 말한다. 위 세 가지 유형에 열거되지 않은 업종은 허용분야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는 아무 제한이나 혜택 없이 외국인투자가 허용되는 분야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 법령은 1995년 실행된 이후 5차례(98년, 02년, 06년, 07년, 11년) 수정되었으며, 2011년 현재 수정된 법령⁷²에 의하면 ①대외개방 확대, ②제조업 개혁, ③전략적 신흥산업 육성, ④서비스업 발전, ⑤지역 간 조화로운 발전 추진 등을 강조하고 있다.

수정된 법령에서 신규 투자장려 산업은 ①녹색·유기농 야채 재배에 대한 투자, ②세일가스, 해저천연가스 수합물에 대한 탐사와 개발, ③신에너지 자동차 핵심부품(외자지분을 50% 미만) 생산, ④재생수 공장건설과 운영 및 자동차 충전소, 배터리 교환소 건설과 운영에 대한 투자, ⑤일반상품의 공동배송, 신선 농산품의 저온배송에 대한 물류 및 그와 관련된 기술서비스, 농촌 프랜차이즈 배송업에 대한 투자, ⑥창업 투자기업 및 지재권 서비스 등 두 가지 분야 추가, ⑦고등교육기구, 직업기능 훈련, ⑧철도간선망의 건설 및 경영, 국제컨테이너 복합운수 업무, ⑨바이오 프로젝트 및 바이오

72_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전문은 대사관 홈페이지(<http://chn.mofat.go.kr/korean/as/chn/policy/condition/index.jsp>)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 프로젝트 기술, 바이오 에너지 개발기술, 자원 재활용 및 종합이용기술, 산업 배출물의 재활용 기술 개발 및 응용, ⑩오수 및 쓰레기 처리장, 위험 폐기물 처리장 및 환경오염관리시설의 건설 및 경영, ⑪노인, 장애인 및 아동 서비스기구, ⑫공연장소 및 체육시설 경영, 헬스·경영, 체육훈련 및 중개서비스 등이 있다. 그러나 광산자원 탐사와 개발, 농산품 가공종류, 땅콩 및 면화씨 등 각종 식용유지 가공산업을 대상으로 투자제한 산업을 신규로 추가하였다. 또한 별장건설과 경영에 대해 투자제한에서 투자금지로 강도 수위가 한층 높아졌고, 우편물의 중국내 특송 서비스 업무도 금지산업 분야에 추가됐다. 다만 인터넷 문화 경영 분야에서 음악의 인터넷 서비스를 금지사항에서 제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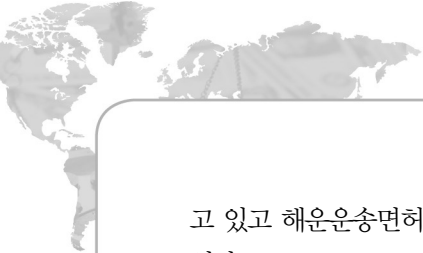
칠레는 국가안보 관련사업은 외국인투자가 전면 금지되고 있으며 원유개발 정제 및 판매업, 원자력 및 리튬 관련 광물개발, 연안운송업, 항공업, 방송사업, 어업의 경우 제한을 두어 허용하고 있다.

카타르는 금융, 보험, 부동산 및 상업대리점업 등에서 외국인투자가 엄격히 규제되고 있으며, 금융 및 보험업에 대한 투자는 내각의 승인이 필요하다.

캄보디아는 외국인투자가 금지되는 분야는 일부에 국한되며 투자금지분야는 2005.9월에 개정된 「외국인 투자법 시행령 No. 111」에 구체적인 분야가 명시되어 있다.⁷³ 동 시행령에 따르면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투자가 금지되는 분야로는 산림법에 의해 금지된 목재벌목, 보건 및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의 생산, 향정신성 물질 및 마약제조 및 가공, 수입한 폐기물에 의한 발전 및 가공, 기타 법률에 의해 금지된 투자가 있다.

코스타리카는 과거에는 통신, 보험, 석유수입 업종을 국가가 독점하여 외국인투자가 금지되었으나 CAFTA의 발효로 통신과 보험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허용되었다. 한편 외국기업의 투자가 제한되는 업종은 전력생산, 관광서비스, 교통운송 부문 등이다. 그 외에도 택시, 버스 등 대중교통사업면허 발급에 있어 외국투자기업보다는 자국 자연인 및 법인에 우선권을 부여하

73_ 동 시행령은 Negative List 방식으로 투자금지분야를 명시하고 있다.



고 있고 해운운송면허의 경우에는 발급대상에서 외국투자기업을 배제하고 있다.

콜롬비아는 방위산업, 유해물질 제조 및 유통, 금융 및 보험, 자원개발, TV 중계 등은 외국인투자를 제한하거나 사전승인을 요구하고 있다. 이외의 업종은 외국인투자가 내국민대우를 받고 외국인에 의한 100% 투자가 가능하다.

터키의 외국인투자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개방되어 있으나 금융, 석유, 에너지 등 주요 산업분야에 있어서는 여전히 외국인투자에 대한 특별허가가 필요하다.

투르크메니스탄은 헌법 수호, 안보 및 국방상의 이유로 외국인투자기업의 설립이 제한될 수 있다. 이를 제외한 경우 투자지분율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실제 주요 국가 기간산업의 경우 대부분 49% 이상 외국인의 투자지분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튀니지는 석유정제산업, 의약품제조업(국영기업인 SIPHAT 생산), 무기, 군수품 및 탄약 제조업, 부분품 및 부속품 제조업, 양탄자 및 융단 제사업, 양조업(맥주, 맥아, 와인), 제분업, 식용유 정제업, 협강 및 시멘트원반 제조업, 직물 분해업, 담배제조업 등은 직접투자가 허용되지 않는다.

파나마는 외국인투자를 적극 장려하고 있으나 도박, 수도·전기·전화·방송 등의 공공서비스, 은행·보험·재보험, 주식·증권 거래, 리스, 신탁, 지하자원 개발 분야에 규제가 있으며, 소매업(농업, 공업 분야 기업의 자사 제품 판매 제외)에 대한 진출이 금지되어 있다.

파키스탄에서는 무기류, 고도 폭발물, 화폐·조폐, 방사능 물질, 비산업용 알코올 제조 등 5개 분야에 대해 투자진출이 제한되어 있다.

페루는 원칙적으로는 외국인투자를 개방하고 있으나, 방사성 물질, 마약류, 인체에 유해한 동식물, 국민 보건 위생에 위해를 야기하는 산업, 용역 및 경비업, 관광 숙박업, 유흥업소, 도박 관련업, 운송업, 은행 및 국방관련 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이 페루의 관련 부처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제한하고 있다.

필리핀은 「외국인 투자법」(1991년)에 따라 방송매체, 엔지니어, 의료업, 회계업, 설계업, 화학관련분야, 통관중개업, 임업, 법률용역 등 전문 서비스 분야, 소매업(자본금 USD 250만 미만) 등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금지하고 있다. 외국인투자제한 분야는 건전한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분야, 헌법 또는 법률에 저촉되는 분야, 독점 조장 가능 분야, 필리핀 업체가 이미 충분히 개발하고 있는 분야이다.

나) 투자지분관련 제한

외국인투자자의 투자지분을 일정 비율로 제한하는 것은 가장 널리 활용되는 외국인투자 제한방식이다. 투자유치국은 외국인투자가 발생시킬 수 있는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한다는 정책 목적 하에 경영권을 국내투자자가 보유하도록 외국인투자자의 지분을 제한한다. 투자지분관련 제한은 선진국과 개도국에서 모두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범위와 수준에 있어서 제한의 강도는 개도국에서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노르웨이는 내외국인 구분 없이 정부의 양허(concession)를 받지 않으면 개인투자자 1인이 국내 TV와 라디오의 지분을 1/3 이상 소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뉴질랜드**는 마오리족의 특수이익을 인정하여 수산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상업적 쿼터는 자국민에게만 할당되며, 외국인의 경우 쿼터 라이선스를 임대받아 어획활동이 가능하다. **독일**의 경우 독일기업 또는 동 지분의 인수 시에 시장점유율이 전체의 50%를 넘는 경우 독과점 위반 여부에 대한 당국(Bundeskartellamt)에 사전승인을 요청해야 하고, 보험업, 은행업, 전당포업, 경매업, 도박장 운영, 부동산중개업 등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감독관청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스라엘**은 군수산업에 대해서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해외로부터의 투자를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통신분야 중 국제전화와 케이블 TV는 74%, 휴대전화는 80%로 외국인지분에 대한 상한선이 존재한다.

캐나다의 경우 TV 및 라디오 방송은 캐나다인이 80%(모기업의 경우 66.7%) 이상 소유해야 하며, 금융(소형은행(자본금 C\$10억 이하)은 제한이 없으나 중형은행(자본금 C\$10억~50억)의 외국인지분을 상한은 65%, 대



형은행(자본금 C\$50억 이상)의 외국인지분을 상한은 20%, 통신(1종 전기 통신사업자)의 외국인지분을 상한은 20%, 해운(캐나다 국적선에 대한)의 외국인지분을 상한은 25%, 에너지 및 광업(우라늄광산의 경우)의 외국인지분을 상한은 50% 등으로 외국인투자 지분을 제한하고 있다.

호주의 경우 언론 및 방송, 항공, 통신 등의 분야에서 외국인지분을 제한하고 있다. 외국인지분 상한은 상업용 TV가 20%(개인 15%), 유선 TV는 35%(개인 20%), 주요 도시의 신문사는 30%(개인 25%), 지방 외곽의 소규모 지역 도시의 신문사는 50% 미만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라디오방송에 대한 투자지분제한은 없다. 항공서비스의 외국인지분제한은 국내선 100%, 국제선의 개별 항공사는 49%, Qantas 항공은 49%(외국항공사의 지분 참여 시 35%, 1인당 지분소유제한 25%)이며 공항의 외국인지분한도는 49%(개별항공사 5%)이다. 통신서비스의 경우 Telstra에 대한 총외국인투자한도는 총지분의 35%이며 개별외국인투자한도는 총지분의 5% 이하이다.

개도국의 경우 외국인투자의 제한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발전 등 외국인투자 유치전략 측면에서 투자지분을 제한을 활용하고 있다. 몇몇 국가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2009년 서비스 자유화 조치이후 대부분 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지분 참여제한이 철폐되었으나 금융산업 분야에 일부 제한이 존재한다. 즉, 외국인투자지분 상한은 상업은행의 경우 30%, 이슬람 은행, 투자은행, 보험사의 경우 70%로 여전히 존재한다.

바레인의 경우 GCC 기업은 바레인 기업을 100% 소유할 수 있으나 그 외 외국인은 49% 이내 지분소유만 가능하다. 그리고 무역(판매, 구매, 수입, 수출 포함), 관광, 여행사무소, 의료 클리닉, 의료센터, 약국 등은 바레인 파트너 혹은 내국인의 지분소유가 반드시 요구된다.

벨라루스의 경우 외국인투자자와 동 투자자 소유의 자회사는 보험사 설립 자금의 3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다.

브루나이의 경우 원유·천연가스 등 자원분야와 국가식품안전에 관계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49%까지의 자본투자만 허용하고 있다. 그 외의 분야에 대해서는 투자지분 및 금액에 제한이 없으나 현지 기업인과의 공동합작 형식의 투자를 장려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2005년 WTO에 가입한 이후 지속적으로 투자제한조치를 완화하여 2010.9월 현재 보험업은 60%, 금융·통신 서비스업은 70%, 도소매업은 75%로 외국인투자지분 상한을 확대하였다.

아랍에미리트는 10가지의 회사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형태별로 외국인지분 제한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다. 예를 들어 Limited Liability Company, Public 혹은 Private Joint Stock Company 등은 외국인이 지분을 50% 이상 소유할 수 없다.

오만은 일부 서비스 분야의 소규모 사업을 제외하고 외국인투자를 제한하는 분야는 없으나 모든 투자는 정부의 승인이 필요하다. 그리고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외국인지분소유는 70%까지만 가능하다.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100% 외국인소유 회사설립이 가능하나 기본적으로 합작투자형태를 유도하고 있으며 지분제한이 일반적이다. 또한 민영화 시에도 주요 전략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지분을 49%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이란의 「외국인 투자촉진 및 보호법」에 따르면 외국인투자지분 한도는 전체 산업부문의 25%, 개별 분야당 35%를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수출이 목적인 투자는 외국인투자지분이 100% 허용된다. 외국인의 투자허용 분야도 현지인이 투자 가능한 모든 산업 분야로 확대하였다. 다만 석유자원 등의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은 제재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2010.5월 투자환경 개선과 아세안 경제협력 수준에 맞추기 위해 외국인투자제한 업종을 개정, 일부 업종에 대한 외국인투자지분 제한을 확대하였다. 즉, 건설업(67%), 영화관련 서비스산업(스튜디오, 필름 가공처리, 더빙, 프린팅, 복사)(49%), 병원 및 병원 서비스 산업(67%), 발전소(95%), 우편서비스(49%) 등에 외국인소유지분 제한이 존재한다.



키자흐스탄은 일부 보호대상 산업에 대해 외국인출자비율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외국인투자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산업별·업종별 제한 요건에 대한 통합된 법령이 없기 때문에 관련된 제반 법령을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 주요 산업인 석유분야의 경우 해상 및 육상 광구 모두 외국인 지분 참여는 50%까지만 가능하다.

카타르의 경우 외국인은 금융, 보험, 부동산 및 상업대리점업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 참여할 수 있으나 현지기업(인)과의 합작회사 설립 시 외국인투자자의 지분은 자본금의 49%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러나 농업, 제조업, 보건, 교육, 관광, 천연자원 개발 및 이용프로젝트, 발전, 광업, 컨설팅·기술·IT·문화·스포츠·여가·유통 서비스분야는 상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을 경우 100%까지 외국인투자가 인정된다.

케냐는 보험, 정보통신, 전력·항만 등 인프라, 언론분야를 제외하면 자국민의 일정 지분소유를 요구하지 않는다. 보험, 정보통신 분야는 외국인지분이 각각 66.7%, 70%까지 제한되어 있으며, 나이로비 주식시장(NSE: Nairobi Stock Exchange)에 상장된 일반 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지분을 75%까지 허용한다.

튀니지는 서비스업분야(운송, 통신, 관광, 교육, 토목공사, 부동산, 전산서비스 등)에서 완전 수출기업의 형태가 아니고 외국자본참여율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투자고등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그리고 농경지 경작, 수산·양식업(튀니지 북부) 등의 농수산업부문의 경우 외국인지분소유는 66%까지 허용된다. 이외 유가증권 투자는 기업지분의 50% 이상을 취득할 시 투자고등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필리핀의 경우 외국인투자법에 따라 Negative List상에 기재된 업종은 외국인 지분소유 제한을 두고 있는데 국내 및 해외인력 수급업, 건설 및 건설 관련 보수계약(공공사업 분야) 분야, 방위 관련 건설업은 25%, 광고업은 30%, 천연자원개발(광물생산 분배계약), 부동산 소유, 공공시설 운영관리, 관공공사, 국영 및 공공기업에 관한 물자조달업, 국내 및 해외건설업·공공시설 건설업(민간 발주공사), 납입자본금 USD 20만 미만의 국내 영업행위

등은 40%이며 USD 5천만 이상의 대형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지열발전프로젝트 제외)도 외국인투자가 40%로 제한된다.

한편 중남미의 일부 개도국은 투자지분관련 제한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멕시코는 외국인투자가 금지 또는 제한된 98개 분야 중 37개 분야는 외국인투자위원회(Foreign Investment Commission)로부터 사전허가를 얻을 경우에는 100% 투자까지도 허용하고 있으나 35개의 분야에 대해서는 외국인출자지분을 10%, 25%, 또는 49%(특히, 장거리 통신 분야)로 제한하고 있다.⁷⁴ 그 외에 외국인 출자지분이 49%를 초과할 때와 총 투자 가치가 매년 외국인투자위원회에 의해 설정되는 기준(threshold amount)을 초과할 때에는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베네수엘라는 TV, 라디오 방송 및 현지어 신문, 국가자격이 요구되는 변호사, 회계사, 경제전문가, 엔지니어, 의사, 수의사, 치과의사, 기자 등 전문직종에는 외국인투자를 20%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며 항공운송과 선박의 경우 베네수엘라 국적기 또는 국적선 등록을 위해서는 외국인지분이 1/3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볼리비아는 합작투자의 경우에도 광산분야는 외국인이 지분을 49% 이상 소유할 수 없다.

브라질은 통신, 유전, 광산, 금융산업, 운송 분야에 외국인의 자본참여가 제한되어 있다. 이중 이동통신분야에 외국인 절대다수 지분보유를 불허하고 있으며 광산채굴분야는 외국투자기업이 브라질 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국내에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할 수 있다. 또한 언론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총자본과 의결권주의 30%까지만 허용하며 그 외에도 케이블 TV는 49%까지, 국내 항공사는 25%까지 외국인의 의결권주 보유 제한을 두고 있다.

74. 멕시코는 총 704개 분야 중 98개 분야에 대해 외국인투자를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다.



아르헨티나의 경우 일부 외국인투자 제한 또는 금지 업종을 제외하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소유권 제한은 없으며 이윤 재투자 의무, 내국 기업화 등의 기업형태의 전환 의무도 없다. 내국기업의 주식취득도 100%까지 가능하다.

엘살바도르는 TV 및 라디오 방송에 대해 외국인소유지분이 49%를 상회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이외 지분소유제한은 거의 없다.

칠레도 일부 제한업종을 제외하면 100% 외국인지분보유가 가능하다.

코스타리카는 전력생산 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 한도는 전체 자본금의 35%까지, 국내선 항공사에 대한 외국자본의 참여는 49%까지만 허용하며, 해안선 200미터 이내 지역의 관광시설에 대한 투자 시 외국기업의 지분 한도는 49%까지만 허용하고 있다.

다) 지사 및 사무소 설립관련 제한

지사 및 사무소를 통한 해외진출은 국제기업이 자주 선택하는 해외진출방식이다. 이 조직형태는 자회사 형식에 비해서 설립과 운영에서 많은 유연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로 생산거점을 필요로 하지 않는 상사 등에 의해 선택된다. 이러한 지사 및 사무소 진출방식의 유연성은 역으로 투자유치국의 입장에서 보면 통제하고 관리하기가 어렵다는 특성을 가져오게 된다. 특히 단기성 자금을 이동시키는데 있어서 자회사에 비해서 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외환관리상으로도 투자유치국이 상당한 신경을 써야 할 대상이기도 하다. 따라서 선진국의 경우 대부분 외환자유화와 투자자유화를 실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사 및 사무소 설립에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그리고 선진국의 경우 대부분 지사 및 사무소에 대한 과세를 통해서 지사 및 사무소의 운영을 파악하고 있어, 지사 및 사무소의 설치에 대한 제한이 대부분 개도국에서 발견되고 있다.

베트남에서는 현지 시장조사, 마케팅 홍보 등 외국본사의 시장개척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대표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으나 대표사무소는 베트남 외국투자법에 따라 법인격을 보유하지 못하고 현지에서의 영업행위가 일체 금

지된다. 지사를 설립하는 경우 대표사무소와는 달리 영업활동을 할 수 있으나 베트남 법에 의해 제한된 범위에서만 영업이 허용된다. 지사 설립을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 이후 최소 5년간 활동을 하여야 하며 베트남 법에 의해 허용된 재화 및 서비스 교역을 할 수 있으며 투자허가기관은 무역부(MOT)이다.

볼리비아에 법인이나 지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주요일간지에 법인 또는 지사 설립을 공고하여야 하고 신문에 공고한 내용과 재무제표, 당해 모기업이 본국에서 합법적으로 설립된 것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상업등기소에 제출하고 등록해야 한다.

앙골라의 경우 2011년 개정 투자법에 따라 외국기업의 자회사설립은 제한을 받지 않으나 100만 달러 이상 직접투자를 통한 단독법인을 설립하거나 현지기업과의 합작을 통한 합작법인을 설립하여야 진출이 가능하다.

엘살바도르는 최소자본금(USD 2천)을 보유(스페인어 구좌 기록을 준비)해야 지사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오만의 경우 금융업, 기술자문 및 컨설팅서비스분야, 정부가 추진하는 대형 프로젝트 분야에 한해서만 지사 설치가 가능하다. 그리고 연락사무소는 단순히 모기업과의 연락 및 정보전달 행위만 할 수 있다.

이란 내에 외국회사가 지점이나 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재정부 산하 회사 등록청으로부터 설치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종전보다 설립허가요건이 강화되었다.

이집트 내에 지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투자청의 승인을 얻고 상업등기소에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한다. 연락사무소의 설치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신청서를 등기소에 제출하고 등록하면 된다.

인도는 지사 또는 연락사무소 설립 시 중앙은행(Reserve Bank of India)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처리기간이 많이 소요된다.

중국의 경우 외국기업의 연락사무소 설립은 허가사항이며 허가신청은 반드시



시 대행기관을 이용해야 한다. 또한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영리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되 시장조사 및 연락업무 등의 본사지원업무만을 할 수 있다. 중국 내에서 연락사무소 설립절차는 크게 설립허가신청과 사무소등기로 구분되며, 각 단계별로 요구하는 서류와 수수료가 지역별로 상이하다. 중국 정부는 연락사무소의 위법행위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 등기관리 강화에 대한 통지」를 2010.1.4 일에 발표하였고, 이후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 등기관리 조례」가 2010.11. 10일 발표되어 2011.3.1일부터 정식 시행되었다. 연락사무소에 대한 관리 강화는 주로 등기 심사, 대표인원 관리, 위법행위 관리, 기타 사항과 관련된 것이다.

캄보디아의 경우 지사 및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상무부(MoC)에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면 쉽게 허가를 받을 수 있다.⁷⁵ 캄보디아에서 지사의 영업활동은 가능하나 연락사무소의 경우 영업활동은 불허되며 단지 본사와의 연락 및 송금 등 비영리 활동만을 할 수 있다.

쿠웨이트의 경우 자유무역지대를 제외하고는 외국(법)인의 등록된 지사사무소(registered branch offices) 설립을 불허하며, Commercial Agent나 Service Agent를 통해서만 쿠웨이트 내 영업활동을 할 수 있다.

필리핀의 경우 연락사무소·대표사무소 및 지사의 설립은 증권거래위원회의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라) 이행의무의 부과

이행의무의 부과란 외국인투자 설립의 조건으로 투자유치국이 외국인투자자에 대해서 일정한 비율의 수출의무, 일정비율의 국내부품조달 의무, 국내 상품의 우선적 구매 의무, 수입액이나 국내 판매 등을 수출액과 연계시키는 의무, 기술이전 의무, 합작법인의 설립의무, 자국내 본점 설립의무, 자국내

75_ 지사 및 연락사무소 설치 신청 비용은 약 1천 달러 정도이며 서류 신청 후 15일 이후 지사 설치 허가증이 발급된다.

일정비율의 고용·생산·연구개발·판매 의무, 국내 지분 의무 등을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투자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투자관련 이행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WTO의 TRIMs 규정에 위배된다. 그러나 그 이외의 이행의무와 관련해서는 현재 국제투자규범의 적용범위 밖에 있다. 현재 대부분의 양자간투자협정에서는 이러한 이행의무를 다루고 있지 않다. 다만 미국의 양자간투자협정 모델에서는 수출의무, 국내조달의무 그리고 이와 유사한 의무를 투자의 설립조건으로 부여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MAI 협상에서는 이러한 이행의무의 부과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다만 기술이전의무, 합작법인의 설립의무, 자국내 본점 설립의무, 자국내 일정비율의 고용·생산·연구개발·판매 의무, 국내 지분 의무 등에 대해서는 투자인센티브와 같은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허용될 수 있다는 규정을 갖고 있었다.

투자관련 이행의무는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개도국의 경우 자국 경제발전정책 차원에서 다수의 이행의무를 운영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투자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이행의무를 부과하는 경우가 많다. 영국의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에 제공하는 투자보조금이 현지고용조건과 연계되어 있는데 이는 선진국에서 나타나는 이행의무부과의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다.

개도국의 경우에 TRIMs의 규정을 위반하면서 이행의무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 내용들을 이미 WTO에 통보하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이행의무를 폐지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WTO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들은 현지부품 사용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라오스는 외국인투자법인의 경우 해당 자원(원자재)이 라오스에 존재할 경우 해당 자원의 50% 이상을 소비해야 한다.

멕시코는 현재 현지부품 사용비율상의 제한은 없다. 다만, 미국 또는 캐나다



로 수출할 때 면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NAFTA 원산지규정을 충족해야 한다.

브라질은 최근 정부조달, 공적산용, 수출 및 조세인센티브 그리고 과세감면 등에 있어서 자국산 부품사용 요건을 연계하고 있으며 국산부품사용 요구 조건은 구체적인 품목에 따라 다르다.

아르헨티나는 외국인투자 관련법에는 국산화율에 대한 규정이 없으나 자동차 부문은 자동차공업법에 의한 의무비율이 규정되어 있다.⁷⁶ 한편 MERCOSUR 공동자동차정책(2000.8월부터 시행)에 의한 회원국 간 무관세 수입대상 차량에 대한 국산부품 의무사용 비율은 자동차가 30%, 트럭이 25%이며 제3국 부품은 자동차가 40%까지 트럭은 50%까지만 사용이 가능하다. 그 외에도 공업진흥법에 의한 각종 특혜를 받고자 하는 경우는 공업진흥지역 내의 생산품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최근 들어 자동차, 광업 등 주요산업과 주요 국책사업 발주 시 강화된 국내조달 요건을 요구하고 있다.

앙골라는 현지 조립생산제품에 대해 국산화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국내 산업이 낙후되어 동 의무를 엄격하게 적용하지는 않는다. **에멘** 역시 자재, 장비 및 인력사용 등에 있어서 국산품 사용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수출의 무사향은 없다.

이란의 경우 국내 산업보호 및 수입대체산업 육성을 위해 국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수입제한정책 일환으로 외국인투자허가 시 국산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집트**의 경우 부품국산화율이 45%에서 2011.10월말 60%로 상향조정되어 외국인기업에게 큰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투자 프로젝트 승인 시 국산원료사용 비율을 심사한다. 따라서 직접투자 시 국산부품의무 사용비율에 대해 당국과의 적극적인 협상이 요구된다.

인도는 단일브랜드 소매업의 경우 총가치의 30%를 중소기업으로부터 구매 조달이 의무화되어 있지는 않으나 선호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복수브랜드

76_ A TYPE(승용차)의 경우 40%까지, B TYPE(픽업)의 경우 42%까지 국산화율을 설정하고 있으나 C TYPE(트럭)의 경우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드 소매업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부터 30% 이상 구매 조달규정이 의무화되어 있다. 특히, 대형 발전소 건설 및 IT 조달의 경우에는 현지부품구입 의무(local value addition) 규정이 있다. 이러한 법령상의 규정과는 달리 대규모 투자진출기업이 진출할 경우 해당기업과 주정부 간에 체결하는 양해각서(MOU)를 통해 현지부품 사용비율, 수출의무비율 등에 대해 규제하기도 한다.

카자흐스탄은 2010.6월 국립 국산화비율발전청을 설립하여 석유가스 분야에서 국산화비율 상황을 감독하고 있으며, 법규 미달시 상당한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다.

파키스탄의 경우 투자에 대한 국산화 계획(Deletion Programme)은 각 업종별 및 개별 투자건별로 투자 시 투자청(Board of Investment)과의 협약에 따르며 정형화된 기준은 없다. 다만 자동차의 경우 현지 조립생산 진출 시 단계적인 국산화를 확대를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시작년도에 약 26% 수준에서 시작, 매년 3%씩 국산화율을 높여 65% 수준까지 달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현지인 고용에 대한 이행의무는 개도국을 중심으로 부과되고 있다. **나이지리아**는 석유가스회사가 외국인을 채용하는 경우 석유투자관리사무소(NAPIMS)에 그 이유를 소명하고 허가를 받아야하며 이에 대해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남아공은 포괄적 흑인경제 육성법(BBBEE)에 따라 기업의 흑인지분 비율, 흑인간부 및 종업원 비율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존재한다.

라오스에서는 인력을 고용하는데 있어 자국민에게 우선권을 부여해야 하며, 이들의 직업능력을 향상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기획투자부의 승인을 얻어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전체 고용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국민의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 외국 인력을 추가로 고용할 수 있다.

모로코는 외국법인이 300명 이상의 현지 인력을 채용하고 있거나 또는 취



업대상자가 보유한 기술의 보유인력이 모로코에 없다는 사실을 노동청(OFPPT)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취업비자의 취득이 가능 하는 등 외국 인력의 취업에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하고 있다.

몽골 역시 외국인투자기업은 현지인을 우선 채용해야 하며, 외국인은 높은 기술력 또는 특별한 자격요건을 요구하는 직무의 경우에만 노동부 산하 고용서비스센터의 고용허가를 받아야 취업이 가능하다.

베네수엘라의 경우 노동담당 직원, 선박 혹은 항공의 선장은 베네수엘라 국적을 보유한 자로 임명해야 한다. 그리고 피고용인이 10인 이상인 기업은 피고용인의 90% 이상을 내국인으로 고용할 의무가 있으며, 총 급여의 80% 이상을 내국인에게 지불해야 한다. 다만, 특수기술을 필요로 하는 인력이 국내에 부족한 경우와 중소기업의 경우 한시적으로 이에 대한 유예를 얻을 수 있다.

엘살바도르는 「외국인투자촉진및보장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현지인을 일정 비율 이상(총 고용인원의 90% 이상, 총 임금의 85%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단, 엘살바도르인으로 충원이 어려운 경우 10% 이상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으나 이때에는 5년 이내에 엘살바도르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는 조건이 따른다.

오만은 국산품 사용의무는 없으나 일정비율 이상 오만인을 고용해야하는 강제조항이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벌금이 부과되고 정부 프로젝트 참여가 제한된다. 그리고 고용비율은 산업별로 상이하며 제조업의 경우 35%이다.

온두라스는 현지인을 최소 총 고용인원의 90% 및 총 임금의 85% 이상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온두라스인이 대체하기 어려운 분야인 경우에는 5년 이내 범위 내에서 온두라스 인력을 양성한다는 조건 하에서 10% 이상의 외국인 고용도 가능하다.

이집트는 외국인 고용 인력을 총 고용원의 10% 이내로 하거나 외국인에 대한 인건비 비중을 총 지급 임금의 20% 이내로 제한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외 이집트 내 영업이익의 32%를 법인세로 납부해야 하며 순이익의

10% 이상을 종업원에게 배분하는 의무도 있다.

칠레는 종업원 수 2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85% 이상의 현지인 고용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중 특정기술자격 소지자로 객관적 증빙제출이 가능한 인력은 상기 85%에서 제외된다.

카자흐스탄은 2011.2월 현지인 의무고용비율을 규정하는 노동쿼터, 외국인 고용허가에 대한 조건 및 절차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2012.1월부터 상위직 3:7, 하위직 1:9 비율을 준수해야 한다.

파나마는 외국인 근로자를 10%까지만 고용할 수 있고 전문직, 기술자의 경우 15%까지 고용할 수 있다.

페루는 기업의 국적과 관계없이 외국인 고용원이 총고용 인원의 20% 이상, 총 급여 수령액의 30% 이상이 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다만, 신규설립회사, 다국적 서비스 공급회사, 은행, 운송회사 등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마) 부동산의 취득 및 사용관련 제한

외국인에 의한 토지 및 건물의 취득 및 사용에 대한 제한은 외국인투자에 대한 제한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외국인직접투자는 공간적으로 현지에 일정한 장소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면서 부동산 취득 및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모순된다. 각국의 외국인에 의한 부동산 취득에 대한 제한은 외국인투자에 대한 전반적인 제한수준과 관련된다.

선진국의 경우 대체로 큰 제한이 없다. 다만 **노르웨이**의 경우 외국인은 recreation 용도로 부동산을 구입할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하며, 부동산을 소유한 기업의 주식을 구입 시 일정한도를 초과할 경우 특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스위스**는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Lex Koller법에 의해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영업용 부동산과 특정 주거용에 한하여 주정부(칸톤)의 허가에 의해서만 취득이 가능하다. **뉴질랜드**는 자원관리



법(Resource Management Act)에 따라 토지매입 및 사용과 관련하여 투자자는 지방정부로부터 자원활용승인(Resource Consent)을 받아야 하며, 이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동의가 요구되는 경우가 있다. 이로 인해 비용 및 시간 측면에서 손실이 발생하기에 최근 건설허가 및 시행절차의 간소화를 위한 자원관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외국인이 개발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격면허(Qualifying Certificate)를 얻어야 하는데 자격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지가의 10%에 해당하는 은행보증이 필요하며 6년 내에 개발을 완료해야 한다. 개발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미개발상태 또는 부분개발 상태로 매도하는 경우 지가의 50%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영국**에는 외국기업의 부동산 구입 또는 임차에 대한 규제가 없으나 산업 개발을 위해 토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각 지자체 개발계획국으로부터 사전에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도국의 경우 토지소유와 관련해서 상당한 제한을 두고 있다. 몇몇 국가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가나는 헌법에 따라 외국인의 토지소유를 불허하고 있으며 최대 50년의 임차권(연장가능)만을 가질 수 있다. **나이지리아** 역시 토지이용법에 따라 외국인이 토지를 소유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주지사의 승인을 얻어 일반적으로 99년까지 점유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주정부마다 외국인 토지점유에 대해 상이한 제한을 두고 있으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레바논**은 외국인이 3,000㎡ 미만의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허가 없이 가능하며, 이상일 경우 정부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루마니아**의 경우 비EU 회원국 국민은 소속 국가와 루마니아가 양 국민에 대해 타방국 소재 토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을 상호주의적으로 보장하는 조약을 맺은 경우만 토지를 소유할 수 있다.

몽골의 경우 역시 외국인은 토지를 소유할 수 없고 사용권만을 행사할 수 있다. **벨라루스**의 경우 외국인 및 외국인 회사는 토지를 제외한 사무실 등 상업용 부동산은 소유할 수 있으나 외국인 개인은 주거용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다.

불가리아는 우선 비EU 회원국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불가리아 국적이 아닌 EU 회원국 투자자는 제2주거지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 그리고 부동산에 딸려있는 건축물의 소유나 신규 건축권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제한이 없다.

브라질은 「외국인법」(1971년 제정)에 따라 외국인의 농지취득 및 국경지역 토지취득과 관련하여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으며, 특히 국경지역 토지취득은 국가안보위원회(NSC)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브루나이는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은 불가능하다. 다만 산업용 목적이나 농업, 임업, 양식 등의 목적으로 장기 임차는 가능하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해당 정부기관의 승인을 받는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이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으나, 외국인은 이슬람 성지인 메카와 메디나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다.

세르비아에서는 기본소유권법에 따라 외국법인과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많은 제한을 가하고 있다. 다만 외국법인은 사용과 상호주의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

에티오피아의 토지는 정부소유로 원칙적으로 매매가 금지되어 있으나 99년까지 임차가 가능하다. 임차권은 공공경매 등을 통해 획득할 수 있고 매매가 가능하다.

우즈베키스탄은 일부 예외적인 경우(외교단 및 우즈베키스탄 정부에 등록된 국제기구) 외에는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며, 외국인투자회사 및 외국인은 부동산의 보유사용권을 정부로부터 부여받아야 한다.

중국의 경우 토지소유권은 국가와 집단(근로집단 및 농민집단)만이 갖고 개인이나 외국인은 토지를 소유할 수 없다. 다만 토지의 사용권만을 취득할 수 있으며 이 또한 용도에 따라 사용연한이 다르다(거주용지는 70년(만료시 기간 자동 연장), 공업용지 50년, 교육·기술·문화·위생 및 체육용지 50



년, 상업·관광 및 오락용지 40년, 복합 또는 그 밖의 용지 50년). 외국인이 토지사용권을 취득하는 방법은 유상출양방식, 유상이전방식, 상품주택 구매방식, 합자·합작방식 등 네 가지가 있다.

카자흐스탄은 일정한 제한 조건 하에서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할 수 있으나 실무상으로는 외국인 개인이 토지를 매수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 그리고 외국인은 영주권자를 제외하고는 거주용 빌딩 및 아파트를 소유할 수 없다.

카타르는 특정개발 지구를 제외하고 외국인은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다. 그러나 외국인투자 프로젝트에 배정된 토지는 장기임대차계약에 의거 최초 50년(추후 갱신) 동안 사용할 수 있다.

캄보디아는 원칙적으로 외국인의 토지소유가 금지되어 있으나 내국인이 51%의 지분을 보유한 합작투자 법인의 경우 법인 명의로 토지소유가 가능하다. 그리고 외국인은 장기 임차 및 토지 사용권 획득이 가능하다.

투르크메니스탄에서는 외국인 및 외국법인에 대해 토지 임차권만 허용되며, 이 경우에도 대통령의 승인이 필요하다.

폴란드의 경우 외국인이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내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때 내무부는 국방부, 농업부와 협의를 거치는데 국방에 위협이 되지 않는지의 여부, 공공질서나 안전에 대한 위해 여부, 사회 및 보건정책을 위반하는지의 여부 등을 심사한다.

필리핀의 경우 외국인의 토지소유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필리핀 측 지분이 60% 이상인 외국인투자기업의 토지소유는 가능하다.

최근 개도국들도 부동산 소유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절차상의 문제나 법률적 문제의 충돌로 인하여 여전히 동 분야에 대한 장벽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라오스의 모든 토지는 국유원칙 하에 국가 공동체가 소유하고 정부가 관리하고 있어 외국인에게는 토지임차권만 허용된다. 다만 2011년부터는 자본금 50만 달러 이상의 외국인투자자에게 토지사용권 획득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오만은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 하였으나 2000년 부동산법의 개정으로 GCC권 국적보유자들은 취득이 가능하다. 그리고 2006년부터는 일부 관광특구에 분양되는 부동산에 대해서 외국인의 소유를 인정하고 있다.

인도의 경우 「외환규제법(FERA: Foreign Exchange Regulation Act)」에 따라 법인의 부동산 매입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 정책의 영향으로 대부분 공단지역이 국가소유이며 그 외의 매입 가능한 지역은 인프라가 미흡하기 때문에 부동산 매입은 하지 않고 정부소유 부지를 임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바) 기타 설립 전 단계의 제한

노르웨이의 경우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기업설립 시 대표자 및 이사진의 1/2 이상이 노르웨이 거주자이어야 하며, 해외국적 기업은 반드시 국내 거주 대리인을 고용해야 한다. 그리고 영업수익이 5백만 NOK 이상인 기업은 국내 회계 감사원을 고용해야 하며, 양성평등법 등에 따라 상장기업은 이사진의 40% 이상을 의무적으로 여성에게 할당하여야 한다.

루마니아는 광범위한 범위에서 내국민대우를 허용하나 항공면허는 루마니아인에 의해 운영되고 루마니아에 설치된 기업에게만 주어진다.

적도기니는 외국인이 설립한 기업 또는 적도기니에 진출한 외국기업은 내국인 지분을 최소 35%를 보장해야 하며, 이사회가 3인 이상으로 구성된 경우 1/3 이상을 내국인으로 구성해야 한다.

콜롬비아의 경우 국내치안이 전반적으로 상당히 불안하고 법령이 빈번히 개정되어 외국인투자자들은 투자 시 이를 가장 우려하고 있다.

설립 후 단계에서의 투자장벽

가) 과세 문제

설립 후 단계에서 가장 많이 지적되는 투자장벽은 현지에서의 세금문제가



다. 일반적으로 국제투자과 관련된 국제적 과세문제는 양자간조세조약(이중과세방지협정)을 통해서 해결하고 있다. 조세조약은 양 체약국간 가능한 경제관계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과세의 관할권 문제, 이중과세문제 및 부당한 과세에 대한 상호합의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상호 경제교류관계가 어느 정도에 도달한 국가들이 가장 먼저 체결하는 협정이 조세조약이다. 특히 투자국이 투자유치국에 대해서 조세조약의 체결을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BIT가 증가함에 따라 조세조약 역시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처럼 조세조약이 많아지면서 국제과세체계의 복잡화 및 조세조약 쇼핑(treaty shopping) 등 조세조약의 남용문제 등이 논의됨에 따라 다자간조세협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한다. 향후 MAI가 실현될 경우 다자간조세협정의 출현가능성은 그 만큼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투자국과 투자유치국 양국간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투자유치국의 국내 세법만이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지과세의 기준이 된다는 측면에서 외국인투자자의 이해가 현지에서의 과세에 반영되지 못하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조세조약이 체결된 경우라도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조세조약에서는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 국내기업에 대해 차별적인 과세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차별조항은 현지기업과 동일한 상황에 대한 것으로 상황이 다른 경우 과세는 달리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고정사업장 인정문제, 모기업과의 상품 및 자본거래(이전가격설정) 문제 등은 외국인투자자에게 나타나는 독특한 국제조세문제로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원칙에 따라 과세가 이루어지며 그 결과 투자자는 현지국의 과세조치에 불만을 갖게 될 수 있다.

특히 과세제도는 각 국가의 고유의 주권사항이기 때문에 조세조약 등에서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국 규정이 절대적으로 적용된다. 따라서 현지국이 외국인투자자의 부당한 소득이전 또는 그러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취하는 과세조치가 큰 부담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과세제도상의 문제이외에도 과세행정에서 받는 장애요인도 존재할

수 있다.

이러한 과세문제는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다른 투자장벽과 달리 과세문제는 개도국보다 선진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에게 애로사항이 되고 있다. 이것은 선진국의 경우 방대한 과세자료의 집적 및 정교한 과세방안의 개발 등으로 조금만 의심스러운 경우에도 세무조사 등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기업과 외국기업 간의 차별적인 조세부과는 개도국에서 나타나고 있다. 실제 **인도**의 경우 법인세율은 내국인에게 32.45%, 외국기업에게 42.02%를 적용하고 있어 외국인투자자로부터 차별논란을 불러왔다. 그리고 2001년부터 외투기업 및 외국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해 오고 있으며 2012/13년 회계연도에 진행된 세무조사에서는 조사대상의 54%가 과세되었다.

카타르는 외국인소유기업에게만 소득세를 부과하여 내국기업과 차별을 두고 있으며, **쿠웨이트**는 자국기업, GCC 국가 국민이 전체 지분을 소유한 기업에 대해 국내에서 취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나 외국기업의 소득에 대해서는 기업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나) 금융 및 자본조달상 제약

투자설립 후 현지 운영에서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 자금의 이전 및 운영자본의 조달 등에 대한 제약이다.

모든 양자간투자협정에서는 투자보호와 관련해서 투자관련 자금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투자협정은 투자유치국 정부가 투자자의 송금에 대해서 어떤 제한을 가할 수 있다는 의미의 규정을 두고 있다. 가장 많이 나타나는 송금제한 규정은 투자유치국의 국제수지위기에 따른 예외규정이다. 그리고 미국의 양자간투자협정 모델은 합법적인 목적의 충족을 위한 송금의 제한을 규정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송금의 보고(배당금 및 여타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수단으로), 채권자의 권리보호, 사법적 절차에서 만족스런 판결 등이다.



양자간투자협정에서 자유로운 송금을 보장하고 있지만 과세 목적 등으로 송금 전 허가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들이 많다. 선진국의 경우 적법한 과세절차를 거친 과실 및 양도차익의 송금은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개도국의 경우에는 과세목적뿐만 아니라 국제수지 관리차원에서 송금을 허가사항으로 규제하고 여러 가지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국가가 많다.

앙골라에서는 외환사정에 따라 송금규제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해외 송금 거래에 앞서 중앙은행의 사전승인 대상인지를 현지거래 은행에 확인을 받아야 송금제한의 소지를 없앨 수 있다. **에티오피아** 역시 외환부족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정부의 외환통제가 심한 편이다. **온두라스**는 배당금이나 로열티의 국외 송금 및 외화차입의 경우 중앙은행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집트**의 경우 외환보유고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실송금 등에 까다로운 절차를 적용하여 종전보다 더 많은 시일이 소요되고 있다.

인도의 경우 달러의 해외유출에 대한 통제가 심하였으나 최근 루피화 가치 하락으로 인해 해외차입에 대한 규제가 다소 완화되었다. 그리고 기업의 과실송금 자체는 별 어려움이 없으며 개인의 경우에도 연간 순수소득 범위 내에서 연간 USD 10만~20만까지 송금이 가능하다. 그러나 배당의 경우 높은 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며, 한·인도간의 이중과세 방지 협약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해외 납부세액 공제가능 여부가 다소 불투명하다. 개인이나 기업 모두 송금할 때에는 인도 내에서 세금 납부사실을 확인하는 CA(Chartered Accountant) 증명서가 필요하다.

중국의 경우 이윤을 국외로 송금하기 위해서는 중국내 회계사가 발급하는 자본납입증명서, 연말회계감사보고서, 이사회 이윤배분결의서, 납세증명서 등을 은행에 제출하여야 직접 송금할 수 있다(관련자료 구비 시 외환관리국 허가불필요). 외자기업의 종업원 임금은 정당한 수익 중 중국 내에서 지출한 필요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임금명세표와 납세증명서를 첨부하여 기업의 외화 예금구좌를 통해 송금이 가능하며 외국인 직원의 임금 및 정당한 수익은 납세증명서를 첨부하여 은행을 통하여 해외송금이 가능

하다. 그리고 기업의 자금조달 측면에서도 제약이 있을 수 있다. 자기자본 형태의 자본증액의 경우 앞서 논의한 투자설립에 관한 사항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반면, 차입에 의한 자금조달의 경우 현지국의 여러 가지 제도적인 제약을 받을 수 있다.

선진국의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의 차입에 의한 자금조달을 직접적으로 제약하는 제도는 거의 없다. 다만 모회사 등 특수관계 기업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금액이 일정수준을 넘어서는 자금에 대해서는 그 이자비용을 외국인투자기업의 과세 상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를 과소자본제도(thin capitalization)라고 한다. 모회사로부터의 차입금이 실제로는 자기자본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그 이자비용을 모두 인정할 경우 투자유치국의 과세대상소득이 감소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물론 우리나라도 이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개도국의 경우 외환관리차원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의 자금차입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 국가도 있다. **남아공**의 경우 외국인지분이 75% 이상인 합작투자 기업은 남아공 국내은행으로부터의 차입에 제한을 받으며 배당이익의 송금 시 외환관리상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외국계 기업들이 자금차입을 통해 남아공에 투자할 경우 중앙은행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베트남**의 경우 차입금 및 법정자본금은 중앙은행에 등록된 특별외화자본계정을 통해서만 거래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은 외환보유고 상황 등에 따라 태환상황이 매우 유동적이며 적법한 사업 활동으로 취득한 외환을 자유롭게 해외로 송금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자유로운 환전이 보장되지 않고 과실송금도 제한적이다.

중국의 경우 「경외외국계은행외채관리방법」을 통해 외채관리를 제도화하였다. 즉 외국계은행 모행 혹은 관리부에서 허가 받은 중국 역내 채무자의 연간 여신한도, 유동성 수요 및 역내 대출항목 수요 등에 따라 연간 단기외채 지표를 확정하되, 외채 잔액이 외화자본금 혹은 운영자금의 5배를 초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였다. 중장기외채는 자본금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하고 현재 외환관리국은 은행별 외채잔액 한도를 별도로 정하여 제한하고 있다.

다) 인력의 현지 파견 시 문제점

설립 후 현지 운영에서 핵심적인 사항중 하나가 경영 인력을 본국에서 파견하는 것이다. 따라서 일부 BIT에서는 투자와 관련된 핵심인력(key personnel)의 일시적 입국 및 체류, 그리고 고용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예컨대 미국의 BIT 모델의 경우 “일방체약국은 외국인의 입국 및 체류에 관한 자국의 법규에 따라, 타방체약국의 국민이 투자의 설립, 개발, 관리, 운영에 관한 조인 등을 목적으로 자국에 입국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규정한다. 독일의 BIT 모델에서도 “각 체약국은 자국의 국내법규의 틀 안에서 타방체약국 국민의 투자와 관련된 입국 및 체류요청에 대해 호의적으로 고려해야 한다(sympathetic consideration)”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BIT에서 입국 및 체류의 문제는 해당국의 주권사항임을 전제한다.

인력파견과 관련된 거주 및 노동허가 등은 선진국이든 개도국이든 공통적으로 상당한 제약이 있다. 선진국에서 거주 및 노동허가와 관련된 제한은 주로 복잡한 신청절차와 단기간의 허가기간에 따른 잦은 갱신의 필요성 등에서 주로 나타난다. 개도국의 경우 아예 노동 및 거주허가 대상인원을 일정수로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개도국과 선진국 모두에서 비자발급과 관련해서 복잡한 구비서류를 요구하고 허가에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

인력의 현지파견과 관련해서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파견인력에 대한 사회보장세 및 사회보장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이는 사회보장제도가 잘 갖추어진 선진국에서 주로 나타나는 애로사항으로 일시적으로 체류하다가 귀국하는 인력들은 현지국에서 실업급여 등 사회보장의 혜택을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투자유치국 정부에서 현지 파견인에게도 자국 근로자에게 부과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사회보장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있다.

환경

개관

환경과 관련된 통상장벽은 크게 환경관련 무역조치(ERTMs: Environment Related Trade Measures)와 무역관련 환경조치(TREMs: Trade Related Environmental Measures)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환경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무역을 규제 혹은 제한하는 조치이다. 자국이 추구하는 환경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환경정책을 시행하며 동 환경정책의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무역조치를 제재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다자간환경협약이 이에 해당한다. 후자는 환경목적의 달성과정에 있어서 우발적인 무역효과를 가지게 되는 환경정책 조치를 말한다. 의도적으로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더라도 환경보전을 위하여 취한 각종 조치가 결과적으로 제품의 생산, 소비, 폐기에 영향을 주어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무역효과를 갖는 선진국의 환경마크제, 폐기물의 재활용요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환경보전을 이유로 한 무역조치는 오용 또는 남용되어 보호무역주의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되며 각종 환경조치 또한 교역을 불필요하게 또는 부당하게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주요 선진국에서는 환경보전과 동시에 자국의 산업이익을 보호하고자 높은 기술수준을 바탕으로 필요 이상의 높은 환경기준을 제정하거나 개별적이고 일방적인 환경조치를 적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환경관련 통상장벽을 형성하며 나아가 환경보전과 무역촉진 간의 마찰을 유발한다. 또한 개도국들도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환경에 관한 관심이 증대하며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추가적 조치의 도입을 고려하고 있어, 우리기업의 대개도



국 수출전략 수립시 환경문제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환경관련 통상장벽의 일반적 유형

가) 특정제품 및 성분의 사용제한 또는 금지

환경위해의 가능성이 있는 제품 및 물질에 대한 수출입의 규제, 제한, 금지로 환경유해제품과 물질의 사용 및 판매금지, 멸종위기에 처한 종의 사용 혹은 판매의 제한과 금지, 유해폐기물의 이동 및 교역의 제한과 금지, 오존층 파괴물질 규제조치 등이 포함된다.

나) 특정 제조공정의 사용제한 및 금지

환경피해가 교역제품 자체가 아닌 그 제품을 생산하는 생산방법 및 공정에 의해 유발되는 경우, 이 같은 제조공정·생산방식(PPMs: Process and Production Methods)의 사용규제 또는 금지조치를 취하여 환경에의 부정적인 영향을 방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육 시 호르몬이 투여된 육류, 오존층파괴물질을 사용하여 생산된 제품에 대한 수출입 규제가 그 예에 해당한다.

다) 환경기준(Compulsory Norm)

환경기준은 제품기준, 제조공정기준, 배출기준, 대기·수질·소음기준 등으로 분류되며 그밖에 제품의 테스트 또는 제품 및 제조과정에 적용되는 규격의 준수감시에 관련된 절차기준, 생산 및 유통업체에 부과되는 폐기물 관리기준 등이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상대국의 표준, 제품 테스트, 라벨링, 인증·승인 등에 대한 요건 및 절차 등의 환경기준 관련 기술규정이나 표준이 자국의 동 내용과 상이할 경우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더욱이 동 규정이나 기준 등은 국내제품에 대하여 수입제품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운용될 가능성이 높다. 특정제품에 적용되는 환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제품의 수입은 허용되지 않는 경우 직접적인 무역제한 효과를 갖게 된다.

라) 환경마크제도(Eco-Labeling Program)

제품의 제조, 사용, 폐기 등 전체 주기에 걸쳐 환경친화상품에 환경마크를 부착하는 자발적 제도로, 특히 수입국이 선진국인 경우 마크 부여기준이 높고 소비자의 환경친화상품에 대한 구매유도 효과가 크므로 간접적 무역 효과를 초래한다.

마) 제품부과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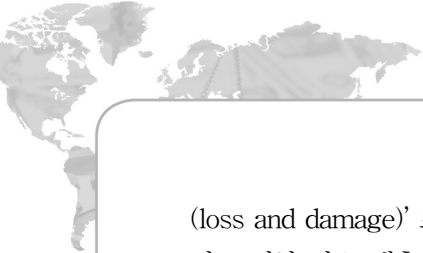
오염물질 함유 또는 오염유발 제품의 생산, 소비 및 처리단계에서 각종 부과금을 징수하여 가격인상을 통한 제품 사용억제, 오염방지 및 재활용을 위한 기금조성 등을 목적으로 시행된다.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투입된 에너지에 대한 에너지세 및 탄소세, 수입 석유제품 및 유해 화학물질의 제조 및 수입에 대하여 과세하는 미국의 수퍼펀드세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바) 다자간환경협약에 의한 조치

다자간환경협약은 국제환경협약의 의무사항으로 당사국간 합의된 무역조치를 이행하는 경우로 협약 당사국간 혹은 비당사국에 대해 적용된다. 오존층보호를 위한 「몬트리올 의정서」,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협약」, 「유해폐기물의 국제적 이동에 관한 바젤협약」,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등 20여 개 협약이 무역규제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주요 다자간환경협약 동향

최근 큰 관심을 끌고 있는 글로벌 이슈 중 하나인 기후변화협약 제19차 회의가 2013.11.11~22일에 개최되어 합의안이 도출되었으나 최종안 마련을 2015년으로 연기하면서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제시되지 못하였다. 회원국들은 2015년 파리 총회에서 새로운 기후변화협약에 서명하고 교토의정서가 만료되는 2020년 이를 시행하기로 한 입장을 재확인하였다. 합의문에는 2015년까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자주적으로 기여하고 각국별로 감축 목표를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회원국들은 해수면 상승이나 태풍 등 기후변화에 취약한 섬나라나 개도국을 선진국이 지원하는 ‘손실과 피해



(loss and damage)’ 프로그램 마련에도 합의하였다. 또한 삼림 벌채나 파괴로 인한 탄소 배출을 줄이는 ‘REDD+’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2억 8천만 달러를 지원하는 데에 합의하였다.

생물다양성협약은 1993년 발효된 대표적인 환경협약의 하나로 생물자원의 보전, 지속가능한 이용, 공정한 이익 공유를 협약의 3대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한국은 1994.10.3일 가입한 이후 2014.10월 평창에서 제12회 당사국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환경 관련 논의 동향

2012년 APEC 회원국들은 54개 품목의 환경상품리스트를 개발하여 2015년까지 회원국의 WTO 지위와 상관없이 각 회원국의 상황을 고려하여 해당품목의 실행관세율을 5%이하로 감축하기로 합의하였다.⁷⁷ 2013년 APEC 정상들은 이러한 합의를 기반으로 2013.12월 제9차 WTO 각료회의에서 환경상품을 논의하기로 하였으나 중국의 반대로 보류되었다. 2013.6.25일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발표한 ‘기후변화 대응 행동계획’에 제시된 바와 같이 미국의 리더십을 통해 환경상품에 관한 무역협정 규범형식은 복수국간 협정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최근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최초로 400ppm을 넘어서는 등 온실가스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어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은 2013.2월 ‘배출권거래제 준비기획단’을 설치하고 2015년부터 동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세부적인 사항들을 준비하고 있다. 2013.5.27일 한국 환경부와 주한 영국대사관은 ‘한-영 협력 워크숍’을 개최하여 배출권거래제 설계와 운영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⁷⁷ APEC에서 이루어진 합의는 WTO와 달리 구속력이 있는 협정이 아니고 자발적인 노력을 촉구하는 것이다.

현황분석

일반적으로 미국, EU, 캐나다 등 선진국들은 다양한 환경관련 규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더욱 강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일부를 제외한 개도국 역시 점차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가별 상황에 따라 분야별로 환경규제를 도입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선진국 뿐 아니라 개도국의 환경규제 역시 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먼저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2013.6.25(화) 조지타운대 연설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행동계획(The President’s Climate Action Plan)”을 발표하고, 탄소배출 감축 등을 위해 관련 부처에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탄소오염 저감(cut carbon pollution),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대비, 기후변화 관련 국제노력 주도 등 3개 분야를 강조하고, 이 중에서도 특히 신규 및 기존 발전소 탄소배출량 규제를 통한 오염 유발 에너지 사용 감축, 클린에너지 사용 증가, 에너지 효율 증대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행동계획에 따라, 미국내 신규 및 기존 발전소 모두에 대한 탄소배출량 규제 실시, 재생에너지 시설 확충, 인프라 구축을 통한 자연재해 대비 강화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미 환경보호청은 2010.5.13일 대기정화법(Clean Air Act)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최선의 관행 및 기술을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여 온실가스 배출 허가를 획득해야 하는 대상 배출원(排出源) 기준을 확정하였다. 이에 따르면, 제1단계(2011.1.2.~6.30)에는 여타 오염물질(납, 이산화황 등) 배출 허가를 받은 시설물 중 연간 7만 5천 톤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시설물만 온실가스 배출 허가제 적용 대상이 된다. 제2단계(2011.7.1.~2013.6.30)에는 신규 시설물 중 연간 10만 톤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거나 기존 시설 변경으로 추가 배출하는 온실가스가 연간 7만 5천 톤 이상이 되는 경우에 온실가스 배출 허가를 받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자동차를 제외한 미국 온실가스 배출량 중 약 70%를 차지하는 시설물이 온실 가스 배출 허가 대상이 되며, 2013.7.1일 이후 적용될 제3단계에는 그 대상이 더욱 확



대될 전망이다.⁷⁸

미국은 「1975년 에너지정책 및 보존법(Energy Policy and Conservation Act of 1975)」을 제정하여 자동차 제조회사 및 수입회사에 대해 일정수준 이상의 평균연비를 의무화한 기업평균연비(CAFE) 규제를 도입하였다. 2012.8월에는 2017~2025년 승용차 및 경트럭에 대한 연비 및 온실가스 기준도 확정 발표하였는바, 2025년까지 연비 54.5mpg, 온실가스 163g/mi 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이를 통해 해당 기간 동안 미국 소비자들의 연료비 절감 총액이 약 1.7조 달러에 이르고, 차량 1대당 소요되는 연료비가 약 8,200달러 절감될 뿐만 아니라, 미국 전체의 석유 소비량은 120억 배럴 감소, 온실가스 배출량도 60억 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 하고 있다.

미국은 1962년에 「국가환경정책법(NEPA: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을 제정하여 세계최초로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절차는 「국가환경정책법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다. 이들 법규 도 인간환경의 질에 현저하게 영향을 미칠 법안의 제출 및 그 이외의 주요한 연방정부의 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평가서를 작성해야 할 활동, 환경 영향이 거의 없는 것에 대한 기준은 각 연방기관이 정하고 있다. 평가서에는 환경에 대한 영향 및 대체안 등이 들어 있어야 하며, 평가항목을 정하기 위한 평가항목의 선정(scoping)이 개별안건마다 행해져야 한다. 평가실시 주체는 연방정부기관이나 신청을 하는 민간 사업자에 정보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환경영향평가는 먼저 간이환경영향평가서(EA)를 작성 하여 환경영향이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세한 환경영향평가서(EIS)를 작성하며, 평가 서안은 법적 권한 및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정부기관과 환경보호청(EPA)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미 행정부와 의회가 2007.5월에 합의한 환경, 노동 등에 관한 신통상정책에 따르면, △ FTA 대상국들이 7개 주요 다자환경협약(①멸종위기 야생 동식

⁷⁸ www.epa.gov/nsr/documents/20100413fs.pdf

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②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③해양오염 협약, ④미국열대참치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협약, ⑤습지보존 협약, ⑥국제포경규제협약, ⑦남극해양생물자원 보존에 관한 협약)의 의무 이행을 위한 자국 법령 및 조치의 채택·유지 및 집행을 약속하고 △ 무역 및 투자에 영향을 주면서 환경법의 보호수준을 악화·저하하는 방식으로 환경법을 면제·손상할 수 없으며 △환경 분야 의무 위반 시 여타 FTA 분야와 동일한 분쟁해결 절차 적용할 것을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은 한·미 FTA 추가협상을 통하여 7개 다자환경협약의 의무 이행을 위한 국내 법령 및 조치를 채택, 유지 및 집행 할 것을 합의하였다. 아울러, 환경 chapter상 의무 위반 시 여타 FTA 분야와 동일한 일반 분쟁 해결절차를 적용토록 하였으나 해당 다자환경협약상 협의절차가 있으면, 불합리한 지연이 없는 한 동 절차를 먼저 활용할 것을 규정하였다. 한편, 한·미 양국은 환경위원회를 설치, 환경과 관련된 양국 간 관심사항을 논의하기로 하였으며, 2013.2.14 제1차 회의를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하였다.

EU는 전 세계적으로 화학물질 생산량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보호와 EU의 화학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신화학물질 관리제도(REACH)를 2007.6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REACH는 Registration(등록), Evaluation(평가), Authorization(승인) of Chemicals를 의미한다.

■ REACH 제도의 주요 내용

구분	내 용	대상 및 기간
사전 등록	1톤/연 이상 수입·제조되는 기존물질을 ECHA에 등록	2008.6.1~12.1 ※ 사전등록시 양과 물질특성에 따라 3.5년에서 11년까지 본 등록 유예가능
등록	특성, 용도, 생산량 및 관리방안을 ECHA에 제출	○ 기존 물질 - 1톤/연 이상 CMRs: 2010.11.30 까지 - 100톤/연 이상 R50-53: 2010.11.30 까지 - 일반물질 · 1000톤/연 이상: 2010.11.30까지 · 100톤/연 이상: 2013. 5.31까지 · 1톤/연 이상: 2018. 5.31까지 ○ 신규 물질: 제조 또는 수입 전 등록
신고	완제품에 함유된 고위험성 물질(SVHC)의 관리	○ 비의도적 배출로서 중량기준 0.1% 이상 함유되고 연간 1톤 이상인 경우



구분	내 용	대상 및 기간
	위한 신고	- 2011.6.1부터 신고
평가	대량으로 유통되는 화학 물질과 유해물질 관리를 위한 평가	○ 100톤 이상: 모든 화학물질 ○ 100톤 이하: 유해성 물질
허가	유해물질 관리를 위해 허가대상목록 작성 필요시 대체 물질 개발 의무를 부과	○ 고위험성 물질(SVHC) - CMRs category 1, 2 - PBT, vPvB 물질 등
제한	건강·환경에 위해성이 높은 물질에 대한 사용·수입 제한	○ Annex 17에 해당되는 물질 ○ 2009.6부터 시행

CMRs: 발암성(Carcinogenic), 돌연변이성(mutagenic), 생식독성(toxic to reproduction) 물질
PBT: 지속성, 생체축적 및 독성 물질(Persistent, Bio-accumulative and Toxic)
vPvB: 잔류성이 매우 강하거나 생체 축적성이 매우 심한 물질(very Persistent, very Bio-accumulative)

승용차에 대한 이산화탄소 배출규제 제도는 EU에 신규 등록되는 승용차의 이산화탄소 평균 배출량(EU fleet average)이 2015년 130g/km, 2020년 95g/km에 도달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승용차(M1 category)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2015년에 달성을 목표로 하는 이산화탄소 평균배출량 130g/km는 EU 전체의 목표이다. 제작사별 세부배출기준(Specific emission target)이 결정되고 제작사에서 판매한 차량 등의 평균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동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배출기준초과부과금(Excess emissions premium)을 부과한다. 제작사들의 제도 적용 및 기술개발 필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적용하는데 2012년에는 전체 차량대수의 65%, 2013년에는 75%, 2014년에는 80%, 2015년 이후에는 100%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에 따라 2014년까지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차량을 선택하여 평균 배출량을 산출한다. 제작사별 세부배출기준은 특정연도에 판매·등록된 차량의 평균무게에 따라 달라지므로 차종별 판매량을 고려할 때 어느 정도 예상은 가능하나, 정확한 제작사별 배출기준은 당해 연도 판매가 완료된 이후에 산정이 가능하다.

경상용차(van)에 대한 이산화탄소 배출규제의 대상차량은 국제차량분류 N1 카테고리(적재중량 최대 3.5톤)로서 공차중량 2,610kg인 차량(통상 밴으로 부름)으로서, 경량차량(light-duty vehicles) 시장의 12%를 차지하고

있으며, EU 전체 이산화탄소배출량의 1.5%를 차지하고 있다. 단기목표로서 2017년까지 EU평균 175g/km을 달성하는 것이다. 2020년 장기목표는 147g/km로서 당초 EU집행위가 제안한 135g/km보다 완화된 수준이다. 제작사별 기준은 제도 적용 및 기술개발 필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2014~2017년까지 단계적(phase-in)으로 단계별로 적용 하는데 2014년에는 차량대수의 70%의 평균, 2015년에는 75%의 평균 그리고 2016년에는 80%의 평균 이 배출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저배출차량에 대한 우대조치(Super credits)로서 50g/km 보다 적게 배출하는 밴(Vans) 차량들은 제작사별 평균배출량 계산 시 2014~2015년 동안은 저배출차량 1대를 3.5대로, 2016년에는 2.5대로, 2017년에는 1.5대로 인정하되, 제작사별로 최대 2만 5천 대까지 인정한다. 기술혁신(Eco-innovations)과 관련하여 차량형식승인(vehicle type approval) 시험절차가 제정되지 않아 이산화탄소 감축효과를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잠정조치로서, 2014년 시험절차가 개정될 때까지 제작사들이 혁신적인 기술(innovative technologies)을 차량에 적용할 경우 독립적으로 검증된 데이터에 근거하여 최대 7g/km의 감축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소규모제작사(연간 2만 2천 대 이하 판매)는 EU집행위에 기준 적용예외 신청을 통하여 개별적인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다.

■ 승용차와 경상용차 이산화탄소 배출기준 관련 비교

구 분	승용차	경상용차
적용대상	M1 category	N1 category(van)
EU평균 목표	2015년 130g/km 2020년 95g/km	2017년 175g/km 2020년 147g/km
시행년도	2012년	2014년
세부배출기준식	$130 + 0.043 \times (\text{차량평균무게} - 1,372)$	$175 + 0.094 \times (\text{차량평균무게} - 1,706)$
유예기간 및 적용율	2012년 65% 2013년 75% 2014년 80% 2015년 100%	2014년 70% 2015년 75% 2016년 80% 2017년 100%
예외규정	판매량이 1만대/년 이하인 경우와 1만~30만대/년 경우	22천대/년 이하인 경우



국내 제작사들은 2015년 승용차 평균배출량 목표는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강화된 2020년 목표 달성과 2017년으로 예상되는 측정방식 변경 등에 대비하기 위해 기술개발을 통해 가능한 한 차종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여 나가고 이러한 기술수준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당분간 현지 차량 판매망을 통한 판매 상황을 모니터링 함으로써 제작사별 배출기준 준수여부를 사전에 예상하고, 이에 따른 시기별 차종 판매 전략 등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향후 EU는 교통부문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형차량(heavy-duty vehicle)에 대해서도 규제를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EU 집행위는 2014년까지 12톤 이하의 미니버스(minibus)와 밴(van)에 대한 이산화탄소배출규제 규정(안)을 제안할 것으로 예상된다.

EU는 배출권거래제(ETS: Emission Trading System)관련 지침(Directive 2003/87/EC)을 개정하여 대상범위(scope)에 항공부문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함시켰다. 2012.1.1일부터 EU회원국에서 출발하거나 회원국으로 도착하는 모든 항공부문에 대하여 적용하며, 배출량은 2012년에는 역사적 운항(historical aviation: 2004~2006년간 평균)의 97%를 적용하고, 2013년 이후의 배출량 할당은 역사적 운항의 95%를 적용한다. 배출량 초과 시에는 여타 산업부문과 마찬가지로 탄소배출권을 시장에서 구입·충당하여야 한다. 국가원수 전용기, 군용기, 훈련기, 최대 이륙중량 5,700kg 이내의 항공기 등에 대하여는 지침적용이 배제된다. EU-27을 포함한 유럽경제권 30개 국가의 EU-ETS 항공부문 2013~2020년 배출한도(cap)는 매년 2.103억 톤이다(2011.7.1, 유럽경제권 공동위 결정). 2013~2020년 총 배출한도는 무상할당 82%, 경매(유상할당) 15%, 신규진입자 등에 대한 특별유보(special reserve) 3%로 배분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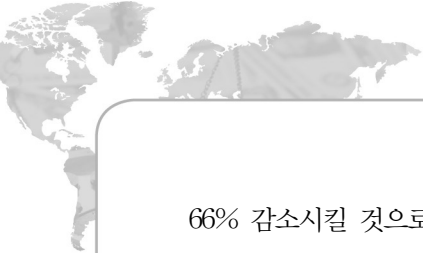
유럽경제권(EEA: European Economic Area) 30개국 및 EU역외 62개국의 900여개 이상의 항공사들이 무상할당량을 신청하였으며, 우리나라 국적 항공사(대한항공, 아시아나)들은 관할국가(administering state)인 독일정부로부터 무상할당량을 배정받게 된다. 한편, EU 집행위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제적 차원의 시장기반조치 논의가 가시적

인 성과를 가져오기를 요구하면서, EU 비회원국으로부터 도착하고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해서는 배출권의 정산을 1년 연기하였다. 이에 따라 항공사들은 EU 2012년의 역외 운항에 대해 2013.4월에 배출권 정산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2013년분에 대한 배출권 할당은 기존과 같이 받게 되며, EU 집행위는 2013.9월 ICAO 총회에서 항공분야 국제적 온실가스 감축방안에 대한 가시적 성과가 도출되지 못할 경우 항공분야 ETS가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EU 집행위원회는 2014.1월부터 유럽상공을 지나는 외국 항공사에 대해 ETS를 적용해 부담금을 매길 것이라고 2013.10.16일 밝혔다.⁷⁹

해상운송분야의 경우 바로 배출권거래제 시행 대신 인프라를 우선 구축한 후 국제해사기구(IMO)의 관련 노력 진척에 따라서 배출권거래제 시행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적 방식을 취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의 모니터링/보고/검증(MRV) 시스템을 먼저 구축하기 위한 법안 초안을 2013.6월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EU 항구에 입출항하는 총톤수 5천 톤 이상의 선박은 국적에 관계없이 2018년부터 온실가스(CO₂)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고 배출량을 모니터링한 후 검증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EU는 선박의 온실가스 배출량 모니터링을 통해 연료효율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2030년에 2005년 대비 배출량 2% 삭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자동차 배출가스에 관한 기본지침은 Directive 70/220/EEC이다. 디젤 차량의 질소산화물(NOx)을 기존 180mg/km에서 80mg/kg으로 강화한 Euro VI이 신규 차종의 승인에 대해서는 2014.9월부터, 신규차종의 등록에 대해서는 2015.9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버스와 트럭 등 중형차량(heavy-duty vehicles)의 배출가스와 관련한 형식승인 지침(Directive 2005/55/EC)에서는 가스, 분진배출 및 배기가스 투명도의 한계를 설정하고, 배출가스 통제시스템의 내구성 확보 및 자가진단시스템(OBD) 장착의 무화를 규정하고 있으며, 2008.10월부터 적용된 Euro V 기준에 이어 2013년부터는 Euro VI 기준정(Regulation(EC) No 595/2009)이 적용되고 있다. Euro VI는 Euro V보다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80% 감소시키고 분진은

79_ http://ec.europa.eu/clima/news/articles/news_2013101601_en.htm



66%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U는 2006.6월 자동차 에어콘에 사용되는 냉매 규제에 관한 지침(Directive 2006/40/EC)을 공포하여, 2011.1월부터 지구온난화 잠재도(GWP: global warming potential)가 150을 초과하는 불소화가스를 사용한 자동차의 형식승인을 금지하고, 2017.1월부터는 GWP가 150을 초과하는 가스를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 적합성승인, 등록, 판매, 운행 등을 금지하도록 하였다. 이밖에도 집행위는 플로우르 가스의 배출량을 2030년까지 현재 수준의 3분의 2수준으로 감축하기 위한 규제 법안을 2012.11월에 제안하였으며, 대체 용매가 존재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동 가스의 사용을 금지하는 등 규제가 강화될 예정이다. 오존층 고갈물질(CFCs, 할론 등)의 단계적 사용금지를 위하여 관련 규정(Regulation(EC) No 1005/2009)을 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오존층 고갈물질의 생산, 무역, 사용, 회수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다.

친환경 제품에 대해 EU 차원에서 에코라벨(Eco-Label)을 부여하는 제도는 1992년부터 시행된 것으로 근거 규정은 Regulation(EC) No 66/2010이며, EU는 2015년까지 에코라벨 부여대상 품목군을 약 40~50개로 확대하고, 다른 회원국 및 제3국 환경라벨링제도와와의 통합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EU는 2012.10월에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ABS)에 관한 나고야의 정서의 이행법률을 제출하였으며, 2013년 중 이행법률 제정과 회원국의 나고야의정서 비준이 예상된다. 동 이행법률안에서 유전자원의 사용자는 유전자원이 원산지국가의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접근하고 타당한 이익을 공유해야할 의무를 부여받게 되며, 관련 제품의 시장출시 승인을 받거나 상업화시 이를 선언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 법률이 통과되어 시행될 경우 관련 절차 준수 등에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사전대비가 필요하다.

캐나다는 환경문제에 관한 범국가적·체계적 통제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1989년 캐나다 「환경보호법(CEPA)」을 제정하였으며 매년 동 법의 운영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또한 1990.3월 환경보호 및 산업관리 종합 마스터 플랜으로 「환경계획(Green Plan)」을 수립하여 범국민 차원에서 시행하

여 오고 있다. 이후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수차례 종합적인 정부대책이 마련되어 시행되었다. 2008년 캐나다 정부는 교토의정서에 동참하기로 했지만, 2011.12.13일 교토의정서 이행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표명하며 해당 조약에서의 탈퇴를 선언 하였다. 캐나다 환경부의 켄트 장관은 “교토의정서는 미국과 중국 등 세계 최대의 온실가스 배출국을 통제하지 못해 규약 자체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 이제 교토의정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점이 명확하게 됐다”면서 탈퇴 배경을 설명하였다. 그러나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온실가스를 17%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온실가스 감축 방안>

- 전체배출의 51%를 차지하는 산업계에 대해 강제 감축의무 부여(단, 기준년도는 교토의정서상의 1990년 대신 2006년으로 재설정)
- 단위시설마다 2010년까지는 매년 6%씩, 그 이후는 2%씩 감축토록 의무화(단, 신설설비는 청정연료 이용 시 3년간 유예기간을 주고 향후 2% 감축)
- 의무이행 실적 산정은 배출감축을 위한 직접투자, 기후변화기술기금(신설) 출연, 배출권 거래, 청정개발체제(CDM) 참여 등을 다양하게 인정
- 기금출연을 통한 이행은 2010~2017년간 인정하며 톤당 15~20달러로 환산
- 1992~2006년간 이루어진 기존의 배출감축투자도 15Mt까지 인정
- 운송 분야 감축을 위하여 자동차, 기차, 항공기 등 모든 운송수단에 대한 배출규제 기준(Clean Auto Pact)을 미국과 함께 마련
- 2012년까지 백열전등을 퇴출시키고, 여타 가전기기 또한 에너지효율 제고방안 강구

캐나다 정부는 1992년 「에너지 효율법(Energy Efficiency Act)」을 제정하여 환경보호 및 에너지 절약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은 에너지사용 제품에 관한 최소한의 에너지 효율기준을 설정, 캐나다 내에서 수입, 생산 및 유통되고 있는 제반제품에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 적용대상 품목은 건조기 등 43개 품목으로, 해당제품을 제작, 수입,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법률에 정한 품목별 해당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캐나다 천연자원부에 소정의 에너지 효율 보고서를 제출하고 수입 시에는 세관에 필요한 정보를 통보하여야 한다. 해당제품은 에너지 효율 인증마크를 포함하여 판매하여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ENERGUIDE 라벨을 제품에 부착하여야 한다.



캐나다의 환경마크인 환경선택 프로그램(ECP: Environment Choice Program)은 일반소비자들로 하여금 환경보호기준에 적합하게 제조된 상품이나 서비스의 사용을 권장하기 위하여 1988.6월부터 실시되고 있다. 환경마크 획득상품에 대해 인센티브의 부여를 규정하고 있는 법령은 없으나, 연방정부 및 주정부(온타리오주, 알버타주)는 자체적으로 조달물품 구매 시 환경마크 획득제품의 우선구매를 장려하는 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캐나다의 환경영향평가법(Canadian Environmental Assessment Act)에 따른 평가대상사업은 ①연방정부가 사업제안자로 된 경우, ②연방정부가 사업의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경우, ③사업을 위해 연방정부가 관리하는 토지 혹은 그 이용권의 매각, 임대 등의 경우, ④연방정부가 인·허가 등을 하는 경우이다. 연방정부기관이 주체가 되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며, 평가서에는 사업자에 의한 환경영향, 주민의견, 환경보전대책 등이 첨부되고, 구체적으로 개별 안전마다 주무관청이 평가범주(scoping)로 포함시켜야 할 평가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평가는 대상사업의 규모 등에 따로 3가지 유형(스크리닝, 클래스 스크리닝, 포괄적 조사형태의 환경영향평가)으로 실시되며, 더욱 상세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조정 또는 위원회심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캐나다의 스크리닝은 주무관청에 의한 비교적 간단한 환경영향평가를 말하는데, 이는 환경영향평가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스크리닝 제도와는 다른 것이다. 또한 클래스 스크리닝은 환경 평가청이 설정한 모델보고서를 가지고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다. 스크리닝의 경우 주무관청이 필요에 따라 국민의견을 수집하고, 포괄적 조사의 경우 환경평가청이 심사 시 국민의견을 청취한다. 조정 시에는 관계자가 참가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 있다.

주택의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공사를 한 주택 소유주에 대해 1회 최대 5천 달러, 평생 최대 50만 달러까지 지원하는 에코에너지 개조지원 정책(eco Energy Retrofit)을 2007.4월부터 도입해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 소유주들의 공사비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다. 지원을 받으려면 연방 천연자 연부가 정한 규정과 신청절차를 따라야 한다.

2009.5월 온타리오 주는 획기적인 발전차액지원(FIT: Feed in Tariff) 정

책을 통한 재생에너지 관련 투자 프로젝트 유치와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 활성화, 그리고 친환경 일자리 창출(처음 3년간 5만여 개 일자리 창출 예상)을 목표로 하는 Green Energy Act를 발효하였다. 2012.4월 온타리오 주정부는 지난 2년간의 FIT 프로그램의 성과와 주민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FIT 2.0 지원제도 개정안을 공시하였다.

2009.9월에는 Green Energy Act 조항 내 Local Contents 규정을 추가 발표하였다. Local Contents 규정은 풍력과 태양력 발전 프로젝트가 FIT 인센티브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일정량의 온타리오산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Local Contents 규정을 두고 캐나다 신재생에너지 업체들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너무 강한 규제라며 반발하는 쪽과 온타리오 주의 새로운 친환경 제품 제조시설 유치를 통한 획기적인 일자리 창출 정책이라며 찬성하는 쪽으로 나뉘고 있다. 일본과 EU는 WTO에 온타리오 주정부의 Local Contents 규정이 WTO 협정에 위배된다는 의사를 제기하였고 2013.5월 온타리오 주정부를 대신하여 분쟁에 나선 캐나다 연방정부는 WTO 분쟁해결 패널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13.5월 온타리오 주정부는 WTO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발표와 함께 2014년까지 Local Contents 규정을 수정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2014년까지 Local Contents 규정은 폐지 또는 전면적인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Local Contents 규정

재생에너지 종류	2009.10.1~변동시기	변동시기 이후
소규모(10kw 이하) 태양광 PV	40% (변동시기: 2011.1.1)	60%
대규모(10kw 이상) 태양광 PV	50% (변동시기: 2011.1.1)	60%
풍력(10kw 이상)	25% (변동시기: 2012.1.1)	50%

주: 10kw 이하의 풍력발전 프로젝트는 Domestic Contents 규정과 무관
 자료원: Ontario Power Authority

독일은 EU의 환경 관련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내외국인 기업에



차별을 두지 않고 있다. 독일 연방정부는 2005.3월 「전기 및 전자장비법」을 제정, 전기 및 전자제품 생산업체로 하여금 폐기된 제품을 회수 및 재활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전기 및 전자제품의 회수는 연방 환경청에서 관련 업무를 주관하며 연방 환경청은 EAR(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Register) 재단에 회수 관련 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독일 내 전기 및 전자제품 공급 및 수입업자는 EAR에 제품을 등록해야 할 법적 의무를 지고 한다.

스웨덴은 환경보호 및 새로운 청정기술 개발 노력이 활발한 국가이다. 스웨덴에서 활동하는 기업은 「환경법」에 의거하여 배출 감소, 독성 화학물질 사용 최소화, 보다 효율적인 에너지사용 및 폐기물 관리개선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사전예방의 원칙(precautionary principle), 오염자부담 원칙(polluter pays principle) 및 제품선택원칙(product choice principle, 생산 시 기존의 재료나 공정보다 보다 덜 위해한 대체재나 공정이 존재할 경우, 이로 대체해야 한다는 원칙) 등 환경법상의 제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기업이 환경침해 가능성이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필히 환경영향평가(environment impact assessment)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승인을 얻어야 한다. 따라서 기업들은 가급적 초기단계에서 환경 관련 기관들과 접촉하여 환경법 위반 가능성 등에 관한 자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국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기준의 80% 이상으로 감축한다는 목표와 2009.4월 정부의 저탄소사업전략(UK Low Carbon Industrial Strategy)을 통해 그린화정책의 핵심 산업에 대한 제품 및 서비스의 경쟁력을 확보해 경제적, 산업적 이익을 거둘 것을 계획하였다. 저탄소 녹색성장산업 전략의 4가지 핵심 분야로는 비즈니스, 소비자 그리고 납세자의 경제적 낭비를 최소화하는 에너지 효율관련 분야, 탄소배출을 줄이는 재생 에너지, 원자력발전, 청정 석탄 등의 에너지 인프라관련 분야, 영국이 저탄소 배출 차량의 개발 및 생산에 선두가 되도록 하는 분야, 그리고 영국이 저탄소관련 비즈니스의 입지 및 개발에 최적의 나라가 되도록 하는 분야가 있다. 영국은 저탄소 시장 확대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저탄소환경 관련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영국기업들

포함한 타국가의 관련 기업에 사업기회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영국 정부의 주요 지원 계획으로는 연안 풍력발전, 조력발전, 원자력발전, 저탄소 차량, 재생건설재료, 재생화학물, 저탄소 제조업 등이 있다.

벨라루스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 및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제품 및 제품생산·실험 과정 등이 관련 기준 및 기타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의무적 환경인증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환경인증제도의 검증을 통과한 경우, 이를 증명하는 인증서를 발급받게 되며, 검증을 통과하지 못한 상품은 벨라루스에서 판매할 수 없다. 의무적 환경인증이 필요한 제품을 벨라루스로 반입하려면, 벨라루스 소재 인증기관이 발급한 인증서를 세관신고서와 함께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해당 제품의 유효기간, 판매기간, 기술·규범상 특이사항 등을 고려하여 정해지나, 대량 일괄 생산품과 서비스의 경우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5년이다.

스위스는 환경보존(유해가스배출량 감축 등)을 위한 다양한 세제를 도입하였다. 2000.1월부터 페인트, 니스, 세제 및 화장품 등의 원료에서 발견되는 휘발성 유기물질(VOC)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 VOC 세금은 주로 수입품과 내수용에 부과되며, 수출용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VOC 규정에 따라 부과대상이 결정되나 VOC로 간주되는 모든 유기물질이 그 대상은 아니다. 스위스는 현재 환경에 유해한 가스의 배출 감소를 위해 다양한 석유세가 부과되고 있다. 또한 연소물질(combustibles)에 대한 CO₂ 세금(tax 형식이 아니라 동기유발조치 형식임)이 화석연료 사용 감축과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고자 도입되었다. CO₂세 부과정책에 따라 2010.1월부터 화석연료를 이용한 난방 시 발생하는 CO₂ 1톤당 36프랑의 CO₂세가 부과되고 있다. CO₂세는 관세청이 수입 난방용 화석연료에 대해 집행하고, 유해한 CO₂를 발생시키지 않는 목재 또는 바이오매스와 같은 에너지원에 대해서는 부과되지 않는다. 동 세금의 면제에 대한 승인문제는 연방 환경청이 담당한다. 아울러 스위스와 리히텐슈타인에서 운행 중인 중형차에는 총중량, 배기가스 배출수준 및 운행거리를 기준으로 연방세인 중차량세(HVF)가 부과된다. 부과 기준으로는 3.5톤 이상의 중량, 화물운반용, 스위스 국내외에서 허



가를 받고 스위스 대중도로망을 이용하고 있는 모든 차량과 트레일러는 동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군용차량, 경찰, 소방서, 앰블런스 등의 차량, 운전학습 차량 등 특정 목적의 일부차량은 면제대상이다.

스위스 내 산업설비의 설치 및 운영 시 반드시 환경보호법이 고려되어야 하며, 연방 및 주(칸톤)정부가 환경 위해 요소를 통제하고 있다. 각 주정부는 공기 및 수질 오염, 소음방지, 살충제 남용 등을 직접 관리하고 있다. 공해 유발시설에 대하여는 주정부의 사전승인이 요구되며 공해 방지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다.

노르웨이는 살충제 및 인을 함유한 비료의 카드늄 성분에 대해 건강과 환경 보호를 이유로 EU보다 엄격한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유전자변형체(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에 대해서도 EU 보다 엄격히 규제하여 EU에서 승인된 GMO도 노르웨이에서 다시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2% 이상 GMO를 포함하고 있는 모든 식품은 적절히 라벨링을 해야 하며, 유전자 변형 식품이나 새로운 식품(novel foods)은 EU기준에 기초를 둔 노르웨이 기준에 따라 건강에 대한 유해성 평가를 받아 승인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색소, 비타민, 향료 등 식품첨가제를 불필요하게 사용한 식품의 유통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다.

또한 위생, 환경, 안전, 건강 등을 이유로 석면 제품, CFCs 등 오존층 파괴물질, 특정 질병을 옮기는 동물 및 식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흙, 토탄, 퇴비, 분뇨, 곡물의 수입 시 수출국 검역기관의 식물위생 인증서를 첨부해야 한다. 유럽 외 국가에서 목재, 톱밥 수입 시 조건부로 수입이 가능한데 특히 산림에 유해한 해충유입을 우려하여 한국, 중국, 일본, 캐나다, 미국으로부터의 목재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오스트리아는 환경보호문제에 큰 중요성을 부과하고 있다. 헌법적 지위를 가지는 「원자력 금지법」을 제정하여 원자력 발전 역시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EU가입 이후에도 GMO 수입 등에 있어 오스트리아만의 엄격한 환경 규제 정책과 기준을 실시 중에 있다. 대기오염과 수질오염은 EU의 기준에 따르나 화학물질에 의한 공해는 EU의 기준과 다르다. 또한 화학물 포장에

경고와 안전지침 표시를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친환경적 제품에 관해서 자율적인 에코라벨을 부여하고 있는데, 에코 라벨은 1993년 이후 적용되고 있는 라벨로 2011.3월말 기준 24개 품목군에 대해 기준이 제정되어 있다. 에코라벨 대상 품목은 △세제(다목적용 세제, 식기 세척기용 세제, 식기세제, 세탁세제, 비누/샴푸/헤어컨디셔너), △의류(섬유 제품, 신발), △Do-it-yourself(페인트와 바니시), △전자제품(PC, 노트북, TV), △가구(목재가구), △정원용품(Growing media 및 Soil improvers), △가정용기기(전구, heat pump) 등이다.

카자흐스탄은 환경보호부에서 환경관련 규제를 총괄하고 있는데 산업폐수 등 오염물질 방출 시에는 환경보호부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기간은 1년이다. 허가 신청은 카자흐스탄 각지에 소재한 환경보호부 사무소에서 할 수 있으며, 오염물질 총 배출량은 지방정부와 환경보호부에 의해 결정된다.

터키는 고체연료, 폐연료, 폐고무제품, 재활용 금속조각 등 산업폐기물은 환경산림부로부터 통제증명서(Control Certification)를 사전에 받아야 수입이 가능하며, 일부 폐기물은 바젤협약에 따라 수입이 금지된다. 오존층을 파괴하는 화학물질의 경우에도 환경산림부의 통제증명서 또는 화학물질 수입증명서를 받아야만 수입이 가능하다.

브라질은 급속한 산업발전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규제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특히, 산업이 발달한 남부지역의 공업지대에서는 주(州) 및 시(시)를 중심으로 무거운 벌과금을 부과하는 등 환경오염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생명공학을 이용하여 개량된 종자판매에 상당한 제한을 두고 있다. 환경부 및 환경부산하 환경위생기술국(CE-TESB)이 환경문제를 총괄하고 있으며,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제품의 수입 및 유통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환경에 유해한 품목(예: 독극물, 폭발물) 등에 대해서는 수입 금지품목 내지 허가품목으로 규정되어 있어 관련부처의 수입허가를 얻어야



한다. 예를 들면, 식품 내지 약품수입 시 환경관련 규제 품목에 대해서는 보건부 식품안전청의 허가를 취득해야 수입이 가능하다. 「유해폐기물의 생산, 처리 수입 등에 관한 법률(Ley 24051)」 등 환경관련 법규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환경관련 규제가 전무했으나, 최근에 환경관련 인식이 증대되면서 환경관련 규제에 대한 논의도 활성화되고 있다.

칠레의 3대 환경규제 기관은 환경부, 환경감독원(SMA), 환경평가원(SEA)이다. 환경부는 전반적인 환경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있고 환경감독원은 환경규범 준수여부를 감독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원은 2010.10월부터 독립 기구로 설치되어 전국 15개 지방사무소를 통해 환경영향평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댐, 송전망, 변전소, 원자로, 공항, 철로, 항구, 조선소, 광산, 가스관 등 21개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칠레 정부는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화력발전소 배출가스 규제 강화, 산티아고 지역 내 중장비의 배출가스 기준을 2011.4월부터 미국 TIER II 기준으로 강화, 제련 및 공단 오염물질 저감정책, 디젤유의 황 함유를 개선, 장작난로 사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은 2011년부터 EURO IV 또는 Tier 2 Bon8로 강화되었다. 이와 더불어, 칠레 환경감독원은 2013년부터 환경영향평가서의 이행수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더욱 강화될 추세로 기업들의 사업추진 시 환경영향평가서에 기입된 내용을 준수하는데 유의해야 한다.

과테말라는 공장 및 건축물 신축 시 건축물의 고도와 관련하여 교통통신건설부 산하의 민간항공기관(Aeronautica Civil)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진 등 천재지변에 대한 건축물의 안전성 심사를 위해서는 지진화산기상기관(INSIVUMEH: Instituto Nacional de Sismologia, Vulcanologia, Metereologia e Hidrologia)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건축지 및 건축물의 역사 및 지질학적 검토를 위해서는 인류역사기관(Antropologia e Historia)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헌법 제97조에는 과테말라 내 단체나 개인에 대해 환경오염에 대한 예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환경자원부를 통해 환경영향평가 및 자문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들도 과테말라 내 공장설립 승인을 얻기 위해서는 환경자원부에 환경영향 평가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환경관련 규정을 까다롭게 적용하지는 않고 있어 이에 따른 특별한 어려움은 없다. 상·하수시설 지역, 고압선 통과지역, 고고학 발굴지역, 유적지역 등에서의 건축을 제한하며 공사 도중 유물 등이 발견될 경우 건축을 중단하고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우루과이 역시 헌법에 환경보호가 보편적인 문제라고 명시하면서 정부가 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키는 행위에 대해 사업허가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권한을 부여한다. 또한 투자진흥법률에는 청정기술(clean technology)을 이용하는 국내외 기업에 대해 세금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루과이는 주택토지환경부(Ministerio de Vivienda, Ordenamiento Territorial y Medio Ambiente) 산하 국립환경국(Dirección Nacional de Medio Ambiente)에서 환경 문제를 전반적으로 관할하고 있다. 환경오염 물질 배출 및 처리에 관해서는 유해 폐기물 처리 공장 및 매장지 건설, 사용자 10만 명 이상 하수처리장 건설, 1헥타르 이상의 제조 공장, 유해 물질 배출 공장 등의 산업용 건설 등이 해당한다. 에너지측면에서는 새로운 광산 또는 갱구 건설을 요구하는 광물 채취, 화석 연료 개발, 10MW 이상 전력 생산 공장 건설, 핵에너지 생산 및 처리 공장 건설 등이 해당한다. 무역·여행·농림 분야는 자유무역지구 또는 산업지구 확장 공사, 리조트 및 여가 시설 건설, 10헥타르 이상 주택 단지 건설, 100헥타르 이상 채소, 과일 및 포도주 생산지, 100에이커 이상 임업장 건설 등이 해당한다.

해당 건설 업체는 국립환경국에 건설업체명, 토지소유자명, 토지 특성, 연관 기술자 신상 정보, 공사 내용,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환경 변화를 초래할 가능성 및 환경 개선방안 등을 기록한 건설환경카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전문기술자에 의뢰하여 공사가 환경을 오염시킬 가능성 정도를 측정하여 A급(오염 가능성 낮음), B급(오염 가능성 중간), C급(오염 가능성 높음)으로 분류한 후 이를 국립환경국에 보고해야 한다. 국립환경국은 환경카드를 접수한 후 10일 이내에 환경오염 가능성 정도를 승인하거나 변경해



야 한다. A급 사업의 경우 허가로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나 환경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부 사업 변경 및 추가적인 사항이 요구될 수 있다. B, C급 사업의 경우 사업자 부담으로 환경영향 조사가 수반되어야 하며, C급 사업은 공청회를 거쳐야 한다.

환경 보호를 위해 연무제(aerosol), 납 다량 함유 페인트 및 중질유, 특정 농업용 살충제 및 화학약품, 유해 폐기물 등의 수입은 금지되어 있으며, 할론 가스 등 몬트리올 협약(Montreal Protocol)에 명시된 오존층 파괴 물질을 포함한 품목의 수입을 위해서는 주택토지환경부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코스타리카는 화산, 해변, 하천, 밀림과 다양한 동식물을 바탕으로 Eco-tourism(생태관광)이라는 주제를 통해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다. 따라서 환경에 대해서도 매우 엄격한 정책을 펴고 있는데, 예를 들어 자원 개발의 경우에도 산림 자원이나 수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먼저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관련 법령으로는 「산림법」, 「탄수화자원법」, 「에너지절약규정」, 「생물다양성법」, 「수자원법」, 「토양관리보존법」, 「환경기구법」 등이 있으며 가입한 국제협약으로는 「식물체취거래협약」 등이 있다. 대규모 프로젝트의 경우 국립환경기술국(SETENA)이 주관하는 환경영향평가를 반드시 통과하여야 하며, 최근 많은 지방 정부들이 건축허가(Building permit) 발급허가에 앞서 환경영향평가 이행을 의무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환경영향평가를 받기 위해서 해당기업은 1차적으로 국립환경기술국에 프로젝트의 규모에 따라 D1(소규모), D2(중·대규모)서류를 제출한다. 해당 프로젝트가 B2범주(低환경영향)에 속할 경우 추가적으로 환경보전진술서(DJCA)만 제출하면 되지만, 만약 프로젝트가 B1범주(환경영향 중간수준)에 속할 경우 앞선 환경보전진술서와 더불어 예비환경관리계획서(P-PGA) 및 환경영향연구(EsIA)도 제출해야 한다.

페루는 일부 위해환경 품목에 대한 반입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법령 제613호 및 관련 규정을 통해 환경보호를 추진하고 있다. 신규 업체나 기존 업체로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 당국에 환경영

항평가(EIA)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폐광을 희망하는 광업 회사의 경우 폐광계획서를 에너지광업부에 제출 및 승인을 받아야 하며, 동 계획에 따라 요구되는 복구, 재생 및 폐광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환경보증(environmental guaranty)을 제시하여야 한다.

뉴질랜드는 야채 및 가축 등 식품으로 소비되는 유전자변형식물, 동물 및 미생물과 유전자변형생물체(GMO)를 가공한 유전자변형식품(GMF) 등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GMF 의무표시제를 실시하고 있다. GMO와 GMF의 개발, 수입, 실험재배, 상업적 판매를 위해서는 정부에 의해 임명된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관인 환경위험관리국(現 환경보호청, Environmental Protection Authority)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몽골은 자동차의 경우 생산년도와 배기량에 따라 특별소비세에 차등을 두고 있으며, 광산개발(특히 금)에 따른 환경파괴를 막고자 화학약품에 대해서는 수입제한 또는 금지조치를 취하고 있다.

베트남은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수입기계, 장비, 운반구, 재료, 연료, 화학물질 및 기타상품은 정해진 환경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환경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기계류, 장비, 운반구와 중고기계, 장비, 폐기대상 운반구 및 수입금지 품목에서 정한 원재료, 연료, 화학물질, 방사능에 오염된 기계장비, 병원균, 기타 독성물질 등에 대해서는 수입이 금지된다. 또한 형태를 막론하고 모든 폐기물은 수입이 금지되며 재활용품의 경우, 종류별로 분류되고 세척되어야 하며 자원부에서 정한 금지품목(폐기물, 독성)을 포함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아울러 환경보호를 위해 각종 법령을 정비하면서 최근 유럽의 높은 기준을 채택하는 추세이다. 베트남 법(29/2011/ND-CP)에 따라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 자연보전지역, 관광지역, 문화·역사 유적지에 입주하는 경우, 석유, 가스 탐사 및 가공, 수송, 저장업, 제철소 및 철 구조물 제작, 비철금속 공장(연간 20만 톤 이상) 등과 같은 지역 및 업종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베트남 내에서 환경 보호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가면서 베트남 정부도 적극적으로 환경관련 법령을 시행하고 있고 이에 따라 단속도 강화되는 추세이다. 특히 투자가는 환경보호 법규의 준수



를 스스로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일단 적발될 경우, 벌칙 규정이 소급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법규의 철저한 준수가 요구된다.

스리랑카는 관광산업이 주요 외화수입원 중의 하나이어서 여타 개발도상국에 비해 환경보호에 특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환경보호관련 품목에 대해서는 「수출입관리법」에 의거하여 수출입이 모두 제한적이다. 또한 환경오염 유발업체에 대해서는 환경보호 관련법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 스리랑카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모든 업체는 국가환경보호법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중앙환경국(CEA)에서 발행하는 환경보호 라이선스(EPL)를 영업활동 1개월 전에 취득해야 하고, 라이선스는 업종에 따라 1년 또는 최장 3년까지 유효하다. 또한 라이선스를 취득한 후에도 폐기물처리 관리현황에 관한 라이선스를 중앙환경국으로부터 취득해야 한다. ‘환경보호세(Environment Conservation Levy)’는 40W 이상의 램프를 수입 또는 제조할 경우, 개당 3루피를 환경보호세로 부과하나 ‘절전형 형광등’에 대해서는 면제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몬트리올 의정서」의 회원국으로서 1992년 「몬트리올 조약」과 「비엔나 조약」을 비준하였고, 이에 따라 냉매(프레온가스)의 무역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바젤협정상의 규정에 따라 일정한 플라스틱의 경우도 수입이 금지되고 있다. 환경관리제도로는 「환경오염방지법」상의 오염물질 배출시설관련허가(Nuisance Act Permit) 신청 시 오염가능성이 낮을 경우에는 환경관련 자료(Environment Information Report)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오염가능성이 높을 경우 환경영향분석서(Environment Impact Analysis)를 제출해야 하고, 이 경우 오염방지시설 개요 및 도면을 첨부해야 한다. 오염방지시설의 수입에 대해서는 인구 및 환경관리청의 추천을 받아 투자조정청(BKPM)의 면세허가를 받을 수 있다.

캄보디아는 환경보호를 위해 여러 가지 기준을 각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어 인접국가와 비교하여 환경관련규제가 엄격한 편이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절차 시행에 관한 시행령’이 1999년 공포되었으나, 대부분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는 환경부의 재원부족으로 인해 프로젝트 발주자가 고용한 컨설턴트에 의해 시행된다. 메콩강 지역은 수질 오염 방지를 위해 관련국가간 협약을 통해

환경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공기배출, 소음기준, 폐기물처리 등과 관련한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 대외원조에 의존하고 있는 국가 특성상 비정부기구(NGO)의 활동이 왕성한 편이며, 특히 밀렵보호를 위해 World Bank 주도하에 벌목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등 오염산업의 입지는 여타국에 비해 전반적으로 불리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필리핀의 경우 대기오염방지법(Clean Air Act) 중에서 외국투자자의 관심 대상은 주로 소각시설(incineration) 사용금지 문제이다. 외국투자기업들은 첨단 소각시설, 즉 850도 이상의 폐기물을 소각함으로써 독성물질을 유발하지 않는 소각시설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제기하고 있다.

싱가포르 국립환경청 환경보호국(오염방지과)은 신규개발계획이 있는 경우, 1) 계획안을 검토하고, 2)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며, 3) 신규산업개발 또는 주택개발이 적절한 장소에서 이뤄지며 주변의 토지용도와 양립가능한지 여부 등을 평가한다. 또한 오염물질 배출기준에 맞으며, 폐기물이 안전하게 관리되고 적절히 처리되어야 하며, 공장이 적절한 산업지구에 자리할 수 있어야 계획된 산업 활동이 허용된다.

일본은 2001.4월부터 「특정가정용 기기재 상품화법」에 따라 리사이클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및 TV 등 가전 4품목에 대하여는 제품회수 및 재생처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야생 동식물의 가죽 및 이로 만든 제품에 대한 수입허가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정물질의 규제에 의한 오존층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제물질의 제조, 배출, 사용 등에 대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중국의 환경기준은 대표적으로 환경질기준, 오염물질 배출기준이 있으며 국가기준을 표준으로 각 지방정부가 특성에 따라 강화된 지방기준을 시행하므로 국내진출기업은 각 지역의 대기·수질 오염배출기준 등을 준수해야 한다. 2012.7월에 ‘청정생산촉진법’을 수정하여 청정생산심사를 강제 적용하는 기업의 범위가 확대되고 기업의 청정생산 심사제도가 강화되었다. 오염물질 배출업체는 오염배출 신고 등기제도에 따라 규정된 기간에 소재지 환경보호 주관부서에 오염배출 현황을 신고하고 등기해야 하며, 관련 오염



방지기술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오염 배출비용 징수기준 등 규정에 근거하여 배출 오염물의 종류와 수량에 따라 오염 배출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외에 오염배출 허가증제도(오염 배출업체의 허가배출 오염물 수량과 종류 및 배출 행방 등을 규정), 오염사고 보고 의무 등과 함께 환경법령 위반이나 환경피해를 발생시킬 경우 민형사상 책임(환경오염행위는 무과실 책임 원칙 적용)을 지게 된다.

환경관련 주요 신규 정책으로서 중국 정부는 경제 구조조정 및 성장방식의 전환을 통해 에너지 절약 및 오염 감축을 강화하고, 녹색경제와 순환경제를 발전시키고자 환경관련 부문별 정책 목표와 발전 대책 등을 포함하는 각종 계획을 2011년과 2012년에 다수 발표하였다. 특히 환경보호사업을 강화에 관한 국무원 의견 발표(2011.12월),⁸⁰ 제18차 공산당 전당대회 결과(2012.11.8~14일),⁸¹ 전국인민대표대회 정부업무보고(2013.3월)⁸² 등에서도 대폭 강화된 환경관련 정책이 발표되었다.

중국 정부는 2015년까지 주요오염물질의 배출 총량을 뚜렷하게 감소시키고, 도시와 농촌의 음용수상수원 환경안전을 효과적으로 보장하며, 수질을 대폭 개선시키고, 중금속 오염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며,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위험 화학품, 위험폐기물 등에 대한 오염방지 효과를 뚜렷하게 하는 한편, 도시의 환경 인프라 건설 및 운영 수준을 제고하고 생태환경 악화추세를 억제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였다.

<국가환경보호 12.5 계획>에서는 이산화황과 질소산화물의 배출감소, 수질환경 개선, 대기오염 종합규제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어, 향후 이 분야의 투자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80_ 환경개선을 위해 환경영향평가제도 강화, 주요 오염물질 총량 감축, 환경산업발전, 농촌 환경보호 등 16개 사업을 중점 추진

81_ 자원절약과 환경친화적 사회건설을 4대 중점추진분야로 채택하고, 당장에 '생태문명 건설'을 최초로 삽입

82_ 경제발전 방식 전환(내수확대, 환경보호, 해양관리 강화 등), 도시와 농촌의 호혜·상생, 민생개선, 개혁개방 심화 등을 강조

12.5 계획 중 환경보호 중점 프로젝트

수질오염 방지사업	대기오염 방지사업	농촌오염 방지사업	폐기물처리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 및 농촌 오수처리 시설 • 슬러지 처리시설 • 축산폐수 처리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탈황, 탈질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감소 시설 설치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 종합 환경 정돈사업 • 농업에서 비점 오염원 감소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금속, 잔류성 유기오염 물질, 위험 화학물질, 의료 폐기물, 위해 폐기물 등의 적정 관리 및 처리시설 설치 사업

중국의 환경시장이 지속 확대하고 있으며, 중국 정부 또한 정책적으로 자국 기업의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기업들이 중국 환경시장에 진출 하기 위해서는 중국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처리 효율과 경제성이 우수한 환경기술의 개발·확보, 현지 프로젝트 핵심 기관과 바이어와의 연계, 국제 공동연구를 통한 현지 실증화 선행, 현지 전문기관 활용⁸³ 등의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호주 정부는 온실가스 저감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2012.7.1일부터 호주 정부는 18개 관련 법률이 시행을 뒷받침하는 ‘탄소가격제’를 도입하였으며, 시행 직후 호주 약 500개 주요 탄소 배출 기업들이 배출하는 탄소에 대해 적용된다. 최초 3년간은 고정가격으로 시행되고 이후부터는 탄소가격이 시장에 의해 결정되는 탄소거래제(ETS: Emission Trading Scheme)로 전환된다. 2012.7.1일 시행 시 탄소가격은 톤당 23호주달러로 시작되며, 2013~14년에는 24.15호주달러(5% 증가), 2014~15년에는 25.4호주달러(5.4% 증가)로 인상된다. EU와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연계 합의에 따라 탄소거래제가 시작되면 적용하기로 하였던 가격하한제는 폐지된다. 금번 탄소가격제의 발표와 함께, 호주 정부는 호주의 탄소배출량 감축목표를 재설정했다. 종전 호주의 탄소배출량 감축 목표는 2020년까지 2000년 수준

⁸³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우리나라 환경기업의 효과적인 중국 환경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서 2011.8월에 한·중 환경산업 협력센터를 설립하여 운영 중임.(연락처: +86-10-8591-0997, 홈페이지: <http://ebasiacenter.or.kr>.)



대비 5%의 탄소배출량(BAU) 감축, 2050년까지는 2000년 대비 60% 감축이었으나, 새로운 목표 하에서는 2020년까지 2000년 수준 대비 5%의 감축, 2050년까지는 80% 감축할 예정이다. 탄소가격제 도입이 호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취약 계층(연금생활자 및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소득세 비과세한도액 인상 등의 세제 개편, 무역노출 산업 지원을 위한 무상 배출권 할당 정책 등이 발표되었다. 호주 정부는 탄소가격제가 도입되면 단기간동안 약 0.7%의 물가 인상 요인이 발생하지만 고용 수준이나 가계 소득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신재생에너지 산업 촉진을 위해 청정에너지금융사업단(CEFC: Clean Energy Finance Corporation) 설립에 100억 호주달러가 배정되었으며, 추가로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의 연구 및 개발을 위해 32억 호주달러를 투자하는 계획도 발표되었다. 궁극적으로 호주는 2020년까지 총 에너지의 20%를 풍력, 태양광 및 지열과 같은 신재생에너지원으로부터 충당하게 되며, 2050년까지 대규모신재생에너지원(수력은 제외)으로부터 호주에서 생산되는 전력의 40%를 공급 가능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이집트의 경우 환경을 규제하는 기본법으로 나일강 오염방지법(법 제48호/1982)과 동 시행령(제649호/1982)이 있다. 나일강 유역 전 지역을 대상으로 폐수 방출 가능성이 있는 공장건설이나 건물, 상점, 관광시설 및 기타 상업용 시설 등은 사전에 보건부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공공사업·수자원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보건부는 정기적으로 이들 허가시설이 배출하는 폐수를 수거하여 검사를 실시하며, 기준치를 넘을 경우 행정조치 한다. 투자 프로젝트의 승인절차에 관해서는 환경청(Egyptian Environmental Affairs Agency)이 관여하여 환경적합성을 심사한다는 규정에 따라 투자자는 환경저충평가에 해당하는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그러나 평가기술 미흡으로 강력히 시행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알제리는 최근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이 증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관련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환경에 유해한 품목들(식물, 화학약품 등) 수입 시에는 관련 당국의 사전 허가를 얻어야 하고, 일반적으로 오존

층 파괴물질이라고 판명된 화학제품 및 기타 물품의 수입이 금지된다.

오만은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해 세계 최초로 백신관리 교육센터지역으로 지정되는가 하면 UN에 의해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위생적인 나라로 지정되는 등 위생 및 환경면에서는 아주 엄격하게 통제, 관리하고 있다. 지구오존층을 파괴, 지구온난화를 가져 오는 것으로 알려진 프레온가스에 대해서는 이미 수입규제안을 마련하여 시행중인 바, 프레온가스(R12 냉매)에 대해서는 2005년부터 완전히 수입을 금지토록 하였다. 아울러 R22 냉매도 2030년이면 수입을 전면 금지토록 규정해 놓고 있으며, 이외에도 대부분의 산업용 화학제품들은 사전에 허가 제도를 통해 수입량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고 있다.

쿠웨이트의 환경관련 주요 규제를 살펴보면, 먼저 석면(ABESTOS) 제품의 생산 및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즉, 석면원료, 석면 파이프, 석면 시트, 석면을 함유하고 있는 모든 제품에 대한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 쿠웨이트 농수산청은 해양 환경 및 자원 보호를 위해 쿠웨이트 영해에서 트롤선, 어선 등이 Nylon Fishing Net을 사용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고, Natural Fiber Fishing Net(Cotton Fishing Net)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트럭, 버스, 트랙터, 포크리프트 등 중형 중고 중장비 수입 시 생산년도가 10년이 지난 차량은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우간다는 투자자들이 환경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프로젝트는 국가환경관리청(NEMA: National Environmental Management Authority)의 환경영향평가(EIA)를 거쳐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는 투자자가 NEMA로부터 승인을 받지 않으면 투자 라이선스가 발급되지 않는다. 또한 우간다 정부는 2007년부터 환경적 이유로 플라스틱 백(plastic bag)의 수입 및 생산을 금지시켰다.

예멘은 GATT 20조 규정에 따라 환경보호를 이유로 하는 수입금지 또는 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이며, 이에 따라 중고타이어, 7년 이상 중고차, 15년 이상 중고기계, 중고 디젤 승용차 등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시리아는 2004년부터 디젤유를 사용하는 10~15인승 마이크로버스와 2톤 이하 소형트럭의 수입을 모두 금지하고 있으며, 디젤엔진을 장착한 승용차와 사륜구동 차량의 수입도 금지하고 있다.

레바논 정부도 시리아와 마찬가지로 2004년부터 디젤유를 사용하는 10~15인승 마이크로버스와 2톤 이하의 소형트럭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디젤엔진을 장착한 승용차와 사륜구동 차량의 수입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차량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디젤유의 질을 높이고, 휘발유도 유연에서 무연으로 바꾸어 나가는 한편, 가솔린과 디젤 차량을 천연가스 차량으로 대체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하고 있어, 향후 차량 수입에서 환경에 대한 규제는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카타르의 경우 화학제품, 화학폐기물, 유독물질 및 유해물질 수입 시, 선적에 필요한 세관서류 및 안전수치 자료 등을 관세사와 협의하여 준비하여야 한다. 인화물질, 방사능물질, 무기 및 폭발물, 산업재산권 및 저작권 보호에 반하는 물품, 마약류 수입 시에는 추가적인 요구사항들이 있다.

남아공 환경관련 법의 기본인 국립환경관리법은 협력적인 의사결정, 포괄적 환경관리, 환경관리의 지속가능한 개발의 모범규약, '오염유발자 부담' 원칙 등을 포함하고 있다. 국립환경관리법에 규정된 위반사례 적발 시, 5백만 랜드 미만의 범칙금 또는/그리고 10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 남아공은 기후변화문제에도 큰 관심을 갖고 있으며, 2009년 UN 기후변화당사국 총회(COP 17)에서 Jacob Zuma 대통령이 2020년까지 남아공의 탄소배출량을 34%, 2025년까지 42%까지 감소하겠다는 의지를 발표한 바 있다. 2012년 남아공 예산발표에 따르면, 2013/14년 회계 년도중 이산화탄소 1톤당 120랜드의 탄소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2011년도 기후변화대응백서에 따르면, 이러한 탄소세는 매년 10%씩 증가할 예정이다.

러시아는 산업폐기물(HS 코드 2618-2620, 3915)의 경우 수입허가품목으로 지정하고 있는 바, 통관 전 환경부로부터 라이선스를 발급받아야 한다. 한편 자동차의 경우 2012.7월 환경보호를 위한 폐기물 생산·소비에 관한 러시아연방 법률이 개정되어, 2012.9월부터 원칙적으로 모든 수입 자동차에

대해 재활용 부담금(recycling fee)이라는 명목으로 관세가 부과된다. 수입 자동차의 연식이 3년을 초과할 경우 세율이 높아진다. 동 법률상 예외는 △ 국내에서 생산된 자동차, △ 관세동맹 회원국으로부터 수입된 자동차, △ 2012.9월 이전에 러시아 내에 등록되었거나 이후 재판매되는 자동차 등이다.

르완다의 환경관련규제는 르완다환경관리국과 환경법, 그리고 장관 명령에 의해 제시되고 있으며 관련 내용은 르완다환경관리국 홈페이지⁸⁴에서 찾아볼 수 있다. 르완다에서는 생분해성이 아닌(non-biodegradable) 플라스틱류, 공중보건에 해를 가할 수 있는 환경 및 건강관련 제품의 수입 규제가 존재한다. 르완다에서 생산되는 포장재와 관련해서는 개발청에 문의하여 환경관리국과 표준국의 자문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수입품 포장재의 경우는 환경관리국의 승인이 필요하다. 르완다는 기후변화협약 및 교토의정서, 사막화방지협약, 생물다양성협약, 카르타헤나의정서, 오존층보호를 위한 비엔나협약, 몬트리올의정서, 바젤협약, 습지에 관한 람사협약,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교역에 관한 국제조약 등에 비준한 상태이다. 또한 국제식품규격의 회원국이다.

멕시코 정부는 1988.1월 미국의 「환경보전 및 회복법(RCRA)」을 모델로 「생태계 균형 및 환경보호를 위한 일반법」을 제정하여 1988.3.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는 마길라도라 기업에게 제조 또는 조립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해물질의 처분 또는 정화활동을 의무화하기 위한 것으로 결국 환경보호 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멕시코 정부는 해당제품의 수출입을 위해서는 반드시 환경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베네수엘라는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이 아직 제대로 정립되지 않아 환경을 이유로 한 특별한 무역규제 조치는 시행되지 않고 있다. 공기 오염의 주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수입 자동차의 배기가스 관련 규제 수준이 Tier 0(Tier

84_ http://www.rema.gov.rw/index.php?option=com_content&view=category&layout=blog&id=179&Itemid=146&lang=en



는 미국의 차량 배기가스 기준으로 숫자가 높을수록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함을 의미)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환경규제는 미미한 수준이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석유 소비량 감축 및 천연가스 사용 장려를 위하여 2008.1월부터 모든 수입차량 및 국내 조립차량에 대해 천연가스 사용이 가능한 시설을 설치토록 의무화하였으나, 세부 규정 미비 및 천연가스 Kit 공급 지연으로 인해 시행 시기를 6개월 연기한 바 있고, 이는 계속 지연되고 있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천연가스 Kit의 안전성 문제 및 소형차량에의 탑재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어 실제로 시행되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볼리비아에서는 중고차를 수입할 경우 법률 3467 및 대통령령 28963호에 의하여 세관에 설치된 측정소에서 배출가스 측정을 받아야 하며 측정결과는 IBMETRO에 통보되어 환경평가 증명서 발급여부를 결정짓게 된다. 또한, 자동차, 냉장고에 쓰이는 냉매제는 몬트리올 의정서에서 허용된 물질을 써야한다.

사우디는 환경관련 규제가 심하지 않은 편이었으나 1991년 걸프전 이후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이 크게 높아졌다. 최근 사우디 담수공사(SWCC)와 사우디 전력공사(SEC)는 프로젝트 추진 시 각종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있다. 사우디 석유광물부(MOPM)는 수반가스(Associated Gas) 및 폐열의 회수·산업단지 공급, 석유광물 생산 시 환경보호기준 준수, 무연휘발유 및 저유황경유의 생산·공급 등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 주무기관은 기상환경보호청으로서 1989년 제정된 환경보호기준에 의거하여, 산업시설 계획 또는 운영 시 기상환경보호청이 대기와 물에 대한 보호지침을 부과하고 있다.

에티오피아는 농업이 전체 GDP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약 70~80%의 고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환경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에티오피아 환경법에는 토양, 숲, 생물 품종, 수자원, 에너지, 천연자원, 도시환경, 산업폐기물, 대기오염 및 기후변화, 문화 및 자연 보존지역, 인구, 공동체, 토지, 성, 환경경제, 환경정보화 시스템, 환경영향평가(EIA: Environ-

mental Impact Assesment), 환경교육 등이 망라되어 있다. 이 법안은 연방, 주, 시 구역별로 적용되며, Ministry of Environment and Forestry에 의해 법안이 정해지고 적용된다. 여기서 정해진 기후변화 준수 경제(CRGE: Ethiopia's Climate-Resilient Green Economic) Strategy에 의거하여 2025년까지 탄소배출 중립적 국가(Carbon Neutral by 2025)를 목표로 국가발전방안 및 투자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에콰도르는 환경부의 규정에 의거 2002.7.7일 체결한 안데스 공동체 생물다양성 보존 전략(Estrategia Regional de Biodiversidad para los Países del Trópico Andino)을 엄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생태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화학, 원자력 관련 재료 등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나, 정확한 물품리스트는 존재하지 않는다. 2012.6월 대외무역위원회는 자동차, 휴대전화 등 일부 수입품목에 대한 쿼터제와 관세 조정을 내용으로 한 수입규제조치 제66호, 67호를 발표하였으며, 동 수입규제조치 발표 배경으로 자동차 증가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의 증가 및 폐휴대전화 배출량 증가로 인한 환경과 괴를 꼽고 있다. 동 조치가 인류 보편의 건강과 동식물의 안전을 위한 것으로 WTO 권고안의 위반소지가 없음을 명시하고, 카르타헤나 의정서, 몬테비데오 조약 등을 언급하는 등 국민보건 및 환경보호를 위한 수입제한조치임을 거듭 강조한 바 있다. 2013.6월 발표된 환경보존을 위한 저효율 에어컨 수입제한 조치는 사전홍보 없이 이루어져 각국 수출기업, 현지 도매상이 저효율 에어컨을 발주하여 통관이 불가능하게 된 혼란을 겪었다.

온두라스 정부로부터 환경허가를 받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도 한다. 공장설립 또는 잠재적으로 환경이나 천연자원, 국가문화재나 유적지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업 개시를 위해서는 우선 자원환경부(SERNA: Secretaría de Recursos Naturales y Ambiente)를 통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한다.

인도는 헌법으로 환경보호를 제도화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로서 직접규제를 통한 명령 및 통제방식의 환경규제 제도를 가지고 있으며 환경관련 규제장치를 발전 및 강화하고 있다. 2008년부터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하여 총리실 주도 하에 '기후변화 대응 국가행동계획(National Action Plan for Climate



Change)’을 수립하여 태양에너지, 에너지효율 향상, 지속가능 주거, 수자원, 히말라야 생태보전, 녹색 인도, 지속가능 농업, 전략 지식 분야 별로 환경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아직은 기후변화대응 및 녹색성장을 위하여 경제 및 산업 발전에 법적 제약을 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판단에서 경제개발을 우선시하고 있어 동 정책 실현을 위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녹색성장 법제는 다소 미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개별 정책 이행이 점차 구체화·의무화되고 대상 범위 또한 확대되고 있어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환경관련 규제 중에서 특히 사전 환경승인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인도 환경법은 시행령 및 환경영향평가공고(Environment Impact Assessment Notification)를 통하여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프로젝트 및 사업은 반드시 환경산림부(MoEF: Ministry of Environment and Forests) 또는 주 환경영향평가기관(SEIAA: State Environment Impact Assessment Authority)으로부터 사전 환경승인(Environmental Clearance)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산업들은 동 산업의 규모의 대소에 따라 A, B 범주로 나뉘며(규모가 클수록 A범주에 속함), A범주의 산업은 중앙정부인 환경부로부터, B범주의 산업은 주 환경영향평가 기관(SEIAA)으로부터의 사전 환경승인이 필수적이다.

튀니지의 경우, 비인체분야에 대한 유전공학 실험이나 유전자변형유기체(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활용 관련 법규나 규제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GMO 문제 관련, 튀니지는 생물학적 다양성 보전에 대한 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과 생물·기술학적 위험성 예방에 대한 카르타제나 결의서(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에 서명한 바, 유전자변형 규제를 법률상으로 제도화하고 생물안전성을 감시·관리하는 국가위원회의 발족을 검토 중이다. 환경 분야 국제협약에 따라 튀니지는 유해폐기물,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오존층 파괴물질 및 야생 동·식물 수입 등을 철저히 관리·규제하고 있다. 석유, 중합체, 원심분리기, 건전지·배터리, 축전지 등은 수입 및 판매 시 5% 세금이 부과되며 이는 튀니지 국립환경보호청에서 관리하는 ‘공해방지기금’에 적립된다.

파키스탄은 1997년 환경보호법 등 일련의 법규를 제정하고, 이후 국가환경 품질기준(NEQS)을 마련하여 주로 자동차, 공해배출 기계류 등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환경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규제수준이 그리 높지 않은 편이어서 우리 기업의 수출에 특별한 애로요인이 되고 있지는 않다. 2012.7.1부터 파키스탄으로 수입되거나 생산되는 차량은 반드시 EURO II의 환경기준을 충족하도록 하여 차량의 탄소배출관련 환경 규제를 강화하였다.

프랑스는 EU의 신화학물질 관리제도인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of Chemicals)의 국내적 적용을 위해 화학물질 분류 제도인 ICPE(Installations Classees pour la Protection de l'Environnement)를 도입하여, 화학물질의 위험도에 따라 신청(Declaration) 대상, 허가(Autorisation) 대상, 감독 및 허가(Autorisation avec servitude) 대상 등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다. 화학물질별로 신청 대상의 경우에는 감독당국으로부터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받아야 하고, 허가 대상 물질의 경우에는 연 1회 현장 조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 환경법은 신고 및 허가 대상 화학물질에 대해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벌금을 부과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벌까지도 규정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신청 대상의 경우 최소 1,500유로의 벌금이 부과되며, 허가 대상일 경우에는 최소 7만 5천 유로, 1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헝가리의 경우, EU의 환경규제 조치로 2020년까지 에너지 효율화 비율 20% 목표치 달성에 따라 지속적으로 성장이 예상되는 분야로서 수질관리, 신재생에너지 생산 확대, 쓰레기 처리 등에 51억 유로를 배정하였다. 정부의 대체에너지 발전소 건설과 사용자에게 대한 보조금 지급 제도 유지로 인해 수요기반이 견고할 것으로 보이는 바, 총 51억 유로의 금액 중 2.8억 유로를 신재생에너지 열전기 생산장비 구입, 지역난방 에너지 공급에 보조금으로 할당하고 있다(총 프로젝트의 10~60%까지 자금 보조).

니카라과는 환경 관련 규제를 보건법, 광업법, 임업법, 야생동물보호법 등에서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의무사항은 비교적 완화된 수준인 것으로 평가된다. ‘환경 및 천연자원 통합법’(1996)은 기업과 개인에게 오염을 완화



하고 야생지역을 보존할 의무를 부과한다. 오염유발자에게 환경오염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폭넓은 책임을 부과하고, 환경 관련 분쟁을 담당할 ‘환경 재판소’를 설립할 것을 규정한다. 환경보호의무를 소홀히 하는 외국인투자자는 현지사회로부터 정치적 압력을 받을 수도 있고, 법적으로 기소될 수도 있으며, 대중의 비난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모로코의 경우,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바젤 협약, 스톡홀름 협약, 로테르담 협약 등 환경협정에 따라 멸종위기 동식물, 유해 폐기물,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특정 유해화학물질 등은 수입허가 또는 수입금지 대상이다. 몬트리올 의정서에 따라 오존층 파괴물질의 수입을 위해서는 수입허가가 필요하며, 수입규모가 점차 축소되어 완전히 금지될 예정이다.

바레인은 2011년의 보건부의 각서에 따라 139가지의 화학품 수입을 금지하기로 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또한 모든 종류의 폐기물 수입, 방사선 물질 저장, 투기, 유독성 물질 수입, 석면(asbestos)과 석면부산물의 수입, 제조, 제한된 화학품 수입과 산업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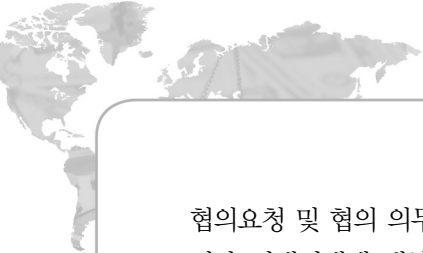
파라과이는 생태계, 수질, 공기오염 등 환경에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모든 사업(제조업 조성지, 농장, 목장 등 포함)에 대해 환경청(SEAM)으로부터 환경영향평가(Evaluación de Impacto Ambiental) 승인받도록 규정하고 있다(법령 293/93).

경쟁정책

개관

경쟁정책은 경제의 효율성 극대화를 목표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규제하거나 경쟁을 저해하는 시장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시장경제체제의 기본적인 경제정책이다. 경쟁정책은 경쟁법을 통해 경쟁 제한적이거나 반경쟁적인 관행, 즉 가격과 생산량을 특정하는 기업 간의 공모행위나 진입제한 등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시키고, 경쟁당국을 통해 이러한 행위를 금지 또는 억제하는 수단을 동원하는 것을 말한다. 경쟁정책의 통제 대상 중 대표적인 것은 가격 또는 수요 담합(카르텔), 인수·합병을 통한 시장의 독점,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 수직·수평적 거래 제한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관련된 통상장벽의 일반적 유형에는 국제카르텔, 특히 수출 카르텔을 들 수 있으며 수직적 거래제한, 또는 기업결합제한의 차별적 운영을 통한 시장접근 저해 등을 들 수 있다.

경쟁정책을 세계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다자간 협정은 존재하지 않지만 여러 국제기구 및 협의체들은 경쟁정책의 국제적 컨센서스 마련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OECD에서는 경쟁위원회를 구성하여 모범 사례 검토, 권고안 채택, 경쟁포럼 채택 등의 활동을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34개 국가들의 경쟁 환경을 평가하는 경쟁법/정책 지표(CLP: Competition Law and Policy)를 개발하였다. 다자간 규범에도 경쟁과 관련된 규정들이 반영되어 왔다. GATT 협정은 수입독점업자의 행위에 대한 규율(제2조)과 수입에 대한 내국민 대우 규정(제3조)을 담고 있다. 세이프가드 협정은 수출자율 규제(VER)와 시장질서유지협정(OMA)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제11조),⁸⁵ GATS협정은 독점공급자의 독점적 지위남용 금지, 독점적 행위 발생 시



협약요청 및 협의 의무, 정보제공의무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제8, 9조). 그러나 경쟁정책에 대한 종합적 검토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국제경쟁네트워크(ICN)는 기존의 국제기구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경쟁정책의 국제협력 및 조화를 위하여 WTO와 OECD 범위 밖에 구성된 경쟁법 전문 국제협의체이다. ICN 총회에서는 경쟁정책의 이행, 카르텔, 기업결합 등 각 실무그룹들의 활동을 보고하며 경쟁정책 집행경험 공유, 모범사례 도출 등의 활동이 이루어진다. 한편, ASEAN은 2007년 아세안 경쟁정책 전문가그룹(ASEAN Expert Group on Competition)을 설립하여 회원국 간 자유무역 확산과 경쟁법 도입을 장려하고 있다.

APEC은 경쟁정책과 제도개혁을 같이 도모하여 경쟁정책과 법 작업단(Competition policy and Law Group)을 1996년부터 운영하여 OECD와 같이 “제도개혁에 대한 통합리스트(APEC-OECD Integrated Checklist on Regulatory Reform)”를 작성하여 규제와 경쟁정책, 시장개방을 포함하는 공공부문 개혁을 도모하며 개도국의 경쟁법 집행을 위한 역량강화 및 기술지원을 제공한다. 그 밖에도 IMF, 세계은행 등 국제기관과 선진국의 경쟁당국들은 경쟁법에 대한 구체적인 과제 검토, 기술지원 및 능력배양, 경쟁정책 관련 세미나 및 연수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경쟁정책에 관한 다자간 국제 규범은 마련되지 못하고 있지만 경쟁정책은 최근 체결되는 지역협정 또는 자유무역협정에 포함되고 있으며 경쟁당국 간의 협의회도 활발하게 열리고 있다. 특히 지역무역협정에서 경쟁정책은 경쟁정책 관련 문제가 통상문제로 비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쟁법의 역외적용과 관련된 절차적 협력 및 조율에 집중되고 있다.

85_ 세이프가드 협정문에서는 수출자율규제와 시장질서유지협정 그리고 이와 유사한 조치를 금지하고 있는데 여기서 유사한 조치란 수출조절, 수출 및 수입품 가격 모니터링 제도, 수출 및 수입감시제도, 수입카르텔, 재량적 수입허가제도, 수출카르텔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주요 FTA의 경쟁정책 관련 내용

자유무역 협정	실체 규정	절차적 규정 및 분쟁해결
EC협정	공동: 부당공동행위,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정부보조금 경쟁법 적용, 수량제한 금지, 회원국 간 차별금지, 반덤핑조항 폐지	역내 공동 경쟁법, 사법절차 회부 가능 집행기구: EC집행위원회
NAFTA	경쟁법·정책 도입, 촉진 독점기업 설립가능, 반경쟁행위 금지, 회원국 간 비차별 반덤핑 규제, 상계조치 가능	분쟁해결절차 없음. 실무 작업반을 설치하여 정책 권고는 할 수 있음.
안데안 공동체	공동경쟁법	Board of Cartagena Agreement: 조사, 중지, 시정명령 권한, 법적효과
MERCOSUR	공동경쟁법, 국제교역에는 반덤핑 규제 가능, 경쟁법 조화 진전과 함께 폐지 예정	
EFTA	부당공동행위, 시장 지배적 지위남용, 정부보조금, 합병 EC협정과 유사 반덤핑 조항 폐지	EFTA Surveillance Authority: 조사 및 집행 권한 없음.
캐나다·칠레 FTA	경쟁법·정책 도입, 촉진 반덤핑 폐지	양자협정의 및 분쟁해결절차 없음. 중앙조정기구 없음.
한미 FTA	경쟁법 집행에서 국적에 따른 비차별적 대우 명시, 동의명령제 도입 합의, 지정 점·공기업 관련사항의 정의 및 의무조항 도입	경쟁법, 소비자보호 협력조항, 상대국 요청 시 협의의무에서 발생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분쟁해결절차에서 배제
한EU FTA	경쟁센터에 경쟁섹션과 보조금섹션을 둠. 경쟁섹션에서는 경쟁법 집행관련 원칙 및 경쟁 당국 간 협력, 공기업 및 국가독점의무 등을 규정	<대한민국 정부와 EU간 반경쟁적 행위에 관한 협력협정(2009.7.1발효)>에 기초한 협력, 경쟁분야에서 규정된 의무는 FTA 분쟁해결절차 적용을 배제

자료: 강문성 외, 2003, 『한·중·일 무역규범이 비교분석과 FTA에 대한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현황분석

세계경제의 글로벌화로 외국기업의 국내진출이 자국시장 경제에 미치는 영

향이 커지고 기업간 합병 등 경쟁법 역외적용 및 외국기업에 대한 경쟁법 집행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각국의 경쟁당국은 다국적 기업들의 국제 카르텔 등 경쟁제한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외국의 경쟁당국, 국제기구 등과 경쟁정책에 대한 정보교류, 경쟁법 이행 시 상호조율 등 협력 관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 주요국가들은 여전히 경쟁법을 역외로 확대하거나 경쟁법의 집행을 강화하는 등 간접적인 보호 무역 장벽으로 활용하고 있다.

■ 주요 국제기구별 경쟁정책 논의 및 활동내용

비교항목	OECD	WTO	UNCTAD	ICN
설립취지 및 조직성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 분야 정책연구 협리와 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역규범의 수립 협상을 위한 토론의 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발도상국의 지원 UN 산하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협의체 협상기구 아님
회원가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부분 선진국가임 (참여범위의 한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별 국가별 가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UN 회원국은 자동적으로 회원이 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경쟁당국, 국제기구, NGO, 학계를 포함(포괄성 최대)
비용조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원국들의 비용분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입회원국의 분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UN에서 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원의 비용부담에 대한 의무 없음
사무국 존재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설 사무국이 의사일정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력한 상설사무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독립된 사무국 (UN으로부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무국이 존재 안함(Virtual 조직) 개별 작업반 활동
대표적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쟁위원회(COMP) 모범관행을 검토하는 라운드테이블 개최 OECD 권고안 채택 글로벌경쟁포럼(GFC) 발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역경쟁작업반(WGTCP) 활동 다자간 규범수립을 위한 WTO/UNCTAD 공동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The Set”제정·권고 경쟁법, 정책에 관한 정부간 전문가회의 모델법(Model Law) 제정작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범관행 도출 경쟁정책 집행경험 공유 경쟁주창기능 제고
결과물의 구속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채택된 권고-구속력 없으나 사실상 이행요구(3년 이내에 권고이행실적 보고의무, 회원국간 압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속력 있음 분쟁발생시 분쟁해결절차가 존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작성된 권고안에 법적 구속력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속력은 없으나 경쟁정책의 절차적·실체적 수렴에 영향력 발휘

자료: 김정해 외(2005), 『경쟁정책 국제규범화의 동태적 구조와 전개과정』, 한국행정학회.

선진국의 경우 대체로 경쟁정책이 잘 발달되어 있으며 선진국간의 경쟁정책 관련 분쟁은 양자협정이나 지역협정으로 해소될 수 있다. 그러나 중진국의 경우에는 양자 협정 및 지역협정이 초기단계에 있으며 경쟁법의 국제적

집행을 위해서는 선진국들의 협력이 필요하다.

경쟁정책과 관련된 통상장벽의 일반적인 유형은 인프라, 공공서비스, 해운·수송 분야에서 국내사업자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규제를 부과하는 것과 교역국 기업에게 경쟁법을 역외 적용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경쟁법의 역외적용이란, 외국기업이 외국에서 하는 반경쟁적 행위라 하더라도 그 영향이 자국 내 소비자에게 영향이 있을 경우, 자국의 경쟁법을 적용하여 처벌하는 원칙을 말한다. 전자는 주로 반경쟁행위에 대한 관련 법·제도가 미비한 개도국이 취하는 형태이다. 후자의 경우는 EU와 미국 등 선진국이 주로 적용하는 유형으로, 미국은 양자협력 협정 체결을 통해 점차로 역외적용에 대한 협력을 확대해가고 있다.

미국은 경쟁법의 역외적용을 강화하여, 외국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 경쟁당국(법무부의 독점금지국과 연방거래위원회)이 역외적용에 있어서 가장 중점적으로 감시·처벌하는 것은 국제 카르텔이며 감시·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는 주로 외국 기업 간에 담합을 하여 가격을 인상·고정시키거나, 시장·고객의 분할, 생산량의 할당, 담합의 이행 상황의 정정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들이다. 미국 법무부 독점금지국은 최근 수년간 시장경제의 근간인 가격 메카니즘을 훼손하는 가격담합과 입찰담합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해오고 있으며 이를 위해 2004.6월부터 개정 셔만법(Sherman Act)인 「반독점 형사사건처벌 강화법」(Anti-trust Criminal Penalty Enforcement & Reform Act of 2004)을 시행, 형사벌금을 법인 1억 달러(종전의 10배), 개인 백만 달러(종전 35만 달러)로 증액하고 개인에 대한 징역 상한도 10년(종전 3년)으로 대폭 강화했다. 특히, 카르텔 벌금 부과와 관련해서는 상기의 개정 셔만법 이외에 별개 법률인 「벌금증강법」(Alternative Fine Statute: 18 USC Section 3571)에 의해 카르텔로 인해 얻은 부당이득의 2배 혹은 카르텔로 인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은 손해액의 2배의 금액 중 큰 금액까지 벌금을 증액할 수 있다. 미 법무부의 독점금지국은 카르텔 처벌 시 「벌금증강법」을 자주 활용하고 있다. 또한, 2006.3월에 테러 방지법(Patriot Act 113조)을 개정하여 반독점법 위



반사건 조사 시 경쟁당국이 비밀리에 기업과 임직원의 유선통화, 구두대화 및 전자통신 등에 관한 내용을 감청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국의 경쟁법 역외적용으로 우리기업이 처벌받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데 96년 라이선 가격 담합으로 2개 기업이 약 1백5십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았고 2001년에는 핵산 조미료 가격 담합으로 2개 기업이 3백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또한, 1999.4월부터 2002.6.15일 기간 중 국제반도체 DRAM 가격담합을 이유로 삼성전자에 3억 달러, 하이닉스에 1억8천5백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 함과 아울러 삼성전자 및 하이닉스 간부 각각 4명에 대해 5개월에서 8개월의 징역형을 부과하는 등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도 이루어지고 있다. 2007.8 월에는 국제선 승객 및 화물 항공요금 담합과 관련, 대한항공에 대해 3억 달러의 형사벌금을 부과하기도 하였다. 또한, 2008.11월에는 TFT-LCD 국제가격 카르텔에 연루되어 우리나라의 LG Display 사가 미 법무부로부터 4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았는데 동 금액은 미 법무부가 카르텔로 인해 부과한 금액 중 두 번째로 큰 금액이다. 2009.5월에는 아시아나 항공이 국제 항공화물 운송료 가격담합으로 5천만 달러를 제재 받은 바도 있다. 2011.3 월에는 삼성SDI가 CDT(컴퓨터 컬러모니터용 브라운관) 담합으로 3,200만 달러의 벌금을 지불하기로 법무부와 유죄 협상을 마쳤다. 미국 경쟁당국은 카르텔 억지력을 높이기 위해 벌금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카르텔에 직접 가담한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도 병행하고 있으므로 기업들은 단기적인 이윤추구에 급급한 나머지 카르텔 유혹에 빠져 회사는 물론 개인이 큰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로,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술력 있고 평판이 좋은 우리 기업이 카르텔 가담으로 인해 더 이상 고액의 과징금을 물지도 않고 한국기업의 이미지도 실추되지 않도록 미국 현지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카르텔 예방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또한, 미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는 2010.8월 기업결합심사지침을 개정하였다. 개정된 기업결합 심사지침은 1992년 이후 대폭 개정하는 것으로서

그동안 변화된 경제적·법적 환경 변화 및 경쟁당국들이 실제로 하고 있는 기업결합 심사업무를 지침에 반영토록 하여 기업결합 업무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미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심사제도와 관련하여 주의할 점은 Hart-Scott-Rodino 법에 의해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결합은 기업결합 개시 이전에 반드시 미 법무부나 연방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다. 신고대상이 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결합이라 함은 자산 혹은 의결권 있는 주식 규모 기준으로 2억 달러 이상의 큰 거래의 기업결합은 반드시 신고대상이 되고 이보다 작은 거래이더라도 기업결합 취득자 및 피취득자가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신고대상이 된다. 신고대상 기업결합규모는 미국의 GDP에 연동되어 매년 고시되므로 대형 기업결합을 계획하는 사업자는 미 경쟁당국에 사전에 신고 대상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기업결합 사전신고 후에는 기업결합 심사가 완료될 때까지 대기하여야 한다. 기업결합 사전신고를 하지 않거나 대기기간동안 기업결합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일일 최고 16천 달러의 벌금을 물게 된다. 기업결합 시에는 심사료를 미 경쟁당국에 지불해야 하는데 심사료 수준은 기업결합 규모에 따라 결정되며 최소금액은 45천 달러이다.

전반적으로 미 경쟁당국은 적극적으로 경쟁법을 집행하는 분위기이므로 미국시장에 상품 및 용역을 수출하는 기업들은 미 경쟁법에 대하여 더욱 관심을 갖고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한·미 FTA를 통하여 양국은 경쟁분야 협력을 증진키로 하고 경쟁법 관련 집행 과정에서 양국 기업에게 적법 절차를 보장하고 상대국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법 집행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EU의 경쟁정책의 목표는 시장에서 경쟁을 보호함으로써 시장이 소비자, 기업 및 사회전체에 더 많은 이익을 가져다주도록 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경제전체에서 생산성 증대에 기여함으로써 유럽의 지속가능한 성장, 일자리창출 및 경쟁력 강화를 서포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EU경쟁당국은 카르텔 및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제재, 기업결합



심사 등 전통적 의미의 경쟁법집행 활동뿐만 아니라 경제위기하에서 EU회원국의 국가보조금을 심사하고, 시장감시(market monitoring)와 업종분석(sector inquiries) 활동을 통해 시장개선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법령 제·개정 등을 통해 끊임없이 정책개발과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2012년 EU경쟁당국은 2011년과 같이 EU의 경제위기 극복노력에 적극적으로 기여한다는 기조하에 모든 법집행과 정책 이니셔티브를 취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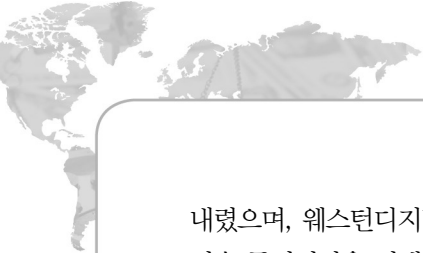
우선, EU경쟁당국은 금융·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국가보조금 심사권한을 활용하여 회원국 정부에 금융 및 실물경제 지원 가이드라인 제시 및 금융기관 구조조정 방안을 심사·승인하면서 위기극복의 핵심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바, 2012년에도 경쟁당국의 활동 가운데 국가보조금 심사부분이 업무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EU경쟁당국은 회원국의 국가보조금 지급 억제(less aid by the Member States), 양질의 국가보조금 지급 유도(Better aid by the Member States), EU조약과 양립하지 않는 보조금 방지 및 회수(Prevention and recovery of incompatible aid)라는 3가지 세부 추진 목표를 설정하고 보조금 심사와 관련 규정정비를 시도하였다. 우선 2005년 집행위가 설정한 국가보조금의 감축과 양질화를 위한 액션 플랜에 의거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보조금의 전반적인 수준을 줄여 국가간 보조금경쟁을 억제하고, 국가보조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도 단일시장 화해, 고용, 환경보호, R&D와 혁신촉진, 중소기업 발전 등 분야에서 경쟁력, 고용, 성장과 전체사회복지 기여 등 유럽공동체 이익과 부합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국가보조금이 역내 교역에 인위적 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예방 하되, 이미 지급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회원국이 회수조치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유럽의 경제위기가 지속됨에 따라 국가보조금 분야에서 상당한 법령 제·개정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바, EU는 경제위기후 금융기관 구조 조정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정, 지속성장을 위한 배출거래시스템 구축관련 가이드라인 제정, 단기수출신용보험에 관한 지침, 참고금리 및 보증에 관한 지침 개정, R&D 관련 규정 보완, 광대역 통신망 및 영화산업 지원관련 가이드라인 개정, 일정 국가보조금에 대한 간이절차 개정, 해상 및 항공분야 통

신 관련 보조금규정 개정작업과 함께 다양한 유형의 가이드라인과 지침들을 통합하는 작업도 추진하고 있다.

둘째, 카르텔은 EU의 경제위기와 상관없이 모든 업종을 불문하고 2012년에도 EU집행위 최우선순위 업무로 설정하고 있으며, EU경쟁당국은 리니언시제도의 효율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리니언시 뿐만 아니라 직권조사를 통한 범위반행위 적발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EU는 카르텔의 신속한 처리와 사건 패소위험을 축소하기 위해 카르텔 합의처리제도(settlement tool) 활용을 증대시켜나가고 있다. EU는 2011년 중 4건의 카르텔(바나나, 가정용 세제, CRT유리, 냉매압축기)을 적발하여 총 6.14억 유로(약 9,0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고, 2012년에도 10월말 현재까지 3건의 카르텔(물관리, 화물운송, 창호)을 적발하여 총 4억 유로(약 6천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고 2012년 말에도 CRT카르텔에 대한 상당한 제재를 가할 것이 예상되고 있다. 카르텔외의 수평적·수직적 합의행위 등과 관련하여, EU는 교통, 에너지 등 네트워크산업과 함께 IT, 통신 분야에 대해 집중 감시하고 있다. 2012년 현재 EU경쟁당국은 전자책(e-book)시장, 전자지급 결제 표준화 과정,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통신시장, 항공사간 코드쉐어링 협정, 제약산업에서의 특허관련 합의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셋째,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규제와 관련하여, EU경쟁당국은 디지털경제 관련 혁신업종, 금융업종, 에너지 및 수송 등 네트워크 업종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2012년 현재에도 신용디폴트스왑시장 관련 2건(16개 투자은행 및 9개 은행과 청산거래소)을 조사 중이며, 구글의 온라인 서치시장에의 남용여부 그리고 삼성전자와 모토로라의 표준특허 관련 남용행위 여부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넷째, 기업결합 규율과 관련하여 EU경쟁당국은 경쟁제한성이 미미한 기업결합은 신속히 처리하는 한편 경쟁제한우려가 큰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동의의결 등을 활용하여 경쟁이 원활히 작동되도록 하고 특히 IT, 미디어, 통신, 금융업종에서 기업구조조정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2011년 EU경쟁당국은 1건의 기업결합(그리스 항공사간 합병)에 대해 불허조치를



내렸으며, 웨스턴디지털의 히타치 HDD부문 인수 건, 인텔의 맥아피 합병 건은 동의의결을 전제로 조건부 승인결정을 내렸으며 삼성전자의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매각관련 기업결합은 승인조치를 내린 바 있다. 2012년에도 독일증권거래소와 미국 뉴욕증권거래소간 기업결합 건에 대해 불허결정을 내리는 등 경쟁제한 우려가 큰 사안에는 엄격하게 대처하고 있다.

다섯째, EU경쟁당국은 유럽기능조약(TFEU) 제106조에 의거 개별회원국이 EU경쟁법과 양립하지 않는 입법조치에 대해 개입할 수 있으며, 개별국으로부터 사회공익목적을 위해 배타적 권리를 인정받은 국영기업에 대해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일례로 2011년 EU경쟁당국은 2008년 PPC 사에게 갈탄채취의 독점권을 부여한 그리스정부의 행위가 EU경쟁법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정밀조사를 벌였고 그리스정부는 결국 입찰을 통해 4개 광산의 접근을 허용한 바 있다. 회원국의 반경쟁적 관행에 대한 통제와 관련하여 EU는 2012년 중 에너지, 미디어, 우편 등 민영화가 추진 중이거나 최근 민영화가 이루어진 업종 등을 대상으로 정밀 감시를 벌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책 및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EU는 무엇보다 경쟁법 위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유럽에서 활발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제도마련을 추진중에 있어 우리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EU는 그간 지속적으로 의견수렴을 진행해온 집단손해배상청구제도(Collective redress) 도입안을 마련하여 입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EU경쟁당국은 변화하는 환경에 맞게 관련 법령들을 지속적으로 정비해나가고 있는 바, 2012년에도 ‘기술이전합의에 관한 일괄적용면제규정’ 및 안전지대에 관한 지침(de minimis notice)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 2011년 EU경쟁당국은 절차규칙 개정에 초점을 맞춰 사건처리절차에 관한 모범관행, 청문관의 임무에 관한 규정 개정을 완료하였고, 기업결합심사시 회원국간 협력에 관한 모범관행안도 채택한 바 있다. 아울러 EU는 유럽경쟁당국네트워크(ECN) 소속 개별회원국 경쟁당국과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는 한편, 양자협력 및 국제포럼(ICN, OECD, UNCTAD 등)을 통해 경쟁법 집합의 국제공조 및 경쟁정책의 국제적 수렴촉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1년 EU경쟁당국은 미

국-EU간 기업결합심사에 관한 협력지침을 개정하였고, 러시아경쟁당국과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2012년에는 스위스, 중국과도 경쟁법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아울러 향후 EU가입이 예상되는 크로아티아, 터키, 아이슬란드 등 국가와 효율적 경쟁법 집행기구 구축, 입법체계 정비 등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EU는 미국과 더불어 전 세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경쟁법의 역외적용을 통해 외국사업자들에 제재를 가하고 있다. 역외적용(extraterritorial jurisdiction)이란 일국가의 영역 밖에서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 국내 자국법을 적용하여 규제하는 것을 의미하는 데, 과거에는 이러한 역외적용에 대해 주권침해 논란과 함께 강대국이 자국의 시장과 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쟁법을 이용한다는 비판적 시각도 있었으나, 최근에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법률상 명시적으로 또는 판례규범을 통해 외국사업자의 국제카르텔이나 기업결합에 대해 자국 경쟁법을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제 경쟁법의 역외적용은 확립된 국제규범(settled law)으로서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자리 잡았다고 볼 수 있다. EU경쟁당국은 유럽의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강력하게 경쟁법을 집행하고 있는 바, 향후 유럽기업은 물론 우리나라와 세계 여러 나라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와 제재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스위스는 1996.7월 발효한 「신경쟁법(Cartel Act)」에 의거하여 경쟁적 합의, 시장지배자적 기업 및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고 있으나 카르텔을 완전히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 강성카르텔은 완전 금지하고 있으나 경쟁의 저해정도가 미약하고 경제적 효율을 위한 연성카르텔은 인정하고 있으며 재판매가격도 인정하고 있다. 시장지배력의 남용(Trade Boycotts, 가격차별, 불공정가격이나 조건부과, 생산제약 등)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으며 인수합병(M&A)은 경쟁위원회(Competition commission)에 사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스위스 의회는 2002.9.27일 경쟁위원회에 보다 강력한 권한을 주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카르텔을 형성하는 독과점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스위스 정부의 카르텔 규제는 상기 Cartel Act



를 통해 EU의 독과점 규제정책과 전반적인 조화를 모색해 왔다. 이와 함께 또 다른 독과점 규제 법률인 국내시장 규율법(Internal Market Act)을 통해 보다 활발한 기업 간 경쟁을 유도하면서 아울러 지방 차원의 독과점 근절도 병행하고 있다.

스웨덴의 경쟁정책은 1993년 제정된 경쟁법(Competition Act)을 근거로 기업들의 반경쟁적 협력(anti-competitive cooperation) 및 지배적 지위 악용(abuse of dominant position)을 금지하는 한편, 경제·통상행위의 집중(concentration between undertakings)을 규율한다. 원활히 작동하는 시장을 통한 복지(welfare through well-functioning markets)를 모토로 하는 스웨덴 경쟁청(Konkurrensverket, Swedish Competition Authority)은 ①현장 실사(on-site inspection) 등을 통한 조사, ②위법 여부 결정 및 벌금부과 권한을 행사하며 경쟁청이 요청하거나, 직권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스톡홀름시 법원이 반경쟁 행위의 중지를 명령하거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독일은 EU 기업과 비 EU 기업 간에 EU 관련 협정 범위 내에서 일정한 차별(예: 비자발급, 조세 ID 발급 등 관련)을 두고 있으나 원칙적으로 내외국 기업 모두에게 동일한 경쟁조건을 부여하고 있다. 독일 대외경제법상 국가 안보 등의 사유로 인한 외국인 투자제한 규정은 있으나 유통분야를 포함 모든 산업분야에서 내외국인간 동일한 경쟁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또한, 독일 정부는 반독점 관련 규정을 내외국인 기업에 모두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다만, 외국인 기업이 독일 기업을 인수하여 시장점유율이 50%를 넘을 경우 독과점 위반 여부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 기업이 보험, 은행, 전당포, 경매, 도박, 부동산 중개 등의 사업을 하려면 사전 투자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노르웨이는 반독점법인 가격통제법(1993년 제정) 및 경쟁법(1993년 제정)에 의거 정부는 생산, 가격, 분배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제한적인 관행을 규제할 권한이 있다. 기업합병(특히, 시장점유율이 40% 이상이 되는 경우) 경쟁청(Competition Authority)이 3개월 내 개입여부를 결정하

고 6개월 내 최종판정을 한다. 비농업분야에서는 EU의 경쟁정책 지침을 수용, 적용하고 있으나 농업·수산업·임업분야에서는 정부 보호조치(예외적용)로 인하여 다소 미진한 편이다. 노르웨이는 한·EFTA FTA에 따라 노르웨이 내 반경쟁적 기업 활동이 존재할 경우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와 정부 간 협의를 갖게 된다.

중국의 경쟁법은 반독점법, 반부정당경쟁법 및 가격법의 일부내용(가격독점행위)을 포함하고 있으며, 유형별로는 독점협약(카르텔), 가격독점행위,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이하 “시지남용행위”라 함), 불공정거래행위, 행정독점행위, 경영자집중(기업결합)을 모두 규율하고 있다.

이를 집행하는 기구는 크게 반독점위원회와 반독점법집행기구의 2원체제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반독점위원회는 우리의 공정거래위원회와는 그 기능이나 성격이 다른 비 의결기구로서 주로 경쟁정책의 입안이나 반독점 지침의 제정 및 부처간 집행업무의 협조·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중국의 경쟁법이 규율하고 있는 구체적인 위반유형 및 그 법률책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독점협약(카르텔)란 “경쟁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협의·결정 또는 기타 협동행위”를 의미하는데, 이는 우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수평적 독점협약’과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하는 ‘수직적 독점협약’으로 구분된다. 그 중 ‘수평적 독점협약’은 경쟁관계에 있는 경영자간의 독점협약으로서 가격담합, 수량담합, 시장분할, 새로운 기술이나 설비의 제한, 공동의 거래거절 등을 의미하며, ‘수직적 독점협약’은 재판매하는 상품의 가격을 고정하는 행위와 최저가격을 한정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한편, 독점협약을 한 경우라도 경영자가 이를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가격독점행위의 경우 첫 번째 신고자는 면제되고, 2번째 신고자는 50% 이상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기타 신고자는 50% 이하의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가격법이 적용되는 ‘가격독점행위’로서는 가격담합, 부당염매, 가격선동, 기만행위, 가격차별, 변형적인 가격조정, 폭리도모,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이 있다.

시장지배적경영자(우리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는 그 지위를 남용하



여 경쟁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는데, 그 구체적인 유형으로는 불공정한 고가판매나 저가구매행위, 약탈적 가격설정행위(즉, 부당염매), 거래거절행위, 거래제한행위, 끼워팔기 또는 구속조건부거래행위, 차별대우 등이 있다. 행정기관이나 공공조직 또한 그 권력을 남용하여 경쟁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행위(즉, 행정독점행위)를 할 수 없는데, 그 세부유형으로는 구입 강제 또는 경영활동제한행위, 상품의 지역간 자유로운 유통을 방해하는 행위(예, 외지상품에 대한 차별취급이나 진입제한행위), 외지 경영자의 입찰활동 참가제한 등이 있다. 그리고 반부정당경쟁법이 적용되는 ‘불공정거래행위’에는 부당한 표시·광고행위(허위표시, 허위홍보, 상업비방), 상업적 뇌물행위, 상업비밀 침해행위, 부당한 염매행위, 끼워팔기 또는 구속조건부거래행위, 부당한 경품판매행위, 입찰담합행위가 있다.

기업결합의 경우, 사전신고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경영자가 합병, 주식·자산취득이나 계약 등의 방식을 통하여 다른 경영자에 대한 지배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기업결합에 참여한 모든 경영자의 전년도 전 세계 매출액 합계가 100억원(약 1조 7,000억원) 또는 중국 내의 매출액 합계가 20억원(약 3,400억원)을 초과하고, 그 중 최소 2개 경영자의 전년도 중국 내의 매출액이 각각 4억원(약 6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전상담(商談) 등을 통해 법정 서류를 갖추어 심사를 받아야 한다.

기업결합심사는 대부분이 경쟁제한심사(즉, 반독점심사)만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는 기초심사(初步審査; 30일간)와 중점심사(進一步審査; 90일간이며, 60일 연장 가능)의 2단계로 진행된다. 다만, 외국자본이 중국기업을 인수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기업결합에 참여한 경우로서 국가안전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국가안전심사(약 120일정도가 소요)를 받아야 한다.

경쟁당국은 압류, 은행계좌 조사 등 강력한 조사권한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반사업자에 대한 위법소득 몰수 및 과징금 병과 등 강력한 집행권한을 함께 보유하고 있다. 위반유형 중 독점협약이나 시지남용행위를 한 경영자에 대하여는 위법행위의 중지명령, 위법한 소득의 몰수조치 및 과징금 부과조치(전년도 매출액의 1%~10%)를 할 수 있으며, 독점협약을 실행치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한편, 경쟁 제한적인 경영자집중(기업결합)에 대해서는 그 행위의 중지, 기한 내 주식이나 자산의 처분 또는 영업의 양도, 5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불공정거래행위의 경우, 위법행위의 중지, 위법소득의 몰수, 과징금 부과(위법소득의 1~3배),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영업취소 등의 처분이 가능하며, 그 중 입찰담합의 경우에는 낙찰무효처리 등의 추가조치를 할 수 있다. 한편, 가격독점행위의 경우에는 시정명령 및 위법소득의 몰수조치, 위법소득 5배 이하의 과징금 병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휴업명령 또는 영업취소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아울러 위반사업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과 일부 불공정거래행위(상업적 뇌물행위, 입찰담합 등)에 대한 형사적 제재도 가능하다.

캄보디아는 국내자본이 워낙 미약하여 내국기업에 차별적으로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는 분야는 거의 없다. 일례로 캄보디아를 운행하는 항공사의 대부분이 외국자본이며 심지어 공항까지 외국자본에 의해 건립되어 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발전사업도 대부분 민간기업의 투자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캄보디아 정부는 가능한 송배전 사업은 전력공사(EDC)가 관할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캄보디아의 외국 투자진출 사례는 전무하며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을 가로막는 규정도 존재하지 않고 있다.

인도는 독점 및 제한적 거래 관행법(Monopolies and Restrictive Trade Practices Act, 1986: MRTP Act)에 따라 1970년 설립된 준사법기관인 MRTP 위원회가 등록된 소비자 및 기업 단체 또는 개인의 신청을 받아 제한적 거래관행을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증권거래위원회(SEBI: Securities Exchange Board of India)가 투자자에게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고 자본시장을 발전시킬 근간을 제공하고 있다. MRTP Act 시행과정에서 동 법이 제한적 거래관행의 정의가 분명치 않고 공기업, 은행, 보험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 등 적용범위가 너무 좁아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



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인도정부는 새로이 경쟁법(Competition Act, 2002)을 마련하고 경쟁위원회(Competition Commission of India)를 설치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이 비사법기관인 경쟁위원회에 판결 권한을 부여하는 것 등 동 법의 일부 내용이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동 위원회의 기능을 정지시킴에 따라 현재는 홍보 등 매우 제한적인 역할만을 수행하고 있다.

캐나다의 「경쟁법(Competition Act)」은 자유·공정거래를 촉진시키고 있으며 사기, 가격차별, 기만광고 등을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합병, 거래 제한 행위 등은 非범죄 행위로 통제하고 있다. 합병은 합병으로 인한 효과가 경쟁제한으로 인한 역효과를 상쇄할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다. 개인이나 기업의 우월적 지위(Dominant Position)를 이용한 반경쟁적인 행위를 규제하고 있으며 생산 및 배급 상의 경쟁을 제한하는 계약을 불법화하고 있다. 경쟁법(Competition Act)의 적용범위, 일관성에 대한 논란으로 2001.8월 경쟁제한 행위, 특히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사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발효하였다. 동 가이드라인은 개별기업의 시장점유율이 35% 이상인 경우, 또는 상위기업군의 시장점유율이 60% 이상인 경우에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간주하고 있다.

캐나다 경쟁당국은 2010.3월 카르텔에 대한 법 집행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경쟁법을 개정하여 적극 집행하고 있고, 국제경쟁네트워크(ICN; International Competition Network) 운영그룹 멤버이자 실질적인 사무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캐나다와 2011.6.2일 제1차 ‘한-캐나다 경쟁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후속 조 실무 회의로서 올해 중에 ‘한-캐나다 카르텔 양자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본 양자협의회에서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위원회와 캐나다 경쟁당국(Competition Bureau)은 양국의 카르텔 관련 제도 및 법집행 동향과 법집행 시 협력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러시아는 「상품시장에서의 독점적 활동제한 및 경쟁에 관한 법」에 따라 상품시장에서의 사업자의 독점적 활동 및 불공정 경쟁을 규제하고 있다. 연방 반독점청(Federal Antimonopoly Service)이 독점적 행위 및 시장에서의

불공정 경쟁을 규제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금융시장의 독점적 행위에 대하여는 중앙은행(은행시장), 금융시장청(증권시장) 및 재무부(보험시장)가 규제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일부 시장(파이프라인을 통한 석유 및 석유제품과 천연가스 수송, 전력공급, 철도수송, 운송터미널, 항구 및 공항 서비스, 통신 및 우편서비스)에 대해서는 「자연독점(natural monopoly)에 관한 법」(1995.7월 제정)에 의거, 자연독점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2006.7.27일 채택된 「러시아연방 경쟁보호법」이 2006.10.26일부터 효력이 발생되었다.

「상품시장에서의 독점적 활동제한 및 경쟁에 관한 법」은 원칙적으로 러시아 영토 내에서만 적용되지만 러시아 영토 밖에서 이루어진 활동 및 협정 등이 러시아 영토내 상품시장에 대한 경쟁 제한 또는 기타 부정적 효과를 야기한 경우 동법을 적용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은 2001년 채택된 ‘경쟁과 독점 방지에 관한 법’은 상품과 서비스 시장에서 독점을 규제하고 있으며 ‘State Register of Dominant Participants’, ‘자원독점 규제 및 경쟁보호위원회’ 등이 독점규제를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단일 품목의 경우 두 개의 사업자가 5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금지하고 있으며 3개사의 시장점유율이 70%를 넘지 않도록 규제하고 있다. 주요 감시 품목으로는 석탄, 가스, 항공·디젤유, 석유, 정유, 곡물 등이다.

카자흐스탄에는 공정경쟁 보호에 관한 법이 존재하고 있지만 대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사업 분야에는 신규 사업자의 진출이 사실상 어렵다. 또한, 국가 이익 및 국가 안전과 관련하여 외국기업의 사업 활동도 제한돼 있다. ‘상업 규제에 관한 법’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정부는 특정 품목의 수출입에 대해 독점권을 가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에너지 분야(전기, 물, 열 공급), 철도, 해상 운송 및 통신 분야에서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운영하고 있다.

카타르 정부는 독립 이후 석유 및 가스의 생산과 정제, 석유화학 산업 및 통신 등 핵심 경제 부문을 통제해왔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카타르 정부는 특정 사업부문 개발의 소유권과 책임을 개인 투자자들에게 이전하는 등 투명 한 정책을 채택해 오고 있다. 1995.7.3일 도하증권시장(주식거래소)의



설립을 승인하는 법령이 발표되었다. 1997.5월 공식 영업을 시작한 주식거래소는 자국 공기업에 보다 적극적인 투자를 장려하면서 민영화를 촉진하였다. 2003.5월, 카타르 정부는 Industries Qatar Q.S.C. 주식 30%의 초기 공모를 완료하였다. Q.S.C.는 새로 설립한 지주회사로서 석유화학, 비료 및 철강 산업분야 회사들의 대주주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카타르 정부는 전기 및 수도, 통신, 석유 제품의 유통을 포함한 상당수의 핵심 부문들도 민영화하였다. 다른 많은 부문들도 점차 민영화할 계획이다. 카타르는 국가전체 의료 서비스를 개선하고 국립병원 및 종합병원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보건 부문 민간 투자에 대한 장려금도 도입하였다. 통신부문의 Qatar Telecom과 Woqod의 석유제품, 석유, 디젤, LPG, 역청, 중유 및 항공연료 독점 공급 등 독점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문도 있다. 카타르 정부의 장기 전략은 외국 기업이 자유 무역을 할 수 있도록 카타르 국내 시장을 개방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사업 관행과 규정은 아직도 외국 기업의 국내 시장 진입을 제한하고 있다.

우루과이는 독과점을 방지하고 경쟁을 장려하기 위해 2007.7월에 법률 18159가 제정되었는데, 동 법률은 기업 합병 후 시장 점유율이 50%를 상회할 경우 경제재정부에 사전 통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루과이 정부는 다수 공공부문 사업에 관여하고 있는 바, 전기, 유선 전화, 석유, 수도 부문은 정부 독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철도 및 항만 운영 사업도 정부가 법적으로 책임을 진다. 그러나 특정 농산물 및 천연 가스를 제외하고 정부가 가격책정에 직접 개입하는 경우는 거의 알려지지 않고 있다.

사우디 시장은 중동의 거점시장으로서 거의 전 세계 제품이 진출해 있으므로 제품 간 경쟁이 매우 심한 편이다. 또한, 이슬람 종주국인 주재국 특성 때문에 사우디의 기후, 전통, 취향 등에 맞는 제품이 판매에 성공할 수 있다. 사우디는 각 분야에 자국인 우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공사 수주, 세제, 상사 분쟁 등에 있어서 사우디인과 외국인의 차별이 보이지 않게 존재하고 있다. 행정 처리에 있어서 담당자가 자의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고 그 과정이 불투명하여 공사 수주, 투자 등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집트는 금융, 보험, 관광, 해운, 교통, 통신, 에너지 등 주요 국가산업이 여전히 국영업체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나 1991년부터 2차에 걸쳐 이행되어 온 IMF 개혁프로그램에 따라 민영화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특히 2004.7월에 출범한 현 내각은 그동안 민영화에서 보류되어 왔던 은행, 통신 보험 회사를 대거 매각대상에 올려놓고 있으며 주요 국영기업들의 지분 매각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어 공기업 민영화를 통해 많은 외국인 투자유치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집트 정부는 ‘경쟁 보호 및 독점 금지법’ 및 동 시행령을 제정하여 2005.8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다만, 2011년 들어 이집트 행정법원은 그간 민영화되었던 3개회사(Shebeen Al-Koum Spinning사, Nasr Steam Boiler사 및 Tanta Flax & Oil사)에 대해 민영화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이유로 국유화 조치 판결을 내렸고, 현 과도정부는 향후 민영화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당분간 민영화사업이 추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요르단은 중동국가에서는 최초로 2002년 「Competition Law(No.33)」를 도입하는 등 경제적 효율성 제고와 중소기업, 소비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과거 요르단 국영통신회사 등 대부분의 국영기업들에 독과점적인 지위가 보장되어 타 기업들의 진입장벽이 되어 왔으나 요르단 국영통신회사의 경우 2005년, 여타 국영기업들의 경우도 최대 2010년까지 민영화를 통해 독과점적 지위 상실 예정이다. 현재 국영통신회사 및 전력 송신회사 민영화 등 총 16개의 민영화 작업이 진행 중이다.

쿠웨이트 내에서 외국 기업이 물품 공급, 용역, 건설 공사 수주 등을 위해서는 반드시 현지기업을 에이전트로 두어야 하며 에이전트 계약 하에 발주처 등에 등록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다. 에이전트들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많은 커미션을 요구하거나 협력업체 추천 등을 하는 사례가 있으며 자칫 불성실한 에이전트와 관계가 이루어 질 경우 오히려 수주활동 등에 장애가 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현지 진출 외국기업과 에이전트 간에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도 있다. 정부 부처 및 국영기업(군, 석유 부문 모두 포함) 프로젝트 수행 시 쿠웨이트 국무회의에서 정한 일정한 비율 이상의 쿠웨이



트 국적자 고용 의무가 있다.

과테말라는 자유 시장 경제체제 도입에 꾸준한 노력을 기하고 있으며 통신, 철도, 전력, 수도 등 독과점 분야의 시장개방을 추진하여 온 결과 공공부문은 대부분 민영화가 이루어진 상태이다. 특히 과테말라 헌법 제130조에 의하면 독점과 특혜를 금지하는 한편, 과테말라내의 법인이 특정 분야의 생산이나 상업, 유통 등을 독점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으며 시장의 자유경쟁을 저해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는 금지된다. 현재까지 독점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분야는 맥주, 알코올, 시멘트, 일부 수산물 수출 분야, TV 방송 등이며 가솔린, 설탕, 바나나, 프로판가스, 담배 등은 과점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공공부문으로는 공항, 항구, 원유 및 가스탐사 분야 등이 민영화되지 않은 부분이다

베네수엘라는 1992.1월에 제정된 ‘자유경쟁 촉진 및 보호법’에 따라 자유경쟁 촉진 및 보호 감독위원회(일명 Pro-competencia)를 설치하여 기업의 불공정 거래 및 가격 담합, 독과점 등의 문제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Pro-competencia는 직권이나 신청에 의해 반경쟁 행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나 2007년 이후 차베스 정부가 에너지, 철강, 시멘트 산업에 대한 국유화 조치를 단행하는 한편, 은행, 식품 유통, 주유소 운영, 민간기업과의 합작회사 설립 등 사실상 모든 경제활동에의 정부 참여 확대를 통한 사회주의 정책을 강력히 추진함에 따라 활동 영역이 크게 축소되고 있다.

남아공은 인종차별정책 기간 동안은 경제제재로 인해 외부와의 교역에 제한을 받았으므로 경쟁이 없는 국내시장에서 자연스레 독점기업이 많이 생겨났다. 그러나 인종차별정책 철폐 이후 외국 기업의 남아공 진출, 흑인기업 출현 등으로 남아공에도 경쟁 체제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에너지, 물류, 교통, 통신부문은 아직도 사실상 독점시장으로 남아있다. 남아공 경쟁정책위원회가 독과점 기업의 반경쟁 행위에 대한 조사 및 처벌 노력을 강화하고는 있으나 아직도 산업 전반의 경쟁 정도는 아주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이것이 남아공의 높은 물가상승률의 원인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요약문

관세

GATT/WTO 출범 이후 우루과이라운드(UR)까지 수차례에 걸친 다자협상을 통해 세계적으로 관세율은 낮아졌다. 공산품 관세의 경우, UR을 통해 선진국은 평균 40%, 개도국은 평균 37% 인하되었다. 그러나 관세는 WTO 체제하에서 유일하게 허용되는 수입제한 수단으로 여전히 통상정책의 중요한 이슈로 남아있다.

DDA 협상은 2008년 이후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양자협상을 통해 시장진출을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2004년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EFTA, 싱가포르, ASEAN, 인도, EU, 페루, 미국, 터키와의 FTA가 발효 중에 있으며 콜롬비아와의 FTA는 2013.2월 정식서명되었다. 현재는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과 협상중인 바 우리나라의 관세장벽 완화를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관세는 일반적으로 과세의 기회, 목적, 방법, 성격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과세의 기회에 따라서는 수입세, 수출세, 통과세로 나뉘고 목적에 따라 재정관세, 보호관세, 방법에 따라 증가세, 종량세, 혼합세, 성격에 따라 일반관세, 특수관세로 나뉜다. 일반관세는 국정관세, 협정관세를 말하고 특수관세에는 특혜관세,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할당관세 등이 포함된다. 국제무역협상에서 주로 논의되는 관세는 수입관세로 이는 국회를 통과한 관세율표(tariff schedule)에 의하여 부과되며 동 관세율표는 국제품목분류기준인 HS Code에 따르고 있다.

세계적 차원에서 평균관세율은 지역에 관계없이 꾸준히 인하되는 추세인바, 여기에는 다자체제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평가된다. 선진국의 경우 평균



실행관세율은 6% 이하이며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무세품목과 미소관세(2~3% 이하)를 부과하는 품목도 많다. 개도국 역시 관세율이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나 실행세율과 양허세율의 격차가 큰 경우(브라질, 인도)도 발견된다. 우리나라는 평균 실행세율 약 13.3%, 평균 양허세율은 약 16.6%로서 선진국과 개도국의 중간 수준에 위치하고 있다. 품목별로 보면 선진국은 섬유, 의류 등 일부 자국 내 사양산업에 대한 관세율이 비교적 높은 수준이며, 개도국은 운송장비, 전기기계 및 농산물 분야의 관세율이 높다.

수입규제(수입금지, 수입허가, 수입쿼터)

수입규제는 수입금지, 수입허가, 수입쿼터, 기타 일방적 조치 등 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들을 총칭한다.

수입금지는 일반적으로 국가안보, 위생 및 공중보건, 환경보전, 공중도덕, 지적재산권의 보호 등 GATT 협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일부 품목들에 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자국 산업의 보호를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수입금지의 대상품목은 멸종위기의 동식물 및 동식물 제품, 무기류, 마약류,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제조된 물품, 위조상표를 부착한 물품, 완성차, 중고자동차, 중고기계류, 음란물, 위조화폐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온두라스, 인도, 베트남,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이집트 등의 상당수의 개발도상국은 중고자동차와 부품, 중고기계류, 중고 의류 등의 수입을 금지 또는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데, 이는 주로 환경보호의 차원보다는 자국 산업의 보호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방글라데시, 시리아, 알제리, 사우디아라비아, 레바논, 쿠웨이트, 시리아, 아랍에미리트 등 중동 국가들은 종교상 또는 정치상의 이유로 돼지고기 등 육류 수입을 제한하고, 이스라엘산 수입품이나 선박을 이용하여 운송되는 상품 수입과 직접무역을 금지하고 있다.

수입허가는 수입금지의 경우와 유사한 이유로 수입품에 대하여 부과되는 규제이나, 수입금지보다는 저항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기 때문에 보다 광범

위한 품목들에 대해 빈번히 활용되고 있다. 일부 농축산물, 화학 및 화학제품, 의약품 및 화장품, 무기, 폭발물 및 화학, 귀금속 등의 제품 수입 시 일정한 형식과 절차, 검사를 요구하며 수입허가를 받도록 요구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는 자국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취약 산업이나 전략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동기가 크게 작용한다. 최근에는 기존의 수입허가 제도를 한층 더 강화하고 있는 국가들도 있다. 아르헨티나의 경우 2012년 신규 사전수입 신고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입규제제도를 강화하였다. 동 제도 하에서 수입업자는 아르헨티나에 수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 수입주문을 수출업자에게 송부하기 이전에, 수입품의 최종 목적을 기술하는 법적 서약문서를 관련 부처에 제출해야 수입허가가 결정된다. 인도네시아의 경우도 2013.1.1일부터 2015.12.31일까지 식품, 화장품, 신발, 전자제품 등 총 97개 품목에 대한 수입라이선스 발급을 강화하였다.

WTO는 수량제한에 의한 수입규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매우 제한적인 조건에서 심각한 식량부족, 국제수지문제 등의 정당화될 수 있는 정책적 근거 하에서만 일시적으로 예외적인 수량제한을 허용한다. 따라서 이러한 수량제한은 WTO협정과 수출입국간 양자협상을 통하여 대부분 이미 폐지되었거나 점차 폐지되는 추세이다. 수량제한의 대표적인 예였던 섬유류 수입 쿼터제가 2005년도에 폐지됨에 따라 중국으로부터의 섬유류 급증에 따른 국내 산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미국, EU, 남아공, 브라질 등의 국가들은 각자 중국과 양자 협정을 맺어 일부 섬유 품목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수입쿼터를 적용하거나 규제한 바 있다. 일본은 총 17개의 수산물에 대해 수입물량을 직접 규율하는 IQ(Import Quota)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미국, EU, 한국 등의 철폐 요구에도 불구하고 IQ 물량을 늘려주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대만은 그 동안 실시해 왔던 소형자동차에 대한 수입량 제한이 완전히 해제되어 2011년부터 동 품목에 대해 동일한 관세를 적용하게 되었다. 에콰도르는 휴대전화기 수입쿼터를 도입하여, 2012년 휴대전화 수입쿼터로 33개 수입업체에 대해 195만대, 1억 4300만 달러를 배정하였고, 자동차 수입쿼터를 축소하였다. 필리핀은 쌀, 밀, 통조림 생선, 정어리, 오징어, 고등어, 청어, 연어, 통조림우유, 소고기통조림 등의 수입쿼터가 지정되



어 있어, 정부로부터 수입할당을 받은 특정업체만 수입면허를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여러 국가에서 다양한 형태의 수입규제적 성격을 띠고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은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시책 강화의 차원으로 수입제품의 안전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중국은 특정상품에 대한 수입자동등록관리제도, 수입상품분급제도 등의 수입규제제도를 강화하거나 유지하고 있다. 또한 일부 국가에서는 수입 시 일정 금액 이상의 예치금을 의무화하거나 수입품에 높은 세율을 적용해 수입을 규제하기도 한다.

통관절차

과도한 비용을 발생시킬 경우 통관절차는 보이지 않는 무역장벽으로 작용한다. 통관절차상 무역장벽은 항만에서의 적체, 수입통관의 과도한 지연, 비과학적 검사 및 검역 시스템, 세관분류의 임의 변경, 상품이 국경을 통과하는데 따르는 방대하고 복잡한 서류절차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는 무역업자들에게 시간·금전적 비용을 부담시킨다. 통관절차는 관세와는 달리 객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자의적인 운용이 빈번한 분야이며, 정해진 절차와 실제 운영이 큰 차이를 보이기 쉽다.

무역원활화는 선진국과 개도국이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분야로 2004년 DDA협상의 공식의제로 채택되며 DDA 이슈 중 가장 활발히 논의가 이루어진 분야이다. 협상의 의무화 수준, 기술적인 사안 외에 정치적으로 민감한 분야, 개도국 지원 범위 및 이행 기간 등에서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첨예한 대립으로 협상 막판까지 난항을 겪었으나 2013년 말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제9차 WTO 각료회의에서 무역원활화 협정이 타결되는 괄목할 만한 성과가 도출되었다. 2011년과 2013년 OECD 연구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무역원활화 조치가 완전히 이행될 경우 선진국은 10%, 저소득국가는 14.5%, 중하위 소득국가는 15.5%, 중상위 소득국가는 13.2%의 잠재적 교역비용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3년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IIE)는 무역원활화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1조 달러 이상의 수출 증대 효

과와 2,000만개 이상의 고용 창출 효과가 유발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최근 통관절차에 대한 각국의 개선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관련 논의를 적극적으로 진행해 온 APEC 국가들은 통관자동화시스템 도입, AEO 활용, single window system 운용 등 절차간소화 및 투명성 제고에 힘입어 뚜렷한 개선을 이루었다. 그러나 통관운영과 관련한 국가간 제도 및 절차적 상이성이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으며, 원산지규정, 위생검역 등과 관련된 통관절차의 복잡한 운영이 주요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개도국의 경우 통관 운영 인프라의 부족과 자의적 운영 등이 지적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전반적인 통관시스템은 우수하지만, 엄격한 위생검역, 안보상의 통관절차 강화 등 문제를 노출하고 있다.

세이프가드

국제무역에서 세이프가드는 특정 상품의 수입 증가로 인하여 동종 상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에 피해를 줄 경우, 그 상품에 대해 GATT 1994 제 19조 및 세이프가드 협정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WTO 회원국의 대응조치를 의미한다. 세이프가드는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 출처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세이프가드 규정을 통해 WTO 회원국이 수입급증으로 인한 자국 내 산업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일정한 발동요건과 절차에 의해 수입수량을 제한하거나 양허의 철회를 통해 관세 인상을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수입규제조치와 관련된 GATT 1994의 다른 예외조항과 구별되는 점은 공정무역관행으로 발생한 국내산업 피해 구제조치이기 때문에 다른 조항에 비해 그 적용규정이 매우 까다롭다는 것이다. 세이프가드 조치의 부과에는 다른 규정의 발동에 필요한 실질적 피해(material injury)보다 높은 수준인 심각한 피해(serious injury)가 요구된다.

WTO 회원국들의 일반 세이프가드 조사 및 발동 건수는 2007년 전반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2008~09년 다시 증가추세를 보인 후 2011에 다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WTO 통계에 따르면 1995년 WTO 출범이후



2012.4월까지 총 234건의 세이프가드 조사가 개시되었으며 2011부터 2014.4월까지 새로 조사가 개시된 세이프가드는 총 16건으로 인도네시아 6건, 이집트 2건, 인도 1건, 터키 1건, 브라질 1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한편, 같은 기간 동안 총 118건의 세이프가드가 발동되었는데 세이프가드 조치의 발동국들을 보면 인도(14건), 인도네시아(13건), 터키(13건), 요르단(7건), 칠레(7건) 등으로 미국, EC를 제외한 개도국들의 세이프가드 발동이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반덤핑, 상계관세 등과 함께 무역구제조치(trade remedy measures)로 불리는 세이프가드는 반덤핑이나 상계관세에 비해 정치적인 요소의 이해 시행되는 경우가 많다. 세이프가드의 경우에는 수입의 급증 여부에 따라 정부가 개입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 정치적인 영향력이 많이 미칠 수 있다고 평가된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

국제무역에서 덤핑은 수출국의 생산자 혹은 수출업자가 국내에서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수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액을 덤핑마진이라고 한다. 한편, 상계관세의 적용 대상이 되는 보조금은 정책당국이 특정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산업 및 기업에 제공하는 금융·조세상의 각종 지원을 의미한다. 이런 보조금 지급은 국내생산 및 소비를 변화시키고, 수출입에도 영향을 미친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 제도 운영에 있어서 문제점은 모호한 규정으로 인해 제도의 자의적인 해석과 남용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조사당국이 제로잉, 표적덤핑 기법 중 허용되지 않는 유형을 적용하여 덤핑이 아닌 것을 덤핑이라고 결정하거나 또는 덤핑마진을 확대할 수 있다. 반덤핑 협정의 재심제도를 남용하여 반덤핑조치를 장기간 연장하는 것들을 예로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제도의 운영으로 우리 업체의 경우 수출 타격은 물론, 최종판정 지연에 따른 고액관세의 예치, 연례재심에 따른 과도한 업무부담 등 유·무형으로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치 현황을 살펴보면, 2012. 12월을 기준으로 반덤핑이 181건, 상계관세가 19건으로 반덤핑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국별로 보면, 인도(38건), 중국(26건), 남아공(16건), 미국(15건) 및 EU(12건) 등이 우리나라에 대해 반덤핑조치를 많이 시행하였고, 미국(10건), EU(7건), 일본(1건), 남아공(1건)이 우리나라에 대해 상계관세 조치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현재 전 세계적으로 규제중인 사안을 산업 분야별로 살펴보면 2012년 현재 철강과 화학이 전체 건수의 2/3를 차지할 정도로 그 비중이 높다. 나머지는 제지, 기계류 등의 순으로 다양하다. 철강과 화학 두 분야 모두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목이라는 점에서 타국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치에 대해 우리나라가 대비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반덤핑 관세에 비해 상계관세조치는 1990년대 들어 활용빈도가 감소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결과로 WTO 보조금·상계관세 협정에서 보조금의 정의가 보다 명확하게 규정되었고, 수출 보조금에 대한 규정이 대폭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반면, 상계관세조치 자체보다는 최근 들어 미국과 EU가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조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조사당국이 덤핑과 보조금이 국내산업에 미친 효과를 중복되게 평가하여 부풀리는 경우가 있어 문제되고 있어 우리 수출기업들에게 새로운 장벽이 되고 있다.

보조금

보조금은 정책당국이 특정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산업 및 기업 활동에 제공하는 각종 지원을 의미한다. 보조금의 사용은 원칙적으로 각국 정부의 고유권한이지만 일부 보조금의 경우에는 구조적인 무역왜곡효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보조금은 타국의 경쟁 산업이나 기업에게 피해를 준다는 인식 아래 국제적인 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다.



1995.1.1일 발효된 WTO 보조금·상계조치협정에서는 과거 GATT 협정과 달리 보조금의 정의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분류함으로써 무역왜곡을 초래하는 보조금에 대한 규율을 보다 강화하였다. 동 협정은 제조업부문의 보조금만을 다루고 있으며 동 협정은 무역왜곡 정도에 따라 보조금을 금지 보조금(prohibited subsidies), 상계가능보조금(actionable subsidies), 허용보조금(non-actionable subsidies)으로 분류하고 있다.

보조금 문제는 WTO체제하에서 가장 다루기 어려운 문제 중 하나이다. 정부의 시장개입의 부당성 증명, 보조금 정의의 명확화 등의 원론적인 문제와 더불어 각국의 입장차이로 보조금에 대한 논의 또한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선진국은 보조금 규제 필요성을 주장하는 입장이고 개도국은 개도국의 경제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보조금 허용, 수출신용과 관련한 개도국에 대한 특별한 고려를 주장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가간의 입장 차이 뿐 아니라 보조금의 정의, 특성성, 금지보조금, 보조금의 철회, 심각한 손상 등 보조금에 대한 원론적인 문제도 보조금 논의 대상이 되고 있다.

보조금 제도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각국은 경쟁력이 약화되는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또는 수출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상계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선진국들은 주로 개도국과의 경쟁으로부터 자국의 산업을 보호한다는 명목 하에 조선, 철강, 섬유 등 사양 산업에 대한 보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반면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을 택한 개도국의 경우에는 수출산업 지원정책으로서의 수출 장려 보조금을 운영하고 있다.

원산지규정

원산지규정이란 국제무역에서 거래되는 물품의 생산·제조국을 판정하기 위한 제반 법률 및 규정 또는 판례, 관련 행정적 절차를 통틀어 지칭한다. 일반적으로 원산지 규정은 특정국가가 특정제품의 원산지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요건과 통관과정 등에서 상기요건의 충족여부를 증명하는

원산지 확인절차 및 여타 부대조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산지 규정은 그 자체로서는 국제교역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질 수 없는 중립적 성격을 띠고 있으나 규정이 각 국별로 상이하며 불명료성, 복잡성 및 차별성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무역장벽으로 기능하고 있다.

원산지규정은 적용 목적에 따라 비특혜원산지규정과 특혜원산지규정으로 구분된다. 현재 「WTO의 원산지규정협정(Agreement on Rules of Origin)」에는 비특혜원산지에 관한 일반적 규정만이 제정되어 있으며 적용범위는 MFN원칙, 반덤핑 및 상계관세, 원산지표시요건, 세이프가드, 여타 모든 차별적인 수량규제나 할당관세 등의 적용과 같은 비특혜적인 통상정책 수단, 정부조달 및 무역통계 작성 등에 대해 적용된다. 특혜원산지규정은 MFN원칙의 적용을 받지 않고 일방적 혹은 쌍무적으로 관세상의 특혜원산지를 부여하는데 적용이 되는 원산지 규정을 말한다. 즉, 특정국가간의 관세 특혜를 부여하는 자유무역지대 혹은 경제구역의 운영이나 일반특혜관세제도(GSP: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등 특정 국가군을 대상으로 특혜관세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비특혜원산지에 관한 세계적인 통일규정을 만들기 위한 작업이 세계관세기구(WCO)와 WTO의 공동 작업으로 1995년도부터 진행되어 오고 있으나 각국의 참여한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인하여 아직까지 타결되지 못하고 있다. 2013.9.26일 WTO 원산지규정위원회에서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은 작업 시작 초기와 다른 상황변화로 통일원산지규정이 무역 촉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기술적 사항이외는 총회의 방침이 결정될 때 까지 작업 중단의 입장을 표명한 반면 EU, 인도, 중국, 스위스 등은 생산 활동의 글로벌화로 통일원산지규정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각국의 자의적 규정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작업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혜원산지규정의 경우 일반적인 국제규범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크게 EU의 PANEURO 모델과 미국의 NAFTA 모델로 나눌 수 있다. 그 외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지역은 NAFTA 모델과 PANEURO 모델을 병행하여 사용하거나 대체로 이들 모델보다 비교적 단순하고 용이하게 적용하



고 있다.

원산지규정이 통상장벽으로서 기능하는 가장 보편적인 형태는 일반적인 경우 보다 엄격하게 원산지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러한 현상은 쿼터품목이나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 대상품목의 경우 우회수출 방지를 위해 적용된다. 실제로 많은 나라에서 물리적 구성변화, 소요시간, 과정의 복잡도, 기술수준, 부가가치 등을 감안하여 쿼터품목의 가공 및 조립과정이 제조과정인지를 엄격히 판정하고 있다. 또한, 정부조달 품목에 있어서도 전체 부품 및 제조비용에서 자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통의 원산지 판정 기준 보다 높게 책정하여 수입가공품의 정부조달 입찰가능성을 원천봉쇄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원산지의 표시에 있어서도 특정한 표시방법을 사용하도록 하고 상품의 부품에도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거나 특정위치에 표시하도록 강제화하기도 한다.

더욱이 자유무역협정 등 특혜무역의 증가와 국제 분업의 확산과 더불어 국가별로 다양한 품목에 대한 상이한 원산지규정과 원산지 판정기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원산지증명을 위한 서류 및 확인 절차 등 통관절차상의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조달

정부조달(government procurement)이란 “정부가 고유의 업무수행을 위해 소비 및 투자 등 경제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물품과 서비스를 구입하는 구매행위”이다. 세계 각국의 중앙정부가 물품 및 서비스의 조달로 지출하는 비용은 자국 GDP의 약 10% 가량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부조달 시장은 규모가 매우 큰 시장으로 자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크고 이를 폐쇄적으로 유지할 경우 국내경제의 효율성이 하락함은 물론 조달과정의 불투명성으로 인해 부정부패를 초래할 가능성도 크다. 또한 정부조달 시장은 무역장벽이 높고 다양하다. 첫째, 외국기업의 국내 조달시장 참여가 완전히 금지되는 경우(특히 국방조달), 둘째, 국내기업에게 특혜마진을 제공하거나 평가

과정에서 외국기업에게 일정한 불이익을 부여하는 경우, 셋째, 외국기업이 자국 정부조달과정에 참여하기 위해 불공정한 특정조건을 충족시키도록 요구하는 경우, 넷째, 비록 구체적인 특혜를 부여하지는 않으나 비공식적(인맥, 관습, 정보의 비대칭적 공급)으로 국내기업을 선호하는 경우, 마지막으로 하나의 조달주체가 대부분의 정부조달을 담당하지 않는 국가에서는 각 부처가 독자적으로 조달체제 및 관행을 유지하여 여러 절차가 공존하고 있는 경우 등이다.

따라서 국제사회에서는 효율성 제고 및 부정부패 방지를 위해 정부조달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국제적으로 정부조달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됨에 따라 정부조달은 다자협상 또는 양자협상에서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였다. 따라서 다자무역체제 뿐 아니라 지역무역협정에서도 정부조달에 관한 논의는 과거보다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정부조달과 관련된 협정으로는 GATT, GATS와 정부조달협정(GPA: 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가 있으나 GATT와 GATS에서는 정부조달 관련 무역에 대해서 비차별원칙의 의무를 강요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WTO 정부조달협정(GPA)이 체결되었으며 동 협정은 정보의 투명성과 시장개방, 입찰 및 낙찰절차의 공정성과 개방성, 항의절차 등 정부조달에 관련된 포괄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GPA는 다른 WTO 협정과는 달리 다자간(multilateral)협정이 아닌 복수국간(plurilateral)협정으로 협정에 가입한 WTO 회원국만이 준수 의무가 있다.

WTO GPA의 개정을 위한 협상은 2006.12월 협정문 협상이 타결된 데 이어 지난해인 2011.12월 양허안 협상까지 타결되어 정부조달 개정 협정안이 마련되었다. 정부조달 개정안은 제9차 WTO 각료회의 이후 발효될 예정이다. 정부조달협정 개정과 더불어 향후 중국 등 신규 가입국들의 정부조달협정 가입이 증가할 경우, 정부조달시장 개방은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술장벽(표준 및 인증)

일반적으로 기술장벽은 모든 상품에 대해 정당화되기 어려운 과도한 기술적 규제조치를 포함하며 WTO협정상 그 조치의 내용에 따라 무역상 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과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sanitary and phytosanitary(SPS) measures)로 구분된다. 이중 TBT는 다자무역체제를 기반으로 전통적인 무역장벽으로서 관세가 크게 인하됨에 따라 그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더욱 부각되고 있으며 SPS 협정에서 정의하고 있는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를 제외한 기술규정(technical regulations), 표준(standards) 및 적합성평가절차(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s)를 포괄하고 있다. 그리고 SPS 협정은 ①식품에서 유래되는 위험으로부터 인간 또는 동물의 건강, ②동물과 식물에 의해 운반되는 병해충으로부터 인간의 건강, ③병해충으로부터 동물과 식물 등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두고 있는 조치들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다.

최근 TBT는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과는 다른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주요 특징들이 있다. 첫째, TBT가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고 무역에 대한 장벽을 형성하는데 오용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둘째, TBT 통보건수가 개도국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셋째, 기술집약적인 산업에서 통보건수가 높다.

■ WTO 출범 이후 기술규제 관련 통보문 건수 추이

연도	1995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계
계	365	611	771	875	1,030	1,251	1,490	1,420	1,217	1,560	15,754
선진국	316 (86.6)	391 (64.0)	341 (44.2)	351 (40.1)	416 (40.4)	468 (37.4)	478 (32.1)	440 (31.0)	393 (32.3)	310 (20)	6,832 (43.4)
개도국	49 (13.4)	220 (36.0)	430 (55.8)	524 (59.9)	614 (59.6)	783 (62.6)	1,012 (67.9)	980 (69.0)	824 (67.7)	1,250 (80)	8,922 (56.6)

주: 1) 선진국은 IMF 기준 및 EU

2) ()의 숫자는 각 연도의 전체 통보문 건수에서 해당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냄.
자료: WTO, 각 연도별, "Annual Review of the Implementation and Operation of the TBT Agreement."

지식재산권

국제무역에서 무형자산의 하나인 지식재산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으며, 지식재산권의 국제적 보호는 여러 국제협약에 의해 규율되고 있다. 1986년 UR출범과 더불어 위조 상품을 포함한 무역관련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논의가 개시되면서 GATT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1995년 WTO출범과 함께 무역관련 지적재산권(TRIPs: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협정이 타결되었다. TRIPs협정은 위조 상표의 교역 등 무역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문제뿐만 아니라 기존의 주요 국제협약을 모두 흡수하여 저작권, 상표권, 지리적표시권, 산업디자인, 특허, 반도체설계, 영업비밀 등 모든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그 보호의 최소기준, 실행절차 및 분쟁해결 절차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설정하는 강력한 협정으로 탄생하였다.

2013.9월 제51차 WIPO 총회가 개최되어 2013년 가장 눈에 띄는 성과로 지적권 관련 조약의 눈부신 성장과 활용을 들었다. 하나의 국제 출원으로 조약 참가국 모두에게 출원한 것과 같도록 출원 절차를 통일화한 특허협력조약(PCT)이 대표적인 조약으로 WIPO가 국제특허출원에 대한 사무총괄을 담당하고 있다. 더불어 시각장애자의 출판물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다자간 조약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것도 큰 성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대다수의 개도국들은 유전자원, 전통지식, 민간전승물 관련 이슈가 긴급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주의 깊은 접근이 필요하며 심도 있는 협상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디자인 보호를 위한 조약과 전통지식 및 민간전승물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조약 마련을 위한 방향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국제상황을 반영하듯 최근 많은 나라에서 자국의 법과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지식재산권 보호에 노력하고 있으며 역내국가간 상호인증을 통해 비용절감 및 경쟁촉진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대부분의 개도국에서는 인력 및 시설 부족으로 실효성 있는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2011.11월 방글라데시 등 최빈국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WTO 협정



준수를 위한 기한 연장을 TRIPs 위원회의 비공식 협의에서 제안하였다. 제안서에 따르면, 최빈국 회원들이 국내 법체계를 TRIPs 협정 준수에 따른 경우 심각한 경제적·재정적·행정적 제한 요소에 직면하게 된다고 밝히고 있다. 최빈개도국에 대한 TRIPs 조항 준수여부가 2013년까지 유예되었으나, 2013년 상반기 TRIPs 이사회를 거쳐 2021.7월까지 연장되었다. TRIPs와 공중보건에 대한 2001 도하 선언에 의해 의약품의 경우는 2016년까지 연장되었다. TRIPs 협정 가입 의무 대상이 아닌 국가들의 경우 무역협상, 논의, 기술 원조 및 전문가, 선진국, 지역 및 국제기구의 지침서와 같이 다른 수단을 통해 자국의 지식재산법을 개정하고 있다. 최빈국은 전 세계 지식재산권에서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시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대다수의 지식재산권자들은 최빈국에서 지식재산권을 등록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서비스

GATT체제하에서의 제8차 다자무역협상인 UR 협상 결과 서비스무역에 대한 최초의 다자간 규범인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이 제정되어 1995년 WTO 출범과 동시에 발효되었으며 서비스무역에 대한 다자간 협상이 기설정의제로 채택되었다. 이에 따라 2000.2월부터 GATS 하에서의 서비스협상이 재개되었다. 2001년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 제9차 다자무역협상인 DDA가 출범되었고 여기에서 서비스 분야를 포함한 9개 주요 협상 의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DDA 선언문에 따라 각국은 2002.6월말에 서비스 분야별 1차 양허요청안을 제출하였고 2003.3월말에 양허요청안에 대한 양허안을 제출하였으며 2005.5월에는 수정 양허안이 제출된 후, WTO에서는 분야별 양자간·다자간 협상과 서비스 국내규제 및 규범 분야의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제6차 WTO 각료회의 이후 현재까지 서비스분야의 양자간·다자간 협상이 진행 중에 있으나 여타 분야의 협상과 맞물려 아직까지 타결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1.4.29일 발표된 분야별 경과보고서에 따르면 서비스협상은 그동안 일

부 부분적인 진전이 있기는 하나 전반적으로 2008년의 Signaling Conference 이후 별다른 진전이 없었던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이와 같은 서비스 협상의 부진은 여타 분야의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것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DDA 서비스 협상이 이처럼 진전을 보이지 못하자 2011년 하반기부터 호주 및 미국 정부가 주축이 되어 DDA 서비스협상을 주도하는 공조(RGF)국(16개국)간에 복수국간 협정을 추진하자는 움직임이 시작되었고, 2012.2월에 첫 번째 정부간 회의가 개최되었다. 현재 동 논의에는 RGF 15개국(싱가포르 탈퇴)과 새로 참여한 코스타리카, 페루, 터키, 파나마, 이스라엘을 포함하여 총 20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GATS에서는 국제적으로 서비스가 공급되는 형태를 국경간 공급, 해외소비, 상업적 주재, 자연인의 이동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리고 서비스 교역장벽은 네 가지 공급형태에 대해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를 보장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 구체적인 형태는 국내 사업체 설립 시 지분제한, 외국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시장접근 불허, 자격요건, 인허가, 기타 외국서비스 공급자의 서비스공급을 제한하는 국내규제 등이다.

GATS는 서비스 분야의 국제교역을 다루는 최초의 구속적 다자간 규범으로 일반적 원칙과 의무를 담은 본문, 특정분야의 규범을 다루는 부속서, 개별 회원국의 분야별 시장개방 양허, 최혜국대우를 일시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목록으로 구성되며 특히 이들 네 가지 요소 중 시장개방 양허와 최혜국대우의 일시적 유보 목록은 GATT에서의 관세양허계획과 같이 서비스협정의 핵심적인 부분이 된다.

UR 당시 WTO 회원국들은 전분야에 해당되는 수평적 조치뿐만 아니라 서비스분야별로 최혜국대우 및 내국민대우에 대한 네 가지 공급형태상의 양허 여부 또는 제한 내용을 명시하여 양허표를 제출한 바 있다. DDA 출범 이후 각국이 서비스분야에 대한 1차 양허안(initial offer)과 수정 양허안(revised offer)을 제출한 상태이나 아직 일괄타결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DDA 협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양허의 확대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다수의 국가에서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 서비스분야의



자발적 자유화는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서비스분야에서 나타나는 보편적인 통상장벽은 내국민대우 제한 및 규제조치로서 구체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해운업에 있어서는 각국의 해운법에 따라 외국 해운사의 연안항해 및 화물수송이 제한되어 있다. 통신업의 경우는 외국인의 투자지분 제한, 시장접근 제한 등의 장벽이 있다. 금융업에 있어서는 금융기관의 지점 및 사무소 설치에 대한 허가지연, 엄격한 지점 승격요건 등이 장벽으로 존재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보편적으로 국적선 요건을 포함하여 운송 및 통신 분야에서 시장접근이나 내국민대우 제한과 건설기술자의 이동 등 인력이동상의 제한을 두고 있다. 개도국의 경우는 운송·통신 분야의 진입제한 이외에도 유통·건설 등에 있어 합작요건 등 지분제한이 있고 은행·보험회사 등 금융기관 설립요건상 시장접근 및 내국민대우 제한이 많다. 중국의 서비스시장은 아직까지 많은 제한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WTO 가입 당시 제출한 양허 내용을 이행하면서 서비스분야의 교역 장벽이 보다 완화·철폐된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국가들이 공공서비스 부문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를 금지하거나 투자를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각종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EU 회원국과 중남미 국가를 중심으로 시청각서비스에 대해 많은 제한조치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지 공관을 통해 파악된 서비스분야의 주요 교역장벽을 검토해 본 결과, 일부 국가에서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는 업종이 추가되거나 외국인 투자지분 제한을 완화하는 조치가 있었으나, 대부분의 국가는 전년도와 유사한 서비스 교역장벽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서비스

GATS에서는 국제적으로 서비스가 공급되는 형태를 국경 간 공급, 해외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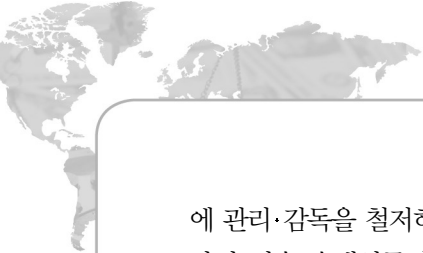
비, 상업적 주재, 자자연인의 이동 등으로 분류한다. 금융서비스 역시 상기의 공급형태를 따르며 교역장벽은 공급형태에 대해 내국민 대우, 최혜국 대우, 시장접근 등을 보장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내용을 규정한 WTO 서비스협상은 DDA가 정식 출범한 이후 2002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금융서비스의 경우 미국·EU 등 주요 금융 선진국들은 금융산업의 효율성·투명성 증진을 위해 각국에 대해 강도 높은 자유화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개도국들은 각 회원국의 금융시장 발전정도를 감안하여 자유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 현재까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특히 미국발 금융위기이후 금융서비스 시장에 대한 개방에 회의적인 개도국의 입장이 크게 반영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WTO 협정에서 금융서비스 개방은 ①재원조달 다양화에 따른 유동성 위험 감소, ②금융시장의 기능 및 자원배분의 효율성 증진, ③선진 투자기법의 학습 및 합리적 가격 형성, ④국내기업의 경영투명성, 재무건전성 강화에 기여하여 산업 구조조정을 가속화, ⑤금융소비자의 만족도 개선, ⑥예금자 및 투자자에게 위험분산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금융 산업의 건전성 및 안정성 제고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반대로 ①국내 금융기관의 수익성 저하에 따른 금융안정성 저해, ②해외 금융환경 변화에 대한 민감도 증가에 따른 금융시스템 위험의 전이 가능성 증대, ③서민금융 위축 등 부작용 가능성, ④국제자본시장을 움직이는 단기성 투기자금의 유입에 대한 우려, ⑤해외자본의 적대적 M&A를 통한 국내 기업 지배권 장악 등의 부정적인 효과 역시 갖는다.

그리고 최근 WTO 및 FTA에서는 외국의 금융서비스 공급자에 대해 시장 접근과 내국민대우 원칙을 보다 넓게 적용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국내규제를 개혁하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으므로 각국은 금융서비스 시장을 개방하려고 할 때는 이들 효과를 잘 비교해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겠다.

한편 2013년 현재 금융서비스의 개방정도를 국가별로 비교한 결과 싱가포르, 캐나다, 유럽(EU) 등 선진국은 높은 수준으로 개방되어 있는 것과 동시



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와 캐나다의 경우 은행업무의 범위에 제한을 두어 은행을 구분하고 있다. EU는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독을 강화하는 다양한 제도적 개선을 최근에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개도국은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자국의 규제를 완화하는 국가가 존재하는가 하면 여전히 강력한 규제를 통하여 개방을 하지 않는 국가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말레이시아의 경우 외국인 투자지분 상한을 확대하였으며, 몽골은 은행간 합병과 외국자본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이외 우루과이는 조세 및 금융에 관한 양자협정 체결 등의 노력을 기울여 2012.5월 OECD로부터 화이트 리스트 국가로 분류되었다. 그러나 인도의 경우 여전히 많은 영업상 규제가 존재하며 중국은 외국 금융기관 진출 및 영업과 관련하여 사무소 설치, 지점 및 현지법인 승격조건, 위안화 업무 등에 강력한 제한을 두고 있다.

투자

투자장벽은 한 국가의 국민 또는 기업이 타국에 투자할 때 겪을 수 있는 각종 장애요인들의 집합체로 크게 설립 전 단계와 설립 후 단계의 장벽으로 구분된다. 설립 전 단계의 장벽은 일반적으로 외국인투자자가 국내투자자와 동등하게 국내시장에 접근하고 주재(access and presence)하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제약하는 사항들을 말한다. 설립 전 단계의 장벽의 대표적인 형태는 진출대상국이 특정 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제도를 들 수 있다. 설립 후 단계의 장벽은 기투자 된 외국인투자기업이 현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국내투자기업과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요인들이라고 볼 수 있다. 외국인투자기업에만 적용되는 조세 및 자본조달 관련제도 역시 장벽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외국인투자기업에만 나타날 수 있는 경영상 문제점들도 장벽으로 생각할 수 있다. 원천적으로 모든 투자장벽은 외국인투자자와 투자유치국 정부간의 이해상

충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외국인투자가 및 투자유치국 정부의 권리와 의무는 기본적으로 투자유치국의 국내법에 의해 규정된다. 한 국가가 자국의 영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외국인투자에 대해 규율하는 것은 그 국가의 주권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인투자를 투자유치국의 주권사항으로만 인정하여 이에 대한 모든 조치를 투자유치국 정부의 자의적인 결정에 맡기는 경우 외국인투자가와 투자유치국 정부간 이해상충과 갈등이 야기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국제투자가 활성화 될 수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투자자와 투자국 및 투자유치국 정부간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국제투자규범이 필요하다. 국제투자규범이란 한마디로 국제투자와 관련된 주체들, 즉 투자유치국 및 투자국 정부, 그리고 투지기업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투자장벽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설립 전 단계에서의 투자장벽은 투자업종에 대한 제한, 투자지분관련 제한, 지사 및 사무소 설립관련 제한, 이행의무의 부과, 부동산의 취득 및 사용관련 제한, 기타 설립 전단계의 제한 등이 있으며 설립 후 단계에서의 투자장벽은 과세 문제, 금융 및 자본조달 상 제약, 인력의 현지 파견 제약 등이 있다.

투자업종에 대한 제한의 특징은 선진국의 경우 국가안보 등에 관련된 일부 분야에 대해서만 외국인투자를 제한하고 있는 반면, 개도국의 경우 각국의 정책 목적에 따라 광범위한 산업에 걸쳐서 외국인투자를 제한하는 특징을 보인다. 외국인투자자의 투자지분을 일정 비율로 제한하는 것은 가장 널리 활용되는 외국인투자 제한방식으로 투자유치국은 외국인투자의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한다는 정책 목적 하에 경영권을 국내투자자(내국인)가 보유하도록 외국인투자자의 지분을 제한한다. 투자지분관련 제한은 선진국과 개도국에서 모두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범위와 수준에 있어서 제한의 강도는 개도국에서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지사 및 사무소 설립관련 제한의 경우, 선진국의 경우 대부분 외환자유화와 투자자유화를 실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사 및 사무소 설립에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나 개도국에서는 이에 대한 제한을 많이 두고 있다. 투자관련 이행의무는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개도국의 경우 자국 경제발전정책 차원에서 다수의 이행의무를 운영하고 있는 반면, 선진국의 경우 투자인센티브 제공과 결부해서만 이행의무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 시 부동산의 취득 및 사용은 필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각국이 시행하고 있는 외국인에 의한 부동산 취득에 대한 제한은 외국인투자에 대한 전반적인 제한수준과 관련된다. 선진국을 포함한 일반적인 경우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및 사용에 제한을 두지 않으나, 체제전환국, LDC 등의 국가들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고 사용권만을 허용하는 경우가 많다.

설립 후 단계에서 가장 많이 지적되는 투자장벽은 현지에서의 세금문제이다. 과세 문제는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지만 주로 선진국들이 방대한 과세자료의 집적 및 정교한 과세방안의 개발 등으로 조금만 의심스러운 경우에도 세무조사 등을 시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여타 투자장벽과 달리 과세문제는 개도국보다 선진국에서 많이 직면하는 투자장벽이다. 한편, 투자설립 후 현지 운영에서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 자금의 이전 및 운영자본의 조달 등에 대한 제약이다. 양자간투자협정에서 자유로운 송금을 보장하고 있지만, 과세 상 목적 등으로 송금 전 허가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들이 많다. 선진국의 경우 적법한 과세절차를 거친 과실 및 양도차익의 송금은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것이 일반적인 반면, 개도국의 경우에는 과세목적뿐만 아니라 국제수지 관리차원에서 송금을 허가사항으로 규제하고 여러 가지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국가가 많다.

환경

환경관련규제가 강화되고 있음에 따라 환경관련 통상장벽이 점차 형성되고 있는 추세이다.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온실가스의 방출을 규제하는 기후변화협약 제19차 회의가 2013.11월에 개최되어 합의안이 도출되었으나 최종안 마련을 2015년으로 연기하면서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제시되지 못했다. 회원국들은 2015년 파리 총회에서 새로운 기후변화협약에 서명하고 교토의정서가 만료되는 2020년 이를 시행하기로 한

입장을 재확인하였다. 한편 환경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자유화 노력은 최근 몇 년간 APEC 차원에서 구체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2013.6.25일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발표한 ‘기후변화 대응 행동계획’에 제시된 바와 같이 미국의 리더십을 통해 환경상품에 관한 무역협정 규범형식은 복수국간 협정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논의도 한층 심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일반적으로 미국, EU, 캐나다 등 선진국들은 다양한 환경관련 규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더욱 강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일부를 제외한 개도국 역시 점차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가별 상황에 따라 분야별로 환경규제를 도입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선진국 뿐 아니라 개도국의 환경규제 역시 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온실가스 배출 허가대상을 확대시킬 것이며, EU는 평균배출량 목표를 한층 강화시키고 항공탄소세를 2014.1월부터 재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캐나다 역시 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표명하였고, 영국은 2050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와 저탄소사업전략을 통해 경쟁력 확보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노르웨이와 오스트리아, 뉴질랜드는 GMO 관련하여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한편, 코스타리카, 우루과이, 과테말라 등은 건축이나 사업허가시 환경오염방지 등 환경보호 관련하여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 브라질은 급속한 산업발전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규제하기 위하여 환경오염 유발 제품의 수입 및 유통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다. 캄보디아도 인접국가에 비해 환경관련규제가 엄격한 편이다. 중국은 최근 환경관련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오염배출허가증제도, 녹색경제와 순환경제의 발전 등 대폭 강화된 환경관련정책인 <국가환경보호 12.5 계획>을 발표하였다. 호주는 2014.7.1일부터 ‘탄소가격제’를 도입하면서 탄소배출량 감축목표를 2020년까지 2000년 수준 대비 5%, 2050년까지는 80%로 재설정하였다. 또한 2020년까지 총 에너지의 20%를 풍력, 태양광 및 지열과 같은 신재생에너지원으로부터 충당하고, 2050년까지 대규모신재생에너지원(수력은 제외)으로부터 호주생산전력의



40%가 공급 가능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남아공 역시 202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34%, 2025년까지 42%까지 감소하겠다는 의지를 2009년 UN 기후변화당사국 총회에서 발표한 바 있다. 에티오피아는 2025년까지 탄소배출 중립국을 목표로 국가발전방안 및 투자방을 검토하고 있다.

그 외 몇몇 국가들은 자국에 환경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상품에 대해서 수입규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에콰도르의 경우 2013.6월 환경보존을 위한 저효율에어컨 수입제한 조치를 발표하면서 사전홍보 없이 이루어져 각국 수출기업, 현지 도매상이 저효율 에어컨을 발주하여 통관이 불가능하게 된 혼란을 겪었다.

한편 몇몇 국가들은 헌법으로 환경보호를 제도화하고 있는데, 그 중 인도는 환경관련 규제 장치를 발전 및 강화하고 있다. 아직은 경제개발을 우선시하고 있으나 개별정책 이행이 점차 구체화·의무화되고 있으며 대상범위 또한 확대되고 있어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경쟁정책

경쟁정책은 경제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규제하거나 경쟁을 저해하는 시장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이다. 구체적으로는 경쟁 제한적이거나 반경쟁적인 관행, 즉 기업 간의 공모행위나 진입제한 등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시키기 위한 정책수단을 동원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경쟁법 상에서 통제 대상이 되는 대표적인 반경쟁적인 기업관행은 가격 또는 수요 담합(카르텔), 인수·합병을 통한 시장의 독점,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 수직·수평적 거래 제한 등이 있다.

경쟁정책을 세계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다자간 협정은 존재하지 않지만 여러 국제기구 및 협의체들은 경쟁정책의 국제적 컨센서스 마련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OECD에서는 경쟁위원회를 구성하여 모범 사례 검토, 권고안 채택, 경쟁포럼 채택 등의 활동을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34개 국가들의 경쟁 환경을 평가하는 경쟁법/정책 지표(CLP: Competition Law

and Policy)를 개발하였다. 다자간 규범에도 경쟁과 관련된 규정들이 반영되어 왔다. GATT 협정은 수입독점업자의 행위에 대한 규율(제2조)과 수입에 대한 내국민 대우 규정(제3조)을 담고 있다. 세이프가드 협정은 수출자율규제(VER)와 시장질서유지협정(OMA)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제11조),⁸⁶ GATS협정은 독점공급자의 독점적 지위남용 금지, 독점적 행위 발생 시 협의요청 및 협의 의무, 정보제공의무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제8, 9조). 그러나 경쟁정책에 대한 종합적 검토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국제경쟁네트워크(ICN)는 기존의 국제기구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경쟁정책의 국제협력 및 조화를 위하여 WTO와 OECD 범위 밖에 구성된 경쟁법 전문 국제협의체이다. ICN 총회에서는 경쟁정책의 이행, 카르텔, 기업결합 등 각 실무그룹들의 활동을 보고하며 경쟁정책 집행경험 공유, 모범사례 도출 등의 활동이 이루어진다. 한편, ASEAN은 2007년 아세안 경쟁정책 전문가그룹(ASEAN Expert Group on Competition)을 설립하여 회원국 간 자유무역 확산과 경쟁법 도입을 장려하고 있다.

경쟁정책에 관한 다자간 국제 규범은 마련되지 못하고 있지만 경쟁정책은 최근 체결되는 지역협정 또는 자유무역협정에 포함되고 있으며 경쟁당국 간의 협의회도 활발하게 열리고 있다. 특히 지역무역협정에서 경쟁정책은 경쟁정책 관련 문제가 통상문제로 비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쟁법의 역외적용과 관련된 절차적 협력 및 조율에 집중되고 있다.

세계경제의 글로벌화로 외국기업의 국내진출이 자국시장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기업간 합병 등 경쟁법 역외적용 및 외국기업에 대한 경쟁법 집행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각국의 경쟁당국은 다국적 기업들의 국제 카르텔 등 경쟁제한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외국의 경쟁당국, 국제기구 등과 경쟁정책에 대한 정보교류, 경쟁법 이행 시 상호조율 등 협력

86_ 세이프가드 협정문에서는 수출자율규제와 시장질서유지협정 그리고 이와 유사한 조치를 금지하고 있는데 여기서 유사한 조치란 수출조절, 수출 및 수입품 가격 모니터링 제도, 수출 및 수입감시제도, 수입카르텔, 재량적 수입허가제도, 수출카르텔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관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 주요 국가들은 여전히 경쟁법을 역외로 확대하거나 경쟁법의 집행을 강화하는 등 간접적인 보호 무역 장벽으로 활용하고 있다.